

大韓民國政黨史

第5輯 (1993. 2. 25~1998.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58-090018-14

大韓民國政黨史

第5輯 (1993. 2. 25~1998.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사



현대 정치과정의 핵심 동인(動因)은 정당이며, 우리나라의 정당 또한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사료의 보존과 정당정치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1973년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을 발간한 데 이어 1981년 제2집, 1992년 제3집을 발간하여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생성 및 소멸된 정당들의 변화와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당사 발간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정당과 정당정치에 대한 기록들이 축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간사업을 재개하여, 올해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과 제5집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당에 대한 역사기록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 정당정치의 발자취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정당사는 법령과 단순 사료 중심의 기존 정당사와는 달리 정당의 성립, 변화, 소멸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당정치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각 정당의 당내 상황뿐만 아니라 정당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확히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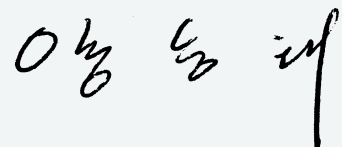
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과 연구를 위한 시간적 제약도 또 다른 어려움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역사기록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완전무결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 나은 사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적인 정당 관련 사료와 정당정치 과정을 담은 이 책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정당사』를 발간하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편찬위원회 위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 오랜 기간 자료수집과 원고 집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찬실무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 승 태



일 러 두 기

1. 『대한민국정당사』 제5집은 김영삼 정부 집권기인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4일 까지 존속한 정당을 대상으로 그 성립과 변화, 정당 활동 등을 수록하였다.
2. 『대한민국정당사』 제5집은 5개 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장·절·1·가·1)·가’ 순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본문은 개관,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정당의 성립과 변화, 정당활동, 정당의 수입과 지출 등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부록에는 정당의 변천과정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정당의 당원수, 정당의 활동연지,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정당의 강령·기본 정책을 수록하였다.
3. 제2장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은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김영삼 정부 기간의 주요 변화를 개정 차수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법률 규정과 관련된 하위 법령도 필요한 경우 (영)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4. 제3장 정당의 성립과 변화는 기존정당과 신설정당으로 구분하여 각 정당별로 구성하였다. 기존정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이미 존속하고 있던 정당을 의미하며, 신설정당은 그 이후 창당과정을 통해 새롭게 등록된 정당을 의미한다. 각 정당 기술의 순서는 정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주요간부 변경일은 변경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5. 제4장 정당활동은 선거활동, 원내활동, 당내활동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거활동은 선거별·정당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정당별 선거 활동은 동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선거사』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당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기간에 실시된 선거로 제한하여 기술하였다.

원내활동은 정당별로 구분하는 대신 연도별로 구분하고, 전반적인 국회운영과 결과를 수록한 『국회사』와는 달리 정당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정당 간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당내활동은 각 정당별로 구성하여 당 내부적으로 전개된 주요활동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당이 중심이 되어 대외적으로 전개한 활동의 경우도 당내활동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6. 제5장 정당의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회계 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모금·지출된 정치자금은 자료의 한계와 사실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이 정당의 실질적인 정치자금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1차적인 사료 제공 차원에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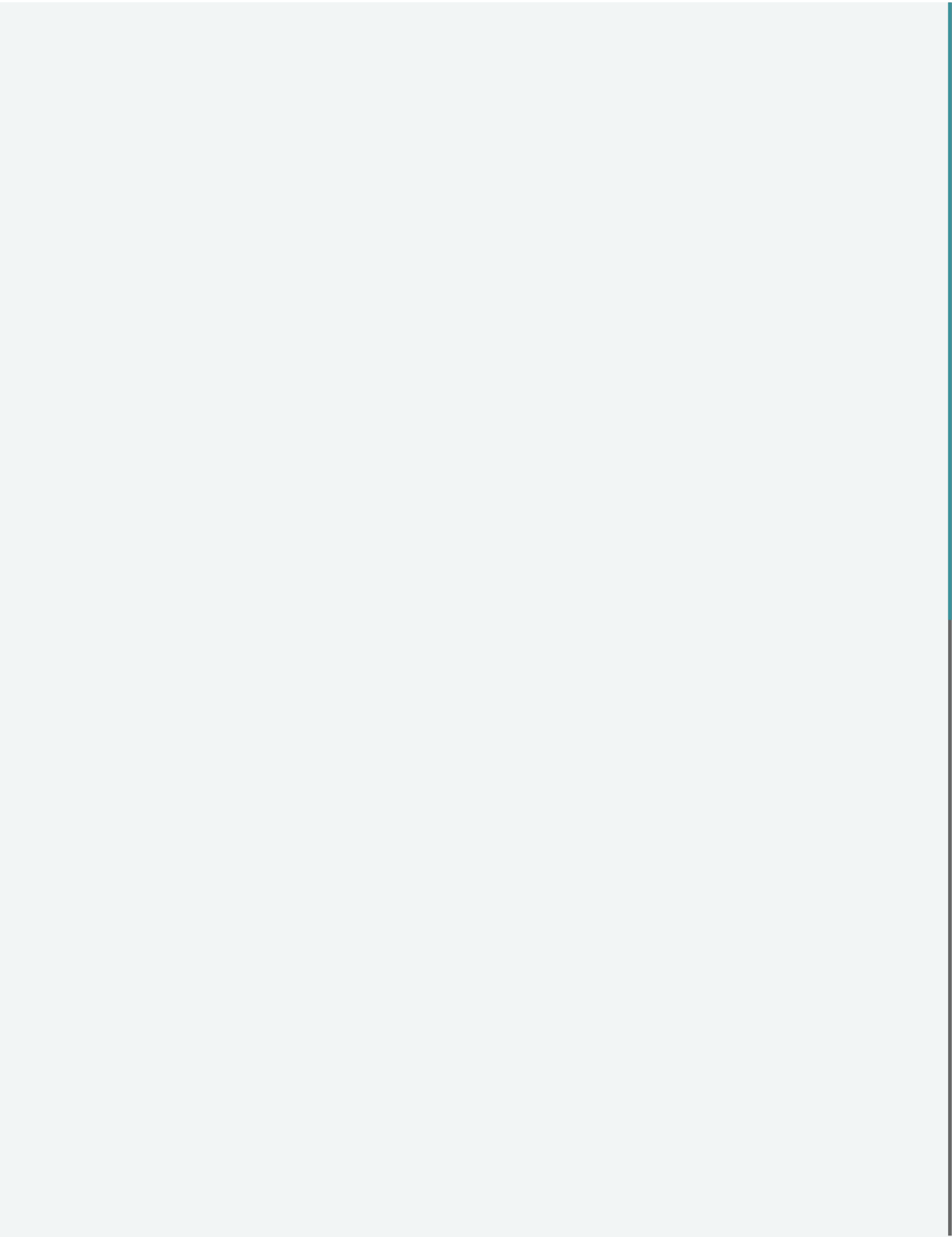
7. 서술방법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인명은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하였다. 정당의 명칭은 약칭을 표기할 경우 같은 명칭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식 명칭을 표기하였다. 일부 법률명, 특별위원회 명칭 등의

경우 ‘이하 약칭’ 이라고 부기하고 이하에는 약칭을 사용하였다. 인용문의 경우 당명 등의 약칭이나 일부 문법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8. 각종 숫자는 읽기 쉽도록 ‘00억 0,000만 0,000원’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표 내용에 포함되는 숫자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였다.

9. 각주는 기술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였다.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자료에 기초하였으며, 정치적 상황과 변화과정을 정리하기 위해 신문 등 1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출처의 표기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였다.

10.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외에도 언론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大韓民國 政黨史

C o n t e n t s

제 1 장 | 개 관

| | |
|--|----|
|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 | 20 |
| 1. 정치개혁과 정당활동의 위축 | 20 |
| 2. 여야 대치정국과 당내갈등 | 22 |
| 제2절 정당분열과 4당 체제 | 24 |
| 1. 민주자유당의 분열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3당 체제의 형성 | 24 |
| 2. 민주당의 분열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4당 체제의 형성 | 25 |
| 제3절 3당 체제의 형성과 정당 간 이합집산 | 27 |
|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 체제의 형성 | 27 |
| 2.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정당 간 이합집산 | 28 |

제 2 장 |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 | |
|--|----|
| 제1절 정당법 | 34 |
| 1. 제7차 개정(1993. 12. 27) | 34 |
| 2. 8차·9차·10차 개정: 정당관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 45 |

| | |
|--------------------------|----|
| 제2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47 |
| 1. 제7차 개정(1994. 3. 16) | 47 |
| 2. 제8차 개정(1995. 12. 30) | 55 |
| 3. 제9차 개정(1997. 1. 13) | 61 |
| 4. 제10차 개정(1997. 11. 14) | 66 |

제 3 장 | 정당의 성립과 변화

| | |
|--|-----|
| 제1절 기존정당 | 76 |
| 1. 민주자유당(1990. 2. 15~1997. 11. 24: 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 76 |
| 2. 민주당(1991. 9. 16~1995. 12. 21) | 119 |
| 3. 통일국민당(1992. 2. 10~1994. 7. 8) | 137 |
| 4. 신정치개혁당(1992. 3. 4~1994. 7. 8) | 141 |
| 5. 새한국당(1992. 11. 19~1995. 3. 7) | 143 |
| 6. 기타정당 | 146 |
| 제2절 신설정당 | 150 |
| 1. 신민당(1994. 7. 8~1995. 5. 31) | 150 |
| 2. 자유민주연합(1995. 4. 3~1995. 5. 31) | 168 |
| 3. (신설합당) 자유민주연합(1995. 5. 31~2006. 3. 10) | 172 |
| 4. 새정치국민회의(1995. 9. 11~2000. 1. 24) | 185 |
| 5. 통합민주당(1995. 12. 21~1997. 11. 24: 1996. 6. 13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 196 |
| 6. 국민신당(1997. 11. 10~1998. 9. 24) | 210 |
| 7. 한나라당(1997. 11. 24~) | 214 |
| 8. 기타정당 | 224 |

제 4 장 | 정당 활동

| | |
|---------------------|-----|
| 제1절 선거활동 | 258 |
| 1. 제14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258 |
| 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70 |
| 3.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 297 |

| | |
|-----------------------------------|-----|
|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 301 |
| 5. 제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342 |
| 6. 제15대 대통령선거 | 348 |
| 제2절 원내활동 | 394 |
| 1. 1993년도 | 394 |
| 2. 1994년도 | 412 |
| 3. 1995년도 | 441 |
| 4. 1996년도 | 459 |
| 5. 1997년도 | 485 |
| 제3절 당내활동 | 512 |
| 1. 민주자유당(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 512 |
| 2. 민주당 | 554 |
| 3. 자유민주연합 | 584 |
| 4. 새정치국민회의 | 596 |
| 5. 한나라당 | 612 |
| 6. 기타정당 | 613 |

제 5 장 | 정당의 수입과 지출

| | |
|-------------------------|-----|
| 제1절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 | 626 |
| 1. 정당 수입 | 626 |
| 2. 정당 지출 | 630 |
| 제2절 정당의 수입 | 633 |
| 1. 당비 | 633 |
| 2. 기탁금 | 635 |
| 3. 국고보조금 | 636 |
| 4. 후원회 기부금 | 638 |
| 5. 차입금 | 640 |

| | |
|-------------------------|------------|
| 6.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 | 642 |
| 7. 기타수입 | 643 |
| 제3절 정당의 지출 | 645 |
| 1. 운영경비 | 645 |
| 2. 정책개발비 | 647 |
| 3. 조직활동비 | 648 |
| 4. 선거비 | 650 |
| 5. 선전비 | 651 |
| 6. 당원교육훈련비 | 653 |
| 7. 의정활동비 | 655 |
| 8. 기타경비 | 656 |

부 록

| | |
|-----------------------------|-----|
| 1. 정당의 변천과정표 | 661 |
|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 667 |
| 3.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 669 |
| 4. 정당의 당원수 | 670 |
| 5. 정당의 활동연지 | 677 |
| 6.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 750 |
| 7. 정당의 강령·기본정책 | 781 |





제1장 개관

제1절 _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

제2절 _ 정당분열과 4당 체제

제3절 _ 3당 체제의 형성과 정당 간 이합집산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듬해 1993년 2월 '문민정부'로 명명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한 정당은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신민주당, 친민당, 대한정의당, 새한국당 등 모두 8개 정당이었다. 이중 원내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등 5개 정당이었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이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1992년 12월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내 갈등과 내분으로 소속 의원들이 연쇄 탈당하는 등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자격을 상실하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한국 정당정치는 161석의 집권여당 민주자유당과 95석의 제1야당 민주당을 두 축으로 하는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김영삼 정부 원년 정당활동은 공직자재산공개를 시작으로 추진된 강력한 개혁정국 속에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전반적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특히 각 정당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당내갈등은 정당활동을 위축시켰다. 야당의 경우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권통합을 모색하였으나 각 정당들의 당내갈등과 정당 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1994년 7월 8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신민당으로 합당하여 부분적인 야권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민당 또한 합당 직후부터 당내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당내갈등의 문제는 집권여당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 대표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민주자유당은 지속적으로 계파 간 갈등을 표출해 오다 1994년 말 당내갈등이 심화되면서 1995년 1월 김종필 대표위원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4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이후 19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31일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하여 새로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양당체제로 재편된 정당구도는 2년여 만에 3당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정당들의 성립과 변화가 수반되었다. 지방선거 전 1993년 10월 대한민주당, 1995년 1월에 정명당이 창당되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당내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여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이에 따라 3당체제의 정당구도는 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등 일여다야(一與多野)의 4당 체제로 전환되었고,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소위 '신3김정치'가 부활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반(反)3김 지향의 시민사회세력들은 1995년 11월 보스정치와 지역정치 타파를 내세우며 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개혁신당은 반(反)3김이라는 공통된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던 민주당과 1995년 12월 21일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 이로써 4당 체제는 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으로 재구성 되는 작은 변화를 보였다.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또 다시 정당의 성립과 변화가 이어졌다.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정국쇄신과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1996년 2월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하였다. 또한 선거 직전 1996년 3월 무당파 국민연합과 21세기한독당이 창당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신한국당은 139석,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고,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여대야소 정국은 여소야대로 전환되었고, 정당구도 또한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유로 내세워 무소속과 야당인사에 대한 영입에 나섰고, 결국 제15대 국회 개원 전에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여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친민당, 대한민주당, 무당과 국민연합, 21세기한독당은 선거결과 정당존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멸되었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형성된 여대야소 정국 하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신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공조체제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3당체제는 여야간 양자대결의 갈등구조가 전개되었다. 이후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을 시작하였다. 신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으로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고 정당연합을 형성하였다. 신한국당은 7월 21일 경선을 통하여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9월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탈당한 후 국민신당을 창당하면서 분열하였다. 한편 1996년 6월 통합민주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민주당은 이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97년 7월 조순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11월 민주당과 신한국당은 신설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출범시키며 이회창을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그 이외에도 공화당, 민주국민연합, 바른 나라정치연합, 건설국민승리21 등 4개 정당이 대통령선거 직전 새롭게 창당되었다.

분열과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의 3자 대결구도 속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한국 정당정치는 정당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구조를 경험하였다. 이로써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당에서 공동여당의 지위로 탈바꿈하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입장이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바뀌었다. 한편 외형적 정당구도는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의 3당 체제였지만, 공동여당의 등장으로 실제로는 양당체제를 형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립,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25개 정당이 정치활동을 전개하였고, 각 정당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성립과 변화(1993~1997)

| 구분 | 정당명 | 활동기간 | 당명변경 및 소멸사유 | |
|------------------|-------------------------|-------------------------|--|--|
| 기 존 정 당 | 민주자유당 | 1990.02.15 ~ 1997.11.24 | 96.02.07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97.11.24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신한국당 · 민주당) | |
| | 민주당 | 1991.09.16 ~ 1995.12.21 | 95.03.07 새한국당 흡수합당 95.12.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민주당 · 개혁신당) | |
| | 통일국민당 | 1992.02.10 ~ 1994.07.08 | 94.07.08 신민당으로 신설합당(통일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 |
| | 신정치개혁당 | 1992.03.04 ~ 1994.07.08 | | |
| | 신 설 정 당 | 신민주당 | 1992.11.06 ~ 2004.02.13 | 93.01.18 진리평화당에서 신민주당으로 당명변경 95.04.01 통일한국당으로 당명변경 04.02.13 자진해산(정당법 제39조) |
| | | 친민당 | 1992.11.19 ~ 1996.04.13 | 96.04.13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대한정의당 | 1992.11.19 ~ 1994.02.15 | 94.02.15 자진해산(정당법 제39조) |
| 새한국당 | | 1992.11.19 ~ 1995.03.07 | 95.03.07 민주당에 흡수합당 | |
| 대한민주당 | | 1993.10.20 ~ 1996.04.13 | 96.04.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 | |
| 신민당 | | 1994.07.08 ~ 1995.05.31 | 95.05.31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자유민주연합 · 신민당) | |
| 정명당 | | 1995.01.13 ~ 2001.03.19 | 96.03.29 기독교신당으로 당명변경 01.03.19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신 설 정 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1995.04.03 ~ 1995.05.31 | 95.05.31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자유민주연합 · 신민당) | |
| | 자유민주연합 | 1995.05.31 ~ 2006.03.10 | 06.03.10 자진해산(정당법 제45조) | |
| | 신민당 | 1995.06.27 ~ 1997.05.06 | 96.02.05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변경 97.05.06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 | 1995.09.11 ~ 2000.01.24 | 00.01.24 새천년민주당에 흡수합당 | |
| | 개혁신당 | 1995.11.29 ~ 1995.12.21 | 95.12.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민주당 · 개혁신당) | |
| | 통합민주당 | 1995.12.21 ~ 1997.11.24 | 96.06.13 민주당으로 당명변경 97.11.24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신한국당 · 민주당) | |
| | 무당파국민연합(무당파연합) | 1996.03.18 ~ 1996.04.13 | 96.04.13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21세기한독당(한독당) | 1996.03.25 ~ 1996.04.13 | 96.04.13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공화당 | 1997.09.04 ~ 2000.04.14 | 00.04.14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민주국민연합 | 1997.09.04 ~ 1998.05.21 | 98.05.21 등록취소(정당법 제38조) | |
| | 국민신당 | 1997.11.10 ~ 1998.09.24 | 98.09.24 자진해산(정당법 제39조) | |
| | 바른나라정치연합(바른정치연) | 1997.11.19 ~ 1999.02.12 | 99.02.12 자진해산(정당법 제39조) | |
| | 한나라당 | 1997.11.24 ~ | | |
| 건설국민승리21(국민승리21) | 1997.11.24 ~ 1999.11.15 | 99.11.15 자진해산(정당법 제39조) | | |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

1. 정치개혁과 정당활동의 위축

1993년 2월 25일 ‘개혁과 변혁’을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를 선언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한국정치는 2년여의 기간 개혁정국 속에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공작정치 산실로 일컬어지던 이른바 ‘안가’ 철거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치사찰 중지 작업이 진행되었고, 정치군인들과 비리연루군인들을 축출하는 ‘군의 문민화’가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축재나 투기와 관련된 다수의 유력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물리나게 하는 등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였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의 여파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은 큰 후유증을 겪었다. 민주자유당은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와 함께 투기 등 부도덕한 축재과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당내에 ‘재산공개진상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및 경고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재산공개에 대한 여론의 지지 속에 재산공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민주당 또한 재산공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징계방침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의 반발로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었다.

개혁정국 속에 재산공개와 더불어 각급 기관이 총동원된 사정활동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고위공직자는 물론 금융계 등에서도 입시부정사건·동화은행 비자금사건·슬롯머신 비리사건·윙크사업 비리사건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처벌되었다. 또한 경제정의 실현과 이른바 ‘검은 돈’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가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추진된 강력한 개혁 여파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1인 독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물론 야당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치실종’이라는 말까지 대두되었다. 또한 강력한 사정활동에 대해 표적사정, 보복사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혁정국이 이어지면서 김영삼 정부 초기의 정당활동은 극히 위축되었다. 재산공개파동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정정국, 인사청산 문제를 제기할 만큼 큰 혼란을 가져왔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재산추채와 관련하여 의혹을 받으면서 정당정치 자체가 위축되었다. 특히 야당 중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마저 야당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선점당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군소정당들은 정당의 존속과 유지를 고심해야 했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 또한 개혁바람 속에 내부적 혼란을 겪으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강하였고,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출범 첫 해는 정부가 정국을 주도해 갔다. 반면 각 정당들은 내부적 혼란 속에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개혁정국의 여파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 1993년 4월과 6월 실시된 6개 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무려 5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6월 보궐선거 중 단 1개 선거구에서만 승리하였다. 이에 민주당·통일국민당·새한국당 등 야3당은 개혁정국 속에 위축되어 가는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7월 16일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8월 12일 실시된 2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자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단 한 곳에서도 당선되지 않아 야권공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여야 대치정국과 당내갈등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정부 주도의 정치상황은 1993년 후반들어 다소 변화를 보였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약한 쌀 수입 문제가 '개방'으로 결론나면서부터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12월 9일 대국민사과 담화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위축되었던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4년 3월에는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서 수정안을 제출하자 야당은 이에 대한 공세를 폈고, 결국 이회창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1994년 3월 들어 상무대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동하여 대여공세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회 공전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5월과 6월 두 차례의 영수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오히려 상호불신을 초래하여 여야갈등이 심화되었다.

여야의 대결상황은 1994년 11월 검찰이 12·12 군사반란 관련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소유예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은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1개월 이상 공전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1995년도 예산안과 1994년 추곡수매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승인 문제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주요 정치현안이 대두되면서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고 국회는 정상화되었지만 여야 간 갈등은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1994년 들어 민주당은 대여공세를 강화하며 야당의 위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쉽게 식지 않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거대여당의 독주 속에 정국주도권의 회복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당내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집단지도체제 속에 계파갈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계파갈등은 원내총무 경선, 제14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의 국회부의장 인선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검찰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결정에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는 그 방향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열 직전의 상황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열세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합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지가 약한 군소정당들은 대통합 논의와 함께 제3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소통합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통합논의에도 불구하고 야당통합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각 정당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하였고, 무엇보다도 각 정당들은 당내갈등을 겪으면서 야권통합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야권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대규모 야권통합에 앞서 1994년 7월 8일 신민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은 창당 이후 심각한 당내 계파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혼란에 빠졌다.

제2절 정당분열과 4당 체제

1. 민주자유당의 분열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3당 체제의 형성

1994년 말 각 정당들은 여야 구분 없이 상당한 내부갈등을 겪었다. 특히 3개 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집권여당 민주자유당은 당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1995년 초 분당사태를 맞았다.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 대표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당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잠재된 갈등은 전당대회를 2개월여 앞둔 1994년 말 당내에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당 세계화 방안을 천명한 이후 대대적인 당 개혁 논의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모색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1995년 1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종필 대표위원과의 회동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퇴진을 통보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은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김종필 대표위원은 1995년 1월 19일 대표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김종필 전 대표위원은 구 신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2월 9일 민주자유당 탈당과 함께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은 199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구 민주정의당 출신 핵심 인사들의 탈당사태를 겪은 데 이어 또 다시 구 신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탈당하는 분열사태를 맞았다.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위원과 구 신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은 이후 1995년 2월 2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3월 3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종필을 총재를 선출하고 자유민주연합을 공식 출범하였다.

이어 5월 31일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유지한 채 신민당과 신설합당하여 당세를 확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연합은 5월 25일 20명의 현역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는 민주자유당의 분열과 자유민주연합의 창당으로 3당구도로 재편되었다.

2. 민주당의 분열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4당 체제의 형성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자유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민주자유당, 민주당 등 3당의 경쟁구도 속에 전개되었다. 재편된 3당 체제 속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선전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개혁정국 속에 독주하던 민주자유당은 패배를 경험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서울을 포함하여 4곳의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하였고, 기초단체장 84명이 당선되었다.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352명이 당선되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시·도의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는 정국주도권 회복과 당세의 확장 대신 극단적인 당내 분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당내 계파갈등은 선거 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민주당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새한국당·통일시대국민회의와의 야권 3자 통합을 이루어내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선거기간 일시적으로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은 선거 후 또 다시 심화되어 분출되었고 결국 분당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는 당권을 가지고 있던 이기택 총재 측과 김대중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동교동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 12월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였고, 외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동교동계를 이끌고 있었다. 1994년 1월 27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하 아태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강연 등을 통하여 북핵문제·개헌론·기타 현실정치 관련 발언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6·27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을 위한 지원연설을 하는 등 지방선거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동교동계는 이기택 대표측과 지속적으로 대립양상을 보여 왔고, 6·27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는 극단적인 갈등을 표출하였다. 선거로 인하여 잠시 잠복했던 갈등은 지방선거 이후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출되었고, 결국 1995년 7월 18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동교동계 인사들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당창당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54명은 공식적인 신당 출범에 앞서 우선 8월 12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이들은 1995년 9월 5일 창당대회를 열어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을 총재로 선출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로써 1995년 5월 자유민주연합 창당으로 3당 체제로 재편된 정당 체제는 3개월여 만에 민주자유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 4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제3절 3당 체제의 형성과 정당 간 이합집산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 체제의 형성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체제를 또 다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신한국당(1996. 2. 7 민주자유당에서 당명 변경),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당체제 하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구속, 장학노 비리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논란, 3김 청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하며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고, 여대야소의 상황은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주당의 분열로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얻어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어 제2야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분당 이후 1995년 12월 개혁신당과 함께 '3김정치 청산'을 내걸고 통합민주당으로 신설 합당한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선거 전 형성되었던 4당 체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 3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은 국회의원선거 직후 이루어진 신한국당의 인위적 정개개편으로 오래지 않아 여대야소로 전환되고 말았다.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 및 무소속 당선자 영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국회 개원 전인 5월 20일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였다. 이에 야당은 신한국당의 인위적 정개개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장외규탄집회를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고, 여야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여야

대립으로 6월 5일 소집된 개원국회는 야당이 국회의장단 구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과반수를 확보한 이후 신한국당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야당의원들의 영입 추진 속도를 조절해 나갔고, 7월 1일 여야 3당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되었다.

한편 신한국당의 인위적 정개개편은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로 전환시켰지만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신한국당이 무소속 및 야당 당선자들에 대한 영입을 추진하자 야당은 이를 ‘야당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편파수사의혹 및 정치공작설을 제기하는 한편 여권의 금권·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5월 4일 총재회담을 통해 대역공동투쟁에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조체제를 형성한 양당은 장외집회뿐만 아니라 국회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에서도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선거공조를 취하였다. 그 결과 1996년 9월 12일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와 1996년 11월 18일 경기 오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의 단일후보가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양당은 이념과 정책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신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공조체제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관계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었다.

2.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정당 간 이합집산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1997년은 1996년 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단독처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단독처리 된 개정안에 대한 효력가처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1997년 1월 노동계가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1월 말 한보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야당의 대어공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월 19일 한보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어졌다. 신한국당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북한자금 1만 달러 수수를 폭로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그러나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YTN 인사개입 파문이 일면서 여야는 4월까지 게이트 정국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국혼란은 한보청문회 실시와 김현철의 구속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후 5월 들어 각 정당들이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에 나서면서 정치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5월 19일 김대중 총재를, 자유민주연합은 6월 23일 김종필 총재를 각각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하였다. 신한국당의 경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선을 통하여 7월 21일 이회창 전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주당은 7월 30일 조순 전 서울시장을 영입 한 후 9월 12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이러한 후보선출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상황은 급속하게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대통령후보 선출과 관련한 각 정당 내부 갈등이 확산되었으며, 여야간 공방도 대통령선거 자금에 대한 논란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 간 그리고 후보 간에는 선거상황에 따른 이합집산이 전개되었다. 가장 앞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야당 공조체제를 지속해 왔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후보단일화가 진행되었다. 양당은 내각제와 공동정부 구성을 매개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 나갔다. 결국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정권 창출 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을 총리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후보단일화와는 달리 신한국당은 오히려 내부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선거정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아들의 병력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당내에서는 구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교체론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보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탈당하면서 신한국당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후 이인제는 11월 10일 국민신당을 창당하였고, 신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선거 경쟁구도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대세론’이 거론되며 우위를 점하던 신한국당과 이회창 후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분열로 인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대통령선거 경쟁은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신한국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선거경쟁에서 열세에 있던 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결국 11월 7일 양당은 합당에 합의한 후 11월 24일 한나라당을 출범시켰다. 합당협상 결과에 따라 신설합당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이회창으로 단일화되었고, 대신 당 총재는 민주당 조순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선거 경쟁은 막바지에 이르러 명확히 3자 대결구도로 재정리 되었다.

한편 기타 군소정당들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허경영 후보를, 바른나라정치연합이 김한식 후보를, 통일한국당이 신정일 후보를 내세워 대통령선거 경쟁에 참여하였다. 또한 독자적으로 대통령후보추대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재야 사회·노동단체들은 ‘국민후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후보 추대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7년 11월 24일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정치결사체인 ‘건설 국민승리21’을 창당하였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였다.

1997년 1년 동안 각 정당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합집산하여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신당의 3당 대결로 진행된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의 40.3%인 1,032만 6,275표를 획득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4번의 대통령선거

출마 끝에 당선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선거 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최초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로 명명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2장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제1절 _ 정당법

제2절 _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절 정당법

1993년 2월에서 1998년 2월까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모두 4차례의 「정당법」(이하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개정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만 10개월여만인 1993년 12월 27일 이루어졌다. 이는 노태우 정부에서 1989년 3월 25일 마지막으로 정당법이 개정된 이후 만 4년 9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7차 개정이었다. 이후 정당법은 3년여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 1997년에 이르러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개정은 모두 정당법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조정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김영삼 정부 기간 중 실질적인 내용변화를 가져온 정당법 개정은 1993년 단 한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93년 개정된 7차 개정 정당법은 2000년 2월 16일 정당법 개정 시까지 6년 1개월여 동안 지속되었다.

1. 제7차 개정(1993. 12. 27)

가. 개정과정

1) 김영삼 정부 출범과 정당법 개정 논의

정당법 개정 문제는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곧바로 주요 정치적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3월 4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반부정부패’를 선언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선거법」 등 3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민주자유당에

1) 김영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임 5년 동안 기업인은 물론 어떠한 사람한테도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새 정부 출범 후 조기에 정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정당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되자 민주자유당은 서둘러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빠르면 4월 임시국회, 늦어도 1993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초기 민주자유당의 정당법 개정의 초점은 지구당 역할 축소에 있었다. 당시 정당법은 48개 이상의 지구당이 있어야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소요되었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법정 지구당 수를 줄이거나 지구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정치현실상 지구당 존치가 필요할 경우라도 상설요원제 폐지 및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993년 4월 2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제161회)가 개최되자 여야는 정치관계법 심의대상에 정당법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심의할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하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가동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5월 15일 정당설립 요건의 대폭적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의견²⁾을 제출하며 정당법 개정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쟁점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여야협상의 초점은 공직자윤리법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정당법에 대한 개정협상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7월 2일 개최된 제162회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12·12 군사반란과 울곡비리 및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되어 단 한건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제162회 임시국회 이후에는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위원들이 정치관련 법·제도 해외시찰에 나서면서 정당법 개정협상은 휴면상태에 돌입하였다.

정당법 개정 협상은 정기국회를 앞둔 1993년 8월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민주자유당은 8월 5일 당내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열고 각종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법 개정의견은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 창당해야 하는 지구당 수를 5개 시·도 48개 지구당에서 3개 시·도 15개 지구당으로 줄이고, 수도 서울에 두도록 한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도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정당가입 제한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교원 이외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대해 누구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률 등의 개정을 위한 법안조문화 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8월말까지 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세부일정을 확정하였다. 특히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정치권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구당제도 폐지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지구당제도가 과중한 운영경비로 인해 정치자금 수요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검토하고 있는 지구당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지구당은 정당의 뿌리이며 당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 되며, 단지 지구당운영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충된 입장 속에 여야는 1993년 8월 19일 당3역 회의를 통해 8월 23일부터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정치관계법을 심의한다는 데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본 협상에 앞서 민주자유당은 내부 논의 끝에 우리의 정치문화를 감안하여 지구당제도를 폐지한다는 초기 개정방침을 수정하고 지구당을 존속시키기로 최종 당론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정당법 개정협상은 지구당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를 해소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협상의 논점은 정당설립 요건 완화에 집중되었다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993년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정당의 정당법안을 정기국회 개회 전인 9월 9일까지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결정에 따라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정협상은 민주자유당이 정치관계법 처리 연기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자유당은 정치관계법심의특위 활동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안기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2개 법안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³⁾ 금융실명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여야간 이견과 쟁점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3) 민주자유당의 김영구 총무는 1993년 8월 25일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는 국회정치관계법특위가 논의하고 있으나 정기국회 중 처리가 어렵다고 본다. (……) 정치관계법은 여야간 이견이 많고 특히 쟁점이 많은 각종 선거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의 합의를 깨고 다음 해로 미룰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반발하였고, 이러한 대립상황 속에 결국 정당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2) 정당법 개정안 발의와 개정협상

1993년 9월로 접어들면서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자 여야는 협상에 임할 정당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은 8월 30일 당내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열어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당성립·존속 요건을 48개 이상 지구당에서 15개 이상 지구당으로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어 민주당도 9월 4일 비민주법률개폐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주당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소속정당의 해당 지역 대의원 또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신설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 외 당원 정예화와 당 재정자립을 위한 당비납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규정을 두도록 유도, 당원제명 때 해당 당부의 투표의무화, 창당준비 또는 정당활동 방해죄 신설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당법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 그리고 정당성립 요건의 완화라는 개정방향에서 여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협상에 큰 난항이 예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시된 개정안 중 몇몇 쟁점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우선 여야는 정당가입 제한 조항에 있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기존 정당법에서 당원자격의 제한 대상이었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허용하였지만, 그 외에는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과 교사 등으로 그 제한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당원 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각종 선거 시마다 관련선거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의 임·직원과 통·리·반장, 예비군 소대장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정당가입 제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입장차 속에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정당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당원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였으나, 민주당이 주장 하였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 통·리·반장과 관변단체 상근 임·직원의 당원자격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통·리·반장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중요 쟁점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련 조항, 즉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소속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정당법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적용될 원칙 몇 가지를 정당법 내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 또는 확정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구당 등 당부의 대의기관 또는 당원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자유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밀 투표 의결추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정당창당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양당이 모두 요건완화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구체적 완화수준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법정지구당 수에 있어서 기존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 총수의 5분의 1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총수 이상을, 민주당은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이상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개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 수는 48개 이상이었으며, 민주자유당 개정안은 15개

이상, 민주당 개정안은 24개 이상으로 완화하지는 것이었다.

한편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정당법상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5곳 이상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주자유당 개정안은 3곳 이상에 분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반면 민주당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양당은 정당의 창당요건과 관련한 협상을 통해 법정지구당 수에 대해서는 민주당 개정안을 수용하여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였다. 반면 지구당 분산요건에 있어서는 민주자유당 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아 기존 5곳 이상 분산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그 이외에 일부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는 정당 등록취소 사유, 국회의원 이외의 당원 제명, 입당절차, 정당기구의 제도화 등이 있었다.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은 개정안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를 취소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명목상의 정당은 존속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정의 견을 제안하였다. 국회의원 이외의 당원에 대한 제명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이 소속지구당의 해당기관에서 투표에 의하도록 하고, 제명사유와 절차 그리고 상급 당부에서의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과정에서 이 두 개정내용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입당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이 당원자격 심의, 입당허가 여부, 효력발생,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접수 거부나 지연 및 입당 거부 시 구제 등과 관련한 조항의 삽입을 제안하였고, 이는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 중 중앙당 대외기관 구성 등 정당기구 제도화 관련 조항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논쟁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인 여야는 1993년 12월 1일 제3차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정당법 심의반을 통한 협의결과 여야는 이미 발의된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일부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같은 날 제18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9호로 공포되었다.

나. 주요 개정내용

1993년 12월 이루어진 7차 개정으로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 정당성립 요건, 창당준비위원회, 당원자격 등과 관련된 4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정당의 성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수와 자격, 신청서류 등의 요건이 다소 완화된 점이 주요 변화였으며, 특히 당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이 허용된 것은 특징적인 변화였다.

7차 주요 개정내용

| 구분 | 개정 전(1989. 3. 25 법률 제4087호) | 개정 후(1993. 12.27 법률 제4609호) | 비고 |
|-----------------|---|--|------------------|
| 합당 효력 유예 범위 | 국회의원 선거 |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 | 효력 발생: 선거일 후 20일 |
| 발기인 수 | 20인 이상 | 중앙당 20인 이상, 지구당 10인 이상 | |
| 발기인 자격 |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 자격제한 | 법률에 직접 명기, 언론인 정당가입 허용 | 일원화 |
| 당원자격 | '' | | |
|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창당승인 |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신고제) | 신고제 폐지 | 실질주의 |
| 당지부 등록신청 | 대통령령에 위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 | |
| 등록신청 사항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 | |
| 법정당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만 제출 | 간소화 |
| 당비 | - | 당비납부제도 설정·운영하도록 규정 당원납부의무 불이행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등은 당헌으로 규정 | 신설 |
| 탈당 | 소속지구당에 탈당계 제출 | 상급 당부에도 탈당신고서 제출 가능, 효력은 탈당신고서 접수 시점부터 | 탈당권 보장 |
| 법정지구당 수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1/5 이상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1/10 이상 | 완화 |
| 서면 또는 대리인 결의금지 | 창당, 합당, 소속국회의원 제명 | 모든 대의기구의 결의 | 확대 |
| 공직후보자 추천 | 민주적이어야 함 | 민주적이어야 함,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의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절차는 구체화하지 못함 |
| 등록취소 유예 선거 범위 | 국회의원선거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 | 확대 |
| 지구당창당승인취소 | - |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취소절차와 사유 규정, 대의기구 투표로 취소결정 | 신설 |
|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 | - |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도록 함 | 추가 |
| 창당병해 | - | 창당병해죄 신설, 7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신설 |

1) 정당 성립요건 완화

개정 정당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정당의 창당요건 완화’에 있었다. 각 정당의 정당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여야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안 모두에서 ‘정당 성립요건 완화’는 공히 제시된 주요 개정이유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 수를 완화한 것이었다. 기존 정당법은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지구당 수를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 수의 ‘5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정당법은 이 수를 ‘10분의 1이상’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정당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창당에 필요한 최소 법정지구당 수는 48개에서 24개로 줄어들었다.

정당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법정당원의 입당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지구당 수 요건과 함께 지구당이 30인 이상의 법정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정당법은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입당원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역구 지역 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개인 신상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은 신분노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입당제약의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 정당법은 이러한 서류첨부 규정을 삭제하여 입당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법정당원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신고제도 또한 폐지하여 창당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지구당 창당과정을 용이하도록 개정하였다.

2)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조정

정당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점이 되었던 또 다른 조항은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이었다. 개정으로 나타난 변화는 우선 이원화되어 있던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 조건을 단일화한 것이다. 즉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각기 다른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조항(6조)에 묶어 규정하였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란이 되었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이 허용된 것이었다. 기존 정당법에서 언론인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으로서의 자격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언론인의 자격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제한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논란의 해소와 정당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방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인의 정당 자격 허용은 언론의 파벌갈등, 편향성과 편파성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기 상조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언론인 정당가입과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전개되었으나, 양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모두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언론인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기존 정당법에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그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였다. 개정 정당법은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교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3) 합당 효력 유예범위 확대

합당과 관련하여 기존 정당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합당 관련 규정은 1962년 제정 정당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1964년 제정된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 이후 1969년 정당법 제1차 개정 당시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정당법에 통합되면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이 정당법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발표된 후 이루어진 1972년 12월 제2차 정당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가 합당 효력 유예대상 선거에서 제외되면서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었다. 이후 이 규정은 1993년 제7차 개정 전까지 지속되어 왔다.

선거기간 이루어진 합당효력의 유예 규정은 선거기간 중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합당 전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처리문제 등 선거관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되면서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가 늘어남에 따라 선거기간 중 합당에 따른 후보자 문제 등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정당법에서는 정당합당의 효력을 유예하는 선거의 범위를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모든 공직선거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4) 당비납부제도 설정·운영

개정 정당법에는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자주·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여 당비납부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정당의 당원에게는 이전과 달리 당비 납부의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당비납부 의무조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등 필요한 사항을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가적 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5) 당원의 탈당권 보장

7차 정당법 개정에서는 공직선거 시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때때로 시비가 일었던 당원의 탈당 관련 조항도 일부 손질되었다. 기존 정당법에서는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해당 지구당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정당법 규정으로 인하여 탈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지구당으로부터 탈당을 거부당하거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공직선거 시기에는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적 문제가 후보자 자격시비와 논란을 야기하면서 선거 후 당락과 관련한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에 개정 정당법에서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뿐만 아니라 그 상급 당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탈당의 효력도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또는 그 상급 당부에 접수된 때 발생하도록 하여 당원의 탈당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즉 자의에 의한 정당 탈퇴를 방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6) 등록취소 유예 선거범위 확대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개정 정당법은 정당의 존립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정지구당 수와 법정당원수 등 요건흡결로 인한 정당의 등록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선거일 전 3월 안에 정당등록요건의 흡결이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이외에는 요건 흡결 시부터 3월까지로 취소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법정지구당 수와 당원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창당방해죄 신설

개정 정당법의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창당방해죄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신설된 제55조 창당방해 등의 죄 규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 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8차·9차·10차 개정: 정당관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1993년 12월 정당법이 개정된 이후 3년여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정당법은 1997년 들어 「경찰법」, 「검찰청법」,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 정당법과 관련된 3가지 법률의 개정 에 따라 각각 1997년 1월과 12월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자구를 수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97년 1월 13일에는 개정 「경찰법」과 「검찰청법」이 공포되면서 이와 동시에 정당법 8차 개정과 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경찰법」은 제11조 제4항에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을 통해 정당법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한편 개정 「검찰청법」도 제12조 검찰청장 관련 조항에서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항을 신설하였고, 경찰법과 마찬가지로 부칙을 통해 정당법 중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고 명기하였다.

두 법률의 개정은 모두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 환경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두 개정 법률안의 개정이유에서도 “경찰청장이 재직 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법은 해당 조항인 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규정에 있어 자격제한 대상에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와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를 각각 새로운 항으로 추가하여 신설 규정하였다. 개정된 정당법은 1997년 1월 13일 각각 법률 제5260호와 법률 제5263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 이내의 검찰청장에 대한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한편 제10차 정당법 개정은 1997년 12월 13일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였다. 그 중 하나가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률 제5454호로 공포된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법 내용 중 관련 내용도 더불어 정비된 것이다. 정당법 중 관련 내용은 정당 구성과 관련하여 당 지부의 설치 가능지역 규정과 지구당의 분산 규정 내용이었으며, 관련 내용 중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일괄 변경되었다. 개정된 정당법은 1998년 1월 1일 법률 제5454호로 공포되었다.

제2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 초부터 정당법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부각된 중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과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한 해를 넘겨 1994년 3월에서야 제7차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 12월, 1997년 1월, 1997년 11월 등 추가로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김영삼 정부 기간 정치자금법은 총 4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1. 제7차 개정(1994. 3. 16)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한 쟁점은 ‘변화와 개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을 천명하며 ‘위로부터의 개혁’을 공언하였고,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며 정치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었고, 여당과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가. 개정과정

1) 개정 배경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작업은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3일 만인 1993년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10원

단위까지 공개하였고, 3월 4일에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뒤이어 재산공개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장관의 사퇴,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탈당 및 제명 등 소위 ‘재산공개 파문’으로 많은 논란과 반발이 일었다. 공직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강제 재산공개가 사생활 비밀보장,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라는 헌법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위헌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적 청산을 위한 ‘인치(人治)’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 정국은 계속하여 이어졌다. 1993년 5월에 개최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후에야 재산공개 파문은 진정되었다. 재산공개 파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치개혁의 분위기 속에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공개의 제도화와 국고보조금 실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의견에서 정치자금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간 기부금이 중앙당 및 시·도지부후원회는 500만원, 지구당후원회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1회 1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은 타인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기탁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지출 및 경리 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조금실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치자금의 조달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을 허용하고 지정기탁금 중 25%는 국고보조금 지급방법에 의거하여 지정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회로 설정되어 있는 후원회 금품모집 횟수의 제한 규정 철폐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후원회의 회원수

를 중앙당은 현재의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시·도지부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구당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고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전제로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도 허용토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계속하여 제기되는 상황과는 달리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척이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8월 들어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일순간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하면서 금융실명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는 즉각적으로 정치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음성적이고 변칙적인 정치자금 조달이 일반적인 정치풍토로 인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치권의 음성적인 자금통로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여야 모두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8월 19일 국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이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8월 23일에는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재개되었으며, 각 정당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2) 정기국회와 정치자금법 개정 실패

1993년 9월 들어 정국이 정기국회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선거혁명·정경유착 배제·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제시하며 관련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내부적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9월 4일 다른 정당에 앞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9월 16일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민주당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여당에 집중되어 왔던 지정기탁금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정기탁제의 폐지와 정치자금 모금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자금 기부증서, 소위 ‘쿠폰제’ 신설을 주요 개정내용에 담았다. 한편 민주당에 비해 개정안의 국회제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9월 10일 이미 개정방향을 밝힌 민주자유당도 11월 15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 간에도 실질적인 개정협상이 전개되었다.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한 정당의 범위 확대, 후원회 회원수 확대, 국고보조금 사용 영역 확대 등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제 규정, 당비납부 한도, 정치자금기부증서제 도입 등 여러 측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고, 양당은 이견을 보이는 조항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은 그다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기국회 초반기인 9월에는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10월과 11월에 들어서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의 국회 주요일정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11월 말에 이르러서야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이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안기부법 개정안과 선거법의 그늘에 가려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12월 들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 때 정치관계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12월 9일 여야가 국회일정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협상은 재개되었고, 여야는 후원회 모금 횟수 확대 등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지정기탁금제 폐지, 당비납부 한도, 정치자금기부증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쟁점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감 직전까지 정치관계법심의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심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이듬해 새로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 특위로 넘겨졌다.

3) 6인협상대표회의와 정치자금법 개정

1993년 정치관계법 연내 개정을 주장하던 여야는 개정합의에 실패하여 해를 넘기게 되면서 1994년 1월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협상을 서둘렀다. 1월 20일 양당은 협상대표 3인씩을 지명하여 여야 6인협상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본격협상을 재개하였고, 1월 28일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쿠폰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최종 쟁점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당비상한 규정,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액 등 3가지로 압축되었다.

지정기탁금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현행 지정기탁금제로는 여당의 정치자금 독식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을 참조하여 75% 지정정당, 25% 의석비율에 따른 정당 간 배분방식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지지하는 정당에 내놓은 기탁금을 다른 정당에 배분한다는 것은 정치자금 기탁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당비 상한 규정과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은 거액의 공천헌금을 내고 전국구의원이 되는 관행을 막고자 1인당 5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이내 중 고액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한선 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이 인상을, 민주자유당이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여야는 2월 들어 6인협상대표회의를 통해 최종쟁점들을 중심으로 계속 협상을 벌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공천헌금을 겨냥하여 제기한 당비상한 설정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인상을 관철하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정기탁금제 폐지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최대 쟁점을 해결한 여야는 세부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통해 3월 3일 개정협상을 완료하였다. 이후 여야는 절충안에 근거하여 3월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하였고, 같은 날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나. 주요 개정내용

여야가 내세운 7차 정치자금법 개정이유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여 정치자금 조달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정당운영과 정치활동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된 핵심내용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후원회의 활성화였다.

1) 국고보조금 증액

개정 정치자금법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매년 1인당 600원씩 계상하여 정당에 지급하던 국고(경상)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200원 증액하여 800원씩 계상하도록 인상하였다. 또한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 각 선거마다 선거권자 1인당 600원씩 계상하던 선거보조금도 1인당 800원씩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때에는 각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600원씩 추가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통상적으로 유권자 1인당 800원씩 계상된 경상보조금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각 800원, 그리고 정당 공천이 허용되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3대 선거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 시 각 선거마다 600원씩 계상된 선거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고보조금 증액과 함께 그 배분 기준도 다소 변화되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보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을 제외한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규정 이외에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 정당의 추천이 허용되는 전국단위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2%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규정 가운데 0.5% 이상 득표라는 지급기준 비율을 2% 이상 득표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군소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정당활동 또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직활동비, 선전비,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용도 항목에 추가되었다.

2) 후원회 제도의 확대

후원회와 관련된 변화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확대와 후원회 회원수 제한 완화, 후원금 모금액과 기부 상한액 증액, 모금방법 제한 완화 등 후원회 활성화 방안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7차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지구당 또는 국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지역선거구에 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후원회 회원수는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시·도지부 후원회의 경우 300명에서 500명으로, 그 외 지구당 등 후원회의 경우에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늘었다. 후원회가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에 있어서는 지구당의 경우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그 결과 실제 기부상한액은 다소 높아졌다. 또한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후

원회의 모금한도 조항도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시 부득이 한 경우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금품모집 방법은 옥내집회와 광고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옥외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평년 1회, 정당추천이 가능한 임기 만료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 2회로 제한되어 있던 모금 횟수도 평년 각 2회, 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각 3회로 늘어났다. 또한 후원금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제도를 신설하였다. 후원회에서 익명기부를 제외하고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사용하여 후원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액영수증은 5만원·10만원·50만원의 3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신청할 수 있는 총 발행가액은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기타 개정내용

제7차 개정에서 큰 변화를 보였던 국고보조금과 후원회 이외 개정과정에서 핵심 논쟁점이 되었던 기탁금제도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 기탁금 최저한도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더불어 기탁금 지급시기가 기탁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회계보고 제도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를 보였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통상적인 정기 회계보고 이외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이러한 비통상적인 수시 회계보고 대상에 정당등록이 취소되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

가 후원회 지정을 철회한 때를 추가하였다.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의 경우도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보고 내용에 재산상황을 추가하고, 첨부서류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회계보고 제도를 강화하였다. 신설규정에 따라서 회계보고 시에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사본, 대의기관(수입기관)의 의결서 사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단,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였다. 더불어 회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제8차 개정(1995. 12. 30)

가. 개정과정

1) 국고보조금 계상과 개정문제의 제기

1994년 3월 국고보조금 증액을 핵심으로 하는 제7차 정치자금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994년 7월 개정된 기준에 의한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된 국고보조금 계상기준에 의해 1995년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약 928억 원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우선 그 금액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정당의 통상운영비까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과다 계상의 주 원인이 된 선거년도 선거보조금 추가지급 조항도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정치개혁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

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자유당은 이에 대한 재개정 추진의사를 비치기 시작하였다.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폭 늘어난 국고보조금이 돈 안 쓰는 깨끗한 정치의 취지와 다소 어긋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국고보조금 축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인상으로 다소 여유로운 정치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 야당은 여당의 개정의사 표명에 “국고보조금 축소는 야당의 정치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오히려 여당에 일방적으로 편중되는 지정기탁금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역공을 펼쳤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과다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전개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가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국고보조금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은 1994년 10월 민주자유당이 개정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민주자유당은 10월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해 한 차례도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야당이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재개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1995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실시 이전까지도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계속하여 이어졌다.

1995년 2월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가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논쟁점은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5씩을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 제18조 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생 자유민주연합이 창당과 함께 의원수에 따라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여당을 필두로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즉 5석 이상의 정당에 대해 보조금의 5%를 일괄 지급하는

4) 1994년 7월 23일 민주자유당 고위당직자 회의 후 박범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면 당도 그런 여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히며 재개정 추진의사를 전하였다(서울신문, 1994년 7월 24일자 4면).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정치자금법 제18조 조문 중 ‘얻은’이란 의미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유민주연합은 지급 규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반대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단순한 반대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제7차 개정 정치자금법은 선거년도 추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 ‘정당추천이 허용된 지방선거’에 각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600원씩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에 정당추천이 허용된다면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약 696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만일 4개 선거 중 2개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면 약 348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주민자치·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정당정치는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박지원 대변인),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유준상 부총재)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처럼 입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여야는 결국 협상을 통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64억여 원이 줄어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174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

한편 3월에는 민주자유당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반대로 민주자유당이 하루 만에 허용방침을 백지화하여 단발

개정논란으로 종결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중단되었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1995년 10월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문이 일면서 다시 점화되었다. 세간의 관심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중되어졌고, 특히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과문에 대한 대책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당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2) 정치자금법 협상과 개정

1995년 11월에 들어 민주자유당이 국고보조금 축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여야간 개정협상을 제안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이 본격화되었다. 민주자유당 개정논리의 핵심은 돈 안드는 선거가 초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 서정화 원내총무는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거세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희석시키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지원자금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1996년 2월 7일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여당은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연내에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당내 정치관계법기초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국고보조금의 축소 및 배분방식의 조정이었다. 즉 후원회 모금 한도액은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계상액은 감액하며 균등배분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의석비율 중심으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12월 8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기부한도 증액,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 수, 1개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 지급비율 상한 제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행위자와 정당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제출하자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던 새정치국민회의는 12월 8일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에 동감한다는 여야합의 개정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써 여야간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고보조금 규모 및 균등배분 비율의 축소 문제였다. 민주자유당은 국고보조금 계상기준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600원으로, 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보조액도 600원에서 500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균등히 배분하는 몫을 4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의석비율 및 득표율에 따른 배분의 비율을 60%에서 80%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당비와 기탁금 모금이 미미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줄이자는 여당의 주장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다. 대신 야당은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지정기탁금은 실제 여당의 일방적인 전유물이 되어 왔고,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탁금의 75%만을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정은 여당의 국고보조금 축소 주장에 대항하는 야당의 강력한 협상안이었다. 야당들은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에서부터 1개 정당의 지급 상한 제한, 비지정기탁제로 변경·배분 등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정치자금법 개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개정에 대한 이

견으로 계속 논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여야 총무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18일 내무위원회안이 제안·토론되었다. 그러나 여야총무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야당은 계속하여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다시 각 정당 실무대표자간 심의를 통해 위원회안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996년 12월 19일 재개된 내무위원회에서도 정당 실무대표자간의 심의 및 합의내용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여야는 지정기탁금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실무대표 협상에서 “기탁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긴 한 것이냐”라며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은 국고보조금 인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은 점과 야당의 지정기탁금제 폐지 주장에 대해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점이 같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계속된 공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위원회안은 표결을 통해서 의결되었다. 같은 날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에서까지도 여야는 4분 발언을 통해 개정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논쟁을 벌였고, 역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나. 주요내용

8차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후원회 제도의 확대에 있었다. 후원회의 회원수, 납입한도, 기부한도, 모금한도 및 방법 등 후원회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확장이 이루어졌다. 우선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중앙당 후원회 회원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각 500인과 30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시·도지부 및 지구당 등의 후원회 회원수 제한은 유지되었다. 한편 후원금의 납입한도는 2배로 늘어났다. 즉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지부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개인의 납입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납입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후원회가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1억 원 한도에 1.5배까지 기부가 가능했던 지구당 등 후원회의 경우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도록 기부한도를 확대하였으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중앙당후원회는 3배까지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품모집 방법에 있어서 집회와 광고로 규정되어 있던 모집방법에 우편에 의한 방법이 추가되었고, 평년 각 2회로 제한되어 있던 모집횟수 제한도 철폐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기간에는 집회 또는 광고 중 1회만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또한 모금한도에 있어서도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의 제한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시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우편에 의한 모금의 경우도 추가되었다. 그 이외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앙당과 지구당 회계책임자 외에 시·도지부 회계책임자에게도 회계보고 의무가 부과되었다.

3. 제9차 개정(1997. 1. 13)

가. 개정과정

1) 개정배경

1995년 12월 30일 제8차 개정 정치자금법이 공포된 이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출발점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진행되면서부터 불거져 나온 공천헌금 요구설이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여 앞둔 1996년 3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에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헌금 20억원을 요구받았으며,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천헌금 논쟁이 시작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은 1992년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상임고문의 전국구 공천헌금 착복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사이의 공방은 공천헌금 문제를 정치권의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에서 공직선거후

보자의 당비납부 규모 제한과 정당의 지출은 물론 수입명세서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사를 내비치면서 정치자금법은 또 한 차례의 개정이 예고되었다.

이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하여 잠복해 있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선거전 1995년 12월 이루어진 제8차 정치자금법 개정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자금법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고, 선거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정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이후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선거법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조달규정, 모금방법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특히 1996년 5월 금호그룹의 정치자금 제공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치자금법의 맹점이 지적되었다. 신한국당(1996. 2. 7 민주자유당에서 당명변경)은 금호그룹으로부터 30억 원의 정치자금을 우선 기탁 받은 후 가영수증을 발행하고 사후 기탁업무를 위임받아 절차를 대행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당비와 후원회비 이외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 변칙기탁이며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한국당에 대한 금호그룹의 30억 원 기탁사건은 기업과 정당 간에 정치자금이 직거래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지정기탁금제도의 제도적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2) 개정협상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국회 개원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야간 개정논의는

쉽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및 야당의원들에 대한 영입을 통해 과반수 확보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야당들은 장외투쟁으로 저항하였다. 정국이 경색되자 여당은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원 추가영입을 중단하고, 정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정치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지정기탁금을 포함한 정치제도에 대한 개선협상 가능 의사를 전달하면서 경색정국 타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비공식 총무회담 등 개원협상을 위한 여야 3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차이가 커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제15대 국회 개원을 위한 제179회 임시국회는 신한국당 단독개원 강행과 야당의 실력저지가 대립하면서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폐회일인 7월 4일야 가까스로 의장단만을 선출한 채 폐회되었다. 그러나 폐회 전 7월 3일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은 정치제도개선특위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정치제도개선특위 구성 합의과정에서 신한국당은 특위의 야당 몫에 민주당이나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소속의원 1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야당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철회하고,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은 이번엔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원내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야 동수의 특위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정치제도개선특위는 여야 각 9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하여 1996년 8월 10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제도개선특위 구성에서 배제된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여 제179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의장단상을 점거하며 저항하였고, 결국 개원식은 열리지 못하였다.

이후 7월 8일부터 27일까지의 회기로 제180회 임시국회가 개최하면서 정치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제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자금법 문제는 검찰·경찰중립화 문제와 더불어 제15대 첫 정기국회 최대난제 중 하나였다. 특히 정치

자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지정기탁금제 존폐 문제는 제9차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정치제도개선특위를 본격 가동하기 전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권공조의 연장선상에서 단일안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9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각각 당무회의를 통해 그간 조율해 왔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개정안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접기탁 명문화를 통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한편 신한국당도 10월 22일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에는 야당안과 대조적으로 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의 기탁금 직접수령 가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11월 1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11월 4일 정치제도개선특위가 가동되면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은 양당의 개정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본적인 견해차를 보임으로써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11월 12일 정치제도개선특위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공청회를 포함하여 총 9차례의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으나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협상과정에서 신한국당이 국고보조금 삭감안을 제시하자 야당은 무성의한 개정안이라면 반발하였고, 결국 11월 15일 소위원회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3당 원내총무는 정치제도개선특위 위원장과 함께 4자회담을 열어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의 쟁점 현안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정치자금법 협상은 4자회담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결국 정기국회가 마감되어 가던 12월 9일에서야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매듭짓고 정치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된 지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12월 13일 정치제도

개선특위는 4자회담 합의사항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심했던 지정기탁금제 폐지 문제는 결국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제를 유지하는 대신 야당의 주장 중 일부가 수용되었다. 우선 지정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도록 명시하였고, 야당이 가장 민감하게 저항했던 신한국당의 국고보조금 축소 주장은 철회되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기본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축소를 주장하던 여당안 대신 60% 인상을 주장하던 야당안을 조정하여 50% 인상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토론신청을 통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규정 의원은 3당만의 제도개선 협상에 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점 등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나. 주요 개정내용

제9차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 핵심적인 변화는 후원회제도의 확대, 보조금 배분비율 조정, 기탁방법의 변경 등 세 가지였다. 우선 후원회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후원회 회원수 제한이 전면 철폐되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중앙당후원회만 회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모든 후원회의 회원 수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확대되어 바자회, 서화전 등의 집회를 통해서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당과 시·도지부후원회도 정액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액영수증의 경우 1만 원, 100만 원 등 2종을 추가하여, 정액영수증은 1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모두 5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원부를 제외한 정액영수증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기부한 자 및 기부 받는 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국고보조금 지급배분 비율은 기본배분 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4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기본적으로 균등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10% 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따라서 5석 미만의 소수정당들에 대한 배분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민주당이 개정안에 극심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기탁금제도의 경우에는 정당과 기탁자 간의 직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기명으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기탁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직접 기탁하고 사후에 정당이 기탁절차를 대리로 수행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합법적 정치자금과 불법자금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야기되었다. 개정 정치자금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4. 제10차 개정(1997. 11. 14)

가. 개정과정

1) 개정배경

199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97년 2월 초 한보비리 수사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드러나면서 또 다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가 야기되었다. 한보수사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노갑 의원이 순수 정치자금이며 ‘떡값’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떡값 논쟁’이 전개되었고, 기존 정치자금법이 각종 비리에 관련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9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제11조 기탁금 관련조항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라고 수정되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조항의 앞머리에 ‘정당에’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은 것이다. 그러나 공방의 핵심은 바로 ‘정당에’라는 단어 하나로 촉발되었다. 즉 이 조항에는 정당이 아니라 개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범망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한보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개정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정치자금법의 개정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보사건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향은 즉각적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고,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사회단체 지도자 75명도 시국성명을 발표하여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여당인 신한국당도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정치자금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개정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1997년 2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자금법을 개정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 개정협상

한보사태가 마무리되어가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한보사태 여파로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 선거자금에 대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1997년 5월 다시금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신한국당은 5월 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내세우며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도 5월 10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법 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문화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개정안의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중앙당에서 기탁금을 직접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명한 정치자금 보장 원칙에 대한 위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월 4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수정하여 지정기탁 시 둘 이상의 정당과 그 배분비율을 지정하도록 하고, 하나의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탁금 총액의 30%를 해당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에 의해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정치자금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후원금 등 모든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법인세의 일정액을 부가하여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목적세를 신설하여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정당의 당비 납부실적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지구당에 국고보조금 지원 등도 주요 개정의견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에게도 개인 후원회 설치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도 개정의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의 후원회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돈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6월 4일 신한국당은 3단계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차적으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3당 총무회담을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선거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만 거듭하다 정치개혁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방안 조차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6월 16일 신한국당은 고비용정치구조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각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 정치자금 기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돈 정치 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6월 18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입법청원 하는 등 개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7월 들어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은 7월 28일 정치개혁입법공동위원회를 통해 법안 단일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신한국당은 7월 23일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기존 정치자금법을 거의 유지한 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지정기탁금제, 노동조합 정치헌금 허용문제는 현행을 유지하며, 1997년 들어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양성화하되 개인 기탁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 정당의 개정안 마련 작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는 여야동수 구성 문제를 놓고 한달 째 양보 없는 대립을 지속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날짜조차 잡지 못하였다. 또한 야당은 이른바 ‘떡값’과 관련한 처벌 조항의 삽입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가 찬성, 자유민주연합이 반대하면서 단일안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을 앞두고 당장 장애가 되고 있었던 특위구성과 관련하여 신한국당은 심의기구를 특위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 가능하나 여야동수로 하자는 것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국당은 7월 28일 정치관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7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무위로 끝났다. 그나마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0일 신한국당이 의석비율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애초 입장을 변경하여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3당은 여야 동수로 18인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다는 데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서 여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야당 몫으로 배정된 9명 중 민주당에 특위위원 1명을 배정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신한국당은 비교섭단체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결국 두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서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 8월 25일 시작된 정치개혁특위는 민주당의 반발과 회의 저지로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후 여야는 8월 28일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서야 본격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법안 심사 초반 여야 협상은 9월 2일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떡값 처벌 규정,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의견차이가 뚜렷한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난항을 겪기 시작하였다.

애초 정치자금법 개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한보사태를 통해 나타난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 신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8월 들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떡값 처벌조항 신설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편 개정협상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지정기탁금제 폐지 문제는 변함없이 여야간 대립을 불러왔다. 야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것처럼 기존 지정기탁금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 이회창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시절 지정기탁금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와 현재의 태도가 다르다고 비난하였다.

정기국회 개최 이후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9월 23일까지 계속된 정치개혁특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여야는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상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3당 원내총무로 구성된 4자회담으로 넘겼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도 지정기탁금제라는 최대 난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여야협상은 답보상태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10월 22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여당 프리미엄' 전면포기 선언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과 함께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않은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후 여야협상은 급진전되었다. 신한국당은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야당이 주장해오던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수용하였다. 반면 야당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딱깃 처벌조항의 신설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여야는 10월 29일 총무회담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여야는 1997년 10월 31일 정치개혁 특위에서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을 폐지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한 후 같은 날 본회의를 통해 이를 원안가결하였다.

나. 주요내용

1) 지정기탁금제 폐지와 후원회 기부금 한도액 상향

10차 정치자금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지정기탁금제 폐지였다. 지정기탁금 제도는 과거 오랜 기간 정치자금 배분 불균형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여야는 지정기탁금제 폐지 문제를 두고 매 개정 때마다 공방을 벌여왔다. 여당은 이전의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에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정기탁금제 폐지 주장을 거부해 왔으나, 제10차 개정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지정기탁금 폐지의 대안은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개인 후원인의 경우 연간 1억 1,000만 원(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1억 원, 지구당 등 후원회 1,000만 원), 법인의 경우 2억 3,000만 원(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2억 원, 지구당 등 후원회 3,000만 원)을 기부 또는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이중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기부 또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개인 2,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개인은 총 1억 2,000만 원, 법인은 2억 5,000만 원을 연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할 수 있는 정치자금 상한액은 집회·우편·광고에 의한 모금에서만 부득이한 경우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통신에 의한 모금도 부득이한 경우 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후원회의 기부한도에 있어서도 연간 100억 원을 기부할 수 있었던 중앙당후원회의 한도액이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도지부후원회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지구당 등의 후원회가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또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 후원금 모집방법의 확대

금품모집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통신에 의한 모금방법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방법이 신설되었다.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 중 1회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각 1회씩으로 그 횟수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우편·통신 및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후원회가 모집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축가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바자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가액의 상한액은 폐지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된 미사용 정액영수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변경하였다.

3) 국고보조금 사용 의무조항 신설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변화는 국고보조금이 정책정당 육성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정치자금법에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정책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책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기타

그 이외에도 제10차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친족이 아닌 자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정치자금을 함부로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제10차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소위 ‘떡값’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신한국

경제 민주당 제2차 정기 전당대회

신한국

활정치 실천을 위한 당원 결
민주자유당, 한심 자유당

제3장

정당의 성립과 변화

제1절 _ 기존정당

제2절 _ 신설정당



제1절 기존정당

1. 민주자유당(1990. 2. 15~1997. 11. 24; 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조직 정비: 단일지도체제 구축

1993년 2월 ‘개혁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표방한 신한국창조 등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3월 전면적인 당 체제 개편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도체제의 개편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최고위원제로 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체제 개편의 방향은 지도체제를 총재·대표·사무총장으로 이어지는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여 당 총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을 이끌고 개혁과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자유당은 1차적으로 3월 3일 당 3역을 포함한 고위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당직개편을 통해 단일지도체제의 한 축이 되는 사무총장에 구 통일민주당 출신(이하 민주계)의 최형우 의원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는 구 민주정의당 출신(이하 민정계)의 김종호 의원과 김영구 의원을 각각 임명하여 당내 화합체제 또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총재비서실장과 대변인에는 신경식 의원과 강재섭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러한 주요당직 개편에 대해 조용직 부대변인은 “개혁과 변화를 위해 새로운 팀을 직접 거느리고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총재의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그 의미를 전하였다. 한편 핵심당직 개편과 더불어 당무위원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져 정호용 의원 등 12명의 당무위원이 새로이 임명되었고, 이로써 당무위원회는 8명의 당연직을 포함하여 52명으로 재구성되었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3. 3)

| 직 책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 사무총장 | 김영구 | 최형우 | 교체 |
| 정책위의장 | 황인성 | 김종호 | " |
| 원내총무 | 김용태 | 김영구 | " |
| 총재비서실장 | 김덕룡 | 신경식 | " |
| 대변인 | 박희태 | 강재섭 | " |

고위 당직개편에 이어 민주자유당은 당무개선협의위원회를 통해 당 기구 및 유급 당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전체적인 당조직 정비를 추진하였다. 논란 속에 마련된 당 기구 개편안은 3월 10일 당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23개의 실·국과 56개부를 15개 실·국과 36개부로 축소하고, 중앙당 및 시도지부 당직자 1,722명 중 46.8%를 감축하여 916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사무부총장과 운영실장을 포함해 4명으로 되어 있는 정책조정실장은 각각 2명으로 축소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과건된 전문위원들을 복귀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국책연구원과 전직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실장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직조정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3월 12일 사무부총장 등 새롭게 정비된 중·하위직 당직자를 임명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사무처 인원감축을 단행하였다. 3월 20일 단행된 인원감축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지부 사무처요원 325명과 지구당 요원 474명 등 총 799명이 감축되었다.⁵⁾ 이는 애초 중앙당 및 시·도지부의 감축안 보다 7명 줄어든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감축이었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은 일부 해고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뒤따랐다.

해직 사무처 직원들은 감원기준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민자당 해직요원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5) 지구당의 여성부장과 청년부장 474명은 그동안 지급되어 오던 활동비 60만 원의 지급을 중단하는 형식으로 자동 감원시켰다(경향신문, 3월 21일자 2면).

조직적으로 반발하였다. 1993년 3월에 시작된 해직자들의 저항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김소연 전 민주자유당 연수부국장 등 사무처 해직직원 30명은 11월 29일 대기발령 인사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후유증을 겪으며 진행된 조직정비는 4월 9일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정비하고서야 종결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당헌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재가 지명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임명하는 1인 대표위원제를 채택하여 총재의 단일지도체제를 강화하였다. 대표위원과 관련하여서는 부칙 경과규정을 통하여 현재 대표최고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명시하여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중앙상무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총재자문기구로 국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당내에는 13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김영삼 총재는 상무위원회의 치사를 통해 “집권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통한의 눈물로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그 의미를 전하는 한편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종필 대표최고위원도 지도체제의 변경과 관련하여 인사말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을 위해 단일지도체제로 당헌을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당헌 개정 후속조치로 4월 14일 당무회의에서 정재철 의원을 신설된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안찬희 수석부의장 외 1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여 중앙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총재 단일지도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당 조직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당직개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형우 사무총장이 이들의 경원대 부정입학사건으로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이 황명수로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김종필 대표-최형우 사무총장 체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김종필 대표-황명수 사무총장 체제로 대체되었다.

나. 재산공개와 국회의원 연쇄사퇴 · 탈당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개혁기조는 ‘깨끗한 정치’였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의 첫걸음은 ‘재산공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뒤를 잇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은 일순간에 재산공개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재산공개 여파는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전해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방침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993년 3월 5일 고위 당직자회의를 통해 소속의원 전원과 당무위원급 이상 전 당직자의 재산공개를 결정하였다. 3월 22일 공개된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은 24억 8,278만 원이었고, 100억 이상의 재산가도 8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재산공개는 단순히 재산규모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파문을 불러왔다. 의원들이 보유한 엄청난 재산규모로 인하여 그 축적방법과 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었고, 부동산 투기, 탈세의혹, 축소·누락신고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재산공개는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 되었고, 이에 따라 당내에서도 진상조사와 징계 처리 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점차 확대되면서



▲ 민주자유당 강재섭 의원이 국회의원과 당무위원의 재산등록현황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1993년 3월 22일).

김영삼 총재는 재산축적이나 보유과정의 비리 및 부정의혹이 제기되는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민주자유당은 3월 24일 ‘재산공개진상과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관련자 처리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고 그 여파도 컸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 유학성·김문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이원조·금진호·조진형·김영진·남평우 의원 등은 공개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결정하고 재산공개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 일부 의원은 형평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사퇴압력을 받았던 의원 중 일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박준규 국회의장과 임춘원 의원 등은 당의 방침에 반발하여 탈당하였고, 정동호 의원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여 당기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되었다. 한편 사퇴를 수용한 김재순 전 국회의장도 ‘정계를 떠나면서’라는 성명을 통해 ‘토사구팽’이란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섭섭함을 강하게 표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사퇴로 인해 6월 11일과 8월 12일 실시된 5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강원도 명주·양양과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 패배하였다.

1차 재산공개 이후 1993년 5월 20일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9월 7일 입법·사법·행정부 등 해당 기관별로 일제히 2차 재산공개가 이루어졌다. 2차 재산공개는 민주자유당 소속의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또 한번의 내홍을 겪어야 했다.

2차 재산공개에서는 1차 재산공개 시 누락 또는 축소신고 한 의원들이 주요 징계 대상이었다. 재산공개 초반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민주자유당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재산공개 사퇴파동⁶⁾의 여파에 밀려 또다시 자체조사와 징계를 결정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에 대한 공식적이고 법적인 실사작업과 법적 제재는 1993년 5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6)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3년 2개월을 남긴 채 1993년 9월 10일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였고, 이어 9월 13일에는 박종철 검찰총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였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법적 제재 조치에 앞서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속 의원들을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의 자체조사와 징계수준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였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외부적 비난을 초래하였다.

당기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징계처분을 받은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이들 중 자진 탈당한 이학원·박규식 의원 등 2명은 제명되었고, 김동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정호용·김영광·남평우·윤태균·이현수 의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경고’라는 미미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을 뿐이었다. 징계확정 후 당내·외에서는 징계결과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상자 선정, 축소·후퇴한 무의미한 징계, 개혁부재 등 많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고, 언론에서도 일제히 비판 기사를 게재하였다.



▲ 동아일보, 1993년 9월 17일자.

- “이것도 징계인가” (한겨레신문, 1993년 9월 17일자).
- “시늬에 그친 민자 「재산징계」”(국민일보, 1993년 9월 17일자).
- “납득 못할 「오라가라 징계」”(한국일보, 1993년 9월 17일자).
- “개혁의지 있나 없나” (세계일보, 1993년 9월 18일자).

한편 징계 받은 의원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재산공개 문제가 민정·민주·공화계의 계파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종징계 발표 후에도 일부 의원의 재산은닉과 투기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부각되면서 당내 갈등과 반발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재산공개 파문이 더는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9월 20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추가징계는 하지 않으며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의원의 문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로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2차례의 재산공개와 관련한 정치적 처리를 종결하였다.

다. 쌀 수입 개방 파문과 2차 당직개편

1993년 3월 1차 당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정비했던 민주자유당은 12월 또 한번의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애초 2차 당직개편은 1994년 초 김영삼 대통령 취임 1주년 또는 1994년 5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쌀 수입개방 문제로 12월 9일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조기개편으로 전환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라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결국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공약과 달리 쌀 수입개방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내여론이 악화되는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이 종결되기 전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⁷⁾. 쌀 수입개방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의 여파는 1차적으로 대대적인 내각 개편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일주일 후 12월 16일 황인성 국무총리는 이회창 감사원장으로 교체되었고, 이후 21일에는 경제·통일 두 부총리를 포함한 14개 부처에 대한 대폭적인 내각개편이 이루어졌다.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2월 20일 황명수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의장, 김영구 원내총무 등 당3역과 강재섭 대변인의 사표가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고, 이로써 전면적인 내각개편은 당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위원과 중앙상무위원회 정재철 의장은 선출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당내 시비가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필 대표위원은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주례회동 때 진퇴문제를 총재에게 말씀

7)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저와 정부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민족의 피와 같은 쌀을 지키려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저는 쌀 수입개방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데 대해 거듭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드려 당3역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회피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 12월 23일 당직개편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당직개편에서 김영삼 총재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대변인 등 당 4역 직원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문정수 의원을 임명하여 민주계 사무총장 체제를 지속하였다. 당직개편에 앞서 단행된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민주계 인사들이 전면배치되면서⁸⁾ 사무총장은 당내 화합을 위해 민정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김영삼 총재는 ‘개혁과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소위 ‘친정체제’를 지속하였다. 대신 당내 화합을 위해 민정계의 이세기 의원과 이한동 의원을 각각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로 임명하였다. 특히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를 여러 차례 역임한 중진급 이한동 의원의 발탁은 당내화합과 대야 협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문정수 신임 사무총장도 취임의 변을 통해 당내에서 ‘계파’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당내결속을 최대역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대변인에는 하순봉 의원이 임명되었다.

고위 당직인사를 마무리한 이후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12월 29일 연이어 후속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정비를 마무리하였다. 후속인사에서는 대변인을 맡고 있던 강재섭 의원을 총재비서실장에 임명하는 한편 기초실장에 강삼재 의원, 제1정책조정실장에 이상득 의원, 제2정책조정실장에 백남치 의원을 임명하였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3.12)

| 직책 | 기존 | 변경 | 비고 |
|--------|-----|-----|----|
| 사무총장 | 황명수 | 문정수 | 교체 |
| 정책위의장 | 김종호 | 이세기 | ” |
| 원내총무 | 김영구 | 이한동 | ” |
| 대변인 | 강재섭 | 하순봉 | ” |
| 총재비서실장 | 신경식 | 강재섭 | ” |

8) 김영삼 대통령은 내무부장관에 최형우,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원종을 임명하여 민주계 최측근을 전면 배치하였다.

또한 신경식 의원과 이재명의원은 각각 평화통일위원장과 민주자유청년봉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개혁추진을 지속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민주계 주축의 새로운 당직체제로 재정비되었다. 그러나 2차 당직개편은 다른 한편으로 당내 화합과 안정을 위해 계파 안배가 적절히 수용된 조직정비였다.

라. 김종필 대표위원의 탈당과 이춘구 대표체제의 출범

1) 5월 전당대회 연기와 당 조직정비

민주자유당은 1994년 5월 정기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1월 6일 김영삼 총재가 새해 연두회견을 통하여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다. 김영삼 총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새해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5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가적으로 할 일이 많다. (……) 당의 전당대회는 상당한 돈과 인력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헌에 따라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해 1994년 중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더불어 김종필 대표위원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면서 김종필 대표위원이 책임과 실권을 갖고 당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며 김종필 대표체제의 유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1993년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전당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있는 정기 전당대회로 특별한 이슈가 예정된 것은 아니며 개최시기도 변동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김영삼 총재의 정기 전당대회 연기결정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기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총재의 뜻에 따라 1월 12일 당무회의를 통해 5월로 예정되었던 전당대회를 ‘총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하였고, 시·도지부 및

지구당 개편대회도 다음 전당대회 개최 전으로 연기하였다.

전당대회 연기 논란 속에 민주자유당은 이후 전면적인 당 체제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2월에는 서울시 성동구를 등 사고지구당 14곳의 조직책 공모에 나섰고, 특히 3월 새로운 정치관계법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전면적인 지구당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월 8일 당무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10개 지구당의 신임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였다. 이 조직책 임명에서는 재야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씨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은 참신성과 개혁성 그리고 당선가능성을 조직책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법의 실천을 통해 새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하에 당 운영체제를 새 정치환경에 걸맞게 일대 혁신하기로 결정하면서 3월 16일 당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당 기구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당 기구 개편안은 당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와 정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2명이던 사무부총장을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대변인을 포함한 사무처·정책위·원내대책위원회 소속의 주요 당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홍보위원회를 신설하여 홍보창구를 단일화하였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와 비경제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진 정책조정실을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부처별로 전문위원과 심의위원을 배치하고 실무지원부서도 1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구당 조직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후속조치로 관리장, 반책, 읍면동별 청년회·여성회 조직 등 지구당 기간조직 76만 명 중 81%인 61만 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에 접어들어서는 2차례에 걸쳐 당무감사를 실시한 77개 원외지구당 가운데 부실로 최종 확정된 지구당과 사고지구당에 대한 제2차 지구당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부실의 기준'을 두고 당내 마찰을 겪어야 했고, 내부반발과 갈등으로 인하여 조직정비는 연말까지 지연되었다. 9월 27일 당무회의는 재야인사인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와 민중당 대변인을 지낸 정태윤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포함한 13개 지구당위원장을 1차로 확정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지구당 정비가 이루어졌고, 결국 민주자유당은 1994년 모두 37개 지구당위원장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임명하고 인적쇄신 작업을 완료하였다.

2) 보선패배와 중진인사 전면 재배치

1994년 조직정비를 통해 당 운영체제의 혁신을 모색하던 민주자유당은 1994년 8월 2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대구 수성갑과 경주시선거구에서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특히 보궐선거 지역 2곳이 모두 민주자유당의 우세지역으로 평가되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결과 당내에서는 선거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민주자유당은 1995년 6월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8월 6일 최재욱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선거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8월 10일에는 당무위원 37명과 15개 시·도지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격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 또한 8월 11일에는 윤영탁, 정주일, 김정남, 차수명, 변정일 의원 등 무소속 의원 5명을 영입하여 당세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8일 중진인사를 전면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자유당은 당무위원 개편에서 전국의 각급 당부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하에 지역대표는 3선 이상의 중진으로 관내 지구당위원장을 관할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고 시·도지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또 중진의원의 경륜과 국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4선 이상, 그리고 당 3역 및 국무위원을 역임한 의원 등을 당무위원에 임명하였고, 원외지구당위원장의 의견수렴 기회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당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김윤환·김덕룡 의원과 서석재 전 의원

조직개편 현황(1994. 8)

| 시도지부위원장 | | | |
|------------|-------------------------|--|------------------|
| 시·도 | 위원장 | 시·도 | 위원장 |
| 서울 | 김덕룡(2선, 前당무위원) | 충북 | 김중호(4선, 前정책위의장) |
| 부산 | 김정수(4선, 前당무위원) | 충남 | 황명수(4선, 국방위원장) |
| 대구 | 정호용(2선, 前당무위원) | 전북 | 양창식(3선, 농수산위원장) |
| 인천 | 서정화(3선, 前건설위원장) | 전남 | 정시채(3선, 前농수산위원장) |
| 광주 | 이환의(초선, 前당무위원) | 경북 | 김윤환(4선, 前사무총장) |
| 대전 | 이재환(2선, 서·유성구위원장) | 경남 | 김봉조(3선, 前예결위원장) |
| 경기 | 이한동(4선, 원내총무) | 제주 | 양정규(4선, 前교체위원장) |
| 강원 | 정재철(3선, 중앙상무위의장) | | |
| 당고문 및 당무위원 | | | |
| 당고문 | 이만섭, 황인성, 노재봉, 김효영, 김수한 | | |
| 당무위원 | 당연직 | 김영삼총재, 김종필대표, 정재철중앙상무위원장, 문정수사무총장, 이세기정책위의장, 이한동원내총무, 서청원정무1장관, 김진재국책자문위원장 | |
| | 임명직 | 오세응, 정석모, 김윤환, 김영구, 김용태, 김정수, 김중호, 박명근, 박정수, 신상식, 양정규, 이승윤, 정순덕, 곽정출, 김중하, 김중위, 김봉조, 박준병, 서정화, 서정화, 정시채, 정재문, 김덕용, 현경대, 이인제, 이재환, 이해구, 정호용, 이환의, 구자춘, 최병렬, 서석재, 정중택, 김육덕, 이윤자, 강현욱 | |

등 중진급 인사들이 재기용되었고, 15개 시·도지부장 가운데 서울의 김덕룡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수(부산)·황명수(충남)·김봉조(경남)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이 4곳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한동 총무가 경기도지부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정호용·정재철·황명수 의원 등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중진의원들에게 시·도지부 책임을 맡겨 지방선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5명의 당고문을 추가로 임명하고 대폭 개편된 44명의 당무위원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3) 김종필 대표위원의 탈당과 이춘구-김덕룡체제 구축

중진인사들이 전면 배치한 8·18 조직개편 이후 김영삼 총재는 당무회의를 통해 김종필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잘해나가 줄 것을 거듭하여 당부하였다. 그러나 개편된 당내 조직구도는 이후 전당대회 개최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도체제 문제 등에 있어 당내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994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말까지 대폭적인 당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조기전당대회 소집 방침’을 밝힌 김영삼 총재의 12월 12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문화방송(MBC) 창사33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전당대회 이전에는 당직개편이 없을 것이며, 전당대회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전당대회 후 당직개편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당 체제개편 및 김종필 대표위원의 진퇴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계파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12월 13일 민주계의 실세로 평가되던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 부총재제 도입과 경선에 의한 선출’을 골자로 하는 지도체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이 12월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물러나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라며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김종필 대표위원의 발언 직후 12월 17일 이루어진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대표의 주례회동 결과 민주자유당은 지도체제와 관련하여 전당대회에서 기구개편은 없으며, 따라서 총재-대표위원-당3역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종필 대표위원의 유임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김종필 대표체제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전당대회가 1995년 2월 7일로 확정되고 1994년 12월 말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또한 12월 26일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전원과 지구당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김영삼 총재가 전당대회를 통해 세계화의 방향에 맞춰 민주자유당을 과감히 개편할 뜻을 표명한 것도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총재가 지시한 당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당명변경을 포함하여 당헌·당규의 개정, 당가 및 당 로고 등 제2의 창당 수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해 갔다. 이러한 대변혁에는 김종필 대표위원의 거취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었고, 1995년 새해 들어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가 공론화되면서 당내갈등은 급속하게 표면화되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그동안 잠복해 있던 부총재 및 당 의장직 신설 등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모색하고, 더불어 자신의 퇴진설이 부상하자 김종필 대표위원은 1995년 1월 5일 치통치료를 이유로 신년하례식에도 불참하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한 당의 세계화 방안으로 구상되고 있는 원내총무와 시·도지부장, 그리고 지구당위원장 경선의 도입순서와 실시시기 등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양상도 심화되었다. 특히 1995년 1월 6일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대표위원의 퇴진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김종필 대표위원 퇴진의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었다. 그 뒤 1월 10일 김영삼 총재는 김종필 대표위원과의 청와대 극비회동에서 2선 퇴진을 통고하였고, 이로써 민주자유당의 지도체제 갈등은 종국에 이르게 되었다.

김종필 대표위원의 퇴진이 공식화되자 민주자유당은 지도체제를 비롯한 새틀짜기를 본격화하였고, 반면 김종필 대표위원은 이후 거취에 대한 고민에 휩싸였다. 김종필 대표위원의 최종선택은 탈당과 신당창당이였다. 김종필 대표위원은 1월 중순 이후



▲ 김종필 대표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자유당 탈당과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1995년 2월 9일).

민주자유당과 김영삼 총재를 비난하는 한편 탈당 및 신당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1장관 등 당4역이 회의를 통해 “당대표로서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며 사실상의 대표직무정지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19일 김종필 대표위원은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였고, 이어 2월 9일에는 민주자유당 탈당과 함께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의 3당 합당 체제는 창당 3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내분을 겪으며 민주자유당은 1995년 2월 7일 제3차 전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조직정비를 단행하였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대통령을 총재로 재추대하고, 당의 세계화를 위한 새 강령과 기본정책 그리고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위원은 대표로 변경되었고, 신임 당 대표로 김영삼 총재가 지명한 이춘구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다. 한편 정재철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을 전당대회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개편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당 로고와 당가를 바꾸었다. 그러나 공모와 심사를 통하여 통일한국당(약칭 한국당)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던 당명개정은 국호를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무산되었다.



▲ 민주자유당 3차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된 이춘구 대표가 김영삼 총재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5년 2월 7일).

개정 강령 · 주요정책 및 당헌 주요내용

【강 령】

| | |
|--------|--|
| 강령 제1항 | 우리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개혁을 주도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하고 주민 자치를 정착·발전시켜 '봉사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한다. |
| 강령 제2항 | 우리는 자율과 협동,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국민경제'를 달성한다. |
| 강령 제3항 | 우리는 삶의 질이 확보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
| 강령 제4항 | 우리는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국민 각자가 개성과 능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민주적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아울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룩한다. |
| 강령 제5항 | 우리는 민족의 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룩하며, 자주적 안보체제를 확립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능동적인 전방위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중심국가'로 웅비한다. |

【주요정책】

| | | |
|-------------|--|---|
| 생산적 선진정치 구현 | 1. 책임정치 구현 2. 정치개혁 주도 3. 지방화시대 선도 | 4. 행정의 선진화 이룩 5. 민생치안 확립 |
| 튼튼한 국민경제 건설 | 6. 경제정의 구현 7. 국가경쟁력 강화 8. 정보화사회 촉진 9. 국토의 효율적 이용 10. 중소기업 육성·발전 | 11.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12. 주거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 13. 교통난 개선 14. 우주와 해양 개척 |
|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 | 15. 쾌적한 생활보장과 환경산업 육성 16. 사회복지 확충·발전 17.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18. 공동체적 노사관계 정착평화외교·통일실현 | 19.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 구현 20.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유 21. 여성권의 보장과 남·녀평등사회 실현 |
| 교육개혁·문화창달 | 22.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창의적 인간교육 실현 23.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24. 민주시민교육 강화 25.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26. 사회공동체의식 확산 | 27. 적극적인 외교로 세계평화와 번영의 주역 28.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29.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국통일 실현 30. 국가안전보장체제 확립 |

【당 헌】

- 전당대회 수임기관을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신설)로 변경
- 대표위원의 명칭을 대표로 변경
- 신설되는 세계화 추진위원장과 경선으로 선출되는 시·도지부위원장을 당연직 당부위원으로 추가
- 당직서열을 총재, 대표, 전당대회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장관, 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등으로 함
- 사무총장 밑에 독립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조실장, 사무부총장 직제를 폐지, 기획조정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정세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의 당무참여 기회 확대
-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함. 다만 총재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상무위원회는 순수 직능기구로 전환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장을 운영위원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토록 함
- 시·도지부위원장 및 지구당위원장은 시·도 및 지구당대회 또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토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를 통해 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후보는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비후보 3인에 대해 제한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위원장 경선 실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전당대회에 이어 김영삼 총재는 신임 이춘구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2월 8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고, 2월 9일에는 원내총무를 선출하였다. 당직개편에서는 김덕룡 의원이 사무총장에, 이승윤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었다. 김윤환 정무1장관과 박범진 대변인은 유임되었으며, 신설된 세계화 추진위원장에는 박정수 의원이 임명되었다. 이 밖에 국책자문위원장은 김영광 의원, 교육연수원장에는 정종택 전 의원, 총재비서실장에는 김한규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경선제가 도입된 원내총무 선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후보 중 김영구 의원이 정견발표 과정에서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단독후보가 된 현경대 의원에 대한 선출방식을 두고 규정대로 비밀·무기명투표를 주장하는 측과 거수표결로 결정하자는 측이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거수표결을 통해 현경대 의원을 원내총무로 선출하였고, 집권여당 사상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원내총무 경선은 무산되었다. 이로써 ‘당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진행된 민주자유당 당직개편은 김종필 대표위원의 탈당과 민정계 이춘구 대표-민주계 김덕룡 사무총장 체제로 재정비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5. 2)

| 직책 | 기존 | 변경 | 직책 | 기존 | 변경 |
|----------|-----|-----|----------|-----|-----|
| 대표위원(대표) | 김종필 | 이춘구 | 원내총무 | 이헌동 | 현경대 |
| 전당대회회장 | - | 정재철 | 세계화추진위원장 | - | 박정수 |
| 사무총장 | 문정수 | 김덕룡 | 국책자문위원장 | - | 김영광 |
| 정책위의장 | 이세기 | 이승윤 | 총재비서실장 | 강재섭 | 김한규 |

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와 김윤환 대표체제의 출범(1995. 8)

김종필 대표위원의 탈당과 신당창당의 혼란 속에 출범한 이춘구-김덕룡 체제의 민주자유당이 당면한 과제는 19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15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민주자유당은 5곳에서만 승리하였고 나머지 10곳은 야당과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70곳에서만 승리하여 84곳을 석권한 민주당에 오히려 뒤졌으며, 광역의원선거에서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86명(32.7%)만이 당선되어 352명(40.2%)을 당선시킨 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탈당한 김종필 전 대표위원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이 충청지역에서 선전하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선거 직후 김영삼 총재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분위기 쇄신 차원의 당정개편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는 선거패배 책임론이 제기되었고, 이춘구 대표와 이승윤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15개 시도지부장의 보직사퇴 의사표명도 이어졌다. 이처럼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과 그로 인한 당내 동요가 조기에, 그리고 심각하게 표출되면서 민주자유당 내에서는 1996년 국회의원선거 승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민심마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면서 지방선거 직후의 당정개편 불가 입장은 당정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급전화하였다. 이에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린 7월 4일 당무회의에서 선거패배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당 지도체제 정비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7월 4일 김영삼 총재는 애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김덕룡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김윤환 정무1장관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김영구 의원을 정무1장관으로 기용하는 부분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대표를 포함한 당4역 모두에 소위 ‘민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진하게 되었으며 민주계 인사들은 주요당직에서 배제되었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춘구 대표-김윤환 사무총장 체제의 신임지도부는 ‘당 체질 개선’을 당면한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7월 9일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체제와 기구 정비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당직개편 후에도 민주자유당의 당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

왔다. 다수의 의원이 대대적인 당정개편과 정책수정을 요구하였고, 고문단회의에서도 조기 당정개편을 촉구하였다. 이춘구-김윤환 지도체제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이끌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지도체제 재편과 세대교체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도체제의 변경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총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고위 당직자 및 시·도지부장들이 계속하여 사퇴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지방선거 결과 자유민주연합이 충청지역에서 승리한 영향으로 충청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선거 패배 후 당내상황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인 갈등양상을 보이자 김영삼 총재는 7월 하순 국회의원선거 승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도체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당 총재로서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총재직할체제로의 변화를 암시하였다.

이후 김영삼 총재가 방미 길에 오르자 민주자유당 내에서는 당 체제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에 힘을 실어 줄 것과 개혁정책의 보완을 주장하는 당내의 반발이 표출되었고, 대통령의 공천개입 발언으로 인하여 민주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물갈이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특히 민주자유당 여의도연구소가 ‘지방선거 이후 정국대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갈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초계파적인 인물등용과 청와대 및 내각, 그리고 당에 대한 일대 대개편을 단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당내 큰 파문이 일었다. 개편방안을 둘러싸고도 계파 간 이견이 표출되었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이 당풍쇄신운동에 나서면서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일부 경북출신 일부 의원의 ‘신당추진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는 개편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살생부 파문과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보유 발언 파문으로 당내 계파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 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쏘아올린 통신위성 무궁화호가 궤도진입에 차질을 빚고, 쌀 수출선이 북한에 억류되는 등 악재의 국면이 이어졌다. 또한 8월 11일에는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민주당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가칭)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민주자유당은 당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당내 동요가 표면화되고 악재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김영삼 총재는 결국 조기 당정개편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고,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체제개편을 단행하였다.

1995년 8월 21일 서울 63빌딩에서 개최된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은 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여 체제개편의 틀을 확정하였다. 개정당헌은 대표·사무총장이라는 기존의 지도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원내 총무 선출의 경우에는 6개월 전 도입된 경선제가 백지화되고 다시 총재지명방식으로 원상복귀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총재가 결정하도록 개정하면서 직접 후보자 공천문제를 챙기겠다는 김영삼 총재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개정당헌에 따라 민주자유당 전국위원회는 총재가 대표위원으로 지명한 김윤환 사무총장을 새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위한 체제정비에 돌입하였다.



▲ 민주자유당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영삼 총재가 이춘규 전 대표, 김윤환 신임 대표위원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5년 8월 21일).

【개정 당헌 주요내용】

-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개정
- 지방자치위원회 신설
- 교육연수원을 중앙연수원으로 개정
- 원내총무 선임방법 변경
-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
- 대통령후보자 선출시기: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임기만료 90일
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로
변경
- 지역구 및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방법 일원화: 국회
의원후보자의 추천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위원의 제
청으로 총재가 결정하도록 함

대표선출에 이은 당직개편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8월 21일 전국위원회 바로 다음 날 김영삼 총재는 사무총장에 강삼재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종호 의원, 원내총무에 서정화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대변인에는 손학규 의원을, 총재비서실장에는 박범진 의원을 기용하는 한편 대표위원비서실장에 윤원중 청와대정무비서관을 임명하였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완료 한 직후 8월 26일에는 중간당직자 개편과 당무위원회에 대한 추가선임을 마무리짓고 새 진용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당무위원으로는 배명국·김한규·장영철·이택석·최재욱 의원과 김식 지구당위원장 등 6명이 추가로 선임되었고, 그 외 중간당직자로는 세계화추진위원장에 정재문 의원, 중앙연수원장에 김동근 의원, 기획조정위원장에 강용식 의원, 조직위원장에 최재욱 의원,신설된 지방자치위원장에 황윤기 의원이 각각 기용되었다. 이외에도 정책조정위원장 등 중간당직자 또한 대폭적인 경질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대대적인 당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김윤환 대표-강삼재 사무총장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켰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5. 10)

| 직책 | 기존 | 변경 | 직책 | 기존 | 변경 |
|-------|-----|-----|----------|-----|-----|
| 대표위원 | 이춘구 | 김윤환 | 대변인 | 박범진 | 손학규 |
| 사무총장 | 김윤환 | 강삼재 | 총재비서실장 | 강재섭 | 박범진 |
| 정책위의장 | 이승윤 | 김종호 | 세계화추진위원장 | 박정수 | 정재문 |
| 원내총무 | 현경대 | 서정화 | 중앙연수원장 | 정종택 | 김동근 |

※ 중앙연수원은 교육연수원에서 명칭변경.

바. 2·6 전당대회와 신한국당의 출범: 당명변경

1995년 8월 출범한 김윤환 대표체제는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여 1996년 4월 11일로 예정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따라서 김윤환 대표위원은 출범 직후 개최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증설 및 부실·사고지구당 조직책을 임명하는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구·경북과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동요를 무마하고 이탈세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개혁보완 작업을 통해 보수중산층의 지지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한편 보수 세력의 결집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은 새 지도체제 출범 초반 당내 동요와 갈등을 봉합하며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9월 25일 선거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서둘러 국회의원선거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안정적 상황은 그리 오래지 않아 또다시 혼란과 갈등의 양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정치·개혁논리의 불협화음으로 당정간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혼선과 갈등이 표출되었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이전의 관행과 달리 민주자유당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충청지역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고,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와 관련한 당내 논란과 잠재적인 계파갈등도 간간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국을 일순간에 혼란에 빠뜨린 것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문제였다.

1995년 10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 조성’ 폭로로 시작된 비자금 파문은 결국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이어졌다. 이후 비자금 사건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통령선거자금 공방으로 확산되었다. 여야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사실규명과 김대중 총재의 소위 ‘20억 + α수수설’로 장기간의 공방을 벌였고, 그 결과 정국혼란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 안에서는 ‘정계

개편·6공단절론'을 비롯하여 '조기공천론'이 제기되었고, 이는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여야간 공방이 장기화되고 정국이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당내 계파 간 갈등이 표출되자 민주자유당은 정치권의 대대적인 혁신과 당 쇄신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김영삼 총재가 선택한 대표적 쇄신작업은 당명변경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학규 대변인은 “당명개정은 우리 당과 정치권의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민주자유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당명변경을 포함하여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11월 22일 강삼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의 당명변경 계획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통령선거자금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이름 바꾼다고 의혹이 씻기나”라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더불어 당명변경에 앞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 총재는 당명변경과 함께 ‘역사바로 세우기’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을 또 다른 해법으로 선택하였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소급입법이란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이 거부해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⁹⁾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수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택이었고, ‘구시대 청산’을 위한 환골탈태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표류하는 정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출이었다. 결국 12월 19일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되었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었다.

5·18 특별법 제정과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민주자유당 내 민정계의 위기감과

9)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발표 이후 11월 29일 재판중이던 소를 취하하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국론분열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제정될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일원화하고 그 제정취지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소 취하서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5면).

동요를 표면화시켰다. 일부 민정계 의원은 5·18 특별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특히 최재욱 조직위원장과 강제섭 대구시지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고, 김윤환 대표위원마저 “5·6공화국에 참여했던 사람이 당 대표를 해서 되겠느냐”라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거론되면서 민주자유당 내 계파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김윤환 대표위원은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만류로 사의를 철회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당 내홍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자유당 내 동요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자유당은 12월 6일 당무회의를 통해 신한국당으로의 당명 변경을 확정하였다.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창당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변모하려는 민주자유당의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었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애초 당명 변경만을 위해 1996년 1월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대신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단순히 당명만을 변경하는 외형적 변화를 넘어 내용적 변화를 통해 완전히 변모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출범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자금 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문제 그리고



▲ 강삼재 사무총장과 김윤환 대표위원이 새로 확정된 신한국당의 로고를 소개하고 있다(1995년 12월 16일).

5·18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해 형성된 정국의 혼란과 정치 불신을 과거청산과 쇄신을 통해 해소하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996년 2월 2일 당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중심제 고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당 기본정책과 당헌 및 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월 6일 신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 겸 국회의원선거필승전진대회를 열고 이를 공식화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전당대회 치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는 탈법과 불법을 뿌리부터 다스려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서 나라 바로 세우기이며 제2의 건국”임을 강조하는 한편 “썩은 정치와 낡은 정치의 퇴장”을 주장하며 신한국당 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더불어 “개혁 없는 안정은 정체요,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이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김영삼 총재의 의지를 반영하여 신한국당은 개정된 당헌 제2조 목적 조항에 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족 정통성 확립, 그리고 안정 속의 개혁을 명확히 기록하였다.

전당대회 의결을 통해 신한국당의 당규는 7개항으로 재정비되었고, 당헌 또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고문단의 격상, 사무처 기능 강화, 중앙상무위 부의장단 보강, 이북도민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당헌·당규 상의 개정내용은 신한국당의 기본정책에 반영되어 5개였던 주요 정책영역이 7개로 늘어났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김윤환 대표체제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다. 이로써 내·외형적 변화를 마무리한 민주자유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창당 6년 만에 ‘신한국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으로 재출범하였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 당헌 제2조 목적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
|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세계화의 주역이 되고 지방화를 선도하며, 평화통일에 의한 한민족복지공동체를 이루어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함 으로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신한국 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당은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안정 속의 개혁을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며 평화적 통일에 의한 한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21세기의 일류국가 “신한국” 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한국당 강령 · 기본정책 및 당헌 주요내용

[강 령]

| | |
|-----|--|
| 제1항 | 우리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맑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정착 ·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생활정치를 실현한다. |
| 제2항 | 우리는 자율과 협동, 창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안정을 기하며,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국민경제' 를 달성한다. |
| 제3항 | 우리는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참여와 협력의 공동 체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한다. |
| 제4항 | 우리는 교육개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며 미래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 제5항 |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인 자원절약형 사회를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사회를 실현한다. |
| 제6항 |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다. |
| 제7항 | 우리는 민족이 공영과 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룩하며 자유적 안보체제를 확립하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

[기본정책]

| | | |
|------------------------|--|---|
| 21세기 새로운 정치 구현 | 1.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문화 창출 2. 경쟁력 있는 생활정치 추구 3. 행정의 선진화와 사회안정 확립 | 4. 세계화와 지방화를 선도 5.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국민통합의 화합정치 지향 6.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정치세대 육성 |
| 활력있고 정의로운 선진국민경제 건설 | 7. 국가경쟁력 강화 8. 경제정의 구현 9.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10.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발전 11.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 | 12. 주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기함 13. 교통난을 완화 14. 정보화사회 촉진 15.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 16. 우주와 해양 개척 |
|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 17.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 발전 18. 노인 및 장애자복지 증진 19.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 보장 | 20. 공동체적인 노사관계 정착 21.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 22.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유 |
|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 | 23. 창의적인 인간교육 실천 24.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5. 민족문화 창달로 국민의 문화생활수준 향상 | 26.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키움 27. 사회공동체의식 확산 |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28.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회복 29. 맑고 안전한 물 공급 30.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강화 | 31.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조화 추구 32.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 여성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사회 실현 | 33.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참여 확대 34.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타파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과 평등 보장 | 35.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정착 |
| 민족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 36.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기반 구축 37. 민족공동체 구성과 조국통일 실현 38. 적극적 외교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 | 39. 강력한 국가안전보장체제 확립 40. 해외동포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한민족 역량 결집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당 헌】

- 당의 명칭을 신한국당으로 함
- 강령과 기본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당의 목적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함
- 여성당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각종 당직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 시 여성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 적극 확대
- 총재의 자문 및 보좌기능을 목적으로 총재가 임명하는 고문의 명칭을 상임고문으로 변경하여 당 원로의 정치적 경륜과 식견이 당 활동에 상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화·다원화 되어가는 사회발전의 추이에 적극 대처하고,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이를 당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사무처에 직능위원회를 두어 직능조직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함
- 중앙상무위 부의장단을 보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중앙상무위원회 부의장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함
- 당의 세계화 추진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의 국제협력위원회와 국제기구위원회를 국제협력위원회로 통합
- 당규상의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이북도민위원회를 당헌상의 기구로 격상시켜 이북도민 및 단체에 대한 당의 지원활동을 제고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도·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위원회와 광역단체장협의회를 지방자치위원회로 일원화시켜 지방화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당의 역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

사. 이홍구 대표체제의 출범과 인위적 정계개편: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당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신한국당이 처음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 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문제,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계파 갈등문제 등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김영삼 총재가 내세운 ‘역사바로세우기’의 정당성 확보와 정치개혁 완성, 그리고 당내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국회의원선거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신한국당 출범과 3당 합당의 해체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선거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신한국당, 특히 김영삼 총재는 선거 전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 1월에는 이회창 전 총리를 영입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하였고,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하여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2월에는 이홍구 전 총리를 영입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던 장학로의 축재비리사건이 불거지는 등 선거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의 안정의석은 확보하지 못하였

지만 총139석(46.5%)을 얻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선거 전 신한국당이 제시한 최저 목표 의석수가 120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결과였다.

선거 후 신한국당은 선거결과에 따른 당 체제정비에 돌입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 실시한 당 체제정비는 일반적으로 선거 후 이루어져 왔던 관례적 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우선 새로운 원 구성을 위해 국회직 인선과 함께 지도부 개편이 필요하였지만, 대통령 임기를 20개월 남짓 남겨두고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집권여당과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당 지도부는 대통령선거 준비는 물론이고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김윤환 대표위원은 4월 18일 주례보고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고위 당직자들의 일괄사의를 표하고 김영삼 총재에게 당 체제정비 문제를 일임하였다. 체제정비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직개편의 범위와 대표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인선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후보 선출방식 변경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개정 문제였다. 신한국당 내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였고, 대통령후보 경선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경선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당직자 간, 그리고 계파 간 논란이 전개되었다.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한국당은 5월 3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무위원들의 일괄사의를 접수하고 김윤환 대표위원 후임을 선출할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하였다. 신한국당의 당직개편은 전국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신한국당은 5월 7일 제1차 전국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주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정치'를 펼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큰정치, 민생·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김영삼 총재가 지명한 이홍구 전 총리를 박수 동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신한국당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이홍구 대표가 김영삼 총재, 김윤환 전 대표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6년 5월 7일).

이홍구 신임 대표위원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지만 정당정치적 측면에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신한국당에 영입되어 전국구 초선의원에 당선된 신인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지명·선출된 이홍구 대표체제는 이후 대권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형체제’로 평가되었다. 당·내외적으로도 이홍구 대표체제는 관리형으로 받아들여졌고,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었다. 한편 당 체제정비 과정에서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대통령후보 경선방법과 관련한 당헌개정은 당내 갈등의 우려 속에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위원회에서 새 대표위원을 선출한 이후 김영삼 총재는 연이어 주요당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국위원회 다음 날인 5월 8일에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였다. 정책위의장에는 이상득 의원, 원내총무에는 서청원 의원을 임명하였다. 김덕룡 의원과 김철 국회의원당선자는 각각 정무1장관과 대변인에, 그리고 이완구 국회의원당선자는 대표위원비서실장에 임명하였다. 고위 당직자 중 강삼재 사무총장과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은 유임하였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신한국당 주요 간부 변경(1996. 5)

| 직 책 | 기 존 | 변 경 | 직 책 | 기 존 | 변 경 |
|-------|-----|-----|----------|-----|-----|
| 대표위원 | 김윤환 | 이홍구 | 대변인 | 손학규 | 김 철 |
| 사무총장 | 강삼재 | 유임 | 세계화추진위원장 | 정재문 | 박세직 |
| 정책위의장 | 김중호 | 이상득 | 중앙연수원장 | 김동근 | 박명환 |
| 원내총무 | 서정화 | 서청원 | 대표위원비서실장 | 윤원중 | 이완구 |

5월 11일에는 중간당직자 51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개편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장에 박세직 의원, 기초위원장에 김형오 의원, 홍보위원장에 박종웅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고, 대표위원 특별보좌역을 신설하여 7명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당직개편을 마무리한 신한국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4역 중 이상득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당3역에 민주계 인사를 포진하면서 소위 김영삼 총재의 ‘친정체제’로 재편되었다.

한편 이홍구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후 신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의원영입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다수당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즉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여대야소로 전환하였다. 신한국당의 이러한 변화는 선거직 후부터 예견되던 일이었다. 집권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원내 다수의석이 필요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직후 4월 18일 열린 김대중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무소속 당선자 중 상당수가 입당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결과를 여소야대로 볼 수 없다”라며 여소야대였던 국회의원선거결과를 부인하면서 무소속당선자 영입계획을 암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삼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무소속당선자 영입과 과반수 확보 계획을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

신한국당의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 계획은 4월 24일 경남 진주갑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재천 의원이 입당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개원 전까지 한 달여의 기간에 무려 9명의 무소속의원이 신한국당에 입당하였다.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은 단지 무소속 의원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다. 5월 13일에는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신한국당에 입당하였고, 이로써 신한국당은

선거 후 총 12명의 국회의원을 영입하였다. 결국 신한국당은 1995년 5월 30일 제15대 국회개원 시 과반수가 넘는 151명의 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제15대 총선 이후 1996년 신한국당 입당의원

| 순번 | 성명 | 전 소속정당 | 입당일 | 비고 | 순번 | 성명 | 전 소속정당 | 입당일 | 비고 |
|----|-----|--------|-------|-------------|----|-----|--------|-------|-------------|
| 1 | 김재천 | 무소속 | 04.24 | | 10 | 백승홍 | 무소속 | 05.15 | |
| 2 | 원유철 | 무소속 | 04.27 | | 11 | 임진출 | 무소속 | 05.20 | |
| 3 | 황성균 | 무소속 | 04.29 | | 12 | 서 훈 | 무소속 | 05.28 | |
| 4 | 김일윤 | 무소속 | 05.01 | | 13 | 김용갑 | 무소속 | 07.31 | |
| 5 | 박시균 | 무소속 | 05.02 | | 14 | 김영준 | 무소속 | 08.27 | |
| 6 | 박종우 | 무소속 | 05.02 | | 15 | 권정달 | 무소속 | 12.24 | |
| 7 | 이규택 | 통합민주당 | 05.13 | 96.04.29 탈당 | 16 | 황학수 | 자유민주연합 | 12.24 | 96.12.21 탈당 |
| 8 | 최욱철 | 통합민주당 | 05.13 | 96.05.04 탈당 | 17 | 유종수 | 자유민주연합 | 12.24 | 96.12.20 탈당 |
| 9 | 황규선 | 통합민주당 | 05.13 | 96.05.04 탈당 | 18 | 이재창 | 자유민주연합 | 12.25 | 96.12.24 탈당 |

※ 대한민국국회, 『국회사-제15대국회(자료편)』 참조 재정리.

신한국당이 제15대 국회 개원 전 연이어 무소속 및 야당 의원 영입을 시도하자 새 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당선자 영입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계속하여 의원 영입을 추진하여 결국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5월 22일 야3당은 야권 및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며, 소장을 통해 제기된 위헌행위는 인위적인 과반의석 확보가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 제41조 제1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 권리, 그리고 제8조 제1항의 복수정당제도를 침해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야권은 헌법소원과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서도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영입을 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의원영입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 속도를 조절해 가며 지속적으로 의원영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회개원 이후 1996년 말까지 무소속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가로 신한국당에 입당하였고, 1997년 1월 신한국당은 157명의 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신고하였다.

아. 이회창 대표체제 출범과 대통령선거 갈등

1996년 하반기 신한국당은 이홍구 대표체제의 출범과 함께 무소속 및 야당의원 영입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1996년 말과 1997년 초에 이르러 신한국당은 오히려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계기는 1996년 12월 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신한국당의 기습 강행처리였다. 인위적 과반수 확보로 인하여 대결양상을 보이던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돌하면서 정기국회는 폐회식도 갖지 못하고 자동 폐회되었다. 이에 신한국당은 12월 26일 이른 새벽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 노동관계법, 안기법부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을 단독으로 기습처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권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즉각적으로 김수환 국회의장과 오세용 부의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위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노동계에서도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거세게 저항하였다. 그 결과 1997년 초 정국은 노동법 파동으로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1997년 초 노동법 파동에 연이어 한보사태가 불거지면서 정국혼란은 가일층되었다.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작된 한보사태는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과 그에 따른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드러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건이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의 전·현직 장관 및 의원들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고, 신한국당 홍인길·정재철·황병태 의원과 김우석 내무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연이어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개입설이 제기되면서 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한국당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였다.

결국 한보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조사로 이어졌다. 또한 김현철의 YTN 인사개입 등 국정개입 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개입설’은 소위 ‘계이

트'로 확대되었고, 여야는 김현철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반영하듯 신한국당은 3월 5일 실시된 인천 서구와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단일후보를 내세워 각각 1곳에서 승리하였다. 이는 일련의 정치파동 속에 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였으며, 신한국당이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처럼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기습처리, 한보사태, 김현철게이트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신한국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확대와 팽배해진 민심이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신한국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쇄신하기 위해 선출된 지 10개월 남짓 지난 이홍구 대표위원을 경질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신한국당의 조직개편은 3월 13일 개최된 전국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국쇄신을 위해 이회창 대표체제를 선택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던 이회창 고문을 전격적으로 새 대표위원에 지명하였고, 전국위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전국위원회는 신한국당이 겸허한 자세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에 따라 1,400여 명의 전국위원 외에 초청인사와 참관 당원이 거의 없는 최소한의 규모로 개최되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듯 이회창 신임 대표위원 또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당은 창당 이래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 온 당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질책과 비판을 받아들여 우리 당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되찾자”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전국위원회는 경제회생과 안보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등 새출발 재도약을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전국위원회의 신임대표위원 선출에 이어 신한국당은 3월 15일 고위당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경질을 단행하여 지도부 개편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개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외무통일위원장이 신임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에 김중위 서울시지부위원장, 원내총무에 박희태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 이윤성 의원이 각각 임명되

었다.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은 유임되었다. 이어 3월 1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박희태 원내총무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3월 4일과 15일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홍구 전 대표위원을 각각 상임고문에 임명하며 고문단을 강화하였다.

신한국당 주요 간부 변경(1997. 3)

| 직책 | 기존 | 변경 | 직책 | 기존 | 변경 |
|-------|-----|-----|----------|-----|-----|
| 대표위원 | 이홍구 | 이회창 | 대변인 | 김 철 | 이윤성 |
| 사무총장 | 강삼재 | 박관용 | 중앙연수원장 | 박명환 | 정창화 |
| 정책위의장 | 이상득 | 김중위 | 총재비서실장 | 박범진 | 유 임 |
| 원내총무 | 서정원 | 박희태 | 대표위원비서실장 | 이원구 | 하순봉 |

신한국당은 1997년 3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회창 대표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유력 대통령후보 중 한 명이 신임 대표위원에 임명되자 오래 지나지 않아 경선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공방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4월에 접어들어 당내에서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출마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신한국당은 급속하게 대통령후보 경선국면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당내에서는 이회창 대표위원의 경선 전 대표위원직 사퇴문제를 둘러싼 갈등표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선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한국당은 경선규칙 등과 관련한 당헌 및 당규 개정을 위해 4월 30일 이세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개정위원회는 5월 19일 경선 예비후보의 대리인들을 소집하여 위원회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안건 심의과정에서 각 후보 측과 당내·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정위원회는 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당대회 시기 및 대의원 정수, 후보등록 요건 등을 비롯하여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1일 당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가장 논

란이 된 부분은 이회창 대표위원의 경선 전 대표위원직 사퇴문제였으며,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시기 또한 핵심 쟁점이었다. 직접적인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경선투표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회창 대표위원의 사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5월 2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후보 완전자유경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개정 당헌 주요내용】

- 전당대회 당연직 대의원 중 중앙당 및 시·도지부 사무처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를 중앙당 및 시·도지부 사무처 3급 이상의 당직자로 변경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 대통령후보자 선출 전당대회 준비기간(선거기간) 동안의 신·구 대의원간 권한(예: 추천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출직 대의원 임기를 다음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에서 다음 정기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시까지로 변경
- 여성유권자의 관심 증폭과 지지유도를 위해 시·도 및 지구당 선출대의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 신설
- 선거일 공고와 전당대회 공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전당대회 '개최일 5일 전'에서 '개최일 전 5일까지'로 변경
- 전국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시·도의원 포함
- 중앙상무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명칭 변경
-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회 폐지
- 입후보 시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후보자 입후보 방법 중 당무회의 제정에 의한 방법 삭제, 대의원 추천에 의한 입후보로 일원화: 3개 이상 시·도에 걸쳐, 시도별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
- 1차 투표 시 당선인 결정 정족수를 참석 대의원 수에 따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
- 1, 2차 투표의 단순반복 상황을 없애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1차 투표 후 바로 결선투표 실시
- 대통령후보자의 자격을 선거일 현재 당적 보유자에서 후보 등록일 현재 당적 보유자로 변경하여 비당원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는 현행규정의 모순해결
-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대통령후보자 선출 기한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90일 전에서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조정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당규의 개정으로 경선규정이 확정되자 신한국당은 5월 30일 당무회의를 열고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7월 21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후보군들과 당내 정치발전협의회가 이회창 대표위원의 사퇴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였고, 대표직 사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당내뿐만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당외에서도 이회창 대표위원의 사퇴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이회창 대표위원은 7월 1일 사퇴하였고, 이만섭 고문이 대표위원서리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신한국당은 대표위원직 사퇴 논란을 종결하고 7월 2일 총 7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 경쟁에 돌입하였다.

7월 5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12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된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신한국당은 7월 21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후보선거를 실시하였다. 전국 1만 2,4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회창 후보가 6,992표를 얻어 4,622표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선거 신한국당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신한국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은 다수 후보의 출마, 광역별 합동연설회, 접전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수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 경선 후유증을 남기면서 당내 계파 또는 후보 진영 간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신한국당은 경선 후유증의 조기극복과 당내 안정을 위해 8월 7일 전격적인 주요 당직개편을 단행하여 당3역과 대변인을 교체하였다. 당직개편 결과 사무총장에는 강삼재 의원이 재기용되었고,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에는 이해구 의원과 강재섭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대변인에는 이사철 의원이 임명되었다.

신한국당 주요간부 변경(1997. 8)

| 직책 | 기존 | 변경 | 직책 | 기존 | 변경 |
|-------|-----|-----|------|-----|-----|
| 사무총장 | 박관용 | 강삼재 | 원내총무 | 박희태 | 강재섭 |
| 정책위의장 | 김중위 | 이해구 | 대변인 | 이윤성 | 이사철 |

※ 1997년 9월 원내총무는 목요상 의원으로 다시 교체됨

이후 신한국당은 하순봉 대표위원비서실장과 이흥주 비서실 차장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석 전 사면 건의 과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9월 3일 강재섭 원내총무를 정치담당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하는 등 부분적인 당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요상 의원이 원내총무에, 대표위원비서실장에는 윤원중 의원이 임명되었다.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을 재편한 이후 8월 14일 강삼재 신임 사무총장을 기획단장 겸 총괄본부장으로 하는 대통령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서둘러 대통령선거체제를 가

동하였다. 그러나 당내·외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병역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한 하락세를 보였고, 그 여파로 당내에서 조차 ‘후보교체론’과 ‘이후보낙마론’이 제기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9월 13일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경선불복과 대통령선거 독자출마를 공식선언하고 탈당하였고, 일부 원외지구당이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의 탈당에 동참하면서 내부분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후보경선 이후 신한국당의 당내 분열과 위기상황은 극에 달하였다.

이후 선두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김대중·이인제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¹⁰⁾ 당내 분열양상은 진정되지 않았다. 후보교체론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지도체제와 인선 그리고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도 계파 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속 탈당설, 10월 대란설 등 혼란스러운 예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4일 김영삼 총재는 “이회창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단합하여 대통령선거 정국을 차질 없이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총재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9월 3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단합과 쇄신을 모색하였다.

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는 예외적으로 서울이 아닌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신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하고 이회창 대통령후보를 새 총재로 선출하여 새로운 총재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또한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에서 9인 이하의 최고위원을 두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이회창 신임총재는 이한동 고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9,73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신한국당은 다시 이회창 총재-이한동 대표의 집단지도체제로 정비되었다.

10) 문화일보, 1997년 9월 19일자 1면; 한국일보, 1997년 9월 20일자 3면;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29일자 2면.



▲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명예 총재가 새 지도부로 선출된 이회창 총재, 이한동 신임대표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7년 9월 30일).

개정 강령 · 기본정책 및 당헌 주요내용

【 강 령 】

前文

우리 신한국당은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대통합의 정치로 경제와 안보에 역점을 두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안정 속의 개혁을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선진대국 『신한국』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 제1항 우리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맑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생활정치를 실현한다.
- 제2항 우리는 자율과 협동, 창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활력 있는 선진경제를 이룩한다.
- 제3항 우리는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선진산업사회를 이룩한다.
- 제4항 우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며 미래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제5항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자원 절약형 사회를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사회를 구현한다.
- 제6항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다.
- 제7항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주적 방위능력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한다.
- 제8항 우리는 민족의 공영과 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룩하며 자유적 안보체제를 확립하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기본정책】

| | | |
|----------------------------|---|--|
| 21세기 새로운 정치 구현 | 1. 국민대통합의 정치실현 2.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함 3. 깨끗하고 합리적인 선진정치문화 창출 4. 대통령중심제로 나라의 안정을 기함 | 5. 국가경영체제의 혁신을 통한 정부경쟁력 제고 6.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함 7. 세계화와 지방화 선도 |
| 활력 있고 정의로운 선진경제 건설 | 1.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함 2. 경제안정과 균형을 이룸 3.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증진 4.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5.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한 경제 구현 6. 금융산업의 자율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 7.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함 8. 농어업 구조개선 촉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9.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과 과학기술자 우대 10. 정보화 사회 촉진 11.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12. 주거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 13.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14.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난 대폭 완화 15. 우주와 해양 개척 |
| 선진복지사회 실현 | 1. 사회보장제도 확충,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추진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 증진 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 보장 | 4.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5.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 실현 6.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
|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 | 1. 창의적인 인간교육 실천 2. 학교교육 정상화 3. 민족문화 창달로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임. | 4.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5. 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1.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회복 2. 맑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 3.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강화 | 4.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 추구 5. 선진환경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 육성 6.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 |
| 여성참여 기회의 확대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 | 1. 여성의 가사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정착 2.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참여 확대 | 3. 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로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평등을 보장 4.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정착 |
| 확고한 국가안보역량 강화 | 1.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한 자주국방체계 확립 2.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튼튼한 국가안전 보장체계 구축 | 3. 군의 합리적 제도발전으로 국방력 기초 강화 |
| 통일실현과 세계평화에 기여 | 1.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반도 평화 구축 2.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국통일 실현 | 3.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강화 4.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증진 |

【당 헌】

- 전당대회 당연직 대의원 중 대표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변경
- 전당대회 기능 중 대표위원의 임명동의를 대표최고위원의 임명동의로 변경
- 전국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대표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변경
- 1인대표위원제를 최고위원제로 변경하고 9인 이내의 최고위원과 그 중 1인의 대표최고위원을 둠
- 대표위원의 선임방법을 당규로 정하되, 최초의 최고위원 선임방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부칙에 신설
-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지명하여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전국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최고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대표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부칙에 신설
- 대표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의 권한대행 서열 명시

- 당내 인사의 당무참여 폭을 증대하기 위하여 당무회의의 정수를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확대
- 당연직 당무위원에 최고위원,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당 소속 시·도지사 포함
- 당무회의의 주재권을 총재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변경하고 최고위원은 부의장으로 보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당직자회의 의장을 총재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변경,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의 회의 주재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 신설
-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하도록 하는 총무의 선출방식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여 당의 민주적 운영 생활화
-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임기조항 신설 및 의원총회의 기능 중 총무의 선출기능 신설
- 경제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안보위원회 신설
- 국회의원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및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대표위원의 제청을 대표최고위원의 제청으로 변경 하되, 단서조항으로 최고위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자. 민주당과의 합당과 한나라당의 출범: 신한국당의 소멸

1997년 9월 말 이회창 총재체제 출범 이후 신한국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10월 들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수백억 비자금 조성설을 주장하는 한편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면서 신한국당의 반격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이회창 총재는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을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였고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국당 명예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비자금수사 유보와 관련하여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책무를 포기한 행위이며 3김 정치 압력에 굴복해 구시대 정치의 검은 실체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자금 수사를 거듭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선자금과 함께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는 3김 청산을 내세우며 김영삼 총재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당적보유가 별개임을 내세우며 탈당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당내 민주계 또한 이회창 총재의 요구에 반발하였다. 10월 25일

에는 강삼재 사무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10월 28일 이만섭 고문의 탈당선언을 시작으로 신한국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연쇄탈당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신한국당 내에는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선거 승리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후보교체론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 신한국당 이만섭 고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997년 10월 28일).

어려운 상황은 당내 사정뿐만이 아니었다.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후보가 이회창 후보의 지지표를 잠식하며 지지율을 높여갔고, 10월 27일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가 연대합의를 발표한 후 11월 3일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소위 'DJP연합'으로 불리는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한국



▲ 김운환, 서석재, 한이헌 의원이 신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97년 10월 31일).

당과 이회창 총재는 민주당과의 합당과 후보단일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양당이 공히 어려움에 처하여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의 결과물이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또한 조순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지만 낮은 지지율과 당내 혼란으로 인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는 11월 7일 당대 당 통합원칙에 의한 연대, 대통령후보 단일화, 당명과 당헌·당규의 통합, 3김 정치 청산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4개항에 합의하며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였다. 또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를, 민주당 조순총재를 신당의 총재를 맡는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회창 총재의 탈당요구를 거부해 오던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신한국당을 탈당하였다.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대통령선거 정국이라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신한국당은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비주류 측의 합당에 대한 반발 우려와 달리 11월 11일 당무회의를 통해 민주당과의 합당의 건을 의결하였다.



▲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재 총재가 양당 통합원칙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1997년 11월 7일).

당무회의 의결로 공식적인 합당협상에 나선 신한국당은 통합수임기구와 협상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합당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해 나갔다. 그 결과 신당의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결정되었고, 양당은 11월 20일 통합협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신한국당은 1997년 11월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하고, 같은 자리에서 연이어 합당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신설정당 한나라당으로 공식 출범 하였다. 이로써 1990년 민주공화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합당에 의해 민주자유당으로 출범한 후 1996년 2월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은 창당 7년 9개월여 만에 모체인 3당 합당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재편되었다.



▲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합당 전당대회(1997년 11월 21일).

2. 민주당(1991. 9. 16~1995. 12. 21)

가. 이기택 대표체제의 출범(1993. 3)

민주당은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와 김대중 대표의 정계은퇴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1993년을 맞았다. 따라서 1993년 초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선거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여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993년 3월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하여 ‘제2의 창당’을 목표로 대대적인 체제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도체제 문제를 서둘러 논의하여 1993년 1월 13일 당무회의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련한 ‘단일대표 순수집단지도체제’ 방안을 확정하였다. 당의 주요 의사는 최고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을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대표가 결정하는 지도체제였다. 또한 당직 경선의 과열경쟁을 피하고 단합을 다지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93년 1월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의 개정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초점이 새 대표의 선출에 집중되면서 체제정비와 당의 안정화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우선 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김대중 대표의 공백은 혼란스러운 당권경쟁을 야기하였다. 당내 세력들 간에는 활발한 물밑 접촉을 통한 제휴의 움직임이 전개되었고, 합종연횡을 통한 새로운 계파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각 세력은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논란 속에 당권경쟁 규칙과 직결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문제가 2월 19일 당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은 동시에 선출하되 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누어 선출하는 분리선거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 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7인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월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이외에 8인의 최고위원을 4인 연기명 투표방식으로 선출하여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차기 전당대회부터는 최고위원 중 여성 1인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개정 당헌에 포함되었다.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2차 정기전당대회를 3월 11일 실시하기로 확정·공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1993년 1월 26일 속초·고성지구당개편대회를 시작으로 20일간 전국 228개 지구당의 개편대회를 통해 지구당을 정비하였고, 연이어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는 15개 시·도지부 정기대의원대회(개편대회)를 열고 지부장을 선출하여 시·도지부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시·도지부 개편대회의 경우 15개 시·도지부 중 10곳에서 완전자유경선이 실시되었고,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13개 지부에서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되었다.

민주당 시·도지부 개편

| 시·도지부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
| 지부장 | 박 실 | 노무현 | 백승홍 | 조흥규 | 김원용 | 명화섭 | 이규택 | 함영희 | 윤원중 | 장한량 | 유인학 | 이희천 | 정영모 | 김말용 | 강승훈 |

2월 19일 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된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시·도지부 개편대회에서 합동연설회를 벌이는 등 열띤 경쟁 속에 진행되었다. 2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된 후 민주당은 3월 11일 제2차 정기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5,89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정기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은 단연 대표최고위원선거였다. 경선으로 치러진 대표최고위원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열띤 경쟁 속에 실시되었으며, 당내 선거 사상 처음으로 OMR카드 기표와 컴퓨터집계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 투·개표가 이루어졌다. 1차 투표에는 김상현, 이기택, 정대철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각각 1,928표(34%), 2,743표(48.3%), 944표(16.6%)를 획득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따라서 선거규정에 따라 1·2위 득표자인 이기택 후보와 김상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되었고, 최종 선거결과 이기택 후보가 2,896표(53.2%)를 획득하여 2,549표(46.67%)를 차지한 김상현 후보를 누르고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한편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선거에는 8명을 선출하는 데 총 11명이 출마하여 접전을 벌였다. 5,675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최종 투표결과 김원기(2,580표)·유준상(2,048표)·조세형(2002표)·권노갑(1949표)·노무현(1947표)·한광옥(1903표)·신순범(1,836표)·이부영(1,823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 김정길·박영숙·김영배 후보는 낙선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기택 대표최고위원을 필두로 9인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켰다.



▲ 민주당 대표경선을 위한 민주당 제2차 정기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1993년 3월 11일).

이외에도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전당대회 의장에 김말룡 의원을 선출하고, 부의장에 김형중(논산위원장), 윤완중(공주위원장)을 재선출하였다. 또한 대표최고위원 1인과 최고위원 8인의 집단지도체제, 원내총무 경선제 규정, 여성위원회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당의 골격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당대회를 마쳤다. 한편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의장에 김형남(동두천·양주위원장), 부의장에 정영모(산청·함양위원장)와 김경래(영월·평창위원장)를 선출하였다.

[개정 당헌 주요내용]

- 당직 5분의 1 이상을 여성당원으로 임명(신설)
- 최고위원회 구성: 2인의 대표최고위원과 8인의 최고위원에서 대표최고위원 1인과 6인 이내의 최고위원으로 변경
-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최고위원 중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함(신설)
-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대의원 추천 조항 삭제
- 고문에 상임고문 추가
- 원내총무 인선: 지명에서 2년 임기의 선출제로 변경,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3월 18일 자유경선을 통해 원내총무를 선출하는 한편 연이어 주요당직을 인선하고 체제정비를 완료하였다. 국회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원내총무 선거에는 김태식·이영권·홍사덕·신기하·박실 의원 등 5명이 출마하여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김태식·홍사덕 후보가 26표, 신기하·이영권·박실 후보가 각각 24표, 10표, 8표를 얻어 다시 1위와 2위 간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최종결과는 김태식 후보가 총 93표 중 67표를 획득하여 원내총무로 선출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3월 19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고위당직 인선을 단행하여 정책위의장에 김병오 의원을 새로이 임명하고 김덕규 사무총장과 박지원 대변인을 유임시켰다. 이어 3월 23일에는 당기위원장 등 중하위직에 대한 추가 당직인선을 단행하여 여성위원장에 이우정 의원, 중앙정치연수원장에 김충조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한편 이길재 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에, 강수립 의원을 인권위원장에, 이협 의원을 홍보위원장에, 조순승 의원을 통일국제위원장에, 제정구 의원을 당무기획실장에 각각 임명하였다. 한편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상현·정대철 전 최고위원과 박영숙 전 최고위원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어 3월 24일에는 최고위원회회의를 열고 당무위원 55명을 인선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재정비된 민주당 이기택 대표체제는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였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93. 2~3)

| 직 책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 대표 | 이기택 | 이기택 | 유임 |
| 최고위원 | 김원기 | 김원기 | 유임 |
| | 박영숙 | 유준상 | 교체 |
| | 조세형 | 조세형 | 유임 |
| | 김상현 | 권노갑 | 교체 |
| | 김영배 | 노무현 | " |
| | 김정길 | 한광옥 | " |
| | 정대철 | 신순범 | " |
| | 이부영 | 이부영 | 유임 |
| 사무총장 | 김덕규 | 김덕규 | 유임 |
| 원내총무 | 이철 | 김태식 | 교체 |
| 정책위의장 | 장재식 | 김병오 | " |
| 당기위원장 | 장기욱 | 최락도 | " |
| 여성위원장 | . | 이우정 | 신규 |
| 정치연수원장 | 유인태 | 김충조 | 교체 |
| 통일국제위원장 | 손세일 | 조순승 | " |
| 홍보위원장 | 유종근 | 이협 | " |
| 대변인 | 박지원 | 박지원 | 유임 |
| 당무기획실장 | 이해찬 | 제정구 | " |

나. 당내 계파 갈등과 이기택 총재체제의 출범

민주당은 1993년 3월 이기택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9인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키며 당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로 대별되는 계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정치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통일된 목소리를 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한 계파 간 입장 차이는 심각한 당내갈등을 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개혁정국 속에서 1993년 실시된 3차례의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도 6곳의 선거구 중 단 한 곳에서만 당선되는 열세를 보였다.

불안정하고 열세의 상황 속에 민주당은 1993년 9월 정기국회 이후 우루과이러운 드협정안 비준저지 투쟁, 상무대 정치자금비리 사건과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상실해 가던 제1야당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당내 계파갈등과 그에 따른 혼란은 지속되었다.

1994년으로 접어들면서 비주류 측은 이기택 대표의 지도력과 결단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조기전당대회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당권경쟁의 조기점화 양상이 전개되었다. 당내 최대 계파였던 구 평화민주당 출신 인사들(이하 동교동계)의 반대로 조기전당대회 논란과 당권경쟁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잠복하였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은 1993년 5월 실시된 원내총무 경선과 6월 이루어진 국회부의장 인선과정에서 계파 경쟁과 갈등을 지속하였다.

1994년 5월 27일 실시된 제2대 직선 원내총무 경선은 주류 측이 지원하는 김태식 전 총무와 비주류 측이 지원하는 신기하 의원 간 양자대결 속에 신기하 의원이 49표를 얻어 3표 차로 원내총무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하반기 국회부의장 후보 인선에서도 재현되었다. 주류 측이 지원하는 김봉호 의원과 비주류 측이 지원하는 홍영기 의원의 양자 대결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민주당은 6월 23일 홍영기 의원이 만장일치로 국회부의장에 내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여 세 차례의 표결을 통해 인선방법, 인선시기, 인선투표 등을 결정한 후 최고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5 대 4의 경합 끝에 홍영기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 관례적으로 국회부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해 왔다. 따라서 논란 속에 이뤄진 표결 인선으로 민주당은 9인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이기택 대표체제의 한계와 당내 계파갈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한편 국회부의장 인선과정은 당내 주류 측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한 또 다른 계파갈등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동교동계는 관례에 따라 이기택 대표가 김봉호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명해 주기를 바랐으나 이기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공식의결을 거치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고위원회 표결 끝에 김봉호 의원의 국회부의장 내정은 실패하였고, 공조를 유지하던 이기택 대표 측과 동교동계 사이의 갈등양상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 하반기로 접어들어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더욱 악화되었고, 12월 정기국회 폐회 이후 다시 전당대회 개최 논란이 일면서 극대화되었다.

12·12 군사반란자 기소투쟁 과정에서 이기택 대표 측은 국회등원 거부와 강력한 장외투쟁을 주장한 반면 동교동계는 ‘원내·외 병행투쟁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11월 23일 김대중 전 대표가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야당도 바뀌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원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등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기소투쟁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차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택 대표는 11월 25일 “과거청산과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제14대 국회는 더 이상 존재근거를 상실했다”라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고, 이로써 기소투쟁 사태는 당내·외적으로 파행국면으로 치달았다.

이기택 대표의 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민주당은 ‘장외투쟁 계속론’과 ‘조기등원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면서 내부갈등을 겪었다. 당내 분열양상이 확대되자 최고위원회는 등원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절충에 나섰고, 반복된 회의 끝에 11월 28일 “12월 12일까지 장외투쟁을 하되 여당이 주요안건을 강행하려 할 때는 대표가 결단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여전히 당내갈등을 표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갈등은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또다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계파갈등은 조기전당대회 논란과 맞물려 심화되었다.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최대 쟁점은 시기문제였다. 이기택 대표는 1995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월 또는 3월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교동계는 조기전당대회가 선거를 앞두고 당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거 후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였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1994년 말 이기택 대표는 “과거 구 신민당과 통합할 때 생각했던 정치적 목표와 거리가 멀어질 때 중대한 결단을 내릴 작정으로 마음을 다져가고 있다”라며 조기 전당대회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동교동계 또한 절대 수용불가를 표하면서 당내갈등은 내분양상을 보였다.

이기택 대표는 1995년 1월 8일 김대중 전 대표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전당대회문

제 조기매듭을 위한 ‘답판’ 을 요청하였고, 비주류 측 김상현 고문은 1월 12일 전당대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표가 이기택 대표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내분사태는 파경국면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기택 대표 측이 대표직 사퇴와 신당창당 사실을 전했다가 번복하는 등 당내 혼란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국으로 치닫던 민주당 내분사태는 이기택 대표, 김상현 고문 그리고 김원기 최고위원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기를 넘겼다. 1995년 1월 17일 김상현 고문이 당권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합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상현 고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권포기 선언과 함께 2월 임시전당대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김원기 최고위원이 당권도전 포기에 동참하면서 이기택 대표도 절충안을 수용하였다.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둘러싼 내분사태가 수습됨에 따라 민주당은 2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한 당 체제정비에 돌입하였다. 지도부의 1·17 대타협을 통해 전당대회와 지도체제 개편 원칙을 합의한 민주당은 ‘당헌개정을 위한 4인 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당권개정의 방향과 골격을 마련하고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임시전당대회의 시기와 구성 등을 확정하였다. 임시전당대회는 1995년 2월 24일로 확정되었고, 준비위원회는 총무, 당헌·당규, 정강정책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당헌·당규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후보공천 방식,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 문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 기구 개편 등이 핵심 논점이었다. 계파 간 이해관계 조정 속에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는 총재-부총재제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던 당무는 총재단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공천은 경선을 통해 결정하는 기존 당헌을 유지하였으며, 차기 전당대회는 1995년 8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월 임시전당대회를 ‘야권통합전진대회’로 치르기 위해 재야와 정치권의 참

신하고 경륜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통합작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 전 범야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여 통합교섭을 재개하였다. 민주당은 이후 새한국당·통일시대국민회의와의 통합협상을 통해 야권통합에 합의하고, 2월 18일 통일시대국민회의 김근태 대표를 부총재로,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하는 한편 임시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을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끊임없는 계파갈등을 거친 민주당은 1995년 2월 24일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강령 및 기본정책을 변경하는 한편 당헌을 개정하고 당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총재와 8명의 부총재를 선출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날 민주당은 총재에 이기택, 부총재에 김원기, 유준상, 조세형, 권노갑, 노무현, 한광옥, 신순범, 이부영을 선출하였다. 한편 임시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승리와 당세확장을 위하여 향후 야권통합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당무회의에 위임하였다. 이로써 내분으로 치닫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극적인 타협과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이기택 총재체제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았다.



▲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을 선언한 뒤 이기택 총재가 이종찬 상임고문, 김근태 부총재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1995년 2월 24일).

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와 분당

계파 갈등으로 인하여 분당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렸던 민주당은 1995년 2월 이기택 총재체제를 출범시키고 일시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1995년 6월 27일 실시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자 공천문제에 직면하면서 또 한번 심각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공천갈등은 이기택 총재와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공천만 받아도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인식되던 광주, 전·남북과 전략지역으로 선택된 서울과 경기지역 공천을 두고 가장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특히 외부인사 영입과 ‘특계과의 특정후보 만들기’를 둘러싼 논쟁은 공천과정의 핵심적인 갈등요인이었다.

동교동계는 서울시장 후보로 조순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데 이어 광주시장 후보에 송언종 전 체신부 장관, 전라남도지사 후보에 김성훈 중앙대 교수를 연이어 영입하였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에서 당내 후보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고,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김성훈 교수가 허경만 의원에게 패배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는 동교동계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중심에 두고 일방적으로 조순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기택 총재가 당 총재에 대한 홀대를 이유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갈등은 이후 경기도지사 공천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기택 총재는 장경우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지한 반면 김대중 전 총재와 동교동계는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서울 조순, 경기 이종찬의 구도가 최선의 조합임을 주장하며 이종찬 고문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희망하였다. 이러한 대립상황 속에 동교동계는 이기택 총재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이종찬 고문 추대계획을 포기하였고, 경기도지사 경선은 장경우 의원과 안동선 후보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1995년 5월 13일 실시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2차 투표과정에서 돈봉투 시비와 함께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선대회가 무산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처리 문제를 놓고 양 계파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당내 갈등은 오히려 파국으로 치달았다.

돈 봉투 파문은 경선 2차 투표과정 중 안동선 후보 측이 “현금 1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와 대의원명단을 갖고 있던 최모 씨가 현장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며 개표진행 중지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폭력사태로 개표가 중단되면서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함을 중앙당으로 옮기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이기택 총재 측과 동교동계는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문제의 사후처리를 총재단 회의에 일임하였으나, 이후 진상규명 및 사후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였다. 이기택 총재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깡패집단을 동원해 문제를 악화시킨 동교동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저히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동교동계 권노갑 부총재는 “금품살포 등 원인제공자가 적반하장이다. (……) 해당행위를 한 장경우 의원은 탈당해야 하고, 경선은 무효이므로 총재단회의에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양측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1995년 5월 15일 민주당은 총재단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돈 봉투 시비 및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한편 일단 개표를 진행한다는 조기수습책을 마련하였다. 재개된 개표 결과 장경우 후보가 총 투표수 444표(무효1표) 중 226표를 얻어 안동선 후보에 9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개표직전 안동선 후보는 “이번 사태는 과열을 조장한 이 총재와 장 후보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하며 후보사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동교동계는 돈 봉투 살포가 드러날 경우 경선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며, 특히 안동선 후보가 개표직전 전격사퇴함에 따라 장경우 후보도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기택 총재 측은 개표결과 나타난 대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장경우 후보의 공천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경선파문 이후 민주당은 일주일 가까이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였다. 그 결과 경기지역 일부에서는 당원들이 무더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대회 진상조사위원회가 5월 25일 “장경우 후보 측에서 대의원을 합숙시키고 20만 원씩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

이며 이는 당헌·당규 위반임. 현장에서 적발된 돈 봉투는 대표용이 아님. 폭행사건도 조직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인 것에 불과함”이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이기택 총재는 편파적 조사라며 심하게 반발하였고, 5월 26일에는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발표를 통해 “경기지사 경선에서의 폭력을 배후에서 조종한 당내 인사는 자진해서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며 권노갑 부총재에 대한 퇴진 요구와 함께 이 요구가 5월 2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당무거부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권노갑 부총재는 “폭력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기택 총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마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모셔오기도 했고 같이하기도 했지만 이기택 총재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분당이 예견될 만큼 과국적 상황은 5월 28일 이기택 총재가 총재직 사퇴의사를 번복함으로써 극적으로 수습되었다. 이기택 총재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공천 받은 전국 동지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어 총재직 수행을 결심했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조건 없이 당무에 복귀하였다. 이로써 민주당 분당사태는 일단 표면적으로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는 반복된 사퇴파문으로 정치력에 상처를 입어야 했다. 이후 민주당은 6월 5일 이기택 총재와 김대중 이사장의 회동, 6월 6일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장경우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하고 갈등을 봉합하였다. 그러나 공천자 대회 연기파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된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등권론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하여 혼란 속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했다.

계과갈등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4명이 당선되어 5명이 당선된 민주자유당과 비슷한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최대 관심이었던 서울에서는 42.4%라는 득표율로 승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보다 14명이 더 많

은 84명을 당선시켰고,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352명을 당선시켜 286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자유당에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오히려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분당으로 이끄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선거라는 대의 앞에서 임시적으로 봉합되었던 당내갈등이 선거종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결과였다.

지방선거 후 민주당은 1995년 7월 5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공과논쟁을 벌이며 선거 일주일여 만에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선거과정 중 제기한 ‘지역등권론’을 둘러싼 대립은 동교동계와 반 김대중 세력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였고, 7월 중순 동교동계가 신당창당을 거론하면서 당내갈등은 분당이라는 극단적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당내 세력이 소위 ‘창당파’와 ‘반대파’ 그리고 ‘중도파’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7월 11일 동교동계는 이기택 총재의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신당창당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는 분당을 막기 위해 김대중 이사장과 만나거나 당 총재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거부하였다. 반면 중도파는 신당창당에 반대하면서도 당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이기택 총재를 비판하는 양비론의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당 창당파는 7월 14일 이기택 총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이기택 총재에 대한 사퇴압력을 가하였고, 반면 이기택 총재는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계파갈등은 극단에 이르러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 7월 18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정계복귀 및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분당이라는 종국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라. 제3차 전당대회와 집단지도체제의 도입

창당파들의 신당창당 작업이 본격화되고 소속의원들이 이탈하면서 민주당의 당세는

급격히 위축되어 갔다. 신당에 참여한 민주당 현역의원은 총 65명이었으나 이중 12명의 전국구의원이 의원직 보유를 위해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실제 당적을 옮겨간 의원은 53명이었다. 이로써 소속의원이 최대 99명에 이르렀던 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으로 39명의 소규모 정당으로 전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 내부적으로도 이기택 총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창당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던 소위 구당모임과 이기택 총재 세력으로 양분되어 당 수습과 재건을 놓고 심각한 혼란에 휩싸였다.



▲ 민주당 구당모임의 제정구 의원이 '김대중 신당창당 부당성 지적 및 이기택 총재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1995년 7월 18일).

구당모임은 신당창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1995년 7월 28일 시국강연회를 통해 민주당을 개혁하여 신당과 일전을 치르겠다고 '당 재건'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에 이기택 총재는 7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당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6인 당재건수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구당파에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구당모임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6인 수습위원회 구성과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오직 당권만 잡으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거부하였다. 한편 구당모임은 총재단회의 등 당무를 정상화시키고 이기택 총재와 대화

를 통해 당 수습에 나설 것이라며 '선 당세확장 후 전당대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는 당을 계속 표류시킬 수 없으므로 총재 직권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며, 6인 수습위원회에 구당모임 쪽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원외 인사나 중도적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내갈등은 점차 고조되었다. 이후 구당모임은 8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정치권 밖의 시민정치세력과 제휴해 민주당을 '반(反)3김 독자 세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민주당이 새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기택 총재가 사퇴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양측간 핵심 쟁점이 되고 있었던 대표체제와 관련하여서도 이기택 총재는 공동대표제를 수용하기로 하는 한편 1995년 8월 2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당 수습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로 하고 12월 정기전당대회에서 당 지도체제 문제 등을 새롭게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기택 총재 측은 이기택 총재와 홍영기 부의장의 2인 공동대표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당파는 외부영입 인사 몫을 위해 3인공동대표제를 주장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 8월 16일과 17일 열린 당무회의와 현역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전당대회는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의 총의로 확정된 불변의 소집일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기택 총재 측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전당대회를 강행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구당모임 측이 대립하였다. 양측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기택 총재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지구당 개편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17일 지구당개편대회 지시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전당대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구당모임이 이를 월권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대응 및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극단으로 치닫던 민주당 당내갈등 사태는 8월 23일 이기택 총재의 백의종군 선언을 계기로 수습의 돌파구를 찾았다. 이기택 총재는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조건 아래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구당모임도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애초의 태도에서 물러나 8월 28일 전당대회 개최를 수용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홍영기·박일 공동대표체제라는

합의점을 찾았고 법적등록도 공동으로 하며 4인의 최고위원을 두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당무위원과 관련하여서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을 당무위원으로 임명키로 하였으며, 12월 14~15일 임시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극적 합의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킨 민주당은 1995년 8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분당사태로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전당대회는 지도부 구성은 물론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열리는 ‘수습전당대회’라는 성격 때문에 식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331명의 전국 대의원은 지도체제를 2인 대표최고위원과 4인 최고위원으로 구성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12월 14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통합수입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합의에 따라 경선절차를 생략한 채 공동대표최고위원에 홍영기·박일 의원, 최고위원에 김종완·강창성 의원, 조중연·김정길 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한편 이기택 총재와 김원기 수석부총재는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분당과 내분의 아픔을 겪은 어려움을 반영하듯 유난히 화합과 단결이 강조되었다. 홍영기 새 공동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당의 인화와 훌륭한 인사영입”을 강조하였고, 박일 대표 또한 “제살 깎아먹기식 당내경쟁의 무조건 중단”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의장에 이장희 의원, 부의장에 정병원 구로갑 지구당위원장과 김철배 철원·화천·양구지구당위원장을 선출하여 전당대회의장단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화합과 단결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당3역 인선과정에서 이기택 전 총재 측과 구당모임 측이 계속하여 대립과 갈등양상을 표출하면서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9월 7일에서야 주요 당직인선을 완료하였다. 인선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무총장 인선은 양측이 당규 제3호, 지방조직규정 제22호를 삭제하여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조직강화특위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애도록

합의하여 극적으로 돌파구를 열었고, 결국 장준익 의원이 임명되었다. 정책위의장에는 홍기훈 의원, 당기위원장에는 장기욱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이규택 대변인은 유임되었다. 원내총무에는 이철 의원을 내정하고, 9월 11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이로써 공동대표의 집단지도체제를 출범한 이후 보름 가까이 지속됐던 민주당의 표류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개정 당헌 주요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임시전당대회는 1995년 12월 14일부터 2일간 개최 ○지도부의 명칭은 총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부총재를 최고위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서 최고위원회는 2인의 공동대표와 4인의 최고위원으로 구성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의 주제는 양 대표 최고위원이 교대로 함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및 전당대회 의장단과 이 지도부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당 당직자의 임기는 12월 임시 전당대회까지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전당대회 이후 1개월 이내에 당 기구를 대폭 축소 개편 ○국민통합과 민주정당을 지향하는 제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위하여 당무회의 또는 그 결의에 의한 기구를 통합수임기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정통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과는 통합하지 않음 - 통합과 당세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최고위원과 당무위원을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음 |
|--|---|

마. 개혁신당과의 신설합당: 민주당의 소멸

분당과 내분의 어려움 속에 공동대표제의 과도체제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제2야당으로 전략한 당세를 확장하고 1996년 4월로 예정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야권통합이었다. 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자유당에 대응하기 위해 ‘반 3김세력 통합’의 기치를 전면내세웠으며, 당내 계파 또한 통합을 위한 구도로 재편되었다. 우선 구당모임은 더이상 ‘구당’이란 명분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9월 16일 ‘통합과 개혁을 위한 모임’(이하 통합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기택 총재 측도 9월 18일 모든 정통민주세력과 연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통민주연합’(이하 정통연합)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야권통합체제로 전환된 민주당은 9월 21일 홍영기·박일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되 두 계파에서 9명씩 참여하는 18명의 통

합수임기구를 구성하고¹¹⁾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



▲ '통합과 개혁을 위한 모임' 현판식(1995년 9월 21일).

민주당의 1차적인 통합대상은 1995년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였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는 지분 싸움이나 계파 안배를 배격하고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 민주화와 개혁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영입에 최선을 다할 것 등 3개항을 통합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11월 1일 창당준비위가 '개혁신당' 발기인대회를 통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개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작업이 공식화되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통합실무대표들은 11월 7일 1차 회동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통합교섭을 벌였다. 결국 12월 13일 양당 2차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으로 당 대 당 신설합당한다는 데 최종 합의하였고, 1995년 12

11) 통합수임기구는 홍영기, 박 일, 강창성, 조준연, 장준익, 이장희, 정기호, 장경우, 강희찬, 이규택, 김종완, 김정길, 이부영, 이 철, 장기욱, 김 말홍, 노무현, 박석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1991년 9월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의 신설합당으로 출범했던 민주당은 개혁신당과 신설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재출범하면서 4년 3개월여 동안의 정당활동을 마치고 소멸하였다.

3. 통일국민당(1992. 2. 10~1994. 7. 8)

가. 김동길 대표체제와 당세 위축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통일국민당은 이듬해 1993년 2월 9일 창당 1년 만에 정주영 대표가 탈당과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쇠락의 길을 걸었다. 통일국민당은 1993년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동길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며 재건을 모색하였으나 당내혼란과 어려움은 수습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현대 측의 당사 폐쇄 조치로 3월 17일부터 광화문 당사 옆 노상당사를 운영하는 천막정치를 해야 했고, 소속의원들의 연쇄탈당이 이어지면서 3월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자격을 상실하며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통일국민당은 4월 7일 서울 서초구 승주빌



▲ 통일국민당 의원들이 현대 측의 당사 폐쇄조치에 반발하여, 당사 옆에 천막연락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1993년 3월 18일).

당에 임시당사를 마련하면서 천막정치를 마감한 후 6월 27일 서울 성북구에 당사를 마련하고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군소정당으로 전략한 통일국민당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명맥을 유지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을 뒤흔든 재산공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일국민당 의원들이 평균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재시비에 시달려야 했고, 박철언 최고위원이 슬롯머신 뇌물수수 사건에 관련되면서 곤경에 처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효영 전 통일국민당 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는 등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통일국민당의 선거대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국민당의 위축은 1993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재현되었다. 4월 23일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광명시선거구에 공천하였으나 패배하였고, 6월 11일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철원·화천군과 예천군 등 2곳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이처럼 당세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통일국민당은 1993년 중반 부상한 야권통합의 분위기 속에 범야권대통합에 참여함으로써 당세 확장과 당 재건을 모색하였다. 야권 공조의 분위기 속에 8월 12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은 직접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야당 간 합의에 따라 민주당 후보를 연합공천 후보로 내세웠다. 이후 통일국민당은 정당 활동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야권 통합 작업에 나섰다.

나. 신정치개혁당과의 신설합당: 통일국민당의 소멸

1993년 당내 분열과 연쇄탈당, 천막당사 생활, 선거법 위반 관련 당원 구속 등 수난 속에 위기를 겪었던 통일국민당은 당 재건의 의지를 다지며 1994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살아남기 전략이었다”라는 김동길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은 이러한 통일국민당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연초 김동길 대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야권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보이며 재건의 의지를 다졌다. 2월 19일 당사를 성북동에서 정치 중심지 여의도로 옮겨온 것도 재건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 재건을 위한 통일국민당의 가장 중요한 시도는 야권통합과 무소속 의원 영입을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노력이었다. 통일국민당은 1993년 7월 김동길 대표가 민주당 이기택 대표,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와 처음으로 야3당 대표회동을 갖고 야권통합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3당은 1994년 1월까지 4차례의 대표회동을 통해 야권통합이라는 원론적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4년 4월까지 실질적인 통합협상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각 정당의 당내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야권통합을 목표로 시작된 통합과정이 다양한 방향으로 분산되었다. 통일국민당 또한 내부적으로 당 재건을 위한 통합방식을 두고 야권대통합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고 있었다.

야권통합을 위한 정당 간 협상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범야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노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국민당이 추진해 오던 무소속 영입과 원내교섭단체 구성 또한 무소속 의원들의 민주자유당 입당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는 1994년 5월 민주당을 배제한 통일국민당·새한당·신정치개혁당의 제3세력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통일국민당의 야권통합 방향도 변화를 보였다. 이후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통합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5월 26일에는 양당 대표가 회동하여 그간 논란이 되었던 대표체제와 지분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따라 통일국민당은 당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5월 30일 양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하였다.

통합선언 이후 통일국민당은 6월 29일 전당대회를 정기대회로 개최하였다.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986명의 대의원 중 8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정기전당 대회에서는 정상구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통합신당의 당명을 '신

민당'으로 하는 당명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의 건, 신정치개혁당과의 합당의 건, 합당수임기구 구성 및 위임사항의 건을 의결하였다. 지도부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통합신당이 출발하게 되면 잔여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으므로 그간의 노력과 경륜을 인정하여 전당대회 절차를 통해 기존 지도부를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신정치개혁당과의 당 대 당 합당을 의결하는 한편 합당수임기구를 유임된 지도부가 새로이 구성할 당무회의에 위임하였다.



▲ 통일국민당 전당대회(1994년 6월 29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7월 6일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통해 '신민당'으로의 신설합당과 신당의 강령 및 당헌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7월 8일 정당등록(신설합당) 신청이 완료되면서 통합신당 '신민당'이 공식출범하였다. 이로써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 공식 출범한 통일국민당은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정당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선거 돌풍, 대통령선거 패배, 정주영 대표의 탈당과 당내 분열,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신설합당 등 굴곡의 과정을 거친 후 소멸하였다.

4. 신정치개혁당(1992. 3. 4~1994. 7. 8)

가. 당세 복원노력과 한계

신정치개혁당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찬중 후보가 150여만 표를 얻는 선전을 벌이면서 주목받는 군소정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정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현실정치의 한계 속에 1993년 이후 신정치개혁당의 당세는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특히 1993년 3월 일부 당직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찬중 대표가 정치인 사상 처음으로 남양유업의 TV 우유광고에 출연계약하고 그 출연료를 보궐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신정치개혁당의 재정난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199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신정치개혁당의 4분기 국고 보조금은 2,8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어려운 당내 상황 속에서도 신정치개혁당은 위기를 극복하고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1993년 4월 23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부산 사하구와 경기도 광명 등 2곳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6월 11일 실시된 보궐선거에도 강원도 철원·화천군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8월 1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 후보로 연합공천하는 상황 속에서도 춘천시선거구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였다. 한편 5월에는 박찬중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민주적 재야인사가 공동참여 하는 ‘개혁국민내각’ 구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번의 보궐선거 결과 단 1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였고, 개혁국민내각 제안도 특별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처럼 위축된 군소정당의 한계 속에 신정치개혁당 또한 당 재건을 위해 야권통합을 모색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1993년 7월과 9월 통일국민당·새한국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9월에는 새 교섭단체의 명칭을 ‘정치개혁연합’ (약칭 정개련)으로 잠정 결정하는 등 상당한 진

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자유당의 무소속 의원 영입과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나. 통일국민당과의 신설합당: 신정치개혁당의 소멸

1994년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두고 범야권의 통합작업이 활기차게 전개된 한해였다. 연초부터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야권통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범야권통합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신정치개혁당은 연초 민주당 중심의 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종 대표는 1994년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지난 12월 말 이종찬 대표로부터 무조건 민주당에 들어가지는 제의를 받았으나 아직 양김구도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오히려 통일국민당·무소속과 함께 하는 제3세력 신당결성에 더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1994년 들어 신정치개혁당 박찬종 대표는 통일국민당 한영수·임춘원 의원과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교섭단체 결성뿐만 아니라 신생정당 결성을 위한 ‘합의문’까지 덧붙여 도장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월 8일에는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통일국민당·새한국당·신정치개혁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는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임시국회 직전인 2월 14일쯤 출범할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 추진은 통일국민당의 내부 상황과 새한국당 및 무소속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더불어 각 정당의 내부 이견 및 정당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범야권통합도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치개혁당은 제3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 특히 정계복귀와 관련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1994년 5월 6일 대전일보에 게재된 회견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자 신정치개혁당 박찬종 대표는 5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직도 양김구도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신 양김시대’ 청산을 위한 제3세력의 정치세력 출범을 촉구하였다.

이후 박찬중 대표는 5월 26일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와 회동하여 양당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5월 30일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하였다. 갑작스러운 합당선언으로 양당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설이 언급되는 가운데 신정치개혁당은 6월 9일 신속하게 통일국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합당수임기구를 대표최고위원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신정치개혁당은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통해 합당을 위한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7월 8일 신설합당하여 '신민당'으로 재출범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박찬중 의원이 이끌던 '정치개혁협의회'가 김동길 연세대 교수가 이끌던 '태평양시대위원회'와 함께 새한국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던 중 태평양시대위원회가 통일국민당과 통합을 선언한 데 반발하여 1992년 3월 독자적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결국 신정치개혁당은 창당의 원인을 제공했던 태평양시대위원회, 통일국민당과 합당하는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 신민당으로 통합되면서 2년 4개월여 만에 소멸되었다.

5. 새한국당(1992. 11. 19~1995. 3. 7)

가. 야권통합 노력과 한계

새한국당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통일국민당과 선거 후 합당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는 대통령후보를 사퇴하고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정주영 후보는 낙선하였고, 이후 통일국민당은 새한국당과의 통합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치부하면서 합당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1993년 1월 6일 “통합선언 당시 통합조건으로 50억 원을 주었다”는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의 발언으로 ‘50억 수수설 파문’이 일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한국당 김기선 씨 등 3인은 거짓사실 유포를 이유로 정주영 전 통일국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들은 이후 정주영 전 통일국민당대표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새한국당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6월 22일 고소를 취하하였다.

어려움 속에 1993년을 맞은 새한국당은 3월 당사를 종로구 인사동에서 동숭동으로 이전하며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종찬 대표와 장경우 의원 등 단 2명의 의원만을 보유한 군소정당의 현실적 한계 속에 두드러진 활동은 보이지 못하였다. 1993년 4월과 6월 두 차례의 국회의원보궐선거가 6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단 한 명도 공천하지 못하였다. 이후 새한국당은 7월 16일 이종찬 대표가 민주당 이기택 대표,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와 함께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처음으로 야3당 대표회담을 갖고 '야권공조'와 8월 춘천·대구 동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연합공천 등 4개항에 합의하면서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월 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한 민주당 후보는 모두 낙선하고 말았다.

이후 야3당 대표는 정기국회를 맞아 9월 28일 회동을 갖고 야권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주 단위로 3당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고 개혁입법처리에 공조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1994년 1월 8일 대표회동에서는 '범야권 총결집'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등 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새한국당은 활로 모색을 위한 야권통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나. 민주당에 흡수합당

1994년 야권은 전반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다양한 통합논의와 갈등을 표출하였다. 새한국당 또한 군소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야권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통합은 각 정당의 이해와 입장 차이, 그리고 당내갈등으로 인하여 쉽게 진척을 이루지 못하였다.

야권통합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야세력까지를 포함하는 야권 대통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결합하여 제3의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권통합 방법에 있어서는 각 정당간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차이와 갈등이 표출되었고, 더불어 민주자유당

이 무소속 영입을 시도하면서 야당통합은 두 가지 모두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94년 7월 8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전격적으로 신설합당하여 신민당으로 출범하면서 야권통합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새한국당은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합당 직후 1994년 8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선택하였다.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신민당 등 야당이 2곳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도 8월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보선정국 다음단계는 야권통합' 임을 주장하며 야권통합에 대한 새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계기로 야권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 정당의 당내갈등이었다. 범야권통합 논의 과정 중에 전격적으로 신설합당된 신민당은 출범 이후 전당대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당내갈등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민주당 또한 당권경쟁과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차이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파국으로 치닫던 민주당의 내분사태가 1995년 1월 극적합의를 통해 수습되면서 야권통합 양상은 새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재야의 통일시대국민회의의 통합으로 전개되었다. 신민당의 경우에는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통합협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새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협상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새한국당 장경우 의원은 야권통합에 앞서 이미 민주당에 입당한 상태였고, 이종찬 대표만이 남아 신민당 등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²⁾ 신민당의 심각한 당내 갈등으로 통합협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새한국당과 민주당은 1995년

12) 새한국당은 1994년 10월 4일 장경우 의원이 탈당하여 사무총장이 공석이 되자 백청수로 변경 등록하였다.

2월 10일 야권통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 통합선언 후 협상'에 합의하였다. 또한 2월 13일 통합을 위한 1차 실무회의에서는 통합정당의 당명을 민주당으로 결정하는 한편 사실상의 흡수통합에 합의하였다.

이에 새한국당은 1995년 2월 18일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중앙위원회가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후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고 흡수합당과 새한국당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후 새한국당은 논란이 되었던 지분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마무리하고, 1995년 2월 24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재야의 통일시대국민회의와 함께 야권 3자 통합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흡수통합되었다. 이로써 새한국당은 이종찬 대표가 1992년 11월 민주자유당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이후 탈당하여 창당한 이래 2년여의 활동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6. 기타정당

가. 신민주당(1992. 11. 6~2004. 2. 13: 1993. 1. 18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 잦은 지도부 변경

신민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2년 11월 '화합정치'의 이념을 기치로 내걸고 허경영을 대표로 공식 출범한 진리평화당이 1993년 1월 4일 당명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당이다. 이 과정에서 신민주당은 기존의 당헌을 전면 개정하고 당규를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부총재단을 비롯한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당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원내의석을 갖지 못한 소규모 군소정당으로 두드러진 정당활동을 펼치지 못하던 신민주당은 강령과 당헌·당규뿐만 아니라 당명을 재차 변경하며 장기간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1993년 가장 큰 체제 변화는 9월 이루어진 강령 및 당헌 개정이었다. 이 중 강령과

관련하여서는 연대적 사회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청정과 자비’에서 ‘의식개혁’으로 변경하였다. 당헌에 있어서는 당의 목적에 ‘조국 평화통일’ 완수와 ‘민족의 자존과 번영’의 실현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의원으로 표기되는 당내 직위를 모두 ‘의원’으로 수정하였다.

1994년 4월에는 대대적인 지도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1994년 4월 6일 염중훈 총재를 비롯한 부총재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노해택을 총재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4월 28일 신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정대영을 새로운 총재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정대영 총재도 1994년 5월 23일 사임하면서 또다시 노해택이 당무회의 의결에 의해 총재로 임명되는 등 단기간에 연거푸 대표자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2)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신민주당은 1995년 4월 1일 통일한국당(약칭 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진리 평화당으로 출범하여 두 달여 만에 신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명변경과 함께 개정된 기본정책·당헌·당규에서는 명칭 변경 이외에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내용에 있어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당명변경 이후에도 통일한국당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1996년 1월 31일 총재를 노해택에서 신정일로 변경하고 노해택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22일 대표자는 신정일에서 노해택으로 변경되었고, 3월 5일 또다시 대표자가 노해택에서 신정일로 변경되었다. 이후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던 통일한국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7년 10월 23일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였다.

이후 통일한국당은 1997년 10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신정일 총재를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여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0월 31일 대구시지부 결

성대회에서 금품을 주고 대학생 등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신정일 후보는 ‘21세기 통일한국의 통일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일 사상을 바탕으로 온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이룩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으나 득표율 0.2%를 얻고 낙선하였다.

나. 친민당(1992. 11. 19~1996. 4. 13)

친민당은 1992년 11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었으나 대통령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군소정당이였다. 두드러진 정당활동 없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친민당은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명의 지역구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유효투표총수의 0.0029%에 해당하는 571표만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친민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96년 4월 13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다. 대한정의당(1992. 11. 19~1994. 2. 15)

1992년 11월 창당된 대한정의당은 다른 군소정당과 달리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입후보시키는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군소정당의 한계를 보였고, 대통령선거 이후 1년 동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정의당은 1994년 2월 7일 중앙당무위원회를 열고 당의 실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정의당은 깨끗한 정치, 법과 정의의 실현 등 창당취지와 달리 그동안 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조직관리 측면의 현실적 문제점과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또한 창당취지에 부응치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당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정의당은 1994년 2월 14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재적 대의원 80명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한 당의 자진해산건을 의결하였다. 이어 1994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자진해산신고를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 39조 자진해산 규정에 따라 대한정의당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대한정의당은 창당 후 2년 2개월여 만에 소멸되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2절 신설정당

1. 신민당(1994. 7. 8~1995. 5. 31)

가. 합당 배경과 과정

1994년 야권은 국회의원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권능력을 갖춘 강력한 야당의 결성을 위해 범야권의 총결집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범야권대통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93년 7월 이기택 민주당 대표·김동길 통일국민당 대표·이종찬 새한국당 대표 등 야3당 대표가 회동을 시작한 이후 1994년 1월 초까지 모두 네 차례의 회동을 갖고 야권통합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야3당은 야권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범야권통합 협상은 각 정당의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쉽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특히 야당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신정치개혁당의 경우에는 반민자당·비민주당 성향의 제3세력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어 범야권통합의 성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1994년 2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대통합과는 달리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무소속의원 등이 제3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흐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신정치개혁당 박찬종 대표와 통일국민당 한영수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임시국회 전 원내교섭단체 결성, 임시국회 후 정당 출범’을 위해 통일국민당, 새한국당, 신정치개혁당 및 무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이어 보도하였다.

야권통합이 민주당 중심의 범야권 대통합, 군소정당과 무소속 중심의 제3교섭단체 결성 등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3월 15일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야당건설을 위해 통일국민당, 새한국당, 신정치개혁당 등 제도권뿐만 아니라 재야 및 시민단체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범야권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군소야당들의 반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는 1994년 3월 13일 무소속 양순직·임춘원·김진영 의원 등과 만나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제3당 창당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와도 수차례 접촉하며 제3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4월 3일에는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가 “국민당과는 이미 원내교섭단체를 갖춘 제3당의 복원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당내에 제3당 강화를 위한 기획단을 발족시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만이 민주당 중심의 야권강화론을 표방할 뿐이었다.

이처럼 야권통합 양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선적 움직임을 보인다 제3원내교섭단체 결성이 추진되면서 복선구조로 변화되는 가운데 4월 16일 이기택·김동길·이종찬 등 야3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범야권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거대여당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야당의 구축과 1995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통합계획은 동상이몽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도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국민당의 당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외부적으로는 김동길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지배적 양상이었다. 4월 15일 실시된 통일국민당 전국 지구당위원장 연수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이 당 재건의 돌파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김동길 대표가 야3당 대표회담에서 야권통합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범야권대통합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던 5월

11일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 양김시대 청산' 과 민주당을 제외한 통일국민당·새한당·신정치개혁당의 제3세력화를 주장하며 반민자·비민주 제3세력의 결집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와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는 1994년 5월 26일 회동에서 양당 합당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야권통합의 기본 틀은 급변하였다. 그동안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여러 측면의 통합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분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표회동에서 김동길 대표가 박찬중 대표의 공동대표를 보장하고, 박찬중 대표는 지분배분 문제를 김동길 대표에게 일임하면서 합당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합당 선언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대통합 원칙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합당 선언 이틀 후인 5월 28일 민주당, 통일국민당, 새한국당 등 야3당 대표는 다시 회동을 갖고 야권대통합을 계속 추진해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는 동시 통합에 앞서 신정치개혁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합당이 종결이 아니라 야권통합의 과정임을 시사하였다.



▲ 통일국민당·신정치개혁당 양당통합선언 기자회견(1994년 5월 30일).

이후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당무회의를 통해 통합방침을 확정짓고, 1994년 5월 30일 국회에서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와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간의 당 대 당 합당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들은 통합선언문에서 “개방과 무한경쟁이라는 세계조류와 통일시대를 맞아 실종된 정치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통합한다. (……) 야권이 넓은 사고와 타성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 그 동안의 잘못된 정치노정을 겸허히 반성하고 진취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모아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나. 정당등록(신설합당)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합당선언으로 야권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자 신설합당 되는 통합정당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탄생할까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초점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였다. 합당선언 상황에서 양당의 국회의원 수는 통일국민당이 12명, 신정치개혁당이 1명으로 13명에 불과하였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명의 의원을 더 필요로 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의원영입에 나선 결과 1994년 6월 7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합당을 전제로 양순직, 임춘원, 박규식, 김진영의원 등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소속의원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합당선언 이후 양당은 본격적으로 합당절차를 진행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6월 9일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하는 한편 합당의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기구 및 기타 위임사항에 대해 대표최고위원인 박찬중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일국민당 또한 6월 29일 정기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신정치개혁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는 한편 당명을 신민당으로 변경하고 당무회의를 합당 수임기구로 지정하는 등 합당 관련 사항을 의결하였다. 이후 양당은 총 12명의 합당 실무협상기구를 구성하고 합당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갔다. 실무협상기구를 통해 양당은 7월 4일 당헌·지도체제 등에 관해 합의하였고, 7월 6일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을 의

결하였다.¹³⁾ 합당수입기구 합동회의는 양당이 새로운 당명인 신민당으로 신설합당할 것을 의결하는 한편 9월 중 개최하는 통합전당대회까지 통일국민당 김동길 대표최고위원과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최고위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또한 최고위원은 통일국민당 최고위원 9명 전원을 유임하는 한편, 추가 선임은 공동대표에게 위임하였다.

합당 수입기구 합동회의를 통해 합당이 의결된 이후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김동길과 박찬중을 공동대표로, 임춘원을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로 하여 1994년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합당 등록을 신청한 후 7월 8일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등록신청 된 신민당의 당원수는 법정당원 10만 535명과 일반당원 386만 4,081명을 합하여 총 387만 4,616명이었다. 이 중 신정치개혁당의 당원수는 1만 8,761명인데 비해 통일국민당의 당원수가 385만 5,855명으로 통일국민당 당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지구당의 경우에는 양당이 완전한 조정을 이루어내지 못해 정당법의 정당등록 규정에 의해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 등록하도록 조치되었다.

신민당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 등록 내용 | | | | | |
|-----------------|--|--------------|-------|-----------|----------------|----------------|-------------|
| 대 표 자 | 김동길 · 박찬중 |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 | 임춘원 |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 | | | | | |
| 당원수 | 3,874,616명 (법정당원수 10,535명, 일반당원수 3,864,081명) | | | | | | |
| 수입기구 합동회의 | 1994년 7월 6일 12시(통일국민당사), 88명 중 72명 참석 | | | | | | |
| 합당하는 정당의 합당결의기관 | | | | | | | |
| 정당명 | 등록 연월일 | 대표자 | 지구당 수 | 합당결의전당대회 | | | |
| | | | | 일자 | 장소 | 성원상황 | 권한위임 (수입기관) |
| 통일국민당 | 92. 2. 10. | 김동길 | 200 | 94. 6. 29 |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 986명 중 830명 참석 | 당무회의 |
| 신정치개혁당 | 92. 3. 4. | 박찬중 | 63 | 94. 6. 9.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575명 중 432명 참석 | 대표최고위원 |

13) 통일국민당이 정기전당대회에서 당명을 신민당으로 변경한 것은 통합선언 이후 신당 명칭에 대한 양당의 공동공모 결과 신민당이 다수를 점하여 양당의 '당명심사실무회의'에서 신민당으로 결정하였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법적 통합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정치개혁당 측의 양해 아래 통일국민당의 당명을 신민당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합당 전 통일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지구당 현황

| 구분 | 통일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 개편대회대상 지구당 |
|--------|---|-------------------------|--|
| 합계 | 145 | 8 | 55 |
| 서울(42) | 종로구, 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 중랑구갑, 중랑구을, 성북구을, 노원구갑, 노원구을, 은평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갑, 서대문구을, 양천구을, 강서구갑, 강서구을, 구로구갑, 구로구을, 구로구병, 영등포구갑, 영등포구을, 동작구갑, 동작구을, 관악구갑, 관악구을, 서초구을, 강남구갑, 송파구갑, 강동구갑, 강동구을(30) | 도봉구을(1) | 용산구, 성동구병, 동대문구갑, 동대문구을, 송북구갑, 도봉구갑, 마포구갑, 마포구을, 양천구갑, 서초구갑, 송파구을(11) |
| 부산(16) | 중구, 동구, 부산진구을, 동래구갑, 동래구을, 남구갑, 남구을, 북구갑, 북구을,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12) | |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4) |
| 대구(9) | 중구, 서구갑, 서구을, 수성구갑, 달서구갑, 달서구을(6) | 남구, 수성구을(2) | 동구갑(1) |
| 인천(7) | 남구갑, 남구을, 북구을, 서구(4) | 남동구(1) | 중구 · 동구, 북구갑(2) |
| 광주(6) | 동구,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6) | | |
| 대전(5) | 동구갑, 동구을(2) | | 중구, 서구 · 유성구, 대덕구 (3) |
| 경기(24) |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장안구, 성남시수정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송탄시 · 평택시, 동두천시 · 양주군, 안산시 · 용진군, 평택군, 오산시 · 화성군, 파주군, 연천군 · 포천군, 가평군 · 양평군(16) | | 성남시중원구 · 분당구, 안양시만안구, 부천시소사구, 시흥시 · 군포시, 고양시, 하남시 · 광주군, 용인군, 안성군(8) |
| 강원(8) | 춘천시, 강릉시, 명주군 · 양양군, 홍천군, 춘천군 · 양구군 · 인제군, 횡성군, 원주군, 속초시, 고성군(7) | | 영월군 · 평창군(1) |
| 충북(8)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괴산군(2) | 충주시 · 증원군, 진천군 · 음성군(2) | 청주시갑, 청주시을, 제천시, 청원군(4) |
| 충남(12) | 공주시 · 공주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홍성군, 예산군, 천안군(7) | 논산군(1) | 천안시, 대천시 · 보령군, 온양시 · 아산군, 서산시 · 서산군 · 태안군(4) |
| 전북(14) | 군산시, 이리시, 정주시 · 정읍군, 남원시 · 남원군, 원주군,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임실군 ·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12) | |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2) |
| 전남(19)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 나주군, 담양군 · 장성군, 곡성군 · 구례군, 동광양시 · 광양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 원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 영광군, 신안군(15) | | 목포시, 여천시 · 여천군, 승주군, 해남군 · 진도군(4) |
| 경북(18)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 영풍군, 영천시 · 영천군, 달성군 · 고령군, 군위군 · 선산군, 의성군, 안동군, 영일군 · 울릉군, 경주군, 경산시 · 경산군 · 청도군, 성주군 · 칠곡군, 예천군(15) | | 김천시 · 금릉군, 청송군 · 영덕군, 영양군 · 봉화군(3) |
| 경남(18) | 창원시갑, 울산시중구,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 진해시 · 창원군, 삼천포시 · 사천군, 김해시 · 김해군, 진양군, 의령군 · 함안군, 창녕군, 울산군(11) | 양산군(1) | 창원시을, 울산시남구, 진주시, 충무시 · 통영군 · 고성군, 밀양시 · 밀양군, 남해군 · 하동군, 산청군 · 함양군, 거창군(8)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 전 문 〉

우리 신민당은 안으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 밖으로 인류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갈 합리적 역량을 갖춘, 민족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이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적 시민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시장경제, 정의로운 시민복지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성, 계층성, 세대성의 근원인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여, 모든 한민족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국민시대를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1. 민족적 시민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민적 정치세력의 결합체
2. 깨끗한 정치, 생산정치, 책임정치, 국민정치로 국정개혁
3. 신뢰구축과 민족통일성 회복으로 통일을 주도
4. 합리적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복지 향상, 경제정의 실현
5.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질서 준수,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복지시민사회 건설
6. 자율성과 책임의식 고양, 시민공동체 의식 배양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성숙한 시민문화, 창조적인 민족문화 창달
8.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 기여, 21세기 과학 선진국 실현
9. 평등한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환경 조성
10.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경쟁과 당내갈등

신민당은 출범 직후 1994년 8월 2일 실시된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 중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 옥중에 있던 박철언의 부인 현경자를 공천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두 선거구에서는 10%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저조한 결과를 보여 합당의 파급효과가 현실로 증폭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보궐선거 이후 오히려 당권경쟁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휘말려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내갈등은 합당 당시 당헌 부칙 1조에 규정한 ‘1994년 9월 통합전당대회 개최’ 로부터 시작되었다.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은 합당 당시 합의서 1항을 통해 1994년 9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각서에도 최초의 통합전당대회는 수임기구합동회의 의장단에 전권을 주며 최초의 전당대회에서 새로이 의장단을 구성한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보궐선거 후 전당대회소집을 앞두고 신민당은 전당대회의 성격에 대해 이

견을 보이며 김동길 대표 측과 양순직 최고위원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김동길 대표는 전당대회 성격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규정하고 대표 경선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양순직 최고위원은 당 체제 개편을 주장하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권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김동길 대표와 양순직 최고위원은 8월 27일 최고위원·고문·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대표경선 여부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이며 갈등을 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순직 최고위원은 합당 전 ‘대권후보 김동길 - 당권 양순직 체제’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비밀각서가 있었음을 공개하였다. 이후 김동길 대표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대표직 사퇴서를 박찬중 대표에게 제출하고 잠적하였다. 그러나 9월 5일 다시 대표직 복귀를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김동길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9월 9일 당무위원 50명의 인사를 단행하여 당무회의를 장악하였고, 9월 17일 열린 제1차 당무회의를 통해 전당대회를 1995년 3월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양순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비주류 측은 전당대회 연기 결정과 무관하게 전당대회 날짜를 10월 10일로 결정하는 등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한편 박찬중 공동대표를 대표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임춘원 사무총장은 중앙상무위원 133인의 소집요구 서명을 받아 9월 26일 중앙당 총무국에 전당대회소집요구서를 접수하고 ‘전당대회의장 정상구’ 명의의 전당대회 개최공고를 언론에 게재하였다.¹⁴⁾

이에 김동길 대표와 주류 측은 임춘원 사무총장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10월 10일 전당대회 저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임춘원 사무총장은 9월 26일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1995년 3월로 미룬 전당대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며 사무총장의 사

14) 김동길 대표 측에서는 합당수입기구 합동회의 의장이었던 정상구 전 최고위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고, 10월 9일 중앙일보를 통해 신민당 당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지구당 위원장 일동 명의로 10월 10일 임시전당대회의 불법을 알리는 광고기사에 자필서명 된 정상구의 불법 전당대회 해명서를 함께 실었다(동아일보, 1994년 10월 9일자).

퇴를 선언하는 한편 김동길 대표의 사임을 촉구하였다.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하는 가운데 김동길 대표 측은 9월 30일 2차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당무회의가 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한편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 의장 정상구는 현 신민당 전당대회의장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10·10 전당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불법 전당대회 참석 시 엄중 징계조치할 것임을 경고하였다.¹⁵⁾

그러나 10월 10일 박찬중 대표, 임춘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은 김동길 공동대표 중심의 주류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전당대회 강행과 저지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였고, 결국 전당대회는 난투극 끝에 비주류 측이 박찬중을 단독 당 대표로 선출한 후 폐회되었으나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이 난무하면서 ‘각목 전당대회’라는 오명을 남겼다.¹⁶⁾



▲ 신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목을 든 주류 측 청년들이 당사를 지키고 있다(1994년 10월 10일).

15) 당시 임시전당대회 소집공고에 대한 안내문과 의결사항 통보는 공동대표 김동길·박찬중의 명의로 직인어 찍혀 발송되었고, 이후 김동길 대표는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16) 비주류 측은 폭력배 100여 명을 동원하여 주류 측이 대회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주류 측은 용인대 체육학과 학생 60여 명을 동원하여 전당대회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폭력배를 동원한 Kickback회장 어준기가 구속되고 용인대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폭력 전당대회 이후 유증은 상당히 심각하였다. 10월 10일 전당대회 이후 신민당은 대표최고위원 박찬중 명의로 당 대표 변경을 포함한 중앙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인 10월 12일 김동길 대표 측은 임시전당대회 무효확인소송과 중앙당등록변경신청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양측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신민당의 중앙당변경등록 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당 당헌상 정상구를 전당대회의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임시전당대회는 당헌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변경등록신청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시전당대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0월 10일 임시전당대회의 적법성은 부인되었다.

이후 김동길 대표 측과 양순직 최고위원 측의 ‘당권보장 양해각서의 진위시비’는 신민당 내 갈등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권보장 양해각서의 진위시비’는 전당대회 직후 10월 11일 김동길 대표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합의서는 임춘원 씨가 조작한 것이다. (……) 원본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며 문제의 각서에 대한 뒤늦은 반박을 재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양순직 의원은 다음 날 문제의 합의각서 원본을 공개하고 김동길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김동길 대표는 또다시 “나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위조임을 확신하며 위조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재반박하였다. 그러나 재반박에도 불구하고 양순직 최고위원은 10월 17일 김동길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처럼 양측이 이전투구식 양태를 보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11월 5일 검찰은 문제의 각서에 있는 서명이 김동길 대표의 친필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김동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정계에서 떠나게 하려는 음모라고 반박하였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10·10 전당대회 이후 벌어진 당내 세력다툼은 양측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다. 김동길 대표 측은 11월 9일 당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대표 박찬중과 임춘원 의원에 대해 2년간 당원권을 정

지하고 지구당위원장 등 당직자 37인을 제명하는 중앙당당기위원회의 상벌안을 승인하며 반격을 가하였다. 또한 당헌개정을 통하여 지도체제를 공동대표최고위원제에서 대표최고위원제로 변경하고 김동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한 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상황이 반전되자 이번에는 박찬중 대표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14일 박찬중 대표는 11월 9일 개최된 당무회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집된 것으로 불법이며, 불법 당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당헌과 단독대표로의 변경은 무효라는 소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김국환, 김병환, 송차갑, 김동주 등 지구당위원장 4명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이유로 김동길 대표와 박구인 사무총장을 고발하였고, 16일에는 김국환 외 31명의 당원이 정당대표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당무회의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김동길 대표는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접수하여 당헌 및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공동대표 동반사퇴와 제2의 당내갈등

신민당의 당내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4일 신민당의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보류를 결정하였다. 1994년 8월 박찬중 대표는 당내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고보조금 수령자로 등록돼 있는 박구일 사무총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박찬중·김동길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수령인을 지정해 오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민당이 수령할 국고보조금은 약 7억 2,000만 원이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신민당 당권싸움의 원인 중 하나였던 반면 갈등 속에서도 당을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조금 지급중단은 당 존속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고, 신민당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국고보조금 지급중단으로 당내갈등에 대한 비난여론과 당 존속의 위기감이 고조

되자 당내에는 중도파를 중심으로 갈등봉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제기된 대안은 두 공동대표가 동반사퇴하고 새로이 당을 정비하자는 것이었다. 위 기상황이 극단에 이르자 김동길 대표 측은 박찬중 대표 측에 동반사퇴를 제의하였고, 박찬중대표도 이를 수용하였다. 결국 박찬중·김동길 공동대표는 12월 15일과 16일 연이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동대표 사표처리와 대표 권한대행 선출 과정은 오히려 제2의 갈등을 불러왔다. 두 대표의 동반사퇴 이후 1994년 12월 19일 열린 제7차 당무회의에서는 박찬중 대표의 사퇴서만이 수리되었고, 이어 12월 21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동대표의 사표처리 문제와 박찬중 대표 권한대행 선출 문제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결국 최고위원회의는 결론 없이 유회되었으나 다음 날 중도파로 분류되던 유수호, 김용환, 조순환 의원이 당권경쟁에 따른 당 내분을 이유로 탈당하였고,¹⁷⁾ 이를 계기로 신민당 내분은 또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국회의원 3명의 탈당으로 원내의석이 15석에서 12석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12월 23일 재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류 측은 권위된 대표최고위원의 권한대행으로 김복동을 선출하였고, 신민당은 1995년 1월 11일 대표최고위원을 박찬중에서 김복동으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찬중, 양순직 등 13인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이 무효라는 이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반발하였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9일 신민당의 중앙당변경등록신청을 각하하였다. 최고위원회의체 구성상에 치유할 수 없는 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각하 이유였다. 중앙선

17) 세 의원은 한결같이 "해보는 데까지 해봤으나 결코 당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라고 탈당 소견을 밝혔다. 김동길 대표 측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당무회의는 박찬중 대표의 사퇴서만 수리하였고, 김동길 대표의 사퇴서는 "김 대표의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며 유보하였다. 또한 양순직 최고위원 등 비주류 측이 제기한 김동길 대표에 대한 소송취하를 사퇴서 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비주류 측에 내린 징계조치는 철회하지 않았다. 한편 비주류 측은 양순직 최고위원을 대표권한대행에 지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내분 수습 실패와 당권싸움의 재개가 중도파를 탈당에 이르게 만든 것이었다.

18) 이의서에는 "김복동 최고위원을 권한대행자로 선출하고, 사퇴서 제출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동길 전 공동대표를 존속키로 한 결의는 불법무도한 행위였으며,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고 당무위원이 아닌 자가 참석한 당무회의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인 바 이에 따른 신민당 공동대표 권한대행변경등록신청은 사실무효라는 이의서를 제출하니 각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거관리위원회는 제7차 당무회의가 정당한 소집권자인 공동대표최고위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당무회의에서 선출된 문창모, 이필선, 박철언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자격이 없는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당헌상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권한대행자의 선출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비주류와 중도계로 분류되던 한영수·양순직·박한상·박영록 등 최고위원 4명은 1995년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동길·박찬종 공동대표의 사퇴서를 일괄수리하고, 한영수·박한상 두 최고위원을 새 대표권한대행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주류 측이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중앙당사의 출입문을 봉쇄해 회의장소를 국회 귀빈식당으로 변경해야 했다. 또한 한영수 등 비주류 측 최고위원들이 박구일 사무총장에게 대표등록변경 신청에 필요한 당인과 직인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다.

한편 최고위원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도 김복동 최고위원 중심의 주류 측은 “양순직·박철언·김동길·박찬종씨 등의 최고위원 자격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최고위원 수는 비주류와 중도파가 주장하는 6명이 아니라 9명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원미달에 의한 최고위원회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또한 당의 공식결정은 최종적으로 당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최고위원회의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자격에 논란이 없는 6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김복동, 정상구를 제외한 4명이 모인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최고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1995년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주류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최고위원 김복동 외 당무위원 21명은 1월 26일 권한대행자를 선출한 최고위원회에 대한 이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의를 제기한 요지는

정당한 소집권자인 의장이 아닌 박영록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점,¹⁹⁾ 김동길·박찬중 대표최고위원은 당 대표직만 사퇴한 것이지 최고위원까지 사퇴한 것이 아니므로 정족수는 9인이라는 점, 양순직은 당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의결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최고위원회의 소집통지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27일 김동길·박찬중은 서면으로 대표최고위원회의 권한대행자 선출에 이의가 없다는 지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2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한영수·박한상 권한대행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1994년 10월 10일 폭력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개되어 왔던 당권경쟁은 수습국면을 맞게 되었다.

마. 김복동 대표체제의 출범과 자유민주연합과의 신설합당: 신민당의 소멸

장기간의 당내갈등을 거친 신민당은 1995년 2월 한영수·박한상 권한대행체제가 공식출범하면서 사분오열된 당내 정비와 야권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야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탈당 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야권통합은 주요 정치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대령지도부는 '선 체제정비 후 통합협상'의 원칙을 내세웠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는 3월 7일 전당대회를 소집하여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이와 함께 야권통합수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신민당의 야권통합 논의는 다소 미루어지게 되었다.

3월 7일로 예정되었던 신민당 전당대회는 한 차례 연기된 이후 3월 27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당대회에서 신민당은 당헌을 개정하여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였고, 김복동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당 대표 선출에서는 김복동·양순직 의원과 정상구·박한상 전 의원 등 4명이 출

19) 박영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요건 미구비를 이유로 무효결정을 내린 1994년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자이므로 최고위원회 소집권자인 의장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마하여 경선을 실시하였다. 1차 투표에서 김복동·양순직 의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1차 투표 직후 양순직 의원이 후보사퇴를 선언하여 김복동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임춘원, 한영수, 조중연, 정상구, 박영록, 이필선 등 6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혹은 자유민주연합과의 통합을 위한 야권통합 수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김복동 대표도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여론을 수렴해 6월 지방선거 전에 야권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며 본격적인 야권통합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민당의 당헌 개정과 대표자 변경은 1995년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었다.



▲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김복동 의원(1995년 3월 27일).

신민당 주요 간부 변경(1995. 2)

| 직책 | 기존 | 변경 |
|------|----------------|------------------------------|
| 대표자 | (권한대행) 박한상·한영수 | 김복동 |
| 최고위원 | - | 임춘원, 한영수, 조중연, 정상구, 박영록, 이필선 |

개정 당헌 주요내용

| 구분 | 기존 | 개정 |
|----|--|---|
| 전문 | 우리 신민당은 (……) 민족적 시민 민주주의와 (……) 정의로운 시민복지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성, 계층성, 세대성의 근원인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여, (……) 국민시대를 선도할 것임을 (……) 밝힌다. | 우리 신민당은 (……) 민족적 민주주의와 (……) 정의로운 시민복지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계층, 세대의 갈등을 극복하여 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모든 한 민족의 (……) 통일시대를 선도할 것임을 (……) 밝힌다. |
| 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기구에 국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제위원회위원장을 당무위원에 포함 ○당무회의의 대행기능을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대회가 열리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당헌 채택과 개정, 당 강령·선언 및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당결의안 채택, 기타 중요 당무의 의결과 승인, 정당대회 선출 최고위원의 권위 또는 유고 시 그리고 전당대회 이외의 최고위원 선출이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 선출 ○정기전당대회 일정을 2년마다 9월 중에서 2년마다 3월 중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전당대회의 경우 대표최고위원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시 전당대회의장은 즉시 소집하도록 함 | |
| 부칙 | ○다음 정기전당대회는 1997년 3월 중에 개최 | |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복동 대표체제의 출범으로 당내갈등이 일단락되자 신민당은 본격적인 통합협상을 시작하였다. 1차적인 통합논의 대상은 민주당이었다. 김복동 대표가 대표선출 당시 야권통합을 기치로 내세웠고, 민주당 또한 4월 10일까지 통합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면서 신민당과 민주당의 통합논의는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신민당은 1995년 4월 3일 김복동 대표를 위원장으로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²⁰⁾ 민주당 또한 4월 6일 이기택 총재를 위원장으로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양당은 실무대표회담과 실무협상을 통해 당 대 당 통합, 당명 민주당, 이기택·김복동 공동대표제 등 3대 원칙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행해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민당은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으로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표출하였고, 통합추진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양상을 보였다. 통합논의 초반 1995년 3월 30일 김복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수임기구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최고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첫 통합실무

20) 신민당 야권통합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김복동 대표 외 임춘원, 한영수, 조중연, 정상구, 박영록, 이필선, 박구일, 서선호, 나이균, 이원범, 임광순, 고병현, 이병희, 강병진으로 구성되었다.

회담 개최 전날 당무회의에서는 김동길·조일현·박구일·문창모·현경자·강부자 의원 등 현역의원 6명이 “통합선언에 앞서 내각제 등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와 신민당 당명 관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이견을 보였다.

당내문제 이외에 양당간 지분배분 문제도 협상과정의 중요한 장애가 되었다. 양당은 지분배분에 대한 협상 결과 민주당 7, 신민당 3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민당 지분에 대해 전 지역을 총괄하여 30% 배분을 주장한 반면, 신민당은 서울 및 호남지역 지분에 있어서도 30% 배분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지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민주당은 통합의 진척을 위하여 ‘선 통합선언’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은 내부적으로 통합선언 전 지분문제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는 신중파의 반대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다 4월 20일에서 선 통합선언을 수용하였다.



▲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신민당 김복동 대표가 양당 합당을 선언한 후 악수하고 있다(1995년 4월 21일).

이에 따라 이기택 총재와 김복동 대표는 4월 2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정치적 통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통합선언 3일 만에 양당은 공동대표제 문제로 충돌하였다. 민주당은 법적공동대표제를 통합전당대회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신민당

은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해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두고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결국 신민당은 4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과의 통합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였고, 대외적으로 통합선언까지 발표한 민주당과 신민당의 통합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민주당과 신민당의 통합결렬은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과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통합무산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신민당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자유민주연합에 통합을 제의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전격적으로 통합을 합의하였다. 5월 6일 김복동 대표가 김종필 총재를 방문하여 협상을 논의하는 등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통합을 진행하던 양당은 5월 9일 완전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통합선언에 앞서 신민당 내부의 통합반대파는 심하게 반발하였다. 통합추진회의에서는 5월 11일과 12일 연이어 통합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격론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이로써 예정된 통합선언도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복동 대표는 5월 1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불참한 통합반대파 위원 2명의 자격을 박탈한 후 새로운 추진위원을 임명하여 통합에 찬성하는 9명의 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을 의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 당 통합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어 1995년 5월 2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합당등록을 신청하였다.

내부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이 선언되자 임춘원 최고위원 등 신민당 내 통합반대파는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의결이 “김복동 대표 측이 통합추진위원 2명을 자파 인사로 불법 교체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통합선언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합반대파는 박영록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민당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정당 합류에 반대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한편, 통합추진에 맞서 독자적인 임시전당대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통합반대파 통합추진위원 8명은 합당금지 가처분신청과 김복동 대표 직무정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신민당은 1994년 10월 10일 전당대회로 인하여 불거진 당

권갈등 이후 또 한번 당내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연합과의 정당합당 등록신청이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리되면서 신민당은 신설합당한 자유민주연합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1994년 7월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으로 출범한 신민당은 끊이지 않는 당내갈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10개월여 만에 소멸하였다.

2. 자유민주연합(1995. 4. 3~1995. 5. 31)

가. 창당배경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종필이 탈당하여 1995년 4월 3일 창당한 정당이다. 3당합당을 통해 창당된 민주자유당은 출범 이후 당내 계파 간 당권 경쟁으로 계속하여 당내갈등 양상을 보였다. 1990년 말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당내·외적으로 퇴진압력을 받아왔고, 결국 1995년 1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종필 대표최고위원과의 극비회동을 통해 2선 퇴진을 통고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의 지도체제 갈등은 종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1월 19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1월 27일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회동하여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하는 신당창당에 합의하는 등 신당창당 준비에 돌입하였다. 결국 김종필 전대표최고위원은 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자유당 탈당선언과 함께 내각제를 기본 강령으로 한 신당창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종필 전대표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3당합당 정신이 훼손된 이상 김영삼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당창당과 관련하여 “대통령중심제는 독선과 독단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 의원내각제를 실시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전횡의 위

협성을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의원내각제 구현이 신당의 주요 강령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 창당준비위원회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의 창당선언을 시작으로 신당 창당에 동참한 인사들은 창당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당의 이름을 ‘자유민주연합’으로 결정하는 등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종근, 김용환, 이금규, 구자춘, 조부영, 유수호, 정태영, 김진영 등 현역의원 9명이 신당 창당에 동참하였다. 세력을 규합한 자유민주연합(가칭)은 1995년 2월 21일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박준규 전 국회의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완료하였다.

자유민주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 대표자 | 박준규 | 회계책임자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1) 2002호 | | |
| 발기인 명단(33명) | 김종필, 박준규, 신상철, 윤천주, 이종근, 이병희, 구자춘, 정석모, 최각규, 김용재, 유수호, 김용환, 조부영, 이대엽, 이금규, 이희일, 김현욱, 김문원, 정태영, 김진영, 이양희, 변웅전, 송업교, 정원조, 한청수, 안택수, 박창규, 김병호, 김영자, 이재선, 유근수, 김희숙, 김용희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고 신봉하는 정치세력의 연합체임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책임정치, 따뜻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실현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수호자 및 보수와 진보의 창조적 통합자임 - 의원내각제 실시, 완벽한 지방자치 실시 - 자유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추구 | | |

다. 정당등록

1995년 2월 21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자유민주연합(가칭)은 지구당 창당대회를 통해 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을 조직하는 한편 정강·정책 및 당헌·당

규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창당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27개의 지구당을 구축하는 등 창당요건을 구비한 자유민주연합(가칭)은 1995년 3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1995년 3월 30일).

3,296명의 대의원 중 3,2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당대회에서 자유민주연합(가칭)은 당헌, 강령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전당대회 의결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무회의에 위임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당헌 부칙 조항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김종필을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어 김종필 총재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을 최고고문으로, 정석모·구자춘·김용환·최각규·김용채·김경오를 부총재로 지명하여 전당대회 동의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4월 3일 정당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신설정당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창당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995년 6월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민당과 신설합당하여 새로운 자유민주연합으로 거듭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간은 58일에 불과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내용 | | | | | |
|---------------|---|------------------------------|--------|-----|-------|-----|
| 대표자 | 김 종 필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3-4 인산빌딩 | | | | | |
| 주요간부 | 최고고문 | 박준규 | 전당대회회장 | 유수호 | 회계책임자 | 조부영 |
| | 부총재 | 정석모, 구자춘, 김용환, 최각규, 김용채, 김경오 | | | | |
| 당원수 | 26,458명 (법정당원수: 1,025명, 일반당원수: 25,433명) | | | | | |
| 지구당 등록현황 (27) | |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
| 서울(6) | 도봉구갑(신오철), 서대문구을(김병호), 도봉구을(김규원), 구로구을(유기수), 노원구을(김용채), 송파구갑(유철호) | | | | | |
| 대구(3) | 중구(유수호), 달서구갑(박종근), 북구(안택수) | | | | | |
| 대전(2) | 동구을(이양희), 서구·유성구(양영치) | | | | | |
| 경기(4) | 수원시 팔달구(김인규), 의정부시(김문원), 수원시 장안구(이병희), 용인군(김학규) | | | | | |
| 강원(1) | 강릉시(최각규) | | | | | |
| 충북(2) | 청주시갑(김진영), 충주시·증원군(이종근) | | | | | |
| 충남(5) | 공주시·공주군(정석모), 연기군(김고성), 대천시·보령군(김용환), 서천군(이금규), 금산군(정태영) | | | | | |
| 전북(1) | 정주시·정읍군(정태진) | | | | | |
| 경북(3) | 김천시·금릉군(이완재), 달성군·고령군(구자춘), 상주시·상주군(강·옥) | | | | | |

【 강 령 】

우리는 근대화로 이룩된 광복 50년의 국가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민주정치를 확립하고 민족 재도약의 웅대한 역경을 펼쳐야 할 신세기 앞에 다가서 있다. 여기,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이 시대의 소명을 수행할 가장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토대로 모두가 훈훈하고 보람있게 사는 선진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민족대통합의 위업을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하여 권력의 독선과 전횡을 막고 의회의 권능을 확립하여 주권재민의 참된 책임정치를 실현한다.
2. 우리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고 지방의 특색과 토양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천한다.
3. 우리는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서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 농어민·노동자 및 저소득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위하여 지원과 복지를 확충한다.
4.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 고도지식산업사회에 부응키 위하여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킨다.
5. 우리는 도덕과 신의가 지켜지며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를 건설하여 모두가 서로 믿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우리는 교육의 기본을 인성의 함양에 두고 교육의 자율화로 개성과 창의를 제고하며 문화예술의 창달에 진력한다.
7. 우리는 민족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을 차분하게 추구한다.
8. 우리는 안보를 굳건히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능동적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성원이 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 【기본정책】 | | |
|-------------------------------|--|--|
| 1. 책임정치의 실현 | (1) 의회민주정치 구현 (2) 효율행정 (3) 선거문화 선진화 | (4) 직업공무원제 확립 (5) 법질서 정착 (6) 지방분권화 실현 |
| 2. 경제정의의 실현 | (1) 경제정의 구현 (2) 국민경제 안정 (3) 중산층 폭 확장 (4) 산업평화 | (5) 금융 자율성 보장 (6) 국제경쟁력 강화 (7) 국민 주민권 보장 |
| 3. 중소기업의 육성 | (1) 중소기업 육성 (2) 중소기업 전문화 | (3) 지방 중소기업 육성 (4) 중소기업 경영안정 |
| 4. 국제화·개방화를 대비한 농림수산업의 진흥 | (1)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2) 농지이용 효율화 (3) 농어민 안전성 향상 | (4) 농어민 재해예방제도 확립 (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 5. 교육 개혁과 문화의 창달 | (1) 질 높은 교육 실현 (2) 평생교육 실시 (3) 사학 보호·육성 | (4)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 제고 (5) 선진문화국가 건설 |
| 6. 창조적인 연구와 과학기술 진흥의 지원 | (1) 연구개발 지원·인재육성 (2) 정보화사회 기반구축 | (3) 미래형 전문산업 지원 (4) 국제적 과학기술협력 강화 |
| 7. 국토개발의 질적 전환과 균형 있는 지방사회 발전 | (1) 사회간접자본건설 확충 (2) 국토 효율적 이용 (3)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 | 4) 지역간 정보격차 축소 (5) 지역특성을 가진 산업단지 조성 (6) 교통난 해소 |
| 8. 안정된 복지사회 구현 | (1) 사회보장제도 확충 (2) 근로자 복지 증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4) 고령자 복지 강화 (5) 소외 불우계층 지원 |
| 9. 환경보전과 환경창조의 사회 실현 | (1) 자연환경 보존 (2) 자원절약형 사회 추진 | (3) 맑은 물 관리정책 강화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 10. 외교주권의 확보와 민주평화통일 | (1) 자유, 평화통일 실현 (2) 외교주권 확립 | (3) 자주안보체제 구축 (4) 해외동포의 현지정착 적극 지원 |

3. (신설합당) 자유민주연합(1995. 5. 31~2006. 3. 10)

가.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합당

1) 합당배경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신생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이 신설합당하여 1995년 5월 31일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자유당 김종필 전 대표최고위원이 탈당 후 1995년 4월 창당한 정당이었고, 신민당은 통

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1994년 7월 신설합당한 정당이었다.

신민당은 창당 이후 끊이지 않는 당내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 속에 급격하게 당세가 약화되었다. 1995년 3월 김복동 대표체제를 출범시키며 당내갈등을 일단락하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1995년 4월 21일에는 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선언하였으나, 이마저도 공동대표 등록문제로 인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신민당은 선거 후 좌초될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하였고, 실제로 취약한 지지기반과 인물난으로 인하여 광역단체장후보를 전혀 공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민당은 민주당과의 통합무산 직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자유민주연합에 통합을 제의하였고, 선거를 앞두고 당세확장을 꾀하던 신생정당 자유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신민당은 좋은 통합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양당 간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의 통합협상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95년 4월 후반 양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별적인 접촉을 갖기 시작하였고, 합당협상이 구체화되면서 4월 29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신민당 김복동 최고대표위원이 회동하여 원칙적 차원의 합당에 합의하였다.

2) 합당과정

양당 대표 간 합당원칙 합의에 따라 자유민주연합 구자춘·김용환·조부영 의원과 신민당 임춘원·박구익·조일현 의원이 합당교섭대표로 나서 1995년 4월 30일부터 당명과 지도체제 등 구체적인 합당협상을 벌였다. 이후 5월 9일 교섭대표들은 5차 회동에서 합당에 관한 모든 문제를 타결하고 합당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5월 16일 김종필 총재와 김복동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공동선언하였다.

이에 신민당은 5월 16일 당내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자유민주연합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의결하는 한편 5명의 합당추진위원과 합동수임기구 위원을 임명하였다. 자유민주연합도 5월 17일 당무회의를 열고 신민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며 5인의 합



▲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신민당 김복동 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합당을 선언하고 있다(1995년 5월 16일).

당추진위원 구성을 김종필 총재에게 일임하는 한편 합동수임기구는 당무위원 전원으로 구성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양당은 5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양당의 합당수임기구 위원 47명(자유민주연합 25명, 신민당 22명)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당명을 '자유민주연합'으로 하고 김종필을 당 대표로 하여 신설합당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편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새로 구성될 합당추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 5인씩으로 10명의 합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합당추진위원회는 5월 19일 자유민주연합 부총재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합당할 자유민주연합의 강령·기본정책·당헌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강령과 기본정책은 '구 자유민주연합'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승계하였다. 또한 김종필 '구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신당 총재로, 김복동 '구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을 수석부총재로 추대할 것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당헌 중 '총재는 주요 당무에 관하여 수석부총재와 협의하고'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몇 가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창당선언문을 통하여 합당의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합당하였음을 선언한다. (……)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것으로 자부하며 (……) 국민행복과 나라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정진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 자유민주를 신봉하고 권력정체집단, 절대권력구조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 개인 모두의 연합과 단결을 위해 혼신(渾身)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의 현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정치체제는 바로 의원내각제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를 국민통합의 비탕 위에서 진지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

3) 정당등록(신설합당)

합당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합당추진위원회의 의결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5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신설합당등록을 신청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제출된 강령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토대로 선진문화복지국가 건설과 민족대통합의 위업 달성을 주요한 당의 이념과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명확히 하였다.

통상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요건 심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수일 내에 정당등록을 수리해 왔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의 신설합당 등록은 신민당 내 일부 인사의 반발과 합당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소 지연되었다. 자유민주연합과의 합당을 반대하던 신민당 내 박영록 외 7명은 최고위원회가 1995년 5월 15일 밤 11시에 갑자기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추진위원 서선호·이병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고, 따라서 5월 16일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결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 자유민주연합과의 통합결의는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자유민주연합의 신설정당 등록신청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정당합당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또한 5월 22일에는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합당등록신청 무효이의서를 제출하였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신설합당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전당대회 회의록과 야권통합추진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보완을 신민당에 요구하였다.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은 ①신민당의 경우 야권통합추진위원회가 해당 정당의 당헌 등의 규정에 따라 합당결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관인지 여부 ②(정당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당결의를 한 신민당의 야권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절차,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적법성 여부 ③합당을 결의한 수임기관합동회의의 구성 및 회의소집 절차·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의 적법성 여부 등 세 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6일 신민당으로부터 관계서류가 제출되자 주요 논쟁점을 비롯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였다.

합당등록신청자와 이의제기자간 주장내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의견

| 구분 | 합당등록신청자 | 이의 제기자 | 위원회 검토의견 |
|------------------------------|------------------------|--|---|
| 형식적 요건구비여부 | 형식적 요건구비 | 외형상 형식적 요건구비 (상당부분 사실과 불부합) | 형식적 요건구비 ²¹⁾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야권통합에 관한 결의 | | 민주당과의 통합을 전제 | 실질적 심사사항 |
| 전당대회에서의 합당권한수임기관 | 야권통합 추진위원회(소명) | 야권통합추진위원회 (95. 3. 30 제출회의록은 조작) | 야권통합추진위원회 |
| 최고위원회의 (95. 5. 15) | 회의소집 통지 | 통지함 | 통지된 것으로 추정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7명 중 4명 참석 | 충족된 것으로 추정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야권통합추진위원 (2인 교체) | 적법임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있음) | 불법임(전당대회에서의 선임직이며 최고위원회개최 전 교체) | 정당한 것으로 추정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야권통합 추진위원회 (95. 5. 16) | 회의소집 통지 | 통지함 | 통지된 것으로 추정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9명 중 9명 참석 | 충족된 것으로 추정 (사실부합 여부는 실질적 심사사항임) |
| 수임기구합동회의 참가위원(22명) | | 자격 없음(임명은 95. 5. 16, 문서시행은 95. 5. 29) | 임명의 효력여부판단은 실질적 심사사항임 |
| 당무집행 | | 당무집행 할 수 없음 (수임기구 합동회의 의결 이후) | 신설합당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당무집행가능 |

21) 정당등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정당법 제16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 요건심사는 사실의 실질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면·자료에 의하여 해당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만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실질적 법률관계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는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는 동일하다.

검토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1995년 5월 31일 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을 공식 수리하였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은 논란 끝에 정당등록신청 후 11일만에 정당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출범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 |
|-----------------|--|------------------------------|--------|--------------------------|-------------|--------------|--|
| 대표자 | 김 종 필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3-4 인산빌딩 | | | | | | |
| 주요간부 | 수석부총재 | 김복동 | 전당대회회장 | 유수호 | 사무총장 | 조부영 | |
| | 부총재 | 정석모, 구자춘, 김용환, 최각규, 김용채, 김경오 | | | | | |
| 당원수 | 26,458명(법정당원수: 1,025명, 일반당원수: 25,433명) | | | | | | |
| 수입기구 합동회의 | 1995년 5월 17일 10시(국회도서관회의실), 47명 중 39명 참석 | | | | | | |
| 합당하는 정당의 합당결의기관 | | | | | | | |
| 정당명 | 등록 연월일 | 대표자 | 지구당 수 | 합당결의전당대회 | | | |
| | | | | 일자 | 장소 | 성원상황 | 권한위임(수입기관) |
| 신민당 | 94. 7. 8 | 김복동 | 192 | 95. 5. 16 (아권통합추진위원회) | 중앙당 대표최고위원실 | 15명 중 9명 참석 | 전당대회(95. 3. 27)에서 합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권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 |
| 자유민주연합 | 95. 4. 3 | 김종필 | 45 | 95. 5. 17 (당무회의) | 중앙당 당사 | 25명 중 23명 참석 | 당헌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당에 관한 사항을 당무회의가 대행 |

※ 지구당과 당 지부 및 당 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지구당의 대표자 및 당지부와 당연락소 책임자와 회계책임자의 주소, 성명은 120일 이내 보완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9월 13일 신설합당 등록신청 시 보완사항으로 남겨 두었던 지구당, 당 지부 및 당 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책임자와 회계책임자의 주소, 성명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합당 전 신민당은 192개, 구 자유민주연합은 45개의 지구당을 조직하고 있어 두 정당이 보유한 지구당을 합하면 무려 237개에 달하였고, 이중 34개 지구당은 중복되어 있어 개편대회 대상이 되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조정을 통하여 등록 지구당 수를 191개로 축소하였고 이 중 122개의 지구당을 신고하였다. 나머지 69개의 지구당은 사고지구당으로 신고하였으며, 더불어 9개의 당 지부, 그리고 3개의 당 연락소도 보완하여 신고하였다.

합당 전 신민·자민련 지구당 현황

| 구분 | 신민당 | 자유민주연합 | 개편대상 지구당 |
|--------|---|------------------------------------|--|
| 합계 | 158 | 11 | 34 |
| 서울(39)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를, 성동구병, 동대문구갑, 동대문구을, 중랑구갑, 중랑구을, 성북구갑, 성북구을, 노원구갑, 은평구갑, 은평구을, 서대문구갑, 마포구갑, 마포구을, 양천구갑, 양천구을, 강서구을, 구로구갑, 구로구병, 영등포구갑, 영등포구을, 동작구갑, 동작구을, 관악구갑, 관악구을, 서초구을, 강남구갑, 송파구을, 강동구을(32) | | 도봉구갑, 도봉구을, 노원구을, 서대문구을, 구로구을, 송파구갑, 강동구갑(7) |
| 부산(16)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부산지구를, 동래구갑, 동래구을, 남구갑, 남구을, 북구갑, 북구을,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16) | | |
| 대구(9) | 서구갑, 서구을, 남구, 수성구갑, 수성구을, 달서구을(6) | 북구 (1) | 중구, 달서구갑(2) |
| 인천(7) | 중구, 동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갑, 북구을, 서구(6) | | 남동구(1) |
| 광주(6) | 동구,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6) | | |
| 대전(4) | | | 동구갑, 동구을, 서구·유성구, 중구(4) |
| 경기(23) | 수원시권선구, 성남시중원구·분당구,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광명시, 송탄시·평택시, 동두천시·양주군, 안산시·옹진군, 과천시·의왕시, 시흥시·군포시, 평택군, 오산시·화성군, 파주군, 고양시, 연천군·포천군, 가평군·양평군, 안성군(18) | 수원시장안구, 의정부시 (2) | 수원시팔달구, 성남시수정구, 용인군(3) |
| 강원(9) | 춘천시, 명주군·양양군, 홍천군, 춘천군·양구군·인제군, 횡성군·원주군, 영월군·평창군(6) | 태백시 (1) | 강릉시, 속초시·고성군(2) |
| 충북(6) |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 진천군·음성군 (5) | 청주시갑 (1) | 청주시을, 충주시·증원군 (2) |
| 충남(14) | | 대천시·보령군, 금산군, 서산시·서산군·태안군, 당진군 (4) | 천안시, 공주시·공주군,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홍성군, 예산군, 천안군, 온양시·아산군(10) |
| 전북(14) |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이리시, 남원시·남원군, 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임실군·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김제군, 옥구군, 익산군(13) | | 정주시·정읍군(1) |
| 전남(18)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나주군, 여천시·여천군, 담양군·장성군, 구례군·곡성군, 동광양시·광양군, 송주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완도군, 해남군·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영광군, 신안군 (18) | | |
| 경북(18)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영천군, 군위군·선산군,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영덕군, 영일군·울릉군, 경주군, 경산시·경산군·청도군, 성주군·칠곡군, 예천군(14) | 김천시·금릉군, 상주시·상주군 (2) | 영주시·영풍군, 달성군·고령군(2) |

| | | | |
|--------|---|--|--|
| 경남(18) | 창원시갑, 창원시을, 울산시중구, 울산시남구, 마산시합포구, 마산시회원구, 진주시, 진해시·창원군, 삼천포시·사천군, 김해시·김해군, 진양군, 의령군·함안군, 창녕군, 밀양시·밀양군, 양산군, 울산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18) | | |
|--------|---|--|--|

지구당 개편현황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서울 | 중구(이수만), 성동구을(계영주), 성동구병(최운상), 동대문구을(박상일), 종랑구갑(신인휴), 종랑구을(강병진), 성북구갑(이용준), 성북구을(이필선), 도봉구갑(신오철), 노원구갑(박병일), 노원구을(김용재), 은평구갑(임인재), 은평구을(노양학), 서대문구갑(유갑중), 마포구을(장덕환), 양천구갑(정호근), 강서구갑(최덕수), 강서구을(박한상), 금천구(유기수), 동작구갑(박완규), 동작구을(김우중), 강남구갑(김동길), 송파구갑(조순환), 송파구을(김정호), 강동구을(손은봉) |
| 부산 | 영도구(노치태), 부산진구을(한기승), 남구을(정상구), 금정구(박창중), 강서구(기우탁) |
| 대구 | 중구(유수호), 동구갑(김복동), 서구을(김종하), 북구을(안택수), 수성구갑(현경자), 수성구을(박구익), 달서구을(서병환), 달성군(구자춘) |
| 인천 | 중구·동구(강승훈), 남구갑(정의성), 남동구(강우혁), 북구갑(이수일), 북구을(조홍규), 서구(이훈국) |
| 광주 | 서구(최운용), 광산구(김면중) |
| 대전 | 서구·유성구(양영치), 대덕구(이인구) |
| 경기 | 수원 장안구(이병희), 수원 권선구(이일구), 성남 수정구(이대엽), 의정부시(김문원), 안양 만안구(김선배), 부천 소사구(박규식), 광명시(김재주), 동두천시·양주군(김국환), 고양시(황인형), 평택시(김조성진), 시흥시·군포시(이강원), 가평군·양평군(홍성표), 용인군(김학규) |
| 강원 | 횡성군·원주군(염영도), 태백시(강국희), 홍천군(조일현), 영월군·평창군(김성용), 속초시·고성군(한병기) |
| 충북 | 충주시(이중근), 제천시(김대환), 청원군(김현수),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여준선) |
| 충남 | 천안시(정일영), 공주시(정석모), 보령시(김용환), 서산시 태안군(변웅전), 금산군(정태영), 연기군(김고성), 논산군(윤관식), 부여군(김종필), 서천군(이규규), 청양군·홍성군(조부영), 당진군(김현욱), 천안시을(한청수) |
| 전북 | 전주시 원산구(송형호), 전주시 덕진구(임광순), 군산시(신동안), 군산시을(채의석), 이리시(김용관), 익산군(유재석), 정읍시(정태진), 김제시(유창렬), 완주군(송주인), 임실군·순창군(김종순), 고창군(노동재), 부안군(최규환) |
| 전남 | 목포시(안 철), 순천시(조동수), 여천시·군(이성재), 담양군·장성군(기노을), 곡성군·구례군(김문일), 화순군(이영복), 해남군·진도군(곽봉근), 영암군(김성재), 무안군(노인욱) |
| 경북 | 포항시(김남수), 경주시(최병찬), 경주군(황한수), 안동시(김시활), 안동군(김시명), 영주시(전우창), 상주시(강 욱), 성주군·칠곡군(박정영), 의성군(김동호), 청송군·영덕군(문태준), 영양군·봉화군(조훈영), 경산군·청도군(김종학), 예천군(황병호), 울진군(이학원) |
| 경남 | 울산 남구(이 북), 마산 회원구(김영길), 양산군(김대우), 남해군·하동군(김중재), 함양군(하상령) |

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원내 제3당 지위 확립

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3당 입지 구축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이 신설합당하여 1995년 5월 31일 신당 자유민주연합으로 재출범한 직후인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짧은 선거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연합은 선거결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전하여 국회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하였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대전·충남·충북·강원 등 4곳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각각 23곳(10%)과 86석(9.8%)을 차지하며 약진하였다.

동시지방선거 선전에 고무된 자유민주연합은 그 여세를 몰아 의원영입을 통해 당세를 확장하고 1996년 4월 11일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신설합당 당시 이미 20명의 현역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은²²⁾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2일 박철언 전 의원이 부인 현경자 의원과 함께 입당하면서 소속의원이 총 21명이 되었다.

지방선거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외부인사 영입에 주력하면서 김범명, 함석재 등 민주자유당 현역의원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과 구여권 인사들을 영입하여 당세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자유민주연합은 일부 의원들의 사직과 사퇴에도 불구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 소속 의원이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전과 당 조직 정비

자유민주연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무려 50석을 차지하는 선전으로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

22) 1995년 5월 24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당시 20명의 의원은 한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부자, 강우혁, 구자현, 김동길, 김복동, 김용환, 김종필, 김진영, 문창모, 박구일, 박규식, 양순직, 유수호, 이금규, 이종근, 이학원, 정태영, 조부영, 조일현 등이었다.

후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 개원에 앞서 당직을 개편하고 새로이 조직을 정비하였다. 조부영 사무총장, 한영수 원내총무, 박구일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은 당직개편을 앞두고 4월 16일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4월 22일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을 우선 임명하고 이틀 뒤 4월 24일 후속 인선을 발표하며 당직개편을 마무리하였다.

당직개편 결과 사무총장에는 김용환 의원이 임명되었고, 원내총무에 이정무 의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정책위의장에는 허남훈, 대변인에는 안택수, 총재비서실장에는 이동복 당선자가 각각 임명되었다. 박준규 최고고문, 김복동 수석부총재 체제는 기존대로 유지되었으며 그 대신 부총재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석모, 정상천, 한영수, 이태섭, 박철언, 배명국 씨가 부총재에 임명 또는 재임명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여성저명인사를 영입하여 추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당대회회의장에 오용운, 중앙위의장에 이대엽, 정치발전위원장에 조부영, 정책자문위원장에 박구일, 신설된 생활법제개혁위원장에 이진개, 농어촌대책위원장에 한호선을 각각 임명하였다. 이외에 박철언 부총재가 겸하던 대구와 경북지부장에는 박종근 당선자와 김화남 당선자를 각각 임명하는 등 일부 시도지부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유민주연합 주요간부 변경(1996.4)

| 직책 | 기존 | 변경 | 비고 |
|--------|---|---------------------------------------|----|
| 부총재 | 김복동(수석), 정석모, 이태섭, 김용환, 박철언, 김용채, 이필선, 정상구, 박준병 | 김복동(수석), 정석모, 정상천, 한영수, 이태섭, 박철언, 배명국 | 교체 |
| 사무총장 | 조부영 | 김용환 | 교체 |
| 정책위의장 | 박구일 | 허남훈 | 〃 |
| 원내총무 | 한영수 | 이정무 | 〃 |
| 대변인 | 이동복 | 안택수 | 〃 |
| 총재비서실장 | 이금규 | 이동복 | 〃 |

다. DJP공조와 박태준 총재체제의 형성

1) 연쇄탈당과 국민회의와의 공조

1996년 5월 30일 제15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국회의원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신한국당의 야당의원 영입으로 곤경에 처하였다.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39석을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소속 및 야당의원 영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영향으로 자유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이에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와 신한국당의 야당인사 영입작업 등을 ‘야당 파괴폭거’로 규정하고 ‘선거부정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대어 총공세에 나섰다.

5월 22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과 함께 신한국당의 인위적 과반수의석 확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5월 26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후 탈당한 김화남 의원을 비롯하여 1996년 12월 유종수, 황학수, 이재창 의원이 연이어 탈당하면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50석으로 출발한 자유민주연합은 46석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인위적 정계개편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다른 한편으로 자유민주연합이 여당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와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당헌개정과 대통령후보 선출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은 4월 7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일을 6월 24일로 확정하였다. 이에 전당대회 전 자유민주연합은 지구당 창당 및 개편대회를 잇달아 여는 한편 4월 25일 당헌개정을 통해 당 조직 및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개정된 당헌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과 구성의 수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실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총재 직속의 정세분석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상임고문직이 새로이 구성되었고, 전당대회 임원에 있어서도 2명이었던 부의장을 약간 명으로 조정하였다. 중앙위원회의 부의장은 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7인에서 11인으로 늘어났고,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여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하였다.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3인이었던 부의장을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부의장이 당연 겸직하도록 변경하였다. 40인 이내였던 당무위원도 50인 이내로 늘렸으며, 신설된 정책자문위원회, 생활법제개혁위원회, 농어촌대책위원회, 정세분석위원회 각 위원장을 새로이 당무위원에 포함시켰다. 1인이었던 정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도 약간 명으로 늘렸으며,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수도 수석부의장 2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수석부대변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6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차 정기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고 김종필 총재를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어 7월 2일에는 당무회의를 통해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수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환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7월 3일에는 대통령선거체제를 이끌어 갈 사무총장에 강창희 의원을 새로이 임명하는 한편 김광수·오용운을 부총재에 임명하는 등 지도부를 일부 개편하였다.

3) 박태준 총재체제의 출범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작된 새정치국민회의와의 공조체제를 1997년까지 유지하였다. 국회활동에 있어서 공동으로 여당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그 결과 1997년 3월 5일 실시된 인천 서구와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후보였던 새정치국민회의 조한천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이태섭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양당의 공조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연합논의로 확대되었다. 계속된 협상 결과 양당은 1997년 10월 27일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후보단일화에 전격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내세우는 한편 김종필 총재가 차기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고 각료배분 및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 동일한 지분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고 개헌 후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양당은 11월 3일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문 선언 및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후보단일화를 이룬 자유민주연합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 박태준 의원을 영입하였다. 과거 민주자유당 대표를 역임했던 박태준은 당내 계파 갈등 속에 1992년 대통령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였다. 이후 4년여의 공백기간을 거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97년 7월 24일 경북 포항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일선정치에 복귀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후보단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태준 의원과 접촉하여 당 총재직을 제안하며 입당을 권고하였고, 박태준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11월 4일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연합은 충청, 호남에 영남이 결합하는 이른바 'DJT연합'을 형성하면서 세력이 확대되었다.

한편 박태준 의원의 입당 후 자유민주연합은 약속된 총재 추대의 문제를 두고 그 형식과 절차에 있어 다소 논란을 벌였다. 애초 자유민주연합은 당무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고쳐 총재직을 이양한다는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의 해산이나 합당, 그리고 총재선출은 당무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발견되면서 총재 추대방법을 적법한 공식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3일 김종필 총재가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후 11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박태준 의원을 당 총재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에서는 김종필 전 총재를 명예총재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1995년 5월 신민당과 신설합당하



▲ 자유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박태준 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7년 11월 21일).

여 새로운 자유민주연합으로 재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김종필 총재 체제’는 ‘박태준 총재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연합후보로 내세웠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998년 공동여당으로 변모하였다.

4. 새정치국민회의(1995. 9. 11~2000. 1. 24)

가.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1) 창당배경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낙선하면서 정계를 은퇴한 이후 1995년 은퇴를 번복하고 정계에 복귀하면서 창당한 신설정당이다. 김대중은 정계은퇴 선언 이후 일정기간 정치와 거리를 두고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해 왔고, 계파갈등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1993년 3월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약속을 이유로 이기택 대표에 대한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1994년 1월 27일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김대중은 정치재개의 논란이 일어날 만큼 외연을 확대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 계파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기택 대표와의 갈등도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기택 대표는 이후 저서를 통해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의 배후에는 항상 김대중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당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위탁했다고 여기는 등 뒤에서는 정계복귀 계획을 진행했다”라고 회고하였다.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권경쟁으로 분당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렸던 민주당은 1995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내분을 수습하였으나, 곧이어 지방선거에 직면하면서 공천문제로 당내갈등을 재현하였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서는 이기택 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직접적인 충돌양상을 보이며 이기택 총재가 총재직 사퇴를 표명하는 등 당내 상황은 분당의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지방선거라는 대사를 앞두고 내분은 수습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지방선거과정에서 김대중 이사장의 정치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지원유세에 직접 나서는 한편 지역등권론 등 정치적 이슈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정당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정계복귀 수순에 돌입하였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민주당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이후 김대중 이사장이 정계복귀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여전히 당내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분사태 후 얻은 선거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파 간에는 선거공과 논쟁과 함께 김대중 이사장이 주장한 지역등권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동교동계는 이기택 총재의 사퇴와 당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신당을 창당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택 총재는 사퇴를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강경하게 맞섰고, 이로써 당내갈등은 과국에 이르렀다. 결국 김대중 이사장은 1995년 7월 13일 민주당 내외문제연구소 모임을 통하여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의 의사를 전한 후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였다.



▲ 김대중 아·태 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계복귀 및 신당창당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1995년 7월 18일).

2) 창당준비위원회

1995년 7월 18일 김대중 이사장이 정계복귀와 창당선언을 공식화하면서 신당창당의 움직임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틀 뒤인 7월 19일 김영배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이용희 등 7인의 지도위원, 권노갑 등 32인의 상임준비위원, 그리고 강철선 등 72인의 준비위원으로 창당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다시 일주일 후인 7월 27일에는 신당의 명칭을 새정치국민회의(가칭)로 결정하였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 준비위는 1995년 8월 11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김대중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발기인대회(1995년 8월 11일).

기선언문을 통해 “기존 야당의 틀로는 비판과 견제기능은 물론 수권태세도 불가능하며 새 정치를 펼 수 없어 신당을 결성한다”라고 창당취지를 밝혔다. 한편 열린 정치, 바른 정치, 따뜻한 사회, 높은 문화와 교육, 푸른 환경, 통일, 희망찬 미래 등 7개항을 지향목표로 제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 표 자 | 김대중 | 회계책임자 | 김봉호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304호 | | |
| 발기인(85명) | 김대중, 강철선,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명규, 김민석, 김병오, 김봉호, 김근태,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길, 김인근, 김장근,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문일권, 문희상, 박광태, 박상천, 박 실, 박은태,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박상규, 변정수, 손세일, 신계륜, 신기남, 신기하, 신도성, 신순범, 안동선, 안상현, 양성철, 오 탄, 유인학, 유준상, 이경재, 이길재, 이동근, 이동원, 이석현, 이선희, 이영권, 이용희, 이우정, 이원형, 이윤수, 이종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정균환, 정대철, 정상용, 정한용, 정희경,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천용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한광옥, 한기찬, 한화갑, 허재영, 홍사덕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 정치, 바른정치를 지향한다. ○따뜻한 사회를 지향한다. ○높은 문화와 교육을 지향한다. ○푸른 환경을 지향한다. ○남북이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희망찬 미래를 지향한다. | | |

3) 정당등록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등록에 앞서 우선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제도권 내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 8월 12일 새정치국민회의(가칭)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54명의 현역의원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신기하 의원을 원내총무로 선출한 후 국회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외부인사 영입과 함께 현역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법정지구당 창당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외위원장의 지역구 창당은 외부영입 인사와의 정리문제로 유보하였다. 한편 8월 28일에는 지도체제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당준비를 완료한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5년 9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가칭)는 창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새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안정 속의 개혁 실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지지하였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직선제의 유지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당의 기본정책 확정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미루어졌다.



▲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1995년 9월 5일).

한편 새정치국민회의는 당헌규정을 통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최고대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도체제를 집행기구인 총재단 회의와 의결기구인 지도위원회의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단일성집단지도체제이지만 총재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도위원회의 의장은 총재가 겸임하지 않고 지도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재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재단은 총재 이외에 8명의 부총재를 두며 이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수석부총재는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도위원은 총재단을 포함하여 2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간 결선투표방식을, 결선투표에서 동수 득표의 경우에는 연장자 당선방식을 채택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전당대회의장에 김봉호 의원, 부의장에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김대중 신임총재가 부총재로 지명한 김근태, 김영배, 박상규, 신낙균, 유재건, 이종찬, 정대철, 조세형 등 8인을 인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도위원으로 권노갑, 길승흠, 김봉호, 김상현, 김태식, 김희선, 나종일, 유준상, 신순범, 신용석, 안동선, 이용희, 정영모, 정희경, 천용택, 한광옥, 허재영 등 17명을 인준하였다. 지도위원회는 창당대회 다음 날인 9월 6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현 지도위원을 의장, 한광옥 의원과 정희경 전 남북적십자회담대표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1995년 9월 5일 창당대회를 통해 법적 등록조건을 완료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만 5,264명의 당원과 49개의 지구당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9월 11일 정당등록 절차가 완료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의석수 53석의 원내 제1야당으로 공식 출범하였다.²³⁾

23) 새정치국민회의는 발기인대회 당시 54석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홍사덕 의원이 탈당하여 창당대회 시 원내의석은 53석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김대중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 | | |
| 주요간부 | 부총재(8인) | 김근태, 김영배, 박상규, 신낙균, 유재건, 이종찬, 정대철, 조세형 | | |
| | 전당대회회장 | 김봉호 | 회계책임자 | 조순형 |
| 당원수 | 55,264명(법정당원수 1,613명, 반대원수 53,651명) | | | |
| 지구당 등록현황 (49) | | | | |
| 시·도명 | 지구당 (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10) | 중랑구을(김덕규), 은평구을(이원형), 성북구을(신계륜), 강서구을(최두환), 강북구갑(김원길), 구로구을(김병오), 노원구을(임채정), 금천구(이경재), 은평구갑(손세일), 영등포구갑(장석화) | | | |
| 광주(6) | 동구(신기하), 북구갑(박광태), 서구(정상용), 북구을(이길재), 남구(임복진), 광산구(조홍규) | | | |
| 경기(5) | 성남시수정구(이윤수), 안양시동안구을(이석현), 의정부시 (문화상), 부천시원미구갑(안동선) | | | |
| 전북(10) | 전주시덕진구(우 탄), 익산시을(이 협), 전주시원산구(장영달), 완주군(김태식), 군산시갑 (채영석), 고창군(정균환), 군산시을(강철선), 부안군(이희천), 익산시갑 (최재승), 김제시(최락도) | | | |
| 전남(10) | 여수시(김충초), 장흥군(이영권), 순천시을(조순승), 강진군·완도군(김영진), 나주시(김장근), 영암군(유인학), 담양군·장성군(박태영), 함평군·영광군(김인근), 광양시(김명규), 신안군(한화강) | | | |

【 강령 및 기본정책 】

전 문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이 나라의 정통 민족·민주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우리 당은 21세기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정치를 추구한다. 새정치는 참여의 정치, 통일주도의 정치, 21세기의 격변에 대비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새정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정 속에 개혁을 실현한다. 우리 당은 국민의 참여 속에 언제나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21세기를 앞두고 새정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1995년 9월 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강령을 채택한다.

- | | | |
|-------------------------|------------------------|--------------------------|
| 【1】 정치: 참여의 정치 | 【5】 교육: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 【9】 청년: 사회의 공동참여자 |
| 【2】 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 【6】 환경: 자연과 공존공영 | 【10】 외교·안보: 자주협력의외교·안보체제 |
| 【3】 사회: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 【7】 과학기술: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 【11】 통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 |
| 【4】 문화: 문화선진국의 지향 | 【8】 여성: 평등과 참여의 보장 | 【12】 21세기: 도덕적 선진국가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부진과 당 조직 정비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 이후 첫 전국선거였던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목표로 내세웠던 100석에 훨씬 못 미치는 79석의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배수진을 치고 전국구 14번을 배정 받았던 김대중 총재와 정대철, 이종찬, 조세형, 한광옥 등 당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 후 당 체제개편이 불가피해졌고, 국회의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등 선거 후유증 수습에 고심해야 했다.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듯 새정치국민회의의 당직개편은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총재는 4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원내 부총재 중 한 명을 총재대행으로 임명해 상시 대행체제로 당을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 내가 나서는 것보다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을 내세워 당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나의 2선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대행체제로 당을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4월 25일 우선적으로 원내총무를 선출하였다. 원내총무 경선에는 박상천, 신기하, 조순형, 이해찬, 채영석, 이협, 손세일 의원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 끝에 박상천 의원이 신기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이어 5월 1일 지도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10역과 13개 특별위원장단, 그리고 15명의 총

새정치국민회의 주요간부 변경(1996. 5)

| 직책 | 변경내용 | 직책 | 변경내용 |
|--------|---|--------|------|
| 사무총장 | 한광옥 | 원내총무 | 박상천 |
| 정책위의장 | 이해찬 | 지자제위원장 | 정균환 |
| 홍보위원장 | 이영일 | 연수위원장 | 이경재 |
| 기획조정실장 | 박지원 | 정세분석실장 | 김영환 |
| 대변인 | 정동영 | 총재비서실장 | 정동채 |
| 특별위원장 | 김원길(환경), 박상규(중소기업), 오익제(종교), 신낙균(여성), 이동원(이북5도), 김영진(농어민), 조경철(과학), 신계륜(청년), 천용택(안보), 정희경(교육문화), 임채정(통일국제), 방용석(노동), 이성재(장애인) | | |
| 총재특보단 | 김성근, 신기남, 정한용, 문희상, 김한길, 이기문, 조성준, 김민석, 김종배, 유선호, 천정배, 김상우, 설훈, 정세균, 추미애 | | |

재특보단에 대한 인선을 통하여 주요당직 개편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당헌 중 제 29조 기획조정실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와 정세분석’ 역할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정세 분석실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 제2차 전당대회와 당헌개정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12월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7개월 남겨둔 5월 19일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통령후보와 총재를 선출하는 한편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체제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개정을 단행하였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된 대통령후보와 총재 선출은 경선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후보 경선에는 김대중 총재와 정대철 부총재가, 총재 경선에는 김대중 총재와 김상현 지도위원회 의장이 경쟁하였으나, 김대중 총재가 압도적인 표차로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후보 및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김대중 총재는 경선 후 수락연설을 통해 “대의원·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힘을 받들어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금자탑을 세우겠다”라며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였다.

한편 대의원들은 신임 전당대회 의장에 손세일 대의원을, 부의장에 백종길·최재승 대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11명의 부총재와 20명의 지도위원을 인준하였다. 또한 12개 강령에 복지항목을 추가 신설한 강령개정안과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총재권한 대행체제의 운영 확대, 간부회의의 공식기구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조정 권한의 당무위원회 위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연합과의 공조 및 연합을 위해 권력구조 변경 및 후보단일화 협상에 대한 전권을 대통령후보 및 당무회의에 위임하는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권한 위임안’을 추진하였다.

개정 강령 및 당헌 주요내용

| 【 강 령 】 | |
|---|--|
| 기존 | 변경 |
| <p>【2】 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p> <p>【4】 문화: 문화선진국의 지향</p> <p>【6】 환경: 자연과 공존공영</p> <p>【9】 청년: 사회의 공동참여자</p> <p>【10】 외교·안보: 자주협력의 외교·안보체제</p> <p>【11】 통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p> <p>【12】 21세기: 도덕적 선진국가</p> | <p>【2】 경제: 개방시대의 균형경제</p> <p>【4】 문화: 세계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문화 선진국 지향</p> <p>【6】 복지: 21세기 대비 건강하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의 건설</p> <p>【7】 환경: 자연과 공생공조</p> <p>【10】 청년: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구현</p> <p>【11】 외교·안보: 외교강국·강병안보를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p> <p>【12】 민족통합: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통합</p> <p>【13】 21세기: 외교·경제·문화진출을 통한 세계선진국가 건설</p> |

| 【 당 헌 】 |
|--|
| <p>○총재권한대행 규정의 개정</p> <p>○시도지부 간부회의 신설(공식 기구화)</p> <p>○지구당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는 시·도간부회의가 직무대행자를 제청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 - 시도지부간부회의가 직무대행자를 제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p> <p>○시장·군수·구청장후보자의 추천은 시·도지부 간부회의의 의견개진을 거쳐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받음</p> <p>○지구당 대의원대회 그리고 후보자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후보 선거 결선투표에서 두 사람의 후보자가 동수 득표 시 당무위원회에서 시·도지부 간부회의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두 후보 중 추천후보자 결정</p> <p>○당세확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까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약간 명의 당무위원, 부총재, 지도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p> |

새정치국민회의 주요 간부 변경(1997. 5)

| 직 책 | 변경내용 | 직 책 | 변경내용 |
|-------------|--|----------|------|
| 총재 | 김대중 | 총재권한대행 | 조세형 |
| 부총재 | 김근태, 김영배, 박상규, 신낙균, 유재건, 이종찬, 정대철, 박정수, 안동선, 한광욱 | | |
|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 손세일 | 지도위원회 의장 | 김봉호 |
| 사무총장(회계책임자) | 김충조 | 원내총무 | 박상천 |
| 정책위 의장 | 김원길 | 지방자치위원장 | 이상수 |
| 홍보위원회 의장 | 김경재 | 연수원장 | 이 협 |
| 기획조정실장 | 장성원 | 경제분석실장 | 임채정 |
| 대변인 | 정동영 | 총재비서실장 | 유재건 |
| 지도위원 | 정희경(부의장), 이참수(부의장), 길승흠, 김봉호, 김상현, 김태식, 김희선, 나종일, 정영모, 천용택, 김덕규, 김병태, 김인근, 박실, 신기하, 손세일, 조순승, 조순형, 채영석 | | |

라. 대통령선거승리와 집권여당으로의 변화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신한국당의 야당의원 영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 공조체제를 형성하였다. 이후 양당의 공조체제는 1997년까지 이어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내었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 이로써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 후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 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당 운영에 관여하며 ‘강한 여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1998년 새해 들어서는 1월 8일 당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충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10역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집권여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 체제 개편에 나섰다.

야당이 집권여당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998년 1월 15일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총회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체질개선 문제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새 정부 인수과정에서는 당 소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종찬 부총재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인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조직 및 국정운영 준비과정을 진행하였다. 마침내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로써 새정치국민회의도 공식적인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5. 통합민주당(1995. 12. 21~1997. 11. 24: 1996. 6. 13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가. 통합민주당 창당: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신설합당

1) 합당배경

통합민주당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1995년 12월 합당하여 공식출범한 신설정당이 다. 민주당은 1995년 소속 의원 53명이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는 내분사태로 96석의 제1야당에서 39석의 소규모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분당 이후에도 당내 갈등은 지속되었고, 1995년 9월에서야 홍영길·박일 공동대표체제로 당을 재정비하고 안정을 찾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당세 확장과 변화를 모색해야 했고,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야권통합이었다.

분당사태로 당세가 위축된 민주당은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으로 형성된 소위 '신3김시대'의 청산과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중요한 정치적 주장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점에서 '보스정치와 지역정치 타파'를 내세우며 반(反)3김 지향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이 단일화하여 1995년 1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적합한 통합대상이었다. 개혁신당 또한 창당과정에서부터 민주당과의 통합을 하나의 예정된 선택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강한 세력과 조직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제도권에 진입하여 신당의 이념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당이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혁신당과 같이 '반3김과 지역정치 타파'를 내세우고 있어 정치노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개혁신당은 창당준비위 상태였던 10월 26일 이미 장을병·홍성우 공동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식 제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통합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었다.

2) 합당과정

민주당과 개혁신당 통합실무대표²⁴⁾는 1995년 11월 7일 1차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교섭을 시작하였다. 첫 회동에서 양측은 “3김 중심 부패정치와 지역할거주의 극복을 위해 양당이 우선적으로 통합한다”라는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통합실무대표 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통합협상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통합협상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둘러싸고 잠복해 있던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통합협상은 난항을 겪기 시작하였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3차 실무협상에서 통합시한을 11월 30일까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5년 11월 14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소집공고 문제를 놓고 개혁신당과 민주당 내 통합모임 측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내 정통연합 측은 당헌상 공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하였다. 또한 지도체제와 관련하여서도 순수집단지도체제와 단일성 지도체제를 두고 양측이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이견 속에도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계속된 협상을 통해 11월 27일 6차 통합실무협상에서 통합신당의 대표체제를 2인 공동대표로 하며, 각 정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동대표 추천 문제가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내 두 계파는 대표 추천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고, 개혁신당 측도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3차례나 합의된 통합시한을 넘겼다.

지도체제 문제로 연장되어 왔던 통합협상은 12월 4일 제1차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결국 ‘상임고문 2공동대표’라는 3인 합의체제의 절충안으로 합의를 이뤘고, 양당은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하였다. 합의된 내용은 개혁신당의 장을병 공동대표와 민주당 김원기 고문이 각각 공동대표를 맡는 한편 민주당 이기택 고문이 대표와

24) 통합실무대표는 민주당 제정규, 허근수, 강수림, 유인태, 김원웅, 양문희 등 6명과 개혁신당 장기표, 서경석, 장두환, 김홍신, 박인제, 양제현 등 모두 12명이었다.

동일한 법적권한을 갖는 통합신당의 상임고문을 맡아 권력분점 구조를 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대표 이외에 6명의 부대표 또는 최고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 민주당과 개혁신당 합당수임기구 제1차 합동회의(1995년 12월 4일).

양당은 12월 13일 2차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완전 합의하였다. 애초 12월 12일로 예정되었던 2차 합동회의는 당헌제정 자료 미비를 이유로 정회된 후 다음 날 속개되어 이틀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고,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합당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우선 통합신당의 당명은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으로 확정되었다. 통합교섭과정에서 민주당은 전통야당의 법통을 상징하는 ‘민주당’을, 개혁신당은 양당의 통합성, 개혁성, 참신성을 감안하여 ‘개혁 민주당(약칭 민주당)’을 당명으로 제안하였다. 양당은 2차 합동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결과를 절충하여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까지 당의 현판 및 홍보물 등 모든 공식표기에는 민주당을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다른 정당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지도부 구성에 있어는 최고위원,

전당대회의장 등을 확정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선임권한을 당 대표 3인에게 위임하였고, 이외의 주요 당직자의 인선은 선임된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3) 정당등록(신설합당)

2차례에 걸친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당 대 당 신설합당을 의결한 이후 통합민주당은 1995년 12월 16일 이기택 상임고문과 김원기·장을병 대표최고위원 등 3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합당 등록을 신청하였다.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상임고문을 공동대표의 1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정당의 대표는 당해 정당을 대신하여 그 의사·성질을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대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임대표도 공동대표의 1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구당, 당 지부 및 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지구당의 대표자, 당 지부 및 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 및 성명을 1996년 4월 14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신청내역 검토를 완료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1일 정당합당(신설합당) 등록을 공고하였다.

이후 통합민주당은 4월 14일 지구당, 당 지부 및 당 연락소에 대한 보완사항을 추가로 등록신청하였다. 보완신청에서 통합민주당은 199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지구당 수를 230개, 당 지부 15개, 구·시·군 연락소와 읍·면·동 연락소를 각각 21개와 279개로 신고하였다. 이 중 224개의 지구당의 소재지 및 명칭을 등록신청하였다. 이로써 신설합당된 통합민주당은 정당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다.

통합민주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 등록 내용 | | | | | |
|-----------------|---|--------------|------|-----------------------|---------------|-----------------|--|
| 대표자 | 이기택·김원기·장을병 |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 | 제정구 |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1-5 | | | | | | |
| 당원수 | 800,000명 | | | | | | |
| 수입기구 합동회의 | 1차회의(1995.12.4. 17:00), 38명 중 37명 참석 2차회의(1995.12.12. 14:00), 38명 중 27명 참석 | | | | | | |
| 합당하는 정당의 합당결의기관 | | | | | | | |
| 정당명 | 등록 연월일 | 대표자 | 지구당수 | 합당결의기관 | | | |
| | | | | 일자 | 장소 | 성원상황 | 비고 |
| 민주당 | 91. 9. 16 | 홍영기 박 일 | 170 | 95. 11. 29 (당무회의) | 국회본관 145호실 | 41명 중 27명 참석 | 전당대회(95. 8. 28)에서 당무회의 또는 그 결의에 의한 기구를 통합수입기관으로 정함 |
| 개혁신당 | 95. 11. 29 | 장을병 홍성우 | 29 | 95. 12. 4 (통합수입기구) | 개혁신당 회의실 | 20명 중 18명 참석 | 창당대회(95. 11. 27)에서 통합문제에 관한 전권을 통합수입기구에 위임함 |

합당 전 민주·개혁신당 지구당 현황

| 구분 | 민주당 | 개혁신당 | 개편대상지구당 |
|--------|--|----------------------------|------------------------------|
| 합계 | 153 | 14 | 15 |
| 서울(21) | 성동구갑, 광진구갑, 성북구갑, 도봉구를, 서대문구를, 양천구갑, 강서구갑, 구로구갑, 영등포구를, 서초구를, 송파구갑, 송파구를, 강동구갑, 강동구를 (14) | 중앙구를, 금천구, 동작구갑, 송파구병 (4) | 용산구, 마포구를, 강남갑 (3) |
| 부산(16)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동래구를, 연제구, 남구를, 수영구, 북구를,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를, 강서구 (14) | | 부산진구를, 북구 (2) |
| 대구(11) | 중구, 동구갑, 동구를, 서구갑, 서구를, 남구, 북구를, 수성구갑, 수성구를, 달서구갑, 달서구를 (11) | | |
| 인천(9) | 중구, 동구, 남구갑, 남구를, 남동구, 북구갑, 강화군 (6) | 연수구, 서구 (2) | 계양구 (1) |
| 광주(0) | | | |
| 대전(5) | 동구갑, 동구를, 중구, 서구를, 대덕구 (5) | | |
| 경기(27) |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정안구, 성남시수정구,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소사구, 광명시갑, 동두천시·양주군, 고양시갑, 구리시, 평택시을, 평택군,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광주군, 여주군, 파주군, 연천군·포천군, 이천군, 용인군 (21) | 성남시분당구, 안양시 동안구갑, 광명시을 (3) | 수원시팔달구, 부천시원미구갑, 오산시·화성군 (3) |
| 강원(12) | 춘천시, 횡성군·원주군, 강릉시갑, 명주군·양양군, 태백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인제군, 삼척시, 홍천군·횡성군, 정선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 (10) | | 춘천시을, 영월군·평창군 (2) |
| 충북(9) |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제천군·단양군, 청원군, 보은군·영동군, 진천군·음성군, 괴산군 (8) | | |
| 충남(13) | 천안시, 천안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태안군, 금산군,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홍성군, 예산군 (13) | | |

| | | | |
|--------|---|---------------------------|------------------|
| 전북(9)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원주군,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임실군 · 순창군 | 전주시원산구,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갑 (3) | |
| 전남(6) | 목포시, 곡성군 · 구례군, 화순군, 해남군 · 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6) | | |
| 경북(21) |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 울릉군, 경주시을, 경주군, 김천시, 안동시갑, 안동군, 구미시, 구미시을,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 청도군, 성주군 · 칠곡군, 달성군 · 고령군, 의성군, 청송군 · 영덕군, 예천군 (18) | 경주시갑, 구미시갑 (2) | 울진군 (1) |
| 경남(21) | 창원시갑, 울산시중구, 울산시남구, 울산시동구, 울산시울주구, 마산시회원구, 진주시갑, 진주시을, 통영시 · 고성군,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 함안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군, 거제시, 남해군 ·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19) | | 창원시을, 마산시합포구 (2) |
| 제주(2) | 제주시, 북제주군 (2) | | |

【 강 령 】

우리는 독재정치와 부패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하고 21세기의 통일조국과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정통 아당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개혁신당을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우리는 파행과 부정으로 얼룩진 전근대적 정치사에 중지부를 찍고, 봉당 정치와 맹주 정치를 대체하는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으로 나섰으며,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 삶의 질이 향상된 민주복지공동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화의 과제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수권 정당 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 사회적 평등과 연대, 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보편적 가치라고 믿어,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독재와 독점을 배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우리는 지역간 · 계층간 · 남녀간 · 도농간의 부당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인간다운 삶과 보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건강, 교육, 주택, 환경과 같은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공동체를 건설한다.

【 기본정책 】

- | | |
|-------------------------|--------------------------|
| I. 깨끗하고 생산적인 참여민주정치 구현 | VI. 성차별의 철폐와 여성의 권익신장 |
| II. 정의롭고 내실 있는 국민경제 건설 | VII. 자율적,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
| III.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실현 | VIII.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 |
| IV.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교육의 실현 | IX. 다변적 전문외교와 자주국방의 실현 |
| V.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태계의 보전 | X.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민족통일 |

정당등록 이후 통합민주당은 12월 22일 최고위원 6명의 인선을 단행하였다. 토론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최고위원에는 계파별 2인씩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기택계의 강창성 의원과 장경우 전 의원, 통합모임의 이부영·김정길 전 의원, 개혁신당 측의 홍성우 변호사와 하경근 전 중앙대 총장 등 6명을 임명하였다. 이어 12월 26일에는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에 제정규 의원, 이철 의원, 서경석 전 개혁신당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이로써 통합민주당은 당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하였다.

지구당 개편현황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서울 | 종로구(노무현), 중구(김유진), 용산구(강창성), 성동구(임종인), 성동을(설영주), 광진구(강수림), 광진을(박석무), 동대문구(장광근), 동대문을(김성식), 중랑구(신영식), 중랑을(조명원), 성북구(이철), 성북을(황호산), 강북구(전대열), 강북을(이기택), 도봉구(한평수), 도봉을(유인태), 노원구(유영래), 노원을(이문옥), 은평구(정두환), 은평을(이장희), 서대문구(박경산), 서대문을(김태원), 마포구(김웅), 마포을(장신규), 양천구(서경석), 양천을(이두업), 강서구(박계동), 강서을(고진화), 구로구(장병원), 구로을(이승철), 금천구(이원영), 영등포구(한경남), 영등포을(김인동), 동작구(장기표), 동작을(김왕석), 관악구(김기정), 관악을(이상호), 서초구(곽일훈), 서초을(안동수), 강남구(홍성우), 강남을(이재경), 송파구(양문희), 송파을(김중원), 송파병(박인제), 강동구(이부영), 강동을(장기욱) |
| 부산 | 중동구(김정길), 서구(최기복), 영도구(김형기), 부산진구(서정범), 부산진을(황백현), 동래구(노재철), 동래을(정인조), 남구(허종복), 북구·강서구(우주호), 북구·강서을(안병해), 해운대구·기장구(이기택), 해운대구·기장을(김기우), 사하구(조경태), 사하을(김도강), 금정구(이창규), 금정을(김재규), 수영구(손태인), 사상구(조용호), 사상을(정윤재) |
| 대구 | 중구(이강철), 동구(임대운), 동구을(유준근), 서구(우동철), 남구(김진태), 북구(인윤기), 수성구(권오선), 수성을(정상태), 달서구(서정대) |
| 인천 | 중동구·옹진구(이신웅), 남구(유종섭), 남구을(안영근), 연수구(서상섭), 남동구(김종용), 남동구을(박호영), 부평구(정정훈), 부평구을(정화영), 계양구·강화구(김말룡), 계양구·강화을(정해남), 서구(손기선) |
| 광주 | 동구(김병태), 서구(최운용), 남구(전선수), 북구(유인상), 광산구(이승준) |
| 대전 | 동구(김덕경), 동구을(강구철), 중구(김홍철), 서구(윤석대), 서구을(이희원), 유성구(이병령), 대덕구(김원웅)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유용근), 수원시 권선구(김정태), 수원시 팔달구(김대권), 성남시 수정구(김준기), 성남시 중원구(김일주), 성남시 분당구(성유보), 안양시 만안구(김준용), 안양시 동안구(최병권), 안양시 동안구(송운학), 부천시 원미구(김정보), 부천시 원미구(조영상), 부천시 소사구(이홍중), 부천시 오정구(원혜영), 광명시(최정택), 광명시(김승남), 평택시(김박정수), 평택시(장기천), 동두천시·양주군(김형광), 안산시(문영희), 안산시(장경우), 고양시(이근진), 고양시(홍기훈), 과천시·의왕시(김부겸), 구리시(조정무), 남양주시(민병주), 오산시·화성군(우호태), 시흥시(제정규), 군포시(여익구), 하남시·광주군(곽인식), 여주군(이규택), 파주군(박영식), 연천군·포천군(김유근), 가평군·양평군(조정용), 이천군(황규선), 용인군(나진우), 안성군(이무역), 김포군(윤문수) |
| 강원 | 춘천시(최윤), 춘천시(유남선), 원주시(김박정원), 원주시(안재운), 강릉시(함영희), 강릉시(최욱철), 태백시·정선군(최승영),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조영두), 삼척시(장을병), 영월군·평창군(엄화열),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김철배) |
| 충북 | 청주시 상당구(신창민), 청주시 흥덕구(정기호), 충주시(정기영), 제천시 단양군(김대부), 청원군(신인민), 보은군·옥천군·영동군(최국), 진천군·음성군(구자용), 괴산군(김년태) |

| | |
|----|--|
| 충남 | 천안시(박동인), 공주시(윤원중), 아산시(이진구), 서산시 태안군(윤석호), 금산군·논산군(강희제), 연기군(김준희), 부여군(김택수), 서천군(나소열), 청양군·홍성군(홍문표), 예산군(김성식), 당진군(정석래)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임광순), 군산시(양재길), 군산시(고홍길), 익산시(손인범), 익산시(박경철), 정읍시(김원기), 남원시(최희원), 김제시(조병인), 완주군(이성호), 진안군·무주군·장수군(최팔용), 임실군·순창군(양대원), 부안군(김일범) |
| 전남 | 나주시(박기수), 담양군·정선군(기노을), 보성군·회선군(정인환), 강진군·원도군(윤동환), 해남군·진도군(임종필), 무안군(김승차), 함평군·영광군(김기수) |
| 경북 | 포항시 북구(방무성), 포항시 남구·울릉군(김병구), 경주시(한점수), 경주시(윤석보), 김천시(박연옥), 안동시(권오을), 안동시(신종천), 구미시(윤상규), 구미시(윤정석), 영천시(이준우), 문경시·예천군(안희대), 경산시·청도군(김경윤), 고령군·성주군(김창문), 군위군·칠곡군(권천문), 의성군(이왕식), 청송군·영덕군(박명규), 영양군·봉화군·울진군(김종복) |
| 경남 | 창원시(이상익), 창원시(이주영), 울산시 중구(송철호), 울산시 남구(한만우), 울산시 남구(이규정), 울산시 울주군(권기술), 마산시 합포구(박재규), 마산시 회원구(박재혁), 전주시(강갑중), 진해시(최 혁), 통영시·고성군(송성욱), 사천시(유홍재), 김해시(이광희), 밀양시(이상천), 거제시(지만호), 의령군·함안군(이정 환), 청녕군(박상곤), 양산군(박수근), 남해시·하동군(최종림), 산청군·함양군(도상수), 거창군·합천군(백신중) |
| 제주 | 제주시(신두원), 북제주군(강희찬) |

나. 당명변경과 이기택 단일체제의 출범: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96. 6. 13)

통합민주당 출범 4개월 후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신설합당 후 처음 치른 전국선거에서 지역구 9석, 전국구 6석 등 총 15석을 얻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선거 직후 4월 29일 이규택 당선자의 탈당에 이어 5월 4일 최옥철·황규선 당선자가 탈당하여 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1996년 5월 30일 제15대 국회 개원 당시 통합민주당은 12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당 체제를 정비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통합민주당 임시전당대회는 1996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 통합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헌개정을 통하여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3인 공동대표(2대표 1상임고문)의 집단지도체제 또한 1인 총재 중심의 단일체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임시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안은 바뀐 당헌에 따른 당 총재의 선출이었다. 임시전당대회가 결정되기 이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당권경쟁을 벌이며 당 총재 추대와 경선, 그리고 인선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벌였다. 결국 당 총재 선출은 경선방식으로 치러졌고 이기택 상임고문과 홍성우 상임고문이 대결을 벌였

다. 투표결과 총 투표자 2,066명 중 1,142표를 얻은 이기택 상임고문이 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이로써 통합민주당은 이기택 총재 단일체제의 민주당으로 재정비되었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기택 상임고문이 총재로 선출된 후 인사하고 있다(1996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중앙당 변경등록 내용(1996. 6)

| 구분 | 기존 | 변경 |
|-----|-----------------|-----|
| 정당명 |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 | 민주당 |
| 대표자 | 이기택 · 김원기 · 장을병 | 이기택 |

【개정 당헌】

1. 지도체제 개편 - 단일지도체제

- 대표최고위원을 총재로 하고, 최고위원을 부총재로 하며 최고위원회의를 총재단회의로 함
- 총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한 당무위원
 - 총재는 전당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2 위 득표자를 결선투표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
 - 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하고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함
 - 총재 권한대행은 총재가 지명하되, 지명이 없을 때에는 부총재 중 연장자순으로 권한 대행

2. 당명 개칭: 당명을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함

3. 인원 수의 합리적 조정

- 지구당 선출대의원 수를 '차등'에서 '동등'하게 함
 -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를 각급 공직선거에서의 득표율, 당원의 수,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차등 규정한 것을 '7인'으로 동등하게 함
- 당무위원 수를 5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함
- 당기위원회 위원 수와 부위원장 수를 조정함
 - 당기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당기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조정
- 시·도지부 대의원대회 대의원 수
 - 지구당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10인에서 5인으로 조정

이후 민주당은 6월 10일 당규개정 및 당 기구 합리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속적인 당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6월 14일에는 부총재 및 당 8역을 선임하고 3인의 상임 고문도 위촉하여 중앙당 고위당직자 인선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인선결과에 대해 비주류 측은 '이기택 총재의 직할체제 구축'이라며 반발하였고, 그 결과 김원기·장을 병 전 대표가 상임고문직을 고사하는 한편 부총재 및 대변인으로 인선된 이부영·김홍신 의원도 당직 수락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96. 6)

| 직 책 | 변경내용 | 직 책 | 변경내용 |
|-------|--------------------------|--------|---------------|
| 부총재 | 이부영, 하경근, 강창성, 장경우, 김정길, | 상임고문 | 이중재, 김원기, 장을병 |
| 사무총장 | 조중연 | 당기위원장 | 권기술 |
| 원내총무 | 제정구 | 교육연수원장 | 한경남 |
| 정책위의장 | 이규정 | 홍보위원장 | 오현주 |
| 대변인 | 김홍신 | 기조실장 | 권오을 |

이처럼 새 지도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의 당내상황은 안정과 도약보다 오히려 당내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이전 이기택 상임고문과 당권경쟁을 벌이던 비주류 측은 전당대회 결과 선출된 이기택 총재체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택 상임고문에게 협조할 수 없다”라며 당무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기택 총재 측과 김원기 전 대표 중심의 비주류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양측의 대립상황이 지속되면서 비주류 측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세를 규합하기 시작하였고, 이기택 총재는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측 인사들은 당직을 사퇴하며 독자적인 활로 모색을 구체화하였다. 10월 5일에는 제정구 원내총무가 사퇴하였고, 이후 홍성우 전 공동대표, 이수인·이미경 의원, 이철 전 의원, 이삼열, 성유보 등이 당무위원직을 사퇴하며 이에 동참하였다. 결국 이들은 1996년 11월 9일 독자

세력인 ‘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하였고, 김원기 전 민주당 대표가 상임공동대표, 제정구 전 민주당 원내총무가 사무처장을 맡아 이 모임을 이끌었다. 국민통합추진회의에는 전국구의원 김홍신·이미경·이수인 의원을 비롯하여 김원웅·노무현·유인태·원혜영 전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전국구의원들은 국민통합추진회의에 동참하되 일단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였다.



▲ 국민통합추진회의 발족식(1996년 11월 9일).

다. 8·28 정기전당대회와 조순체제의 출범(1997. 8)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참패와 연쇄탈당, 당내갈등과 분열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당세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1997년 들어서도 군소정당의 한계 속에 특별한 변화와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당세 확장과 재도약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계기가 필요하였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이기택 총재의 7·24 포항시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기택 총재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그 결과 더욱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이기택 총재는 결국 8월 4일 당 총재직을 사퇴하였고, 이후 민주당은 강창성 부총재를 총재권한대행으로 지명하여 일시적인 대행체제로 운영되었다.



▲ 조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뒤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1997년 8월 28일).

이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선택한 또 다른 시도는 조순 서울시장의 영입이었다. 조순 서울시장은 영입제의 과정에서 당 총재직과 대통령후보를 요구하였고, 8월 초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8월 20일 입당식을 갖고 민주당에 합류하였다. 조순 서울시장 입당 직후 민주당은 8월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체제를 정비하였다. 우선 국내·외 및 당내·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정강·정책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후보 선출, 총재단 구성, 당무위원 수 등과 관련된 일부 당헌 조항도 개정하였다. 더불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새로운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당의 이념과 정책 및 체제를 정비하여 새롭게 조순 총재체제를 출범시켰다. 이후 민주당은 조순 총재가 대통령선거운동에 나서면서 강창성 총재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였고, 더불어 부총재 등 중앙당 주요 당직을 개편하여 대통령선거 체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강령 · 정책 및 당헌 주요내용(1997. 8)

| 【 강령 및 정책 】 | |
|------------------------------|---|
| 1장. 깨끗하고 생산적인 참여민주정치 구현 |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 내용정리(1항), 국민저항권 분리 신설(12항) ○국회 상시운영 명문화,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임명의 국회동의 분리신설(7항) - 국회동의의 범위를 부총리, 안기부장, 한은총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확대 |
| 2장. 정립되고 내실있는 국민경제 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2항), 금융계약의 형평성 제고(6항) ○농업분야의 식량안보체계의 확립 분리 신설(13항), 농어민단체 육성 분리 신설(14항) |
| 4장.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인간교육과 문화창달 실현 | ○민족통일 교육의 실시를 분리 신설(4항), 학원폭력 척결(7항) |
| 5장.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태계의 보존 | ○환경보전적 행정책 실시를 분리 신설(10항) |
| 9장. 다변적 전문외교와 자주국방의 실현 | ○미 · 일 신안보지침 채택에 따른 일본의 정치 · 군사적 부상 내용을 추가(1항) ○평화통일 외교에서 북한의 개방속도에 따른 미국 · 일본과의 교류와 외교관계수립에 전향적으로 대처(3항) |

| 【 당 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당대회 권한에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을 신설 ○당무위원을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 ○총재단회의 구성을 총재와 여성 1인을 포함한 6인의 부총재에서 총재와 10인 이내의 부총재로 조정 ○대통령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당선 규정을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으며 1, 2위간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 |

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97. 8)

| 직 책 | 변경내용 | 직 책 | 변경내용 |
|-----------|---------------|--------|------|
| 대표자 | 조 순 | 사무총장 | 이규정 |
| 총재권한대행 | 강창성 | 원내총무 | 권기술 |
| 부총재 | 조종연, 하경근, 장경우 | 정책위의장 | 김승진 |
| 전당대회위원장 | 홍영기 | 교육연수원장 | 전대열 |
| 수석전당대회부의장 | 정병원 | 대변인 | 권오을 |

라. 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민주당의 소멸

1997년 8월 28일 정기전당대회를 통해 조순 총재체제로 재정비된 민주당은 9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조순 총재를 제15대 대통령후보로 공

식 추대하면서 대통령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순 총재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회복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후보단일화와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가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자대결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조순 총재의 지지율 상승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타 후보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조순 총재 또한 '건전세력연대'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후 조순 총재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측과 접촉하며 건전세력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해 나갔다. 결국 민주당은 신한국당과의 연대를 결정하였고, 11월 5일 양당의 연대를 선언하였다. 이틀 뒤 11월 7일에는 이회창 총재와 조순 총재가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전격 발표하였고, 이어 11월 13일 다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는 이회창, 총재는 조순이 맡기로 한다는 후보단일화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합당 및 후보단일화 합의로 양당은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였고, 11월 20일 통합정당의 당명과 정강정책을 확정하였다. 이어 11월 21일에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통합대회를 열어 합당을 의결하고 신설정당 '한나라당'을 출범시켰다. 통합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양당이 합당을 의결하였고, 이어 2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출범선언과 함께 대통령선거후보와 총재를 추대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1995년 12월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신설합당에 의해 통합민주당으로 출범한 이후 2년 만에 신한국당과 신설합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6. 국민신당(1997. 11. 10~1998. 9. 24)

가. 창당배경

국민신당은 1997년 7월 21일 실시된 신한국당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탈당하여 1997년 11월에 창당한 정당이다.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세워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지지확보에 실패하여 이회창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후보선출 직후 50%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회창 대세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야당에 의하여 제기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으로 인하여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신한국당 내에는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선거 승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교체론’이 제기되었다. 반면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997년 8월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8월 26일 대통령과 당 총재의 분리, 총재를 비롯한 지도부와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선 등 상향식 민주정당으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당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어 8월 3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신한국당은 현재 위기상황이고 위기의 본질에 대한 활발한 당내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교체 공론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개혁안을 이회창 대표 측이 수용하지 않자 이인제 지사는 9월 8일 경기도지사직을 사임한 뒤 9월 13일 “세대교체만이 30년의 낡고 병든 3김 정치구도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의 틀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한국당 탈당과 대통령선거 독자 출마를 선언하였다.

나. 창당준비위원회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후 독자세력 형성

방법에 대해 ‘국민후보’ 등 비정당적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방안과 즉시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수권능력 등 조직적 기반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연하 국회의부장, 신도성 전 통일부장관 등 발기인 대표 3,000여명은 1997년 10월 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신당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어 1997년 10월 14일에는 대구시민회관에서 발기인 4,000명 중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였고,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신당에 참여한 장을병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국민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권위주의 정치와 지역패권정치를 청산하고 희망 있는 정치리더십과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명예혁명을 달성하자”라는 창당발기취지문을 채택하고 신당의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 인간교육 최우선, 자율과 창의 활기찬 경제건설, 풍요롭고 희망찬 문화복지사회 구현, 깨끗하고 생산적 국민감동정치 실천, 평화통일 조기 달성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 실현 등 5개항을 제시하였다. 또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신당을 하의상달식의 언로가 보장되는 투명한 민주정당, 과학적 정책정당,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 생활운동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마친 국민신당(가칭)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하였다.

국민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장을병 | 회계책임자 | 채호일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안원빌딩) | | |
| 발기인 명단 | 이인제, 이철용, 송천영, 조규범, 류제인, 류승규, 송광호, 박태권, 이현도, 심상준, 강보성, 유성환, 황소웅, 신도성, 김홍경, 조연하, 김동주, 허재홍, 이상욱, 고흥길, 김남정, 양종직, 문갑돈, 안부근, 이강수, 이수영, 정광작, 주정우, 장을병, 채호일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인 인간교육과 자율과 창의 활기찬 경제건설 ○풍요롭고 희망찬 문화복지사회의 구현과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 감동정치의 실현 ○평화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 | | |

다. 정당등록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국민신당(가칭)은 10월 22일 대전 동구를 지구당 등 대전과 충남·북 6개 지구당의 합동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구당 합동 창당대회를 가진 뒤 11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국민신당 창당대회 및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신당 창당대회(1997년 11월 4일).

대의원 4,157명중 3,9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당대회에서 국민신당(가칭)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이인제 전 경지지사를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국민신당(가칭)은 11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8개 지구당과 1만 9,870명의 당원(법정당원 1,127명) 등 창당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신청을 마쳤고, 11월 10일 중앙선관위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국민신당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이만섭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901호 | | | |
| 주요간부 | 최고위원 | 전당대회위원장 | 전당대회부위원장 | 회계책임자 |
| | 장을병 | 심상진 | 송영진 | 채호일 |
| 지구당 등록현황(28) | | | | |
| 구 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2) | 강북구을(이철용), 관악구을(박홍석) | | | |
| 부산(2) | 영도구(김용원), 해운대구·기장군을(김동주) | | | |
| 대구(3) | 중 구(유성환), 서구을(서중현), 달서구을(변을유) | | | |
| 광주(1) | 동 구(조규범) | | | |
| 대전(2) | 동구을(송천영), 중 구(안양로) | | | |
| 경기(3) | 성남시수정구(유제인), 성남시중원구(최인식), 이천시(이희규) | | | |
| 강원(1) | 태백시·정선군(유승규) | | | |
| 충북(1) | 제천시·단양군(송광호) | | | |
| 충남(3) | 공주시(윤원중), 서산시·태안군(박태권), 연기군(김승웅) | | | |
| 전북(2) | 전주시덕진구(이현도), 군산시을(고홍길), | | | |
| 전남(3) | 곡성군·구례군(심상준), 고흥군(신금식), 강진군·완도군(김창석) | | | |
| 경북(2) | 경주시갑(백수근), 경산시·청도군(정재학) | | | |
| 경남(3) | 사천시(김태웅), 김해시(류신현), 밀양시(서정호) | | | |

【강 령】

오늘 우리는 정치의 명예혁명을 실천하여 21세기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신당을 창당한다.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국제질서와 문명사적 변화인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각오를 다짐한다.

- 행복한 국민생활
- 참여와 기회의 민주주의
- 자율과 창의의 시장경제
- 열린 한민족 문화공동체
- 평화통일과 인류공영

【기본정책】

- 행복한 국민생활 보장
-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감동정치 실현
-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
-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창조
- 정보화 혁명으로 스피드경제 구축
- 평화통일의 달성과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
- 더불어 잘사는 문화사회 구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라. 대통령선거패배와 조직정비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경선불복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한 것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실제 탈당을 전후하여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앞설 만큼 높았고, 당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일에 가까워 가면서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점차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고, 최종선거 결과 19.2%를 득표하는 선전을 벌였지만 결국 3위로 낙선하였다.

선거 후 국민신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이인제 후보가 500만 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정치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내 8석의 군소정당이지만 대통령선거 이후 1998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뿌리 내린다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자치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신당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6일 박범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이헌 정책위의장, 이용삼 원내총무, 김운환 부산지부장, 김학원 총재비서실장, 원유철 사무1부총장, 이수연 사무2부총장, 김충근 대변인 등 12명으로 당무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 한나라당(1997. 11. 24~)

가.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신설합당

1) 합당배경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1997년 7월 21일 신한국당의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직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이회창 대세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선거준비 과정에서 두 아들에 대한 야당의 병역면제 의혹 제기로 지지율이 급락하였다. 상황의 반전

으로 당내에는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선거 승리 가능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교체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조순 전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조순 후보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하락하였다. 특히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신한국당 탈당 후 대통령선거 출마선언과 함께 국민신당을 창당하면서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였고, 그 결과 주요 경쟁후보군에서 멀어져 군소후보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달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김대중·김종필 연합(소위 DJP연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DJP연합 단일후보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순 총재는 10월 23일 “앞으로 건전세력연대를 위해 마음을 비울 용의가 있으며 연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제 정파 및 각 후보들과 회동을 주도적으로 주선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회창 총재 또한 SBS(서울방송)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3김 청산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는 합의가 된다면 합당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월 27일에는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가 회동을 갖고 ‘반DJP연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순 총재는 이회창 총재와의 회동 이후에도 ‘반DJP연대’와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와의 3자 연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순 총재는 3자연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한국당 경선에서 선출된 사람이 민주적 원칙으로 볼 때 연대의 명분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우선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의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11월 5일 공식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순 총재의 입장발표 이후 양당 총재간 합당협상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합당시기와 합의문 초안 중 ‘대통령후보와 당 총재 분리’ 문구에 대하여 민주당 조순 총재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11월 7일 조순 총재에

게 '자신을 비우고 양보의 원칙 위에서' 라는 문구로 변경하고 대통령선거 전 합당과 당명 및 당헌·당규 변경의 입장을 전달하여 조순 총재와 통합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당 논의과정을 마친 양당 총재는 11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김 청산과 건전세력의 규합, 경제회생을 위하여 당 대 당 통합원칙에 의한 연대추진, 대통령후보단일화, 새로운 당명과 당헌·당규로 통합, 3김청산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4개항의 합당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당합의문

우리는 낡고 부패한 3김정치시대를 청산하고 정치혁신을 주도하여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이루어 나갈 건전정치세력 형성을 위해 서로의 뜻과 힘을 모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연대는 당 대 당 통합의 원칙으로 추진한다.
2. 3김정치를 연장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식 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단호히 맞서고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국적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상호 양보의 원칙 위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입한다.
3. 우리는 두 당의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당명과 당헌, 당규로 통합한다.
4. 우리는 3김정치 청산과 정치혁신,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국민대통합이란 취지에 동조하는 모든 정치세력 및 시민대표 등으로 '3김정치 청산 범국민추진위원회' 를 구성한다.

1997년 11월 7일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 · 민주당 총재 조순

2) 정당등록(신설합당)

합당선언 후 양당은 각기 합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신한국당은 1997년 11월 9일 김태호 사무총장 주재로 선거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25일 제4차 전당 대회 및 민주당과의 통합전당대회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과의 합당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하고, 이틀 후인 11월 11일 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린 신한국당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합당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신한국당과의 합당추인에 대한 당내 논의과정에서 당의 지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합당선언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11월 12일 합당추진을 위하여 개최한 제169차 당무회의에서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은 합당에 앞서 지분을 문서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회의가 3

차례 정회하는 등 합당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신한국당은 민주당의 당무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지분보장에 대한 합의문 명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조순 총재가 전주에 내려가 있던 이회창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지분문서화’의 양해를 구했고, 이규정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김태호 신한국당 사무총장을 만나 30%의 지분을 민주당에 할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서명하였다. 지분문제가 해결된 후 민주당은 합당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참석자 46명중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합당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합당을 반대한 이부영 부총재 등은 “오늘로 한국 정통야당의 맥에 조종이 올랐다”라며 반발하였다.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는 1997년 11월 13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 양당을 통합하고 대통령후보는 이회창, 통합신당의 총재는 조순으로 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3개항의 합의문에 공동서명한 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의 통합과 후보단일화를 공식선언하였다. 양당 총재는 공동발표문에서 “우리는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후보단일화를 이룸으로써 지역감정을 불모로 한 3김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대통합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이부영 부총재, 권기술 원내총무 등 합당에 반대하여온 지구당위원장들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통합신당 불참을 선언하였다.

11월 13일 합당 공식선언 후 양당은 신한국당 김태호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규정

후보단일화 합의문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 대화합과 창조적 정치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 이전에 통합한다. 그 합당 절차는 양당 사무총장이 추진한다.
2. 합당절차를 통해 통합된 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로 하고 조순 민주당 총재는 통합당의 총재직을 맡아 함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
3. 21세기의 문턱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의 구국적 결단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1997년 11월 13일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 · 민주당 총재 조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각각 3명으로 구성된 6인의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합당작업에 돌입하였다. 협상대표단은 11월 16일 통합협상 3차 회의를 열고 통합정당의 명칭을 무한히 ‘큰 나라’와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한나라’를 당명에 넣어 ‘한나라당’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신한국당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바로세우기’와 ‘세계화’ 문구를 삭제하고 정강·정책에 대통령중심제를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 양당은 신당의 총재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사무총장 아래 3명의 부총장을 두기로 하였다.

통합전당대회 전날인 11월 20일 양당 사무총장은 ‘합당조인식’을 갖고 협상 합의문에 서명해 합당절차를 완료하였다. 최종합의에서 양당은 총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민주당 고위인사 2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최고위원 선임·당직개편 및 지구당 배분문제는 대통령선거 이후인 1998년 3월 정기전당대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대신 양당은 당헌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양당 기구와 당직자를 1998년 3월 정기전당대회까지 존속시켜 이원화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회의는 한시적으로 총재가 후보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당무운영위원회’의 체제로 대체하였다.

통합협상을 마친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1997년 11월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의원 1만 1,895명중 9,3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의하였다. 이어 이날 오후 양당의 대의원 1만 3,790명중 1만 9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합당을 의결한 뒤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및 명예총재로, 민주당의 조순 총재를 초대 총재로 선출하였다. 합당대회를 마친 한나라당은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 합당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 신청을 마쳤고,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정당등록에서는 대표자에 조순, 대표최고위원에 이한동, 당원 405만 7,545명(법정당원수 1만 7,479명), 9개항의 강령과 62개항의 기본정책 및 당헌 등을 신고하



▲ 신한국당·민주당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1997년 11월 21일).

였다. 그러나 지구당과 당 지부 및 당 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지구당의 대표자 및 당지부와 당연락소의 책임자 주소·성명 및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은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120일 이내에 보완하기로 하고 등록신청을 완료하였다.

한나라당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 등록 내용 | | | | | |
|-------------------------|------------|--|-------|------------|----------|-------------------------|-----------------------|
| 대표자 | | 조 순 | | | | | |
| 사무소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 | | | | |
| 주요간부 | | 대표최고위원 | | | 회계책임자 | | |
| | | 이한동 | | | 김태호 | | |
| 수입기관합동회의 |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의사·의결정족수 | |
| | | 1997. 11. 21 | | 대전 충무체육관 | | 구비(13,790명중 10,964명 참석) | |
| 당원의 수 | | 4,057,545명 (법정당원수: 17,479명, 일반당원수: 4,040,066명) | | | | | |
| 합당하는 정당의 전당대회 및 합당결의 기관 | | | | | | | |
| 정당명 | 등록 연월일 | 대표자 | 지구당 수 | 합당결의 사항 | | | |
| | | | | 일 자 | 장 소 | 성원상황 | 비 고 |
| 신한국당 | 90. 2. 15 | 이회창 | 253 | 97. 11. 21 | 대전 충무체육관 | 11,895명 중 9,357명 참석 | 신한국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합당결의 |
| 민주당 | 95. 12. 21 | 조 순 | 225 | 97. 11. 12 | 민주당 중앙당사 | 53명중 46명 참석 | 민주당 제169차 당무회의에서 합당결의 |

합당 전 신한국당 · 민주당 지구당 현황

| 구분 | 선거구수 | 1개 지구당 | | 2개 지구당 | 각 정당의 지구당 수 | |
|----|------|--------|----|--------|-------------|-----|
| | | 신한국당 | 민주 | | 신한국당 | 민주당 |
| 합계 | 253 | 28 | - | 225 | 253 | 225 |
| 서울 | 47 | 8 | - | 39 | 47 | 39 |
| 부산 | 21 | 1 | - | 20 | 21 | 20 |
| 대구 | 13 | 1 | - | 12 | 13 | 12 |
| 인천 | 11 | - | - | 11 | 11 | 11 |
| 광주 | 6 | 1 | - | 5 | 6 | 5 |
| 대전 | 7 | - | - | 7 | 7 | 7 |
| 울산 | 5 | 1 | - | 4 | 5 | 4 |
| 경기 | 38 | 2 | - | 36 | 38 | 36 |
| 강원 | 13 | 1 | - | 12 | 13 | 12 |
| 충북 | 8 | - | - | 8 | 8 | 8 |
| 충남 | 13 | 1 | - | 12 | 13 | 12 |
| 전북 | 14 | 1 | - | 13 | 14 | 13 |
| 전남 | 17 | 10 | - | 7 | 17 | 7 |
| 경북 | 19 | - | - | 19 | 19 | 19 |
| 경남 | 18 | - | - | 18 | 18 | 18 |
| 제주 | 3 | 1 | - | 2 | 2 | 2 |

【강 령】

전문

국가발전과 국정운영을 주도해 온 신한국당과 정통야당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이 통합한 '한나라당'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분열과 부패의 구정지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으로 국민대통합의 선진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안정 속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한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 생활자치를 구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착 · 발전시켜 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자율과 협동, 창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활력 있는 선진경제를 이룩한다.
3.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발전과 선진대국 진입의 근간임을 자각하여,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정보화 시대의 세계 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
4. 우리는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선진산업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6.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개발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자원절약형 사회를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사회를 구현한다.
7. 우리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다.
8.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한다.
9.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영 · 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며 능동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기본정책】

| | | |
|---|--|---|
| <p>깨끗하고 생산적인 21세기 새로운 정치 구현</p> | <p>1. 국민대통합의 정치실현 2.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함 3. 깨끗하고 합리적인 선진정치문화 창출 4. 대통령제로 나라의 안정을 기함 5. 정당의 운영을 민주화·현대화</p> | <p>6. 국가경영체제의 혁신을 통한 정부경쟁력 제고 7.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함 8. 국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9. 지방자치를 내실화</p> |
| <p>활력 있고 공정한 선진경제 건설</p> | <p>1.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함 2. 경제안정과 균형을 이룩함 3.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증진 4.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5.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한 경제 구현 6. 금융산업의 자율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 7.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함 8. 농어업 구조개선 촉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p> | <p>9.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10.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 11. 1가구1주택 시대의 실현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 1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13.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난 대폭 완화 14. 우주와 해양 개척</p> |
| <p>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p> | <p>1.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과 과학기술자 우대 2. 과학기술 개발의 자율과 경쟁 도입 3. 과학기술행정 쇄신</p> | <p>4.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인력 양성 5. 정보화사회 촉진</p> |
| <p>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복지사회 실현</p> | <p>1. 사회보장제도 확충, 전 국민의 사회보험화 추진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 증진 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 보장 4.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p> | <p>5.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6.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 실현 7.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p> |
| <p>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과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p> | <p>1. 창의적인 인간교육 실천 2. 학교교육 정상화 3. 민족통일교육 실시 4.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p> | <p>5. 민족문화 창달로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임 6.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 신장 7.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8. 사회공동체 의식 확산</p> |
| <p>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p> | <p>1.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회복 2. 맑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 3.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강화 4.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 추구</p> | <p>5. 자연생태계 보전 6. 선진환경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 육성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p> |
| <p>여성참여 기회의 확대와 실 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p> | <p>1. 여성의 가사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정착 2.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참여 확대</p> | <p>3. 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로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평등을 보장 4.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정착</p> |
| <p>확고한 국가안보역량 강화</p> | <p>1.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한 자주국방체제 확립 2.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튼튼한 국가안전 보장체제 구축</p> | <p>3. 군의 합리적 제도발전으로 국방력 기초 강화</p> |
| <p>통일실현과 세계평화에 기여</p> | <p>1.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반도 평화 구축 2.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국통일 실현 3.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강화</p> | <p>4. 남북 간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확대 5.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6.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증진</p>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나. 제15대 대통령선거 패배와 당권투쟁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신설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재출범하였다. 그러나 합당을 통해 단일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선거 막바지 선전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39만 557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여당사상 최초의 대통령선거 패배였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속하게 통합이 성사된 정당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패배는 당을 지탱할 응집력을 약화시켰고, 당내 구조변화는 불가피하였다. 이에 대통령선거 패배 직후 한나라당은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각 계파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당 내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조순 총재와 이한동 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당 재정과 조직 감량문제, 구 신한국당과 구 민주당 간 세부적 통합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강조하며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주장하였다. 반면 김윤환 고문과 이기택 고문 등은 계파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복수 부총재 또는 최고위원을 두는 집단지도체제로 지도체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덕룡 의원 등은 ‘선단결’을 강조하면서도 각 계파가 주요 사안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자는 절충론을 제시하였다.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당내에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각 계파의 중진들이 지도체제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IMF관리체제에 놓인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계파 간 힘겨루기와 당권투쟁의 본격화는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식한 결과였다. 조순 총재를 비롯하여 이한동, 김윤환, 김덕룡, 신상우, 이기택, 홍성우 등 당내 중진 7인은 중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997년 12월 31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중진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현행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등으로 짜여진 지도체제를 1998년 3월 10일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총재·복수 부총재의 집단지도체제로 개편한다” 그리고 “지도

부 경선의 원칙을 개정당헌에 명시하되 3월 전당대회에서 구성될 지도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선을 통하지 않고 총재 지명으로 선출하기로 한다”라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중진협의체의 결정에 대해 초선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나라당 내 지도체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초선의원 30여 명은 1998년 1월 12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내 의견수렴 확대와 당 지도부의 대통령선거 패배 책임을 요구하며,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고 반드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1월 14일 개최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의 대통령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경선실시 등 당의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이한동 대표최고위원이 1998년 5월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까지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되 적절한 시점을 택해 경선 지도부를 구성하지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내갈등이 증폭되었다. 한편 한나라당의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당내 일각의 총재 실질경선 주장과 맞물려 이회창 명예총재의 ‘총재복귀론’ 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나라당 내 지도체제 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김종필의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2월 후반기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한동 대표최고위원과 김윤환, 김덕룡, 이기택, 서청원 등 당 중진들은 2월 26일 모임을 갖고 늦어도 3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46개 미창당 지구당 조직책 선정과 시도지부 개편 및 지도체제에 관한 당내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 일정이 촉박하여 3월 10일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 속에 첫 야당활동을 시작하였다.

8. 기타정당

가. 대한민국민주당(1993. 10. 20~1996. 4. 13)

1) 창당준비위원회

1993년 4월 15일 (가칭)대한민주당 발기인 33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사무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기존 정당들이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여 모든 영역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생활에 불안을 조성하고 불신평조의 만연을 초래하고 있어 진정한 민주정당을 결성코자 한다”라는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기인대회에서는 유준하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가칭)대한민주당은 4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완료하였다.

대한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대표자 | 유준하 |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23-3 | |
| 발기인 명단 | 유준하, 이준호, 백명천, 황윤경, 박영자, 권태찬, 이영희, 이영숙, 황태성, 이종숙, 김충현, 김주석, 이정규, 이점순, 유해조, 민경희, 박청영, 이경순, 이상필, 박순희, 남인정, 노순점, 김무용, 김종인, 김미심, 강정임, 김한영, 이상엽, 박춘자, 박필욱, 안철영, 김상국, 김강식(33명)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천만 염원인 조국통일 실현 ○농업과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 ○효율적인 치산치수를 시행하고 대대적인 간척 사업으로 국토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을 일소하여 항구적인 생활의 안정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여 공해 없는 건강한 사회 이룩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는 문교정책 수립 ○전 국민의 1인1기의 교육품토 정착 |

2) 정당등록

48개 지구당을 창당한 대한민국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3년 10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유준하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대한민국민주당(가

칭)은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한 후 10월 20일 정당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창당결의문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대한민국당은

7000만 동포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대한민국당이 범국민적인 성원을 바탕으로한 국민의 정당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민족지각의 시대에서 통일시대를 개척할 (가칭)대민당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끊임없는 개혁정신과 혁신적 정치문화 설계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강호제현들이여! 정치지망생들이여! 우리 다함께 큰 마음 큰 뜻으로 대민당과 함께 참신한 남녀인재를 중심 삼고 지성과 야성, 그리고 능력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정치의 그라운드를 마련합니다.

이에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새시대/새인물/새정치를 위하여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당리당락을 위해서는 이합집산하는 정치풍토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며 인정이기 흘러넘치는 삶의 지평을 열어 싱그럽고 휴머니즘이 넘쳐오는 민주도덕사회 건설을 위해 총경주하겠습니다.

대한민주당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유준하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23-3 | | | |
| 주요간부 | 부총재 | 전당대회위원장 | 사무차장 | 회계책임자 |
| | 이기행 | 백명천 | 강도욱 | 이준호 |
| 당원수 | 4,027(법정당원수: 1,491명, 일반당원수: 2,536명) | | | |
| 지구당 등록현황 (48)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11) | 성동구갑(김용식), 성동구을(연제식), 동대문갑(김경숙), 동대문을(김강식), 성북구을(유진형), 도봉구병(전남기), 서대문갑(정진해), 마포구갑(이종화), 양천구을(김귀원), 송파구을(박길수), 강동구을(유수) | | | |
| 부산(1) | 북구갑(박승미) | | | |
| 대구(2) | 북구(강응규), 수성구(이상현) | | | |
| 경기(6) | 수원시 권선구을(최광삼), 성남시 수정구(최진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이병목), 고양군(김정권), 파주군(유창재), 용인군(유준하) | | | |
| 강원(8) | 춘천시(유정길), 원주시(강현철), 강릉시(이덕수), 태백시(이용연), 명주군·양양군(이기행), 춘성군·양구군·인제군(이상직), 횡성군·원주군(연기세), 속초시·고성군(김중율) | | | |
| 전북(1) | 원주군(김이남) | | | |
| 전남(1) | 담양군·장성군(오필용) | | | |
| 경북(10) | 포항시(박태식), 경주시(김영수), 안동시(정무호), 영천시·군(김돈식), 안동군(류시구), 청송군·영덕군(황학모), 영양군·봉화군(이능상), 영일군·울릉군(이석봉), 경주군(박청영), 경산시·군, 청도군(정수채) | | | |
| 경남(8) | 울산시 중구(김현복), 울산시 동구(김종렬), 마산시 회원구(하충섭), 충무시, 통영군, 고성군(김영호), 창원군(이선경), 밀양시·군(문말순), 울산군(김용도), 남해군·하동군(이정도) | | | |

【강 령】

1. 우리는 문민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참되게 실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참된 정치를 구현한다.
2.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균형 있는 분배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3. 우리는 정의가 모든 사회활동을 지배하고 봉사과 사랑이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는 공존공생, 공영의 공동사회를 건설한다.
4.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자유를 누리며 법의 질서 속에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교육받는 사회건설에 총력을 경주한다.
6. 우리는 토지주택 및 물가정책을 혁신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안정을 이룩한다.
7. 우리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주적인 외교 노력과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승화시킨 숭고한 정치문화 창달로 평화통일을 앞당긴다.
8. 금융실명제나 토지정책 등 경제정책은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편중된 경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서민대중 편에 서서 중산층의 벽을 두텁게 하는 참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9. 민족적 망국병인 호남 대 영남 등 지역분열의 담을 헐어버리고 혁신적 정책정당으로 동서를 통일하고 남북을 통일하는 정통 정당정치를 계승해 나간다.
10. 연령에 관계없이 민주화와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참신한 세력의 집합체로서 세대교체와 정치의식 구조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자각의 시대에서 통일시대를 개막할 참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기본정책】

- | | |
|---------------------------|---|
| 1. 건전한 정치문화 창조 | 7. 공해방지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 2.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의 향상 | 8.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정책 수립 |
| 3. 농업을 과학화하고 수산업을 진흥 | 9. 조속한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도로 및 준고속 횡단도로 건설로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 |
| 4. 복지사회 이룩 | 10. 공해물질과 화학 폐기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화체계 및 기술을 개발 |
| 5. 교육제도 개선 | |
| 6. 토지이용 주택건설과 국민복지 향상과 연계 | |

3) 정당의 소멸

대한민주당은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6명의 지역구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전체 득표율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0.0158%에 해당하는 3,114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4월 13일 정당법 제38조(등록취소) 제1항 제3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의 규정 의하여 대한민주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대한민주당은 창당 2년 6개월여 만에 소멸하였다.

나. 정명당(1995. 1. 13~2001. 3. 19: 1996. 3. 29 기독교성민당으로 당명 변경)

1) 창당준비위원회

정명당은 1994년 6월 20일 박광환, 이종우 등 사회단체 상덕회원 20여 명의 모임에서 창당 논의가 시작되어 형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새시대 도덕정치 경제지도자 육성 연수’ 희망자를 모집하여 8월 10일부터 3박 4일 간 연수를 실시한 후 창당발기인을 추천하였다. 이어 1994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진도빌딩 사무실에서 정명당(가칭) 발기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박광환을 선출하였다. 정명당(가칭)은 이날 채택된 발기문을 통해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 곧 ‘도덕사회’를 이룩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창당 목표를 밝혔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정명당(가칭)은 9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이후 창당준비과정에서 박광환 창당준비위원장이 사임하자 10월 28일 제2차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이 이종우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하여 변경등록 하였다.

정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내용 |
|----------|---|
| 대표자 | 박광환 · 이종우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7 |
| 발기인(23명) | 강용일, 권국진, 권천문, 김광해, 김당수, 김명주, 김수영, 김춘식, 박광환, 박남근, 박익규, 박재명, 서중원, 여이신, 오연달, 이상원, 우천무, 윤각순, 이병희, 이종우, 이철환, 하병태, 호신환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각자는 도의정신과 사랑이 살아 있는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앞장선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나 하나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 우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신풍조를 화합과 신뢰의 풍조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정화운동을 내 주위에서부터 벌인다. ○나 자신부터 겸양과 자제, 희생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공존의 윤리부터 먼저 실천해 나간다. |

2) 정당등록

정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 이후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법정지구당 24개 지구당을 창당하고 1994년 12월 27일 서울시 도봉구 중앙당사에서 대의원

216명중 2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당대회를 통해 정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당헌, 강령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권천문 대의원을 총재로 선출한 후 이듬해 1995년 1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였고, 1월 13일 정당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정명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권천문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23-3 | | | |
| 주요간부 | 고문 | 전당대회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위의장 |
| | 이종우 | 우찬무 | 박광환 | 선우호 |
| | 정치교육원장 | 대변인 | 중앙당기위원장 | 회계책임자 |
| | 신영식 | 황중찬 | 김종우 | 이철환 |
| 지구당 등록현황 (24)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6) | 용산구(박창덕), 성동구(강용일), 동대문구(정태규), 도봉구(우찬무), 도봉구(권천문), 은평구(황옥선) | | | |
| 부산(6) | 동 구(김원만), 영도구(김만성), 진구(유종형), 동래구(노양석), 해운대구(이태경), 금정구(안광배) | | | |
| 대구(2) | 서구(이해수), 남 구(정주현) | | | |
| 인천(1) | 서 구(박익규) | | | |
| 경기(4) | 수원시 권선구(김용욱), 성남시 중원구·분당구(김종우), 안산시·옹진군(김경수), 이천군(강욱형) | | | |
| 전북(1) | 김제시·군(윤용호) | | | |
| 경북(1) | 경주시(하병태) | | | |
| 경남(3) | 창원시(구대현), 마산시(회원구(안병역), 김해시·군(조용현)) | | | |

【강 령】

우리 정명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양심이 살아 있는 도덕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도의를 진작하고 의식을 개혁하여 국민의 가슴마다 내재하는 높은 도덕률에 바탕한 도덕사회를 건설하는 일과 아울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적 민족역량을 총집결하는 데 매진한다. 이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광범한 개혁을 추진할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정치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한다.
2. 민족적 자주외교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여 국제화 시대의 일익을 담당한다.
3.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경제를 구현한다.
4. 정도와 도의를 숭상하여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함양하고 양심이 지배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공존 공영의 사회를 이룩한다.
5. 교육의 근본을 인격도야에 두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도덕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밝은 사회가 실현되도록 한다.
6. 민족 고유문화를 진작하고 민족정신을 발진하여 국민의 정신적 긍지를 고취한다.
7. 호도정신과 경로사상을 함양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선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8. 산업화와 항락사업으로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철저히 보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9.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외교활동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에 앞장선다.

| 【기본정책】 | | |
|--------|-----------------------|---|
| 정치 | 부도덕한 정치에서 도덕정치로 | 1. 정치의 부도덕성과 권위주의, 독선과 비민주적 요소 제거 2. 당리당락의 폐단 배격, 생산적 정책개발로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 구현 3.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습을 일소,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된 공직자 사회 확립 4.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지방정부의 재정 개선 5. 부도덕한 정치인 소환, 정계로부터 은퇴시키는 제도 추진 6. 민족적 자존과 자주외교 역량 발휘, 능동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전개 7. 한반도 주변국가의 변화에 따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화적 통일 주역이 됨 |
| 경제 | 균형적 경제 | 1.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지양, 부의 편재 배제 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제·기술 지원 3. 농산물 가격안정, 영농기술 제공, 자금지원 4. 농어촌 소득증가를 위한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5.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과 주택난 해소 6. 국토개발의 효율화로 지역경제 균형발전 |
| 사회 | 도덕 사회건설로 부조리 척결 | 1. 사회계몽운동으로 사회질서 확립 2. 의식개혁운동 3. 체계적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4. 도덕사회 추진 기본법 제정 5. 도덕사회 건설 추진위원회법 제정 6. 가정의 행복과 가정교육의 실천 |
| 교육 | 지역교육과 도덕교육의 병행 | 1. 도덕교육 강화, 전인교육 실시 2. 입시위주 교육 지양 3. 인격도야 교육을 통한 참 일꾼 육성 |
| 문화 | 민족 전통문화의 고양 | 1. 외래 퇴폐문화 배격, 민족 고유문화 전승 2.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향상 3. 민족전통문화 진작, 충효사상 함양 |
| 복지 |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복지에 이바지 | 1. 노인복지법 개선 2. 사회복지법 개선 3. 장애자보호법 개선 |
| 환경 | 자연보존과 환경정화 | 1. 골프장 건설 억제, 그린벨트 완화 2. 제도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3.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
| 통일 | 상호신뢰 구축으로 통일을 앞당김 | 1.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 비방행위 지양 2. 상호협력적 경제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3. 이산가족 서신교환, 상호방문 허용, 점진적 상호 원래 |

3) 정당의 변화

1994년 12월 창당 이후 1년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했던 정명당은 1995년 11월 25일 권천문 총재가 사임함으로써 우찬무 총재권한대행의 임시지도체제를 구성하였다. 이후 1996년 2월 14일 중앙당사에서 새 총재 선출을 위한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진복기를 총재로 선출하였다. 또한 강력한 당 체제 구축을 위해 당헌, 당규, 개정을 의결하였다.

이후 정명당은 총재가 지명하는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1996년 3월 20일 이전 기독교성민당(1988년 4월 29일 소멸)의 당헌, 당규, 당기를 계승하여 정명당의 당헌, 당

규, 당기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명당은 1996년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및 당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3월 29일 기독교성민당으로 제출범하였다.

중앙당 변경등록 주요 내용

| 구분 | 기 존 | 변 경 | 변경일자 | 비고 |
|------|----------|----------|---------|-----------------|
| 총재 | 권천문 | 권한대행 우찬무 | 95. 12. | 사임 |
| 총재 | 권한대행 우찬무 | 진복기 | 96. 2. | 선출(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 |
| 당명 등 | 정명당 | 기독교성민당 | 96. 3. | |

다. 신민당(1995. 6. 27~1997. 5. 6: 1996. 2. 5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 변경)

1) 창당준비위원회

1994년 7월 8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된 신민당은 1995년 5월 31일 또다시 자유민주연합과 신설합당하면서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반대한 신민당 내 임춘원 등 통합반대파들은 합당과정에서 “김복동 총재가 통합추진위원을 자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합당이 성사되어 신민당이 소멸하자 이들은 신민당의 재건작업에 착수하였다.

통합반대파들은 1995년 6월 5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창당 발기인 38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발기인대회를 통해 신민당의 재창당을 결의하고 임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창당발기문을 통해 “6·27 지자제 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닥칠 정치적 지각 변동과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비하여 야권의 어느 쪽에도 흡수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의 여망과 정서에 순응하기 위해 신민당 창당을 발기할 것을 선언한다”라며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마치고 공식적인 창당활동을 시작하였다.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임춘원 | 회계책임자 | 나이균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404호 | | |
| 발기인(38명) | 임춘원, 고병현, 박창중, 이종섭, 서선호, 나이균, 이병희, 한호상, 김수일, 김병환, 강청웅, 박동인, 권태오, 이성재, 박근재, 신순기, 홍순오, 심상국, 김동주, 손은봉, 정규신, 이용균, 송주인, 박종구, 홍범식, 김문환, 구자호, 류관석, 류병두, 백수현, 김해조, 한창국, 원유길, 김강영, 조삼영, 김양욱, 이영태, 이상남 | | |
| 발기취지문 요약 | <p>○우리는 6. 27 지자체 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닥칠 정치적 지각변동과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비하여 아권의 어느 쪽에도 흡수되기를 거부함.</p> <p>○국민의 여망과 정서에 순응하기 위해 신민당 창당을 발기할 것을 선언함.</p> <p>○황폐화된 아권을 새롭게 개편하고 무너진 아터를 다시 쌓아올려 진정한 국민적 야당이 될 것임.</p> | | |

2) 정당등록

발기인대회 이후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등록을 위한 조직구축에 나서 26개의 지구당을 창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 6월 23일 서울시 여의도 사학연 금회관에서 대의원 258명 중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임춘원 대의원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강령과 당헌을 채택하며 공식출범을 선포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후 1995년 6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한 신민당(가칭)은 6월 27일 공식 등록되어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하였다.

신민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임춘원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오성빌딩 901 | | | |
| 주요간부 | 부총재 | 전당대회위원장 | 사무총장 | 회계책임자 |
| | 고병현 | 이종섭 | 김인태 | 김인태 |
| 지구당 등록현황 (26)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6) | 용산구(김동주), 서대문구(임춘원), 양천구(고병현), 구로구(나이균), 영등포구(김수일), 관악구(권태오) | | | |
| 부산(2) | 서 구(신순기), 동래구(박근재) | | | |
| 대구(1) | 서구(이종섭) | | | |
| 대전(2) | 중 구(문창남), 서구·유성구(류관석) | | | |
| 경기(3) | 성남시(유창일), 부천시(김문환), 오산시·화성군(김용균) | | | |
| 충북(1) | 청주시(류병두) | | | |
| 충남(2) | 천안시(박종구), 부여군(조종구) | | | |
| 전북(4) | 전주시(홍범식), 군산시(심학구), 부안군(백수현), 옥구군(한창국) | | | |
| 전남(1) | 신안군(김인태) | | | |
| 경북(2) | 군위군·선산군(정규신), 청송군·영덕군(김호연) | | | |
| 경남(2) | 창원시(강청웅), 김해시·군(김병환) | | |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 강 령 】

우리 신민당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류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또한 이 땅에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앞장선다. 이에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중도개혁 국민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아 진취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혁신한다.
2. 7천만 겨레의 재결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주력한다.
3.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견실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다.
5. 평등한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적극 공헌하게 한다.
6.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인다.
7. UN헌장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3) 당명 변경

신민당은 창당 6개월 후 중앙당사를 여의도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세립재단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이어 1996년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당명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유로 1996년 1월 20일 당명을 '무소속전국연합'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무소속'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당명은 정당법 제43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투표용지 관련 규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정당명칭으로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1996년 2월 1일 당명을 '무정당전국연합'으로 재변경하여 중앙당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일 '무정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정당명칭 또한 정당명칭으로는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거듭된 당명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신민당은 1996년 2월 2일 제7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논의하여 당명을 '무정과전국연합'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당명변경을 신청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2월 5일 이를 수리하였고, 이로써 3차례의 신청 끝에 신민당은 '무정과전국연합'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한편 무정과전국연합은 당명 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춘원 대표가 사퇴 후 탈당하면서 1996년 3월 26일 고병현 부총재를 총재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대행체제로 당을 운영하였다.

4) 정당의 소멸

구 신민당 재건을 목표로 창당된 신민당은 1996년 2월 5일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1년여 만에 정당존속 요건 미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다. 정당법 제4조 성립규정과 제25조 법정지구당수 규정은 중앙당 존속요건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당시 253개)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26개 이상의 지구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무정파전국연합은 법정요건 최소 지구당 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1월 31일 부평구갑지구당, 2월 20일 영등포구갑지구당, 3월 14일 전주시 완산구지구당이 연이어 등록취소됨에 따라 법정지구당 수가 모자라는 요건흡결이 발생하였다.

정당법에는 요건흡결이 발생한 경우 3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공문을 통해 1997년 4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무정파전국연합은 법정기일인 1997년 4월 30일까지 흡결을 보완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 무정파전국연합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이로써 무정파전국연합은 신민당으로 창당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소멸하였다.

라. 개혁신당(1995. 11. 29~1995. 12. 21)

1) 창당준비위원회

1995년 7월 박형규 목사 등 진보적인 기독교지도자들과 홍성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장기표 21세기사회발전연구회 회장 등 민중당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시민사회세력들이 '반민주적이며 부패한 낡은 정치구도 혁파'를 내세우며 정당 창당에 나섰다. 이들은 창당에 앞서 1995년 7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과 지역할거구도 타파를 표방하는 '정치개혁시민연합'의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창당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치개혁시민연합은 10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상임공동대표에 박형규 목사, 공동대표에 강태욱, 박제일을 선출하였다. 이어 10월 9일에는 ‘젊은 연대’ 및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보스정치와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민정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신당창당을 공식선언하였다. 또한 장을병과 홍성우를 공동위원장으로 25명이 참여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정치개혁시민연합창립대회(1995년 10월 5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995년 11월 1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발기인 1,673명중 1,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홍성우, 장을병 창당준비위원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11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장을병, 홍성우 | 회계책임자 | 서경석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401호 | | |
| 발기인(25명) | 장을병, 홍성우, 김홍신, 박인제, 서경석, 성유보, 이삼렬, 장기표, 장두한, 장신규, 하경근, 강기중, 김성식, 김영관, 김영진, 노희찬, 서상섭, 송덕빈, 신무룡, 신형식, 양재현, 오호근, 이재경, 이천욱, 최 윤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민주적이며 부패한 늙은 정치구조 혁파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정치, 깨끗하며 양심적인 도덕정치, 합리적이며 철저한 개혁정치 실현 ○21세기의 자랑스런 조국과 선진적인 민주사회 건설 | | |

2) 정당등록

결성신고를 마친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9개 지구당을 창당하여 법정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438명 중 3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장을병, 홍성우 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개혁신당(가칭)은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였고, 다음 날인 11월 29일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개혁신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장을병, 홍성우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금영빌딩 401호 | | | |
| 주요간부 | 부대표 | 사무총장 | 정책위의장 | 회계책임자 |
| | 오현주, 광영훈, 성유보, 장기표 | 서경석 | 이삼열 | 서경석 |
| 당원수 | 2,281명 (법정당원수: 1,167명, 일반당원수: 1,114명) | | | |
| 지구당 등록현황 (29)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7) | 용산구(이찬욱), 종랑구(조명원), 마포구(장신규), 금천구(이원영), 동작구(장기표), 강남구(홍성우), 송파구(박인제), | | | |
| 부산(2) | 부산진구(김영수), 북 구(우주호) | | | |
| 인천(3) | 연수구(서상섭), 계양구(안영근), 서 구(김중웅) | | | |
| 경기(6) | 수원시팔달구(손 민), 성남시분당구(성유보), 안양시동안구(송은학), 부천시원미구(신철영), 광명시(박경산), 오산시 · 화성군(김형재) | | | |
| 강원(2) | 춘천시(최 윤), 영월군 · 평창군(이호선) | | | |
| 충북(1) | 청주시상당구(신창민) | | | |
| 전북(3) | 전주시완산구(양재현), 전주시덕진구(최형재), 익산시(손임범) | | | |
| 경북(3) | 경주시(한정수), 구미시(윤상규), 울진군(김종복) | | | |
| 경남(2) | 창원시(주대환), 마산시합포구(임수태) | | | |

【 강 령 】

전 문

우리 개혁신당은 오랜 독재정치와 부패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올바른 민주정치와 참여적인 민주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발전과 복지 공동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정치 세력으로 나섰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과 정책기조, 당면한 정책과제를 밝힌다.

1.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 사회적 평등과 연대, 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고 믿으며,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국민이며, 정치와 경제의 주체도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독재와 독점을 반대하고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여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우리는 정치의 궁극목표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믿기에 건강, 교육, 주택, 교통, 환경, 복지와 같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정치에 최대한 정성을 기울인다.
5. 우리는 해방 후 민족사의 최대 과제가 적대적 분단의 극복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있다고 보아,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민족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통일성의 회복과 공생적이며 창조적인 통일의 실현에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선다.
6. 우리는 차별과 억압, 갈등과 소외가 없는 통합적 사회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지역적 차별이나 성적차별을 철폐하고 계급이나 신분, 직업, 출신학교나 종교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외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쓴다.
7. 우리는 독재정치와 부패정치, 봉당정치와 맹주정치의 낡은 틀을 분쇄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도덕정치,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개혁정치, 국민주체와 시민참여의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른 정치개혁의 우선적 과제라고 확신하여 도덕적이며 개혁적이고 참여적인 국민정당을 만드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친다.

【기본정책】

| | | |
|---------------------------|---|---|
| 1. 깨끗하고 생산적인 참여민주정치 | 1) 정경유착, 부패정치의 척결 2)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기능의 강화 3) 대통령의 권력집중 제한과 봉사행정의 구현 |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5)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확립 |
| 2.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질서 | 1) 경제제도의 과감한 개혁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3)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 4) 국토와 지역, 부문간 균형개발 5) 첨단기술 산업의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
| 3.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 1)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부문별로 확정 2)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서민위주의 주택정책 실시 3)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 4)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강화 5) 인간중심의 안전관리와 교통체계 구축 |
| 4. 교육제도의 혁신과 문화부국의 실현 | 1)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과 입시지옥의 해소 2) 교육의 자율성 보장, 교육자치제의 확대 실시 3) 대학교육의 개선과 평생교육의 실현 | 4) 정부와 재벌의 언론지배 금지 5)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과 문화산업 육성 |
| 5. 자율적, 생산적 노사관계 | 1)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 2) 노사관계의 자율화 3) 고용안정 실현, 효율적 인력개발 | 4) 여성, 장애인, 노령 근로자의 고용평등 5)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혁 |
| 6.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확대 | 1) 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의 철폐 2) 사회적 공동육아제도의 수립 3) 성폭력의 근원적 척결 | 4) 여성정책의 효율화와 여성부의 신설 5) 여성할당제의 확대추진 |
| 7.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녹색발전 전략의 수립 | 1)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 계획의 수립 2) 맑은 물의 공급과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관리 3)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통한 깨끗한 공기의 확보 | 4)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5) 생태계와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적극적 노력 |
| 8.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 | 1) 과학기술 개발에 자율과 경쟁질서 도입 2) 과학기술 행정의 쇄신 3)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 | 4)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5)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

| | | |
|---------------------------|---|---|
| 9. 자주적 국방과 실리적 다변화 외교 | 1)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의 추진 2) 전방위적인 전문외교의 추진 3) 평등하고 우호적인 한-미, 한-일 관계의 정립 | 4) 해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유대의 강화 5) 자주적·현대적 국방력의 확보 |
| 10. 남북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의 실현 | 1)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및 시행 2)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구축 3)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추진 | 4)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의 활성화 5)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 도출 |

3) 정당의 소멸

개혁신당은 창당준비 과정에서부터 야권통합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창당주비위원회 결성직후인 1995년 10월 26일 민주당에 통합을 공식제의하고 통합협상을 시작하였다. 개혁신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위하여 7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7일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표체제를 2인 공동대표체제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12월 4일 통합수임기구 합당회의를 열고 김원기 민주당 고문과 장을병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통합을 선언하였다. 통합협상을 마친 개혁신당과 민주당은 1995년 12월 16일 합당등록신청을 하였고, 1995년 12월 21일 정당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통합신당이 공식 출범되면서 통합민주당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창당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멸되었다.

마. 무당파국민연합(1996. 3. 18~1996. 4. 13)

1) 창당준비위원회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등으로 구속되면서 대구·경북 등을 중심으로 반(反)신한국당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등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대구·경북지역의 인사들이 새로운 정당 창당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선거법이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어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무소속 인사들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 11일로 예정

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적보장을 받는 새로운 정치세력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서둘러 창당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6년 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타워에 마련한 창당준비 임시 사무실에서 발기인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무소속연합(가칭) 발기인 대회를 열어 한병채 발기인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무소속 중심의 정당결성을 선언하였다. 민주무소속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발기문을 통해 “기존 정당들이 당수 중심의 1인 정당체제, 지역중심의 지역정당체제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리와 당략, 지역패권주의, 개인의 독단과 전횡을 청산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창당을 한다”라는 창당취지를 밝혔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민주무소속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6년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1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무소속’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당명은 정당법 제42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투표용지)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정당명칭으로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정당법상 ‘무소속’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무소속이라는 용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사회통념상 정당이 아님을 나타내는 뜻으로 투표용지·선거운동 매체 등에서 정당명과 동일하게 취급·사용되고 있으므로 선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무소속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아울러, 기록된 정당명칭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정당법 제43조 규정의 취지가 기록된 정당과 기존 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정당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무소속의 경우도 이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므로 정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또한 무소속 또는 무소속이란 단어가 포함된 용어를 정당명칭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무소속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국민(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거질서는 물론 정치

- 질서에도 중대한 해를 가하게 되며,
- 라. 동 사례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용어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법상 금지규정은 없으나 사회상규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예와 다르지 아니함.
- 마. 결국,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선거질서 및 정치질서의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무소속'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용어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1월 31일 민주무소속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정당의 명칭에 대하여 1996년 2월 14일까지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무소속연합' (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정당법상 당명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당명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창당준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월 2일 '무당파국민연합' (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무당파국민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 한병채 | 회계책임자 | 윤영오 |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91 골든타워B/D 1318호 | |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91 골든타워B/D 1318호 | | |
| 발기인(24명) | 한병채, 김중권, 이치호, 김종기, 정동윤, 박재홍, 김상명, 김희영, 서엽, 최규태, 권만성, 이우태, 전치귀, 왕선구, 김시환, 염형민, 조복형, 진원규, 윤영오, 이호영, 김현기, 박남수, 이창환, 김두영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정치는 과거의 잘못된 폐습과 관행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스스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함. ○민주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고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가 보장되어야함.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대화합으로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대비하여야 함. ○새시대에 새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애국적 민주세력이 결집되어야 함. | | |

2) 정당등록

무당파국민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 이후 1996년 2월 23일 춘천시갑 지구당 창당을 시작으로 27개 지구당을 창당하고 1996년 3월 14일 천도교 대교당(수운회관)에서 대의원 680명중 6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당대회에서 무당파국민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정강정책 및 당헌을 채택하고 한병채 창당준비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무당파국민연합(가칭)은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였고, 3월 18일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 무당파국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1996년 3월 14일).

무당파국민연합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 등록 내용 | | |
|---------------|---|--------------|-----|--|
| 대표자 | 한병채 |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 | 윤영오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6층 | | | |
| 지구당 등록현황 (27)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4) | 양천구갑(권영빈), 서대문구갑(이근봉), 중랑구을(김병수), 구로구갑(김기선) | | | |
| 부산(2) | 해운대구 · 기장군을(김동주), 금정구을(성태진) | | | |
| 대구(1) | 수성구을(이치호) | | | |
| 인천(2) | 계양구 · 강화군갑(이병현), 남동구갑(권오덕) | | | |
| 대전(1) | 유성구(박충순) | | | |
| 경기(5) | 과천시(신하철), 성남시수정구(최상면), 성남시분당구(안상문), 하남시(강광호), 안양시동안구갑(송운학), 부천시원미구갑(신철영), 안양시만안구(공정무) | | | |
| 강원(3) | 춘천시갑(이상수), 영월군 · 평창군(이상춘),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김시환) | | | |
| 충북(1)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강여창) | | | |
| 경북(5) | 포항시북구(최영태), 영천시(정동윤), 경주시갑(김경오), 청송군 · 영덕군(박남수), 김천시(조석환) | | | |
| 경남(3) | 거창군 · 합천군(박판제), 마산시회원구(신대성), 마산시합포구(박동관) | | | |

【 강 령 】

전문

우리는 기존의 독재정당과 사당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고, 이 땅에 올바른 정치문화와 진정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며,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21세기 선진민주 한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의식의 확산을 통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1. 우리는 초헌법적 절대권력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여 진정한 민주정치를 이 땅에 정착시킨다.
2. 우리는 독단과 전횡으로 이루어지는 독재사당을 거부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한 시민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모아지는 상향식 선진민주형의 국민정당을 구현한다.
3. 우리는 사유재산의 규제와 경제활동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건강한 국민경제를 이룩한다.
4. 우리는 권력남용과 불공평한 법 집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5. 우리는 대북정책의 밀실결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족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

【 기본정책 】

| | | |
|--------------------|---|--|
| I.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 | 1.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 2. 선진 민주형의 국민정당 | 3. 국민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간섭없는 작은 정부 추구 4. 민생토론 광장으로서의 의회 건설 |
| II. 자유경제체의 확립 | 5.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 6. 경제활동 자유 보장 7. 경제주체의 의식전환을 위한 경제풍토 조성 8. 경제활동의 투명성 확보 9. 경제정책 결정과정 민주화 | 10. 세계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제 건설 11. 경제성장의 잠재력 지속적 확충 12. 국민경제의 바탕 안정 13. 지속적인 물가안정 주력 |
| III.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 | 14. 국민공동체의 평등문화 구현 15. 분배정의 실현 | 16.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보호 |
| IV. 자주외교 평화통일 실현 | 17. 국민적 합의에 의한 외교정책 추진 | 18. 민족공동체 의식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

3) 정당의 소멸

무당과국민연합은 창당 직후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56명의 지역구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선거결과 당선자 없이 유효투표총수의 0.9%에 해당하는 17만 7,050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4월 13일 정당법 제38조(등록취소)제1항 제3호(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당과국민연합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무당과연합은 창당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멸되고 말았다.

바. 21세기한독당(1996. 3. 25~1996. 4. 13)

1) 창당준비위원회

21세기한독당(가칭)은 1996년 1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삼육빌딩에 마련한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발기인 66명 중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이시찬을 선출하였다.

21세기한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이 영도했던 빛나는 항일 독립투쟁의 민족정통 정당인 한독당 동지 등 일제치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과 박정권 이후 처절한 민족민주화투쟁을 일관되게 해 온 30·40대 민족민주화 운동세대,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국가발전의 동량인 사회 각계의 전문가, 참신한 신진인사가 하나가 되어 답답한 오늘의 한국정치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의 참된 민족민주정당을 결성한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선포한다”라는 창당취지를 밝혔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21세기한독당(가칭)은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결 의 문

우리는 백범선생과 풍천노숙을 같이하며 민족지주를 지켜온 애국독립지사들과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이 땅의 민주화의 횃불을 밝힌 젊은 민주세력, 사회각계의 전문가 및 양심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지러운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민족의 새 희망을 꽃피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당정신과 기초를 아래와 같이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엄숙히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지주의 민족통일사상과 이념, 구국, 구족, 구세의 삼균주의정신과 건국강령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 우리 정치사를 새롭게 구현한다.
- 우리는 독립운동세력과 민족민주화운동세력, 사회각계의 전문인사, 시민양심 세력이 함께하는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근대와 현대, 미래가 한 맥을 이루어 뿌리 깊은 민족정신을 항구적으로 발양한다.
- 우리는 국론분열, 민족분열로 국민통합,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망국적 지역할거주의 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 지배구조를 청산한다.
-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황폐화시킨 문민정부의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거부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한다.
- 우리는 노동, 농어민, 환경, 교통, 여성, 사회보장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국민생활을 보장한다.
- 우리는 문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승화하여 민족문화의 새시대를 연다.
- 우리는 범민족적 대동단결의 상징이었던 한국독립당의 맥을 계승하여 민족웅비의 결정체이며 겨레의 소망인 민족의 평화통일과 강대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민족국가 건설을 기필코 우리 당대에 이룩한다.
- 우리는 부정부패 썩은 정치의 근원인 부정타락 금권선거 타파에 앞장서며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필코 선진정치문화를 꽃피운다.

1996년 3월 22일

21세기한독당 창당준비위원회

21세기한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이시찬 | 회계책임자 | 박종구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15번지 삼육B/D 704호 | | |
| 발기인(66명) | 이시찬, 김정선, 함기영, 김백규, 이종현, 김진근, 현경순, 임 호, 조만제, 김영돈, 김영신, 조제환, 박용희, 정상균, 조기형, 정상균, 박종구, 김태동, 강현관, 정재복, 김봉자, 박상윤, 김용욱, 최삼관, 최용각, 한기숙, 정지영, 부진석, 노재성, 이종호, 김종성, 류시균, 이윤희, 서계갑, 장영선, 임향한, 임연택, 이상규, 유순복, 이경근, 오형주, 여규홍, 신광호, 서범석, 박종희, 고준석, 가중순, 노정현, 류관석, 박태신, 김홍남, 이영수, 권연수, 이준혁, 김영기, 류병두, 김영철, 표대성, 윤여진, 이창균, 김윤식, 박승희, 하상영, 안의룡, 유윤석, 안재세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항쟁의 총결산으로서 가져온 오늘의 망국적 지역할거주의의 정치 종식 ○ 민주화의 햇볕을 밝혀온 젊은 민주세력,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양심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지러운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민족의 새 희망을 꽃피우자. | |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2) 정당등록

21세기한독당(가칭)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26개 지구당을 조직하고 1996년 3월 22일 서울시 종로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대의원 168명 중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이시찬 창당준비위원장을 초대 당수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21세기한독당(가칭)은 1996년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출범하였다.

21세기한독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대표자 | 이시찬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15번지 삼육B/D 704호 | |
| 주요간부 | 사무총장 | 회계책임자 |
| | 최명길 | 이찬구 |
| 지구당 등록현황 (26)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서울(6) | 종로구(박종구), 중랑구갑(박용현), 광진구을(유윤석), 서대문구을(장태순), 송파구병(이종현), 관악구을(최명길) | |
| 경기(4) | 하남시 · 군(장영선), 안산시갑(박정숙), 수원시장안구(안재세), 수원시권선구(서계갑) | |
| 인천(2) | 남구갑(김기일), 남구을(정인태) | |
| 대전(6) | 동구갑(이찬구), 서구을(안은찬), 동구을(박홍래), 대덕구(이기호), 중 구(정재용), 유성구(류관석) | |
| 충남(3) | 천안시갑(정태용), 천안시을(이기호), 논산군 · 금산군(이윤구) | |
| 충북(3) | 청주시상당구(연정흠), 청주시흥덕구(류병두), 청원군(최광진) | |
| 전북(2) | 고창군(윤여진),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이용만) | |
| 경북(2) | 경주시갑(김경오), 청송군 · 영덕군(박남수) | |

【강 령】

전 문

우리 21세기한독당은 지난 한 세기 이래 외세의 침탈과 권위주의정권, 부정부패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의 광복투쟁, 6·3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의 역사와 4·19 학생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민주정부, 민족자주의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고 21세기 세계인류평화 실현에 기여한다. 이에 우리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국정전반에 걸쳐 낡은 법과 제도, 관행을 혁파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명시된 바 삼균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복지사회국가의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 | | |
|--------------------------------------|---------------------|
| 1. 민족공동체정신의 확립 | 4. 금수강산과 미풍양속의 회복 |
| 2.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존의 삼자원칙 | 5. 자주, 평화적 민족통일의 달성 |
| 3. 공정한 정치, 균배의 경제, 전인적 교육 및 여성권리의 확립 | |

【기본정책】

| | | |
|--------------------------------------|--|---------------------------------|
| 1. 민족공동체정신의 확립 | 1) 민족공동체역사의 확립 2) 민족공동체문화의 확립 | 3) 민족정기의 확립 4) 통일문화연구사업의 활성화 |
| 2.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존 확립 | 1) 정치적 자주 확립 2) 경제적 자립 확립 | 3) 문화적 자존 확립 |
| 3. 공정한 정치, 균배의 경제, 전인적 교육 및 여성권리의 확립 | 1) 공정한 정치 2) 균배의 경제 | 3) 전인적 교육의 확립 4) 여성권리의 확립 |
| 4. 금수강산과 미풍양속의 회복 | 1) 금수강산의 회복 | 2) 미풍양속의 회복 |
| 5. 완전한 독립·자주 평화적 민족통일의달성 | 1) 민간 민족통일추진기구의 설립 활성화 2) 민족통일의 순서 설정 | 3) 민족통일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 배가 |

3) 정당의 소멸

21세기한독당은 창당 직후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5명의 지역구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선거결과 당선자 없이 유효투표총수의 0.0086%에 해당하는 1,693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4월 13일 정당법 제38조(등록취소)제1항 제3호(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의 규정에 의거하여 21세기 한독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21세기한독당은 창당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멸 되었다.

사. 공화당(1997. 9. 4~2000. 4. 14)

1) 창당준비위원회

1997년 5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린빌딩에서 발기인 2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화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대회에서는 허경영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공화당(가칭)은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공화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허경영 | 회계책임자 | 김준호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905호 | | |
| 발기인(21명) | 허경영, 한복희, 김원주, 김준호, 송태자, 강광원, 김명준, 원대욱, 정낙균, 황기근, 박재하, 이국용, 김종태, 김한식, 김효정, 김경애, 안혁제, 박성조, 백명용, 고영철, 김종표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온 국민이 염원하고 민주화에 대한 이념에 부응한 새 정치를 창조하고 도덕에 의한 평화의 정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공동체 화합의 당 출현 ○국민의 정당으로써 국민대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룩 | | |

2) 정당등록

공화당(가칭)은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28개 지구당을 조직하고 1997년 8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홍사단에서 대의원 175명 중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개최하고 허경영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공화당(가칭)은 1997년 9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였고, 9월 4일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창당결의문: 제도혁명을 선언하며

1.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상실한 채 이 시대 정신사적 위기와 정치, 경제, 사회, 교통, 도덕의 파멸을 몰고 온 기성 정치인을 배격하고, 제도 혁명으로 새시대 새정치를 창조하여 진리도덕에 대한 평화의 정착을 위한 공화당을 창당하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
2. 우리는 진리정치의 실현으로 모든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국민 각 계층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혁명, 정치·사회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안으로는 진리의 구현으로 단일민족의 긍지와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여 제도 혁명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밖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세계평화 성취에 앞장서서 전 인류 공존에 기여한다.

공화당 정당등록 내용

| 구분 | 등록 내용 | | |
|---------|--------------------------------|------|-------|
| 대표자 | 허경영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115번지 삼육B/D 704호 | | |
| 주요간부 | 부총재 | 사무총장 | 회계책임자 |
| | 김원주 | 김종태 | 김준호 |

지구당 등록현황 (28)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서울(6) | 강동구갑(황귀근), 광진구을(이종선), 중 구(윤현도), 종랑구을(이춘택), 종로구(윤현옥), 동대문구갑(최영호) |
| 부산(4) | 해운대구·기장군갑(조봉래), 금정구을(한지영), 강서구(강영숙), 영도구(장영환) |
| 인천(3) | 중구·동구·옹진군(서재인), 남구을(강부경), 남구갑(이희숙) |
| 대전(6) | 동구갑(권영기), 대덕구(이중현), 서구갑(정구인), 서구을(서귀현), 유성구(강홍모), 중 구(이정영) |
| 경기(1) | 광명시갑(박달근) |
| 강원(3) | 강릉시갑(김병태), 강릉시을(김예경), 영월군·평창군(강옥자) |
| 충남(2) | 논산시·금산군(홍종욱), 공주시(김봉석) |
| 전남(1) | 목포시갑(장정의) |
| 제주(2) | 제주시(강영희), 북제주군(최순규) |

【기본정책】

| | | |
|-------------|---|---|
| 1. 세계평화 | 인류공존과 인도주의적 사명감으로 진리도덕에 기초한 정치 경제 사회의 혁명으로 세계경제와 정치, 환경을 구함 | |
| 2. 민족통일 | 정치·경제·문화 등의 남북한 교류의 폭 확장으로 상호간의 이질감의 극소, 한민족의 의식과 지리 통일 추구 | |
| 3. 정치 | 가. 국민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덕정치 풍토 구성, 국회의원제도를 폐지, 직능의원제도를 신설 | 나. 청렴결백한 정치인 상 정립 |
| 4. 외교·국방 | 가. 자주국방 체제 강화, 군의 정치적 중립 모색 | 나. 자유국가는 물론 동구권 국가 및 비동맹국가 교류 확대 |
| 5. 경제 | 가. 경제발전 저해요인 제거로 지속적 경제성장 나. 독과점 품목의 횡포를 적발하여 소비자보호에 최선 | 다. 기업정신의 재정립으로 공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 전체 국민소득 증대와 국민복지 향상 |
| 6. 사회·문화 | 가. 담배의 생산판매 흡연 금지 나.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구성 | 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발전을 이룩 라. 문화활동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억제, 지방문화 발전 |
| 7. 교육·언론 | 가. 대학을 평준화, 전국대학 명칭을 없애고 가나다순에 의한 1대학 2대학 등으로 변경 나. 청소년의 도덕교육을 강화 | 다. 언론·출판의 자율성 보장 라. 보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지방 주재 기자제도 부활 |
| 8. 노동·복지·기타 | 가. 실업수당 지급 나. 노동개선 및 복지시설확충 다. 빈민구호대상자 구호대책을 적극 추진 | 라. 여성의 실질적 지위향상 마. 각종 보험제도를 재고 |

3) 정당의 변화

1997년 9월 정당등록 이후 공화당은 허경영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워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허경영 후보는 7명의 후보자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며 낙선하였다. 이후 공화당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두드러진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아. 민주국민연합(1997. 9. 4~1998. 5. 21)

1) 창당준비위원회

민주국민연합(가칭)은 1997년 7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진학회관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발기인 28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공석영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가칭)민주국민연합은 7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민주국민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공석영 | 회계책임자 | 김길곤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0-1(진학회관 308호) | | |
| 발기인 (28명) | 공석영, 김길곤, 이병태, 류재복, 홍성원, 김영이, 우명석, 이병선, 조동수, 전병설, 박관석, 신광우, 황연우, 정원섭, 장영남, 김중관, 황 선, 백기철, 이기호, 이영선, 최만호, 유재후, 오영창, 김재선, 황덕조, 김형수, 조상래, 문재성 | | |
| 발기취지문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인과 재벌의 부도덕으로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파탄되어 사회가 혼탁할 뿐 아니라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세계 속에 위대한 한국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도덕한 구정치인과 재벌을 일체 배제하고 도덕과 정의로 뭉친 각계각층의 애국 국민이 총결집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전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함. | | |

2) 정당등록

민주국민연합(가칭)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28개 지구당을 조직하고 1997년 8월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대의원 1,350명중 1,3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추대 선언대회를 개최하여 이인수, 공석영, 김영미 대의원 등

3인을 공동총재로 선출하고 대통령후보로는 이병호 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을 추대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민주국민연합(가칭)은 1997년 9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였고, 9월 4일 등록절차가 완료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결의문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 온 겨레의 정성으로 정치선진화와 복지경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도덕국가 건설을 위하여 도덕정치를 구현한다.
2.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법치국가를 이룩한다.
3. 경제적 풍요와 사회복지 추구에 총력을 기울인다.
4.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5.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을 개발시켜 인류 평화를 이룩한다.

1997년 8월 18일
민주국민연합 당원 일동

민주국민연합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 | | |
|---------|--------------------------------|-----|-----|-----|-----|------|-------|-----|-----|
| 대표자 | 이인수 | |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0-1(진학회관 308호) | | | | | | | | |
| 주요간부 | 공동총재 | 부총재 | | | 본부장 | 사무총장 | 회계책임자 | | |
| | 공석영 | 정찬명 | 김경수 | 임영재 | 김학인 | 김보관 | 이창기 | 문재성 | |
| | 김영미 | 박명준 | 이규명 | 심재현 | 김재홍 | 엄화영 | 양정은 | 우명석 | 김길곤 |

지구당 등록현황 (28)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서울(7) | 종로구(김종관), 성북구(최경호), 구로구(김동준), 금천구(김길곤), 노원구(허진영), 서초구(윤인영), 강서구(박정구) |
| 부산(2) | 수영구(장천수), 남구(황원명) |
| 대구(4) | 북구(이규영), 동구(이규희), 달서구(이정구), 수성구(이진숙) |
| 대전(2) | 동구(유홍수), 동구(김인태) |
| 경기(4) | 광명시(조생연), 고양시덕양구(임종국), 고양시일산구(한동률), 부천시원미구(김병철) |
| 충북(2) | 괴산군(이순중), 제천시·단양군(이중하) |
| 충남(2) | 당진군(이광식), 천안시갑(박영길) |
| 전북(3) | 완주군(홍순필), 완산구(이봉근), 덕진구(김영호) |
| 경북(2) | 상주시(김학인), 문경시·예천군(박부영) |

【정강·정책】

| | |
|------|---|
| 주요목표 | 도덕정치, 법치주의, 선진경제 |
| 기본정강 | 민주국민연합은 퇴폐한 정치 개혁과 경제의 재도약을 실천하며 국민 총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법치와 정의로 선진도덕 국가를 건설한다. |

| | | |
|------|-------------------------|---|
| 정책 | 통일 | 통일성취 국력 배양, 남북간 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으로 평화통일 촉진 |
| | 외교 |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유대 강화, 경제 외교에 역점을 두고 수출시장 확대 |
| | 국방 | 군사 과학 기술의 현대화, 고도의 방위산업 육성, 자주국방 태세 강화, 국군의 군인정장 강화 |
| | 정치 | 1) 구약 일소, 도덕정치·책임정치 실시, 도덕국가 건설 4) 행정·공무원의 관료주의·편의주의 척결 2) 법치주의 실천, 민권신장, 민주정치 실시 5) 경찰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3) 지도자와 관리는 살신성인의 도덕 구현 |
| | 경제 | 1) 재벌분산과 전문화, 독점금지, 중소기업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 4) 정부예산 긴축 2)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 혁파,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5) 불로소득 근절, 건전한 경제체제 확립 3) 부의 편중 시정과 공정한 분배로 대중경제 발전 6) 전문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높임 7) 유통구조 개선, 공정거래 체제 확립 |
| | 세제 |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 재벌의 상속세 인상 |
| | 금융 | 정책 금융의 폐단 타파, 한국은행 독립, 금융정책의 경질화 방지 |
| | 농어민 | 농촌에 문화시설 설치,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 농수산업을 근대산업으로 발전 |
| | 사회 | 1) 정직·성실·신의를 충만한 사회윤리 도덕 확립 4) 각 구마다 청소년 공연장 설치 2) 사회보장제도 확충, 영세소득자 우대하는 복지행정 실시 5) 노인에게 직업제공, 노인의 공공시설 무료이용, 노인에게 월20만원 연금 지급 3) 근로자의 권익보호 |
| | 교육 | 1) 도덕위주의 교육 4) 전문대학 대폭 증설 2) 도덕청 설치 5) 공동체 의식 함양 3) 대학 무시험 6) 초·중 교과과정에 도덕과목 20%이상 할당 |
| | 문화 | 1) 미풍양속과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2) 무한한 창의력 개발, 고도의 문화 발전 |
| | 여성 | 1)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치·경제 기타 모든 면에서 30% 여성 할당 |
| | 법조 | 1) 재벌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법을 국민을 위한 법으로 전환·운영 3)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사법시험 폐지, 미국식 로스쿨 도입 2) 법조계 혁신, 공정 무사한 재판 실시 |
| | 관광 |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대국 건설 |
| 과학기술 | 과학적 선진 기술 개발에 과감한 예산 투입 | |

3) 변화와 소멸

창당 이후 민주국민연합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추천여부와 관련하여 창당대회 의결에 따라 이병호를 후보로 내세우자는 측과 후보를 내지 말자는 측으로 나뉘어 갈등·대립하였다. 그 결과 민주국민연합은 대통령후보를 공천하지 못하였고, 이병호를 비롯한 지지그룹은 대거 탈당하였다. 이후 민주국민연합은 창당 이듬해 1998년 2월 17일 정당의 존속요건 중 지구당 분산요건(정당법 제26조

제2항)에 흠결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흠결요건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국민연합은 법정지구당 요건을 보완하지 않았고 이후 1998년 5월 18일 당원들이 공화당에 개별 입당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국민연합이 법정보완기한인 1998년 5월 18일까지 흠결을 보완하지 못하자 1998년 5월 21일 민주국민연합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민주국민연합은 창당한지 불과 8개월 여 만에 소멸되었다.

자. 바른나라정치연합(1997. 11. 19~1999. 2. 12)

1) 창당준비위원회

1997년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한민족공동체(가칭)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김한식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이후 21세기한민족공동체(가칭)는 8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21세기 한민족공동체(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월 4일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정당명칭 공모용모작 중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바른나라정치연합’ (약칭: 바른정치련)을 새로운 정당명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준비위원회 명칭 및 인영변경을 신고하였다.

바른나라정치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김한식 | 회계책임자 | 김경호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75 | | |
| 발기인(25명) | 김한식, 이세근, 장재석, 윤병문, 이공자, 김영대, 성재홍, 김경호, 강성식, 한중택, 강상근, 전주석, 조재준, 최창식, 이상락, 차상기, 김용희, 최 윤, 김일로, 김성식, 이영렬, 안상철, 전승만, 최상규, 예영수 | | |
| 발기취지문 요지 | 총체적 국가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민족의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분받을 수 있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정치문화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 21세기의 세계사를 이끌어 갈 새나라를 만들고자 함. | | |

2) 정당등록

바른나라정치연합(가칭)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마친 후 27개 지구당을 창당하고 1997년 10월 14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대의원 1,152명 중 9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추대식을 개최하여 김한식 발기인 대표를 총재 및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바른나라정치연합(가칭)은 1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 11월 19일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바른나라정치연합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 대표자 | 김한식 |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8 은성빌딩 2층 | | | |
| 주요간부 | 지도위원장 | 사무총장 | 기획조정실장 | 회계책임자 |
| | 김일로 | 김경호 | 김성식 | 김성식 |
| 지구당 등록현황 (27) | |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 |
| 서울(5) | 성북구(김성식), 노원구(이혜선), 은평구(조재준), 서초구(최덕찬), 서초구(유정근) | | | |
| 부산(1) | 수영구(김휘경) | | | |
| 대구(4) | 남 구(송희승, 북구(김옥희), 수성구(김정선), 수성구(이명호) | | | |
| 인천(2) | 연수구(임성은), 계양구·강화군(송영란) | | | |
| 경기(5) | 성남시수정구(한봉학), 성남시중원구(신창호), 성남시분당구(김인기), 고양시일산구(김경철), 용인시(정동영) | | | |
| 충남(2) | 천안시(김은희), 공주시 (경철환) | | | |
| 전북(2) | 익산시(장재석), 정읍시(이영일) | | | |
| 경남(5) | 창원시(조영중), 마산시합포구(유정임), 진주시(김조현수), 진주시(김기대), 산청군·함양군(곽성무) | | | |
| 제주(1) | 제주시(조세환) | | | |

【 강 령 】

-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존중 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국민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번영을 이루어가는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혁신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활성화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과 인간 개발을 도모한다.
- 지역간, 도·농간의 불균형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7대광역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 21세기 과학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6. 미래의 식량무기화 시대에 대비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연안국가를 위시하여 제3세계에 적극 진출하여 식량생산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며 1차 산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켜 태평양 주변국과의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
7.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장기적 통일 전략하에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달성한다.

【기본정책】

| | | | |
|-----------------------------|---|--|---|
| I.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 | 1.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 2. 21세기 선진해양대국 건설 지향 3. 저비용 선거혁명과 정치자금 투명화 4. 행정기구개편과 예산운용체계의 개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5.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 | 6. 국민편의 위주의 사법제도 지향 7.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업무의 합리적 조정 8. 봉사하는 책임행정의 구현 9.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 정책능력 강화 10. 국회의 비판·견제·감시기능 강화와 책임정치 구현 | |
| II.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및 창의성 개발 | 1. 인성교육 강화로 학교교육 정상화 2.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확립 3. 대학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4. 교원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 여건개선 5. 직업기술교육 강화 및 능력위주의 사회풍토조성 | 6. 유치원 공교육화 및 영재조기교육제도 활성화 7. 학원폭력 근절 8.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9.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 |
| III. 건전한 선진경제 체질 확립 | 1.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2. 물가, 임금대책 3. 금융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4. 정보화 사회의 기반시설 구축, 전자민주주의 사회 기반미련 5. 첨단과학기술산업 집중투자 6. 물류비용감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 7. 세제, 세정 개혁 | 8. 환경정책과 조화되는 국토개발계획 수립 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10. 농어촌 구조개선과 식량안보체계 확립 11. 부동산정책 및 주택공급정책 12. 건전한 근로의식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13. 노사관계: 사랑과 공동체 이념에 의한 기업경영 및 노동운동 확립 | |
| IV. 국방력 강화 및 적극적인 외교 활동 | 국방력 강화 | 1. 평등한 병역의무 부담 및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 고취 2. 군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3. 의무복무기간 동안 전투력 극대화 및 전문직업교육체계 수립 4. 직업군인 처우개선 5. 예비군 제도 개선 및 훈련의 내실화 6. 이념과 사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 | |
| | 외교 | 1. 능동적 외교정책 추진 2. 평등하고 우호적인 한미/한일 관계 정립 3. 교민청의 설치와 해외동포의 권익 신장 | |
| | 통일 | 1. 통일 7단계 정책: 외교 국방력 강화로 민족화합을 이루는 통일 달성 | |
| V. 삶의 질 개선 [복지/환경/여성/교통] | 복지 | 1. 의료보험제도 개선 2. 국민연금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확대 3. 식품 및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 4.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5.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 | 6. 노인복지 7. 장애인 복지 8. 보육시설 확충 9. 지역보건의로 10. 보훈정책의 개선 |
| | 환경 | 1. 보존우선의 환경정책 2. 맑은물 공급대책 3. 대기오염 개선 | 4. 쓰레기 정책 5. 환경행정의 책임·권한 강화 |
| | 여성 | 1. 여성인력 활용방안 마련 2. 취업여성 지원방안 3.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및 개선 | 4. 여성지원봉사활동 활성화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책 마련 |
| | 교통 | 1. 교통난 완화 대책 | 2.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

| | | |
|----------------------------|--|---|
| VI. 문화, 예술의 활성화 | 1. 문화예술의 활성화 2. 국민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건전한 문화 창달 지원 | 3. 불건전 문화 정화 및 유흥업소 대대적 척결 4. 지방문화 활성화 |
| VII. 8대광역권 개발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 1.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의 수립 2.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3. 지역 금융시장의 활성화 | 4. 지방재정 자립기반의 확충 5. 지방경제의 세계화 |

창당 직후 바른나라정치연합은 당 총재이며 한사랑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던 김한식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워 1997년 12월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한식 후보는 4만 8,717표를 득표하여 7명의 후보자 중에 6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바른나라정치연합은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차. 건설국민승리21(1997. 11. 24~1999. 11. 15)

1) 창당준비위원회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대표 이창복) 등 재야·사회·노동단체들은 독자후보 추대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독자후보 추대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1997년 8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승리21(가칭) 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를 열어 ‘국민후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며 대통령선거를 준비하였다.

이후 국민승리21(가칭) 추진위원회는 9월 1일 국민후보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추천하였다. 또한 9월 7일 개최된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통하여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공식 결의하였다. 이어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원회는 10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민승리21’ 결성대회를 열고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공식 추대하였다.

독자적인 대통령후보를 추대한 국민승리21은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창당에 돌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정당 등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민승리21은 1997년 11월 7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에 마련한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발기인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명을 건설국민승리21(가칭)로 하여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최철호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1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건설국민승리21(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 구 분 | 신고 내용 | | |
|----------|--|-------|-----|
| 대표자 | 최철호 | 회계책임자 | 김인숙 |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406호 | | |
| 발기인(22명) | 김두수, 김인숙, 이은민, 김석영, 최철호, 노현기, 박용진, 최명아, 황정아, 양시모, 김진익, 박강호, 이상현, 김은주, 최기영, 오현아, 임세진, 나기주, 오동진, 황명진, 송태경, 양동호 | | |
| 발기취지문 요지 | ○부패와 야합만이 판을 치는 정치현실을 혁파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사회 건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민족통일국가 건설 | | |

2) 정당등록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건설국민승리21(가칭)은 30개 지구당을 창당한 후 1997년 11월 19일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사에서 대의원 30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건설국민승리21(가칭)은 창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후보 권영길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건설국민승리21(가칭)은 11월 24일 정당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건설국민승리21 정당등록 내용

| 구 분 | 등록 내용 | | |
|---------|----------------------------|-------|-------|
| 대표자 | 권영길 | |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0-1 일진빌딩 4층 | | |
| 주요간부 | 사무총장 | 기획위원장 | 회계책임자 |
| | 김석영 | 노회찬 | 최철호 |

| 지구당 등록현황 (30) | |
|---------------|--|
| 구분 | 지구당(지구당위원장) |
| 서울(7) | 양천구갑(김중원), 양천구을(윤석환), 강서구갑(이훈구), 강서구을(노희찬), 구로구을(이충건), 관악구갑(함윤경), 강남구을(신연직) |
| 부산(2) | 연제구(김수길), 사상구을(강수열) |
| 대전(4) | 대덕구(정현태)중 구(심규상), 서구을(조용구), 유성구(윤종세), |
| 울산(1) | 중 구(김명숙) |
| 경기(7) | 성남시중원구(이홍성), 부천시원미구갑(박정현), 부천시원미을(양시모), 안산시을(이하연), 고양시덕양구(유왕선), 고양시 일산구(유기수), 군포시(조원기) |
| 강원(1) | 춘천시갑(김기수) |
| 충북(3) | 청주시상당구(이길호), 청주시흥덕구(김재수), 충주시(송태정) |
| 충남(3) | 천안시갑(오창석), 천안시을(이용길), 청양·홍성군(윤훈상) |
| 경남(1) | 남해·하동군(김광석) |
| 제주(1) | 제주시(이용중) |

| 【 기본정책과 강령 】 | |
|--|-------------------------------------|
| 1. 사회복지대혁명 5개년 계획, 국민생활 기본선 보장 | 6. 사회적 공동육아제 및 30%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
| 2. 평생고용 체계구축, 퇴직금 원전 보장,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 7. 7% 교육재정 확보로 중등교육까지 무상 의무 교육 실현 |
| 3. '부패방지특별법' 제정,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의 정치 활동 보장 | 8. 깨끗한 환경을 누릴 국민 권리의 전면 보장 |
| 4. 재벌체제 해체와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 9. 획기적 군축과 21세기형 과학 강군 육성 |
| 5.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국가의 기반 구축 | 10. 민족사 정립을 위한 진실규명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 설치 |

3) 정당의 변화

건설국민승리21은 독자적인 대통령후보를 내세우며 창당과 함께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30만 6,026표(1.2%)만을 득표하여 낙선하였고,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기반구축을 시도했던 건설국민승리21의 도전도 실패하였다. 그러나 건설국민승리21은 진보진영이 통일된 정치행동을 이뤄 뚜렷한 지지계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건설국민승리21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동시에 진보세력의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4장

정당 활동

제1절 _ 선거활동

제2절 _ 원내활동

제3절 _ 당내활동

제1절 선거활동

1993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김영삼 정부 5년동안 각 정당은 3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치렀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과 광역의회의원(서울시·광역시·도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구·시·군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은 1961년 이후 34년 만에 부활된 것이었다. 또한 1996년 4월 11일에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1997년 12월 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1개 선거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6개 선거구 등 총 17개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또한 구·시·군의 장 4개 선거구, 시·도의회의원 29개 선거구, 구·시·군 의회의원 76개 선거구 등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09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1. 제14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 부산 동래구갑, 부산 사하구, 광명시 보궐선거(1993. 4. 23)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첫 번째 보궐선거가 1993년 4월 23일 부산 동래구갑, 부산 사하구, 광명시 등 3곳의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동래구갑 보궐선거는 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이었다던 민주자유당 박관용 의원이 1993년 2월 27일 대통령비서

실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사하구 보궐선거는 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서석재 의원이 1989년 4월 14일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의 후보매수사건으로 1993년 1월 29일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광명시 보궐선거는 이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이었다던 통일국민당 윤항열 의원이 1993년 1월 25일 사망하여, 그 궐석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은 부산 동래갑선거구에 강경식 전 재무부 장관, 사하구선거구에 박종웅 전 김영삼 대통령비서관, 경기 광명시선거구에 손학규 서강대 교수를 각각 공천하였다. 그러나 사하구선거구 공천과정에서는 사하구지구당 위원장 서석재 전 의원이 공천에 반발하면서 지구당개편대회가 연기되는 등 내분이 일었다. 결국 최형우 사무총장이 서석재 전 의원과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서석재 전 의원이 지구당원들에게 박종웅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한편 경기 광명시선거구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이래 제14대 대통령선거까지 다섯 번의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야당 강세 지역이었던 까닭에 재야출신인 손학규 교수를 영입하여 전략공천하였다.

민주당은 선거일을 불과 20여 일 남겨둔 시점까지 공천자를 결정하지 못하며 내부 진통을 겪었다. 애초 당 지도부는 노무현 최고위원과 김정길 전 최고위원 등 중진을 보궐선거 지역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사자의 고사 및 지역연고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광명시선거구의 경우에는 6명이 공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중진인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정택 지구당위원장 등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일을 20일 앞둔 4월 2일 경기 광명시선거구에 최정택 광명시지구당 위원장을, 부산 동래구갑선거구에 정인조 동래구갑지구당 위원장을, 사하구선거구에 김정길 전 최고위원을 각각 공천하였다.

1993년 4월 9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결과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공천한 6명의 후보 외에도 신정치개혁당, 통일국민당, 대한정의당, 무소속 등에서 11명이 출마하여 3



▲ 4 · 2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광명시선거구 선거운동(1993년 4월 7일).

개 선거구에 모두 1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부산시 동래구갑선거구에는 민주자유당 강경식 후보와 민주당 정인조 후보 두 사람만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양당간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으나 사하구에는 신정당 홍순오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용수·유강열 후보 등 모두 5명이 경쟁을 벌였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선거구에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외에 통일국민당 정순주 후보, 신정치개혁당 권순필 후보, 대한정의당 김재용 후보와 무소속 김은호·유덕상·이공훈·이철로·차종태 후보 등 무려 10명이 입후보하여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민주자유당은 4·23 보궐선거를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기본 전략을 기반으로 광명시선거구 손학규 후보는 “대통령이 불렀다. 개혁 위해 나섰다”, 부산 사하구선거구 박종웅 후보는 “신한국의 젊은 기수”, 동래갑구 강경식 후보는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정국의 파고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야당부흥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자유당 최형우 사무총장과 민주당 김덕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세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지역선거구마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5명씩으로 구성된 합동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시단은 해당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하여 타 정당 후보사무실에 감시요원을 파견하는 등 상호합의 아래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다. 양당의 공명선거 합의 내용은 후보자의 재산공개, 금품·향응제공 금지, 상호비방·흑색선전 금지, 행정기관의 중립보장, 관련단체와 통·반장들의 선거기간 중 활동 중단 등이었다. 또한 선거기간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무총장회담을 수시로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합의는 무색해져 갔다. 보궐선거를 공명선거풍토 정착의 디딤돌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중앙당의 지원을 자제해왔던 민주자유당은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전승’을 목표로 지원강화에 나섰다. 민주당도 3개 보궐선거 지역 중 최소한 한 지역 이상에서는 당선돼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선거 막바지 총력비상지원태세에 돌입하였다. 특히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기 광명시선거구의 경우 여야 정당들의 집중적인 지원에 따라 선거가 과열되면서 각 후보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4월 23일 보궐선거 결과 세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자유당이 승리하였다. 특히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던 광명시선거구에서도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궐선거 결과를 평가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기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선거에서 전패를 당함으로써 개혁정국 속에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명주군·양양군, 철원군·화천군, 예천군 보궐선거(1993. 6. 11)

1993년 상반기 재산공개 파동 속에 강원 명주군·양양군 김문기 의원, 강원 철원군·화천군 김재순 의원, 경북 예천군 유학성 의원 등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세 사람이 재산형성 과정의 물의로 인하여 1993년 3월 31일 자진사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세 지역선거구의 보궐선거가 1993년 6월 11일 실시되었다.

민주자유당은 5월 4일부터 6일간 3개 선거지역 공천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명주·양양군선거구에 김명운 당 고문을, 철원·화천군선거구에 이용삼 변호사를, 예천군 선거구에 반형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하고 선거준비를 시작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4·23 보궐선거 때 공천 잡음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공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공천후보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3개 지역에 단 4명만이 공천을 신청하였고, 최종심사 결과 강원도 명주·양양군선거구에 최옥철, 철원·화천군선거구에 김철배, 그리고 경북 예천군선거구에 안희대 등 현역 지구당위원장을 각각 공천하였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이외에 신정치개혁당이 철원군·화천군선거구에 이경희 전 통일국민당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고, 통일국민당이 예천군 선거구에 황병호를 공천하였다. 이외에 무소속으로는 예천군선거구에 정대수 후보가,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선복기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에 따라 5월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명주·양양군과 철원·화천군 선거에는 3 대 1의 경쟁률을, 예천군 선거는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세 지역 모두가 전통적으로 여권 강세지역이며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앞선 4월 23일 실시된 보궐선거와 같은 압승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민주자유당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룩하고자 하는 신한국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정치개혁의 시험장”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군사문화가 남긴 잘못된 제도와 관행, 낡은 의식을 제거하는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

를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공천한 당내 중진인사 김명윤 고문이 출마한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민주당은 4·23 보궐선거의 패배가 선거전략 부재와 지도력 공백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전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다. 이에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명주·양양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당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가 재산공개파문으로 민주자유당 의원들이 사퇴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필수적이라는 ‘야당육성론’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선거전에 임하였다.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명주·양양군선거구가 접전지로 부각되었고,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중앙당의 지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당의 원로인 김명윤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민주당 또한 전패할 경우 연이은 보궐선거 패배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두 정당의 중앙당 고위당직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의원들이 지역할당제로 활동하는 등 거당적 총력전이 전개되었다. 선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양당의 대결은 점차 과열되었고, 그 결과 흑색선전·선심공약 남발·금품제공 의혹 제기 등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선거 과열양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현지에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은 철수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할 정도였다.

1993년 6월 11일 선거결과 강원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옥철 후보가 민주자유당 김명윤 후보에 3,500여 표 차이로 당선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반면 강원 철원군·화천군선거구와 경북 예천군선거구는 민주자유당 이용삼 후보와 반형식 후보가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이번 보선을 교훈삼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보다 알찬 민생정책개발과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반면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야당 재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민

주당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비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개혁시대의 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 대구 동구을, 춘천시 보궐선거(1993. 8. 1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세 번째 보궐선거가 1993년 8월 12일 대구 동구을과 춘천시 두 곳의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춘천시 보궐선거는 1993년 5월 22일 통일국민당 손승덕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궐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구 동구을은 재산 공개과동으로 해당 지역구의원인 민주자유당 박준규 의원이 탈당 후 6월 30일 사직하면서 실시하게 되었다.

애초 여야는 춘천시 보궐선거를 7월 말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서 민주자유당은 국력낭비를 이유로 춘천시 보궐선거를 연기하여 8월 동시선거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춘천 보궐선거는 합의대로 7월 말,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분리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여야는 8월 동시선거 실시에 대한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실시 날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결국 정부는 선거일 결정은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8월 12일 보궐선거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흑서기 선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야당은 “정부가 투표 참여율이 가장 낮은 흑서기를 선거일로 잡은 것은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관변조직을 총동원해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음모”라며 선거불참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결국 야당은 선거불참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판단과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하여 선거참여를 결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은 7월 6일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 후보에 노동일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를, 춘천시 보궐선거 후보에 유종수 대한체육회 강원도지부 사무처장을 각각 공천하였다. 공천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앞서 실시된 6·11 보궐선거에서의 명주군·양양군선거구 패배를 의식하여 후보결정을 세 차례나 연기하는 등 ‘확실하게 승리를 보

장할 수 있는 인물'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명주군·양양군선거구의 승리를 재현하기 위해 통일국민당·새한국당과 야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 결과 7월 16일 3당은 연합공천에 합의하였고, 안택수 전 새한국당 대변인과 유남선 지구당위원장을 대구 동구읍과 춘천시 선거구에 연합후보로 공천하였다. 이외에 대구 동구읍 선거구에는 김용하 후보와 서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춘천시 선거구는 신정치개혁당 황환도 후보와 무소속 강정룡·유지한 후보가 입후보하여 5 대 1의 경쟁을 벌였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 7월 27일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237개 지역선거구 중 단 2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중앙당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두 정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보궐선거 지역에 파견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국회의원 및 중앙당 당직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들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만섭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공한을 보내 과열·혼탁선거가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정당이 합의한 중앙당의 보선개입 자제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과열 선거풍토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공명선거를 하자는 합의정신을 저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사항을 애초부터 약속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8월 3일에는 이경식 부총리, 홍재형 재무부 장관,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등이 선거공고 하루 전인 7월 25일 대구·경북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공항 증설, 섬유업체 지원, 대구 지하철 건설, 삼성자동차공장의 대구 유치 등 공약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도 있지 않은 선거운동제한을 함으로써 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과 3부 장관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내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3부 장관 고발에 대해 선거가 있다고 국정까지 수행하지 말라는 주장은 야당의 상투적 구태라고 비판하였다.

정당 간 과열경쟁 및 혼탁선거 양상은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해져 갔다.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당원 황귀남이 민주자유당 노동일 후보의 소형인쇄물 등과 함께 현금 1만 원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춘천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원을 폭행한 신정치개혁당 황환도 후보의 선거운동원 이강원 등 10여 명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정당의 불법타락 선거운동을 비난하는 성명전도 전개되었다. 춘천에서 민주자유당이 당 대표와 중앙당 당직자가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민주자유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자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으며 대구 동구를 정당연설회에서는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등 금권·관권선거를 자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증거제시도 없이 투표일 직전에 흑색선전을 일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 8·12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대구동구를 정당연설회(1993년 8월).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8·12 보궐선거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실시된 세 차례 보궐선거 중 가장 과열혼탁한 양상을 보였으며, 개혁정국이 무색할 만큼 금권·관권시비가 심한 선거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8월 11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금품살포 운동원 폭행시비에 이은 맞고소 사태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마감하였다.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 가운데 치러진 8·12 보궐선거 결과 춘천시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유종수 후보가,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서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여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 중앙당 당직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현역의원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도 예상과 달리 무소속 서훈 후보에게 1만 1,98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패하였다. 한편 민주당 또한 춘천시선거구에서 전력을 다했지만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였고, 특히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공천 잡음 속에 서훈 후보를 대신하여 공천한 안택수 후보가 8.1%의 저조한 득표율로 최하위에 그치면서 책임공방을 벌여야 했다.

라. 대구 수성구갑, 영월군·평창군, 경주시 보궐선거(1994. 8. 2)

강원 영월군·평창군선거구의 민주자유당 심명보 의원과 경북 경주시선거구의 민주자유당 서종수 의원이 1994년 5월 24일과 1994년 5월 15일 각각 사망하였다. 또한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서는 통일국민당 박철연 의원이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로 1994년 6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어짐



▲ 동아일보 1993년 8월 12일자 4면.

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이 세 지역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1994년 8월 2일 실시되었다.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하에 1994년 3월 새롭게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소위 통합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대구 수성갑선거구의 경우 ‘표적 사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던 박철언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자유당은 3곳의 보궐선거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2곳에서는 승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6월 하순 경주시선거구에는 임진출 한국로터리클럽회장을, 영월·평창군선거구는 김기수 전 경찰청 차장을,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은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는 박철언 전 의원이 탈당한 이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창화 전 의원을 각각 공천하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인물난과 경선거부 등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야권 연합공천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 공천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7월 5일 최고회의를 통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강원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 영월 출신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차점자인 신민선 전 통일국민당 의원을 공천하였다. 경북 경주시선거구와 대구 수성구갑선거구는 현역 지구당위원장인 이상두·권오선을 각각 공천자로 확정하였다. 한편 보궐선거를 앞둔 1994년 7월 8일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신민당은 야권의 연합공천 논란 속에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 박철언 전 의원의 부인인 현경자를 공천하였다. 또한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는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성룡 연구원을, 경주시선거구에는 최병찬 경주병원이사장을 공천하였다.

7월 18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3개 선거구에 총 2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박철언 전 의원의 부인 현경자 후보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출마한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는 총 12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고, 영월·평창군은 5명, 경주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8·2 보궐선거는 새롭게 제정된 통합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선거

운동 양상을 보였다. 보궐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은 통합선거법에서 새로이 허용된 다양한 기법의 홍보활동을 통해 경력과 정견 등 후보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일반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홍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 및 친필편지 보내기,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홍보전이 전개되었다. 새로이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것은 전화홍보였다. 또한 무제한으로 허용된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또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개시된 첫날부터 쉽 없이 거리를 돌며 연설·대담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서는 후보마다 각기 다른 접근방식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구·경북 푸대접론’을 내세우며 대구정서에 집중적으로 호소하였다. 신민당 현경자 후보는 “대구시민의 심판, 대구의 자존심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선거 중반 이후 현경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박준규 전 국회의장도 대구의 자존심을 언급하며 가세하였다. 한편 민주당 권오선 후보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대구 푸대접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도 박철언 전 의원을 포함한 이 지역 정치인들의 몰락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 정창화 후보는 대구정서를 쟁점화하는 것이 전혀 득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가급적 대구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유림의 영향력이 큰 경주시선거구에서는 ‘보수적인 경주정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성후보에 대해 ‘치맛바람인가, 정치발전인가’를 놓고 찬반논쟁이 전개되었다. 야권후보들은 여당 후보가 여성인 점을 들어 ‘여당의 경주 자존심 무시’로 몰아치며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의 반발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임진출 후보는 “무뚝뚝한 아들보다 꼼꼼한 딸이 낫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대응하였다.

농업 인구가 50%나 되는 영월·평창군선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가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일제히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폐해를 내세우며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의 농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야권후보들은 “쌀 개방 거부 약속을 어긴 민주자유당 후보를 표로 심판하여 강원도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김기수 후보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편 농촌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큰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물론’으로 맞섰다.

새로운 선거법하에서 치열한 득표전을 전개했던 8·2 보궐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민주당, 신민당은 각각 1곳에서 승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영월·평창군 선거구에서 김기수 후보가 2만 3,625표를 획득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서는 신민당 현경자 후보가 민주자유당 정창화 후보의 득표수(1만 6,820표)보다 2배가 넘는 3만 5,440표를 획득하여 압승하였다. 한편 여당이 기대를 모았던 경주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상두 후보가 민주자유당 임진출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521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후 최소한 2곳에서의 승리를 장담했던 민주자유당은 2곳에서 패하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면서도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각 한 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과 신민당은 보궐선거 결과를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신민당은 ‘신민당과 국민의 승리’라며 박철언 전 의원의 즉각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구하였다.

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모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었으며 30여 년 간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을 개정하면서 주민직선의 지방정치가 부활되었다. 이후 선거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한 여야간의 논란 속에 1991년 3월과 6월에 우선적으로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어

1995년 6월 27일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애초 지방자치단체선거는 199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4개선거(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면 경제·사회의 불안정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선거 실시를 연기하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와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1995년 3월 15일 국회에서 의결하였다. 이로써 장기간의 논란 끝에 1995년 6월 27일 실시하게 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외형적 형태의 완비는 물론이고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대표자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또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소위 통합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된 최초의 전국단위의 선거였다.

가. 민주자유당

1) 후보자 공천

1995년에 접어들어 민주자유당은 3월 23일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기획위원회’를 발족하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민주자유당은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인물’과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4대 원칙을 확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이 설정한 4대 원칙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공천에서의 경선제 도입, 구·시·군의 장 선거는 지역사정에 따른 선별공천 병행,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 의견 최대 반영, 모든 선거에서 행정가 및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사의 적극영입 등이었다.

민주자유당은 경선을 통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공천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1995년 2월 7일 당헌 개정을 통해 경선제를 명문화하였다. 개정 당헌의 경선제 규정은 3인 이내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당 시·도지부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경선을 생략하고 공천심사위원회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시·도지사후보 공모를 통해 경선 대상지역을 선별하고 공천자 내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95년 3월 31일 마감된 시·도지사후보 공모신청에는 모두 38명이 지원하여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보심사 작업에 착수하여 서울·경기·제주 등 3곳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시·도지부 추천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검토를 거쳐 단일 후보를 최종 결정하였다.

애초 서울지역은 정원식 전 총리를 추대 방식으로 공천하고자 하였으나 이명박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단을 구성한 경기·제주·서울 시·도지부는 각각 5월 1일, 5월 4일, 5월 12일 경선을 실시하였다. 여당 사상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근소한 차로 임사빈 후보를 이겼다. 이어 제주에서 두 번째로 치러진 경선에서는 우근민 후보가 일방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5월 12일 정원식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대결한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는 정원식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편 구·시·군의 장 후보 공천은 지구당의 사정에 따라 경선과 지구당위원장의 추천방식을 선별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 수원, 시흥 등 19개 기초단체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 후보는 지구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면 당무회의에서 추천자를 심의한 후 총재가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후보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230개 중 210개 기초단체장 후보에 542명이 공모를 신청하여, 평균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영남지역에는 후보신청자들이 집중되어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호남과 충청 지역의 경쟁률은 저조했다. 전·현직 관료출신이 후보신청자 중 약 33%를 차지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점 중 하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5월 1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들에 대한 지구당의 의견서 검토를 시작으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지구당위원장의 내락을 받고 단일후보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신청자가 다수였다.

한편 후보 공모 결과 전과 경력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민주자유당은 각 지구당에 전과자, 파렴치범, 비리와 독직사건 연루자 등을 후보추천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방침과 관련하여 지구당 위원장들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해 중앙당이 추천한 중진급 정치인을 기피하고 위원장 측근의 인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불공정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공천심사 결과 민주자유당은 1995년 5월 13일 수도권 주요도시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등 20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1차로 발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계속된 공천심사 결과 민주자유당은 최종적으로 209개 구·시·군의 장 후보를 확정·발표하였다.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된 호남 12개 지역과 신청자가 많아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경북의 5개 지역 등 총 21개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였다.

시·도의회의원 후보 공천은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구당에서는 5월 18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접수하였고, 마감결과 총 875개 선거구 중 724개 선거구에 1,056명이 신청해 평균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공천희망자가 없는 선거구가 151개에 이르렀고,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 대다수가 호남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심사과정을 거쳐 시·도의회의원 공천자를 계속해서 확정·발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2개 선거구에는 공천자를 내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자

| 구분 | 공천자 | 비고 | |
|-------|--|---|--|
| 광역단체장 | 서울(정원식), 부산(문정수), 대구(조해녕), 인천(최기선), 광주(김동환), 대전(염홍철), 경기(이인제), 강원(이상용), 충북(김덕영), 충남(박중배), 전북(강현욱), 전남(전석홍), 경북(이의근), 경남(김혁규), 제주(우근민) | | |
| 기초단체장 | 서울 | 종로구(배운환), 중구(김정환), 용산구(이준우), 성동구(이광하), 광진구(전명호), 동대문구(박종식), 중랑구(조동만), 성북구(김병웅), 도봉구(김창신), 강북구(지성우), 노원구(이기재), 은평구(최중태), 서대문구(김병석), 마포구(조삼섭), 양천구(허 원), 강서구(박승정), 구로구(김익수), 금천구(강성환), 영등포구(박영목), 동작구(이상준), 관악구(박형석), 서초구(조남호), 강남구(권문용), 송파구(김영근), 강동구(반충남) | |
| | 부산 | 중구(변종길), 서구(변익규), 동구(곽윤섭), 영도구(박대석), 부산진구(하계열), 동래구(이규상), 남구(성재영), 북구(권 익), 해운대구(서석인), 사하구(박재영), 금정구(윤석천), 강서구(소상보), 연제구(박대해), 수영구(신종관), 사상구(서경원), 기장군(오규석) | |
| | 대구 | 중구(강현중), 동구(권영환), 서구(이의상), 남구(이규열), 북구(도재호), 수성구(정낙순), 달성군(하영태) | |
| | 인천 | 중구(이세영), 동구(김창수), 남구(민봉기), 연수구(신원철), 남동구(김국진), 부평구(서정식), 계양구(박희룡), 서구(채중남), 강화군(김충호), 옹진군(조건호) | |
| | 광주 | 동구(이광현), 서구(문영식), 남구(김동섭), 북구(오병남), 광산구(양해달) | |
| | 대전 | 동구(김덕중), 중구(송일영), 서구(박동구), 유성구(이병오), 대덕구(김성기) | |
| | 경기 | 수원시(이호선), 성남시(김중태), 의정부시(김기형), 안양시(한세권), 부천시(김길홍), 광명시(전재희), 평택시(김선기), 동두천시(방재철), 양주군(윤명로) 안산시(이상용), 과천시(이성환), 의왕시(유신열), 군포시(유병직), 시흥시(한상욱), 구리시(박영순), 남양주시(김현덕) 여주군(박웅국), 화성군(김일수), 파주군(송달용), 고양시(이성호), 하남시(구자란), 광주군(남재호), 포천군(박대식), 연천군(이종익), 양평군(민병재), 가평군(양재수), 이천군(유승우), 용인군(윤병희), 안성군(이종건), 김포군(임순기) | |
| | 강원 | 춘천시(배계섭), 원주시(김대중), 강릉시(심기섭), 동해시(김인기), 태백시(홍순일), 속초시(이관희), 홍천군(이춘섭), 횡성군(유재규), 영월군(박완영), 평창군(전천수), 정선군(김원창), 철원군(김호연), 화천군(김현배), 양구군(임경순), 인제군(최석규), 고성군(이영구), 양양군(정명시) | |
| | 충북 | 청주시(지현정), 충주시(이시중), 제천시(권희필), 단양군(정하모), 청원군(오권영), 영동군(박완진), 보은군(곽동국), 옥천군(안철호), 괴산군(김한식), 음성군(박수광), 진천군(김경희) | |
| | 충남 | 천안시(유병희), 공주시(이병하), 보령시(신준희), 아산시(이기영), 서산시(김춘식), 금산군(김행기), 연기군(이기봉), 논산시(공병선), 부여군(김성환), 서천군(김청환), 청양군(명환철), 홍성군(정갑영), 예산군(박중순), 태안군(진태구), 당진군(이홍근) | |
| | 전북 | 전주시(조명근), 군산시(원형연), 익산시(이병준), 정읍시(강 광), 남원시(이동기), 김제시(정희운), 원주군(최충일), 진안군(송남오), 무주군(조한준), 장수군(장재영), 임실군(홍순균), 부안군(허동일) | |
| | 전남 | 목포시(김남진), 여주시(김선규), 순천시(오영기), 여천시(정성환), 여천군(주두실), 장성군(김영남), 화순군(조범중), 곡성군(김중균), 광양시(김영일), 고흥군(김원식), 보성군(김정순), 완도군(최봉래), 영암군(전정식), 무안군(박민재) | |
| | 경북 | 포항시(최수환), 경주시(이원식), 김천시(이성우), 구미시(김관용), 영주시(박시균), 영천시(김준영), 문경시(김학균), 의성군(김복규), 영덕군(김우연), 청송군(안의중), 봉화군(박장수), 영양군(이원국), 울릉군(정중태), 경산시(박재찬), 청도군(김상순), 성주군(이창우), 예천군(김수남), 울진군(전광순) | |
| 경남 | 창원시(김창수), 울산시(심원구), 마산시(황철근), 진주시(백승두), 진해시(김병로), 통영시(고동주), 고성군(조경문), 사천시(하일철), 김해시(송은복), 의령군(전원용), 창녕군(김진백), 밀양시(이진영), 양산군(안종길), 거제시(조상도), 하동군(정우용), 남해군(강태선), 함양군(김병오), 산청군(김기조), 거창군(최준학), 합천군(우인교) | | |
| 제주 | 제주시(고민수), 서귀포시(변성근), 북제주군(신철주), 남제주군(강태훈) | | |

한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도입되었고, 그 정수는 97석이었다. 민주자유당은 비례대표 확보 목표를 40~50석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광역자치단체의 제1당이 비례대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구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던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도 1~2석을 기대하였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민주자유당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우세지역인 부산·영남권과 정원 배정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여성 이외에 다양한 직능단체 대표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시·도지부로부터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이를 중앙당이 최종 심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주자유당은 최종적으로 96명의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였고, 이 중 과반수가 여성이었다. 또한 15개 시·도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할당하였다.

2) 선거대책 및 전략

민주자유당은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가스 폭발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지방선거가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주민자치, 생활자치’ 등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참뜻을 강조하며 선거 기조를 탈정치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퇴색된다하여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꾼론’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기준으로 내세우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성을 약화시킨다는 홍보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정된 ‘통합선거법’ 하에서 치러지게 될 선거환경에 대비하도록 당직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5년 접어들어 민주자유당은 2월 7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직을 개편한 후 당원교육과 사고지구당정비 등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3월 23일 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어 5월 18일에는 선거기획단을 확대 개편하여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선거대책본부장 직속으로 선거상황실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시·도지부에도 시·도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당 체제를 전면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기본전략은 전국단위의 대규모 선거인만큼 조직과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것이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다양하게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하여 지구당위원장이 선거운동과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특히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3월 21일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시·도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지구당위원장 책임득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당 중진들을 9개의 권역별로 전면 배치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총괄하여 재검점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2중장치를 통해서 중앙당차원에서 점검토록 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이었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을 우세, 혼전, 열세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혼전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중부권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자유당 정당연설회에서 정원식 서울시장후보가 인사하고 있다(1995년 6월 26일).

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우선순위는 단연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패배할 경우 1996년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1997년 대통령선거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전통적 열세지역인 호남과 충청권 등 취약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해당지역 출신 중진 인사들을 대거 내세워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공약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가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고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3월 중순부터 충청지역 순회에 나서자 3월 18일 열린 청양·홍성 지구당 개편대회와 3월 28일의 대전시 중구지구당 임시대회에 이춘구 대표를 포함한 중앙당 당직자를 대거 참석시키는 한편 지역개발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전·충남지역에서 자유민주연합의 당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나갔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 등 3개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자들이 읍·면·동 단위의 핵심인사인 점에 착안하여 선거전략 초점을 조직에 기초한 선거운동에 맞췄다. 지구당별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의 선거별로 당원 및 자원봉사자가 공동으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민주자유당 후보들의 기호가 모두 1번임을 감안, 모두 1번을 찍자는 '111 투표운동'도 함께 벌여나갔다.

민주자유당은 선거종반 지역별 형세와 유권자 성향 분석 결과 부동산이 30%에 달하며, 부동산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략지역인 강원 등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역개발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국책전문위원과 중앙상무위원 등 전원을 연고지에 파견하여 백중지역을 집중 공략하였다.

3)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5년 3월 15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공약개발 특별위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복제천 민주자유당 정당연설회(1995년 6월 18일).

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시할 선거공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5월 19일 ‘주민자치·생활 자치를 위한 민자당의 실천약속’ 이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자유당은 지방화시대 촉진과 민생치안 확립, 세제 개혁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 공급, 인간중심 교육개혁과 지방문화 발전, 그리고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7대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64개 주요 실천공약도 내놓았다.

교육정책으로는 대학정원의 자율화와 실질적인 복수 응시기회 부여로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간의 전학과 학교 내의 전과가 자유로운 열린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대학촌 형성을 유도해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이 민간업자를 유치해 대학촌을 조성할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전인교육 방안으로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를 선정해 월 1회 ‘책가방 없는 날’ 을 운영하는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이를 1996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정책에서는 분산된 교통행정 업무의 협의·조정

을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권역별 광역교통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차
원에서의 근원적 교통수요 감축대책을 제시했다. 또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의 합리적인 세목조정을 통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4대강 수질개선에 1997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해 전국 주요하천

민주자유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공약: 주민자치·생활자치를 위한 민자당의 실천약속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지방화시대 촉진, 민생치안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고등고시제 실시 및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귀향촉진법 제정 ○인감증명 발급제도 폐지 등 민원서류 간소화 ○향후 3년간 2,500억원의 예산투입, 선진치안체제 확립 ○신고인 요청에 따른 신변보호 ○식품·마약사범 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 엄벌 ○공공변호인제 도입 등 법률구조제도 개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경평측구대회 부활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지방5급 공채합격자 장교편입 추진 |
| 세계개혁, 대도시 교통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까지 세계 10위 경제대국 건설 ○종합토지세율 대폭인하 ○98년까지 각종 세금신고기준을 완전폐지 ○정책세의 물가연동을 통한 세율의 주기적 조정 ○교통기본법 제정 ○2001년까지 서울 등 6대도시에 지하철 544km 추가건설 ○99년까지 총 91조 3,000억 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동서 9개축, 남북 7개축의 격자형 도로망 형성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 설립 ○공사표준 공가제 도입 |
|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선진화된 농어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 조기집행 ○10년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조원 투입 ○매년 농어업인 후계자와 전업농가를 2만 5,000명 양성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어촌 어항 연안 공동어장 종합개발 ○오지 도서개발 촉진을 위한 과소지역진흥법 제정 명 양성 |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방경제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위한 지역협동기술지원 센터 설치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 도급 계약제도 활성화 ○국유지 장기임대제도 도입 ○김치, 민속주 등 전통고유업종 수출산업화 ○관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
| 쾌적한 환경, 안전한 식품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주요하천 수질 1~2급수로 개선 ○전국 33개 광역위생매립지 조성 ○49%인 하수처리율을 97년까지 73%로 상승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000년대 초까지 전국 5% 이상으로 확대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국제첨단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 ○2000년부터 의료보험 급여일수 제한 철폐 ○98년 전국민 연금시대 실현 ○식품의약품관리청 신설 ○종합적인 산업인력 개발체계 구축 |
| 인간중심 개혁, 지방문화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등 전인교육 실시 ○권역별 대학단지 개발 ○여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유아방 설치 |
|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지방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직에 여성 공천 ○국제분야 여성전문가 양성 ○97년까지 총 1만 3,600개 탁아소 설치 ○남녀차별금지 규정 및 육아휴직제도 보완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감독 강화 |

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여성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노인대책을 내놓았다.

민주자유당이 제시한 7개 분야의 64개 공약과 231개 실천계획 중에는 사법개혁, 가스시설 지하굴착공사의 안전관리강화, 교육개혁, 치안역량강화 및 쇄신 등 과거의 선거공약과 다르거나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공약을 반복한 것이 많았고 시행 시기나 예산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등 공약의 비현실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4) 선거결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15개 광역단체장 중 5개, 230개 기초단체장 중 70개, 875개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중 286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전체적으로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패배였다. 특히 시·도지사선거 중 가장 중요지역으로 평가되던 서울에서는 정원식 후보가 민주당 조순 후보, 무소속 박찬중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33개 선거구 중 겨우 11개 선거구에서만 당선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광역시·도의회의 경우에도 부산·강원·경북·경남 등 4개 시·도에서만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였을 뿐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야당에 패배하였다.

한편 정당공천이 허용된 3개선거의 총 득표율에서는 민주자유당이 광역단체장 33.3%, 기초단체장 31.8%, 광역의원 36.4%를 획득하여 민주당(각 30.1%·28.8%·32.7%)을 앞섰다. 득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당선자수가 민주당보다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후보를 많이 공천한 점, 호남과 충청권에서의 득표율이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표가 야당에 비해 많았던 점에서 기인된 결과였다. 선거 이후 민주자유당 당직자들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민주자유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광역단체장 | 부산(문정수), 인천(최기선), 경기(이인제), 경북(이의근), 경남(김혁규) | 5명 |
| 기초단체장 | 서울 | 서초구(조남호), 강남구(권문용) |
| | 부산 | 중구(변종길), 서구(변익규), 동구(곽윤섭), 영도구(박대석), 부산진구(하계열), 동래구(이규상), 북구(권 익), 해운대구(서석인), 사하구(박재영), 금정구(윤석천), 연제구(박대해), 수영구(신종관), 사상구(서경원), 기장군(오규석) |
| | 대구 | 중구(강현중), 서구(이의상) |
| | 인천 | 중구(이세영), 동구(김창수), 남구(민봉기), 연수구(신원철), 옹진군(조건호) |
| | 경기 | 광명시(전재희), 평택시(김신기), 동두천시(방제환), 양주군(윤명로), 과천시(이성환), 여주군(박용국), 화성군(김일수), 파주군(송달용), 연천군(이종익), 양평군(민병채), 이천군(유승우), 용인군(윤병희), 안성군(이종건) |
| | 강원 | 춘천시(배계섭), 강릉시(심기섭), 동해시(김인기), 태백시(홍순일), 홍천군(이춘섭), 정선군(김원창), 철원군(김호연), 양구군(임경순), 고성군(이영구) |
| | 충북 | 충주시(이시중), 제천시(권희필), 단양군(정하모), 영동군(박완진) |
| | 경북 | 경주시(이원식), 구미시(김관용), 문경시(김학문), 영덕군(김우연), 청송군(안의중), 울릉군(정종태), 청도군(김상순), 울진군(전광순) |
| | 경남 | 울산시(심완구), 진주시(백승두), 진해시(김병로), 통영시(고동주), 사천시(하일청), 김해시(송은복), 의령군(전원용), 창원군(김진백), 거제시(조상도), 하동군(정구용) |
| | 제주 | 제주시(고민수), 북제주군(신철주), 남제주군(강태훈)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자유당 고위 당직자들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1999년 6월 28일)

나. 민주당

1) 후보자 공천

민주당은 1995년 3월 17일 지자체선거기획단을 발족하고 선거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어 지자체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통해 2월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개정된 당헌에 근거하여 세부적 공천규정을 확정하였다. 우선 광역단체장 후보는 시·도지부대의원대회에서 제청한 후보자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공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청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선을 실시하여 공천자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참석하는 해당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되거나 10인 이상의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 후보를 총재가 최종 공천하도록 결정하였다.

공천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인을 위주로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의 기회가 많은 행정경험자들을 주요 선정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의 등장으로 당선 경쟁력이 약해진 충청권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자유민주연합과의 연합공천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공천규정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민주당은 4월 25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은 4월 말까지, 그리고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공천은 타 정당의 공천 상황을 검토하면서 5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관심이 집중된 15곳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은 4월 18일 이용희 당 상임고문을 추대형식으로 충북도지사 후보자로 선출한 충청북도 대의원대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대의원대회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광주, 서울, 전남·북,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8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였다. 특히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광주시장 및 전남·전북도지사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경쟁의 핵심지역이었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은 열띤 경선 경쟁이 전개되었다.

초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영입인사와 당내인사 간 대결양상으로 전개되었다. 4월 25일 실시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영입인사 송언중 전 체신부장관과 이영일 전 의원이 경쟁을 벌여 송언중 전 체신부장관이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어 5월 3일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외부영입 인사였던 조순 전 부총리와 당내인사 조세형 후보가 대결을 벌였고, 영입인사였던 조순 후보가 승리하였다. 5월 6일에는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이 이어졌다.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원을 받으며 경선에 출마한 영입인사 김성훈 전 중앙대 교수와 당내인사 허경만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허경만 후보가 당선되었다. 5월 11일 실시된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유종근 전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이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최낙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 광주, 전북 시·도지사 후보경선에서는 2차 결선투표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벌였다.

한편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당내 계파 간 갈등 속에 장경우, 안동선, 정관희 등 3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3일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장경우 후보와 안동선 후보의 2차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차 투표 직후 안동선 후보 측에서 장경우 후보 측이 돈 봉투를 살포하였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벌이다 개표장 내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개표



▲ 파행을 겪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장경우·안동선 후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1995년 5월 13일).

는 중단되었고 경선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처리문제로 심각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개표과정을 거친 후 6월 6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장경우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 이외에 민주당은 5월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변평섭 전 중도일보 상무를 대전시장 후보로 추대하였다. 5월 10일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신용석 지구당위원장이 2차 결선투표를 치르며 당선되었고, 5월 12일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황백현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였다. 민주당의 마지막 시·도지사 경선대회가 치러진 5월 26일 제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강보성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며 후보로 선출되었다.

강원도지사 후보는 4월 25일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이봉모 전 의원을 5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 추대해 확정하였다. 대구시장 후보는 5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신진욱 의원이 추대의 형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봉모 후보는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6월 12일 후보등록 포기를 선언하였고, 신진욱 후보 역시 민주자유당과 무소속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 공식 사퇴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 두 지역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였다. 한편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남·북 지역에서는 인물난으로 인하여 광역단체장후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광역의회의원 후보 공천에 있어서도 호남지역의 후보경쟁은 치열하였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어 공천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230개 선거구 중 156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지구당 차원의 추대형식을 통하여 후보자가 결정되었고, 경기 시흥, 부천, 전남 영광, 함평 등 소수 지역에서는 경선이 실시되었다. 875개 선거구 중 582곳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역시 수도권과 호남지역 공천에는 다수가 집중된 반면 약세지역인 영남과 충청지역에서는 인물난으로 공천하지 못한 지역이 많았다.

한편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에는 여성들의 광역의회 진출을 적극적

으로 배려한다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서울과 호남 등 강세지역에도 여성후보를 다수 공천하였다. 그러나 영남권 등 열세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확산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넓혀 공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58명의 비례대표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주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자

| 구분 | 공천자 | 비고 | |
|-------|---|---|--|
| 광역단체장 | 서울(조 순), 부산(노무현), 인천(신용석), 광주(송언종), 대전(변평섭), 경기(장경우), 충북(이용희), 충남(조중연), 전북(유중근), 전남(허경만), 제주(강보성) | | |
| 기초단체장 | 서울 | 종로구(정홍진), 중구(김동일), 용산구(설송웅), 성동구(고재득), 광진구(정영섭), 동대문구(박 훈), 중랑구(이문제), 성북구(진영호), 도봉구(유천수), 강북구(장정식), 노원구(최신길), 은평구(이배영), 서대문구(이정규), 마포구(노승환), 양천구(양재호), 강서구(유 영), 구로구(박원철), 금천구(반상균), 영등포구(김두기), 동작구(김기욱), 관악구(진진형), 서초구(이충우), 강남구(박응격), 송파구(김성순), 강동구(김충환) | |
| | 부산 | 영도구(구용희), 부산진구(최신도), 금정구(김문곤), 사상구(박중기), | |
| | 대구 | 서구(서중현) | |
| | 인천 | 중구(유청영), 동구(박형철), 남구(김철일), 연수구(박규영), 남동구(김용모), 부평구(최용규), 계양구(이현진), 서구(권중광), 강화군(김선홍) | |
| | 광주 | 동구(박종철), 서구(이정일), 남구(정두채), 북구(김태홍), 광산구(고재유) | |
| | 대전 | 동구(김덕경), 중구(김홍철), 서구(이용복), 유성구(송석찬), 대덕구(김현세) | |
| | 경기 | 수원시(고재정), 성남시(김병영), 의정부시(홍남용), 안양시(이석용), 부천시(이해선), 광명시(김태수), 평택시(이계완), 동두천시(정인백), 양주군(권선안) 안산시(송진섭), 과천시(민병학), 의왕시(신창현), 군포시(조원극), 시흥시(정언양), 구리시(나제민), 남양주시(안종득) 여주군(원종재), 오산시(유태형), 화성군(이호섭), 파주군(조재문), 고양시(신동영), 하남시(손영채), 광주군(박종진), 포천군(최용일), 연천군(이하윤), 양평군(이병대), 이천군(신동찬), 용인군(나진우), 안성군(김정식), 김포군(이준택) | |
| | 강원 | 춘천시(박학주), 원주시(한상철), 강릉시(심재중), 동해시(김형대), 태백시(박무봉), 속초시(동문성), 영월군(박영훈), 철원군(최종문), 고성군(황연배), 양양군(신명섭) | |
| | 충북 | 청주시(권순영), 충주시(유재홍), 단양군(박주진), 보은군(김종철), 괴산군(김환목), 음성군(박덕영), 진천군(윤광호) | |
| | 충남 | 천안시(전병규), 서산시(김의경), 금산군(박찬중), 부여군(윤 건), 홍성군(한만동), 예산군(이항복), 태안군(박규용), 당진군(손인교) | |
| | 전북 | 전주시(이창승), 군산시(김길준), 익산시(조한용), 정읍시(국승록), 남원시(이정규), 김제시(곽인희), 완주군(임명환), 진안군(임수진), 무주군(김세웅), 장수군(김상두), 임실군(이형로), 순창군(임득춘), 고창군(정길진), 부안군(강수원) | |
| | 전남 | 목포시(권이담), 여수시(김광현), 순천시(방성용), 나주시(김대동), 여천시(정채호), 여천군(정근진), 담양군(문경규), 장성군(김홍식), 화순군(임홍력), 곡성군(오치봉), 구례군(이동승), 광양시(김옥현), 고흥군(유상철), 보성군(문광용), 장흥군(김재중), 강진군(김재홍), 완도군(차관훈), 해남군(김창일), 진도군(박승민), 영암군(박일재), 무안군(이재현), 영광군(김봉열), 함평군(정원강), 신안군(손장조) | |
| | 경북 | 포항시(박기환), 경주시(이정호), 안동시(권혁구), 고령군(이윤대), 칠곡군(이규영), 울진군(박상인) | |
| | 경남 | 창원시(정기영), 울산시(이규정), 마산시(최윤기), 통영시(이두관), 김해시(홍의표), 밀양시(이광욱), 하동군(남명우) | |
| | 제주 | 제주시(김두전), 북제주군(부소윤) | |

2) 선거대책 및 전략

1995년 3월 15일 총재단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선거대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를 김영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선거승리를 위해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즉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통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주당의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등 각종 대형 사건·사고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 등 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 거론하며 반민주자유당 표를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취약 지역인 충청·영남·강원 등에서는 야당공조를 통한 연합공천 또는 현실적으로 연합공천에 이르지 않는더라도 범야권후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결과 실제로 서울·강원 등 일부지역에서는 자유민주연합과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었다.



▲ 서울 종로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정당 연합회에 조순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하여 인사하고 있다(1995년 6월 13일).

서울시장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은 민주당 조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는 한편 자유민주연합 김동길 의원이 조순 후보에 대한 지원연설을 하는 등 득표활동을 지원하였다. 반면 강원도지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자유민주연합 최각규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광역의회의원 선거구에서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찬조연설을 하는 등 상호 지원하였다. 특히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지역유세 과정에서 대전·충청 지역과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강원, 경북, 경남지역의 야권성향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연합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소속 후보자의 기호가 2번임을 내세워 '2번을 찍자'라는 구호로 광역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전국을 강세지역과 취약지구로 분류하여, 강세지역인 호남은 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 중점을 두고 밑바닥으로부터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광역단체장선거에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였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지구당이 중심이 되어 전선거에 공통된 정책을 개발하고 당의 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풀(pool)제의 선거운동을 벌였다.



▲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안양에서 민주당 지원연설을 하고 있다(1995년 6월 1일).

선거종반에는 이기택 총재가 전국을 순회하고,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호남지역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유세에 전념하는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득표활동을 벌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지지세력으로 흡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의원들로 특별유세반을 편성하여 대학가와 젊은 세대 집결지 등을 순회하면서 유세활동을 펼쳤다.

3) 선거공약

민주당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패는 정책과 인물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공약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 21명으로 편성된 공약개발팀을 구성하여 정책의 기본 틀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당무기획실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지역별 정책공약을 수립해 나갔다. 그 결과 5월 19일 ‘민주당의 지방화시대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민주당의 지방화시대 정책공약은 교통·환경·교육·건강·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개 지역별 공약개발 모형도 함께 마련하여 후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의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차로의 입체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택시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 도시순환도로 및 도심고속도로망의 추가 건설 등을 약속하였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세목조정으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해소를 공약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존을 위해 녹색 GNP(국민총생산)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체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해 취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치안과 관련 하여서는 농어촌지역까지 112순찰차를 확대·배치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2,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안역량 강화 및 쇄신을 통해 완벽한 선진치안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주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공약: 민주당의 지방화시대 정책공약

| 공약분야 | 세부공약 | |
|-----------|---|---|
| 교통 | ○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조정 및 지역순환버스 증설 ○교통관련 세금 및 범칙금 전액 교통관련분야 투자 | ○도시순환도로 및 도시철도 조기완공 |
| 환경 | ○갯강살리기 운동 | ○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준공 |
| 교육 |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 실시 ○학교주변 비교육적 환경 일소 ○1년간 유아교육 공교육화 | ○대학 전일제수업 및 졸업자격제 실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5세 및 초등교육기간 5년으로 조정 |
| 여성 | ○300인 이상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 ○성폭력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입 ○지방중기 대출금리 인하 | ○지방중기전담은행 설치 |
| 복지 | ○민간합동 식품감시체계 도입 ○노인인력은행 설치 | ○평생건강관리체계 수립 |
| 지방재원 | ○지방세 정액제 정률세 전환 | ○탄력세율 확대 ○미징수 세외수입원 발굴 |
| 지방세 비리 근절 |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단일화 ○군단위지역의 세무업무 통합 | ○전산자격제 도입 ○지방의회 세무감사 강화, 지방세 세목 단순화 |
| 주거안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중점 공급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확대 | ○재개발철차 간소화 ○설계·시공 일원화 및 부대입찰제 활성화 |
| 농어촌 | ○통합의료보험제 등 농어촌지원 7대정책 시행 ○농업경영상담소 설치 | ○특산물별 전문 협동조합 육성 |
| 지방문화 | ○지역 내 문화원 설립 활성화 ○작은 미술관·박물관 육성 | ○내고향 전통문화살리기 운동전개 ○지역문화학교 내실운영 |

4) 선거결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84명이 당선되었고,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352명이 당선되는 등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특히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서울에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장 선거구 중 무려 23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였고, 서울시의회의원선

거에서도 지역구 133석 중 122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이외에도 6개 시·도의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였다.

후보자의 당선 비율에서도 민주당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총 749명의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전체 당선자가 440명에 달해 평균 58.7%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민주자유당의 평균 당선율 34.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민주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 광역 단체장 | 서울(조 순), 광주(송언중), 전북(유중근), 전남(허경만) | | |
| 기 초 단체장 | 서울 | 종로구(정흥진), 중구(김동일), 용산구(설승웅), 성동구(고재득), 광진구(정영섭), 동대문구(박 훈), 중랑구(이문제), 성북구(진영호), 도봉구(유천수), 강북구(장정식), 노원구(최선길), 은평구(이배영), 서대문구(이정규), 마포구(노승환), 양천구(양재호), 강서구(유 영), 구로구(박원철), 금천구(반상균), 영등포구(김두기), 동작구(김기욱), 관악구(진진형), 송파구(김성순), 강동구(김충환) | |
| | 인천 | 남동구(김용모), 부평구(최용규), 계양구(이현진), 서구(권종광), 강화군(김선홍) | |
| | 광주 | 동구(박중철), 서구(이정일), 남구(정두체), 북구(김태홍), 광산구(고재유) | |
| | 대전 | 유성구(송석찬) | |
| | 경기 | 의정부시(홍남용), 안양시(이석용), 부천시(이해선), 안산시(송진섭), 의왕시(신창현), 군포시(조원극), 시흥시(정언영), 오산시(유태형), 고양시(신동영), 하남시(손영채), 광주군(박종진) | |
| | 강원 | 속초시(등문성) | |
| | 충북 | 보은군(김중철), 괴산군(김환목) | |
| | 전북 | 전주시(이창승), 군산시(김길준), 익산시(조한웅), 정읍시(국승록), 남원시(이정규), 김제시(곽인회), 완주군(임명환), 진안군(임수진), 무주군(김세웅), 장수군(김상두), 임실군(이형로), 순창군(임득춘), 부안군(강수원) | |
| | 전남 | 목포시(권이담), 여수시(김광현), 순천시(방성용), 여천시(정재호), 여천군(정근진), 담양군(문경규), 장성군(김홍식), 회순군(임홍락), 구례군(이동승), 광양시(김옥현), 고흥군(유상철), 보성군(문광웅), 장흥군(김재중), 강진군(김재홍), 완도군(차관훈), 해남군(김창일), 진도군(박승만), 영암군(박일재), 무안군(이재현), 영광군(김봉열), 함평군(정원강), 신안군(손장조) | |
| 경북 | 포항시(박기환) | | |

민주당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침체되어 왔던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이기택 총재 측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 측의 갈등을 해소

하지 못하면서 선거 이후 지속적인 당내갈등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민주당은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 자유민주연합

1) 후보자 공천

자유민주연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4월 3일 공식적으로 창당되었다. 따라서 출범과 동시에 선거체제에 돌입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4월 5일 조부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둘러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작업을 시작하였다.

관심의 초점인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자유민주연합은 이른바 '2+2' 전략을 세웠다. 즉 대전과 충남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충북·인천·경기·강원·경북 중 2개 시·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천전략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우세지역으로 평가되던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에 각각 홍선기 전 대전시장, 심대평 전 청와대행정수석, 주병덕 전 충북도지사를 우선적으로 내정하고 기타지역 공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에서 자유민주연합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었다. 이에 자유민주연합은 4월 21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강우혁 의원을 영입하여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하는 등 민주자유당 공천탈락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지역이자 핵심이었던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는 최각규 전 부총리를 내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선거가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대결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자유민주연합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부총리라는 유력 인사를 서울시장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당에 큰 손실이라고 판단하고, 최각규 전 부총리를 백중지역으로 분석된 강원도지사 후보자로 전략 공천하였다.

한편 신생정당으로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당세확장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자유민주연합은 열세지역으로 평가되던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공천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김용균 전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경남도지사 후보로 공천하였고, 이를 통해 경남지역에서 자유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높여 이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둔 1995년 5월 20일 신민당과의 합당을 이루어내면서 이를 계기로 후보공천 작업이 부진했던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공략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애초 경북도지사 후보자로 내정한 구자춘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사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대구·경북지역 중진급인사들의 지원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경북도지사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은 최종적으로 15개 광역단체장선거 중 서울·부산·제주 그리고 호남지역을 제외한 총 9개 지역 시·도지사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광역의회의원 후보 공천에서도 역시 충청지역과 비충청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1995년 5월 14일 광명시 등 4곳의 공천자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 기초단체장 후보공천 결과 자유민주연합은 총 230개 구·시·군 중 67개 구·시·군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이 중 전략지역인 대전, 충남지역은 전 구·시·군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인물난을 겪은 부산, 대구, 전남·북, 경북지역은 1~2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하였고, 광주, 경남, 제주에는 1명의 후보자도 공천하지 못하였다.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총 875개 선거구 중 179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한편 비례대표광역의원의선거의 경우 총 97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24명만을 공천하였다. 충청권에서는 예비후보까지 포함해 정수를 대부분 다 채웠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수의 절반 이하의 후보만을 냈고, 부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자유민주연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자

| 구분 | 공천자 | 비고 |
|-------|---|--|
| 광역단체장 | 대구(이의익), 인천(강우혁), 대전(홍선기), 경기(김문원), 강원(최각규), 충북(주병덕), 충남(심대평), 경북(박준홍), 경남(김용균) | |
| 기초단체장 | 서울 | 중구(정문철), 성동구(정문구), 중랑구(강병진), 도봉구(조성국), 강북구(박영식), 노원구(김동익), 은평구(박영서), 구로구(여범구), 금천구(정홍권), 강동구(정정휴) |
| | 부산 | 영도구(노차태) |
| | 대구 | 중구(원유영), 동구(오기환) |
| | 인천 | 중구(박호영), 동구(이성웅), 남구(한기호), 연수구(유덕상), 부평구(하창수), 계양구(김성정), 서구(문기현) |
| | 대전 | 동구(박병호), 중구(전성현), 서구(이현구), 유성구(노세우), 대덕구(오희중) |
| | 경기 | 의정부시(박창규), 부천시(김홍식), 광명시(문한욱), 평택시(허 정), 안산시(안병권), 과천시(최영하), 군포시(이강원), 시흥시(김인환) 구리시(지홍우), 오산시(최원빈), 고양시(이훈섭), 용인군(이범삼) |
| | 강원 | 춘천시(김진협), 원주시(김기열), 강릉시(최찬규), 홍천군(이규형) |
| | 충북 | 청주시(김현수), 충주시(정달영), 단양군(조창배), 청원군(변종석), 옥천군(박효근), 음성군(김윤식) |
| | 충남 | 천안시(이근영), 공주시(전병용), 보령시(김학현), 아산시(이길영), 서산시(김기홍), 금산군(김현근), 연기군(홍순규), 논산군(전일순), 부여군(유병돈), 서천군(박형순), 청양군(정원영), 홍성군(이종근), 예산군(권오창), 태안군(윤형삼), 당진군(김낙성) |
| | 전북 | 군산시(신동안), 익산시(김용관) |
| | 전남 | 진도군(곽봉근) |
| | 경북 | 구미시(전병익), 칠곡군(이용삼) |

2) 선거대책 및 전략

1995년 3월 30일 창당과 함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직면하게 된 자유민주연합은 이 선거를 통하여 1996년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선거 전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 주력하는 한편 지구당창당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자민련 바람’을 일으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5월 17일에는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하여 세력기반을 충청권에서 대구·경북과 수도권까지 넓혀나갔다. 신설합당한 자유민주연합은 이후 5월 31일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체제에 돌입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김영삼 정부의 중간평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의 실패, 물가고 등 민생문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대형사건·사고 책임규명 등 정부의 실정을 집중 거론하며 반민주자유당 표를 결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주당과의 야권공조를 통해 반민주자유당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선거전략 중 하나였다. 즉, 서울·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합공천 등을 통해 야권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연합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력한 야당 후보를 공개 지원하며 당의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선거에서는 민주당 이봉모 공천자가 입후보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연합 최각규 후보로 단일화하였고, 서울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역시 민주자유당이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초점을 광역단체장선거에 두었다. 특히 대전, 충남·충북, 인천, 대구, 경북 등 6개 지역을 필승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창당과정에서부터 대전시장 후보, 충남·충북도지사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여 선거 전 소위 'JP바람, 신당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던 중반에는 충청지역의 선거판세가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력의 분산보다는 가장 유력지역인 충청권에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보였다.

3) 선거공약

자유민주연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작은 약속 큰 실천”이라는 제목하에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으로 구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중앙공약은 지방공약의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행정 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중 중앙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할 제도개선 등의 분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반면 지방공약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및 편익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로 구성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중앙공약을 통해 우리의 정치현실상 가장 알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체제로서 의원내각제를 전면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인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을 갖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함을 의원내각제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공약: 작은 약속, 큰 실천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1. 의원내각제의 실현 | ○자유민주주의를 참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인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을 갖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정치현실상 가장 알맞은 제도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일 것이다. |
| 2.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 |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고 지방의 특색과 토양에 맞는 주민정치를 실천한다. ○지방자치의 완벽한 실시를 위해 50%가 채 안되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등 튼튼한 지방자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한다. |
| 3. 국민생활 안전체제의 확립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책무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고 사회안전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함으로써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한다. |
| 4.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개혁 | ○각급 입시제도의 파행과 이에 따른 교육기관의 비정상화는 우리 교육의 위기를 초래했고 이것은 지금 한계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정상화가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도덕적인 인성교육의 강화와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최대 역점을 둔다. |
| 5. 경제정의 실현과 서민보호 및 중산층 확대 |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이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저소득층 모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과 복지를 확충한다. |
| 6. 활력있는 복지농어촌 건설 | ○WTO(세계무역기구) 시대를 맞아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진흥함으로써 활력 있는 복지농어촌을 건설한다. |
| 7. 중소기업 집중지원 | ○권력과 유착한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위기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호황과 중소기업의 불황 등 경제적 2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시정하고 특히 대기업에 의한 납품부조리, 영역침투, 자금시장, 정보 및 기술의 독점 등을 시급히 해결한다. |
| 8. 환경보전과 인간생명의 존중 | ○원상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과 어울리는 경제 발전을 기하면서 국민의 환경권 보장, 환경영향평가제의 정착, 범국민적 환경운동의 전개 등 환경대책을 강화한다. |
| 9. 교통문제의 해결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의 경색현상은 사회·안보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교통분담 차원의 국민협조를 바탕으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 10. 과학기술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 ○21세기 후기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과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며 특히 창조적 인재의 육성,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의 진흥을 실현한다. |
| 11.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 ○우리 고유의 따뜻한 모성을 지키고 키우면서 가부장적 인습을 과감히 버리고 여성에 대한 가정적·사회적 차별과 경시를 과감히 철폐한다. |

한편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연평균 7%의 성장률 및 2~3%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여 안정위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관리비 및 부대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원의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국민총생산의 5%를 교육재정에 투입하도록 법제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장이 실업계와 인문계 학급의 편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수요를 조절하고 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자유민주연합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양여금 확대와 지방세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5개년 경제계획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복지농어촌의 건설을 위해 농지세의 폐지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공약하였다. 또한 환경보전 대책으로 재활용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와 상수원 지역 거주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 실시 및 쓰레기 종량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4) 선거결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자유민주연합은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강원·충남·충북에서 광역단체장을 차지한데 이어 기초단체장선거와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각각 23명과 86명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은 신생정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진하여 향후 당세 확장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여당이 우위를 보여왔던 충북에서 선전하였고, 특히 제13대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이 높은 지지를 받았던 강원지역에서도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이러한 약진은 이른바 ‘충청도 핫바지론’을 제기하여 충청지역의 정서를 자극한 점이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평가 이외에도 서울·대구·강원 지역 등에서 나타난 ‘반민주자유당정서’와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한 ‘반민주자유당 연합전선’이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자유민주연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광역 단체장 | 대전(홍선거), 강원(최각규), 충북(주병덕), 충남(심대평) | |
| 기 초 단 체 장 | 대구 동구(오기환) | |
| | 대전 동구(박병호), 중구(전성환), 서구(이현구), 대덕구(오희중) | |
| | 강원 원주시(김기열) | |
| | 충북 청주시(김현수), 청원군(변종석) | |
| | 충남 천안시(이근영), 공주시(전병용), 보령시(김학현), 아산시(이길영), 서산시(김기홍), 금산군(김현근), 연기군(홍순규), 논산군(전일순), 부여군(유병돈), 서천군(박형순), 청양군(정원영), 홍성군(이종근), 예산군(권오창), 태안군(윤형상), 당진군(김낙성) | |

라. 기타정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군소정당은 친민당, 통일한국당, 대한민주당, 정명당 등 4개 정당이 있었다. 이 중 정명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친민당과 통일한국당은 서울시장선거에 각각 박홍래와 고순복을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대한민주당 또한 경기와 충남에서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에 각각 1명씩 2명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모든 후보는 미미한 득표율로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시·도지사 재·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실시되지 않았던 반면 구·시·군의 장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9일 전북 전주시, 8월 5일 전남 여천군, 9월 12일 서울 노원구, 11월 18일 경기 오산시 등 4개 구·시·군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4개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연합공천 문제 등으로 여야가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 자치라는 특성과 중앙정치와의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당의 개입 또는 관여가 비교적 적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가. 전북 전주시장 보궐선거(1996. 7. 19)

전북 전주시장 보궐선거는 이창승 전주시장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형 확정 전인 1996년 5월 30일 사퇴함으로써 1996년 7월 19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였다.

전주시선거구는 신한국당이 역대 선거에서 매우 저조한 지지를 받아 온 열세지역 중 하나로 후보자 공천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당이 후보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서 외면당했다고 비난하며 양상열 후보를 공천하였다. 그 외 7월 4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무소속 박용갑·이양재 후보 등 2인이 출마하여 3 대 1의 경쟁을 벌였다.

보궐선거는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이 치러졌다. 그 결과 17.7%라는 선거사상 최저투표율을 기록하며 새정치국민회의 양상열 후보가 6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최저 투표율을 보이자 각 정당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 문제를 두고 선거 후 또다시 논란을 벌였다.

나. 전남 여천군수 보궐선거(1996. 8. 5)

전남 여천군수 보궐선거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근진 군수가 사고 선박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96년 6월 11일 사퇴함으로써 1996년 8월 5일 실시되었다. 7월 19일 실시된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정당 간 논란 속에 진행된 여천군수 보궐선거는 7월 25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조남선 후보와 무소속 주승용·박정곤 후보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은 또다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여천군수 보궐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으로 조남선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거양상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갖는 한편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도 수시로 선거지원 활동을 벌이며 조남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무소속 주승용 후보가 유효투표수 2만6,074표 중 61.4%인 1만6,001표를 얻어 8,439표를 얻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조남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새정치국민회의는 한화갑 전남도지부장의 성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같은 당원끼리의 경쟁이었다. (……)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주민들과 한층 더 밀접해지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책임자를 공천하지 못한 공천과정의 실수라는 공식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새정치국민회의가 거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전남지역에서의 보궐선거 패배는 신한국당이 또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문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다.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1996. 9. 12)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는 1996년 7월 10일 최선길 구청장이 지방자치 전면 실시 후 처음으로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시되었다. 노원구청장 재선거에서도 연이은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공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논리로 공천배제를 주장하였다. 결국 신한국당은 노원구청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당선이 어려운 상황을 호도하는 전략일 뿐이라고 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정당공천 배제론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는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오히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선거공조에 합의하여 자유민주연합 김용채 후보를 단일후보로 공천하였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양당의 후보단일화를 사실상의 연합공천으로 규정하고 “입법정신을 무시한 과행정치이며 변칙정치”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후보단일화는 연합공천이 아니며 자당의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자유민주연합의 후보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오히려 신한국당이 사실상 내천을 하고도 공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8월 29일 마감된 노원구청장 재선거 후보등록 결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단일후보인 김용채 전 의원 이외에 무소속 이기재 전 노원구청장과 송광선 전 노원구 구의원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선거대책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양당의 지구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하는 등 공동으로 선거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함께 정당연설회에 지원연사로 나섰으며, 소속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들 또한 자유민주연합과 연합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선거결과 자유민주연합 김용채 후보가 54.1%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라. 경기 오산시장 보궐선거(1996. 11. 18)

경기 오산시장 보궐선거는 유대형 시장이 1996년 9월 17일 사망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이전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노원구청장 재선거에 이어 공조체제 속에 자유민주연합 유관진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이외 무소속으로 유재일 전 오산시의회 의장과 정기철 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2명이 입후보하여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는 정당 간 대결이 무산되면서 특별한 정치적 쟁점 없이 진행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조 속에 유관진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최종투표 결과 자유민주연합 유관진 후보는 37.4%를 득표하여 차점자 무소속 정기철 후보에 약

1,000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노원구청장 재선거 이후 또 한번 후보 단일화의 성과를 거두며 공조체제를 이어갔다.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 4. 11)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6개의 지역구가 증설되어 253개 지역선거구와 29석이 줄어든 46석의 전국구를 더해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민주자유당(1996년 2월 7일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당파국민연합, 대한민주당, 21세기한독당 그리고 친민당 등 총 8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무소속을 포함하여 총 1,389명이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하여 경쟁을 벌였다. 한편 각 정당은 전국선거구에 총 161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 후보자공천

민주자유당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서둘러 이듬해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시작하였다. 지구당위원장이 공식중인 지역구 및 신설 지역구의 조직책을 선정하는 한편 1995년 10월 초까지 지구당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체대상 인사의 기준을 마련해 갔다. 특히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공천실패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후보자의 자질이 최우선이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직접 나서 후보자 공천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공천절차상 국회의원후보자를 지구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당헌·당규 조항을 대표위원 제청으로 당 총재

가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에 접어들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자유당은 도덕성·참신성·당선가능성 등을 공천기준으로 내세웠고, 특히 개혁성향의 젊은 인사를 대거 영입하여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켜 개혁이미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1995년 12월 6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명변경을 확정하고 1996년 2월 6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또한 1996년 1월과 2월 이회창·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찬종 전 의원 등 외부 저명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1990년 3당 합당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당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공천배제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민주자유당은 1996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역구후보 공천신청을 접수하고 공천심사를 시작하였다. 접수마감 결과 총 253개의 지역구에 480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당 기획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수후보 212곳, 복수후보 35곳, 미정 6곳의 심사초안을 마련하였다. 심사초안은 강삼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세기·이상득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최종심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역구 통폐합²⁵⁾ 등으로 인하여 공천자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선가능성을 근거로 역사바로세우기 정신에 배치되는 자, 12·12와 5·18 관련자 및 5·6 공화국 비리 연루자, 부정축재자, 전과경력 보유자, 파렴치범, 사생활 문란자, 6·27 지방선거에서 득표가 저조했던 지역구위원장, 여론조사결과 부적격자 등 몇 가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천심사위원회는 당무감사 자료, 선거구 분석,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2월 2일 1차로 232곳의 공천자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등 미지정 선거구 공천은 공천심사 마지막까지 계파 간 갈

25)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야는 선거구 재조정협상 끝에 1996년 1월 27일 국회의원선거구를 전국구 46명, 지역구 253명 등 총 299명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선거구 조정에 따른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등 속에 유보되었고, 결국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내 구 통일민주당 출신 의원과 구 민주정의당 출신 김윤환 대표위원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었다. 김윤환 대표는 김영삼 총재에게 대구·경북 5곳의 공천권을 위임해 줄 것을 막판까지 요구하여 결국 확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1996년 2월 5일 253개 모든 지역구의 공천을 마무리 지었다.



▲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대회(1996년 2월 6일).

신한국당은 애초 현역의원 40% 교체 등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30·40대 개혁성향의 젊은 세대 대폭기용 등을 공언하였다. 이를 위해 전 민주당 핵심 인사,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권 출신 등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신인들을 영입하고 이들을 주로 수도권에 공천하여 개혁적 색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교체결과는 총 33명으로 26.1% 수준에 머물렀다. 불출마를 선언한 16명을 제외하면 실제 공천심사 결과 교체된 현역의원 수는 17명으로 교체율은 13.5%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득표력 있는 현역의원들이 탈당하여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우려하여 재공천한 결과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전국구 공천과 관련하여 지역 및 직능대표성과 새 인물 수혈 및

민주화 기여도를 전국구 공천기준으로 설정하였고, 20명 당선을 목표로 하여 3월 26일 46명의 전국구 공천자를 확정하였다. 공천결과 새로이 영입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각각 1번과 2번을 배정받았다. 반면 영입인사 중 박찬중 수도권선대위원장은 전국구 20석 달성의 배수진의 의미로 21번을 공천 받았다.

신한국당은 전국구 공천에서 각계 직능대표와 여성인사들을 상위권에 배정하고 지역 안배와 청·장·노년층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의원과 민주계 원로인 김명운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당시 72세)을 각각 3번과 4번으로 공천하였다. 또한 여성 부대변인이었던 김영선(당시 36세), 최연소자인 이찬진(당시 31세) 한글과 컴퓨터사 대표를 각각 당선목표 이내 순번인 16번과 20번에 공천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원로들과 개혁적인 인사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 구분 | 후보자 | 비고 | |
|-----|--|--|--|
| 전국구 | 이회창, 이홍구, 이만섭, 김명운, 권영자, 김수환, 김 덕, 신영균, 박세환, 정재철, 전석홍, 조용규, 오양순, 김 철, 황우여, 김영선, 유원중, 강홍식, 김찬진, 이찬진, 박찬중, 김정숙, 조익현, 안재홍, 황승민, 박창달, 김라기, 이경훈, 최경희, 안병달, 이수영, 정태영, 조운래, 이득복, 양창순, 이성춘, 이문수, 김금수, 김성배, 정상대, 김 욱, 전동룡, 이명진, 박윤옥, 기현정, 구본건 | 번호순 | |
| 지역구 | 서울 | 종로구(이명박), 중구(박성범), 용산구(서정화), 성동구갑(이세기), 성동구을(김학원), 광진구갑(김영춘), 광진구을(김충근), 동대문구갑(노승우), 동대문구을(김영구), 중랑구갑(김철기), 중랑구을(김충일), 성북구갑(심의석), 성북구을(강성재), 강북구갑(정태운), 강북구을(이철웅), 도봉구갑(양경자), 도봉구을(백영기), 노원구갑(백남치), 노원구을(박중선), 은평구갑(강인섭), 은평구을(이재오), 서대문구갑(이성현), 서대문구을(백용호), 마포구갑(박명환), 마포구을(박주천), 양천구갑(박범진), 양천구을(구본태), 강서구갑(유광사), 강서구을(이신범), 구로구갑(김기배), 구로구을(이신행), 금천구(이우재), 영등포구갑(김명섭), 영등포구을(최영환), 동작구갑(서청원), 동작구을(류용태), 관악구갑(이상현), 관악구을(박홍식), 서초구갑(최병렬), 서초구을(김덕룡), 강남구갑(서상목), 강남구을(정성철), 송파구갑(홍준표), 송파구을(맹형규), 송파구병(최한수), 강동구갑(이춘식), 강동구을(김중위) | |
| | 부산 | 중구·동구(정의화), 서구(홍인길), 영도구(김형오), 부산진구갑(정재문), 부산진구을(김정수), 동래구갑(박관용), 동래구을(강경식), 남구갑(이상희), 남구을(김무성), 북구·강서구갑(정형근), 북구·강서구을(한이현), 해운대·기장군갑(김운환), 해운대·기장군을(김기재), 사하구갑(서석재), 사하구을(박중용), 금정구갑(김진재), 금정구을(김도연), 연제구(최형우), 수영구(유홍수), 사상구갑(권철현), 사상구을(신상우) | |
| | 대구 | 중구(유성환), 동구갑(강신성일), 동구을(배석기), 서구갑(강용진), 서구을(강재섭), 남구갑(김해석), 북구갑(김중신), 북구을(김용태), 수성구갑(이원형), 수성구을(윤영택), 달서구갑(김한규), 달서구을(이철우), 달성군(김석원) |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서정화), 남구갑(심정규), 남구을(이강희), 연수구(서한샘), 남동구갑(이윤성), 남동구을(이원복), 부평구갑(조진환), 부평구을(이재명), 계양구·강화군갑(안상수), 계양구·강화군을(이경재), 서구(조영장) | |
| | 광주 | 동구(조규범), 서구(이환의), 남구(이승채), 북구갑(정경주), 북구을(고귀남), 광산구(김용호) | |
| | 대전 | 동구갑(남재두), 동구을(송천영), 중구(안양로), 서구갑(이재환), 서구을(염홍철), 유성구(신현국), 대덕구(최상진) | |

| | | |
|-------------|----|--|
| 지 역 구 | 경기 | 수원시 장안구(이호정), 수원시 권선구(김인영), 수원시 팔달구(남평우), 성남시 수정구(유제인), 성남시 중원구(정원립), 성남시 분당구(오세웅), 의정부시(홍문중), 안양시 만안구(박종근), 안양시 동안구(김삼재철), 안양시 동안구를(정진섭), 부천시 원미구(김희태열), 부천시 원미구(이사철), 부천시 소사구(김문수), 부천시 오정구(오성계), 광명시(김이덕화), 광명시(손학규), 평택시(김영광), 평택시(이자한), 동두천시 · 양주군(목요성), 안산시(김인재문), 안산시(이상용), 고양시 덕양구(이국현), 고양시 일산구(이택석), 과천시 · 의왕시(안상수), 구리시(전용원), 남양주시(이성호), 오산시 · 화성군(정창현), 시흥시(이병수), 군포시(김창웅), 하남시 · 광주군(정영훈), 여주군(정동성), 파주시(박명근), 연천군 · 포천군(이한동), 가평군 · 양평군(김길환), 이천시(이영문), 용인시(이용희), 안성군(이해구), 김포군(김두섭) |
| | 강원 | 춘천시(김(한승수), 춘천시(이민섭), 원주시(김(함중환), 원주시(김(영진), 강릉시(김(최운용), 강릉시(최중규), 동해시(최연희), 태백시 · 정선군(박우병),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송훈석), 삼척시(신현선), 홍천군 · 횡성군(이응선), 영월군 · 평창군(김기수),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이응삼) |
| | 충북 | 청주시 · 상당구(홍재형), 청주시 · 흥덕구(윤석민), 충주시(김연권), 제천시 · 단양군(송광호), 청원군(신경식),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이동호), 진천군 · 음성군(민태구), 괴산군(김중호) |
| | 충남 | 천안시(김(성무용), 천안시(김(한근), 공주시(이상재), 보령시(최일영), 아산시(황명수), 서산시 · 태안군(박태권), 논산시 · 금산군(유한열), 연기군(박희부), 부여군(이진삼), 서천군(김홍열), 청양군 · 홍성군(이원구), 예산군(오장섭), 당진군(송영진) |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손풍삼), 전주시 덕진구(이현도), 군산시(김(송서재), 군산시(김(현욱), 익산시(김(조남조), 익산시(공천섭), 정읍시(손(영), 남원시(양창식), 김제시(이건석), 완주군(김(상원),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정정현), 임실군 · 순창군(심국무), 고창군(김주섭), 부안군(고명승) |
| | 전남 | 목포시 · 신안군(배종덕), 목포시 · 신안군(김(광희), 여주시(이상재), 순천시(김(정성길), 순천시(김(영근), 나주시(최인기), 여천시 · 여천군(김(영로), 광양시(김(광영), 담양군 · 장성군(김(일두), 곡성군 · 구례군(심(상준), 고흥군(최문후), 보성군 · 화순군(이용식), 장흥군 · 영암군(윤(제영), 강진군 · 완도군(김(식), 해남군 · 진도군(정(시채), 무안군(안(희석), 함평군 · 영광군(양(근수) |
| | 경북 | 포항시북구(윤(해수), 포항시남구 · 울릉군(이상득), 경주시(황(윤기), 경주시(백(상승), 김천시(임(인배), 안동시(김(길홍), 안동시(류(두우), 구미시(김(박세직), 구미시(김(윤환), 영주시(정(수덕), 영천시(박(현기), 상주시(이상배), 문경시 · 예천군(황(병태), 경산시 · 청도군(이(영창), 고령군 · 성주군(주(진우), 군위군 · 칠곡군(장(영철), 의성군(우(영규), 청송군 · 영덕군(김(찬우), 영양군 · 봉화군 · 울진군(김(광원) |
| | 경남 | 창원시(김(중하), 창원시(황(낙주), 울산시 중구(김(태호), 울산시 남구(차(수명), 울산시 남구(차(희준), 울산시 동구(최(수민), 울산시 울주군(김(채겸), 마산시 합포구(김(호일), 마산시 회원구(강(삼재), 진주시(김(정필근), 진주시(하(순봉), 진해시(허(대범), 통영시 · 고성군(김(동욱), 사천시(이(방호), 김해시(김(영일), 밀양시(서(정호), 거제시(김(기춘), 의령군 · 함안군(윤(한도), 창원시(노(기태), 양산시(나(오연), 남해군 · 하동군(박(희태), 산청군 · 함양군(권(익현), 거창군 · 합천군(이(강두) |
| | 제주 | 제주시(현(경대), 북제주군(양(정규), 서귀포시 · 남제주군(변(정일) |

2) 선거대책 및 전략

신한국당은 1995년 12월 26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실무 기획단 발족을 시작으로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국회의원선거전략 수립 및 공약개발에 나섰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 수도권 및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한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선거대책본부, 선거상황실, 홍보단 등 실무기

구를 설치하였다. 1996년 1월 22일에는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에 이회창 전 총리와 박찬중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고, 이세기·최형우·이한동·한승수 등 당 중진들을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하여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의 득표활동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당해 시·도의 지부장을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선거대책위원장과 박찬중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1996년 2월 14일).

1996년 2월 6일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선거전진대회’를 겸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제2창당’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신한국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안정론’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기본전략으로 내세웠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없는 안정은 정체,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이라는 논리로 개혁과 안정을 강조하였다. 이회창 선거대책위원장도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고 안보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신한국당 승리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기본전략에 따라 신한국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문광고와 연설을 통해 ‘안정 속에 개혁’, ‘낡은 정치냐 미래 정치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등을 선전구호로 내세워 안정론을 전파하였다.

지역별 선거전략에 있어서 신한국당은 수도권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재야출신 및 30·40대의 참신하고 개혁성향의 새 인물을 대거 포진시켜 20·30대 젊은 유권자 및 부동산을 겨냥하였다. 또한 30·40대 젊은 후보들로 ‘푸른정치 젊은연대’를 구성하여 깨끗한 정치를 선언하는 등 ‘개혁벨트’를 형성하여 종래 집권당의 보수적 이미지를 개혁지향 이미지로 쇄신하는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나누어 같은 권역의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야당공세에 대응하고 지역공약도 함께 제시하며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다. 한편 영남권에서는 경제관련 공약으로, 호남권에서는 탈지역주의로 지지를 호소하고 충청권에서는 안정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을 폈다.



▲ 천안고속터미널에서 열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신한국당 정당연설회(1996년 4월 6일).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 또한 병행하였다. 신한국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의 총재를 ‘양김’으로 칭하며 ‘지역볼모정치의 주동자’라고 비난하였다.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는 ‘정계은퇴를 번

복한 신뢰성 없는 인물’, ‘20억+ a를 수수한 부도덕한 인물’로, 김종필 총재는 ‘수구 세력’, ‘독도문제의 책임자’로 규정하였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수권능력이 없는 유약한 정당’으로 상징화하여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선전하였다.

선거중반에 이르러서는 ‘경제안정론’과 ‘과반수의석 확보론’을 연계하였다. 즉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불안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된다며 신한국당이 과반의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워 신한국당은 선거중반 대규모집회보다는 득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구당별 유세에 치중하였다. 하루 평균 20회 이상의 정당연설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이회창 선거대책위원장, 이홍구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박찬종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 및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부의장 등 고위당직자들을 총동원하여 지원유세를 펼쳤다. 또한 자체분석을 통하여 경합지역과 전략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당 지도부의 지원유세와 조직·자금을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략지역과 경합지역에 집중 지원하였다.

3) 선거공약

신한국당은 1995년 12월 초 ‘국회의원선거공약개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에 나섰다. 국회의원선거공약개발 특별위원회는 산하에 공약개발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소속 정책담당 연구위원과 전문위원 및 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세부공약 구성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부과건 연구위원들이 청와대 및 정부 내 해당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조율하였다. 이후 신한국당은 3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깨끗한 정치 봉사하는 행정’을 기치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개혁에 역점을 둔 15개 핵심 과제와 10개 분야 100개 항목의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보수 및 근무개선, 탈북동포지원 기본법 제정 및 탈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공약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성숙한 선진경제, 중소

기업 육성, 농·어촌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성숙한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규제완화, 조세합리화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3% 물가안정,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한 명시를 통한 규제 완화, 근로 소득세의 일정부분 세액공제, 농민·영세업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공약하였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공약으로는 1998년까지 연도별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 2조 원 지원, 1998년까지 공제사업자금 3,000억 원 증액 등 지원 중심정책을 내놓았다. 농·어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위주의 쌀값 정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5조 원 투입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식품, 약품 안전본부와 여섯 개의 지방청을 신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배려하고 1998년까지 최저 생계비 100% 보장을 약속했다.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15대 핵심 과제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1. 깨끗한 정치문화 창출 | ○정경유척, 부정부패 등 구시대적 정치폐습을 타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생활정치 실현 |
| 2. 행정규제 과감히 철폐 | ○행정규제 개혁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 |
| 3. 생활물가 안정 |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주력 |
|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
| 5. 농어업 육성 | ○농정을 혁신하여 희망과 의욕이 가득 찬 농어촌을 건설 |
| 6. 교육개혁 실천 | ○객관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인간중심의 교육개혁을 실천 |
| 7. 도시영세민 삶 보장 |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보장을 실현,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배려 |
| 8. 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 |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에 보람을 느끼도록 근로환경을 조성 |
| 9. 노인복지 장애자 권익증진 | ○제도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에게는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평등을 구현 |
| 10.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 행정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
| 11. 청소년 밝은 성장 유도 | ○학원폭력을 근절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 12. 쾌적한 환경조성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상쾌한 삶의 터전을 조성 |
| 13. 남북안보태세 강화 | ○장병의 복지를 증진시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사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북안보태세를 더욱 강화 |
| 14. 도시 교통난 해결 |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교통체제를 구축 |
| 15. 수준높은 문화생활 영위 |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원법’을 제정하여 규제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혜지

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성정책 공약으로 는 성차별 개선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차별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1997년까지 보육 시설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0년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고 컴퓨터 전용교실 100%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하였고 아울러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를 공약하였다.

4) 선거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신한국당은 지역구 121석, 전국구 18석 등 총 139석을 확보하여 목표로 내세웠던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강세지역이었던 부산에서 전 지역구를 석권하였고, 전북에서 1석을 확보하여 호남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회의원선거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지역별 득표에 있어서 광주, 전남을 제외한 전체의 시도에서 20% 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특히 전통적 강세지역인 영남권에서 부산 55.8%, 경남 46.5%를 차지하는 등 압승하였고, 야권 강세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각각 36.5%, 33.2%, 38.2%를 차지하여 수도권 전체 의석수 96석 중 54석을 획득하



▲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1996년 4월 19일).

며 야당에 앞섰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며, 당선자도 13개 지역구 중 2명만이 당선되는 참패를 당하였다.

선거 이후 신한국당은 야당 및 무소속 당선자 영입을 추진하여 과반수 확보에 나섰다, 결국 1996년 말에는 전체의석을 157석으로 늘렸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정국을 급격히 냉각시켰고, 또한 야권이 공조체제(이른바 DJP공조)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 전국구 | 이회창, 이홍구, 이만섭, 김명윤, 권영자, 김수한, 김 덕, 신영균, 박세환, 정재철, 전석홍, 조유규, 오양순, 김 철, 황우여, 김영선, 윤원중, 강용식 | 번호순 | |
| 지역구 | 서울 | 종로구(이명박), 중구(박성범), 용산구(서정화), 성동구갑(이세기), 성동구을(김학원), 동대문구갑(노승우), 동대문구을(김영구), 중랑구을(김충일), 성북구을(강성재), 노원구갑(백남치), 은평구을(이재오), 마포구갑(박명환), 마포구을(박주천), 양천구갑(박범진), 강서구을(이신범), 구로구을(이신행), 금천구(이우재), 영등포구갑(김명섭), 동작구갑(서청원), 동작구을(류용태), 관악구갑(이상현), 서초구갑(최병렬), 서초구을(김덕룡), 강남구갑(서상목), 송파구갑(홍준표), 송파구을(맹형규), 강동구을(김종위) | |
| | 부산 | 중구·동구(정의화), 서구(홍인길), 영도구(김형오), 부산진구갑(정재운), 부산진구을(김정수), 동래구갑(박관용), 동래구을(강경식), 남구갑(이상희), 남구을(김무성), 북구·강서구갑(정형근), 북구·강서구을(한이현), 해운대·기장군갑(김운환), 해운대·기장군을(김기재), 사하구갑(서석재), 사하구을(박종웅), 금정구갑(김진재), 금정구을(김도연), 연제구(최형우), 수영구(유홍수), 사상구갑(권철현), 사상구을(신상우) | |
| | 대구 | 서구을(강재섭), 달성군(김석원) |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서정화), 남구갑(심정구), 남구을(이강희), 연수구(서한샘), 남동구갑(이윤성), 남동구을(이원복), 부평구갑(조진형), 부평구을(이재명), 계양구·강화군을(이경재) | |
| | 경기 | 수원시 권선구(김인영), 수원시 팔달구(남평우), 성남시 분당구(오세웅), 의정부시(홍문중), 부천시 원미구을(이사철), 부천시 소사구(김문수), 광명시을(손학규), 동두천시·양주군(목요상), 고양시 덕양구(이국현), 고양시 일산구(이택석), 과천시·의왕시(안상수), 구리시(전용원), 남양주시(이상호), 하남시·광주군(정영훈), 연천군·포천군(이한동), 가평군·양평군(김길환), 용인시(이웅희), 안성군(이해구) | |
| | 강원 | 춘천시갑(한승수), 원주시갑(함중환), 원주시을(김영진), 동해시(최연희), 태백시·정선군(박우병), 홍천군·횡성군(이응선),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송훈석), 영월군·평창군(김기수),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응삼) | |
| | 충북 | 청원군(신경식), 괴산군(김중호) | |
| | 충남 | 청양군·홍성군(이완구) | |
| | 전북 | 군산시을(강현욱) | |
| | 경북 | 포항시남구·울릉군(이상득), 김천시(임인배), 구미시갑(박세직), 구미시을(김윤환), 영천시(박헌기), 상주시(이상배), 문경시·예천군(황병태), 고령군·성주군(주진우), 군위군·칠곡군(장영철), 청송군·영덕군(김찬우), 영양군·봉화군·울진군(김광원) | |
| | 경남 | 창원시갑(김중하), 창원시을(황낙주), 울산시 중구(김태호), 울산시남구갑(차수명), 마산시 합포구(김호일), 마산시 회원구(강삼재), 진주시을(허순봉), 진해시(허대범), 통영시·고성군(김동욱), 김해시(김영일), 거제시(김기춘), 의령군·합안군(윤한도), 창원시(노기태), 양산시(나오연), 남해군·하동군(박희태), 산청군·합양군(권익현), 거창군·합천군(이강두) | |
| | 제주 | 제주시(현경대), 북제주군(양정규), 서귀포시·남제주군(변정일) | |

나. 새정치국민회의

1) 후보자공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와 함께 1995년 9월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는 출범 직후인 10월 7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고 1996년 2월 9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지구당 정비 및 조직책 인선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996년 1월말 253개 지역구 중 182개 지역구의 조직책 인선을 마친 새정치국민회의는 이어 1996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후보자 공천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천신청 결과 253개의 지역구에 372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1.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호남지역의 경우에는 광주 3.3 대 1, 전남 3.2 대 1, 전북 4.1 대 1 등 비교적 높은 경쟁을 보인 반면 취약지역으로 평가되던 영남과 충청지역의 경쟁률은 신청자가 선거구 수에 미달하는 극히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공천신청을 마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조순형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종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선거대책위발족식 및 필승전진대회(1996년 3월 7일).

찬·정대철·김영배·박상규·김근태 부총재와 권노갑 지도위원 등 당 중진 9인으로 공직선거후보자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에 착수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민주주의 공헌도, 국가 및 지역발전 헌신성, 도덕성, 당 발전 기여도, 당선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된 공천심사 결과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21일 최종적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데 233명의 공천자를 확정·발표하였다.

공천심사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에서의 교체 규모였다. 공천결과 호남지역 37곳 중 46%에 달하는 17곳의 지역구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과정에서 민주당에 잔류했거나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경우가 8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교체는 9곳이었다. 이 중에는 4선 의원과 3선 의원 각각 2명과 재선의원이 포함되었다. 반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근태 전 통일시대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민석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재야출신인사 15여 명이 공천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천자 발표 이후 탈락자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준상 의원이 공천헌금 20억 원을 내지 못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천헌금설에 휘말렸다. 또한 공천헌금 논란 속에 전남 담양군·장성군 공천자 국창근 후보와 공천 탈락자 박태영 의원에 대한 헌금기부설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당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신한국당과 민주당도 진상추구를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쟁점화되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는 전국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참신한 신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공천심사 결과 3월 23일 총 46명의 전국구 후보자가 발표되었고, 여성인 정희경 선대위의장이 1번, 박상규 부총재가 2번, 그리고 장애인 변호사 이성재가 3번을 배정받았다. 반면 김대중 총재는 새천년민주당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목표로 설정한 100석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14번에 배정되었다. 전국구 공천자 중 여성후보자는 모두 7

명이었고, 특히 당선안정권으로 평가되던 12번 이내에 여성 3명을 공천한 것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특징이었다. 그러나 당선안정권 내에 정당인을 6명이나 공천하면서 전문가 출신이 부족하다는 상반된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 구분 | 후보자 | 비고 | |
|-----|---|--|--|
| 전국구 | 정희경, 박상규, 이성재, 길승흠, 박정수, 김한길, 이동원, 신낙균, 권노갑, 천용택, 한영애, 방용석, 김중배, 김대중, 송현섭, 이훈평, 김태량, 박양수, 오길록, 김창진, 최 훈, 김학민, 김대성, 이경배, 장영만, 김필기, 정일철, 김동진, 조만진, 전병현, 김태구, 김길자, 박성수, 최해조, 최수영, 신극정, 최기선, 공일환, 김정훈, 박선숙, 조영석, 허인규, 오상범, 송태경, 조성은, 라영희 | 번호순 | |
| 지역구 | 서울 | 종로구(이중철), 중구(정대철), 용산구(유우방), 성동구갑(나병선), 성동구을(조세형), 광진구갑(김상우), 광진구을(추미애), 동대문구갑(김희선), 동대문구을(김창환), 중랑구갑(이상수), 중랑구을(김덕규), 성북구갑(유재건), 성북구을(신계륜), 강북구갑(김원길), 강북구을(조순형), 도봉구갑(김근태), 도봉구을(설 훈), 노원구갑(고영하), 노원구을(임채정), 은평구갑(손세일), 은평구을(이원형), 서대문구갑(김상현), 서대문구을(장재식), 마포구갑(김용술), 마포구을(김충현), 양천구갑(한기찬), 양천구을(김영배), 강서구갑(신기남), 강서구을(최두환), 구로구갑(정한용), 구로구을(김병오), 금천구(이경제), 영등포구갑(장석화), 영등포구을(김민석), 동작구갑(박문수), 동작구을(박 실), 관악구갑(한광욱), 관악구을(이해찬), 서초구갑(조소현), 서초구을(정상용), 강남구갑(강동연), 강남구을(김태우), 송파구갑(김희완), 송파구을(김진명), 송파구병(김병태), 강동구갑(김형래), 강동구을(심재권) | |
| | 부산 | 중구·동구(이 철), 서구(정오규), 영도구(노차태), 부산진구갑(송영웅), 부산진구을(정인화), 동래구갑(마 청), 동래구을(정상원), 남구갑(황상수), 남구을(송정섭), 북구·강서구갑(조운규), 해운대·기장군을(문희탁), 사하구을(박희동), 금정구갑(문용환), 금정구을(김종필), 연제구(김석근), 수영구(최승호), 사상구갑(차재철) | |
| | 대구 | 중구(이수만), 동구갑(조동욱), 동구을(이동학), 서구을(최화용), 북구갑(박화익), 수성구을(양현석), 달서구갑(박방희), 달서구을(김춘곤), 달성군(이원철) |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김순배), 남구갑(박우섭), 남구을(하근수), 연수구(정구운), 남동구갑(유재희), 남동구을(이호용), 부평구갑(송선근), 부평구을(신용석), 계양구·강화군갑(이기문), 계양구·강화군을(김정호), 서구(조철구) | |
| | 광주 | 동구(신기하), 서구(정동채), 남구(임복진), 북구갑(박광태), 북구을(이길재), 광산구(조홍규) | |
| | 대전 | 동구갑(선병렬), 동구을(윤성환), 중구(신제철), 서구갑(정구영), 서구을(전득배), 유성구(이대형), 대덕구(서윤관) | |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이중철), 수원시 권선구(최민화), 수원시 팔달구(박왕식), 성남시 수정구(이운수), 성남시 중원구(조성준), 성남시 분당구(나필열), 의정부시(문화상), 안양시 만안구(이준형), 안양시 동안구갑(최희준), 안양시 동안구을(이석현), 부천시 원미구갑(안동선), 부천시 원미구을(배기선), 부천시 소사구(박지원), 부천시 오정구(최선영), 광명시갑(남궁진), 광명시을(김은호), 평택시갑(이미경), 평택시을(서화택), 동두천시·양주군(이성수), 안산시갑(김영환), 안산시을(전정배), 고양시 덕양구(이영복), 고양시 일산구(김덕배), 과천시·의왕시(이동진), 구리시(박영순), 남양주시(이용근), 오산시·화성군(송형석), 시흥시(백청수), 군포시(유선호), 하남시·광주군(문학진), 여주군(민호영), 파주시(김병호), 연천군·포천군(윤성진), 가평군·양평군(민병서), 이천시(전상현), 용인시(김정길), 안성군(홍석완), 김포군(이택룡) | | |
| | 강원 | 춘천시갑(이홍훈), 춘천시을(백태열), 원주시갑(임현호), 원주시을(박전하), 강릉시갑(김진하), 강릉시을(이침수), 동해시(홍을표), 태백시·정선군(안영배),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최정식), 삼척시(박병준), 홍천군·횡성군(안병학), 영월군·평창군(신민선), 철원군·화천군·양구군(박영률) | |
| | 충북 | 청주시·상당구(장한량), 청주시·흥덕구(손종학), 충주시(정달영), 청원군(김기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용희), 진천군·음성군(박병남), 괴산군(고경수) | |
| | 충남 | 천안시갑(최기덕), 천안시을(정재원), 공주시(이성규), 아산시(이원창), 서산시·태안군(안숙순), 논산시·금산군(김형중), 연기군(신상근), 부여군(정용환), 청양군·홍성군(이혜숙), 당진군(백종길) | |

| | | | |
|-------------|----|---|--|
| 지 역 구 | 전북 | 전주시 완산구(장영달), 전주시 덕진구(정동영), 군산시갑(채영석), 군산시을(강철선), 익산시갑(최재승), 익산시을(이 협), 정읍시(윤철상), 남원시(조찬형), 김제시(장성원), 원주군(김태식),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정세균), 임실군 · 순창군(박정훈), 고창군(정균환), 부안군(김진배) | |
| | 전남 | 목포시 · 신안군갑(김홍일), 목포시 · 신안군을(한화갑), 여수시(김충조), 순천시갑(김경재), 순천시을(조순승), 나주시(정호선), 여천시 · 여천군(김성곤), 광양시(김명규), 담양군 · 장성군(국창근), 곡성군 · 구례군(양성철), 고흥군(박상천), 보성군 · 화순군(박찬주), 장흥군 · 영암군(김옥두), 강진군 · 완도군(김영진), 해남군 · 진도군(김봉호), 무안군(배종무), 함평군 · 영광군(김인곤) | |
| | 경북 | 포항시남구 · 울릉군(김만철), 경주시갑(배팔용), 김천시(공부동), 안동시을(강병철), 구미시을(김진복), 영주시(이광희), 영천시(이육만), 문경시 · 예천군(황병호), 경산시 · 청도군(이경희), 고령군 · 성주군(도호기), 군위군 · 칠곡군(구문장), 영양군 · 봉화군 · 울진군(조영환) | |
| | 경남 | 창원시을(한명철), 울산시 중구(이일성), 울산시남구갑(김진영), 울산시남구을(손진철), 울산시 동구(정천석), 울산시 울주군(김의곤), 마산시 합포구(김희국), 마산시 회원구(이상기), 진주시갑(김일만), 진주시을(박영식), 진해시(김중준), 사천시(이순근), 김해시(오세호), 밀양시(이태권), 창녕시(하정구), 양산시(이미애), 남해군 · 하동군(홍재표), 산청군 · 함양군(정막선), 거창군 · 합천군(신문규) | |
| | 제주 | 제주시(정대권), 북제주군(홍성제), 서귀포시 · 남제주군(고진부) | |

2) 선거대책 및 전략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저지 의석수인 100석을 목표로 세운 새정치국민회의는 ‘세대공존, 지역간 조화, 계층간 · 부문간 통합’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3대 기본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 고정표 및 부동표 흡수, 신 · 구세대 공존론을 수립하였다. 특히 신한국당이 김대중 · 김종필 총재를 겨냥하여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것에 맞서 ‘세대공존’이라는 대응논리를 내세웠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전략하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6일 정대철 부총재와 정희경 지도위부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권노갑 · 이종찬 · 조세형 · 신낙균 등 중진들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선거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정희경 공동의장은 정당사상 첫 여성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25일 김대중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3독(독주 · 독단 · 독선) 정치 견제를 위한 국회의석 3분의 1 확보, 경제 제일주의,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 비자금에 대한 진실규명,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정치 등 5가지 선거홍보쟁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는 한편 유일한 정권교체 세력임을 내세워 신한국당과의 양당 대결



▲ 서울 신도림역에서 열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새정치국민회의 정당연설회(1996년 4월 4일).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한국당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내각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 이후 내각제 개헌 논쟁은 정국불안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위 '개헌저지론'을 내세웠다. 즉 내각제 개헌저지를 위해 새정치국민회의에게 국회 3분의 1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견제안정론'을 유권자 설득의 논리로 내세웠다. 여당의 독주를 막고 유신체제 이래 15년간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이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것이었다. 특히 신한국당이 여당 과반수 의석확보를 통한 안정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김대중 총재는 이른바 새의 '양 날개론'을 내세워 반박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여야를 새의 양 날개에 비유하며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구도에서만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책분야에서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하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경제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경제등권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3분의 1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자금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회 3분의 1 의석이 필요하다는 '견제안정론' 강조하였다.

한편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전국구 공천헌금설과 관련하여 신한국당이 정치쟁점화하며 공세를 펴오자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건을 희석시키려는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폭로전 양상의 정당 간 공방이 정치권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풍을 우려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서는 구체적 정치 쟁점보다는 견제안정론, 경제등권론 등 상징적인 쟁점을 내세우는 한편 다른 정당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상징화하는 전략을 펴나갔다. 새정치국민회의는 '5·6공의 적자, 대통령선거자금의 부도덕성, 김영삼 대통령의 3독, 경제·사회·외교의 총체적 실패' 등을 지적하며 신한국당을 비판하였다.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의 2중대, 선거 후 소멸 가능성이 있는 정당, 대안이 될 수 없는 정당'임을 주장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수구반동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이미지화 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유세위원회를 신설하고 총재유세단, 중진유세단, 그린캠프21유세단을 구성하여 득표활동을 전개하였다. 총재유세단은 지구당별로 유세를 벌여나갔고, 중진유세단은 전국을 서울 강남·북, 경기, 인천, 호남, 영남, 강원, 중부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도권 30·40대 젊은 후보 모임인 그린캠프21유세단의 회원 30여 명은 참신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상호 유세지원을 통해 공동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역권역별로도 연령별 후보군을 묶어 청·장벨트, 안정벨트, 교두보벨트, 꿈나무벨트, 수성벨트 등 5개 벨트를 구축하였다. 30·40대의 청년후보들의 모임인 그린캠프21과 50·60대 장년캠프를 묶은 수도권 청·장벨트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조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여당의 세대교체론에 맞대응하였다. 역대 선거에서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인 경기 남·북부 농촌지역에는 구 여권, 전직관료, 여성인사를 배치하여 ‘안정벨트’로, 강원·충청권과 영남 등 취약지역에는 지명도를 갖춘 인사를 배치하여 ‘교두보 벨트’로, 경남·북의 경우에는 장래 희망성 있는 30·40대 초반의 후보를 전진 배치하여 ‘꿈나무벨트’로, 강세지역인 호남은 ‘수성벨트’로 구축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선거중반에 이르러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등 수도권 30여 곳의 백중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대중 총재의 특별지원유세를 집중시켰다.

3) 선거공약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개발함에 있어 “유권자들이 야당에 국정을 맡겨도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라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 아래 새정치국민회의는 당내 14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자료와 당내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김대중 총재를 포함한 당직자 간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1996년 3월 1일 민생안정에 기반을 둔 ‘경제제일주의’ 정책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선거공약은 경제 제일주의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듯이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검찰총장·안전기획부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사를 포함한 국회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장 역점을 둔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지향을 목표로 물가안정, 대기업 활동의 자율화, 제도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경제구조 개혁 등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공약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의 안정 운용, 공공요금의 소비자심사제도 도입, 공산품 불공정행위의 단속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둘째, 대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및 불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이외에는 그 활동을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화에 맡기겠다는 다 소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신한국당의 중소기업 지원이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과 달리 새정치국민회의는 각종 제도개혁을 내세웠다. 즉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특별기금 설치, 부분보증제도 실시,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등 제도개혁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넷째, 경제구조개혁을 위해서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입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근로세 대폭 인하를 제시하고, 세정개혁을 통한 탈세방지로 세수를 보전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법인·사업소득·종합토지세의 인하를 공약하는 등 보수화된 정책을 일부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100% 지급, 식품·의약품청 설치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 대책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재원을 마련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원 설립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에게 25% 이상의 할당제 실시,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 그리고 여성부의 신설 등을 공약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1. 맑은 정치와 생활행정의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대 대선 노태우 비자금진상규명청문회 개최 ○국회인사청문회 실시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검사제 도입 ○경찰의 정치적 중립제도화와 지방경찰제 설치 ○민생치안의 강화 ○민방위제 폐지 |
| 2. 통일·외교·국방문제의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가족의 소식교환 및 상봉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훈련 단축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과 직업하사관 취업처우 개선 ○전역직업군인의 취업지원 |
| 3. 종합적인 물가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도입 ○통화관리의 안정운용 ○공공요금의 소비자심사제 도입 ○공산품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화 ○농·축·수산물의 직거래제도 확대 ○생활물가지수 체계 확립 |

| | | |
|---------------------------|--|--|
| 4. 세제와 세정개혁을 통한 대폭적인 세금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세 인하 ○생활필수품의 특별소비세 폐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인하 ○종합토지세의 세율 인하 ○과학적 세수추계방법의 개발과 세무사찰의 남용금지 |
| 5.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특별기금 설치 ○신용대출제도 확립 ○중소기업인력확보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정보와 창업의 지원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제정 ○영세상인 보호·지원 |
| 6. 민생경제의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제의 입법화 ○증권시장의 안정화 ○원카드서비스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PC 보유정책 ○PC통신전화요금 인하 ○기초과학진흥기금 설치 |
| 7. 주택·교통문제의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가구 1주택 추진 ○상가 및 주택 전세입주자 보호 ○주택가격의 30%만으로 내집마련 ○임대주택 확대공급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보상 ○도시계획신설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거민 임시거주지 확보 ○신도시자족시설 확보 ○도시교통난 해결 ○자동차보험 개선 ○한강이북 개발 ○수도권 전철 개선 |
| 8.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제의 개편 ○유아교육기관 확충·지원 ○학교급식 전면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폭력 추방 ○사학의 지원·육성 ○교육자의 처우개선 ○초등학교 특별강좌 개설 |
| 9. 복지문화선진국의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의료보험 실시 ○노령수당의 개선 ○경로당의 현대화 ○장애인정책의 개선 ○저소득층 지원확대 ○국제수준으로 노동법 개정 ○생활권 보장 ○노동복지 확충 ○산재예방 강화와 보상의 현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관리 행정의 통합·조정 ○대기환경법 체계 정비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요율 조정 ○세계 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민족예술과정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연금제도 마련 ○중고재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보처 폐지와 공영방송 자율성 보장 ○2002년 월드컵대회의 남북공동개최 추진 |
| 10. 청년과 여성의 지위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을 만18세로 확대 ○청소년문화활동 지원과 선도책 강구 ○청소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청년구직센터 설치 ○여성부 신설과 고위직에 여성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아시설 확대 ○성차별과 가정폭력 추방 ○모성보호의 강화 |

4) 선거결과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 등 총 79석만을 확보하여 애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부진을 보였다. 강세지역이었던 호남권에서는 전체의석 37석 중 1석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서울에서 제1당의 자리를 신

한국당에 내어주었다. 지역별 득표율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권과 기타지역에서 10% 미만의 저조한 득표율로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부진한 결과로 인하여 정대철·이종찬·한광옥 등 당내 중진 의원이 대거 낙선하였다. 또한 전국구 14번으로 공천했던 김대중 총재 또한 당선되지 못하였다.



▲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대회(1996년 4월 16일).

선거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패배에 따른 책임문제를 두고 김대중 총재가 김상현 지도위부위원장 등으로부터 퇴진요구를 받는 등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선을 통해 박상천 의원을 원내총무로 선출하는 한편 수도권 원외중진급과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당직에 임명하는 등 침체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당 조직을 정비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전국 | 정희경, 박상규, 이성재, 길승흠, 박정수, 김한길, 이동원, 신낙균, 권노갑, 천용택, 한영애, 방용석, 김종배 | 번호순 |
| 지역구 | 서울 광진구갑(김상우), 광진구을(추미애), 종랑구갑(이상수), 성북구갑(유재건), 강북구갑(김원길), 강북구을(조순형), 도봉구갑(김근태), 도봉구을(설 훈), 노원구을(임채정), 은평구갑(손세일), 서대문구갑(김상현), 서대문구을(장재식), 양천구을(김영배), 강서구갑(신기남), 구로구갑(정한용), 영등포구을(김민석), 관악구을(이해찬), 송파구병(김병태) | |
| | 인천 계양구 · 강화군갑(이기문), 서구(조철구) | |
| | 광주 동구(신기하), 서구(정동채), 남구(임복진), 북구갑(박광태), 북구을(이길재), 광산구(조홍규) | |
| | 경기 성남시 수정구(이윤수), 성남시 중원구(조성준), 안양시 동안구갑(최희준), 안양시 동안구을(이석현), 부천시 원미구갑(안동선), 부천시 오정구(최선영), 광명시갑(남궁진), 안산시갑(김영환), 안산시을(천정배), 군포시(유선호) | |
| | 전북 전주시 완산구(장영달), 전주시 덕진구(정동영), 군산시갑(채영석), 익산시갑(최재승), 익산시을(이 합), 정읍시(윤철상), 남원시(조찬형), 김제시(장성원), 완주군(김태식),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정세균), 임실군 · 순창군(박정훈), 고창군(정균환), 부안군(김진배) | |
| 전남 목포시 · 신안군갑(김홍일), 목포시 · 신안군을(한화갑), 여수시(김충조), 순천시갑(김경재), 순천시을(조순승), 나주시(정호선), 여천시 · 여천군(김성근), 광양시(김명규), 담양군 · 장성군(국창근), 곡성군 · 구례군(양성철), 고흥군(박상천), 보성군 · 화순군(박친주), 장흥군 · 영암군(김옥두), 강진군 · 원도군(김영진), 해남군 · 진도군(김봉호), 무안군(배종우), 함평군 · 영광군(김인근) | | |

다. 통합민주당

1) 후보자 공천

1995년 12월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통합민주당은 출범 직후 이듬해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지구당 개편 등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1996년 1월 1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직강화특위)를 발족하고 1월말까지 조직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조직책 공모와 외부인사 영입에 착수하였다.

조직강화특위는 인선과 관련하여 지분이나 연고를 배제하고 경력, 참신성 그리고 지명도를 갖춘 새인물을 영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책 인선은 곧 국회의원선거 공천과 직결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조직정비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은 3인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계파별 지분문제로 당내갈등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 영입도 인물난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젊은 인사 영입은 세대교체 갈등을 수반하였다. 특히 조직책 탈

락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하였다. 이러한 내부 갈등을 거치면서 통합민주당은 1월 9일 현역의원 12명을 지역구 조직책으로 우선 임명하고, 이후 2월 26일까지 총 7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202개의 조직책 인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조직책 인선과정에서 계파 간 지분확보 경쟁으로 인하여 애초 내세웠던 개혁적 인사의 영입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특히 30대의 젊은 인사들과 기존 인사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수도권 경우에는 신진인사가 대거 배제되었고, 이에 신진인사들이 실사 및 면접절차 없이 조직책이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조직책 인선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이적과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는 등 연쇄탈당의 양상을 보여 심각한 당내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3월 5일 조직강화특위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을 소위 ‘공익인사’로 추가 선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책 심사과정에서 계파 간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그 결과 경합이 치열했던 26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하여 조직책을 결정하였다.

논란 속에 조직책 인선을 마친 통합민주당은 3월 8일 제정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당내 인사 10명과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13명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개혁성 등을 주요한 공천심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지구당 조직책 인선이 국회의원선거 공천으로 직결되면서 대부분의 조직책임자를 공천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3월 15일 219명의 1차 공천자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호남지역 등 인물난으로 공천이 유보된 나머지 34개 지역은 이후에도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천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결국 통합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지역구 공천자를 225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는 평균 47.7세로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공천되었으며, 재야 및 시민운동세력이 다수 포함된 점도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특징이었다. 또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
고자 한 점도 새로운 시도였다. 반면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여성계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지역구 공천에 이은 전국구 공천심사에서도 통합민주당은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개혁성 등 기본적인 공천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공천결과에 있어서는 전·현직 의원들과 공천헌금자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공천이라
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내 개혁그룹은 전국구 상위순번에 대한 배정이
사전 조율된 계파별 나눠먹기의 결과라며 시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또한 공천헌금설이 제기되면서 당내·외의 비판이 비등하였다. 특히 전국구 3번에
배정되었던 임춘원 의원은 전국 100개 지역구에 3,000만 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
기로 시도부에 약속했다는 공천헌금설이 불거지면서 결국 3월 27일 공천이 철회되었
다. 전국구 ‘돈 공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고, 다른 야당
에서도 똑같은 공천헌금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선거기간 내내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거쳐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자 225명, 전국구 공천자 28명을 포함
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총 253명의 후보를 최종 확정하였다.

통합민주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 구분 | 후보자 | 비고 |
|-----|--|-----|
| 전국구 | 이중재, 이미경, 이수인, 김홍신, 조중연, 하경근, 이형배, 곽영훈, 오현주, 김학술, 김재현, 추은석, 신영길, 양성우, 유지홍, 이태식, 이승주, 김정섭, 이근희, 이원호, 최진희, 최정진, 조태범, 한종재, 안병용, 박연찬, 김인자, 김응술 | 번호순 |
| 지역구 | 서울 종로구(노무현), 중구(김유진), 용산구(강창성), 성동구갑(임종인), 성동구을(설영주), 광진구갑(강수림), 광진구을(박석우), 동대문구갑(장광근), 동대문구을(김성식), 중랑구갑(신형식), 중랑구을(조명원), 성북구갑(이 철), 성북구을(황호산), 강북구갑(전대열), 강북구을(이기택), 도봉구갑(안평수), 도봉구을(유인태), 노원구갑(유영래), 노원구을(이문욱), 은평구갑(장두환), 은평구을(이장희), 서대문구갑(박계산), 서대문구을(김태원), 마포구갑(김 용), 마포구을(장산규), 양천구갑(서경석), 양천구을(이두업), 강서구갑(박계동), 강서구을(고진화), 구로구갑(정병원), 구로구을(이승철), 금천구(이원영), 영등포구갑(한경남), 영등포구을(김인동), 동작구갑(장기표), 동작구을(김왕석), 관악구갑(김기정), 관악구을(이상호), 서초구갑(곽일훈), 서초구을(안동수), 강남구갑(홍성우), 강남구을(이재경), 송파구갑(양문희), 송파구을(김종완), 송파구병(박인제), 강동구갑(이부영), 강동구을(장기욱) | |
| | 부산 중구·동구(김정길), 서구(최기복), 영도구(김형기), 부산진구갑(서중범), 부산진구을(황백현), 동래구갑(노재철), 동래구을(정인조), 남구을(허종복), 북구·강서구갑(우주호), 북구·강서구을(안병해), 해운대·기장군갑(이기택), 해운대·기장군을(김기우), 사하구갑(조경태), 사하구을(김도강), 금정구갑(이황규), 금정구을(김재규), 수영구(손태인), 사상구갑(조용호), 사상구을(정윤재) | |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 | | |
|-----|----|--|
| 지역구 | 대구 | 중구(이강철), 동구갑(임대윤), 동구을(류종근), 서구갑(우동철), 남구(김진태), 북구갑(이윤기), 수성구갑(권오선), 수성구을(정상태), 달서구갑(서정대)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이신웅), 남구갑(유종섭), 남구을(안영근), 연수구(서상섭), 남동구갑(김종용), 남동구을(박호영), 부평구갑(정정훈), 부평구을(정화영), 계양구·강화군갑(김말룡), 계양구·강화군을(정해남), 서구(손기선) |
| | 광주 | 동구(김범태), 서구(최운용), 남구(진선수), 북구(유인상), 광산구(이승준) |
| | 대전 | 동구갑(김덕경), 동구을(강구철), 중구(김홍철), 서구갑(윤석대), 서구을(이희원), 유성구(이병령), 대덕구(김원웅) |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유용근), 수원시 권선구(김정태), 수원시 팔달구(김대권), 성남시 수정구(김준기), 성남시 중원구(김일주), 성남시 분당구(성유보), 안양시 만안구(김준용), 안양시 동안구갑(최병권), 안양시 동안구을(송운혁), 부천시 원미구갑(하장보), 부천시 원미구을(조영성), 부천시 소사구(이홍종), 부천시 오정구(원혜영), 광명시갑(최정택), 광명시을(김승남), 평택시갑(박정수), 평택시을(장기찬), 동두천시·양주군(김형광), 안산시갑(문영희), 안산시을(장경우), 고양시 덕양구(이근진), 고양시 일산구(홍기훈), 과천시·의왕시(김부겸), 구리시(조정무), 남양주시(민병주), 오산시·화성군(우호태), 시흥시(제정구), 군포시(여익구), 하남시·광주군(곽인식), 여주군(이규택), 파주시(박영석), 연천군·포천군(김유근), 가평군·양평군(조정용), 이천시(황규선), 용인시(나진우), 안성군(이무역), 김포군(윤문수) |
| | 강원 | 춘천시갑(최 윤), 춘천시을(유남선), 원주시갑(박정원), 원주시을(안재윤), 강릉시갑(함영희), 강릉시을(최옥철), 태백시·정선군(최승영),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조영두), 삼척시(장을병) 영월군·평창군(엄화철),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김철배) |
| | 충북 | 청주시·상당구(신창민), 청주시·흥덕구(정기호), 충주시(정기영), 제천시·단양군(김대부), 청원군(신언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최 극), 진천군·음성군(구자웅), 괴산군(김년태) |
| | 충남 | 천안시(박동인), 공주시(윤완중), 아산시(이진구), 서산시·태안군(문석호), 논산시·금산군(강희재), 연기군(김준희), 부여군(김택수), 서천군(나소열), 청양군·홍성군(홍문표), 예산군(김성식), 당진군(정석래) |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임광순), 군산시갑(양재길), 군산시을(고홍길), 익산시갑(손인범), 익산시을(박경철), 정읍시(김원기), 남원시(최희원), 김제시(조병인), 완주군(이상호), 진안군·무주군·장수군(최팔용), 임실군·순창군(양대원), 부안군(김일범) |
| | 전남 | 목포시·신안군갑(선무일), 나주시(박기수), 담양군·장성군(노을), 보성군·화순군(정인환), 강진군·원도군(윤동환), 해남군·진도군(임종필), 무안군(김송차), 함평군·영광군(김기수) |
| | 경북 | 포항시북구(방무성), 포항시남구·울릉군(김병구), 경주시갑(한점수), 경주시을(윤석보), 김천시(박언옥), 안동시갑(권오을), 안동시을(신종철), 구미시갑(윤상규), 구미시을(윤정석), 영천시(이준우), 문경시·예천군(안희태), 경산시·청도군(김경윤), 고령군·성주군(김창문), 군위군·칠곡군(권천문), 의성군(이왕식), 청송군·영덕군(박명규), 영양군·봉화군·울진군(김종복) |
| | 경남 | 창원시갑(이상익), 창원시을(이주영), 울산시 중구(송철호), 울산시남구갑(한만우), 울산시남구을(이규정), 울산시 울주구(권기술), 마산시 합포구(박정규), 마산시 회원구(박재혁), 진주시을(강갑중), 진해시(최 혁), 통영시·고성군(송성욱), 사천시(유홍재), 김해시(이광희), 밀양시(이상천), 거제시(지만호), 의령군·함안군(이정환), 창녕시(박상근), 양산시(박수근), 남해군·하동군(최종림), 산청군·함양군(도상수), 거창군·합천군(백신중) |
| | 제주 | 제주시(신두원), 북제주군(강희찬) |

2) 선거대책 및 전략

통합민주당은 1996년 1월 5일 홍기훈 의원을 단장으로 정책, 홍보, 교육, 연수, 조직, 여론조사 등 7개 팀의 국회의원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당 체제를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선거준비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선거대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선거대책기구 책임자 인선문제와 관련한 당내 계파 간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내 갈등을 겪었다. 그 결과 애초 2월 초로 계획했던 선거대책기구 발족은 다소 지연되었다. 결국 통합민주당은 선거대책기구를 공동대표제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월 23일 이종재 고문과 홍성우 최고위원을 공동위원



▲ 통합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현판식(1996년 2월 28일).

장으로 하고 강창성·장경우·이부영·노무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기구를 발족하였다. 이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마친 통합민주당은 3월 21일 공천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공천자대회를 개최하여 필승을 결의하고 본격 득표 활동에 돌입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목표를 70석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민주당은 3김 정치의 종식과 이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젊은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반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신한국당 2중대론, 대권후보 부재 등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축재비리 폭로, 지역할거주의 타파 등 적극적인 대여공세를 펴는 한편 개혁적인 인물을 포진시켜 세대교체론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굿바이 3김, 웰컴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0대 김대리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선전구호로 내세워 젊고 새로운 세대의 정당임을 부각시켰다. 또한 “3김에 줄서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마다한 통합민주당 후보에 대한 격려를 부탁한다”며 지역주의로부터 타협하지 않는다는 통합민주당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TV토론을 통해서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깨끗한 정치의 성공여부를 시험하는 무대이며 민주당의 몰락은 한국정치의 몰락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통합민주당은 ‘3김 청산’을 주요전략으로 삼으면서 경쟁정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화하였다.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을 통틀어서 ‘지역에 기반을 둔 1인 맹주정당, 대통령선거자금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즉흥주의 정책에 의한 실정’,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당론’, 자유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군사쿠데타 원조’를 내세우며 각 정당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다른 야당과의 차별화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돌발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야당 간에도 공방을 벌여나갔고, 여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면모를 보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전국구의원 공천헌금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통합민주당은 두 야당에 대한 공세에 가세하여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공동대표였던 이기택 대표가 전국구 후보자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중 일부 금액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당 간에는 폭로공방전이 벌어졌고, 결국 양당 모두가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반면 신한국당 당원교육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신한국당의 선거부정이 쟁점으로 부상하자 통합민주당은 두 야당과 부정선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선거백서발간, 제15대 국회에서 청문회개최 등을 합의하는 등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다른 3당과 달리 지역적 기반이 취약했던 통합민주당은 비교적 지역적 성향이 낮은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수도권 유세에 당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민주당은 수도권을 ‘해돋이 희망벨트’로 명명하며 수도권 선거구

를 단일 선거구화하였고, ‘청년 프런티어’ 팀을 통해 서울 명동·신촌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연이어 중·소규모의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게릴라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20·30대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였다. 특히 3월 27일부터 5일간을 서울 집중공략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규모의 집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수도권 지지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과천 관악산에서 열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통합민주당 정당연설회(1996년 3월 31일).

이후 선거가 종반에 이르러서는 판세 분석을 통하여 경합지역 50여 곳을 선정해 자금과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당선가능 선거구에 당력을 총동원하였다. 또한 20·30대 중기존 ‘민주당 선호층’을 공략하기 위해 당내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의 연설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김영삼 대통령 측근인 장학로의 비리사건, 신한국당의 대통령선거자금 문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천헌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다.

3) 선거공약

통합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정책위원회 정책실을 통해 15명의 전문위원을 담당분야별로 배치하고 분야별로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다. 정책초안 작성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서경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삼열 부의장, 안평수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공약초안은 다시 이부영·장기욱·홍영기·제정구 의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합민주당은 정치개혁에 주안점을 둔 150대 공약을 개발하였고, 일차적으로 2월 16일 정치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9일 여성분야 9대 공약 발표, 3월 13일 농어촌분야 제14대 공약발표 등 각 분야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통합민주당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은 시민단체에서 내세운 개혁적 공약을 많이 반영하였고, 특히 재벌에 관한 정책, 노동, 환경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이 내세운 정치개혁 10대 공약은 부정부패 척결, 지역할거주의 청산,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정기탁금제 폐지, 감사원의 국회소관 이관(헌법개정 사항)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직선거에 있어서 예비선거제 도입을 주장하였고, 국가·지방 경찰의 이원화를 제시하였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정의실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정의를 강조하였다. 재벌정책에 있어서 계열사 채무 보증한도를 200~100%, 출자액 한도 25~10%로 낮추는 등 문어발식 기업구조 억제 및 재벌의 기업소유·지배 구조 등의 개편을 약속하였고,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혁지향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비 예산을 10% 이상 증액할 것과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확충도 공약하였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면서 실효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감소를 보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노동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저소득 생계비 100% 지원 및 사회복지 예산을 2000년도까지 GNP의 5%까지 올릴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파산 대책수립과 통합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사회·환경 분야의 공약으로는 기존의 정무 2실을 여성처로 전환하고 2000년도까지 5, 7급 공무원 중 20%에 대해 여성 할당제 실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규정 추

가 등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제시되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정부의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선거공약에 수용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급당 정원 40명 감축, 2000년도 까지 유치원 취원율 80% 증대,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 등을 공약하였다.

통합민주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1. 21세기를 향한 열린정치 | ○한국정치의 제자리 찾기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개혁 |
| 2. 하나 된 민족의 세계를 향한 전진 | ○통일시대를 향한 준비 ○개방화에 부응한 경제실리외교 |
| 3. 경제정의실현과 국제경쟁력 강화 | ○올바른 경제 만들기 ○조세정의의 구현 ○중소기업 활성화로 균형잡힌 경제 육성 ○개방화·지방화·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농어업 육성 |
| 4. 국제수준의 삶의 질 보장 |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 ○국민민복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진흥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보통신 진흥 |
| 5. 인간개발의 문화국가 실현 | ○복지국가를 향한 기반구축 ○노인에게 존경과 보람을 주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보장 ○환경의 철저한 보호와 복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
| | ○내집 마련과 전세입자의 보호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한 교통공간 구성 ○인간중심의 국토개발 |
|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
| | ○21세기 문화경쟁시대의 시민문화 전개 |

4) 선거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9석, 전국구 6석 등 총 15석을 확보하여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득표율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1.2%에 불과하였고, 이기택 고문, 김원기 공동대표, 홍성우 선대위 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진급 의원 대다수가 낙선하였다.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권과 강원 등에서 10%를 상회하는 수준의 득표율을 보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 미만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선거기간 내내 전략적으로 공들였던 수도권조차도 서울 1석을 포함하여 단 4석밖에 얻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선거 이후 이규택·최옥철·황규선 등 일부 당선인이 통합민주당을 탈당하여 신



▲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5석을 차지하여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민주당의 선거상황실(1996년 4월 12일).

한국당으로 입당함으로써 소속 의원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써 선거 전 분당사태로 위기를 맞았던 통합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군소정당으로 전략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합민주당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전국구 | 이중재, 이미경, 이수인, 김홍신, 조중연, 허경근 | 번호순 |
| 지역구 | 서울 강동구갑(이부영) | |
| | 경기 시흥시(제정구), 여주군(이규택), 이천시(황규선) | |
| | 강원 강릉시을(최욱철), 삼척시(장을병) | |
| | 경북 안동시갑(권오을) | |
| | 경남 울산시남구을(이규정), 울산시 울주구(권기술) | |

라. 자유민주연합

1) 후보자 공천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하였다. 이에 따라 신설합당한 자유민주연합은 중복되어 있던

구 자유민주연합계와 구 신민계의 지구당 20곳을 정비하지 못한 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렀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복수지구당 및 조직책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자유민주연합은 지방선거 직후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1995년 7월 31부터 8월 9일까지 지구당 조직책을 공모하는 등 복수지구당을 포함한 지구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자유민주연합은 당선 가능한 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경제력과 조직력이 우수한 자를 조직책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직책 선정은 계파 간 이견과 갈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김종필 총재는 “5·6 공인사라 하더라도 보수주의자라면 과거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책 선정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신한국당에서 탈당한 5·6 공 인사가 다수 영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6년 2월 말 지구당 정비와 조직책 인선을 마친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9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심사를 시작하였다. 공천심사 기준은 조직책 선정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존 조직책이 그대로 후보자로 공천되었다. 3월 13일 1차 공천자 발표를 시작으로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확정된 공천자는 총 219명이었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결과 자유민주연합 역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대전과 충남·북의 경우에는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전남·북에서는 15개 선거구, 부산·경남에서는 14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였다. 지역구 공천자들은 전·현직 의원(54명, 28.5%), 기업인(30명, 14%), 전직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출신(22명, 10%)이 주축을 이루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여 세대교체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둔 공천이 이루어졌다. 한편 현역의원 중에서는 14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수가 불출마 또는 지역승계 등에 의

한 교체였으며 2명만이 실제 심사결과 배제되었다.

전국구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는 계파 간 갈등으로 공천자 발표를 서너 차례 연기하는 진통을 겪었다. 애초 자유민주연합은 직능대표성을 살려 전국구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공천과정은 지역구 공천자가 없었던 호남 및 경남 등 취약지역 출신의 인사를 인선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지역안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996년 3월 26일 35명의 전국구 공천자가 확정되었다.

전국구 공천결과는 또 한번 당내갈등을 불러왔다. 공천결과 다수의 구 신민당 출신 인사(이하 신민계)가 탈락하였고, 이에 대해 신민계 김복동 수석부총재, 김동길 선거대책위원회 의장, 이필선 부총재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이필선 부총재는 전국구 공천에 탈락 후 당에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30억 공천헌금설을 제기하여 공천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연합 내 계파 간의 분쟁이 격화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검찰수사로 비화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돈 공천’ 시비로 이어져 선거쟁점화되면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거쳐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지역구 공천자 219명과 전국구 공천자 35명 등 총 254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 구분 | 후보자 | 비고 |
|-----|---|-----|
| 전국구 | 정상구, 한영수, 이간개, 김해남, 김광수, 지대섭, 정상천, 이동복, 한호선, 강중희, 송업교, 주양자, 정태영, 박상복, 박창규, 김영태, 김장식, 고희숙, 정원조, 강태룡, 이종성, 김철호, 김세호, 오경섭, 안태전, 전만수, 김광식, 김정호, 신광성, 박문자, 최진옥, 박경휘, 추재엽, 조성돈, 김용덕 | 번호순 |
| 지역구 | 서울 종로구(김을동), 중구(이수만), 용산구(김재영), 성동구갑(배길량), 성동구을(유명곤), 광진구갑(박종철), 광진구을(김희라), 동대문구갑(손윤준), 동대문구을(권승욱), 중랑구갑(신인휴), 중랑구을(강병진), 성북구갑(채수호), 성북구을(최갑수), 강북구갑(김규원), 강북구을(김태환), 도봉구갑(신오철), 도봉구을(장 일), 노원구갑(박병일), 노원구을(김용채), 은평구갑(임인체), 은평구을(노양학), 서대문구갑(이의달), 서대문구을(김병호), 마포구갑(고순례), 마포구을(장덕환), 양천구갑(박수복), 양천구갑(탁형춘), 강서구갑(최덕수), 강서구을(이경표), 구로구갑(정순주), 구로구을(이재실), 금천구(유지준), 영등포구갑(구창림), 영등포구을(전홍기), 동작구갑(차은수), 동작구을(김우중), 관악구갑(이영춘), 관악구을(김재호), 서초구갑(김창호), 강남구갑(김명년), 강남구을(이태섭), 송파구갑(조순환), 송파구을(정 남), 송파구병(조종형), 강동구갑(박태희), 강동구을(허경구) | |

| | | | |
|-----|----|---|--|
| 지역구 | 부산 | 중구·동구(김준호), 서구(백영주), 영도구(서명택), 부산진구갑(강경식), 부산진구을(한기승), 동래구갑(박종대), 남구갑(왕세창), 남구을(김호길), 북구·강서구갑(김해규), 북구·강서구을(윤무현), 사하구갑(강신수), 사하구을(강호영), 금정구갑(채선수), 금정구을(최국주), 연제구(김현근), 사상구갑(이상덕), 사상구을(최윤기) | |
| | 대구 | 중구(박준규), 동구갑(김복동), 동구을(윤상웅), 서구갑(김홍삼), 서구을(최운지), 남구(이정무), 북구갑(이의익), 북구을(안택수), 수성구갑(박철언), 수성구을(박구일), 달서구갑(박종근), 달서구을(최재욱), 달성군(김정훈) |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박종국), 남구갑(정의성), 남구을(박창근), 연수구(명화섭), 남동구갑(이상만), 남동구을(김택수), 부평구갑(김영광), 부평구을(김유동), 계양구·강화군갑(조홍규), 계양구·강화군을(정창화), 서구(이훈국) | |
| | 광주 | 동구(고병렬), 서구(강성성), 남구(김이근), 북구갑(김홍주), 북구을(김천국), 광산구(정원섭) | |
| | 대전 | 동구갑(김칠환), 동구을(이양희), 중구(강창희), 서구갑(이원범), 서구을(이재선), 유성구(조영재), 대덕구(이인구) | |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이병희), 수원시 권선구(이일구), 수원시 팔달구(김인규), 성남시 수정구(이대엽), 성남시 중원구(강희규), 성남시 분당구(권현성), 의정부시(김문원), 안양시 만안구(권수창), 안양시 동안구갑(가재춘), 안양시 동안구을(이석원), 부천시 원미구갑(김정기), 부천시 원미구을(김길홍), 부천시 소사구(박규식), 부천시 오정구(김정웅), 광명시갑(김재주), 광명시을(최종태), 평택시갑(조성진), 평택시을(허남훈), 동두천시·양주군(김국환), 안산시갑(김동현), 안산시을(윤문원), 고양시 덕양구(황인형), 고양시 일산구(김용수), 과천시·의왕시(박제삼), 구리시(박한영), 남양주시(조병봉), 오산시·화성군(박신원), 시흥시(장천수), 군포시(심양섭), 하남시·광주군(양인석), 여주군(허정남), 파주시(이재창), 가평군·양평군(홍성표), 이천시(유종열), 용인시(김학규), 안성군(이장재), 김포군(이재선) | |
| | 강원 | 춘천시(류중수), 원주시갑(한상철), 원주시을(박우순), 강릉시갑(황학수), 강릉시을(김문기), 동해시(지일웅), 태백시·정선군(김자일),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한병기), 삼척시(김정남), 홍천군·횡성군(조일현), 영월군·평창군(이득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염보현) | |
| | 충북 | 청주시·상당구(구천서), 청주시·흥덕구(오용운), 충주시(김선길), 제천시·단양군(안영기), 청원군(오효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어준선), 진천군·음성군(정우택), 괴산군(김동관) | |
| | 충남 | 천안시갑(정일영), 천안시을(함석재), 공주시(정석모), 보령시(김용환), 아산시(이상만), 서산시·태안군(변용진), 논산시·금산군(김범명), 연기군(김고성), 부여군(김종필), 서천군(이금규), 청양군·홍성군(조부영), 예산군(조종석), 당진군(김현욱) | |
| | 전북 | 익산시갑(김용관), 익산시을(이승홍), 정읍시(정태진), 김제시(오남성), 완주군(안방창), 임실군·순창군(김중순), 부안군(김연술) | |
| | 전남 | 목포시·신안군(이정수), 목포시·신안군을(김재철), 순천시(윤동수), 여천시·여천군(김제봉), 담양군·장성군(공창덕), 곡성군·구례군(황성), 보성군·화순군(김길근), 강진군·완도군(신정철), 무안군(윤무중) | |
| | 경북 | 포항시북구(최종태), 포항시남구·울릉군(장준익), 경주시갑(정종복), 경주시을(이상두), 김천시(김한선), 안동시갑(강감창), 안동시을(김시령), 구미시갑(박재홍), 구미시을(최중두), 영주시(권영창), 영천시(최상용), 상주시(이재훈), 문경시·예천군(신국환), 경산시·청도군(김중학), 고령군·성주군(송인식), 군위군·칠곡군(도갑현), 의성군(김화남), 청송군·영덕군(김성태), 영양군·봉화군·울진군(이학원) | |
| | 경남 | 창원시(김영성), 울산시 중구(이철수), 울산시남구갑(이복), 울산시 울주구(이광우), 마산시 합포구(박석동), 진주시갑(김도철), 통영시·고성군(박창정), 김해시(홍의표), 거제시(윤병계), 창원시(신윤태), 남해군·하동군(김기호), 산청군·함양군(하상영), 거창군·합천군(김용균) | |
| | 제주 | 제주시(송재훈) | |

2) 선거대책 및 전략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2일 박준규 고문, 김동길 고문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으로, 김복동·김용환 의원과 박철언 전 의원 등을 부의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3월 13일에는 수도권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이어 3월 15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천자 대회 겸 국회의원선거필승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나섰다. 다른 정당이 서울에서 필승대회를 개최한 것과 달리 자유민주연합이 대구·경북에서 필승대회를 개최한 것은 당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던 반(反)김영삼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 자유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1996년 3월 5일).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경륜정치와 보수안정론을 선거전략 기조로 내세웠다. 즉 집권경험이 있는 유일한 보수야당임을 강조하여 다른 3당과 차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거구호 또한 “연습정치 한번이다. 경륜정당 밀어 주자”로 설정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연합은 국가의 총체적 불안의 원인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하며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내각제 개헌실현을 위한 장이고 그 실현주체는 진정한 보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연합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문민독재, 경제실정, 러비공 개혁’,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병 환자’ 라고 몰아세우는 한편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 없는 폭로 정당’ 이라며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화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보수정당을 자임하면서도 당의 이미지가 ‘노인정당’ 으로 인식되는 것은 막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젊은 보수, 푸른 정당’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젊은층에 대한 공략도 병행하였다. 서울 동승동 대학로에서 ‘젊은이 녹색 축제’ 를 열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청년층에 접근하는 등 젊은층을 위한 각종 행사도 모색하였다.

선거유세에 있어서 자유민주연합은 김종필 총재의 유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총재유세단에는 기획·진행·시설·상황팀 등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자유민주연합의 우세·백중지역 등의 거점을 위주로 유세를 전개하였으며, 유세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도시에서는 대규모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총재유세단과는 별도로 수도권, 충청·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등 4개의 유세반을 편성하고 당 중진에게 단장을 맡겨 총재유세단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선거 중반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의 선거구가 열세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선거양상이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양당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연합은 지역정서에 호소하면서 충청권 출신 유권자들의 결집을 모색하는 한편 수도권 선거전을 보수 대 개혁구도로 끌고 가면서 ‘집권경험이 있는 유일한 보수야당’ 임을 강조하며 안정을 희구하는 유권자층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50%정도가 부동층이며, 특히 취약지역으로 평가되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시도하



▲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자유민주연합 정당연설회(1996년 4월 9일).

였다. 김종필 총재의 지원유세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하는 한편 선거일을 5일 남겨두고는 서울에서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며 부동표 흡수에 전력하였다. 특히 경합지역 대부분이 신한국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한편 경합지역에 중앙당 차원의 조직과 자금을 집중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3) 선거공약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공약개발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고 김용환 부총재를 의장에, 최재욱·강창희, 조순환·조일현 의원, 허남훈 전 환경처장관을 위원에 임명하는 한편 송업교 정책연구실장을 중심으로 당내 전문위원들을 분야별·지역별로 역할을 나누어 세부공약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9일 ‘편안한 정치·책임정치 구현, 작은 정부 큰 시장 실현, 복지사회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17개 부문 89개 항목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정치 분야의 경우 내각제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 주요공직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대통령선거자금 문제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를 약속하였다. 경제·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자금출처 조사 금지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개선,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노인연금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자유화, 실명예금 자금출처 조사 금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경감, 농어촌 배후 중소도시 개발지원 특별법 및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투자자 보호기금 설치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물가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공기업의 조속한 민영화,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의 독자성 확립을 위해 한국은행의 위상 제고를 내세웠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완화와 세율의 대폭인하,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1. 작은 정부·큰 시장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획기적 개선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활성화 ○성장주요산업으로의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의 진흥 및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농어촌 건설 ○물가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합리화 |
| 2. 편안한 정치·책임정치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내각제의 실현 ○지방자치제 확립으로 지방화시대의 내실화 ○보수정치의 실현 ○책임 있는 자주외교와 안보능력의 제고 ○작은 정부와 민주행정을 위한 행정 및 시정 개혁 |
| 3. 복지사회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취약계층의 생활 보장 ○인성교육에 기반 하는 학교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국민생활의 안전체제 확립과 편의 도모 ○전통가치의 존중과 문화예술산업의 진흥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회 실현 ○환경보존과 인간생명의 존중 |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부부재산 합계액의 50%를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로 인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강화 등 여성관련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행정기관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원화하고 환경영향 평가 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 지역 확대 실시와 사학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4) 선거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자유민주연합은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을 석권하는 한편 대구지역에서도 신한국당을 압도하였고, 그 외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여 지역구 41석, 전국구 9석등 총 50석을 확보하였다. 특히 대구에서는 신한국당이 2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무려 8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체적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6.2%를 득표한 자유민주연합은 충남·북 및 대전지역에서 40% 내외의 득표로 전체 28개 의석 중 24석을 차지하면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충청권에서의 지역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5석을 획득하였으나 서울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등 10%대 득표율로 상대적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초 창당된 이후 1년여 만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전한 결과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함께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자유민주연합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대회(1996년 4월 15일).

자유민주연합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 구분 | 당선자 | 비고 |
|-----|---|--|
| 전국구 | 정상구, 한영수, 이건개, 김허남, 김광수, 지대섭, 정상천, 이동복, 한호선 | 번호순 |
| 지역구 | 대구 | 중구(박준규), 동구갑(김복동), 남구(이정무), 북구갑(이의익), 북구를(안택수), 수성구갑(박철언), 수성구를(박구일), 달서구갑(박종근) |
| | 대전 | 동구갑(김칠환), 동구를(이양희), 중구(강창희), 서구갑(이원범), 서구를(이재선), 유성구(조영제), 대덕구(이인구) |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이병희), 안양시 만안구(권수창), 평택시을(허남훈), 오산시 · 화성군(박신원), 파주시(이재창) |
| | 강원 | 춘천시을(류종수), 강릉시갑(황학수) |
| | 충북 | 청주시 상당구(구천서), 청주시 흥덕구(오용운), 충주시(김선길),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어준선), 진천군 · 음성군(정우택) |
| | 충남 | 천안시갑(정일영), 천안시을(함석재), 공주시(정석모), 보령시(김용환), 아산시(이상만), 서산시 · 태안군(변웅진), 논산시 · 금산군(김범명), 연기군(김고성), 부여군(김종필), 서천군(이규규), 예산군(조종석), 당진군(김현욱) |
| | 경북 | 경산시 · 청도군(김종학), 의성군(김화남) |

마. 기타정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군소정당 중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무당파국민연합, 대한민주당, 21세기한독당, 친민당 등 4개 정당이었다. 이 가운데 김중권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구 · 경북지역 무소속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창당된 무당파국민연합은 지역구 후보자 56명과 전국구 후보자 6명 등 총 62명을 공천하였다. 대한민주당은 지역구 후보자 6명을, 21세기 한독당은 지역구 후보자 5명을, 그리고 친민당은 지역구 후보자 1명을 각각 공천하였다.

1996년 3월 20일 김중권 · 김옥선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거체제를 갖춘 무당파국민연합은 사당화 된 기존의 1인 독재 정당이 지역주의를 조장하였고 이것이 정치 불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해 무당파국민연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의 경륜 · 약력과 지역발전 공약을 부각시킴에 따라 통일적인 선거 전략은 미비하였다. 대한민주당, 21세기 한독당, 친민당 또한 선거전략과 공약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지 않았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군소 정당은 1개 선거구에서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득표율 또한 무당파국민연합(0.9%)을 제외하고는 거의 0%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던 군소정당들은 선거 이후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1996년 4월 13일 모두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기타정당 공천자

| 구분 | | 후보자 | 비고 | |
|-------------|-----|--|--|--|
| 무당파 국민연합 | 전국구 | 윤영오, 김옥선, 김상명, 진원규, 김현기, 안재식 | 번호순 | |
| | 지역구 | 서울 | 용산구(정한성), 동대문구(박상일), 중랑구(김병수), 성북구(송영기), 노원구(구판홍), 은평구(송창달), 은평구(김명환), 서대문구(이근봉), 마포구(고명관), 양천구(권영빈), 구로구(김기선), 구로구(노만석), 서초구(곽 일), 서초구(김상태), 강남구(서병찬) | |
| | | 부산 | 남구(최시명), 해운대·기장군(김동주), 금정구(성태진), 사상구(박중기) | |
| | | 대구 | 중구(한병채), 동구(위현복), 동구를(홍대식), 남구(성만현), 북구(김태달), 북구를(최은순), 수성구를(이치호), 달서구(김은집) | |
| | | 인천 | 남동구(권오덕), 부평구(이수일), 계양군·강화군(이병현), 서구(이승희), | |
| | | 광주 | 북구(신금남) | |
| | | 대전 | 유성구(박충순) | |
| | | 경기 | 수원시 팔달구(윤시원), 광명시(김석영), 과천시·의왕시(신하철), 군포시(박기수), 하남시·광주군(강광호), 파주시(조근만) | |
| | | 강원 | 춘천시(이상수) | |
| | | 충북 | 청주시 상당구(채영만), 청주시 흥덕구(이상일), 보은군·옥천군·영동군(강영창) | |
| | | 충남 | 논산시·금산군(임덕규), 예산군(민석근) | |
| | | 전북 | 정읍시(이원배), 김제시(이창렬) | |
| | | 경북 | 포항시 북구(최영태), 김천시(조석환), 영천시(정동윤), 경산시·청도군(서진수), 청송군·영덕군(박남수), 영양군·봉화군·울진군(김중권) | |
| | | 경남 | 마산시 합포구(박동관), 마산시 회원구(신태성), 거창군·합천군(박판제), | |
| 대한 민주당 | 지역구 | 서울 종로구(김이준), 중구(김명주), 부산 남구(서이남), 대전 동구(김성욱), 대전 중구(송재호),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최봉수) | | |
| 21세기 한독당 | 지역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박종구), 서대문구(장영선), 서초구(안방자), 대전 동구(이찬구), 유성구(류관석) | | |
| 친민당 | 지역구 | 강원 영월군·평창군(엄의현) | | |

5. 제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 인천 서구, 수원시 장안구 보궐선거(1997. 3. 5)

인천 서구선거구의 새정치국민회의 조철구 의원과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의 자유민주연합 이병희 의원이 1996년 12월 30일과 1997년 1월 13일 각각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두 선거구의 궐석을 보충하기 위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첫 보궐선거가 1997년 3월 5일 실시되었다.

신한국당은 인천 서구선거구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조영장 전 의원을 공천하는 한편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는 이호정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 속에 연합공천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인천 서구선거구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조한천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는 자유민주연합 이태섭 전 의원을 각각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 유용근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1997년 2월 18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세 정당 이외에 인천 서구에는 무소속 백석두 후보가,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는 무소속 이학선·이대의 후보가 입후보 하였다.



▲ 인천 서구 보궐선거 합동연설회(1997년 2월 23일).



▲ 수원 장안구 보궐선거 합동연설회(1997년 2월 23일).

3·5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한보철강의 부도와 관련한 금융부정 및 특혜비리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야당 후보들은 이 문제에 김영삼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며 여당을 공격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3·5 보궐선거를 ‘한보사태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한보사태 관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현 경제난국의 타개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한보사태 관련 문제 등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 대안 없는 정치공세로 맞서는 한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피격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안보사건을 내세워 안보·치안공세로 대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 속에 중앙당은 물론이고 지구당 차원의 실질적 공조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김대중·김종필 양당 총재는 물론 양당 지도부가 정당연설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당 합동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지원활동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보사태와 경제침체 등 여론의 실정을 공격하는 한편, 이기택 총재 등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깨끗한 정당이미

지를 강조하며 유권자들과 개별접촉 방식으로 득표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3·5 보궐 선거는 중앙당의 행정지원, 고위당직자의 연설회 참석 등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실시된 여느 보궐선거보다 과열·타락양상이 심화되지 않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5일 최종적인 선거결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단일후보가 전승하였다. 인천 서구선거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조한천 후보가 4만 2,503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이태섭 후보가 2만 8,78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선거종료 직후 성명을 통해 보궐선거의 의미를 “경제파탄과 한보사태 등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며 야권 공조의 승리”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3·5 보궐선거는 매우 낮은 투표율(인천 서구 37.3%, 수원 장안 32.7%)을 기록하여 한보사태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과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었다.

나. 예산군, 포항시 북구 재·보궐선거(1997. 7. 24)

1997년 4월 11일 대법원은 충남 예산군선거구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선거법의 연좌제 규정에 의하여 조종석 의원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군선거구의 재선거가 1997년 7월 24일 실시되었다. 한편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구의 무소속 허화평 의원은 1997년 4월 17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포항시 북구선거구도 예산군 재선거와 같은 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예산군선거구에 오장섭을 공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 속에 자유민주연합 조종석을 단일후보로 공천하였다. 조종석 후보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 후 선거범죄 연좌제로 당선무효가 되었으나 피선거권은 박탈당하지 않아 재공천될 수 있었다.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이 이병

석을 공천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태준 전 민주자유당 최고위원과 공조를 이루기 위해 양당에서 모두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어려운 당내 상황 속에 이기택 총재가 직접 포항시 북구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이외에 다른 후보자가 없어 예산군에서는 신한국당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단일후보의 양자 대결이, 포항시 북구에서는 신한국당과 민주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태준 후보의 3자 대결이 벌어졌다.

신한국당은 두 지역 모두가 열세라는 평가 속에 한 선거구에서라도 승리한다는 목표하에 이회창 총재의 고향인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3·5 보궐선거와 같이 야권공조를 통하여 예산군선거구의 조종석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도 공조의 일환으로 무소속 박태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두 선거구 중에서는 거물급 정치인 박태준 후보와 이기택 후보가 대결을 벌인 포항시 북구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여론과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경선 등 각 정당의 당내 상황으로 인하여 앞서 실시된 3·5 보궐선거에 비해 중앙당의 관여는 비교적 적었다.



▲ 포항북구 보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민주당 이기택 후보, 신한국당 이병석 후보, 무소속 박태준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1997년 4월).

선거결과 예산군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오장섭 후보가,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는 박태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예상 외로 예산군 선거에서 승리한 신한국당은 그동안의 수세적 상황을 반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조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연합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충청권에서 패배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지역의 입지를 고민해야 했다. 특히 여러 차례 재·보궐선거를 통해 계속적인 성과를 보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조체제 승리가 마감된 것 또한 양당에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기택 민주당 총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다. 안양시 만안구 보궐선거(1997. 9. 4)

경기 안양시 만안구선거구의 자유민주연합 권수창 의원이 199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4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만안구 보궐선거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두 아들의 병역 시비에 따른 국면전환용으로 선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선거거부를 언급할 정도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실시되었다.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50여 표차로 낙선한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공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공조하여 김일주 후보를 단일 후보로 공천하였다. 이외에 무소속으로는 김영호 후보가 입후보하여 경쟁을 벌였다.

만안구 보궐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실시되는 선거인 데다 수도권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예비선거’ 성격을 띠었고, 이에 여야는 총력전을 펼쳤다. 야당은 한보사태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개입,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쟁점으로 삼아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지역선거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득표활동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행정지원 이외에도 현역의원 일부를 동원하는 한편 정당연설회에도 이회창 총재와 고위당직자들이 참석하였다.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김대중 총재가 양당 고위당직자들과 함께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이른바 ‘DJP공조’를 과시하였고,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되어야 야권이 대통령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고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선거결과 자유민주연합 김일주 후보가 3만3,550표를 득표하여 1만5,500여 표차로 신한국당 박종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대통령후보단일화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소재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라. 광주 동구를 보궐선거(1997. 12. 18)

1997년 8월 6일 ‘KAL기 괄 추락사고’로 광주 동구을선거구의 새정치국민회의 신기하 의원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보궐선거가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광주 동구을 보궐선거에 이영일 전 의원을 공천하였고, 한나라당은 김용욱 광주 동구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그러나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12월 11일 한나라당 김용욱 후보는 “그동안 선거활동 과정에서 뿌리 깊은 지역감정과 싸늘이식의 고질적인 선거풍토를 확인했고, 몰표가 확실한 이 지역은 보선이든 대통령선거이든 투표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용욱 후보의 사퇴와 관련하여 동구을의 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할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전략의 술수라고 비난하였다. 양당간의 논란속에 광주 동구을 보궐선거에서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이영일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었다.

6.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8)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통일한국당 신정일 등 모두 7개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애초 신한국당은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자유민주연합은 김종필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민주당은 조순 총재를 대통령후보 선출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었고, 민주당과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하여 이회창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 또한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인제는 경선 패배 후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러한 이합집산을 거친 결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의 3인 경쟁구도 속에 치러졌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미디어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과거 군중집회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TV토론과 광고 등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쟁을 벌였다. 총 유권자 3,229만 416명 중 80.7%가 투표에 참여한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고, 그 결과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가. 신한국당(1997. 11. 24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1) 후보자 선출

1997년으로 접어들면서 신한국당은 연초부터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경쟁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였다. 1997년 1월 7일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과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도 “당을 책임지는 총재로서 분명한 입장을 당원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라

며 대통령후보 선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후보 결정시기에 있어서도 너무 일찍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대권후보 조기 가시화론’이 제기되면서 대통령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조기에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시월회’와 민주정의당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21세기 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당의 민주화 및 체질개선 요구와 조기경선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2월 25일 한보사태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과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한 당내 갈등은 3월 당 체제 개편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신한국당은 3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대표위원에 선출하는 한편 주요 당직을 개편하였다. 당내 대통령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예비 후보들과 주변 인사들은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인 이회창 대표체제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이후 이회창 대표의 대표위원직 사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러한 당내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신한국당은 5월 2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선규정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경선규정의 핵심은 ‘완전자유경선제’의 도입이었다. 즉 대통령후보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 수를 기존 4,665명에서 1만 2,680명으로 2.5배가량 대폭 늘려 실질적인 상향식 선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당과 지구당의 대의원 비율을 4 대 6에서 1.5 대 8.5로 변경하여 기층 단위인 지구당 중심의 대통령후보 선출이 가능한 경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수는 당무회의의 선출 500명, 중앙상무위원회 선출 600명, 15개 시·도대회 선출 525명(1개 시·도 15명에서 35명으로 확대), 253개 지구당대회 선출 8,855명(1개 지구당에서 현행 7명에서 35명으로 확대)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정당사상 최초로 전체 대의원의 2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상황 속에 입후보 요건도 완화하였다. 전체 대의원 중 1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은 3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대의원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만 받도록 완화하였다.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애초 당무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은 8개 이상 시·도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 대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국위원회 최종 의결과정에서 박관용 사무총장이 후보등록요건을 3개 시·도 이상 대의원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완화하는 수정안 동의를 요청하였고, 전국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대의원 추천 없이 당무회의 제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대의원 중심의 상향식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경선을 승복과 화합을 이루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경선후보는 시·도별 합동연설회와 전당대회에서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서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운동기간을 31일에서 23일로 축소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개인연설회를 금지하고 합동연설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연설회 장소와 시간을 당이 결정하여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의 발송비용도 당이 부담하였다. 이외에 전화를 이용한 지지당부, 자필 서신 우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후보 홍보와 지구당 개편대회 참석 등을 허용하여 후보자의 자유로운 경선운동을 보장하였다. 반면 후보자의 호별 방문, 상대 후보 비방, 금품제공 등은 금지하였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회까지는 비공개 경고하되 3회 이상 위반하면 당기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보결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과반수 대의원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를 대통령후보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만일 1차 투표에서 당선규정에 부합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바로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선규정이 확정되자 신한국당은 5월 30일 당무회의를 열고 대의원선출(6월 4~13일), 후보자 등록(6월 29일~7월 2일), 후보자 경선 전당대회(7월 21일) 등 세부 경선 일정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6월 3일 당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구당대회와 시·도지부 대회를 개최하여 9,410명의 지방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경선과정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 등 경선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전 통일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정치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회창 대표의 대표위원직 사퇴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전히 공정경선 시비와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이회창 후보는 당내·외의 사퇴요구 확대 속에 6월 27일 대표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7월 1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된 경선 후보자 등록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후보등록 결과 김덕룡(1번), 박찬종(2번), 이한동(3번), 최병렬(4번), 이회창(5번), 이수성(6번), 이인제(7번) 등 7명의 경선후보가 입후보하여²⁶⁾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경선후보로 등록한 7명을 상대로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탈당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았다.

7명의 경선후보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2개의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된 합동연설회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합동연설회에는 7월 5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일 강원도, 8일 충북, 9일 대구·경북, 10일 광주·전남, 11일 부산, 12일 제주, 14일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7명의 후보들이 강원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1997년 7월 7일).

26) ()의 번호는 후보자의 기호이며, 7월 2일 후보등록 완료 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전북, 15일 인천, 16일 대전·충남, 18일 경남, 19일 서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자에게는 20분의 연설시간이 주어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호 1번 김덕룡 후보는 ‘정치는 덕으로 경제는 용처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화합과 개혁계승을 강조하였고, 기호 2번 박찬중 후보는 ‘본신 경쟁력’을 내세워 자신이 모든 면에서 김대중 후보와 맞설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였다. 기호 3번 이한동 후보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를 두루 거친 경륜을, 기호 4번 최병렬 후보는 노동부 장관과 서울시 장 재직 당시의 위기관리 능력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편 기호 5번 이회창 후보는 ‘화합과 신뢰’를 내세우며 ‘부드러운 대쪽’의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기호 6번 이수성 후보는 ‘대통합, 신뢰, 포용력’ 등 7가지 장점을, 기호 7번 이인제 후보는 50세 주지사 출신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43세 케네디 대통령 등 빗대어 젊은 대통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23일간의 선거운동을 종료한 후 신한국당은 7월 21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투표결과 이회창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1만 2,049표 중 41.1%인 4,95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이인제 후보 1,774표(14.7%), 이한동 후보가 1,766표(14.7%)를 얻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김덕룡 후보가 1,673표(13.9%), 이수성 후보가 1,645표(13.7%), 최병렬 후보가 236표(2.0%)를 획득하였다. 한편 1차 투표결과 이인제 후보에게 5표 뒤진 이한동 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였고, 이에 수작업으로 재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8표차로 최종 확인되었다.

1차 투표 직후 경선관리위원회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경선규정에 의해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결선투표를 진행하였다. 결선투표 직전 경선일정에 없었던 정견발표가 실시되었고, 두 후보는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과의 관계를 집중 거론하는 등 최종 득표전을 벌였다. 결선 투표 결과 이회창 후보가 1만 1,622표 중 59.6%인 6,922표를 얻었고, 이인제 후보는 40%인



▲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1997년 7월 21일).

4,622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신한국당은 집권 여당 사상 최초로 자유경선을 통해 이회창을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2) 선거대책 및 전략

1997년 7월 21일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한 이후 신한국당은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준비에 앞서 경선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고 당내 안정을 찾기 위해 8월 7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강삼재와 이해구를 임명하는 등 당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어 8월 14일에는 강삼재 사무총장을 단장 겸 총괄본부장으로 대통령선거 실무준비를 담당할 대통령선거기획단과 20인의 기획위원회를 공식 발족하였다. 9월 4일에는 기획, 정책, 조직 1·2, 홍보, 직능, 여성, 유세 등 8개 본부 산하 45개 단장과 정책본부 공약개발위원회의 10개 분과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선거기획단을 정비해 나갔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선거기획본부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김윤환·박찬중 고문²⁷⁾과 김덕룡 의원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²⁷⁾ 박찬중 고문은 11월 11일 사퇴하였고, 후임에는 최병렬 의원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선거대책기구의 조직화와는 달리 신한국당의 대통령선거 대책 및 전략은 내·외부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많은 논란과 변화를 겪었다. 애초 이회창이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7월 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제기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이 주요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후 신한국당은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후보교체론이 제기되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경선에서 2위로 패한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9월 1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한국당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 경쟁구도 또한 복잡하게 변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 이회창 후보와 신한국당은 정책개발과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창출 이외에도 당장 닦친 병역면제 의혹 여파를 차단하고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대책수립이 절실하였다. 또한 이인제의 출마로 신한국당 지지표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했다.

먼저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하여 신한국당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문제를 제기하며 맞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10월 7일 신한국당은 강삼재 사무총장을 통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670억 원의 비자금을 친인척 등이 관리해 왔다”라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문제는 즉각 양당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은 10월 16일 김대중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선거 전까지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회창 후보는 오히려 비자금 자료수집 경위에 대한 불법성 여부로 새정치국민회의의 반격을 받았다.

비자금 의혹 제기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회창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요구와 차별화라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회창 후보의 기본적인 전략은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지적되던 깨끗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이회창 후보는 검찰의 비자금

수사유보 결정에 김영삼 대통령이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22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 자금, 그리고 자신의 경선자금 등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를 촉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의 결별 선택은 3김 정치 청산을 내세운 차별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당내 민주계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후보 교체 서명작업이 진행되면서 이회창 대 반이회창 세력간 당내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는 자유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던 국민신당과 이인제 후보에 대한 견제책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국민신당 지원설을 주장하였다.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탈당한 이인제 후보와 국민신당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고, 이를 통해 이인제 후보의 상승세를 견제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결국 1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을 탈당하였다.

그러나 차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 의혹 여파로 하락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후보자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중·후반에 이를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김대중으로 후보 단일화를 확정하여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만 갔다.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과 이회창 후보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 확장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11월 7일 민주당과의 합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는 하락한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는 한편 본선 경쟁구도를 이회창과 김대중 양자대결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신한국당은 11월 24일 민주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출범시키고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이후 이회창 후보는 신설합당한 한나라당 후보로서 변화된 환경과 구도에 부응하는 선거대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나. 새정치국민회의

1) 후보자 선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12월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1월 20일 서둘러 경선규정안을 마련하였다. 경선규정의 핵심은 4,358명의 대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의원은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2,300명,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828명,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 284명, 당무회의에서 선임하는 300명, 지구당위원장 230명, 시·도지부에서 선출하는 140명,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158명, 기타 11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후보는 재적 대의원 10분의 1 이상, 7분의 1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후보자를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인한 당내 갈등으로 경선규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어야 했다. 국회의원선거 이후 당내에는 선거패배의 원인이 야권의 분열 때문이었다는 ‘분당책임론’과 더불어 분당의 중심에 있었던 김대중 총재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 당선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상현 지도위의장, 정대철 부총재, 김근태 부총재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은 ‘제3 후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인은 제한된 대의원들만으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이들 후보가 밀실 협상으로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1997년 3월 11일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의 도입’을 공식 제안하였다. 즉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 선출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이었다.

대의원에 의한 후보선출과 국민경선이라는 두 가지 선출방식을 두고 당내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4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무회의에서 주류 측은 예정된 대로 5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선

출하되 대의원에 의한 후보선출 규정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지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비주류 측은 5월 전당대회에서는 총재만 선출하고, 대통령후보는 8월 국민경선제를 통해 선출하자고 주장하며 맞섰다.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도 전당대회 한 달 전인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후보경선 등록을 하려면 30일 전까지는 대의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논란 끝에 주류 측이 주장하는 경선안이 표결을 통해 처리되었고, 대의원 확정 또한 전당대회 15일전까지 확정하도록 결정되었다.

당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4월 25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아 5월 19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확정하였다. 국민경선제가 무산되면서 비주류 측에서는 4월 19일 정대철 부총재의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하였다. 애초 제3후보론을 주장하던 비주류 측은 조순 전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경선에 출마시키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경선후보로 거론되던 김상현 지도위원회 의장은 한보비리 사태에 연루되면서 법적 처리와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출마를 포기하였다. 한편 김근태 부총재는 국민경선제 운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후보 경선은 4월 24일 김대중 총재가, 4월 25일 정대철 부총재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경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는 ‘거목에 꽃을 피우자’ ‘선택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내세워 자신이 국가적 지도자임과 당내 선택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정대철 후보는 ‘김대중은 민족의 지도자로, 정대철은 정권교체의 기수로’ ‘젊은 나무에 물을 주자’ 는 구호를 내세워 김대중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세대교체론을 주장하였다. 특히 4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후보가 내각제를 매개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세력의 총결집과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경선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경선운동 과정의 불공정 경

쟁 시비가 일어났다. 김대중 후보는 당직자 연수 등 당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해 정대철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특정후보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특히 5월 11일 정대철 후보가 호남지역 지구당을 방문했을 때 대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지구당사를 폐쇄한 사례를 들어 비주류 측 후보의 대의원 접촉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 20여 일간의 경선운동을 마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5월 19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대통령후보와 총재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정대철 후보는 마지막 연설까지 “국민들이 새인물에 표를 주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유민주연합과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희박하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대세를 뒤집지는 못하였고, 최종 개표결과는 전체 유효투표 4,157표 중 3,223표(77.5%)를 얻은 김대중 후보가 승리하였다. 정대철 후보는 907표(21.8%)를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김대중 후보는 다른 정당에 앞서 가장 먼저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고, 네 번째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 새정치국민회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총재와 총재로 선출된 김상현 의원(1997년 5월 19일).

대통령후보 선출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여당의 야당 당선자 영입에 맞서 자유민주연합과 공조를 시작하였고, 1996년 9월 노원구청장 재선거와 11월 경기도 오산시장 보궐선거, 1997년 3월 5일 실시된 인천 서구와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공조를 통해 승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공조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됐다.

1997년 6월 들어 보수대연합설과 함께 자유민주연합과 신한국당의 연합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였고, 7월 11일부터 양당 수임기구를 통한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10월 27일 ‘대통령 후보에 김대중, 총리에 김종필’ 라는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3일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 서명식’ 을 갖고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총재를 단일후보로 추대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총재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후보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1997년 11월 3일).

2) 선거대책 및 전략

1997년 5월 19일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새정치국민회의는 6월 4일 대통령선거기획단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TV토론 대책위원회와 야권대통령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당 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어 기획본부 산하에 대통령선거기획단을 설치하여 대통령선거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직능별 특별위원회를 26개로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형성해 가는 상황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김대중 후보는 반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계속 거론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병역면제 의혹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급락과 함께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경쟁구도가 변화된 상황 속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1월 3일 자유민주연합과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하였고, 이에 선거대책과 전략 또한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우선 선거대책기구부터 양당의 공동기구로 재편되었다. 11월 11일 양당은 동수의 분과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 등을 파견하여 700여 명이 참여한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의장을 맡아 총지휘에 나섰다. 또한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최고고문과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기 고문은 상임고문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유민주연합 김복동 수석부총재는 공동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 아래에는 양당 부총재급과 영입인사 등 30여 명의 부의장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양당의 10여 등 주요당직자 50여 명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양당의 의사 등을 조정하게 하였다. 그 이외에 초·재선의원 등 소장·개혁인사를 중심으로 ‘21세기 전략위원회’를, 다선의원·장관급 등 중진인사들로 ‘국가경영 정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정책정당·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양당은 11월 14일 선거대책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필승을 결의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김대중 후보가 근본적으로 내세운 전략은 ‘정권교체’와 ‘준비된 대통령’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다른 후보와의 가장 차별적인 김대중 후보의 장점을 정치경력과 경륜, 그리고 지도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는 ‘준비된 대통령’과 ‘든든해요 김대중’이라는 메시지를 각종 광고와 홍보물을 통하여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위기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급부상하자 새정치국민회의와 김대중 후보는 ‘경제대통령’과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공동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주장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영삼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이회창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본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강조하였다.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경제회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홍보물에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아는 지도자’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후보의 경제적 자질과 김종필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국정운영 경험 및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실물경제 경험으로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김대중 후보의 위기관리능력과 소위 ‘DJT연대’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 홍보하였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선거후반 캐치플레이즈도 ‘경제 외교력이 있는 든든한 대통령 김대중’으로 전면 교체하였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김대중 후보는 영남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충청지역은 자유민주연합과의 공조에 의한 우세지역으로 분석하고 영남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중부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대세몰이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김종필 선거대책위원회 의장과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총재가 김대중 후보가 참석하는 대규모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연대의 위력을 과시했다. 또한 당선의 1차적 관건은 충청권표의 결집에 있다고 보고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영남지역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가 충청지역에 거의 상주하며 득표활동을 전개하였다.

실질적인 유세에 있어서는 유세반을 총재반과 중진반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분담 체제로 운영하였다. 총재반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총재로 구성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였고, 김종필 명예총재는 대전과 충청권을, 박태준 총재는 대구·경북권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였다. 중진반은 권역별로 세분화된 6개 팀을 가동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득표활동을 벌였다. 또한 별도로 젊고 개혁적인 의원·정치인들로 '파랑새 유세단'을 편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파랑새 유세단은 다시 서울 동북부와 경기 동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을지문덕단, 서울 서북부와 인천을 담당하는 광개토단,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를 담당하는 연개소문단 등 3개 반으로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설득을 위해 주부들을 겨냥한 '장미구니 유세단'을 비롯하여 군 장성들로 구성된 '안보 유세단', 농어촌을 겨냥한 '21세기 푸른 농어촌 유세단', 젊은층을 겨냥한 '21세기 청년팀'과 '컴퓨터 홍보팀' 등 다양한 유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서울 신촌에서 거리유세를 벌이고 있다(1997년 12월 15일).

선거가 종반에 이르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12월 15일부터 3일간을 수도권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김대중 후보가 지방유세를 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리유세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량새유세단과 21세기 청년팀 등 거리유세단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하여 부동산 흡수에 당력을 총동원하였다.

3) 선거공약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약개발에 착수하여 당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1차 공약안을 마련한 다음 김대중 총재가 현장투어 등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경제정책자문 교수단 등의 검증을 거쳐 공약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11월 3일 자유민주연합과의 후보단일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당의 정책과 공약의 조율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양당은 정책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정책공조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발족하고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12월 2일 15개 분야에 세부공약 800여 개를 포함한 170개의 핵심공약으로 구성된 단일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단일 공약안의 기초를 ‘21세기 자유롭고 부강한 선진통일조국 건설’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 IMF 체제 극복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소득수준 3만 달러,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건 경제 분야 공약을 제1순위로 내세웠다. 한편 양당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결정적 합의사항인 ‘제15대 국회 임기 내 내각제 개헌’을 정치 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된 경제 분야에서는 1년 반 이내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극복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경제난국 해결을 위해 3대 단기 방안과 5대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당간 논란이 되던 금융실명제 폐지 문제는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외에 영장 없는 금융거래조사 금지를 통한 비밀보장 강화, 자금출처 조사나 국제청 통보 금지로 금융거래 자유화, 돈세탁방지법 제정, 무기명 장기저리 산업채

권 발행 등을 주요 금융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기업정책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중소기업에 신용위주 대출, 벤처자본 유입 촉진으로 벤처기업 2만 개 육성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폐지, 직접세율을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법인세율 25%로 인하,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공약하였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 3%와 경제성장률 6~7%를 제시하였다.

정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금세탁 규제 등 부패방지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내각제 추진, 정치보복·차별대우 금지 관련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정치개혁을 위한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낮출 것임을 밝혔다. 행정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해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내무부 폐지, 지방자치처 신설, 주민투표·주민발안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직교역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 남북 직항로 개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분 무조건 지원,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 시 남북 대화 등 북한 태도 변화 요구, 대북 식량 지원 시 남북협력기금 이용,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망 구축, 상설면회소 설치, 1년 안에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 왕래의 실현 등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으로 점진적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 한미행정협정 개정,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해외 입양아 및 혼혈아 차별 철폐 등을 공약하였으며, 국방정책으로는 군의 정보화·과학화로 정예강군 육성,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하였다.

과학·기술·통신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한국형 신기술 개발과 국제기술시장 상설화, 1인 1PC 운동,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국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신혼부부에게 공동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보급률 2002년까지 100% 달성, 주택가격을 30%로 내

려 내 집 마련 실현, 할부금융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로 금리 활성화 등을 주요 주택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간접자본 및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제주·속초·목포·인천항을 국제관광 항구로 육성, 인천공항 부근에 ‘국제자유도시’ 건설, 수송과 물류체제를 결합한 복합 화물터미널을 양산·의왕·청주·평택·논산·김천 등에 설치, 심야 화물수송 할인,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버스노선 직선화 및 환승체계 구축,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자동차보험 통합 등을 공약하였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투자기간 연장과 우선순위 재조정, 중앙의 농정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농어촌 부채 탕감을 위해 부채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할 것, 농어민 생활개선을 위해 통합의료보험을 완전 실시하고 자녀 대학 특례입학 비율을 5%로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농어촌 중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쌀 100% 자급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개혁추진단’을 상설화하여 교육개혁 추진, 국립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 인재지역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 교원안식년제 도입,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 및 선발제도 전면 개혁, 유아교육법 제정, 만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2000년부터 초·중·고교 교과에 컴퓨터 정규과목 채택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문화예산 1% 이상 확보, 문예진흥기금 5,000억 원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일본문화 단계적 개방, 영화심의 폐지 등을 문화관련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실시, 의료보험 완전 통합, 보험혜택 대폭 확대, 경로연금 확대, 복지예산 매년 30% 이상 증액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관련 사업을 미래전략 사업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통합 수자원계획 시행, 다목적댐 건설, 광역 상수도 확충, 지하수 개발 총량제 실시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자연보전을 위해 국가매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등 기본권 보장과 100만 명 고용창출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여성정책으로 각종 선거 비례대표제와 정부 위원회에 정부 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국무위원도 4명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주요공약

| 공약분야 | 세부공약 |
|-------|---|
| 정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법 제정으로 정치보복 금지, 지역차별 철폐, 친인척 비리 척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경유착 근절 ○선거법 개정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각종비리 근절 ○검찰 수사권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 보장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권력형비리 철저 수사 |
| 통일·외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통일방안으로 화해와 협력의 단계적 통일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후 북한에 대한 개방 유도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긴밀한 협력으로 통일 및 통상외교 실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 및 민간주도 교류협력 활성화 ○이태시대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실리외교 추구 ○한·일, 한·중 어업협정 개정으로 동북아 해양중심국가로 도약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에는 자율, 중소기업은 육성, 가정경제는 보호 ○중소기업육성으로 대기업과 균형발전 ○긴급자금지원으로 중소·하청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한은특용으로 금융시장 안정, 대외신임도 회복 ○행정규제 완화로 기업활동 자유보장 ○세제와 세정개혁 통한 대폭적 세금감면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재정 GNP 6%확보로 교육환경 개선 ○대입지원자의 전원 수용으로 입시지옥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교원 처우개선으로 촛지 근절, 우수교원 확보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립으로 학교폭력 추방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교육 피해화 방지 ○영재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
| 건설·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토별 특성에 따른 균형개발과 교통망의 특정지역 편중 시정 ○2000년까지 1가구 1주택 위해 국민주택기금 및 택지공급 확대 ○감리보험제 및 외국인 감리제도 도입으로 부실공사 방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대통령 직속 교통정책특별위 설치로 교통난 해소와 종합 교통체제 확립 |
| 사회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의료보험제, 노령수당제, 장애인 연금제도 등 즉각 실시로 사회복지 환경 개선 ○ILO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제정으로 근로환경 향상 ○지역별 환경기준 제정, 환경영향평가원 설치로 환경문제 해결 ○직업훈련 강화, 노인취업 기회확대로 유휴인력 활용 ○문화산업 저변 확대, 문화예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

4) 선거결과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는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김대중 후보는 유효투표의 40.3%인 1,032만 6,275표를 득표하였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로 당선되었다.



▲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당선 환영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후보는 영남지역과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었던 호남에서는 예상대로 평균 90%를 넘는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열세로 평가되던 영남지역에서도 제13·14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두 자리수의 득표율을 기록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끌어내면서 자유민주연합이 기반을 두고 있는 충청지역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27.8%였던 득표율이 43.5%로 상승하였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이회창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득표율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2~6%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충청권의 득표율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에 성공하면서 자유민주연합과의 후보단일화 약속대로 이듬해 1998년 2월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소위 ‘국민의 정부’로 명명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 자유민주연합

1) 후보자 선출

1997년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의 공조체제 속에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4월 16일 당무회의를 통해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은 5,000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되, 중앙위원회와 당무회의가 각각 400명과 3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등록자는 전당대회 대의원 총수에서 3만 원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등록금을 내도록 하였다.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한 자유민주연합은 5월 2일 대통령후보와 총재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일을 6월 24일로 확정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초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종필 총재를 추대하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후보선출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내에는 후보경선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한영수 부총재가 김종필 총재에 맞서 6월 5일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였다. 한영수 부총재는 출마의 변을 통해 김종필 총재는 당권을 갖고 후진을 양성해야 한다며 김종필 총재의 퇴진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김종필 총재보다는 내가 나서는 것이 야권단일후보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김종필 총재의 대통령후보 추대가 예상되던 자유민주연합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연합 대통령후보 경선은 6월 8일 후보등록으로 본격화되었다. 경선후보는 58개 지구당 770명의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김종필 후보와 33개 지구당 35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한영수 후보 등 2명이 등록하였다. 김종필 후보는 6월 10일 다수의 당직자와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김종필 총재 추대위원회’를 발족하고, ‘경륜의 지도자, JP를 대통령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득표활동을 벌였다. 이후 선거공보에는 ‘사고는 30대, 경륜은 70대’라는 구호를 내세워 세대교체론에 대비하였다. 또한 당

헌·당규에 의해 경선후보의 대의원 접촉이 합동·개인연설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전당대회에서 함께 선출하는 당 총재에 단일후보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는 총재의 자격을 내세워 각종 시·도지부 정기대회와 위원장 간담회 등을 심분 활용하였다.

반면 한영수 후보는 후보와 총재 분리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즉 대권은 한영수 후보가 잡고 당은 김종필 후보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대의원혁명을 외치며 대의원들을 설득하였다. 또한 김종필 후보의 대통령선거승리 불가론을 쟁점화하며 ‘대안 창출론’을 주장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김종필 후보로는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였다. 특히 주요 논쟁점이 되고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와의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단일화 협상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은 계속된 불공정성 시비와 양측 간 갈등의 연속이었다. 후보등록 전부터 한영수 후보 측은 후보등록 방해공작을 제기하였고, 경선 과정에서도 시·도지부 정기대회에서 김종필 후보에게는 총재의 자격으로 격려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자신에게는 연설기회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당헌·당규에는 경선후



▲ 자유민주연합 1차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김종필 후보(1997년 6월 24일).

보의 대의원 접촉을 합동·개인연설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종필 후보 측에서는 합동연설회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영수 후보는 주요 당직자가 포함된 김종필 추대위원회 구성도 경선자체를 부정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 선거운동을 마친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6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갖고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였다. 투표에는 총 대의원 3,881명 중 3,271명이 참여하였다. 경선 결과 김종필 후보가 유효투표총수 3,190표 중 2,575표(80.7%)를 얻어 554표(17.4%)를 얻은 한영수 후보에게 큰 표차로 승리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종필 총재는 198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와 내각제 개헌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때까지 당무회의에 위임토록 의결해 사실상 모든 협상권한을 총재와 대통령 후보에게 위임하였다.

2) 선거전략 및 대책

대통령후보 선출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파워 김종필 플랜’과 ‘대중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시기별·주제별 후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내각제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와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후보단일화 문제는 자유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김종필과 김대중 중 어느 당의 후보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보 단일화의 관건은 내각제 개헌문제였다. 자유민주연합은 대통령후보 단일화협상수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용환 부총재를 중심으로 새정치국민회의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였다.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였고, 1997년 10월 27일 양당 총재의 회합으로 단일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협상 결과 양당은 대통령후보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선거 승리 후 차기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기

로 합의하였다. 또한 내각제 개헌은 1999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도 약속하였다. 양당은 11월 3일 이러한 합의내용을 담은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대통령후보 단일화 합의 후 자유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반 김대중’ 정서를 이유로 이의익, 박종근, 안택수 의원 등 대구 출신 의원 3명이 탈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옮겨갔고, 충청권 의원들도 김종필 총재의 후보직 사퇴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일부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로 후보를 단일화한 자유민주연합은 이후 공동 선거체제를 구성하고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라. 민주당

1) 후보자 선출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하여 비교섭단체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은 6월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이기택 총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당내갈등으로 불안정 모습을 지속하였고, 특히 1996년 11월 9일 당내 비주류 측이 독자적인 정치결사체인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창립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양분되었다.

이처럼 당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은 1997년 12월 실시될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조순 서울시장 영입에 나섰다. 조순 서울시장은 1997년 들어 야권의 제3후보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특히 국민통합추진위원회는 8월 범야권 후보단일화추대위원회를 발족하여 조순 시장을 범야권의 제3후보로 추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8월 1일 조순 서울시장과 만나 민주당 입당과 대통령후보 추대를 제의하였고, 이어 8월 8일 회동에서 두 사람은 총재직과 대통령 후보직 모두에 조순 서울시장을 추대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순 서울시장은 8월 20일 입당하였고, 민주당은 8월 28일 서울 63빌딩

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조순 서울시장을 당 총재로 추대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 선출규정과 관련하여 당원의 직접선거 조항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개정하여 조순 총재의 대통령후보 추대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애초 8월 28일로 예정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조순 총재의 요청에 따라 9월 11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조순 총재의 대통령후보 추대에 대한 당내 반대의견도 표출되었다. 이부영 부총재는 당의 입장과 달리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주장하였다. 이부영 부총재는 여당도 후보경선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후보경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당헌에 명시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의 설득 끝에 이부영 부총재는 8월 22일 “당 안에서 조순 시장을 합의 추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라며 경선입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합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민주당은 9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대의원과 당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조순 총재를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조순 총재는 제15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 민주당 제7차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조순 후보(1997년 9월 11일).

2) 선거전략 및 대책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은 당 체제를 선거체제로 전환하여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순 총재에 대한 지지율 제고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애초 기대와는 달리 조순 총재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당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민주당과 조순 후보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다른 후보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후보 등록을 불과 20여 일 남겨 둔 11월 7일 신한국당과 합당을 합의하였고, 11월 13일에는 대통령후보를 단일화하여 신한국당 이회창을 합당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11월 21일 민주당은 합당전당 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하고, 이회창을 통합된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마. 국민신당

1) 후보자선출

국민신당은 1997년 10월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창당되어 11월 10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신한국당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는 9월 13일 탈당과 함께 대통령선거 독자 출마를 선언하였고, 10월 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통해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서둘러 조직구축에 나섰다. 10월 22일 대전과 충남·북 지구당 합동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31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신한국당에서 8명의 국회의원이 신당창당에 참여하였다.

조직정비를 완료한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1만 5,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창당을 선언하였다. 국민신당은 창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총재직 분리를 골자로 한 당헌을



▲ 국민신당 창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인제후보(1997년 11월 4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를 추대 형식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 국민신당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과거에 집착하는 많은 정치인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세대교체를 통해 진정한 세대 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 선거대책 및 전략

국민신당은 1997년 11월 4일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후 박범진 의원을 사무총장, 한이현 의원을 정책위의장, 김학원 의원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만섭 총재, 부위원장에 장을병·서석재·홍재형·김윤덕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선거대책본부에 17개 실무분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후보직속으로 대학교수진 200여 명으로 구성된 '21세기 국가비전연구단'을 설치하는 등 당 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신당은 창당과정에서부터 '3김 정치청산'과 '세대교체'를 주장해 왔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젊은 일꾼 대통령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편 경쟁구도에 있어서

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의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로의 분산된 지지표를 결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국민신당과 이인제 후보는 11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나섰다.

국민신당은 40% 득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신당은 유세활동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 비해 조직과 자금이 열세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국민 속에 뛰어들어 경제위기 극복 등을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소위 'EQ(감성지수)정치'를 캠페인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투어를 통하여 전국 각지의 시장·상가·역 광장 등을 집중 공략하였다.

한편 득표활동을 위해 지역별로 판세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기간별 득표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을 보합지역, 부산·경남·충청·대전을 강세지역, 서울·대구·경북을 전략지역, 호남을 약세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신당과 이인제 후보는 선거 초반 강세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집중공략하고 그 여세를 대구·경북지역으로 몰아가고자 하였다. 이어 이인제 후보의 연고권이 있는 대전·충청지역과 출마 직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를 2차 공략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선거 막바지에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세몰이를 한다는 유세 전략을 세웠다.



▲ 국민신당 이인제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거리유세를 벌이고 있다(1997년 12월 16일).

유세반은 후보반과 총재반으로 구분하여 지역유세 상황에 따라 해당지역 국회의 원 및 지구당 위원장들이 결합하는 체제를 기본 틀로 구성하였다. 그 외 수도권 일대의 40·50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인사로 구성된 ‘모래시계 유세반’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국민신당은 유세를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을 집중 공격하였다.

선거 중반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찬종 전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신당의 유세전략에 작은 변화를 보였다. 국민신당은 박찬종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으로 추대하고 두 사람의 합동유세를 통해 ‘이·박연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박찬종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직접적인 거리유세를 통해 득표활동을 벌였다.

한편 선거중반에 이르러서는 서민층과 20·30대 젊은 층의 지지 확산과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셀러리맨과 중산층의 표심잡기, 그리고 부동산 흡수에 전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신당은 ‘일벌유세단’ ‘모래시계유세단’ ‘테마유세단’ 등을 수도권에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득표활동을 전개하는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3) 선거공약

국민신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개발의 기본방향을 통일한국 조성, 경제회복, 국민대통합 등 3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1997년 11월 21일 7개 항목 10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국민신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경제정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신당은 ‘21세기 세계경쟁에서 살아남는 일류국가 건설’을 선전구호로 내세웠다. 국민신당의 100대 공약은 ‘국민감동 정치실현, 스피드 경제구축’ 등 젊고 감각적인 표현의 7개항으로 구분되었다.

국민신당은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직과 여당 총재직 분리, 책임총리제, 각료·감사

원장·대법원장·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정부기능 민간이양, 개방형 충원제도 실시, 공무원 수 감축과 구조조정, 공무원 연봉제 실시 등을 행정 분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3단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주민발안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1~2년 이내 IMF 구제금융 극복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금융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임기 내 금리인하 7% 달성 등을 공약하였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정경분리원칙 추진, 남북 정상회담 추진, 남북 직교역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무역협정 체결, 남북 직항로 개설, 경공업 투자 확대,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 남북 간 무기·병력 상호 동수 보유 원칙 아래 군축 촉진 등을 외교·안보 관련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과학·기술·통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단 설치, 초고속 통신망 구축, 벤처산업·정보통신산업 집중 육성, 2002년 통신산업 5대 강국 진입 등을 공약하였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저소득 계층용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지원을 세출액 대비 4~5% 수준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주택보급률 100% 달성 등을 약속하였고, 민간유치를 통한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 건설, 가덕도 항만을 동북아 중추 항만으로 개발하여 시베리아·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청와대 농림수산업발전기획단을 설립하고 첨단기술 농어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1998년부터 통합의료보험 실시, 농어민 100% 연금가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21세기 교육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교육제도를 전면 쇄신할 것을 공약하는 한편 교육예산도 GNP의 6%로 끌어 올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대학의 자율선발권 확대와 2000년까지 중

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도 주요 교육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문화예산을 GNP 대비 0.46%에서 1%로 증액할 것과 방송사의 방송경쟁 체제화 등을 공약하였다.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선거 주요공약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감동 정치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와 함께 일하는 대통령 ○돈 안드는 정치, 일하는 국회 ○당원들이 운영하는 민주적인 정당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입차단 ○지역할거와 차별이 없는 정치 ○중앙부처의 개편 ○공무원제도의 개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사기양양 도모 ○공기업 민영화 방안 ○기금(지방관리기금 포함)관리의 개선 ○세계화와 정보화를 지방화와 상호 접목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간의 조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민생관련 제도개선으로 행복한 국민생활 보장 |
|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의 개발과 운영 ○교육선진국 진입을 위한 GNP 대비 6%교육재정 확보 ○선진 교육환경의 조성 ○교직원경 개선 통한 교원 우대사회의 실현 ○입시고통의 해소를 위한 정책 ○공교육 활성화와 무상의무교육 확대 ○열린교육사회와 평생교육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강화 ○고등교육의 보편화·특성화·다양화 체제 확립 ○전문직업 기술·기능인력 양성교육의 강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선진 교육문화제도 정착 ○통일시대 대비 교육강화와 교육체제 정비 |
|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창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주권확립을 위한 대책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정경유착 척결 ○규제혁파 ○국제통상의 주권 확보 ○외환시장 안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21세기 환경변화에 대비한 [신인력 프로그램]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회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몰릴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중소기업 기반제도의 개선으로 역동적인 경영환경 조성 ○신산업 결집지역을 구축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 ○대기업 소유자배구조의 선진화 ○규리를 낮추고 금융인프라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금융실명제의 대폭 수정 보완으로 자금시장을 정상화 ○금융자율화를 실현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촉진 ○조세체계 정비를 통한 국민 세부담 경감과 과세형평의 달성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예산 절약 ○지방정부의 과세 지주권 확립으로 재정자립도의 향상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통일에 대비 ○세계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국토활용의 극대화 ○유통산업 선진화로 물류비용 절감 ○부동산시장 자율화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 ○주택제도 개선으로 주거안정의 달성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로 과세형평의 달성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 ○3차원 첨단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의 주요교통 중심국가로 육성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농업을 전략기간산업으로 전환 ○농업소득증대 혁신과 경쟁력 확보로 선진농업 구현 ○농수산물 신유통체계 도입과 선진물류시스템체계 확립 ○농어촌 주거, 환경, 교육, 복지개선 등 삶의 질 혁신 ○통일농업 준비 대혁신 |

| | | |
|---------------------------------------|--|--|
| <p>정보화혁명으로 스피드경제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과학기술 10대 강국 도약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획기적 과학기술투자로 기술주권 확립 ○과학기술 전문가에 의한 과학기술 행정의 전문화 ○과학기술 신문화운동으로 과학의 생활화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활동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기술자생력 강화 ○국기정보화로 스피드경제 구축 ○2007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으로 정보 회사회 실현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기술창업형 벤처기업 육성으로 정보지식사회 기반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산업 중점육성으로 2002년까지 세계 정보통신 산업 5대 강국 진입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종합정보화법 제정으로 정보이용 생활화 및 국민의 증진 ○복지정보화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선진사회 구현 ○방송산업의 기술개발·육성과 전파이용의 선진화로 방송·통신기술의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통일한국 정보화 계획수립 및 북한지역 정보화 지원 |
| <p>평화통일 달성과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평화통일 추진 ○조건없는 정상회담 추진 ○남북한 신뢰구축, 군비제한 및 군축 추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확대 ○인적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주민대책기구] 설치 및 [탈북자 긴급수용법] 제정 ○[4-2]방식의 4자회담 추진 ○대주변국 통일외교 ○균형있는 실리외교 ○안보협력과 경제이익이 고려된 대미외교 추진 ○미래지향적인 대일외교 추진 ○대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대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 및 유럽과 다자외교 확대·강화 ○국제환경 협력외교 전개 ○교민청 신설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강력한 군의 양성을 위한 국방 정책 추진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군사력 발전 ○합리적 군인사 ○군복지 향상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병무관련사항의 개선 ○국군포로 및 유해송환 추진 ○SOFA의 개정 ○주한미군 관련사항 해결 ○군사보호구역 해제 민원의 해결 |
| <p>더불어 잘사는 문화사회 구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복지사회의 기틀 확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구현 ○주택복지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녹색사회의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한국의 건설 ○청소년에게 꿈을 가꾸어 주는 환경 조성 ○생활체육의 장려와 체육강국의 대열 진입 ○관광한국의 면모 일신 ○21세기에 걸맞은 노동정책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각출료의 인상과 국가부담을 검토할 것, 그리고 의약분업의 조기실시를 약속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행정 및 제도의 전면보완·개정을 공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부처 신설, 수질개선비용 분담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장기종합관리계획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노사 자율에 의한 정리해고 결정, 점진적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2년간 임금인상 억제 및 무분규를 제안하는 한편 5년간 첨단산업분야에

서 100만 명의 고용창출을 공약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 분야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여성고용 할당제 확대, 여성처 신설, 장관급 이상 여성비율 20% 등을 주장하고 학교 폭력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공약하였다.

4) 선거결과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한 때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이변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종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19.2%인 492만 5,591표를 득표해 3위로 낙선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부산, 경남, 경기도 및 충청권에서 20~30%의 지지를 얻었으나 서울에서 12.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고,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1~2% 수준의 지극히 낮은 지지를



▲ 제15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신당 이인제후보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1997년 12월 22일).

받았다. 결국 이인제 후보는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대권에 도전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고 경선 불복이라는 명예만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당과 이인제 후보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500만 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한나라당

1) 후보자 선출

한나라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 일 남겨 두고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신설합당하면서 1997년 11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한나라당 창당 전 신한국당은 당내 경선을 통하여 이회창을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하였고, 민주당은 조순 전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대통령선거 후보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이후 대세론을 형성하며 부동의 선두자리를 지켜오던 이회창 후보는 야당이 제기한 두 아들의 병력면제 의혹으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탈당하여 신당창당과 함께 대통령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조순 후보 또한 이회창·김대중·이인제 3인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애초 기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여 당선경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 양당은 대통령선거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승과 당세 확장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상호의 필요에 의해 11월 7일 합당에 합의하였다.

양당의 합당에는 3가지 핵심문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합당하는 정당의 지분분배 문제였고, 다른 두 문제는 각각 선출되어 있는 대통령후보를 누구로 단일화할 것인가와 당 총재 선출문제였다. 민주당은 지분문제와 관련하여 30% 보장의 문서화를 요구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지분비율보다는 문서화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합당과 세력 확장이 절실했던 신한국당과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편 후보단일화와 총재 선출의 문제는 두 직을 분리하여 양당이 상호 맞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즉 신설정당의 대통령후보는 지지율이 높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로 단일화하는 대신 당 총재직은 민주당 총재 겸 대통령후보였던 조순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신설합당을 추진한 결과 양당은 11월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

서 합당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하는 합당을 결의하였고, 더불어 합당의결 후 이회창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조순을 초대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등록일을 불과 5일 남겨두고 한나라당 창당과 함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완료하고, 이후 11월 26일 이회창을 한나라당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대회에서 신설합당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 (1997년 11월 21일).

2) 선거대책 및 전략

이회창 대통령후보-조순 총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당은 합당 직후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위해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한나라당은 11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에 의장제를 도입하여 김윤환 전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를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강창성 전 민주당 부총재, 권익현 전 신한국당 고문, 김영구·박관용·김종호·양정규 의원과 홍성우 변호사 등 7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했다. 또한 선거체제 하에서 당무를 담당할 당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선거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후보 개인차원에서는 이회창 후보의 이미지를 통한 기존 정치 및 정치인과의 차별화 전략이 근저에 놓여졌다. 이어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한나라당이 출범한 이후에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대응하는 이회창-조순 연대효과의 극대화가 선거전략의 핵심에 놓였다. 이후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는 이회창-김대중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대한 반대세력과 여권의 지지표를 결집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거전략의 근본이 되는 후보자 개인 이미지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이 강조되었다. 이회창 후보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두루 거치면서 형성된 소위 ‘대쪽’ 같다는 강직함과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97년 한보비리, 대통령선거자금과 비자금 논쟁 등 부정·부패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주요 욕구로 자리한 상황 속에 중요한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이회창 후보는 1997년 7월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될 당시 자신의 최대 장점으로 지적되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 시기 이회창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이회창대세론이 확산되어 갔다. 신한국당이 내세운 구호 또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후 두 아들 병력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선거전략이 변경되었으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함에 있어 이회창 후보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한나라당 선거전략의 근간을 이루었다.

차별화 전략은 이후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인제 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김대중, 이인제에 이어 3위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회창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를 강조하였다. 즉 이인제의 경선불복, 김대중의 정계은퇴 선언 불복 등 기존 정치인들의 신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적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인’을

광고문구로 내세웠다.

특히 국민신당 창당 과정에서는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신당지원설을 제기하며 김영삼 대통령과도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3김정치 청산'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한나라당 창당 이후 김영삼 정부와의 차별화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선거과정에서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경부고속철도, 역사바로세우기 등 논란이 되던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3김정치 청산 주장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후보를 단일화한 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대한 비판과 차별화와의도 연계되었다.

한나라당 출범 이후 이회창 후보는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이회창-조순 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과의 합당 합의 직후 차별화 전략과 연계하여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의의를 역설하는 한편 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부당성을 강조하였다. 11월 7일 합당선언 후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을 통해 “두 총재의 결합은 대통령 임기 절반과 각종 자리, 대통령제 포기까지 주고받는 DJP 노인들의 권력 나눠먹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더불어 이회창-조순 연대효과 극대화 전략은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과 극복방안은 최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최대 장점이었던 ‘대쪽같은 깨끗함’의 이미지와 조순 총재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결합하여 이회창-조순 연대의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유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전략수행을 위해 신한국당과 이회창 후보가 합당 전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내세웠던 ‘튼튼한 경제, 힘 있는 나라’라는 슬로건 또한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로 바꾸었고, 마스코트 또한 ‘희망돌이’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이회창-조순 연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야당이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운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치권 공동책임론’을 내세워 대응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론’ 또한 유권자를 설득하는 논리도 내세웠다. 즉 이회창-조순 연대를 내세워 정치적 안정감과 경제위기 해결능력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신뢰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전제한 점을 들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하자마자 내각제 개헌문제에 붙들려 정국이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권자의 안정심리에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파탄에 대한 공방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의 IMF 재협상 요구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김대중 후보에 대해 “서툰 경제지식”이라며 집중적으로 비난하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자임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선거경쟁에 있어 이회창과 김대중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이인제 후보로 지지가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거운동이 중반에 이르면서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김대중 후보와 백중세라는 자체분석과 IMF체제의 경제위기로 인한 유권자들의 냉소주의가 팽배하여 부동산이 급증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막바지 부동산 흡수에 전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거 후반 사표방지론을 또 다른 선거전략으로 선택하여 “별 생각 없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표를 모읍시다. 표를 분산하지 맙시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사표방지론을 통한 지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선거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지지를 호소하는 유세 대책으로 역할분담체제를 수립하여 다양한 유세반을 구성하는 한편 총재, 공동선대위원장들에게 권역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유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일반 유세반은 후보반, 총재반, 중진반, 전문연사반으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분담하였고, 중진들은 지역연고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세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 서울 신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거리유세를 벌이고 있다(1997년 12월 17일).

록 하였다. 한편 젊은 국회의원들과 연예인을 중심으로 5개 팀의 '새물결유세단'을 구성하여 젊은층과 부동층의 지지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유권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행주치마유세단' 등 보조유세단을 구성하여 지지유세 활동에 활용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대중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특히 TV토론회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선거전에서 내용상으로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국정수행능력을 부각시키고, 이미지상으로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진솔하고 겸손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TV합동토론, 후보 및 찬조연설 준비를 전담하는 TV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김대중 후보의 약속번복과 이인제 후보의 경선불복의 이미지를 부가시켜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대통령'으로서의 이회창 후보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전략하에 홍보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매체광고에도 집중하였다.

3) 선거공약

한나라당은 ‘돈 안 드는 선거, 자율경제’ 라는 기본적인 국정운영 틀 속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개발하여 1997년 12월 3일 5개 분야 150개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공약은 중앙공약·지방공약·생활공약으로 구분되었고, 이 가운데 중앙공약은 150개의 실천약속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공약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구성되었다. 한편 생활 공약은 국민들의 민원·숙원사업의 종합적 해결차원에서 5개 분야, 97개 과제 해결방안으로 구성되었다.

한나라당은 정치 분야에 있어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단절하여 깨끗한 정치구현을 강조하였으며, 인사청문회제도 실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경제에 대한 정치개입 최소화로 정경유착 근절을 공약하였다. 또한 책임국무총리제, 국회의장과 원내총무 당내 경선,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개혁을 위한 공약으로는 21세기 첨단 정부기획단을 설치하여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조직 조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3단계 행정구조 개편,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약속하였고, 4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구축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외교 기본 축을 견지하는 한편 SOFA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6·25 국군포로의 송환 추진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집권 1년 이내에 부실채권을 없애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것,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진입 자유화 등을 공약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과 5년간 20조 원을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기업 10만 개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3,000억 원을 조성

할 것과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공장용지 등을 지원하여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과학·기술·통신분야에서는 도별로 1개 이상의 과학산업단지 건설, 연구개발예산 2002년까지 총 예산의 5% 이상 확대, 임기 내에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 원 확충, 위성방송시대의 본격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교통과 관련하여 2002년까지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매년 10만 호씩 50만 호의 공동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와 함께 10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 확보, 2000년까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 정착 등을 주요 건설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5년까지 경부고속철도 개통, 부산과 광양 등 2개의 항구체제 중점 개발, 5개 대도시권 광역 전철망 확충,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장애인 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을 공약하였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1999년 이후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추진, 농업 및 농촌 발전 기본법 제정, 벤처농업 자금설치, 농수산물 유통 3~4단계로 축소, 융자기간 등 상황조건 개선과 이자율 인하로 순수부채 경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농어민 생활개선을 위해 2003년까지 농촌주택 50만 호 신·개축, 1998년 10월부터 농어촌 의료보험 단계적 통합, 농어촌 자녀 대학 특례입학 5%로 확대 등도 공약하였다.

교육과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특성화 고교 설립 확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대학의 학생선발권 완전 일임,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공약하였고,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 문화예산 1% 증액, 2003년까지 1997년의 20배인 1조 원의 문예기금 조성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교육법 제정과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천연가스차 보급, 지속적인 댐 건설, 수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약속하였다.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반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적 확대 등을 공약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5년간 3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여성전용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용하여 여성 취업을 확대하고 여학생의 ROTC

장교 임관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구 국회의원 30%와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한나라당 제15대 대통령선거 주요공약

| 주요공약 | 세부공약 |
|---------------------------------------|--|
| 국민대통합의 열린 정치,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 지방화 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정치, 정경유착, 지역할거주의 등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정치제도와 관행의 타파를 통한 정치 구조개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대통합의 열린 정치를 실현 ○ 정부기능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21세기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건설 ○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화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구조개혁으로 국민대통합의 열린 정치 실현 - 행정개혁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 구현 - 바람직한 지방화의 정착 |
| 튼튼한 경제, 함께하는 경제, 바른 경제 구현으로 선진경제대국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시장경제의 틀」 구축으로 선진경제대국의 기틀 마련 ○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파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선진경제대국 실현의 관건이아말로 과학기술 창달에 있다는 인식하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총력을 경주 ○ 튼튼한 국민경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육성으로 경제체질 강화 ○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의 살기 좋은 복지농어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 있는 선진경제의 건설 -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물류부문의 선진화 - 생산적인 국토개발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혁파 달성 - 과학기술 창달과 정보화 추진 -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체질 강화 -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
|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사협동의 일터를 마련 ○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성장의 그늘에 묻혀지는 소외계층의 완전 해소 추구 ○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확충하고, 전 국민의 사회보험화로 온 국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 ○ 보훈정신을 드높여 오늘의 한국이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국가유공자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 건설 ○ 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 제대로 대접받도록 여성의 이상과 역할을 높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충해 나가는 평등사회 건설 ○ 각종 폭력과 대형사고·재난으로부터 해방된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사회 건설 - 온 국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 노인의 편안한 삶을 보장 - 장애인의 온전한 삶을 보장 - 국가유공자가 존중되는 사회 건설 -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는 선진사회 달성 - 각종 폭력과 재난으로부터 해방된 안전한 국민생활 |

| | |
|--------------------------------------|---|
| <p>인간중심의 교육개혁과 주체성 있는 민족문화 창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근본으로 돌아가는 인간중심의 교육개혁과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집중 ○ 우리민족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과 찬란한 민족전통문화를 꽃피워 「세계 속의 한국화」 달성 ○ 선진체육 복지국가의 실현과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진대국 국민에 걸맞는 선진시민 의식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선진국 건설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 품위있고 주체성있는 민족문화의 창달 - 선진체육 복지국가의 실현 -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 <p>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린한국」 건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를 선택적 과제가 아닌 인류생존을 위한 절대적 명제로 재인식, 21세기 환경시대에 적극 대비 ○ 훼손되는 국토의 보존,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를 확보하는 문제를 모든 일에 우선하여 근원적으로 해결 ○ 산업 및 기업정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 구축으로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부응하는 환경정책 추진 -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풍부한 맑은 물 공급 - 스모그 없는 푸른 하늘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종합관리체제 구축 -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국토공간 조성 - 전자파 피해 감소 방안 강구 |
| <p>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 기반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이 자손대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임을 재인식, 정예강군 육성으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자립을 달성 ○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는 선진외교 추진과 주변강대국 및 북한과의 선진협력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머지않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 외교역량 강화로 활발한 선진외교 전개 -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통일 선진한국 실현 |

4) 선거결과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유효투표의 38.7%인 993만 5,718표를 득표하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39만여 표차로 패배하여 집권에 실패하였다. 선거 전 이회창 후보는 대세론을 형성하며 여론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다. 그러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파문으로 급락한 지지율은 선거가 종결될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의 전 지역과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은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역

적 기반을 두고 있었던 영남에서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여 7%포인트, 50만표 정도 적게 득표하였다. 이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한 후 탈당하여 국민신당 후보자로 출마한 이인제 후보가 한나라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지역에서 30%에 가까이 득표하면서 한나라당 지지표를 분산시킨 영향이 컸다. 또한 당내 계파 간 갈등과 IMF체제의 경제위기 또한 한나라당의 집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5대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1997년 12월 19일).

결국 집권여당의 맥을 이어오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대통령선거 패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²⁸⁾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은 선거 후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과 야당으로서의 체질개선 논란 등이 일면서 내부혼란을 겪어야 했다.

바. 기타정당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신당 이외에 건설국민승리21(권영길), 공화당(허경영), 바른나라정치연합(김한식), 통일한국당(신정일) 등 4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4개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선거결과 권영길 후보 30만 6,026표(1.2%), 신정일 후보 6만

28)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한 정당이었고 선거 전 신한국당 말기에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탈당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집권여당이 아니었다.

1,056표, 김항식 후보 4만 8,717표, 그리고 허경영 후보 3만 9,055표를 얻어 모두 합해도 전체 유효투표 중 2% 미만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다.

1) 건설국민승리21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재야·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민후보를 추대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 창당한 정치결사체로, 창당전 10월 26일 창당대회에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건설국민승리21은 재벌해체, 정리해고 철폐,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증액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규모 교수유세단을 구성하고 경제실정 책임자 처벌과 고용안정보장 등을 촉구하며 득표활동을 벌였으며 진보적 국민정당 건설을 약속했다.

2) 공화당

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조선왕조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신세종대왕 시대’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제도 폐지와 직능단체장이 자동으로 직능국회의원이 되는 의회제도 실현, 핵무기 보유, 대통령사면제 폐지 그리고 실업자취업 국가책임제 실현 등 10대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소규모 거리유세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3) 바른나라정치연합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후보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 더불어 사는 공동체교육, 건전한 선진경제 체질 확립 등을 정책의 기본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흡수통일 배제와 탈북자 수용방안 마련, 방송·신문 등 언론독립,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경제주체 갈등구조 해소, 그리고 교육환경 평가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교육제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종 유세를 통해 ‘사랑의 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4) 통일한국당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는 ‘한얼교’ 창시자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 ‘한얼정신 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신정일 후보는 민족정기 말살과 정치인·경제인 등 지도층의 진실성 부족이 경제과탄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집권하게 되면 학교교육을 순수한 우리 것으로 고칠 것임을 공약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2절 원내활동

1. 1993년도

1993년 국회는 제160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제165회 정기국회까지 모두 여섯 차례 소집되었다. 2월 9일 개최된 1993년 첫 임시국회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용공음해 논란 속에 새 정부의 총리임명동의안이 승인되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4월 26일 개최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정국에 따른 재산공개 파문 속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7월 2일 개최된 제162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2·12 군사쿠데타를 비롯하여 5·6 공화국 비리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8월 16일 개최된 제163회 임시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의해 발효된 금융실명제를 승인하였다. 이어 9월 10일에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개최하여 국정조사와 정책감사, 다수의 민생법안 처리 등 생산적인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의안에 대한 여야협상의 난항과 예산안 등 일부 의안에 대한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 및 야당의 물리적 저지 등 구태가 재현되기도 하였다.

가. 용공음해 논란과 여당 단독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제160회)

1993년 2월 9일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민생현안 심의, 각종 안건심사, 대정부 질문 및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해 여야합의로 소집되었다. 애초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다. 민주자유당은 물리갈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취임식 이후 2월말 경 국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용공음해문제, 대통령선거자금

편파수사 문제를 비롯하여 민생문제 등 현안 처리를 이유로 임시국회의 조기소집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여야는 새해부터 임시국회 개최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는 1월 25일 수석부총무회담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임시국회 조기소집을 수용하는 대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의 최대 관건이었던 총리 임명동의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수용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였다.

임시국회 개최 초반 여야는 큰 대립 없이 합의된 일정대로 국회를 운영해 갔다. 그러나 2월 16일 이후 일정과 의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14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있었던 김대중 후보에 대한 김영삼 후보의 색깔론 주장과 관련하여 용공음해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야 갈등이 표출되었다. 민주당은 용공음해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총리인준과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연이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여야는 본회의가 유회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2월 23일 총무회담을 열고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하였다. 그러나 김종필 총재는 2월 24일 기자회견 대신 ‘티타임’ 형식을 통하여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제 정계를 떠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있을 리 만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상대 당인 민주당에도 추호도 어떤 음해를 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박지원 대변인의 성명을 통하여 “우리는 당초 김영삼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용공음해에 대한 사과를 들으려 했으나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종필 대표가 대신하는 데까지 양해했다. (……) 그러나 김종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해명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자유당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위약하였다며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국회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국 1월 25일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2월 27일 제160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불참하였다. 그 결과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자유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용공음해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는 4월 제161회 임시국회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용공음해 관련 논쟁은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필 총재가 유감을 표명하고서야 일단락되었다.

나. 재산공개 파문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제161회)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공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 큰 파문을 야기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경우에는 비리와 투기에 연루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고, 탈당하는 의원도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또한 여론에 밀려 재산을 공개하는 한편 당 내부적으로 징계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재산공개 과정에서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은폐, 조작, 축소되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산공개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언적인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선언적 재산공개보다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공개로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동화은행사건, 슬롯머신사건 등 정치권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협상을 시작하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은 5월 11일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내에 설치된 제1심의를반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자유당 김종위·강신옥·백남치·김영일 의원, 민주당 박상천·홍사덕·정균환 의원, 무소속 김해석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제1심

의반은 민주자유당 개정안, 민주당 개정안과 그 이외 청원사항을 토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회에 걸쳐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과 협상을 진행하며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사생활보호와 자유권, 은닉·축소·과대 신고 및 공개거부에 대한 징계 등 처벌규정, 강제 수위의 문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구성비율과 그에 따른 국회자율권 침해문제 등이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993년 5월 20일 마련된 개정안을 전원합의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 한번 쟁점사항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자유당 유수호 의원은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정하고 벌칙규정까지 두어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장을 침해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벌칙을 두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만일 벌칙을 두더라도 재산등록거부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침으로 전자는 피선거권 박탈 또는 과태료, 후자는 계도 내지는 권고로 처벌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공직자 윤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윤리자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는 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특별 권력관계를 스스로 수락하고 들어온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처벌을 안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과반수 조항에 대해 민주자유당 박희태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율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인사 4인, 내부인사 5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1980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초 구성된 이래로 13년이 지났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고려

할 때 외부위원 우위의 구성비율 적용은 국회라고 예외로 할 수 없으며 법적인 판단에서도 자율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야 의원 간 토론을 거친 후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중 전문위원의 일부 수정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이어 1993년 5월 20일 제161회 임시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였다.

다. 5·6 공화국 비리 관련 국정조사(제162~165회)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행된 개혁정국 속에 여야는 개혁추진 방법에 있어 상충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해 왔다. 정부여당은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과거청산을 진정한 개혁의 과제로 규정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혹에 쌓인 12·12 사건과 5·6 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곡사업 및 평화의 댐 건설사업 관련 비리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의 여론이 높아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관련기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야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를 정략적인 정치공세라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속의원 6명과 소속의원 96명 등 102명의 서명을 받아 7월 12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국정조사 절대불가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7월 14일 내부의견 조정을 통해 문민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수용한다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다만 국정감사 수용 조건으로 야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시 명시한 특별위원회 구성 대신에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민주당도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주자유당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1) 12·12 군사쿠데타 및 울곡비리 국정조사

12·12 군사쿠데타 및 울곡사업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간 합의에 따라 1993년 7월 16일 국회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울곡사업 국정조사위원회’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7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인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조사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사범위 중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을 노출하였다.

우선 조사계획서의 명명에 있어서 ‘12·12 군사쿠데타’라는 용어를 두고 대립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쿠데타라고 명명하는 것은 12·12 사건을 군사쿠데타라고 앞서 정의하고 조사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12·12 사건’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사쿠데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고 맞서 대립하였다. 이에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하여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합의조정한 이후 8월 27일 5차 소위원회에서 총무회담의 내용과 민주당의 출석요구 대상에 대한 협의조정을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합의 내용 중 최대 쟁점인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울곡사업 관련대상은 증인 23인, 참고인 20인, 12·12 사건 관련대상은 증인 25인, 참고인 10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전체를 단일의 조사주체로 하고 조사순서는 울곡사업, 12·12 사건 순으로하기로 결정되었다.

1993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국방위원회에서 실시된 울곡사업 및 12·12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9월 1일 3차 회의를 통해 울곡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보고받으며 진행되었다. 1993년 9월 2일에는 1993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국방부와

각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한 문서를 두고 감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율곡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후 국정조사 전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여 보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조사 일정상 KFP(Korea Fighter Program)사업에 대한 조사가 9월 6일 실시하기로 잡혀 있어 관련자료 일체를 제시하지 않으면 문서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정회를 통한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KFP사업 조사과정에 대한 모든 서류를 공개하기는 어렵겠으나 문서검증을 하는 동안 위원들의 조사에 협조하는 뜻에서 감사원에 개별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측에서 제출한 율곡사업 관련자료는 감사원 측에서 문건사실을 확인해 주는 한편 공개석상을 통하여 문건을 위원들에게 보여주되 검증문건의 대부분이 비밀문건에 속하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993년 9월 3일에는 국방부의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청취하였다. 한편 권영해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설위원회 국정조사 보고 관계로 9월 6일 예정된 율곡사업 관련 증인신문 시 권영해 장관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양해되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율곡사업 관련 94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였다. 1993년 9월 6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훈·이종구 두 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별적인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문 종료 후 민주당 권노갑 의원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상규명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요청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여야는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율곡사업 관련 증인출석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나머지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향후 국정조사 일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회의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율곡사업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중단된 국정조사는 1993년 9월 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국정조사 재개를 합의하면서 9월 9일부터 속개되었다. 여야간 합의내용은 율곡사업에 대한 국정



▲ 12·12 사건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정승화, 장태완, 김진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있다(1993년 9월 9일).

조사는 이번 국정조사기간에는 계속하지 아니하고 미진한 부분은 국정감사 시 보충하여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와 일정은 추후 여야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12·12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애초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여야는 9월 9일 12·12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개하며 국정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12·12 국정조사 또한 순탄하지 못하였다.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허삼수 등 증인들의 증언태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지금까지의 증인신문 결과로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최규하·노태우·전두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밝힐 수 있다며 3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에 동의하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고, 결국 여야는 국정조사를 정지하고 협의에 나섰다. 협의결과 여야는 승인된 국정조사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증인출석요구 동의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당이 제의한 12·12 사건에 관하여 미진

한 부분을 국정감사 시에 계속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 맡기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공식적인 국정조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증인 출석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이견 조정은 이루지지 못하였고, 결국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2) 평화의 댐 건설 진상조사

평화의 댐 건설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채택,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안기부차장, 이규효 전 건설부 장관 등 8명의 증인을 포함한 평화의 댐 관련 인사 20여 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민주자유당은 이미 제162회 임시국회(7. 2~12)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증인채택 및 조사특위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였다. 또한 증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쟁점 사항에 대하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7월 20일 국정조사계획서작성 소위원회 활동시한이나 전직 대통령의 조사여부 등 조사방법과 대상에 관한 논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일단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차례 개최하였다. 소위원회를 통한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에 대해 무난하게 합의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에 있어서도 감사원, 안기부, 국방부,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와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의견대립이 표출되

기 시작하였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가 거론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두 전직대통령을 증인 명단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를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은 한 달 이상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정조사 지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하여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친 후 8월 26일야 소위원회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²⁹⁾

조사기간은 1993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 간으로 확정되었으며, 증인은 장세동 등 10명을, 참고인으로는 성기수 등 2명을 채택하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증인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대신 국정조사계획서상 출석요구 대상 항목에 증인, 참고인 외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기관의 당시 기관장 및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그러나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 여야가 해석차이를 보이면서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 간 합의된 국정조사계획서는 8월 30일 제16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었고, 이로써 평화의 댐 건설 관련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위원회’는 8월 30일 문서검증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문서검증반을 구성하여 8월 31일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건설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문서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 9월 1일에는 평화의 댐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고,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감사원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였다.

29)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화의 댐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8월 26일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해명서를 통해 당시 계산 결과 화력발전소에 비해 수력발전 단가가 3~4배 높았다는 점과 댐 건설로 수몰되는 인근 농경지로 인해 22만 톤의 미곡생산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금강산댐을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용이 아닌 수공용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댐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정보 보고를 토대로 대통령인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대응댐 건설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의원들이 건설부에서 평화의담 건설의혹에 관한 정부자료를 조사하고 있다(1998년 8월 31일).

조사위원회의 질의는 금강산댐에 대하여 수공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추궁하는데 집중되었고,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평화의 담 건설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모금의 배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국방부의 질의에서는 금강산댐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게 된 근거와 평화의 담 건설사업에서 국방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감사원의 보고에서는 평화의 담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한 정보가 과장된 사실, 평화의 담 건설을 안기부가 주도한 점, 댐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이 강제된 사실,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조치가 있었던 점, 그리고 그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공사의 진행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이 지적되거나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회답의 경우 “과악해서 답변하겠다”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 채택과 금강산 댐 현장방문을 주장하였다. 결국 여야는 간사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원내총무회답에 일임하였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는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차관, 평화

의 댐 건설 성급 모금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검증·현장검증, 관련부처 보고 및 질의 답변에서 드러난 사실을 일부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관련부처 업무보고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인 평화의 댐 건설 결정의 적절성과 배후의 주도자 그리고 의도한 목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조사기간 중반에 평화의 댐 건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집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차례의 원내총무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조사기간이 만료되면서 국정조사는 종결되었다. 이후 개최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는 관련 사안에 대해 대립상황을 지속하였고, 결국 국정조사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금강산댐 건설 진상조사는 종결되었다.



▲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조사에서 평화의 댐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여 선서하고 있다(1993년 9월 7일).

라. 금융실명제 승인(제163~165회)

1993년 5월 20일 민주당은 김원기 의원 외 94명의 명의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이미 1983년 7월 제정되었으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시기가 연기되면서 실제 금융실명제는 실

시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1993년 3월 재산공개 파동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재산의 타인 명의 은닉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재산공개를 위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계속하여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하고 있다(1993년 8월 12).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162회 임시국회가 개최된 이후 7월 8일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하였고, 이로써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국회승인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여야는 합의를 통하여 1993년 8월 16일 5일간의 회기로 제163회 임시국회

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국회에서 8월 16일 국무총리로부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8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재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효 이후 각 정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대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재무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 대책 마련이 중점 거론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자유당은 정부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까다로운 지원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세 상공인들의 세 부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면세점 상한선을 대폭 올리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방안, 증권시장에서의 비실명자금 실명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민주당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 진성어음의 100% 할인, 시한 연장 등 부도유예제도 도입, 중소기업공제기금 긴급 확충,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와 기금 기본재산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실시 시기, 위헌 가능성 여부, 고액거래 국세청 통보 기간을 실명 전환기간 만료일로 한정할 점,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악용한 자금의 해외도피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긴급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명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못하고 증권시장 및 자본시장 붕괴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과세 일정을 앞당기며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자율화 문제점 등 전반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에 ‘경제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문제

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재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8월 25일 재무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1993년 8월 18일 재무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의결한 데 이어 8월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승인하였다.

마.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제165회)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은 「국가안전기획부법」(이하 안기부법)을 개혁대상 악법1호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작업에 나섰다. 안기부법은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감독의 권한을 안기부에 부여하고 있었다. 안기부는 이 법을 근거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조정과 보안감사를 실시해 왔고, 이로 인해 ‘정부 위에 군림하는 정부’라고 비판받아 왔다. 또한 안기부의 정치개입과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고 국회의 안기부 예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하여 안기부는 막강한 권한과 방대한 예산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야권은 안기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안기부가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기부법 등 쟁점 법률의 개정을 위해 여야는 1993년 2월 23일 제160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이하 정치관계법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산공개 파동과 사정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관계법특위 구성이 지연되었고, 5월 10일에 이르러서야 1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정치관계법특위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당은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선정한 심의대상 10개 법률 중 안기부법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5월 12일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청와대·안기부와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당보다 5개월여 뒤늦은 10월 28일에서야 안기부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의 핵심은 안기부의 수사권 완전 폐지, 안기부 예산의 완전 공개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의 입장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안기부가 행하는 포괄적인 수사권을 대공수사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안기부의 기본입장은 과거 월권행위가 법 자체보다 운영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수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9월 입법예고 된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은 민주자유당의 의견을 다소 반영하고 있었으나 민주당의 개정안과는 상당부분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제165회 정기국회가 개최된 이후 정치관계법특위는 국정조사 및 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으로 인하여 두 달 여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기부법 협상은 지연되었고, 11월 4일 정치관계법특위가 재개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월 28일 제안된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 안기부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고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현행법보다 약화시킨 새로운 반민주 악법이며, 오히려 안기부의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세우며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안기부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과행 양상을 보였다.

국회가 정상화된 후에도 민주당은 안기부법 개정 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와 1994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김덕 안기부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정보조정권 폐지를 포함한 안기부법 개정과 9개 부처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은닉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목표로 예결위 초반부터 안기부 관련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세출예산 요구를 총액으로 하며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예비비에 은닉할 수 있도록 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자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덕 안기부장은 국가 기밀

유지 목적에서, 그리고 외국의 운영사례에 비추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기부 예산을 총액으로 하되 산출내역 등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 실질심사하고 그 내역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할 것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예비비 명목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자료를 정보위원회에 내도록 하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더라도 국가기밀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정보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로 신설하고 여기에서 안기부 예산 및 정보수집·수사활동을 심의·감독할 수 있도록 안기부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안기부 예산·업무 통제권 문제는 국회가 실질적 통제권을 갖도록 안기부법에 근거조항을 두어 국회법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정부안에 안기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공개 조항과 국가기밀에 대한 자료제출·증언거부 조항 등이 있는 만큼 이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국회법이 아닌 안기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에 서명·날인한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자유당을 압박하였다. 결국 여야는 안기부가 갖고 있던 정보조정권을 폐지하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두어 안기부 예산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에 있어 민주당은 안기부 예산의 실질적 심사를 가로막고 있는 예산회계특례법을 완전 폐지하거나 적어도 정보위원회는 예외로 한다는 식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안기부법 개정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자유당과 안기부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간첩수사 등에 대한 안기부의 풍부

한 경험·기술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였다. 대신 안기부 직원의 직무수행 중 범죄에 대한 수사만 안기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수사권 폐지 문제로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 중 핵심인 수사권 폐지만은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혁입법의 진전이 없는 한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고, 민주자유당은 예산안과 쟁점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립 상황 속에 여야는 수사권 축소 범위에 대한 양보수준을 두고 당론을 조율해 가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수사권 축소문제와 관련하여 안기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민주당 또한 안기부 입장이 반영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자유당은 예산안에 대한 단독 강행처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되었다.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의 본회의 강행처리에 대비해 저지조를 편성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저항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하여 협상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12월 3일 이만섭 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 협상에서도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였다.

여야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야는 총무회담과 정치관계법특위의 양당 간사 접촉을 동시에 벌이는 계속된 협상 끝에 총무회담에서 안기부법개정안 등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국회는 파행 4일 만에 정상화 되었다. 합의 결과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재개된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여야 간사는 협상을 통해 민주당 안에서 일부 내용을 양보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수사권 축소 문제는 기존의 안기부 수사권 중 균형법 상의 이적죄와 군사기밀누설죄를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상 고무죄

와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랜 공방 끝에 정치관계법특위 전체의견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2. 1994년도

1994년에는 2월 15일 개최된 제166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10일 개최된 정기국회 그리고 12월 19일 소집된 제171회 임시국회까지 모두 6차례의 국회가 소집되었다. 166회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6인의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 4월 18일 개최된 제167회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노동위원들에 대한 돈봉투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으며, 상무대공사대금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해 제168회 임시국회가 5월 21일 단 하루 회기로 열렸다. 6월 25일 개최된 제169회 임시국회에서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9월 10일에는 제170회 정기국회가 개최되었으나 검찰의 12·12 관계자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투쟁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었다. 정기국회 종반 야당이 등원한 후에도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는 12월 19일 제171회 임시국회를 열고 논란 속에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동의안을 승인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가. 6인 대표회의와 정치관계법 개정(제166회)

1993년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위해 운영된 정치관계법특위는 개정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1993년 말 활동 시한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1994년 1월 19일 총무회담을 통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정치관계법특위를 재구성하고 1994년 6월 30일까지 개정협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치관

계법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각 3인씩 협상대표를 구성하여 우선 협상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월 24일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6인 협상대표를 선임하고 사전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은 성격상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고 쟁점사항이 많아 순탄하지 못하였다. 우선 6인 협상대표회의에 대한 입장부타가 상충되었다. 민주자유당은 2월 15일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특위가 구성되더라도 6인회담의 합의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협상력을 갖는 회의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합의는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구성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정기탁금제 폐지 여부와 정치자금기부증서(일명 쿠폰)에 의한 후원금 모금 문제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정기탁금제가 여당에만 정치자금이 모두 흘러가는 부작용을 빚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기탁 당시 국고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자유가 있으며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에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모순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만 야당에도 어느 정도 정치자금이 들어온다는 현실론을 바탕으로 쿠폰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정치인이 장사꾼처럼 쿠폰을 들고 다니며 파는 것은 정치인의 품위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고, 심지어 일반 상품권처럼 쿠폰을 할인한 금액으로 맞바꾸는 현상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이밖에 개인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놓고 민주당은 폐지 입장을, 민주자유당은 5억원 또는 소득의 5%를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국고보조금 계상기준을 두고도 민주당은 유권자 1인당 800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600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다.



▲ 여야6인협상대표들이 정치관계법을 심의하고 있다(1994년 1월 26일).

계속된 검토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6인 협상대표회의는 전체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월 15일 본회의에서 ‘정치관계심의법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관계법 심사를 정치관계법특위로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특위가 구성된 후에도 6인 협상대표는 심의 및 협상활동을 그대로 진행하며,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벌여나갔다.

막바지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³⁰⁾ 문제였다. 여야는 재정신청제도를 중심으로 정당투표제 도입과 지정기탁금제 폐지, 공소시효 완성기간 등 미합의 쟁점과 연계한 조건부 제의 및 역제의, 조건부 철회 등을 거듭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우선 재정신청권 수용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을 양보할 테니 재정신청권을 수용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공소시효를 받아 줄 테니 재정신청권을 포기하라고 역제의를하며 거절하였다. 또한 정당투표제 도입과 지정기탁금제 폐지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재정신청제도를 신설하는 조건부 제의에서는 재정신청권의 주체와 적용범위(대상범죄)의 제한 문제로 협상에 어려움 겪었다. 민주당은 선거범죄의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후보자, 정당)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자유당

30) 선거사범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하더라도 고발·고소인이 법원에 기소여부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

은 재정신청권의 남발 가능성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재정신청권 적용범위를 두고도 민주당이 먼저 20여개 죄목을 제시하였으나 민주자유당에서 거절하였다. 이후 임시국회 마감일 전일까지 협상을 거듭하여 11개 죄목까지 그 범위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제166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4일 늦은 밤까지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주체 및 범위와 함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등 정치관계법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여 대타협을 이루었다. 재정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재정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민주자유당이 양보하여 민주당 안대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이 재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그 범위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기부행위 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선거자유 방해죄 등 9개 죄목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였다. 재정신청제도와 연관된 공소시효는 민주당이 양보하여 선거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로 조정하였다.

또 다른 쟁점인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날짜를 놓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면서 본회의를 8시간이나 미루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자유당은 선거분위가 너무 일찍 불붙으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6월 22일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6월은 농번기여서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5월 10일 이전으로 당길 것을 요구하였다. 팽팽히 맞서던 선거일 협상은 결국 민주당이 날짜를 바꾼다는 명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6월 27일 실시하는 조정안을 민주자유당이 수용하면서 합의되었다. 최종적인 합의를 마친 여야는 3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였다.

나.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제166회)

국회노동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국정감사 시 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 사태³¹⁾에 대한 이 회사의 김택기 사장 외 2인의 국회증언 내용이 위증으로 드러나 관련자들

31) 한국자동차보험은 1993년 3월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조합탈퇴 강요와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징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고발조치는 이듬해 1994년 초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 위증자 고발조치가 지연되자 1994년 1월 25일 노동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말룡 의원은 언론을 통해 1993년 11월 12일 위증고발 대상이었던 한국자동차보험으로부터 돈 봉투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노동위원회 고발지연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말룡 의원은 “다른 의원은 다 받았는데 왜 김 의원만 거부하느냐”라는 한국자동차보험 측의 말을 공개하였고, 이는 국회노동위원회 의원들의 금품수수 문제로 연결되면서 ‘노동위원회 돈봉투 파문’으로 확산되었다.



▲ 한국자동차보험 노조원들이 국회노동위 뇌물공세와 노조파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1994년 1월 29일).

이에 국회노동위원회는 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말룡 의원의 경위 설명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 사장, 이창식 전무, 박장광 상무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노동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여야 그리고 한국자동차보험 측은 밤늦은 시간까지 돈 봉투 전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국자동차보험 측 관계

자는 한결같이 돈 봉투 전달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로비의 직접 대상자였던 김말룡 의원과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장광 상무의 증언이 완전히 상충되면서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한편 돈 봉투 전달의 진위여부와 함께 노동위원회에서는 김말룡 의원의 폭로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자유당 의원들과 노동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장석화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돈을 받았다’는 한국자동차보험 측의 발언을 김말룡 의원이 근거 없이 폭로하여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김말룡 의원은 박장광 상무의 말을 전했을 뿐이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석화 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김말룡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김말룡 의원은 국정감사 위증자 고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장석화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소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장석화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개인명의로 김말룡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였다.

김말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돈봉투 파문은 윤리특위로 옮겨졌다. 윤리특위는 1994년 1월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자료수집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하였다. 윤리특위의 전체회의 소집은 1991년 상공위원회 뇌물외유사건 후 깨끗한 정치구현을 목적으로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위는 제소자인 장석화 노동위원장에 이어 피제소자인 김말룡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진위를 가리는 신문을 벌였다. 장석화 위원장은 뚜렷한 물증 없이 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말룡 의원은 한국자동차보험 측의 위증과 불출석을 고발해야 할 장석화 위원장이 직무를 저버린 채, 로비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을 부인하였다. 당사자들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윤리특위는 2월 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택기, 이창식,

박수근(전 노총부위원장), 김정호(양평매운탕집 주인 아들)³²⁾, 박귀련(김말룡 의원 부인)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창식 전무는 1월 27일 노동위원회 신문에서와 달리 로비목적으로 1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각 당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입장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만으로 어려울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2월 3일 사건의 당사자였던 박장광 상무가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김말룡 의원에게 전달한 뒤 이틀 뒤 돌려받았다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뇌물제공 사실이 밝혀지자 돈 봉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국자동차보험 측의 위증 혐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던 민주자유당도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4일 국회 노동위원회를 열어 김태기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을 1993년 국정감사 시 위증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1월 27일 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한국자동차보험 측 관계자의 위증에 대한 고발문제는 노동위원회 전체 의원에 대한 의사타진이 없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2월 7일 검찰은 한국자동차보험 측이 고발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계획하였으며, 김말룡 의원 외 노동위원회 소속 다른 국회의원 2명과 서울지방노동청 간부 등에게 800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태기 사장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두 의원에 대해서는 로비사실만 밝혀내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여야는 2월 7일 또 다시 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돈 봉투 전달사실을 전면 부인한 김태기, 이창식, 박장광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들은 구속되었다.

돈 봉투 로비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 윤리특위는 2월 14일 전체

32) 김말룡 의원은 돈 봉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매운탕 집에서 박장광 상무를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말룡 의원 징계심사소위’를 구성하고 계속하여 조사를 이어갔다. 3월 3일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구속 중인 관련 인사에 대한 신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14일에는 김말룡 의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참한 장석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통해 진술을 받았다. 또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을 입수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한국자동차보험 측 관계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김말룡 의원 이외의 의원에 대한 로비시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 결과 윤리특위의 진상규명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2개월간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한 윤리특위는 5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한국자동차보험 측이 김말룡 의원에게 ‘다른 의원들은 다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이 말을 언론에 전한 것이 동료의원을 모독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윤리특위는 김말룡 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징계건도 자동폐기 되었다. 결국 국회 차원의 돈 봉투 로비사건 진상규명은 검찰의 수사결과 이외 더 이상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다. 상무대공사대금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제167~168회)

1994년 2월 25일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상무대 이전사업³³⁾의 시공업체인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이 제14대 대통령선거 직전 공사대금 중 40억원을 정부여당의 고위층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무대공사대금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조기현 회장은 민주정의당 중앙당후원회 회원이면서 대한불교신도인협회 회장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은 청와대, 정치권 및 국가기관, 심지어 불교계까지

33) 상무대 이전공사는 광주시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제병협동교육본부 등 군 교육기관을 전라남도 장성지역으로 이전하는 5,8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당시 공사기간을 1988년부터 1995년까지로 잡고 있었다.

과란을 일으키며 정치자금 관련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3월 7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며 국회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상무대비리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 소집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에 불응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상황은 4월 12일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급변하였다. 여당의 입장 변화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이 노태우 정부 때에 일어난 일로 김영삼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자체조사 결과와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UR) 파동 등으로 인한 수세국면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자유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여야는 1994년 4월 13일 총무회담을 열고 4월 15일 여야 공동명의로 '상무대 공사대금 중 일부의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사범위는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227억 원 중 정치자금 유입의혹이 있는 부분으로 하고, 조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20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여야는 1994년 4월 18일 제16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 할당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자유당은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민주자유당 3인, 민주당 2인 등 5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였다. 결국 여야는 협의를 통해 민주자유당 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여야는 또한 예금 수표추적 문제, 증인채택 문제 등에서도 의견차이를 보였다. 비자금 조성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던 민주당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해 수표추적의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

령'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자유당이 정치인 및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 동료 의원, 국방부 및 검찰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50명 정도의 증인채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수표추적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자유당이 법률해석상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계좌추적 불응 시 해당 금융기관을 여야 공동명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여 전·현직 대통령, 동료의원, 국방관계자, 검찰관계자 등을 제외한 30명의 증인을 채택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1994년 4월 22일 총리로 임명된 지 128일 만에 돌연 사임하고 이영덕 부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급부상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4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무대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 전에 이영덕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계획안을 처리하고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별도의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대립상황에서 민주자유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회는 파행으로 이어졌고 국정조사도 지연되었다.

국회 파행 속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으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청우종합건설 전 부사장의 진술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민주자유당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민주당과 애초 합의한 30명 이외에 1명도 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민주당 또한 정치인과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는 증언은 무의미하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여야 협상은 5일간의 대치상황이 지난 후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진전되었다. 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 중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자유당 내 5공화국 인

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및 증인채택에서 철회하는 대신 조사기간을 20일 더 늘려 40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민주자유당이 이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여야는 협상 결과 국정조사 진행 중에 진실규명을 위해서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참고인으로 즉각 채택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당안대로 하고, 조사기간은 애초 1차 합의한 20일에 10일을 추가하여 30일로 늘어났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1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하였고, 여야는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조사 일정에 따라 1994년 5월 23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문서검증 및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사는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 의혹규명이라는 조사목적에 충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관들은 한결같이 수사의 영향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내세우며 서류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판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목적이 명백히 다른데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재판서류 검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증인 불출석을 종용하거나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방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후 5월 28일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각이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 테두리 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해석 차이는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논란을 가져왔다. 6월 2일과 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자금 유입을 조사하기 위해 수표추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법 테두리를 명의인의 동의를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다. 그 결과 4개 은행이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계좌추적은 무산되고 말았다. 계좌추적의 무산은 여야 간 계좌추적권에 대한 법리논쟁을 야기하였고, 결국

관련법의 개정논의가 전개되었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개정 시기에 있어서는 민주자유당이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종료한 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법개정 이후 국정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상황 속에 민주당은 6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 위해 국정조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신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신문은 민주자유당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법개정 약속을 지킬 때까지 국정조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관계자 탄핵과 신문광고를 통한 비리 폭로, 고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해진 일정대로 단독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6월 18일 조사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단독으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상무대정치자금 수수의혹의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라.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제167회)

1993년 말 야권과 농민단체 등의 쌀시장 개방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93년 12월 15일 국회 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UR특위)를 구성하고 국회비준과 이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94년 초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대책 논의에 나설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연초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바쁠 뿐만 아니라 조급하게 따질 사안도 아니며 정부에도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임시국회 개최 요구를 반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94년 1월 11일 국회 UR특위 소속 7명의 국회의원과 농촌출신 의원 26명 등 33명으로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입개방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 국회 UR특위는 1월 20일 생산자단체 대표·정



▲ 민주당·통일국민당·새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UR재협상촉구 긴급 의원합동회의를 열고 있다(1994년 2월 5일).

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수·축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여는 한편, 2월 3일에는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차이는 쉽게 좁히지 못하였고, 2월 15일 개최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도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부는 3월 25일 농산물 분야 최종이행계획서를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야당은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이 농민들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으로 되었다고 반발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관계 장관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회 비준반대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날 이행계획서 최종수정안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열린 UR특위 간담회에도 불참하였다. 나아가 국회 UR특위의 탈퇴를 결의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해체와 별도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였다.

이처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4월 1일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명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저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장외집회를 준비하는 등 정부여당을 더욱 압박하였고, 결국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은 4월 6일 임명된 지 3개월 여 만에 사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회창 총리가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통한 우루과이라운드 비준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민주자유당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면서 여야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여야 대결상황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4월 11일 원내로 복귀하여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 되었다. 그 결과 4월 13일 여야는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UR특위를 재가동하여 협상경위, 이행계획서 제출경위 등과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현직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여야는 실시 주체와 출석 대상자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황인성 국무총리와 최양부 청와대 농수산수석 및 일부 외교관은 협상의 직접 당사자 또는 행정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대신 이경식 전 부총리, 허신행·김양배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 전·현직 관계자는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시키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UR협상에 관계된 전·현직 각료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 앞에 협상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간사회의를 통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UR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형식에 관계없이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협상의 여지를 찾아 개선해 보자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자는 민주자유당이 계속하여 대립하면서 합의도출은 실패로 끝났다. 결국 여야는 협상의 진전 없이 그동안 공청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UR특위 활동을 종료하였다.

다.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제169회)

여야는 효율적인 국회활동을 위하여 1993년 한 해 동안 여야의원 6인으로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15명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로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야는 개선위원회에 중진의원 5명을 참여시켜 이듬해 1994년 4월 14일 까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회제도개선위원회는 62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 국회의장에게 최종 제출하였다.



▲ 국회제도개선위원회(1994년 4월 11일).

이를 계기로 여야는 국회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협상에 착수하였다. 여야는 이후 2개월여 기간 국회운영을 효율화하고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갔다. 여야는 6월 중순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국회운영 상시화(국회 연간 기본운영 일정 수립), 대정부질문 시간 단축, 상임위원 겸임, 긴급 현안질의 제도, 그리고 날치기 파동을 없애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조

문을 일일이 심사하는 축조심의 및 독회제도 의무화 등을 주요 국회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활동 강화 방안으로 입법활동비 인상, 각 정부부처 담당 전문위원제 도입, 국회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중 예산제 도입, 법제실·예산심의실 신설 등을 포함한 50여 개 항목을 무난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0여 가지 쟁점분야에서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특히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인사청문회, 5분발언제, 정보위원회 신설 운영안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조정문제 등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다.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국회의원선거가 정당공천을 전제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의장의 당적이탈은 정치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통한 국회의 권위 확립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이탈은 당연하며, 정파간 이해대립으로 국회가 자주 교착상태에 빠지는 우리 국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하여서는 여야 모두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결심사권과 상충되고 중립성도 보장할 수 없으니 기존의 예산결산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충분히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모든 과정을 연중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에도 5분발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공감하였으나 의원 1인당 시간할당과 전체 발언시간 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하여도 민주당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은 인재난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추후 연구과제로 넘길 것을 주장하였다. 1993년 말 국가안전기획부법 합의개정에 따른 정보위원회 신설과 관

련해서는 정보위원 수와 처벌조항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보위원 수에서는 민주자유당이 7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자유당은 정보위원회에서 청취한 국가기밀 사항 유출에 대한 처벌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다른 법의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부 부처에 대응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을 폐지·분할·통합 등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제169회 임시국회 소집건과 미합의 사항에 대한 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위하여 1994년 6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회법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에 있어서는 상설화 대신 정기국회 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결산이 제출되는 매년 9월 2일에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5분 발언제도 도입 문제는 의원 1인 발언시간을 4분으로 줄이되 개의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였다. 또한 정보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상임위원회로 하되 그 소관사항을 안기부 소관사항과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 수는 12인(민자 7, 민주5)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비밀 누설시 형사적 처벌문제에 관하여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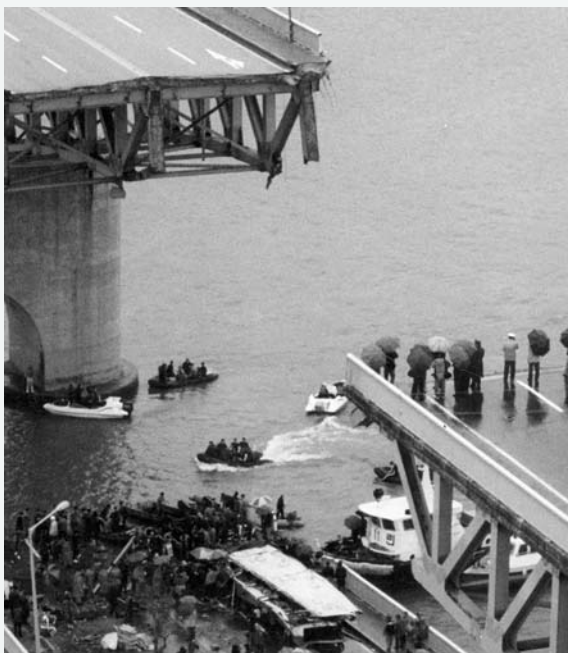
그 밖에 기존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과학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등을 분리 내지 폐지하고 행정경제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상임위원회를 17개로 재조정하였다.³⁴⁾ 그러나 국

34) 조정된 17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건설위원회, 정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였다.

회의장 당적이탈을 포함한 중립성 문제와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대하여 여야는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구·검토과제로 유보하였다. 합의된 ‘국회법 중 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규칙안’과 함께 1994년 6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제1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로 가결되었다.

바. 성수대교 붕괴사고 진상조사(제170회)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하여 32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부실한 설계, 잘못된 시공, 허술한 사후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는 비난 속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인 10월 12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강 교량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었음에도 한강교량의 안전에는 이상이



▲ 국회 성수대교 붕괴사고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1994년 10월 21일).

없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었던 탓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 여야는 국회의장의 제의로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속 12명의 의원으로 성수대교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야는 책임인책을 위한 내각 총사퇴, 서울시장

의 위증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대립하였다. 민주당은 사고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대형사고와 민심동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원종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위증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원종 서울시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우명규 경북도지사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임 서울시장 또한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도로과장이었다는 전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내부 논란을 거쳐 개각이 사고수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성수대교붕괴진상조사반에서도 여야는 조사반의 법적 성격과 활동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사반은 여야합의에 의해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구성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야는 그 성격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였다. 민주당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진상조사반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각각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진상조사반에 양 소위의 연석회의라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지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기존의 진상조사반을 놔두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중복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하였다. 또한 조사반의 활동범위에 있어서 성수대교에 국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활동내용에 있어서 시공분야 조사, 관리와 행정분야 조사, 법령체계의 맹점 조사,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상 문제점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는 쉽게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회 조사반 회의도 유회되었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조사반 회의 유회가 국회 공전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이영덕 국무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대신 성수대교붕괴 사건에 대하여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해임결의안과는 별도로 이원종 전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문제

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건설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야간의 대립상황 속에 성수대교붕괴진상조사반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여야 간사회회의가 10월 26일 이루어졌다. 간사회회의에서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반의 성격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활동과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을 근원적으로 추구하고 나갈 것을 국회의장과 원내총무를 비롯한 각 정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자유당이 팽팽히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조사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반은 사고발생 1주일만인 10월 27일 뚜렷한 활동 없이 해체되고 말았다. 이는 진상조사반이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기구로서 증인채택이나 신문 등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국정조사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2·12 관련자 검찰 불기소'라는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면서 성수대교와 관련한 야당의 대외공세는 잦아들었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사인 동아건설 관계자 등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등 사직당국의 몫으로 넘어갔다.

한편 여야는 이원중 전 서울시장 위증 고발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소집요구한 국회 건설위원회를 열고 '1994년도 국정감사 시 교량안전과 관련한 서울시장 위증규명의 건'을 논의하였다. 여야는 각각 5명의 의원으로 위증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 서울시장 국감에서의 위증문제 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11월 22일과 12월 12일 양일간 국정감사 속기록, 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시장의 답변 자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규명결과 보고서를 12월 13일 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조사단의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을 놓고 여야가 서로 공방만 하다 아무런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종결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주요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성수대교붕괴 사고에 대한 국회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사.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과 야당의 국회등원 거부투쟁(제170~171회)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신군부세력의 계획된 군사반란이었다”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군사반란이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달리 관련자 34명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소를 유예하였다. 야당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4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이러한 상충된 결정을 내리자 크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12·12 관련자 기소유예 결정은 170회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여야 공방의 핵심은 관련자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등 2가지였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발생일인 1979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반란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을 1994년 12월 12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직기간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년이 더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민주당은 12·12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기회를 원천봉쇄한 검찰권 남용임을 주장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기소유예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국익론을 내세우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2·12 관련자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되던 국회가 10월 31일 재개되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의 부당성을 추궁하였다. 민주당은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12·12 사건을 ‘쿠데타적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

나라 검찰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기소유에 사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규정은 역사적 평가이고 검찰은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었다며 기소유에 결정은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의견대립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는 정회를 거듭하였고, 이후 민주당이 국회등원 거부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또 다시 공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등원거부를 결정한 민주당은 전국순회 장외투쟁을 전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기소유에를 되돌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의 국회등원을 촉구하면서도 기소유에 처분은 검찰의 고유권한 범위 내의 결정으로 정치권이 무효화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국회등원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당이 등원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차이 속에 민주자유당은 결국 11월 25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또한 11월 26일 대전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여야대립은 과국으로 치달았다. 특히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등원과 등원거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11월 25일 12·12 관련자 기소를 요구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 민주당의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를 위한 대전역 국민궐기대회(1994년 11월 26일).

한편 의회해산과 조기국회의원선거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강경대응을 주도하였다.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28일 민주당은 시한부 등원거부로 대응방향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민주당은 12월 12일 이후 등원할 것이며, 다만 등원 전 민주자유당이 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안 등 주요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조기 등원하여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도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12월 2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3일 부천에서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를 위한 2차 국민궐기대회'를 열고 12·12 관련자 재판회부와 함께 민주자유당이 단독 처리한 새해 예산안의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부천 집회 이후 민주당은 주요 국가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월 5일 국회등원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여야대립도 원내로 옮겨오게 되었다.

원내로 들어온 민주당은 12월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12 관련 헌법소원 처리 지연 사유를 질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소환을 주장하며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12월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피의자를 기소유예 할 경우 엄중훈계 및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훈계 여부와 서약서를 받았는지를 질의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추궁하였다. 또한 12월 15일에는 검찰총수로서 기소유예를 남용하고 수사 미진을 용인·지휘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등원 이후 민주당의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원내투쟁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다. 우선 민주당 내부적으로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갈등이 양산되었고, 더불어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경쟁이 시작

되면서 응집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 내에서도 WTO비준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12·12 관련자 기소유예 문제가 최고의 핵심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민주자유당의 반대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부결 처리되었고, 이후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을 둘러싼 여야간 원내 논쟁은 명확한 결론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12·12 군사반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거듭된 평의 끝에 해를 넘긴 1995년 1월 20일에야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2·12 군사반란 관련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 형법상 반란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임기간인 7년 5개월 24일간 정지돼 2002년 4월 4일에 완성된다”며 반란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내란죄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이미 1994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검찰의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12·12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인정으로 사실상 일단락 되었다.

아. WTO가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제171회)

검찰의 12·12 관련자 기소유예 발표와 민주당의 등원거부 및 장외투쟁으로 장기간 공전되던 제170회 정기국회가 12월 5일 민주당의 등원으로 정상화된 후 국회 최대 현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비준동의안’ (이하 WTO가입비준동의안)과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처리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 지역 3개국 순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이후 세계화 추진을 주창하면서 이에 걸맞은 정부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WTO가입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쟁점 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WTO가입비준은 국내산업 중 특히 농업부문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입비준동의에 앞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WTO이행특별법안)’ 제정 등 4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민주자유당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줄속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당론을 결정하였다.

두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는 12월 7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WTO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였다. WTO가입비준과 관련하여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모두 WTO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입비준동의안 처리여부를 둘러싼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랐다.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WTO이행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가입비준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국익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혀 양당의 주장이 상충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WTO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견차이로 인하여 여야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8일 민주자유당은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민주당이 제출한 WTO이행특별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를 표명하였다. 또한 여야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9일까지로 예정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의를 15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장변화에 따라 12월 9일 재개된 외무통일위원회 대체토론에서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4개 전제조건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고 UR협정내용과 상치되지 않는 한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내법이 UR협정보다 우선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각 정당의 입장변화로 여야는 외무통일위원회에서 5인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당이 발의한 WTO이행특별법안 심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소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법을 제정해 WTO가입비준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어 12월 10과 11일 계속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는 15개 특별법 조항 중 10개항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국내법 우선 조항과 농어민 보호대책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였다. 북한과의 민족내부거래, 국내농업 보호조치, 협정탈퇴 등 3개항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절대 양보가 불가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실효성 여부를 이유로 3개항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의견대립으로 양당간 갈등이 또다시 증폭되면서 민주자유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WTO가입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고, 여야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여야 대립상황은 민주당이 또 다른 쟁점의안이었던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면서 전환되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이듬해 1995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론을 변경하여 정기국회 후 12월 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연내 처리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양당은 연말 임시국회 소집제의를 매개로 쟁점의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였고, 결국 12월 13일 정기국회 회기 내 WTO가입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12월 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여야합의에 따라 외무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같은 날 협상을 재개하여 15개 항의 특별법안을 완전 타결하고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외무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TO가입비준동의안 및 특별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못하였다. 최종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이 농어촌지원 7개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자유당은 12월 15일 오전 외무통일위

원회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WTO가입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고 실력저지에 나섰고, 그 결과 외무통일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또다시 총무회담을 통한 협상에 나섰다.

협상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12월 19일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정기국회 예산안 단독처리 시 같이 처리되었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환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관련 조항을 재개정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농어촌지원 7개항에 대해 양보하여 1995년 첫 임시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양당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무통일위원회는 WTO가입비준동의안을 표결로,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은 교차투표(cross-voting)를 실시하여 6명의 의원 중 3명만이 찬성하였다.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된 특별법 수정안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원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 문제로 인정하여 협정에 의한 국가간 거래로 보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미국과의 쌍무협상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후속협상으로 변경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농어촌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12조 국내지원 정책, 13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요조절 사업의 지원 등 기타 조항으로 흡수하였다. 12조 1항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 지불’ 조항은 WTO 협정 중 금지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3조 국내법이 WTO협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민주자유당이 위헌논란을 제기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3조에 대해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후 표결을 통해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민

주당 일부 의원들은 제3조 삭제에 대해 반대하였고, 결국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처리 유보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었다. 나아가 제3조 삭제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은 내부갈등을 야기하였고, 이후 본회의 처리에 있어서도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12월 16일 이루어진 WTO가입 비준동의안과 협정이행특별법안 처리에 있어 민주당은 농촌지원대책 미비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당론을 결정하였고, 본회의 찬반토론을 통해서도 특별법 제3조 삭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내 갈등으로 민주당 의원 중 40여명이 본회의에 불참하였다. 결국 WTO가입비준동의안과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표결처리되어 가결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표결에서는 11명만이 반대하였고 무려 31명이 기권하였다.



▲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이 WTO가입비준 동의안을 표결하고 있다(1994년 12월 16일).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치고 정기국회가 폐회된 이후 여야는 합의에 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12월 19일 제171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고, 12월 20일 행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정부 원안대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경제원 산하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한국은행 독립, 공정거

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비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 등을 주장하였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한국은행 독립 문제였다. 여야는 12월 20일 관련 쟁점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개정안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다음해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자는 민주당과, 장기과제로 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민주자유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 속에 양당은 12월 21일과 22일 연이어 총무회담을 통한 절충을 시도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 용어를 수사적·원론적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향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재무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민주당 안을 토대로’ 라는 표현을 삽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전향적으로 개정한다’ 는 표현만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당은 협상을 통해 민주당 안과 추후 제출할 민주자유당 안을 충분히 논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1995년 임시국회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12월 23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상타결 이후 여야는 행정경제위, 법사위, 내무위 등 회의를 속개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12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연말 여야대립의 쟁점에 있던 두 쟁점법안은 모두 처리되었고, 1994년 국회활동도 종료되었다.

3. 1995년도

1995년 국회는 1994년 말 승인된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 활동으로 시작되어 2월 20일 개최된 제172회 임시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6차례 소집되었다. 국정조사 이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72회 임시국회(1995. 2. 20~3. 6)부터 제174회 임시국회(1995. 5. 1~5. 4)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제174회 임시국회에서는 대구가스폭발사고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국회가 파행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5월 8일 단독으로 제175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의 비협조로 공전되었다. 이후 7월 5일 개최된 제176회 임시국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9월 11일 소집된 제177회 정기국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이 불거지면서 여야간 첨예한 갈등 속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타개방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고, 그 결과 논란이 되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가.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제171회)

1994년 9월 인천 북구청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세무공무원 등 모두 78명이 구속되었다. 이 가운데 사건의 주범 안영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사원과 내무부가 전국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259개 구·시·군 중 3~4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세금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부천에서는 대형 세금부정 사건이 적발되면서 내무부가 앞서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비리사실을 적발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러왔다.

이에 민주당은 신기하 의원 외 102명의 발의로 1994년 12월 16일 ‘공직자 세금부



▲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송파구청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1995년 1월 11일).

정사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이 문제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1995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비리가 발생되었거나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 등 6개 지방행정기관과 내무부의 지방세제국, 감사관실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조사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사를 위해 여야 3 대 2의 비율로 5명씩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조사반이 2개 기관씩 맡아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조사반은 서울 송파구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제2조사반은 서울 강남구청과 인천 남동구청을, 제3조사반은 경기 군포시와 용인군을 맡았다. 이러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계획서'가 1994년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면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조사는 여야간 사전 협의를 통해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 가지는 내무부와 감사원이 1992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 1994년 말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1990년 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징수비리뿐만 아니라 부과비리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고

조사대상 세목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에 의해 1995년 1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지방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의 보고 후에는 서울 강남구청 등 6개 피조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조사활동 기간이 보름으로 짧아 정책질의를 통한 구조적인 세무비리를 밝혀내기보다는 현장 위주의 조사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대상 서류를 현장에서 결정하였고,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동원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에서는 가짜 영수증 발급과 이를 통해 정상납부를 가장한 부정 등이 대표적인 세금부정 사례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간 상납·비호·비리 묵인이 만연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 남동구청 조사에서는 세금부정 의혹이 있는 취·등록세 영수증 8,000여 장이 발견되었다. 서울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서도 은행의 수납인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수백여 건씩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는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부적절하게 계상하여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한 사례가 많았다. 징수과정에서 영수증 금액을 변조하여 차액을 횡령하거나 은행수납인을 위조한 경우 등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조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아 비리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다.

조사완료 이후 여야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부정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야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 표준액이 지역별·등급별로 달라 과표 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부과·징수 가능성 등 부정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을 기능직에서 일용직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세금부정방지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과 법무사 대리납부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추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세무행정의 전산화에 앞서 기본적인 세무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세무공무원의 월급 및 업무량을 현실화하고 무엇보다도 비리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직자부정방지과 처벌에 관한 법’의 정비와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장하였다.

지방세 세금부정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 조사활동은 계획수립·실시·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큰 대립 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세법 개정, 세무 전산화, 세무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제도개선과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나. 통합선거법 개정(제172~174회)

19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자유당은 1995년 3월 3일 4대 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까지 정당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되는 지역당 구조의 심화, 지방행정의 사유화, 국가예산 낭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각종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민주자유당의 음모라며 개정 저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대립상황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자유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의 공판과 국회부의장의 자택을 봉쇄하여 국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제172회 임시국회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9일 또 다시 제173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였다. 그러나 제173회 임시국회 역시 야당이 국회의장 공판과 부의장 자택을 점거하여 파행운영 되면서 공전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차례의 회담을 개최한 후 3월 14일 사무총장·원



▲ 민주당 의원들이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황낙주 국회의장을 저지하고 있다(1995년 3월 9일).

내총무 회담에서 협상을 통하여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정상화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통합선거법 개정에서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의 10%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단, 한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였다.

3월 통합선거법 개정 이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95년 5월 4일 변경일 의원 외 10인의 요구로 또 다시 통합선거법 개정안(내무위원회 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동시지방선거의 과도한 선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 변동,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신설 등으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4월 28일 발생한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대정부질문 의제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가 공전되자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5월 4일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이후 여야는 수차례의 총무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통합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9개가 늘어났고, 전체 시·도의회의원은 비례대표 97명을 포함해 모두 972명으로 결정되었다.

다.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둘러싼 여야대립과 국회 파행(제174~175회)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인근 공사장에서 대구백화점 신축공사를 하던 인부가 부근을 지나던 도시가스관을 파손해 고여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100여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여야는 5월 1일 열린 제174회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민주당은 대구 가스폭발참사를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고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자 처벌, 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집중 거론되는 것을 우려하여 애초 의제였던 제15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



▲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 사고현장(1995년 4월 28일).

해서만 논의하고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하는 입장을 보였다.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여야는 5월 1일 총무회담을 열고 임시국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이 ‘단기’ 국회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최소 10일 이상의 회기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였고, 그 결과 임시국회는 사흘 동안 공전되었다. 이후 여야는 174회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4일 총무회담을 두 차례 열고 또 다시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결국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들은 후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임시국회는 폐회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의 단독국회 강행을 비난하며 5월 5일 제175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대구 가스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여야 공동으로 소집한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재소집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실성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임



▲ 이기택 총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탑골공원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1995년 5월 9일).

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국정조사권은 민주자유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구성 시기는 검찰수사가 종결된 뒤에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권 발동을 수용하고 임시국회에 참석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끝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회는 자동 유회되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두시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제지하면서 무산되었다. 결국 제175회 임시국회는 6월 6일 30일간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아무런 활동없이 자동 폐회되고 말았다.

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회 진상조사(제176회)

1995년 6월 29일 완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서울 삼풍백화점(지상 5층, 지하 3층)이 무너져 내려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고, 그 때마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또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은 컸다. 사고발생 후 여야는 사고원인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여야는 7월 8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여야 의원 285명의 공동발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민주자유당 5인, 민주당 3인 자유민주연합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삼풍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삼풍특위는 7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를 선출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하였다.

국정조사계획서는 7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삼



▲ 삼풍백화점 붕괴현장(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진상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조사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31일간으로 정하였다. 또한 보고요구 대상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등 3개 기관, 자료제출 또는 검증대상 기관으로 내무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최종 출석요구 대상 증인으로는 설계·시공·감리에 관련된 우원종합건축 대표 등 7명,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9명,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 등 삼풍백화점 관계자 11명, 기타 냉각탑 설치자 2명이 선정되었다. 그 이외 중앙대 김덕재 교수 등 7명이 감정인으로, 서울시 현장대책본부 인명구조반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선정되었다.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여야는 증인선정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중첩되는 점을 두고 대립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조사계획서에 언론에서 거론된 자, 삼풍백화점 관계자, 공무원 중 구속된 자 등 전원이 포함되어 있어 31일 간의 조사로 전체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검찰의 수사기간과 겹쳐 이미 구속된 자는 조사하기 곤란하며,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고현장 수습에 전력해야 할 시기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증인 가운데 10명 정도를 제외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누가 진상파악의 핵심적인 증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 중 추가로 증인 채택이 필요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1주일 전에 출석통지를 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한다면 일단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을 선별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여야는 논란 끝에 조사대상 분야별로 한 명씩 증인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가며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중첩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자유당은 삼풍특위와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하여 증인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검찰조사 종결 전 삼풍특위 조사결과 발표가 검찰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가능한 한 사직당국의 수사결과를 원용해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수사는 사고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며 국정조사는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밝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자유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삼풍특위는 조사 시작부터 마지막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6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3차례에 걸쳐 3개 기관에 대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8차례에 걸쳐 증인 23명, 감정인 4명, 참고인 4명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차례 열어 조사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9월 12일 6차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4가지 부문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 정부의 조속한 보상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구조가 지연되고 사체가 뒤바뀌는 등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조속한 보상과 행정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9월 18일 제17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파문과 여야공방(제177회)

1995년 10월 19일 제177회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1995년 8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제기 하였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던 사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며 비자금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박계동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1993년 1월말까지 4,000억 원 비자금이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었다. 그 후 93년 2월 1일 4,000억 원은 동화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에 분산하여 예치되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600억 원이 예치되었으며 이중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300억 원이 각각 100억 원씩 나뉘어 차명계좌에 예치되었다. 그 중 100억 원의 비자금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증거물로 제시한다” 라며 신한은행 1개의 계좌번호와 잔액조회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서소문 지점장이던 이우근 신한은행 이사대우는 차명계좌 예치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 국회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을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보여주고 있다(1995년 10월 19일).

이를 계기로 비자금 비리의혹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민주자유당은 비자금설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과 국세청이 진상규명

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민주연합도 정부조사를 지켜보면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정부의 조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야권공조를 통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비자금 문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리한 여야는 1995년 10월 20일 긴급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 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과 차명계좌 명의인 3인 및 차명계좌 제보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조사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축소 은폐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증거물이 제시된 신한은행과 관련된 300억 원 이외의 내용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상황은 10월 22일 검찰수사에 의해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통치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급반



▲ 이현우 전 노태우 대통령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3백억이 자신이 관리한 돈임을 밝히고 있다 (1995년 10월 22일).

전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한 이현우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신한은행에 예치된 300억 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시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다 남은 돈을 자신이 관리해 온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드러났다. 이후 여야는 즉각 성명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와 함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10월 23일과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0월 25일 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은폐를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부 후반기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비자금조성 의혹을 제기하였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1992년 대통령 선거자금 유입 의혹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10월 26일 신한은행 외에도 동아투자금융에 268억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가·차명 계좌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임기간에 약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과 퇴임 당시 1,70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당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내용에 관해 대국민사과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1995년 10월 27일).

10월 27일 국회에서 4당 원내 총무회담을 열고 “노씨를 포함한 비자금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수사내용 공개, 6공 비자금 철저수사, 해외 비자금 추적” 등 4개 항을 촉구하였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월 1일과 1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11월 16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고 12월 5일 구속기소 되었다.

바. 추곡수매동의안 및 1996년도 예산안 처리(제177회)

1995년 여야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1996년도 예산안’ 과 ‘1996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이하 추곡수매 동의안)을 표결처리하였다.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의 정상적인 표결 처리는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 추곡수매 동의안

1995년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추곡수매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정부의 추곡수매 예산감축, 벼 생산량 감소, 산지 쌀값 대폭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결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추곡수매 예산을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해야 했다. 이 경우 추곡수매 가격동결을 기준으로 전년도 1994년보다 90만 섬 줄어든 960만 섬만을 수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자유당은 추곡수매 문제 해결을 민심수습의 매개로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타결책을 모색했다. 민주자유당이 내놓은 방안은 WTO보조금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추곡수매 확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즉 정부 수매량 외에 농협을 통해 산지 시가 구매로 수매량을 전년(1,050만섬)보다 늘리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전량수매·대폭인상’ 원칙을 정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정부는 추곡수매량을 전년도보다 10만 섬이 늘어난 1,060만 섬 수매(정부수매 960만

섬, 농협 시가구매 100만 섬)를 결정하고 정부수매 가격은 1994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한 야당의원들과 농촌출신 여당의원들은 수매량을 최소 1,100만 섬 이상으로 늘리고, 수매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영농비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10%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UR협상에 따른 수매량 동결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대책에는 무사안일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여당의원들과 수매가격 10%인상과 1,100만 섬 이상 수매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1월 28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되었고, 결국 추곡수매동의안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후 12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물리적 충돌없이 표결을 통해 추곡수매 동의안을 가결처리하였다.

2) 1996년도 예산안

1995년 10월 2일 정부는 1995년보다 약 15% 증가한 63조 원 규모의 199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규모는 유지한 채 중소기업·농어촌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 예산 및 관변단체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 예산안이 1996년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회부되었다. 여야는 11월 9일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1월 10일부터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1996년도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민주자유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으나 야당이 합리적인 요구를 해 올 경우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과거처럼 맹목적인 총액 삭감보다는 합리적인 배분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에 주력하였다. 예산액은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총 4,100여억 원의 삭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관변단체 예산지원은 반드시 지지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도 정부제출 예산안을 팽창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하여 편성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총 4,000여억 원 삭감을 요구하였다. 자유민주연합 또한 과다한 지역개발사업 등과 같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데 예산심의의 초점을 두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는 11월 20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공방 등으로 충분한 심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안은 11월 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이월되어 부처별 계수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쟁점이 됐던 항목은 방위비, 예비비, 관변단체 지원금, 선심성 지역개발사업비, 영농지원자금 등이었다. 여야는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 농어촌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사회복지예산 등에 4,000여억 원을 증액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변단체 지원금, 선심성 지역개발예산 등의 삭감과 지역예산 균등분배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자유당 이상재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이 수정안은 예결특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된 후 예결특위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예결특위안으로 채택되었다. 수정된 최종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에서 41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농어촌, 중소기업과 사회복지 부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철,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한 관변단체 지원금과 방위비 삭감 주장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예산안 표결에는 참석하였으나 선심성 지역사업 및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의 삭감과 조정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1996년도 예산안은 비자금사건과 5·18 특별법 공방으로 인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매년 반복되던 여야 간의 심각한 충돌 없이 의례적인 수준의 공세 속에서 의결되었다.

사.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제177회)

1995년 하반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 이어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 대통령선거자금 공방이 심화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11월 24일 강삼재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는 검찰이 내린 ‘5·18 사건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민주자유당 내부적으로는 구 민주정의당 출신 의원들이 5·18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계파 갈등도 야기되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1월 25일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2월 7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미 9월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도 11월 13일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처리 특별법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자유민주연합도 12월 1일 ‘5·18 사건 및 92 대통령선거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각 정당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여야 의원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하였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공소시효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급입법을 둘러싼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사실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5·18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죄를 특별법을 제정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7월 18일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 등 4개 단체에서 5·18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11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개 단체가 판결 하루 전날 현재의 결정이 5·18 특별법 제정에 구속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하였다. 한편 5·18 특별법 제정의 최대 쟁점사항인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있어서는 야3당이 5·18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였다.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 여야는 이후 12월 16일까지 원내총무회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민주당과 연합하여 표결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고수하던 새정치국민회의는 12월 18

일 입장을 변경하여 5·18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규정 명문화,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적용대상을 광주이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 5·18 관련자 상훈박탈, 부화뇌동자와 단순가담자 등 처벌범위 확대, 양민학살 관계자 처벌 등의 6개 요구조건을 주장하면서 ‘선 특별법 처리, 후 특검제 관철’의 타협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야는 12월 19일 3차례의 총무회담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최종합의 과정에서 부화뇌동자 처벌과 양민학살 관계자 처벌요구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의 최종문안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명칭을 놓고 ‘5·18과 광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이를 반대하는 신한국당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여야는 ‘광주’를 법률명칭에서 제외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5년 12월 19일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247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립표결하여 2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표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을 포함하여 2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명이 기권하였다.

4. 1996년도

1996년도 1월 10일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였던 178회 임시국회가 개최되었다. 제178회 임시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의 불균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선거구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후 5월 30일 새로운 국회가 그 임기를 시작하였다. 제15대 국회는 1996년 6월 5일 개최된 제179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개원되었다. 그러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집권여당 신한국당이 과반수 확보를 위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면서 초반

부터 여야간 첨예한 갈등 속에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179회 개원국회에서는 개원식을 치르지 못하였다. 이어 7월 8일 제180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개원식과 함께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이 완료되었다. 더불어 원 구성 협상 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성 시비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월 10일 개최된 제15대 국회 첫 정기국회(제181회)에서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장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OECD가입비준동의안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1997년도 예산안 등 쟁점의안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파행 속에 정기국회가 마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말 최대 쟁점의안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위해 12월 23일 제182회 임시국회가 개최되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률안을 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단독처리 하면서 큰 파문과 함께 극단적인 대결정국이 형성되었다.

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결정과 재획정(제178회)

1995년 7월 15일 여야는 제15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선거구는 기존의 237개에서 23개 증설되어 260개로 늘어난 반면 전국구는 3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1995년 4월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보다 후퇴하여 최소 선거구의 통폐합은 배제된 채 인구 30만 이상 선거구 분구만을 합의한 결과였다. 이로 인하여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 문제, 인접 하지 않은 두 지역을 묶어놓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식 조정 문제 등이 지적되며 재개정 요구를 불러왔다. 더불어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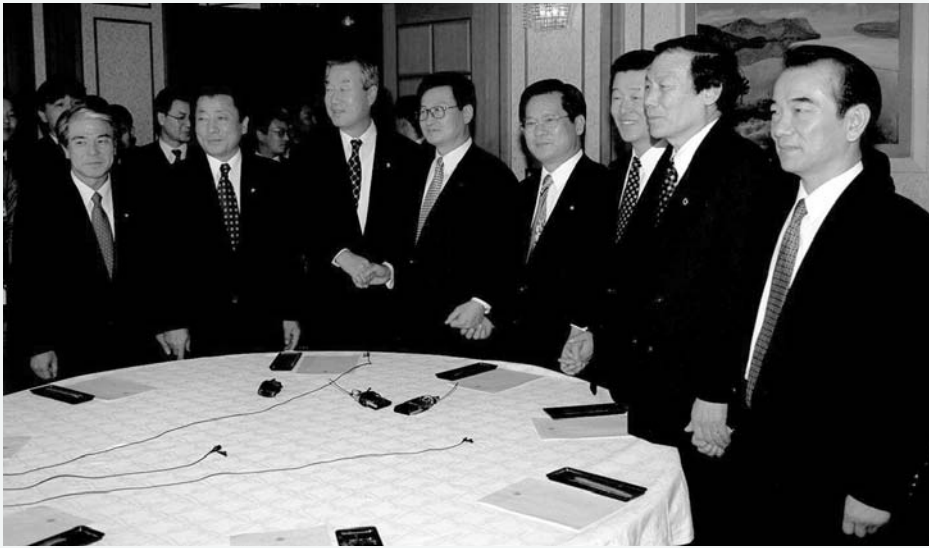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27일 통합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동법 「별표1」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의 전면 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여야는 1995년 12월 28일 총무회담을 시작으로 선거구 조정 협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조정에 따른 이해득실에 집착하면서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구 조정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1996년 1월 10일 제178회 임시국회가 개최되었다.

조정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 결정문에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를 확정했을 때 국회의 재량을 일탈하여 위헌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인구편차 허용한계로 제시한 4 대 1은 199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 수를 17만 5,000여 명으로 볼 때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평균 선거인수의 160%인 28만 700여 명, 하한 인구수는 40%인 7만 100여 명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자체적인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기준선을 마련하여 협상을 진행했으나 각 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신한국당은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36만 4,000명~9만 1,000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구하한선 기준을 9만 1,000명으로 할 경우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역기반인 호남 11곳, 신한국당의 지역기반인 영남 5곳을 포함하여 총 30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28만 명~7만 명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상한선 28만 명을 넘는 16곳이 분구되고 대신 7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8곳의 선거구가 줄게 되며, 분구 대상지역 가운데에는 야당이 우위를 보여 왔던 서울·경기지역이 9곳이나 포함되었다. 반면 통·폐합 대상 가운데 호남지역은 3곳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30만~7만 5,000명을, 민주당은 30만 9,000~7만 7,000명을 제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안을 기준으로 하면 통·폐합 대상은 16곳, 분구 대상은 6곳이었으며, 민주당안을 기준으로 하면 통·폐합 대상은 18곳, 분구 대상은 4곳이었다.

이처럼 이해득실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여야는 여야 8인 증진회담, 총무회담 등을 열어 수차례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쉽게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하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와 영수회담 등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의 8인 중진회담(1996년 1월 12일).

다. 그 결과 제178회 임시국회는 1주일 이상 공전되었다. 이에 신한국당은 선거구조정안에 대한 표결강행 방침을 야당에 통보하였고, 야당은 실력저지를 표명하면서 선거구조정 협상을 둘러싼 여야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쓴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낀 신한국당은 1월 1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윤환 대표가 김영삼 총재와 의견을 조율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이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 30만~7만 5,000명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당론 변경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던 선거구 조정협상은 급반전 되었고, 결국 1월 24일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3당 총무협상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인구 상·하한선은 신한국당이 야당의 안을 수용하여 30만~7만 5,000명으로 합의하였다. 선거구의 인구산정 기준일은 신한국당이 1995년 3월 2일을, 야3당이 1995년 11월 30일을 주장하였으나 협상 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기준일인 1995년 6월 30일로 절충되었다. 또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통폐합대상 선거구 16곳에 대한 조정방식과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두 개 행정

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분구할 수 없다(통합선거법 제25조 제1항)는 규정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도 일괄 합의하였다.

협상결과 여야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최대 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 30만 명이 넘는 부산 북구·강서, 인천계양·강화, 그리고 신안과 목포를 예외 선거구로 인정하여 분구하였다. 또 신안의 예외가 인정되면 논란이 되던 나머지 4개 지역은 신한국당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새정치국민회의 측의 제안에 따라 영암과 장흥, 보성과 화순은 각각 통합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지역선거구가 260개에서 253개로 7개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전국구는 39석에서 46석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2개, 강원 1개, 전남 2개, 충남·북 2개의 선거구가 순감되어 지역기반에 근거하면 3당의 득실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여야 합의문 주요내용(1996. 1. 24)

1. 선거구조조정 기본방향
 - ① 1995년 12월27일 기존 선거법에 대한 현재의 위헌평결 기준 수
 - ② 현재 평결기준 인구편차 4:1을 벗어난 선거구에 한하여 상호 통합함으로써 선거구 조정
 - ③ 선거법제25조제1항에 대한 예외지역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4개 선거구로 최소화
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 ① 선거구획정기준일은 현재의 평결 기준일에 맞추어 1995년 6월 30일로 한다.
 - ② 선거구 인구편차는 4:1로 하며 하한 7만5천 명, 상한 30만 명으로 결정한다. 단,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는 제15대 총선에서만 부산 해운대·기장, 강서·북구, 인천 강화·계양구, 전남 목포·신안선거구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총선거구는 253개이며, 전국구 국회의원수는 46인으로 한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고 통·폐합 대상지역을 모두 인접 선거구에 붙여 놓으면서 여야 간 담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적 근거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 자체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인구 상한에 미달하는 목포·신안을 예외 선거구로 인정한 것에 대해 언론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홍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조정 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최근의 인구기준(1995년 11월)을 적용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외면한 점도 비난의 대상이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26일자 4면.

- “원칙 저버린 정치담합”
국민일보, 1996년 1월 25일자.
- “편법 획정 - 일회용 선거구”
경향신문, 1996년 1월 25일자.
- “선거구 협상 「당리담합」 타결”
서울신문, 1996년 1월 26일자.
- “어물쩍한 선거구 획정”
동아일보, 1996년 1월 26일자.

여야는 선거구 조정에 대한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1월 26일 이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 내무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최종 합의과정에서 제외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세부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개회가 지연되었다. 회의 시작 이후에도 토론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인구수 기준일 선정의 통합선거법 위반 문제, 한국관 게리맨더링 식의 선거구 조정 등을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시간여의 찬반토론 끝에 기립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어 1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주장이 이어졌으나 개정안은 표결을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표결에서는 반대 당론의 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도 조정대상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신한국당 정상천·이학원 의원과 자유민주연합 정태영 의원이 당론과 달리 반대의를 표하였다.

나. 제15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국회파행(제179회)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신한국당 139명, 새정치국민회의

79명, 자유민주연합 50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6명 등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에 여야는 1996년 5월 30일 새로이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15대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결과 국회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정국안정을 내세우며 선거 직후 무소속 및 야당위원을 영입하여 과반수 확보에 나서면서 여야갈등이 심화되어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무소속 김재천 당선자의 영입을 시작으로 제15대 국회 임기개시일 전 과반의석을 넘는 151석을 확보하였다.

이에 야당은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을 민의를 무시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가세하여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는 한편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더불어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야권 당선자 영입저지 및 선거부정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문제를 제15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형성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5월 26일 ‘4·11 국회의원선거 민의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립 상황 속에 여야는 수차례 총무회담을 여는 등 제15대 국회 개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신한국당은 우선 등원하여 개원한 후 협상을 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인위적인 의원영입에 대한 사과, 4·11부정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영입 의원 원상회복, 국회의원선거 결과 나타난 의석비율에 따른 원 구성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이 조건들이 타결되어야 국회등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야간 의견대립 속에 제15대 국회 임기 개시 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결국 신한국당은 단독개원 방침을 정하고 6월 1일 소속의원 151명과 무소속 김영준·김용갑 의원 등 153명의 서명을 받아 6월 5일 제15대 국회 개원을 위한 제179회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신한국당의 단독개원 방침은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새정치국민회의



▲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이 보라매공원에서 신한국당의 야당의원 영입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1996년 5월 26일).

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 속에 신한국당 단독의 원 구성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등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5일 열린 제15대 개원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본회의에서 최고 연장자로서 임시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허남 의원은³⁵⁾ 기습적으로 산회를 선포하였고, 그 결과 의장단 선출은 물론 개원식도 열리지 못하였다. 이에 신한국당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산회선포권이 없는 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6월 7일 이후에는 김허남 임시의장 다음 고령자인 김명운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수차례 의장단 선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제179회 임시국회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산회와 휴회를 되풀이하는 파행을 겪었다.

애초 신한국당의 의원영입에서 비롯된 여야 갈등은 원 구성 협상을 거듭하면서 제 15대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운동 시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와 중립성 확보 문제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앞서 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 외에도 부정선거운동 시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

35) 당시 국회법 제18조는 국회의원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찰·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과 선거부정 진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정조사권 발동 등으로 확장되었다.

개원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한 달 가까이 국회과행이 계속되자 주요 언론들로부터 국회무용론 등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그에 따라 국민여론 또한 악화되었다. 결국 여야는 국회 부재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제179회 임시국회 폐회 전일인 7월 3일 총무회담을 열고 여야간 쟁점현안인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쟁점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3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합의문 조항 외에 7월 8일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제180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야당 당사를 방문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의 의원영입과 정국과행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내총무 합의사항(1996. 7. 3)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특위구성과 국정조사
 -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7대 6의 비율로 7월 임시국회 개회일에 구성, 활동기간은 1996. 8. 10부터 9. 9까지
2.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 구성
 - 선거법, 정치자금법,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선
 - 여야교섭단체 소속의원 각 9인(도합 18인)으로 7월 임시국회 개회일에 구성, 활동기간은 1996. 8. 10부터 1997. 2월말까지
3. 원 구성
 - 의장단 중 부의장 1인은 여당에 배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9:4:3으로 배분
 - 상설특위 중 여성특위의 위원장은 전반기 제1야당이, 후반기 여당에 배분,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간의 협의 배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서 여야는 제179회 임기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의장에 김수환 의원, 부의장에 오세용·김영배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최하고자 했던 제15대 국회 개원식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반발하면서 끝내 개최하지 못하였고, 제179회 임시국회는 폐회되었다. 이후 여야는 합의사항에 따라 7월 8일 제180회 임시국회를 다시 개최하여 개원식을 여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제15대 국회 임기개시 40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

제15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장 구성

| 정당명 | 상임위원회(위원장) | 배분비율 |
|---------|--|------|
| 신한국당 | 운영위원회(서청원), 법제사법위원회(강재섭), 재정경제위원회(황병태), 통일외무위원회(박관용), 내무위원회(이택석), 국방위원회(김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세기), 건설교통위원회(백남치), 정보위원회(김중호), 윤리특별위원회(변정일) | 9 |
| 새정치국민회의 | 행정위원회(김인곤), 농림수산위원회(김태식), 통상산업위원회(손세일), 보건복지위원회(신기하), 여성특별위원회(신낙균) | 4 |
| 자유민주연합 | 통신과학기술위원회(강창희), 환경노동위원회(이규규), 교육위원회(김현욱) | 3 |

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성 시비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제180회)

여야는 제15대 국회 개원협상 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6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26인의 의원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7월 8일 제18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를 담당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제15대국회의원선거특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특위는 7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목요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27일까지 계속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조사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사범위(조사대상 선거구)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였고, 그 결과 3당 간사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부대조건을 단 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 실시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27일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러나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모호한 부대조건은 이후 조사대상 선거구에 대한 협상에서 오히려 여야갈등과 국정조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애초 제15대 국회의원선거특위 구성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조사범위를 ‘여야가 문

제를 제기한 모든 선거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야당은 자체 수집하여 발간한 부정선거백서에 나타난 25개 선거구 모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이 발간한 부정선거백서는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배포금지 결정이 내려져 신빙성이 없다며 특위를 운영해나가면서 협의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는 야당은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면 특위활동이 어려우니 선정대상을 1개월 활동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 최소범위로 정하자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정치적 타격을 입어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정하지 말고 부정시비가 있는 선거구로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아예 253개 선거구 모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하였다.

조사계획서 승인 이후 조사범위에 대한 여야간사 협의 과정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선거부정백서와 자체 수집자료를 토대로 증빙자료가 충실하고 법률적으로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9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애초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을 공개하였다고 반발하며 새정치국민회의가 선정한 선거구 수보다 훨씬 많은 25개 지역을 선정하여 맞섰다. 조사활동 기간이 시작된 후 8월 12일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역시 증빙자료의 기준을 놓고 ‘각당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역’을 주장하는 신한국당과, ‘고소·고발이 있는 곳 중 증빙자료가 제출된 지역’으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여야는 8월 16일 간사회의를 통해 조사방향을 선회하여 선거부정 유형별로 조사활동을 펴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8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와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그러나 유형별 조사에 있어서도 여야는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국정조사 기간 막바지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국정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 새정치국민회의가 부정선거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종료 후 정기국회가 시작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고발·수사의뢰 한 상황에서 조사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조사기간 연장 또한 수용되지 못하였다. 결국 국정조사는 10여 차례의 특위 간사회의와 6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전혀 벌이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다만 대안으로 그동안 수집된 부정선거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률안 처리(제180~181회)

여야는 제15대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방송관계법, 그리고 여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를 위한 관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18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동수(신한국당 9인, 새정치국민회의 5인, 자유민주연합 4인) 18인으로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1996년 8월 10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 운영하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이후 제도개선특위는 7월 24일 첫 회의를 열어 김종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3당 간사를 선임하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제도개선특위는 관련법에 대한 효율적인 개정논의와 협상을 위해 8월 1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이하 정치관계법 소위),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이하 중립성제고 소위), 방송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이하 방송관계법 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쟁점법안을 소위원회별로 배분하여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은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검찰청법·경찰법·기타 관계법은 중립성제고 소위에서, 그리고 방송법은 방송관계법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제도개선특위는 8월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교섭단체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9월 1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소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교섭단체별 기본정책이 제시되었으며, 9월 24일 제5차 전체 회의에서는 각 정당의 기본정책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여야는 공청회를 통하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심사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 단일안과 입장 차이를 보이던 신한국당의 법률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1월로 접어들면서 야당이 정기국회 쟁점의안으로 부상한 예산안과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제도개선특위에서 심사하는 법률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여야 간 핵심쟁점이 되었던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검찰위원회(가칭) 신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검사 파견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 단일안이 검찰을 중립화시킨다면서 결국은 검찰을 정치에 휘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특히 검찰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관계법에 있어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집권당의 특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신한국당은 전국구제도의 전면적 수정을 주장하여 개정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 개정내용에 있어 두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조사권 강화를 비롯하여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정치기탁금에 대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야당의 전국구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의 납부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구후보 선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장하였다.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확대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방송관계법에 있어서는 야당이 방송의 불공정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갖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직접 사장을 선출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신한국당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하였다. 또한 야당은 공보처 폐지와 방송위원 전원에 대한 정당추천, 득표율에 따른 선거방송 시간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신한국당은 공보처 폐지에 반대하였고, 방송위원의 경우에도 국회와 사법부가 추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 실질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던 여야는 관련 법률안들이 11월 예산안과 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여야는 11월 8일 제도개선특위 간사회의를 통해 우선 야당이 제시한 단일안을 각 소위원회에 배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1월 11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11월말까지 공휴일 없이 3개 소위원회를 매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소위원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11월 18일과 19일에는 3당 총무와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의견대립을 보이던 주요 쟁점에 대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특히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검·경중립화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절차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만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11월 26일 표결처리하고 여당이 야당 단일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1월 30일까지 쟁점사항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4자회담의 성과였다.

이후 여야는 4자회담의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명문화, TV토론 허용, 비지정기탁금 조성을 통한 여야 배분,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선출방식, 후원금 모금방식의 비실명쿠폰제 허용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11월 27일에는 타결 법안과 미합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합의된 처리시한인 11월 30일까지 계속된 협상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임기만료 후 검찰총장의 임명직 공직 취임 제한, 지정기탁금 일부 야당배정 등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여야

는 신한국당의 단독처리 입장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계속하여 처리시한을 연기하며 4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벌여나갔다. 협상과정에서 제의와 역제의, 합의내용에 대한 번복과 재협상이 반복되는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9일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 3당 총무와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4자회담에서 제도개선 쟁점현안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1996년 12월 9일).

합의결과 검·경중립화 관련법의 경우 야당이 요구한 국회동의 및 추천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경찰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사 참여, 검찰위원회 구성 등은 유보하기로 하는 대신에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임명·당적보유 금지, 경찰청장의 퇴임 후 2년간 당적보유 금지, 감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감사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관계법에 있어서는 야당이 주장한 TV토론회 개최 의무화가 수용되었으나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불참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또한 야당의 대통령선거 광고비의 국고부담 요구도 수용되어 신문광고 50회와 방송광고 20회에 대해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한 후보자 연대책임 조항의 폐지 문제는 여당의 재검토 요구에 의해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법률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서 여야는 1996년 12월 13일 제181회 정기국

회 20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 검찰청법, 경찰청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제도 개선 관련 5개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약 5개월 간 운영된 제도개선특위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방송관계법과 검·경관련법은 다음 선거 전에 개정하기로 유보하고 관련법 개정활동을 종결하였다.

마. 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제181회)

제181회 정기국회 중인 10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한국을 제29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여 한국의 OECD 가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비준동의안’(이하 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제181회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가 1993년도 신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입신청을 결정한 이래 거의 4년 동안 한국사회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OECD 가입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자본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유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야당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을 겪고 있던 제도개선 협상과 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여 조건부 반대라는 협상전략을 선택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원했던 여당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0월 31일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신한국당은 11월 20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 참석 전에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당론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11월 6일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이러한 결정을 야당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오히려 OECD 가입은 국가적 대사인 점을 강조하며 신한국당에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김영삼 대통령의 출국 전에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신한국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1월 12일에는 양당의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와 제도개선특위 법안 심의를 연계해 병행 처리하고 OECD가입비준동의안의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원내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문제는 비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이 국익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당론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이에 신한국당은 11월 14일 민주당과 총무회담을 열고 OECD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 등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OECD가입비준동의안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소모적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신한국당은 11월 2일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였던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11월 6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최소한 4개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 심도 있는 심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OECD 가입비준서 기탁시기가 1997년 4월인 점을 내세워 1998년 2월 임시국회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신한국당의 회기 내 강행처리 방침과 두 야당의 저지방침이 맞서 물리적 충돌과 국회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11월 19일 3당 원내총무와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4자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을 시도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충분한 심의가 보장된다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가

11월 20일 강행처리 한다는 애초 입장을 바꾸면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더불어 제도개선협상과 관련하여서도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 후 한나라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비준안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파행이 불을 보듯 뻔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섰다” 라고 합의배경을 설명하였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1월 22일 주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무위원회와 그 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약식 공청회를 열어 OECD가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OECD가입이 선진국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신한국당의 주장과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금융자유화 등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두 야당의 주장이 상충하였다. 이로 인하여 11월 25일 열린 통일외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가입비준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질의과정에서도 OECD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표결불참을 결정하였다. 결국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OECD가입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11월 26일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합의대로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기립표결을 통해 가결처리 하였다. 표결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은 당론에 따라 찬성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 101명은 반대하였다. 다만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평소 소신이 당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기권하였고, 신한국당 김찬우 의원도 자리를 비워 기권처리 되었다.

바.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제181회)

1996년 11월 27일 정부는 1995년 대비 추곡가 3% 인상, 수매량 890만 섬의 1996년 추곡수매안을 확정·발표하고 국회에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이하 추곡수매동의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4년과 1995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해 왔던 상황에서 농민·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여 항의성명과 시위를 벌였다. 야당 또한 정부안과 인상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주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물위원회의 첫 논의부터 강하게 표출되었다. 11월 28일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열린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정부안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를 통해 8~9%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추곡수매가 보장을 위한 전국 농어민경영인대회(1996년 11월 29일).

11월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농촌지역 여당 의원들 또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11월 30일 열린 농림해양수산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 동의안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구두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추곡수매안에 대한 여야 및 정부 간 협상은 상호 입장차이가 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정부는 통계결과 쌀 생산비용이 줄었고 2004년도 쌀 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농가경쟁력 제고 차원, 그리고 WTO에서 허용하는 농가보조금 지급한계 등을 근거로 3% 인상을 고집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의 경우에는 정부안을 수용하면

서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여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4~5%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수매가가 실제 산지가격보다 낮으며 정부의 물가 억제선도 4.5%인데 그보다 낮은 3% 인상률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3%안을 철회 또는 재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속개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였다.

여당의 일방적인 추곡수매동의안 처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선 주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수가 여야 동수이며, 위원장 또한 야당 의원이어서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어려웠다. 추곡수매동의안 이외에도 정기국회 막바지에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의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에 장애요인이었다. 특히 야당이 연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과 예산안 협상이 첨예한 여야 갈등을 수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회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야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여야 총무회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반복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까지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인상폭을 늘리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은 정부의 3% 인상안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가 순연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월 12일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하여 4% 인상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책위의장의 일방적인 합의에 반발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4%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추곡수매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위의장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은 1996년과 1997년 각 4% 인상, 신한국당은 1996년만 4%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국당은 12월 13일 1996년 추곡수매가를 4%인상하고 1997년에는 1996년 가격으로 동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야당 또한 1996년 추곡수매가를 7.1% 인상하고 1997년에는 4.5% 인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여야 각각

의 수정동의안 2건이 본회의에 제출된 상황에서 김수환 국회의장은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거부를 이유로 추곡수매동의안을 직권상정하였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자정을 넘어 자동 유회되었고, 직권 상정된 추곡수매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권상정에 대한 여야 원내총무의 동의가 있었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운영 절차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2건의 추곡수매수정동의안은 이어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과 함께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성토했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이 3당 원내총무의 동의가 아니라 협의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직권상정에 대한 논란 이후에도 여야는 2시간에 가까운 격렬한 찬반토론을 벌이며 추곡수매가 인상률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찬반토론 후 국회의장은 신한국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출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되었다. 우선 실시된 신한국당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야3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자동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은 오랜 논란 끝에 수매가 4% 인상으로 결론지어졌다.

사.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대북경고결의안 채택(제181회)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지역에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무장간첩침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야는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날 연이어 긴급 국회 국방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진상 파악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또한 9월 21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북한의 대남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9월 23일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를 위해 휴회 중이던 본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여야는 대북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군 당국은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군 병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 3명이 무장간첩에 의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잠수정을 통한 무장간첩 침투를 훈련 중 우발적 사고라고 강변하는 한편 무장간첩 살해에 대한 보복위협 발언을 쏟아내었다. 특히 10월 2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훈련 도중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된 인민군을 남한이 무장공비로 몰아 대량 학살했다. (……)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남한이 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내왔다. 이에 여야는 10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또 다시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북한 경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2차 대북경고 결의문에서는 북한에 대해 엄정히 경고하고 대남 무장공비침투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연한 대응태세를 대외에 천명하였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무장간첩침투사건을 계기로 군과 경찰,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의 통합작전을 지휘할 통합방위기구 설치와 통합방위작전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위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정부는 ‘통합방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은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장간첩들의 유류품을 살펴보고 있다(1996년 10월 9일).

회부되어 심의가 시작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갑종 통합방위사태 선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비상사태선포권을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안 중 통합방위사태 선포요건 관련 조항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상황’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통합방위사태(갑·을·병종사태) 발령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갑종사태의 발령요건도 애초 ‘적의 침투·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이에 준하는’이라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계엄법에 의한 계엄선포 규정도 삭제되었다. 또한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인 때에는 반드시 국회 등을 소집하도록 하였다.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수정된 ‘통합방위법안’은 12월 11일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과정에서 ‘침투·도발 및 위협’의 개념 규정이 신설되었고, 최종적으로 12월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아.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신한국당의 강행처리(제182회)

1996년 12월 10일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6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이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그러나 7개월여에 걸친 논의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정부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1997년부터 허용,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1999년부터 허용,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국회처리에 있어서 여야는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국

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장기간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개약의 우려가 있다며 법안처리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1997년 초 임시국회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야당이 회기 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 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신한국당이 12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반대하던 안기부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수환 국회의장과 오세용 국회부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였다. 여야간의 대치 속에 여야 총무들은 연쇄 회담을 열고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결국 야당의 본회의장 원천봉쇄로 본회의는 개의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갈등을 빚던 쟁점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립하였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1996년 12월 12일).



▲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김수환 의장에게 안기부법 개정안 통과의 강행처리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1996년 12월 18일).

이후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 방침에 따라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12월 20일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2월 23일 야당의 반대 속에 제182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관계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2월 2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선언 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 가능 여부, 개정법률안의 제출시기, 회의소집 공문의 발신주체 및 형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하여 논쟁을 벌였다. 결국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되었고, 이후 제182회 임시국회 기간 중 더 이상 개의되지 않았다.

이처럼 여야 간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협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원천봉쇄 되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12월 24일 노동법 공청회를 여는 한편, 당정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요건강화 등 노동관계법 수정안을 확정하며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신한국당은 여야대치 상황 속에 12월 26일 새벽 6시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 11개 쟁점법안을 단 6분 만에 단독

으로 의결하였다. 본회의 개의는 오세용 국회부의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되었고, 이의여부만 확인한 채 가결이 선언되었다.



▲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안 등 11개법안 단독 기습처리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는 끝났다'는 취지로 의석의 명패를 모두 가렸다(1996년 12월 26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한국당은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날치기이며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일간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며 대역 강경투쟁을 선언하였다. 노동계에서도 12월 26일 대형 제조업체 사업장의 즉각적인 파업을 시작으로 병원, 지하철, 은행 등이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며 반발하였다. 이처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신한국당의 단독 강행처리는 1996년 말 첨예한 여야대립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정국을 극도로 냉각시켰다.

5. 1997년도

김영삼 정부 임기 마지막 해였던 1997년에는 2월 17일 제183회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제184회 임시국회(7.1~30), 제185회 정기국회(9.10~12.18), 제186회 임시국회(12.22~30) 등 4번의 국회가 소집되었다. 제183회 임시국회에서는 1996년 말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로 인하여 형성된 대립정국 속에 이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졌고, 한보비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한보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는 장기간 개회되지 않았다. 7월 들어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으나 당내 경선 등 각 정당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내실 있는 활동을 벌이지 못하였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처리되었으나, 각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진력하기 위해 30일 이상 회기를 단축하는 한편 비자금 의혹설 등 정치공방에 몰두하면서 부실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선거 후 임시국회가 개회되지 않았던 이전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 1998년 초 제187회 임시국회(1.15~21), 제188회 임시국회(2.2~2.17) 등 2차례의 임시국회가 더 소집되었다. 여야는 이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와 심의 활동을 벌였다.

가. 노동관계법 재개정(제183회)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야권의 반발로 1997년 1월은 여야간 대화가 단절된 채 참여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노동계가 노동관계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법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맞서 야당은 관련 법안들의 원천무효와 재개정을 주장

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혼란스러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1996년 12월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양립하는 가운데 정국혼란이 심화되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였고, 1999년 1월 21일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총재, 김종필 총재는 노동관계법 등 단독처리 법안의 무효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그 결과 영수회담은 이후 신한국당이 야당에 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등 여야 간 관계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야기된 노동계파업 등 시국 타개방안에 대한 여야영수회담(1997년 1월 21일).

여야 간 대화의 재개는 1월 26일 발생한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그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면서 본격화되었다.³⁶⁾ ‘개정노동법 원천무효’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또한 한보사태를 다루기 위해 1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법제사법위

36) 한보사태는 1997년 1월 23일 발생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이다.

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집을 신한국당에 요구하였다. 이에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역제의 하였고, 노동관계법 개정, 한보사건 국정조사 등을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느낀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1997년 2월 17일 제183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제183회 임시국회가 개최되자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은 2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관계법 개정협상에 착수하였다. 여야는 법안심의에 앞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노사 양측과 공공대표들의 입장을 전해 듣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있어 핵심쟁점이었던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5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2일간의 공청회는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야 간의 뚜렷한 시각차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여야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에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신한국당은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토대로 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의 ‘재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강행 처리된 노동관계법을 원천무효화 한 뒤 ‘재심’의 해야 한다는 상충된 주장을 폈다.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도 정리해고제의 경우 신한국당은 이를 즉각 적용하되,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노사간 협의 선행 등의 요건을 부여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야당은 정리해고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대신 해고요건을 엄격히 강화한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화하되 그 시행을 최소 2~3년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수노조에 있어서는 여야가 모두 허용하지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즉각적인 허용을, 자유민주연합은 민주노총 자체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노조단결권 인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허용하지는 입장을 표명하여 다소 의견을 보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기본원칙이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사업장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로 대별되었다. 반면 신한국당은 순차적인 임금 감액과 전액 지급 금지로 의견이 양분되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변형근로, 대체근로에 있어서는 신한국당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만들되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만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주장하였다.

공청회 이후 여야는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7인으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를 통해 2월 25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월 24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야당 단일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검토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여야 간 세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7차례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입장차이는 쉽게 조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애초 2월 25일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기한은 계속하여 연기되었다. 결국 여야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월을 맞았고, 1996년 단독 처리된 노동관계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야당이 주장하던 원천무효 주장도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3월 들어서도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 총무회담, 당3역회의 등 다차원적인 협상을 반복하였고, 결국 3월 8일에 이르러 지연되던 여야 단일안에 합의하였다. 계속된 여야 협상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 등 14건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위원회에서 합의하였으나, 검토위원회를 통해 합의되지 못한 정리해고 등 11건은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였던 정리해고제에 대해 여야는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기로 절충하였다. 대신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키로 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5년간 유예한 뒤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여야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노동관계법 재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단일안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을 상정하였다.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민주당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채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간 정치협상으로 도출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합의로 마련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1996년 12월 26일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한 폐지법률안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 이로써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두고 1996년 말부터 장기간 계속되어 오던 여야간의 국회 공방은 일단락되었다.

나. 한보사건 국정조사(제183회)

노동관계법 재개정 문제와 더불어 1997년 2월 17일 개최된 제183회 임시국회의 또 다른 소집 목적은 국정조사를 통한 한보사건의 진실규명이었다. 노동법 재개정 문제로 인한 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7년 1월 23일 발생한 한보철강 부도사태는 이 회사에 대한 4조 2,0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융대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야당은 사건발생 직후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및 부도처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보철강에 대한 파격대출을 김영삼 정부의 최대 의혹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배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한보사건의 핵심 배후의혹이 제기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신한국당은 1월 28일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야당에 먼저 제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한보사태에 대한 조기수습에 나섰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보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운영

문제에 대한 정당 간 이견으로 국회소집은 다소 지연되었다. 야당은 여야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개최와 TV생중계, 60일간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의석비율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과 30일 간의 국정조사를 주장하였다.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계속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 국회를 소집한 후 쟁점에 대한 협상을 전개한다는 입장변화를 보였고, 2월 11일 총무회담을 통해 국정조사와 관련한 쟁점이 미합의된 상태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연이어 2월 12일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임시국회를 2월 17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소집하며 한보사건 국정조사 기간은 절충을 통해 45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던 청문회가 수용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야 의석비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되고 있다(1997년 1월 30일).

임시국회 소집이 합의됨에 따라 여야는 2월 14일 한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국회의장이 19인의 한보사건특별위원회(이하 한보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9일 한보특위는 의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보특위는 2월 20일 조사계획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3월 5일 까지 진행된 조사계획서작성 소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그간 이견을 보여 왔던 쟁점들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협약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립했던 쟁점은 청문회에 대한 TV생중계와 김현철을 비롯한 일부 증인 선정 문제였다. TV생중계와 관련하여 여당은 방송사 자원에 맡기되 생중계 요청이 오면 수용하며 조사계획서상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TV생중계를 조사계획서에 명시하거나 방송사와 공보처에 생방송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는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증인선정에 있어서도 여당은 입증취지와 소명자료가 제시되어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혹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증인선정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한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현철은 자신을 한보비리의 몸체로 지목한 새정치국민회의의 한영애, 설훈 의원 등 야당의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1997년 2월 23일 한보특혜대출사건과 관련하여 김현철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3월초 서울G크리닉 원장 박경식이 김현철의 인사·국정개입 내용이 포함된 비디오테이프를 폭로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박경식의 폭로 후 검찰은 김현철에 대한 채수사에 착수하였고, 야당은 김현철의 증인채택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김현철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하던 신한국당 역시 김현철의 한보청문회 증인채택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신한국당은 TV청문회 생중계와 김현철의 증인채택을 수용하였다. 여야는 제182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8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의 범위를 김현철의 국정개입 의혹까지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45

일간 실시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보특위는 3월 21일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하여 4월 4일까지 재정경제원, 법무부, 제일은행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원 등 20개 기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김현철을 비롯한 관련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벌였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한 한보특위의 사실 규명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증인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의원들 또한 부인으로 일관하는 증인에 대해 호통을 치며 몰아세웠을 뿐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한보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역부족이었다. 특히 4월 25일 김현철이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현철에게 국정개입 및 이권개입 의혹, 한보사태와의 연관성, 대통령 선거자금 등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김현철의 일관된 부인 속에 비리의 실체를



▲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국회 한보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1997년 4월 25일).

규명하지 못하였다. 김현철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신한국당 공천, 정부인사 개입 등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실만을 부분적으로 시인하였다.

김현철의 부인으로 사실규명이 한계에 봉착하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은 김현철의 인사·국정개입을 폭로한 박경식과 김현철의 진술 가운데 상이한 부분에 대해 양자의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대질신문을 하더라도 증언이 상반될 것이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며, 한보특위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김현철과 박경식의 대질신문동의안은 결국 4월 29일 한보특위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반대로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이로써 대질신문을 통한 진실규명도 무산되었다. 결국 한보특위는 한보 특혜대출의 몸체와 김현철의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 주요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5월 1일 이강성 한국기업평가 사장 등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4주간 실시된 청문회 일정을 마쳤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는 청문회 위증혐의자 고발문제를 두고 또 한번 대립하였다. 5월 2일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한보특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검찰수사 등을 감안할 때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정보근 회장, 박태중(주)심우 대표와 김현철,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 김종국 전 한보재정보부장 등 6명은 위증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당은 김현철, 김기섭, 김종국씨 등 3명은 박경식과 의견이 다른 것 외에는 위증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에 반대하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현철에 대한 위증고발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경대 위원장이 김현철에 대한 위증고발건의 표결을 선포하자 야당의원들이 반발하여 전원 퇴장하였고, 한보특위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신한국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김현철에 대한 고발동의안을 부결시켰고, 나머지 증인에 대한 고발건의 처리는 보류하였다. 그러나 위증고발 처리과정에 반발한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었던 위증고발 대상자 6명을 5월 6일 청문회 위증혐의로 대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마지막 한보특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상정된 국정조사보고 채택의 건은 소위 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가 없었다는 이유로 채택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위증자고발 건으로 파행 종료된 한보특위는 이후 개의회지 않았고, 결국 한보사건 국정조사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다. 당내경선과 부실국회(제184회)

1997년 3월 제183회 임시국회가 폐회된 이후 4~5월로 이어진 한보청문회 정국으로 인하여 국회는 2개월여 동안 소집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자금에 대한 여야간 시비가 일면서 여야관계 또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은 계속하여 쌓여갔고,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개혁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야는 1997년 5월 15일 총무회담을 열고 6월 9일 민생법안 처리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회소집 합의 이후 여야는 1개월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대통령선거자금 청문회와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하였다. 여당은 선개원·후협상의 입장을 내세우며 임시국회에서 제도개혁만 다루기를 원하였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선협상·후개원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이 여야동수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석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여야는 해답없이 협상만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애초 합의된 6월 9일 임시국회 소집은 무산되었다.

6월 들어 여야는 계속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원내총무 접촉을 통하여 임시국

회 소집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여야의 협상쟁점은 정치개혁특위 구성문제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구성비율에 있어 애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신한국당의 전국순회 경선 일정이 6월 중순으로 구체화되면서 협상의 또 다른 장애가 되어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임시국회 소집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여야동수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신한국당이 수용하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오히려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로 미루고 민생법안을 다룰 임시국회를 우선 소집할 것을 야당에 제의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6월 23일 여야3당 총무회담에서 그동안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여야동수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철회하고 무조건적인 국회 소집을 제의하였다. 즉 우선 국회를 소집하여 민생 현안을 다루어 나가면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는 수정제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당내 경선일정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의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하였고,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운영일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6월 28일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의 당내경선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대정부질문 일정을 바꾸기로 하고 제184회 임시국회 소집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합의에 의해 1997년 7월 1일 30일간의 회기로 소집된 제184회 임시국회는 각 정당의 당내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갈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신한국당 경선이 실시되었던 7월 5일부터 22일까지 국회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이 당내경선 일정에 따라 15개 시·도지부별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법안 심의 및 정책질의는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였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출석의원 현황에 따르면 제184회 임시국회 기간에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신한국당 의원들은 경선후보들을 빼고도 15명이나 되었고, 야당 의원은 1명이었다.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경선 이후 7월 23일부터 열린 대정부질문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진행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은 신한국당 경선과정의 금품살포설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 사조직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공조와 지역할거주의를 비난하고 이들의 대통령선거자금 문제를 거론하였다. 특히 여야의원들이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면제와 대통령선거자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본회의가 유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의 부실심의와 정치공방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결국 주요법안에 대한 줄속처리로 이어졌다. 7월 30일 열린 제184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왔던 71개 법률안과 2개 동의안 등 총 73개 의안을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일괄해서 처리하였다.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제안설명'이나 찬반토론도 없었다. 반대토론을 허용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의사일정 지연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 73개 의안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24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제184회 임시국회는 장기간의 여야협상 끝에 힘들게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여야가 공언한 정치개혁입법 협상에 대한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한 채 정회와 유회를 거듭하는 구태를 재연하다 7월 30일 폐회되었다.

라.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과 정치관계법 처리(제184회~185회)

1997년 초부터 한보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 문제 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여 온 정치권은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

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방향과 그에 따른 개정내용이 각 정당의 직접적인 이해와 직결되어 있었던 탓에 여야는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기구 구성에서부터 참여한 대립을 보였다. 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7월 1일 제18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쉽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 구성 원칙에 있어서 여당은 의석비율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동수를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상충하였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여당이 여야동수 구성 요구를 수용하고서야 7월 30일 제184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최종적으로 의결된 구성안의 내용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여 18인으로 구성하고 8월 5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합의에 의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의활동은 난항을 겪었다. 8월 5일 시작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부터 여야는 야당 몫으로 배정된 9인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였다. 초반 신한국당은 민주당 배제 절대불가의 입장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민주당 배제라는 상충된 입장을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신한국당은 야3당이 조정하도록 하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민주당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보름이상 지연되었고, 결국 3당은 8월 20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3당의 합의에 크게 반발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저지를 천명하였고, 또한 10여 차례의 성명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참여배제를 '강자의 폭거'로 규정하며 물리력 동원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월 25일과 27일 정치개혁특위 개최 시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고, 그 결과 위원장 선임은



▲ 국회정치개혁입법특위 첫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접거한채 민주당을 특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7년 8월 25일).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또 다시 지연되었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열린 제 3차 회의에서야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결의된 후 무려 28일이 지나고서야 관계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치개혁특위는 9월 1일 2개의 소위원회별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추려내고 여야 입장을 개진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9월 1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의활동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다수의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특히 3개월 앞으로 다가온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TV토론 방식, 지정기탁금제 존폐 문제, 정당활동 제한 범위, 선거공영제 확대 여부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문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문제였다.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여야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한

국당은 지정기탁금의 대부분이 여당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에 난색을 표하였고, 대신 야당이 정치자금 조성방안을 마련해 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대통령선거 TV토론회 방식에 있어서도 신한국당은 후보 간 1 대 1 토론과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비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선권에 드는 후보들 간 다자토론과 토론참석 의무화를 주장하며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9월 10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소위원회를 통한 여야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결국 미합의된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은 3당 원내총무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4자회담 또한 반복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30일까지였던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10월 20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또 다시 10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했다.

답보상태에 있던 여야협상은 10월 22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의 기득권 포기’와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신한국당의 입장변화에 따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3당 원내총무의 4자회담이 10월 23일 재개되었고, 이 회담에서 지정기탁금제 폐지로 의견이 조율되면서 기타 쟁점에 대한 협상도 진전을 보였다. 여야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려 23차에 걸친 회담을 통해 협상을 벌였고, 결국 1997년 10월 3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여야합의 단일안을 제6차 정치개혁특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안으로 마련된 2건의 정치관계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종 합의안에서 여야는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떡값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옥외 집회를 금지시켰다.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고 TV토론회를 신설하였다.

마. 비자금 공방으로 변질된 국정감사(제185회)

1997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18일 간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정감사 초반 여야는 재정경제원·농림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O-157 대장성 병원균 검출, 기아 등 대기업 부도사태와 경제위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 위성교육방송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또한 외무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일한 협상자세를 추궁하는 한편, 미국슈퍼 301조를 발동키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이외에도 화학전 등 북한의 기습도발 대비책, 불법 병역면제 의혹 등 병무행정비리,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10월 7일 한나라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전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김대중 총재가 가·차명과 도명으로 관리해온 비자금이 1,000억 원 대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와 검찰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음해 모략정치이며 흑색선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나아가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 자금,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경선 당시 재벌자금 수백억 원 수수설을 포함해 정치 지도자의 정치자금을 국회 특별조사위에서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은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이어졌고, 국정감사장은 의혹제기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10월 8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중 총재의 거액 비자금 관리설을 제기하는 신한국당 의원들과 이에 맞서 이회창 총재의 두 아들 병력비리 문제를 추궁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어 10월 10일 신한국당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1992년 삼성 등 재벌로부터 134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2차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반발한 새정치국민회



▲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이 김대중 총재에게 전달되었다는 수표사본을 들여보내고 있다(1997년 10월 7일).



▲ 정동영 대변인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강삼재 총장이 제시한 1억짜리 수표의 원본공개를 요구하고 있다(1997년 10월 7일).

의는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1997년 경선자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내무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한국당이 폭로한 비자금설이 범죄요건을 구성하는가의 법률적 문제와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등과의 형평성 및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의 정치적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10월 14일 김대중 총재 친·인척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3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였다. 3차 의혹제기에서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가 공개되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계좌조사 문제와 금융실명제 논란이 이어졌다. 10월 15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은 구 평화민주당 계좌에 대한 증권감독원 조사의 배후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어떻게 투신사 계좌내용 자료를 입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지시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여당 총재를 거론하며 신한국당과의 연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장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평화민주당 계좌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였다.

10월 16일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감사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사 대상에 있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였다. 신한국당은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규모와 조성경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와 친·인척들의 예금계좌 내역이 신한국당에 넘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양당의 특별감사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10월 16일 신한국당 박헌기·김영일·이국헌·황우여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은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무고 등의 혐의로 김대중 총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10월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김대중 총재 비자금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또한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이 검찰에 김대중 총재 비자금설 수사를 지시하도록 건의하라는 신한국당 의원들과, 비자금설 제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의 단독회담을 촉구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피했고, 양당 영수회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정감사 기간 중반부터 시작된 여야간 비자금 공방은 아무런 결론 없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10월 21일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유보를 공식 발표 하고서야 일단락되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론분열, 경제회생 어려움, 국가 전체의 대혼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대통령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비자금 수사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여야는 10월 18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비자금 수사에 대한 정쟁을 이어갔고, 국정감사는 비능률적이고 결론 없는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마감되었다.

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단축국회(제185회)

1997년 9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0일 회기로 열린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제185회)는 12월 18일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일정을 이유로 여야 간 조정에 의해 11월 18일 본회의까지 70일간으로 단축운영되었다. 9월 중순 추석 귀향활동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10여일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것을 포함하면 제185회 정기국회의 실제 운영기간은 약 50여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5회 정기국회는 각 정당과 소속의원들이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매몰되면서 그 어느 정기국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정기국회 개최 이후 각 정당들은 대통령선거를 위해 각종 행사나 모임을 연이어 개최하거나 참여하였고,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행사참석 관계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본회의 등에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회의가 공전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나마 이루어진 각 일정에 있어서도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의 정치공방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그 결과 정기국회에서 의안심의 등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개회 이후 10여 일 간의 휴회 후 10월 1일부터 이루어진 국정감사는 여야 간 비자금 공방으로 변질되었고, 이후 대정부질문 또한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벌이지 못하였다. 특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이듬해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또한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참석과 단축심의로 인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각 언론사는 이구동성으로 부실국회를 비판하는 사설을 쏟아내었다.

이처럼 각 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선거에 몰두하면서 단축된 정기국회의 주요 의안처리 결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실하였다. 제185회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370건의 법률안 중 단 78건만이 가결되었고, 폐기 및 철회된 48건을 제외하고도

의 경우에는 판사출신 법제사법위원들과 검사출신 법제사법위원들의 대립 끝에 개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처럼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11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199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선거를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휴회를 결의한 후 정기국회를 사실상 폐회하였다.

사. IMF 관리체제와 금융개혁법안 처리(제186회)

1997년 우리나라는 대기업 부도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누적으로 인하여 금융위기에 봉착하였다. 국내 금융위기가 연말 외환위기로 확대되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12월 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경제과단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야는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서면서 시급해진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2월 22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제186회 임시국회가 1주일 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제186회 임시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개최 당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안’,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4개 의안을 논란 없이 처리하였다. 이어 12월 23일에는 재경경제위원회를 열고 외채상환대책을 집중추궁 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논의하고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개인의 외화예금, 외국금융기관의 달러매도, 외국금융기관 예치 외화예금의 국내이체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개인송금 시 실명확인 면제범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1998년 4월 출범시키기로 하는 한

편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고, 1998년부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세율을 15%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이전 수준인 2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2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핵심쟁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느냐 총리실 산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체계상이나 업무효율 면에서 재정원 산하에 두는 것이 옳으며, 오랜 기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야 간 의견차이는 한나라당이 내부적 논란 속에 대통령당선자의 의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기로 수정합의하였다. 금융감독기구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타 법안들은 무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다만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관련하여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기립표결을 거쳐서야 가결되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안처리를 완료한 이후 여야는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정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금융개혁 및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관련 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아.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제187회)

1997년 말 금융개혁법안 처리 이후 경제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1998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김대중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상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늦춰지면서 외국금융기관들의 추가 금융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 하에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1월 임시국회를 1월 15일부터 사흘간의 회기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 당일 다시 합의를 통해 회기를 7일로 연장하였고, 이로써 1988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제187회 임시국회가 개최되었다.

제187회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은 국가보증동의안과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였다. 개회 후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는 한국은행과 외환은행이 1998년 발행하는 외채 150억 달러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정부는 지급보증 없이는 여전히 원활한 외환수급이 어렵다며 국가보증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8년 1월 19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채권단의 고금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후 여야는 1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중장기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증동의안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80억 달러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다. 단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70억 달러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리일 것, 채무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국한할 것, 예산회계법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채무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이자율 등 보증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등 3가지 내용을 동의조건으로 달았다.

한편 또 다른 주요쟁점이었던 정리해고 관련 법안은 거듭하여 논란을 뿔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정리해고제 법제화 불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회기 내 법제화를 주장하는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임시국회 개회 전날인 1998년 1월 14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문제를 임시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1월 15일 공식 발족하면서 여야는 정리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처리를 노·사·정위원회의 사전 논의 이후로 미루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에서 1월 15일부터 노·사·정위원

회는 정리해고제 등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갔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금융기관 고용조정(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이후 계속된 회의 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논란을 벌인 노·사·정위원회는 1월 20일 접점을 찾아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준수를 전제로 고통분담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10개 의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관련 의제들을 2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일괄 타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여야를 포함한 노·사·정은 최대 쟁점인 고용조정 문제를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후 구체적 협상과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결국 여야는 두 핵심 쟁점 중 '199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150억 달러)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만을 1월 21일 본회의를 통해 표결처리 한 후 제187회 임시국회를 폐회되었다.



▲ 노·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광옥 위원장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3시간 고통분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1998년 1월 20일).

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회와 쟁점법안 처리(제188회)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회인 제188회 임시국회가 2월 2일 14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제188회 임시국회에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앞선 187회 임시국회에서 이월된 정리해고 관련 법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 추경예산안 등 중요 의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각 쟁점에 대해 정당들이 의견 차이를 보여 법안심의회와 처리과정에는 여야간 갈등이 노정되어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가 여야 갈등의 핵심쟁점이었다. 공동여당의 입장이 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두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권한집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새 정부 초대 총리에 한해 청문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여 독자적인 인사청문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립양상을 보였다.

추경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국제통화기금의 긴축 재정 편성 요구와 고용안정기금 확충 등을 위해 1998년 예산에서 7조 4,000억 원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러가는 정부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리해고 관련 법안에 있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세부 쟁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 단독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계가 단독상정 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극한적 대립양상이 전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원회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노동계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노·사·정위원회 위원인 이강희 의원을 철수시키는 등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2월 6일 근로자의 고용조정제 도입 등

을 골자로 노·사·정 경제 3주체 간의 고통분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하였다. 공동협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고용조정제를 즉각 시행하고 교원노조를 1999년 7월부터 허용하며 실업·고용안정대책 재원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 10대 의제 100여개 과제를 일괄 타결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차 과제로 넘겼다

이처럼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여야는 2월 11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이한동 대표가 참석한 총재회담을 열고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쟁점협상은 6인회의로 넘겨졌다.

총재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2월 11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통상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하였고, 결국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여야가 각각 제출해 놓은 인사청문회 법안을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러한 여야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총재회담의 합의에 따라 여야 3당은 2월 11일 6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6인회의는 첫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정리해고와 실업대책,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해 쟁점을 도출한 뒤 2월 12일 오전까지 6인회의에 넘기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6인회의는 도출된 쟁점을 두고 계속 협상을 벌였고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월 13일 새 정부의 첫 조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시키며 일부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합의결과 노·사·정 관련법안은 회기 내에 처리하며,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청와대와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갈등을 표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명예 총재의 국무총리 인준 동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다른 쟁점과 연계하지 않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이나 재정경제부 산하로 두는 것을 전제로 첫 조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기술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연합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해 논란을 벌였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는 2월 14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용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정리하고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관련 7개 법안, 은행법 개정안 등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 10개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법 등 모두 18개 법안과 해고자 생활대책지원금 확보에 관한 결의안 등 19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 기구화 하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폐회 예정이었던 제188회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간 연장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였다.

이후 여야는 2월 16일 6인회의를 재개하고 기획예산처의 소속을 대통령직속에서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별다른 반론없이 30여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어 열린 본회의가 정을 넘기면서 여야는 회기를 또 다시 하루 연장하였고, 차수를 변경한 후 2월 17일 부총리제 폐지와 장관급 6개 부처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을 의결하였다.

제3절 당내활동

1. 민주자유당(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가. 1993년도

1) 새 정부 개혁 프로그램 마련

1993년 1월 초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직후인 1월 9일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김영삼 총재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77개 정책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치·행정, 경제, 사회복지 분야 30여개의 정책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정치·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은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대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조치, 행정쇄신추진위원회 설치, 지방행정구역개편,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설치, 의식개혁 국민운동 전개, 지방민영방송 허용, CATV·종교방송 증설 등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김영삼 총재가 내세운 '깨끗하고 강력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부정방지위원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 행정쇄신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등 5대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분야의 개혁프로그램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및 형평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민주자유당은 이를 위해 1993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우루

과이라운드(UR)대책, 중소기업운영과 경제안정대책, 세정개혁, 신산업정책, 금융개혁, 신농정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전략, 새로운 토지정책, 서민주택정책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채택하였다.

한편 교통·환경·주택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영세민·모자가족·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상수원 보호, 청정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특별종합대책, 서울시 지하철 추가건설 등 교통난해소, 식품·의약품 대책,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달동네 대책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기획단’을 설치하여 교통통제기구 설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발족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우선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민주자유당은 20여 일 동안 관계부처와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과제별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문제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 정치특위 구성과 정치개혁 방향 공청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개혁과제 중 정치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993년 3월 19일 정치개혁을 추진할 당내 기구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하 정치관계법특위)를 구성하였다. 소속의원 22명이 참석한 정치관계법특위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기타 정치관계법 개정을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였다. 정치관계법특위는 본격적인 개정안 마련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개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993년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한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개혁 실천자로서의 민주자유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서울대 길승흠 교수), 선거제도 및 선거

풍토 개혁(서울대 최대권 교수),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건국대 최한수 교수), 공직사회 풍토개혁(전북대 정재길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주제발표 후 민족통일연구소 백영옥 연구위원, 한국일보 이성춘 논설위원, 부패추방운동본부 신대균 사무처장, 한기찬 변호사, 중앙대 윤정석 교수,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통해 길승흠 교수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대폭적인 개혁지향적인 호남인사 기용 등 호남대책, 악법개폐를 통한 정치개혁, 평등주의화를 통한 사회개혁 등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에 실패하면 ‘김영삼 개혁’도 무너질 것이라며 경제문제를 강조하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최대권 교수가 순수한 소선거구제를 위해 전국구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최한수 교수는 정치자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모든 정치자금을 기명 공개하고, ‘소액다수원칙’에 따른 제공액과 횟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재길 교수는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을 전제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일정 범위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주장하였다.

3)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추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안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실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자유당은 1993년 6월 ‘농어촌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농지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어촌 개발 및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정도 추진하였다.

민주자유당 내 농림수산국은 6월 15일 농어촌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번째 행사

로 서울역 광장에서 김종필 대표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사무처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결의대회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은 농수산인을 위한 농수산정책과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국산 농수축산물 장려운동을 펼쳐 우리의 농어촌을 살리자고 호소하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에 4개조로 나뉘어 ‘우리 농수축산물을 먹읍시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전단 10만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0월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고위당직자 및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두 번째 행사로 ‘농기계 보내기 기금마련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여의도 광장에서 출발하여 수출입은행~맨하탄호텔~KBS본관 앞으로 이어지는 4km에 걸쳐 진행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상부상조를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도농간의 마음 엮기’의 실천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모은 성금 전액으로 농기계 70여대를 구입하여 10월 26일 민주자유당 중앙당 대강당에서 농기계 전달식을 갖고 농민 대표자 25명에게 전달하였다.



▲ 민주자유당 김종필 대표 등이 여의도 광장에서 농촌에 농기계를 보내기 위한 기금마련 걷기대회 행사를 벌이고 있다(1993년 10월 16일).

한편 민주자유당은 10월 15일 농수산물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농지와 주변산지 및 농어촌 주택 등의 생활환경 종합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농어촌 정비법(안)'을 확정하였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와 주변산지 이용을 위한 원예단지·주말농장·실버타운 조성, 200평 이내의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된 주말농장에 대한 비농민 소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4) 개혁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체제 구성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재산공개과문 등을 겪으면서 '인치'에 의한 개혁 논란을 겪어온 민주자유당은 1993년 6월 들어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 '제도개혁'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자유당은 기존의 정치관계법특위와 경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책특위)를 재편하는 한편 새로이 사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회개혁특위)를 신설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거당적 개혁체제를 구축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정치개혁을 담당하기 위해 3월 19일 3개 분과로 구성된 당내 정치관계법특위는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의 편제에 맞춰 2개 분과로 재편하였고, 경제대책특위는 1993년 6월 1일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6월 2일에는 사회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그간 정치·경제분야에 치중해오던 개혁제도화 노력을 사회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3개 특별위원회는 1992년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 분야의 법률을 제·개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당내 다수 의원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재편된 정치관계법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법 등 4개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담당하였다. 제2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및 지방자치법 등 개혁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대책특위는

산하에 금융, 세제·재정, 과학기술, 행정규제완화, 지역발전·교통, 농수산 등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금융개혁방안, 세제개혁방안, 중장기 재정계획, 과학기술 투자확대, 각종 인·허가 등 규제완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신농정대책 등 3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혁안을 마련해 나갔다.

한편 신설된 사회개혁특위는 산하에 교육, 행정쇄신, 환경, 노동, 외교·안보, 사회·복지, 문화·공보 등 7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사회분야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회개혁특위는 세 특별위원회 중 가장 많은 46명의 위원이 투입되었고, 김종호 정책위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개혁특위에서는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의 전반적 재검토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환경대책, 노동관계법 개정, 여성·노동·노인대책 등이 주요 관심의 제로 논의되었다.

5)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공청회

민주자유당은 1993년 6월 30일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앞서 정부 부처와 경제계, 기업인, 학계,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의 형평성과 경제논리를 들어 이 법의 폐지나 보완을 주장하는 측과 법집행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할 경우 신용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공혁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961년 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이 민사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부정수표 발행인(기업주)의 신체를 구속해 기업주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가속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도어음은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 부정수표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법안폐지론자들은 부정수표단속법이 창업의욕을 꺾고, 재무구조가 취약

약한 중소기업에 특히 불리한 제도라며 법안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수표의 신용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폐지할 경우 금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실제 부정수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 과태료 제도로 대체할 경우의 법적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6) 당원의식개혁 실천운동 전개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1993년 7월 그 사전 단계로 우선 전국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원의식개혁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당과 당원이 정치권의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993년 7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전달하였다. 연석회의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개혁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우리 500만 당원이 하나가 되고 우리 4,000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운명체로 추진해야 할 국민의 개혁, 한국의 개혁으로 발전·승화시켜야 한다”라고 그 의미를 전하였다. 또한 “당이 중심이 된 정치개혁, 내각이 중심이 된 행정개혁, 경제주체가 중심이 된 경제개혁, 시민이 중심이 된 의식개혁으로 우리의 개혁은 전국민적·전사회적인 실천으로 더욱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생활 속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적이고 봉사하는 당원상을 확립한다는 방침 아래 당원교육과 수련대회 등을 통해 ‘당비납부운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준수’,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 ‘대민 자원봉사활동 적극 전개’ ‘근검절약 실천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7)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동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경제개혁의 토대가 제공되었다고 전제하고 금융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줄이기 위해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일정기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소 영세기업체들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간소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는 검은 돈의 투기적 행위만을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중소기업, 영세기업, 일반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투기혐의가 없는 선량한 금융거래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8월 17일 김종호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서상목·나웅배·이승윤·강경식 의원 등 경제 전문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실명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논의하였다. 대책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영세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9월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른 국민의식 어떻게 변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구본호 한양대 교수는 금융실명제 정착의 중요 조건으로 세제 보완책 마련, 국민의식과 관행의 전환,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서 떨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인명진 경실련 집행위원은 토론을 통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파급효과는 나라 전체적인 것이지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금융실명제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중국 공산당과 교류

민주자유당은 중국 공산당 국제교류협회의 초청에 따라 1993년 11월 9일 조부영 제2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조용직 부대변인, 노승우 정책연구실장, 김형오 의원, 이우각 국제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공산당과의 첫 교류를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 대표단은 11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오학겸 국제교류협회 회장, 이숙정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대표단은 상호교류를 통한 양당 간의 우호친선 및 협력관계 증진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중국 대표단은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상호 내정불간섭 등 중국공산당의 대외교류 4대원칙을 전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대표단도 동감한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회담결과 양당 대표단은 민주자유당 대표단의 중국방문이 교류의 시작임을 확인하는 한편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양당간의 정기적인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양 측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민주자유당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과 내년 상반기 중 양당의 고위급 대표단의 상호방문 실현 노력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9) UR 이후 농수산대책에 관한 토론회

민주자유당은 1993년 12월 16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어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UR이후 농수산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UR 이후 농촌 생존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광언 박사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농가구조의 재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농업생산력에 활용하는 혁신을 도입하여 영세소농 대신 전업농 중심의 농촌 재편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박사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농업 후계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경쟁력을 배양하고 외국 농산물의 검역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농촌인력 흡수를 위한 농외소득을 보장할 유통·수송 등 농업 부수산업의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동희 교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 농촌도로 확대, 농수산물시장의 대단지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 농업교육기관 및 농가·정부를 연계한 농업경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10) 귀향활동 지침 시달

민주자유당은 1993년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연말 귀향활동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는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조직역량을 총결집하고 깨끗한 정치구현으로 신뢰받는 정당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민주자유당은 문민정부 개혁 1년의 성과,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 등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여당의 대책방향,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등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관내 불우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활동 전개, 민속놀이 참석 등 내실 있는 지역 활동,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캠페인 전개, 현수막 게첩 지양, 경조사 화환 증정 억제 등을 세부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날 김종필 대표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민들은 오늘의 추세를 수용·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귀향활동을 통해 쌀 개방으로 걱정이 많은 농민들에게 UR협상 내용과 그 대응책을 소상히 알려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해 달라”라며 UR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특히 강조하였다.

나. 1994년도

1) 1994년도 당 운영계획 보고

민주자유당은 1994년 1월 31일 김종필 대표위원과 문정수 사무총장, 이세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한동 원내총무 등 당3역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당사를 방문한 김영삼 총재에게 1994년 당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민주자유당의 1994년 운영계획은 정치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두 가지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보고내용에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체제정비를 비롯한 당 체질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상 정립, 정치관계법 일괄타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 등 당무, 원내활동, 정책 등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와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김영삼 총재는 “당 체제와 운영 면에서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강구해 새로운 집권당 상을 정립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하였다.

1994년 민주자유당 세부 운영계획은 당 조직 정비, 선거풍토 개선, 당내 민주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당 조직과 관련하여 우선 7,000명 수준인 전당대회 대의원 수와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중앙상무위원 수를 대폭 축소하여 정예화 하며, 지구당의 경우에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정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도지부장을 자유경선으로 선출하여 당연직 당무위원으로 임명해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선거 때마다 중앙당에서 지원해 왔던 선거비용의 지원을 중지하기로 하는 한편, 지구당 하부조직도 점진적으로 ‘자원봉사체제’ 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2) 사무처 당직자 기업체 위탁 연수 실시

민주자유당은 대기업의 첨단 경영기법과 정당업무와의 접목방안을 찾기 위해 1994

년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용인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사무처 당직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중앙당 및 시·도지부·지구당 등 일선 사무처 당직자 839명을 대상으로 하여 1·2기로 나누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민주자유당이 전례 없이 당직자 위탁연수를 선택한 것은 철저하게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며 무한경쟁에서 생존전략을 세워나가는 기업체의 생리와 자세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직자들로 하여금 발상의 전환을 학습하고 체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당직자 연수의 의미는 1월 26일 개최된 당직자 연수회에서 “과거의 고리타분한 의식구조로는 세계를 뒤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적한 김종필 대표의 인사말과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기르려면 우리 정치권부터 변해야 하며 신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개방화의 실상과 파고를 헤쳐 나가는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잘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문정수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연수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식의 변화와 체질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삼성 측이 ‘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기업의 본질과 경쟁력’,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변화의 선두에 서라’, ‘나부터 변해야 한다’ 등을 주제로 마련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시청각교육, 강연, 산업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필요한 긴장감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기업·국민의 삼위일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삼성의 신경영 철학과 그 실천사례 등을 소개받는 한편, 시민편의주의를 제일로 삼는 일본 이즈모 시의 사례도 비디오 상영을 통해 학습하였다.

3) 환경보호 녹색운동 전개

1994년도 민주자유당의 당무활동 목표는 ‘국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 구현’으로 설정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4년 2월 15일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창당 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생활개혁실천 등을 다짐하는 ‘생활정



▲ 창당 4주년 기념식에서 김종필 대표가 '생활정치실천 선언문' 을 채택하고 있다(1994년 2월 15일).

치 실천 선언문' 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민주자유당은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해 국민의식 개혁의 선봉에 서고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며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개혁을 실천하여 선진국형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민주자유당의 실천운동은 환경보호 녹색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민주자유당은 2월 1일 중앙당·서울지역 환경보호 녹색운동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부산, 대구·경북, 경기, 경남지역 환경보호 녹색운동본부를 발족하는 한편, 환경 감시전화 가동, 환경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중앙당은 물론 전국 지구당 차원의 상시 환경보호체제를 구축하였다.

민주자유당 녹색운동 추진본부는 시·도별로 한대씩 지급된 승합차를 활용해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1일 1회 순회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청년당원들이 즉각 출동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자유당은 환경보호 녹색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연중캠페인으로 진행된 점과 중앙당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구당 자체예산으로 운영된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내세웠다. 또한 1994년 11월 11일 경기도 안양시 학의천에서 실시한 '샐강 살리기 운동' 을 환경보호 녹색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당보를 통하여 1994년 2월부터 한 해 동안 중앙당 및 전국 15개 시·도지부, 237개 지구당별로 환경보호 녹색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당원 15만 명이 참여하여 총 1,400여 건에 달하는 환경보호 녹색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중국공산당 방문

민주자유당은 1994년 3월 17일 중앙당사에서 중국공산당 대표단(단장 주선경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 5명)의 예방을 받고 양당 간의 본격적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집권여당을 방문한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날 방문은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의 초청으로 민주자유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자유당과 중국 공산당 대표단은 논의 과정에서 1994년 중 양당의 고위급당직자가 상호 방문하고 청년·여성 및 직능조직 등 당 산하 각급 조직 간의 교류를 확산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정치·경제·과학·기술·역사·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가 당사를 방문한 주선경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접견하고 있다(1994년 3월 17일).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후 민주자유당은 문정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방중대표단을 구성하여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공산당을 공식 방문하였다. 방중대표단의 문정수 단장은 중국 방문 중 오학겸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비롯하여 이숙쟁 대외연락부장, 주선경 대외연락부 부부장,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공산당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양당 간 우호·친선·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방중대표단은 고위급 당직자 교류, 양당의 지방당을 비롯한 각급 조직 간의 다각적인 교류확대, 한·중경제협력방안(항공 협정 및 과학기술 교류),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보존 및 윤봉길 의사 기념동상 건립 추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중국공산당과의 당 대 당 직접 교류를 통해 북한 핵개발 등을 둘러싼 동북아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대표단 중국방문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5)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민주자유당은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래에 운영되어 왔던 ‘국제전략화특별위원회’를 1994년 1월 26일 당내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2개 분과 14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가경쟁력 강화특위는 의원·국책자문위원·중앙상무위원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여하였고, 민주자유당은 이를 통해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각종 당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견을 직접 접수하여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정책 마련에 반영하고자 중앙당사 민원실 내에 ‘규제완화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소위원회는 각종 규제완화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수차례의 자제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된 뒤 공청회와 세미나 등

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융소위원회에서는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 개편,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추진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금융산업 업무영역, 외환 자본거래 자유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소위원회는 기초과학반, 생산 기술반, 정보통신반 등 3개 반을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천 항목을 추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총집결하여 과학기술정책기본법안의 제정을 검토하였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는 기반시설과 관련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개 반을 편성하여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교통소위원회는 대도시 교통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두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하였다. 행정쇄신소위에서도 행정쇄신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 국가재난 관리체계 개선, 직업공무원제 개혁 등 9개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3개 반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그 이외 소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소위원회가 연구·검토한 정책건의서를 취합하여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6) 1995년도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 유치

민주자유당은 1992년 10월 국제민주연합(IDU, International Democrat Union)³⁷⁾ 정 회원에 가입한 이래 ‘정치올림픽’이라 일컫는 ‘국제민주연합 당수회의’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공식·비공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1994년 4월 2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IDU 집행위원회 회의에 이승윤 의원 등 민

37) 국제민주연합(IDU)은 1983년 런던에서 당시 영국 보수당의 대처 총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전 세계 보수 민주정당 연합체로서 사회주의계 정당 연합체인 국제사회주의연맹(SI)에 대항한 조직이다. 1994년 현재 가입된 정회원은 29개국(30개 정당)이며, 준회원은 4개국(4개 정당)이 있다. 당수회의는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회원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당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한다.

주자유당 대표단을 파견하여 1995년 IDU 당수회의 서울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 그 결과 IDU 집행위원회는 1994년 5월 1일 회의에서 당수회의를 199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IDU 당수회의에 앞서 1994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IDU 산하 지역기구인 태평양민주연합(PDU, Pacific Democrat Union) 회의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PDU 서울회의에는 미국·호주를 비롯한 6개국 17명이 참가했으며 민주자유당 측에서는 이승훈 PDU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이 참석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 회의를 통해 김영삼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북한 핵문제 타결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옹호함으로써 정당차원의 실리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에서 개최될 1995년 IDU 당수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 정당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김종필 대표위원은 만찬사를 통해 "2박 3일간의 짧은 시일이지만 변화와 개혁 속에 발전해 가는 한국과 민주자유당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우리의 우의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민주자유당의 입장을 전하였다.

7) 전광판·지하철 홍보 광고 실시

민주자유당은 집권당의 구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4년 2월 당헌 개정을 통하여 홍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9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는 1994년 4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당 홍보의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 홍보전략을 수립한다는 원칙 하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 홍보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4년 5월 23일 뉴스 전광판과 지하철 전동차에 첫 광고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대 국민광고는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뉴스전광판 광고는 12월 중순까지 서울 프라자호텔 뒤편 태평로 빌딩과 마포 공덕동 사거리 중소기업빌딩의 전광판 등 2곳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수도권 및 서울시 지하철 1·2·3·4호선 운행차량 중 1,000량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부착 광고물을 게재하였고, 이는 해를 넘겨 1995년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위원장이었던 문정수 사무총장은 “국민 속에 파고들어 당의 이미지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발굴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현안정책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물론 주택·교통 등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상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8) 한반도 위기 타개 결의문 채택

1993년 3월 북한이 유엔(UN)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자 민주자유당은 1994년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위기상황을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 정부, 국민에게 전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과 방침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세계사적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일성 독재체제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는 ‘한총련’ 등 좌경세력을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기강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검토하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IAEA의 무조건 전면사찰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약과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대북체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비, 강력한 국방태세를 수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

9) 가뭄극복 지원활동

민주자유당은 1994년 7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뭄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우선 하절기 재해대책 현황과약 및 대책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당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시켰다. 또한 7월 13, 15, 18일 3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재해대책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모금된 기금을 가뭄 피해지역에 전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정수 사무총장은 7월 20일 농림수산부 가뭄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가뭄피해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소속 국회의원 및 사무처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2%씩을 각출하여 모금한 2,000만 원의 가뭄대책기금을 전달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 민주자유당은 이를 계기로 중앙상무위원, 시·도 및 지구당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당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당의 가뭄 극복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중앙당 당직자의 가뭄 현지방문 위로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종필 대표위원은 7월 18일 가뭄실태 파악을 위해 강삼재 기초실장, 이승무 당 재해대책위원장, 양창식 국회농림수산위원장, 김종하 경남도지부위원장 등과 함께 가뭄피해가 극심한 경남 고성·사천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농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김종필 대표위원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도지사 등으로부터 가뭄 피

해상항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늘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등 예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비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과 정부는 7월 20일 비상 가뭄피해대책회의를 열고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과 민간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착정기(우물 파는 기계)를 총동원하여 500여 곳의 암반 밑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무총장반, 정책위원회 의장반, 원내총무반 등 3개 반을 편성하여 7월 21일과 23일 가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위로활동을 펼쳤다. 부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의 시·도 당직자들의 여름휴가는 월말까지 보류되었고,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의 하계 정기휴가도 지방 연고지역의 일손돕기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10) 여성정치교실 개설

민주자유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할 여성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15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1994년 6월 2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여성정치교실’을 개설하였다. 당내 여성국이 주관하여 각 지역별 유력한 여성 정치인 지방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여성정치교실에서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의 선거전략, 선거관련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등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내용을 교육하였다.

6월 2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린 경기지역 ‘여성정치교실’에는 도내 유력한 여성정치인 지방생 25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첫 여성정치교실에서는 사단법인 예지원의 강영숙 원장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부천시의회 이영자 의원이 시의원 선거에서의 현장체험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수원대학교 이달순 교수는 지방자치선거에 여성후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여성정치교실은 여성의 지방자치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입후보 희망자를 위한 교육의 장이었으며, 전국에서 총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를

통해 정치교실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11) 수도권 교통난 완화 종합대책 마련

민주자유당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산하 도시교통소위원회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 1994년 3월부터 8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의수렴을 계속해 왔다. 특히 6월부터는 각계 민간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한 대도시 교통종합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수도권교통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였다. 교통종합대책기획단의 토론회에는 학계의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관계자 등 30여명과 당내 교통문제 관련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교통종합대책기획단은 이 초안을 토대로 1994년 11월 9일 각계 전문가 및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종합대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당 소속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30대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인 '수도권 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 종합대책을 12월 초 당 총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교통종합대책기획단에서 마련한 수도권교통종합대책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당

30대 주요 추진과제

| | | |
|--------------------------|------------------------------|-----------------------------|
| (1)수도권 도시철도망 확충 | (11)차량보유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법제화 | (21)신호기 및 도로표지의 체계적 관리 |
| (2)버스의 노선개편과 주행속도 제고 | (12)노외주차장업의 자율화 | (22)교통체계관리사업(TSM)의 지속적 추진 |
| (3)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구축 | (13)직장별 교통수요관리의 체계적 추진 | (23)교통규칙 위반자의 상시 단속체계 확립 |
| (4)택시의 고급화와 준택시 서비스의 개발 | (14)업소별 고객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 (24)교통문화 선진화 운동의 개발 및 전개 |
| (5)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 (15)도시고속도로망의 확충 | (25)생활권 단위의 도심개발 및 재개발 추진 |
| (6)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교통대책 강구 | (16)교차로 구조의 개선 | (26)대중교통 촉진형 역세권 개발 추진 |
| (7)한강 주운(舟運)의 개발 | (17)이면도로의 전면적 정비 | (27)교통영향평가제의 실효성 강화 |
| (8)교통세의 인상 | (18)간선도로의 기능강화 | (28)저속위성도시군(수도권 업무도시벨트)의 조성 |
| (9)혼합통행로의 징수 | (19)일방통행제 및 다인승(HOV)우선통행제 실시 | (29)공간계획체계의 개선 |
| (10)시내 노상주차장의 전면적 유료화 | (20)신신호체계 및 「교통종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30)종합교통계획의 수립 |

면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종합하여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 도로망의 구조 및 활용 효율화, 교통문화의 선진화, 교통수요 절감적 수도권 개발 추구, 국토의 균형발전 노력 효율화와 그에 따른 운영목표 및 각 운영목표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수도권교통종합대책은 승용차 보유의 급증세를 감안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도로 등 교통시설의 적절한 공급확대와 효율적 이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양측의 균형을 모색한 점이 특징이었다.

다. 1995년도

1) 여의도 연구소 설립

민주자유당은 1995년 2월 3일 외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정당이 운영하는 최초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분야의 정책개발과 중장기 국정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의도연구소는 ‘독립재단법인’으로 운영되었다. 민주자유당은 1995년 2월 6일 여의도연구소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2월 23일 김덕룡 의원과 이영희 인하대 교수를 각각 초대



▲ 민주자유당 정재철 중앙상무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여의도연구소’ 현판식을 하고 있다(1995년 2월 6일).

이사장과 초대 소장에 임명하였다. 이후 여의도연구소는 공개채용을 통해 연구진을 구성하여 4월 1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여의도연구소는 당 정책위원회와 연계하여 국정지표인 세계화의 구체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선거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실을 두고 당 정책위원회의 제1(정치·외교), 제2(경제), 제3(사회·문화) 정책조정실과 대응하게 편성하여 연구소에서 생산된 정책들이 당론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개발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여의도연구소는 5월 12일 처음으로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7월에는 정책연구 결과를 수록한 「여의도 논총(제1권: 세계화시대의 지방화)」을 발간하였다. 이어 7월 25일에는 「지방선거 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2) 김영삼 정부 2년 그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5년 3월 6일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 2년, 그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 동안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치·사회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현승일 국민대 총장은 김영삼 정부의 치적으로 정치와 검은 돈의 유착단절과 공직사회 정화 및 군 비리 척결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임기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장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정착, 금리자유화 조치, 정책금융의 축소, 총액대출제 실시 등 은행자금융동의 자율화와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추진으로 민간경제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한 점 등을 치적으로 평가하였다.

3) 중앙상무위원회 경선

민주자유당은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및 분과위원장을 경선을 통하여 선출한다는 방침에 따라 4월과 5월 중앙상무위원회 지도부 선거를 실시하였다. 일정에 따라 우선 4월 3일부터 7일까지 분과별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이어 5월 11일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7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서는 환경, 보건복지, 여성, 청년 등 4개 분과위원회만 복수후보자가 나서 경선이 실시되었고, 13개 분과위원장은 단일후보가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새로 선출된 중앙상무위원회 각 분과위원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분과명 | 당선자 | 분과명 | 당선자 | 분과명 | 당선자 |
|------|-----|--------|-----|-----|-----|
| 국제통일 | 손성택 | 재정경제 | 이용 | 교육 | 민병선 |
| 문화체육 | 이명복 | 농림축산 | 전동룡 | 수산 | 주진우 |
| 통상산업 | 황승민 | 정보과학 | 양문현 | 건설 | 임원준 |
| 교통 | 배정기 | 환경 | 우경선 | 노동 | 이득복 |
| 보건복지 | 김길수 | 중소기업진흥 | 김직승 | 여성 | 김봉임 |
| 청년 | 김남경 | 이북도민 | 윤관 | | |

한편 민주자유당은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경선을 위해 류승규 중앙상무위원회 운영기획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 후 경선에 들어갔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후보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선거운동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입후보등록 결과 정순덕 의원만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경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중앙상무위원회는 일정에 따라 1995년 5월 1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주요 당직자와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순덕 후보를 만장일치로 의장에 추대하였다.

4) 제1차 전국위원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5년 8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 위원, 참관 당원, 각계인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은 김윤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는 한편,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당 체제를 정비하였다. 김윤환 대표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우리 민주자유당을 이 나라를 가장 올바르게 이끌어 갈 국정의 주체로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단합하고 정성을 모아 간다면 오늘의 시련을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은 21세기를 향한 민주자유당의 다짐을 담은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채택하였다. 국민에게 보내는 글에서 민주자유당은 “6·27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감정을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역량을 한데 묶는 ‘국민 대통합, 화합의 정치’를 위해 민주자유당이 구심체가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

5)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5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제6차 당수회의를 30개국 1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평화와 안정, 자율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당수회의에는 IDU 의장인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잭 캠프 전 미국 주택장관, 헬리 바버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이고르 가이다르 러시아 전 총리, 제러미 헨리 영국 외무차관 등 각국의 전·현직 각료 등이 참석하였다.

IDU당수회의에 앞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하기구인 국제청년민주연합(IYDU) 국제여성민주연합(IWDU)이 미래의 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노인문제 등에

관한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행사인 IDU 당수회의는 9월 1일 시작되었다. 본 행사는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개회식 기조연설에 이어 뉴트 깅리치 미국 하원의장의 화상연설, 신규회원 정당의 IDU현장 조인식 및 수락연설, IDU 임원 선출, 전체 토론회, 지역별 현안 토론회, 성명서 채택, 당수들의 기자회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세계화를 추구하는 민주자유당’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는 세계 공동체의 시대로 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 서울 IDU회의가 회원정당 간 결속과 연대를 통해 민족 분쟁, 기아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IDU 서울 당수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한국은 세계화 정책을 통해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변화와 개혁 및 세계화를 추구하는 민주자유당의 정책에 관해 설명하였다.

한편 IDU는 전체 토론회 후 ‘서울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자유기업과 무역을 통한 시장경제 확장,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한국 등은 한 세대 사이에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번영의 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인류의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북한과 관련하여 무력사용 거부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제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뒤,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유로운 개방선거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6) 민생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민주자유당은 6·27 지방선거에서의 드러난 민심의 향방과 소재를 파악하여 겹쳐히 수용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의 제도적 완성’과 ‘민생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과 불만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반영, 민생개혁 전담기구 설치,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면조

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1995년 8월 태풍·호우피해가 발생하자 복구지원을 위해 당내에 ‘8·23 수해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자유당은 피해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고자 당정협의를 통해 풍수해 피해복구비로 3,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 모두 6,600억원의 복구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남해안·동해안에서 발생한 적조피해 및 해양오염 피해와 관련하여 ‘수산업 증·양식 생물입식비의 지원기준 2배 상향 조정, 중소어민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수협에서 영어자금으로 200억 원 추가 지원, 지역의료보험료 3개월 경감 및 3~6개월간 납부금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당내 민원국은 주요 일간지에 민생개혁 과제 발굴광고를 게재하여 약 1,000건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민원에서 도출된 관련 개혁과제는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 이관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주요정책 활동실적을 모아 10월 15일에는 ‘정책자료’ 제1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단행을 건의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모두 35개 법률 위반사범을 사면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수립 이후 최대규모인 750만 명에 대한 일반사면 조치가 이루어졌다.³⁸⁾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11월 1일 당내에 종합조정회의와 4개 분과로 이루어진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당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국책자문위원, 중앙상무위원 등 당내 주요 당직자들을 참여시켜 민생개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38) 12·2 일반사면 대상에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삭제 392만 5,000여 명,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152만 5,000여 명, 형의실효 58만 2,000여 명, 경범죄처벌법 32만 3,000여 명·행정처분면제 30만 명이 포함되었다.

7)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

1995년 10월 26일 검찰은 논란이 되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하여 수개의 은행에 가·차명계좌로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같은 날 중앙당사에서 제178차 당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자유당은 결의문에서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비리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국의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스스로 비자금의 전모를 한 톨의 숨김도 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확고한 개혁의지로 이 사건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당무회의 결의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당무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당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국의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스스로 비자금 전모를 한 톨의 숨김도 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은폐·축소도 있을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비리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정치적 비자금과 비리는 낱알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하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확고한 개혁의지로 이 사건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1995년 10월 26일
민주자유당

8) 청년층·여성유권자 지지기반 확산 프로그램 실시

민주자유당은 199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듬해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전체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청년층과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

는 여성의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9월 초에는 중앙당에 청년국을 신설하여 청년조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통해 신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강삼재 사무총장 주재로 당내 30~40대 청년층 지구당위원장과 중앙상무위원회 산하 청년분과위원회, 민주자유청년단, 한국청년연합회 등 당내·외 청년조직 대표자 그리고 전국 15개 시·도지부 청년담당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청년활동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직장인,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청년조직(가칭)여의도청년포럼 창설방안, 기존청년조직 활성화 방안, 특히 청년종합대책 추진기구로 중앙당에 ‘청년활동특별위원회’ 구성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어 9월 20일에는 중앙상무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급 간부회의를, 9월 21~22일에는 시·도청년위원장단 회의와 민주자유청년단 시·도단장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기존의 청년조직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전국 시·도청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상호 정보교류와 친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년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주자유청년단 시·도단장 회의에서도 1996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필승을 위해 각 시·도단과 지구당의 지단의 조직을 확충하는 등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그밖에 청년회의소(JC), 각 종교단체 청년회, 이북5도 청년회 등 기존의 당 외 청년회와의 유대활동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점 중 하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여성 유권자층의 지지기반 확산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30~40대의 젊은 여성당원들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여성조직의 활성화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점증하는 여성의 정치·사회참여와 권익신장에 발맞춰 여성단체장, 여성경제인, 여자경찰, 대기업 임원, 119 구조대원 부부 등 다양한 직능분야별 각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여성정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일환으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10대 시책’ 실현을 위해 시·도 순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

서 제기된 각종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하였다. 12월 초에는 여성 유권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공약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여성공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중앙상무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시·도별 지회를 결성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1996년도

1) 제1차 전당대회 겸 국회의원선거필승전진대회 개최

신한국당(1996년 2월 7일 민주자유당에서 당명 변경)은 1996년 2월 6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당직자, 국회의원선거 공천자와 대의원, 참관당원, 초청인사 등 1만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당대회 및 국회의원선거 필승 다짐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헌개정안과 대통령제 지향·국민통합정치 등을 담은 강령 및 기본정책을 통과시키고 제2창당의 새 출발을 선언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은 15개항의 핵심과



▲ 신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1996년 2월 6일).

제를 담은 국회의원선거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채택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치사를 통해 안정 없는 견제는 혼란을 의미할 뿐이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안정의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을 지역으로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치,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정치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선거를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자”라고 당부하였다.

전당대회에 이어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신한국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진대회에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영입한 이회창 전 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을 소개하며 김영삼 총재·김윤환 대표위원이 이들의 손을 맞잡아 올려 단합을 과시하였다. 또한 필승기를 앞세우고 각 권역별로 이름과 사진, 출마지역을 알리는 대형화면과 함께 공천자들을 일일이 호명하였다. 이에 해당지역 당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국회의원선거 필승 구호를 외치며 4·11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였다.

2) 신한국당 제1차 전국위원회 개최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 신한국당은 5월 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1,500여 명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새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신한국당은 제1차 전국위원회회를 ‘2천년을 향한 신한국 결의대회’로 명명하였고, 이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출발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신한국당은 ‘2000년을 향한 신한국 결의문’을 채택하고 ‘21세기 주도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위원회에서 김영삼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를 여는 큰 정치는 국민의 뜻이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엄숙한 명령이다. (……) 이제 대전환의 시기인 21세기를 앞서 이끄는 큰 정치가 나와야 한다. (……)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치가 미래를 앞장서 개척해야 한다. (……)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를 향한 정치, 맑고 깨끗한 정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2000년을 향한 신한국 결의문

우리 신한국당은 제15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 넓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깊이 새기면서 21세기 세계인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낮은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 정치」를 펼친다.
 하나, 우리는 지역할거주의의 대립을 청산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생활정치」를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몸소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민족번영을 위한 「통일한국건설」에 앞장선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 신한국당은 더욱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뜻을 바로 만드는 「21세기 주도정당」이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996년 5월 7일
신한국당 당원 일동

3) 민생개혁과제 확정 및 소위원회 구성

신한국당은 1996년도 하반기 정책운영의 기초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민생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신한국당은 1996년 6월 13일 중앙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33개 민생개혁 과제를 확정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중 민생관련 부분과 그동안 초선의원 정책토론회, 의원세미나, 영세기업지원정책개발회의 등을 통해 집약된 33개 과제는 정치행정 분야 4개, 경제 분야 19개, 사회 분야 10개로 선정되었다.

신한국당은 원활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하여 6월 19일 ‘민생개혁과제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개발 활동방향과 정책입안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시급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현장에 의원시찰단

을 파견하여 민생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 5~6일 천안연수원에서 의원 보좌관들의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둔 의정 활동 연수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생활현장에서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7월 19일 '신한국 민원인의 날' 선포식을 갖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정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정례화 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민원수렴을 위해 서울·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지구당 사무실 또는 관내 주민밀집 지역을 전용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는 '이동민원실' 을 운영하였다.

4) 지방자치 1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신한국당은 1996년 6월 26일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제반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와 자치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배제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감정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행 '도' 를 폐지하여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일 것과 광역시의 자치구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돌보지 않고 중앙당 위주의 행정만 펴고 있어 기초단체장의 탈정치가 시급하다며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였다.

5) 종합정보통신 운영체계(PC통신망) 구축

신한국당은 PC통신을 활용하여 20~30대 신세대를 비롯한 국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정보통신운영체계(PC통신망)를 구축하고 1996년 11월 29일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인 '신한국텔' 을 개통하였다. 신한국텔을 개통하기 전 신한국당은 기획조정·홍보·민원국 등 관련 실·국별로 PC통신을 산발적으로 운영

해 왔다. 그러나 7월부터 이를 사회개발연구소로 통합하여 전체를 연결하는 PC통신망을 구축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우선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등 4대 PC통신에 신한국당서비스 공간을 신설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광장, 정치권 25시, 대변인 통신, 정책게시판, SOS민원실 등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당 소속 연예인과 사용자와의 팬클럽 결성, 정보사냥대회 개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당직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 추진

신한국당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책 소위원회'는 1996년 8월 1일 중앙당에서 백남치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정부 측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및 관계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근무 직종 개발 및 고용 우선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개선책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업무과다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미흡 해소를 위해 전문요원 증원 및 예산편성 반영, 공원 입장료 징수직원 등 장애인이 쉽게 근무할 수 있는 직종 개발 및 고용가능 일자리 숫자를 파악해 신문가판대 등 노점 및 자판기·매점 허가와 공원입장료 징수직원 고용 시 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1997년 제정 예정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 복지부문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처럼 민자유치 추진, 민간의 복지참여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및 이웃돕기 운동을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모금법 제정 추진, 경기도 분당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직업재활센터에 대해 장애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입지선정을 재고하거나 전면 재검토 등이었다.

7)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표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현안 해결을 위하여 경제규제 완화와 민생개혁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자 1996년 6월 19일 민생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신한국당은 생활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검토 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물가안정과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둔 정부의 9·3 경제조치³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신한국당은 원내·외위원장, 경제전문가, 당내 정책관계자를 총동원하여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이흥구 대표위원은 10월 4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이어 1995년 10월 8일 정부와의 당정회의를 거쳐 '경제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신한국당의 정책대안은 금융개혁, 제조업 투자유욕 고취, 국제수지 개선, 사회간접자본 증대 등 모두 5개 골자로 구성되었다. 이날 확정 발표한 정책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금융부담 대폭 경감, 공장 신증설 조건 완화, 민자유치법 개정, SOC확충, 어음보험제 도입 검토,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고용·환경·교통 분야 등 51종의 각종 강제부담금·기금출연금 등 준조세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 근로자 세제·금융지원 확대, 4년간 공무원 1만 명 감축 등이었다.

8) 여성정책활동 강화

신한국당은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법」의 시행을 계기로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등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여성광장' 시·도지부 확대 실시 및 여성정책 설명회 개최 등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활동 강화에 나섰다.

39) 정부는 1996년 9월 3일 물가인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 억제, 업종별 가격표준인상률 제시, 임대주택 대량공급, 음성·불로스독자 세무조사,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은행이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여 1조 원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정부재정 최대한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9·3경제조치'를 발표하였다.

신한국당은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여성에게도 3군사관학교의 문호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당정은 이 같은 정책의지를 일관성 있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무 제2장관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 실무진으로 ‘여성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지방 여성조직과 여성정책 활동 또한 대폭 강화하였다. 여성위원회는 10월 7일 중앙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여성부장회의를 통해 중앙당에서만 개최해 온 ‘여성광장’을 시·도지부에까지 확대하여 격월로 개최토록 하는 등 여성조직 및 정책활동 강화방침을 시달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시·도 여성광장은 10월 23일 ‘21세기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열린 인천시지부 여성광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시·도지부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신한국당은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도 순회 여성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는 권영자 여성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진출, 오장순, 김영선 의원 등 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신한국당은 시·도 순회 여성정책설명회를 전후로 하여 방문지역의 시·도 여성단체장, 지역 언론사 여성 담당기자와의 간담회도 병행 추진하였다.

9)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 수립

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6년 6월부터 6개월여 동안 당 정책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한국당은 정부 관련 부처들과 조정작업을 거쳐 1996년 12월 24일 당정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

을 확정하였다.

신한국당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의 방향은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을 3층 이하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1세대 30평에 한해 자녀 분가용으로 보존등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시·군 등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한해 의료시설, 금융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대상 지역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에는 100호 이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집단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부과 인하 및 조세감면 방안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린벨트 지역이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면밀한 토지거래 분석과 투기조짐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도 더불어 설정하였다.

10) 후원금 공개모금행사 개최

신한국당은 1996년 12월 19일 집권당 사상 최초로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후원금 공개 모금행사를 개최하였다. '깨끗한 정치 밝은 미래'를 기치로 내걸고 신한국당 후원회가 개최한 이날 모금행사에는 당원과 시민, 후원회원 당직자와 소속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승윤 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정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큰 시험대에 놓여있다. (……)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오늘의 공개모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며 공개모금행사의 의미를 전하였다. 이에 이홍구 대표위원도 격려사를 통해 “새 정치 깨끗한 정치에는 깨끗한 돈과 깨끗한 동참자가 필요하다. (……) 오늘 행사를 계기로 떳떳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맑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전통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신한국당 후원회의 공개모금 행사에서는 14억여 원이 모금되었다.

마. 1997년도

1) 제2차 전국위원회 개최

신한국당은 1997년 3월 13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회창 고문을 새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전국위원 1,400여명과 당직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겸허한 자세로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전국위원회 위원 외에 초청인사와 참관 당원은 거의 없었고, 대회장에는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현수막 외에 호화로운 치장은 배제되었다.



▲ 전국위원회에서 이회창 고문이 새 대표로 선출된 후 김영삼 총재와 함께 만세삼창을 부르고 있다(1997년 3월 13일).

이회창 신임 대표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한국당 창당 이래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며 당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되찾아 고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새 출발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안보태세 강화, 제15대 대통령선거 승리, 국민신뢰 회복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새 출발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문

우리당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새롭게 출발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다짐한다.

- 우리는 김영삼 총재께서 천명하신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안보태세 강화에 주력하고 이땅에 부패한 정치와 정경유착의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쇄신을 다짐한다.
- 우리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노사간의 대화합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는 북한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총 점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기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15대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통일 일류국가'로 재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굳게 단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정당,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새 출발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7년 3월 13일

신한국당 당원 일동

2) 경제살리기 대책수립 및 동참 촉구 활동

신한국당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1997년 3월 6일 발족한 '경제종합대책위원회' 산하에 금융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 사안별 경제대책회의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해 운영하였다. 경제종합대책위원회는 특히 한보사태 이후 심각한 금융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파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가 전체의 투자효율을 저하시키고, 교육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임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회창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당직자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를 방문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동대문 시장과 구로공단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현장방문과 경제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사항, 정책사항, 예산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이중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3) 사교육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1997년 4월 1일 여야는 총재회담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당시 논란을 빚고 있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신한국당은 여야 총재회담의 후속조치로 대학입시제도 개선, 고액과외 금지, 유학비용 절감, 직업 및 사회교육 개편 등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사교육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소속의원 및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교육비대책특별위원회는 1997년 4월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영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사교육비대책특별위원회는 무궁화 위성 2개 채널을 교육방송 전용채널로 확보하고 학교 교육과 연결시켜 사교육을 점차 공교육으로 흡수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까지 징수토록 되어있는 교육세를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취학 전 유아교육 무상실시 법제화 추진 등 제도개선 작업을 벌였다. 이어 4월 23일에는 유인중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케이블방송(CATV)의 교육방송에 3개의 전용채널을 확보, 과외 방송을 추진하는 한편, 중·고교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4) 금융실명제 보안을 위한 공청회

신한국당은 1997년 4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정책조정위원장의 사회로 ‘금융실명제 보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남궁훈 재정경제원 세계실장, 최배진 선일유포트론 대표,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참석하여 논의를 벌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실명제 보안은 경제정의실현이라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는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곽태원 교수는 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40%)을 부담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분리과세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한구 소장은 분리과세 허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비실명자금에 대한 과징률을 60%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이재승 논설위원은 또한 개정작업으로 인한 실명제 골격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남궁 세계실장은 지하자금 양성화가 조세제도, 행정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5) 21세기 국토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신한국당은 1997년 5월 20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1세기 국토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양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30년대 대공황기에 거대한 토목사업을 벌여 극복한 경험을 통일한국에 응용해야 한다”라며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남북한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벌이는 등 ‘통일한국형 뉴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부축 개발전략이 우리 국토에 대립과 분열구조를 심어왔다고 지적하고 21세기 국토개발 방향은 지역통합 남북통합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이회창 대표 중국 방문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강택민 국가주석을 만나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 발전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수교 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 점을 치하하고 이회창 대표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집권당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국방문에는 김중위 정책위의장, 정재문 국회통일외무위원장, 이윤성 대변인, 노승우 국제협력위원장, 권영자 여성위원장, 황우여 김태호·이명박·이재명·김덕·이국헌 의원 등 19명의 현역의원이 수행하였다.

7) 21세기 농어촌 사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신한국당은 1997년 8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회창 대표와 정계, 학계, 농어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농어촌 사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회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식량의 안정적인 자급과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92년 이후 농림부문의 순투자 규모는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육성과 기술개발 측면을 소홀히 했다”며 “전문경영체제 중심의 구조조정과 규모화·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2. 민주당

가. 1993년도

1) 용공음해대책위원회 구성 및 백서발간

민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1992년 12월 28일 당내에 ‘용공음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용공매도와 색깔론 공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용공음해 대책위원회는 1차적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민주당에 제기되었던 이른바 ‘색깔론’의 사례를 수집·정리하고, 과거 용공음해 사례와 함께 수록하여 1993년 1월 20일 ‘용공음해백서’를 발간하였다.

민주당은 이 백서를 통해 역대 정권들이 집권을 연장하고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안보 및 통일논리를 왜곡해 반대세력에 용공이라는 굴레를 씌워 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대중 대표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나설 때마다 여당후보였던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에 의하여 용공으로 매도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민주당은 백서에 근거하여 용공음해 공작이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자유당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의 공식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용공음해백서’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제14대 대선 용공음해 사례

- 민주자유당의 대선기획위원회는 제14대 대선에서 지역감정 유발과 용공음해 공작을 통해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당의 공·사조직과 관변단체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함.
 - 김영삼 후보는 1992년 12월 13일 경기도 지역의 유세에서 ‘민주당은 김일성노선을 추정하는 전국연합과 손을 잡았으며, 평양방송은 김영삼을 낙선시키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유세기간 내내 색깔론을 거론함.
 - 천조연사들도 ‘민주당의 승리는 북한의 최악의 소식이 될 것’(정원식), ‘국방기밀자료를 간첩에게 넘겨주는 당 후보에게 어 떻게 나라를 맡기나’(서석재) 등의 발언으로 색깔론을 부추김.
-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터지고 김대중 후보의 사무보조원 이근희가 이에 관련된 것처럼 안기부가 발표한 것.
- 당보와 법정홍보물·신문광고 등을 통해 민주당과 김대중 후보에 대해 색깔론을 끊임없이 제기함. 특히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14일을 전후하여 인공기를 등장시켜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법정홍보물인 <92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자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엄청난 흑색선전을 함.

2) 당 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민주당은 1993년 1월 28일 제14대 대통령선거 이후 당의 향후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3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선거 패배와 김대중 대표의 정계은퇴 충격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는나를 시험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공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당의 정책노선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고 당의 조직 및 운영을 민주지향적으로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야당후보로서의 불리한 조건, 지배연합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현상유지 성향, 집권 공약과 정책 대안의 대국민 교감대 형성 실패, 지역감정의 양극화 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혁의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이미지 강화, 지도부의 민주적 경쟁원리에 입각한 지도부 선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의회정치의 정수인 토론과 협상 기술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3) 중소기업부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인해 연쇄도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1993년 1월 초 당내에 ‘중소기업부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부도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1월 12일 이기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현실적인 중소기업 도움방안, 중소기업 민원신고센터 운영, 부도기업체 회생을 위한 금융 지원·법적 절차 지원, 부도위기 기업체 현장방문, 공청회 개최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진성어음 100% 할인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이기택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정책정당으로서 국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1월 16일 이기택 대표, 중소기업부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당 소속

국회 노동·상공·재무위원들이 인천과 부천의 중소기업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민주당의 중소기업 회생대책과 노력을 설명하였다.

4)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 진상조사

1975년 8월 17일 제7대 국회의원이자 반유신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실족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93년 3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타살 가능성이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은 3월 29일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진상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위원회는 4월 2일 장준하 선생이 숨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 대한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 당시 의정부지청 검사였던 서돈양 변호사, 장준하 선생의 동서인 유경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등 관계자 조사 및 증언을 청취하였다. 조사위원회는 5월 1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준하 선생 사망과 관련한



▲ 민주당 '장준하선생사인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의원이 타살가능성이 높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1993년 5월 1일).

7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보강조사를 위해 목격자 김용환을 대동한 현장조사와 타살증거 확보를 위한 시체부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사위원회를 2개 반으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약사봉 현장답사, 관계자 조사 및 증언청취, 10여 차례의 회의 등 보강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8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 조사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사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월 19일 ‘민족사의 정통성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의안 요구는 민주자유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8가지 문제점

〈사인에 관한 문제점〉

- 장준하 선생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중앙부에 직경 2cm의 흠이 있는 인공적인 물체를 가지고 직각으로 가격하여 생긴 후두 함몰상으로 추정됨(법의학자 문국진 박사, 당시 사체검안 의사 조철구 박사)
- 오른쪽 팔과 엉덩이의 의문의 주사자국은 보통 주사자국보다 크게 확장된 것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주사한 경우에 해당되며, 마취주사 후 선생의 몸을 고정시킨 뒤 후두부 급소부위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높음(법의학자 문국진 박사, 당시 사체검안 의사 조철구 박사)

〈사고현장에 관한 문제점〉

- 김용환의 증언에 따르면, 추락지점에 돌무덤이 아닌 고운모래가 있었다고 했는데 현장답사결과 사고현장은 견치석(모난돌) 투성이었으며, 높은 벼랑에서 떨어진 물체가 정지하기 어려운 곳임(당 조사위 현장조사 및 사건 1주일 뒤 추모등반에서 확인)
- 현장답사 결과 김용환은 등반을 시작한 산 입구, 장 선생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바위,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했음(2차 답사)
- 김용환이 지척한 아산 입구에 도달해 본 결과 약사봉에 이르는 등산로가 없었고, 조금 올라가서 2명의 군인과 만난지점에서 보았다는 개울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2차 답사)
- 김용환은 2개의 작은 능선을 넘어서 계곡을 건너뛰었다고 증언했는데, 현장에서 그러한 지형지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진술에 따라 하산한 결과 엉뚱하게도 약사계곡 유원지 입구로 도달하게 되었음(2차 답사)
- 사고현장에서 김용환은 지금까지 알려진 추락지점보다 훨씬 높은 곳을 지정, 그 곳에 올라가 본 결과 밧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절벽이었으며 만약 그 곳에서 추락하였다면 장 선생의 신체가 많은 손상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반듯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추락사로 믿기 어려웠음(3차 답사)
- 검찰조사 결과 장 선생이 잡았다가 놓쳤다는 소나무가 휘어진 상태로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김용환은 소나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면담 조사 및 2차 답사)

5) 5·18 광주특별위원회 활동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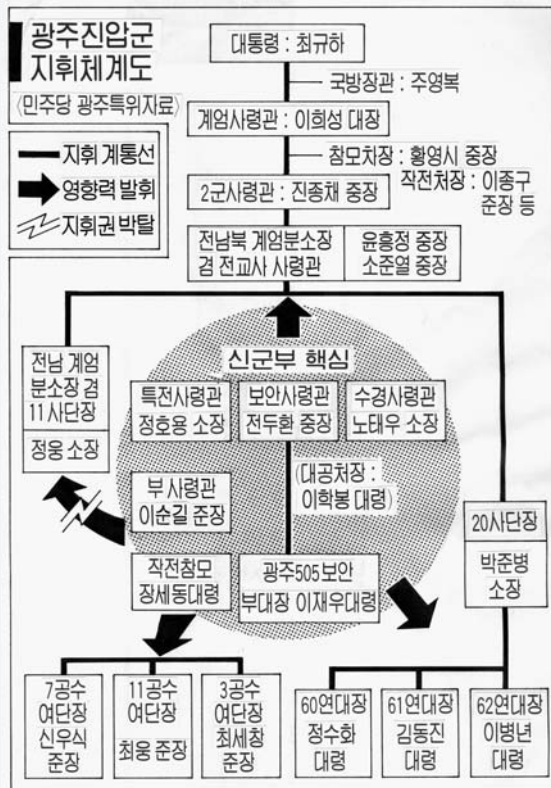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5·18 관련 단체들은 “그 동안 정부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해

결하지 못하였던 광주문제를 이제 가해자가 아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993년 4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5·18 광주특별위원회(이하 5·18 광주특위)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20일 중앙당사에서 5·18 광주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을 재개한 5·18 광주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5·18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을 중점 활동 5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 발표명령자 및 살상 책임자 규명, 암매장 여부와 국회 광주특위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유골감정, 사망자와 부상자 등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행방불명자 및 구속자 문제 등을 선결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5·18 광주특위는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사망 군·경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고, 책임자 중 처벌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18 광주특위는 이러한 5·18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소위원회와 특별법제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5·18 광주특위는 우선 1990년 7월 제13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이 단독 처리한 광주보상법을 대신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1993



▲ 민주당 5·18 광주특위 진상규명소위원회 김인근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광주진입군 지휘체계도(1993년 5월 15일).

년 4월 30일 ‘5·18 광주외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당 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여 진행한 5·18 광주특위는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진압군 지휘체계도를 비롯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5·18 당시 광주진압의 공로로 승진과 특혜를 누려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공직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5·18 광주특위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쟁점사안별 현장조사 및 증언청취, 관련자료 수집 등 진상규명작업을 이어갔다. 광주지부와 전남·북도지부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신고소’를 설치하여 5·18 및 12·12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이와 관련된 양심선언 등을 접수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자유당에 대하여도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주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6) 12·12 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태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군사반란에 참여하였던 장성 4명과 대령 2명을 예편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5월 29일 당 내에 ‘12·12 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진상조사위는 6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급 관련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요구하고 상명하복의 입장에서 움직인 하급부대 지휘관들은 조사는 하되 처벌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위원회 체계를 작전부문 진상규명을 위한 1반, 군사반란 구상 및 개개인의 역할규명을 위한 2반, 그리고 종합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였다. 12·12 군사반란의 구상, 출동부대별 구체적 작전내용, 당시 보안사의 정치공작설, 군사

반란과 하나회의 관계, 군사반란 참여자의 개인별 역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체포 의도 등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는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12·12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규정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는 각각 29개 항과 12개 항의 공개질문서를 발표하고 6월 25일까지 면담여부 회신을, 7월 10일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6월 21일에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12·12 군사반란 피해당사자인 장태완(당시 수경사령관)과 김진기(당시 육군본부 헌병감)를 참석시킨 가운데 공개증언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어 6월 25일에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3시간여 동안 12·12 당시 정황에 대하여 비공개 증언을 들었다.

한편 7월 2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7개항의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진상 조사위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89년 5공청문회를 비롯하여 12·12와 5·18에 대한 증언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기피해 왔다고 지적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질의서에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7월 15일에는 유학성(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현(당시 수도군단장), 황영시(당시 1군단장), 허화평(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군사반란 주동자급 4인에게도 전방 9사단 출동명령자, 보안사 작성 회유대상자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7) 정치개혁위원회·경제개혁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 개혁의 문제점을 산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구조 척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경제정의 확립, 서민근로자의 기본생존권 보장 등 개혁의 4대 원칙, 10대 청산과제 그리고 10대 개혁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원칙과 과제는 6월 1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과 개혁과제를 정기국회에서 관철시켜 법과 제도를 통

| 10대 청산과제 | 10대 개혁과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대 대선자금 및 청와대 정치자금 공개 · 5·16,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공직사퇴 ·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내부사정 · 군사정권하의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 율곡 사업과 군 인사비리 규명 · 해직교사, 언론인, 근로자 사면, 복권 및 복직 · 노태우 정권 하의 7대 의혹사건을 비롯한 6공 비리 철저 조사 · 양심수 석방 및 사면 ·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반민주 부패지도층의 부정축재조사 및 재산환수 · 정경유착성 비자금의 전면수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및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 · 국가보안법 폐지 및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 안기부 수사권 폐지 및 예산 공개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 입시부정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노조 정치활동 보장과 고용보험제 조속한 실시 ·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인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 ·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

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1993년 8월 26일 당내에 정치개혁위원회와 경제개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치개혁위원회와 경제개혁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비민주법률개폐특위 등 당내기구와 의원들이 성안한 개혁관련 법안과 정책을 정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한편, 정당법, 선거관계법, 세제개혁안 등 주요법안을 직접 입안하는 등 민주당의 개혁입법 작업을 주관하였다.

정치개혁위원회는 3개 소위로 업무를 나누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지방자치법 등 이미 국회에 발의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재검토하고, 깨끗한 정치제도 확립의 필요조건인 정치·선거관계 법안의 입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 결과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공영제 확대·금품선거 규제·포괄적 금지조항 철폐 등을 골자로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한 통합선거법안, 지구당위원장과 공직선거후보자들을 대의원들이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정당법개정안, 지정기탁금제 폐지·후원회제도 개선과 국고보조금 조정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25일 정기국회에 발의하였다.

한편 경제개혁대책위원회는 사안별로 세제, 금융, 과학기술, 산업정책, 농·수·축산발전, 국토개발·교통, 물가대책, 환경·복지·노동 등 8개 소위원회로 세분하여 경제와 민생전반에 대해 개혁입법을 위한 여론집약과 정책입안 작업을 벌였다. 경제개혁대책위는 특히 금융실명제의 급격한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세부담경감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세제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제개혁대책위는 관련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과 23일 ‘세제개혁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위헌·위법성을 해소하고 금융상품 실명거래의 성공적 정착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체입법안(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11월10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금융상품 취급기관의 최초 매출이나 환급시 실명 사용, 비실명인출 금융자산의 인출금지, 권력의 개인금융정보 자의적 행사 규제, 부당한 정보요구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거부 의무 명시, 국회의 국정조사·감사 수행 및 법원·법관의 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요구, 실명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등이었다.

8)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

민주당은 1993년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영삼 정부의 역사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19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할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9일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을 납치 경위 및 목적, 최고 지령자, 한·일간 외교적 처리의 전망, 미국의 역할, 일본 경시청과 한국 정부의 조사내용 순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김종필(당시 국무총리)과 이후락(당시 중앙정보부장) 등 한국인 46명, 다나카 이사이(당시 일본 법무장관) 등 일본인 24명, 헨리 키신저(당시 미국 대통령 특보) 등 미국인 7명 등 총 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활동 기간은 증인 청취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여 1993년 말까지로 정하였다.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 진상조사위원회는 우선 8월 10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정부의 직접조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위해 당시 외교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 사회민주연합 등 정치권 및 재야와 교섭하여 ‘일본의 재야 및 정치권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은 정부의 비밀문서 공개의 한계와 당시 작성된 자료의 진실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진상조사위원회는 9월 9일 용금호(당시 납치범들이 사용한 선박) 선원이었던 조시환의 양심선언과, 9월 12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당시 CIA한국책임자)의 증언으로 납치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시환은 기자회견에서 용금호가 중앙정보부 소유의 선박이었음과 납치해 온 김대중을 배 밑 창고에 가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도널드 그레그는 김대



▲ 김대중납치사건 당시 납치선박으로 이용된 용금호 선원이었던 조시환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1993년 9월 9일).

중 납치사건은 살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구명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납치하여 살해를 기도하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에 개입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주요 실행자임이 드러난 이상 안전기획부가 어떤 형태로든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납치사건의 최고 지령자, 이 사건에 투입된 모든 요원과 장비 등의 실태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안전기획부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진상규명 활동은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관련자들의 증언거부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1993년 12월 27일 사건 발생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에게 사건의 최고 지령자와 사건 직후 한·일 간에 주고 받은 외교적 거래의 내용 등 10개 항의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더불어 1994년 1월 15일까지 서한에 대해 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회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끝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1993년 조사활동을 마감하였다.

9) 중소기업실태조사단 구성

1993년 상반기 경제위기로 인하여 연쇄도산 등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은 8월 12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8월 30일 ‘중소기업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중소기업 희생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일환으로 9월 14일에는 이기택 대표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하여 박상규 회장 및 중소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기택 대표는 신고센터 설치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통해 중소기업희생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월 22일 중앙당사에 ‘중소기업 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금난을 비롯한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시작하였다. 국회 재무·상공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중앙당 중소기업국 당직자들로 구성된 상담센터는 접수된 자료와 현장방문조사를 토대로 문제해결과 함께 정책적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공부 중소기업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자금지원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하여 국정감사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10) 추곡수매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극심했던 냉해와 작황부진으로 인하여 추곡수매가가 농민들의 최대관심사

로 떠오르자 농가생산보장과 더불어 실질적 냉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매대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곡수매대책위원회(이하 추곡수매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추곡수매대책위는 국회 농수산위원회 및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농민여론수렴반과 수매대책반으로 편성되었다.

추곡수매대책위는 산하 2개 실무반을 통하여 농촌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농촌지역 지구당을 통해 농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민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각 농민단체, 농업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적정수매가·수매량 산정과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극심했던 냉해피해 실정을 감안하여 피해대책과 추곡가 반영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별도로 냉해피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현지를 돌며 실태조사활동을 벌였다.

추곡수매대책위는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쌀 생산량이 냉해로 인한 감산 355만 석,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감산 67만 석 등 총 422만 석(9.8%) 감산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른 농가손실액은 냉해손실액 약 9,550억 원을 포함하여 1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수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매량 1,200만 석 이상, 수매가격 13만 9,980원(80kg 2등급 기준, 전년 대비 16% 인상)을 보장하는 수매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쌀 수매가·수매량 외에도 수매물량 배정에 있어 냉해 등이 심한 지역과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냉해로 인한 불량결실 벼의 등외품 수매, 일품·진미벼 등 정부권장 품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전량수매, 농업금융 악화방지를 위한 농협수매자금의 한국은행 저리특별융자 등을 수매대책으로 제시하였다.

11)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993년 9월 24일 정부의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9월 27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체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토론자들은 대체입법 마련에 있어 경제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에 역점을 두는 경제 현실적 관점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법안내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정의론적 관점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였다.

경제현실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합법적으로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는 상호신용 금고·단자회사 증설, 영업외 수익으로 전입되는 비자금의 면책, 절세·탈세형 재테크로 형성된 자금의 면책 및 특례세율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경제정의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경기활성화와 경제개혁을 양립 불가능한 모순관계로 규정하는 자세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국세청 통보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 실시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대체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민주당은 1993년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주최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통합의료보험법은 제13대 국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여야가 조정·합의를 거쳐 1989년 3월 9일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으로 의결하였으나 정부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좌절되었던 법률안이다. 이에 따라 계속하여 유지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의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입법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이기택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현행 조합주의가 여권·관변인사의 낙하산 인사와 각종 부정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면서 도시서민·농어민·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있어 통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민주당 양문희 의원이 맡았다. 양문희 의원은 의료보험통합

이 현재의 운영체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보험관리공단 설치, 의료보험료에 직장·지역피보험자의 표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누진을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시안(가칭 국민의료보험법)을 설명하였다. 양문희 의원은 의료보험통합이 소득비례에 의한 공평한 부담으로 균등한 의료급여를 제도화하고 보험재정·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위험분산 기능 극대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신고주의로 인한 자격관리의 어려움과 지역·직장간 이동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 지역조합의 재정과 관리 공개, 보험가입자가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보완, 지역조합의 국고지원 비율 의무화, 요양기관 지정 신청·지정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통해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를 청산하고 통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계의 총의를 모았다.

13)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과거청산 개혁입법의 핵심인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해 1993년 11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재야민주세력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민주당 강수립 의원과 조용환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재야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강수립 의원은 민주당의 안기부법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안기부 명칭을 ‘국가보안처’로 하고 수사권 폐지, 정보조정권·보안감사권 폐지, 안기부예산의 국회 실질감사, 지부설치 제한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되 다만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국가존립에 대한 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민주질서위해의 죄’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안기부법·국가안보법 改廢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1993. 11. 24(수) 14:00

장소: 여성백인회관강당

주최: 민주당·민변·전국연합



▲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민주당 정책토론회(1993년 11월 24일).

조용환 변호사는 안기부의 기능을 정치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국외정보수집 분석 기관으로 국한하고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설되는 국외정보 수집분석기관은 성격상 업무의 비공개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증언·답변은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내용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과 중복되고 추상적인 조항이 많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어떤 형태의 대체입법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주당과 재야단체 간 상당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다.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수정이나 대체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안기부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외정보기획관리국(수사권 폐지, 지부설치 금지) 설치를 제안하였다. 민주교수협의회 박노준 교수는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와 안기부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과거청산 차원에서 안기부를 해외정보전담 순수정보기

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만큼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1994년도

1) 물가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994년 초 물가폭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월 7일 이기택 대표와 국회의원·당직자들은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식료품 등 서민 생활용품의 가격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연서시장 내 세종예식장에서는 시장상인·주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원형 의원은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의 폐해, 무책임한 통화량 관리, 정책판단 오류 등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주장하였다. 특히 20개의 기본생활품을 특별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가격인상을 통제한 신경제 100일 계획은 물가를 잡지 못한 채 오히려 가격구조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임금인상 억제책도 임금인상률이 12%를 넘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물가안정대책 방향은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근대적 유통구조 개선, 행정규제·금융관행 개선, 토지관련 세제 개혁, 효율적 통화량 관리, 재정지출 억제 등을 제시하였다.

2)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위원회 구성

1993년 말 쌀 등 기초농산물을 전면 개방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

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 11일 국회 UR특별위원회 소속의원 과 당내 농촌출신 의원으로 '민주당 UR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1994년 1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 UR대책위원회는 농림수산, 금융세제, 공산품·서비스 등 3개소위로 구성되었다.

UR대책위원회는 UR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UR개방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립과 여론수렴을 위해 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당,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1월 19일 '민족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총론적 성격의 토론을 시작으로 'UR개방에 따른 농촌위기 극복방안' 'UR와 금융시장 개방대책' 'UR와 공산품협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UR대책위원회는 토론회와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소위원회 별 활동을 벌여 나갔다. 농림수산소위는 1월 26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현실을 파악하는 한편 1월 28일 'UR협상 대처방안'을 주제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세제소위는 1월 21일 금융연구원과 금융연합회, 금융노조를 차례로 방문해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산품·서비스소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시장 개방 및 보조금 감축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청, 문화체육부, 과학기술처 등 지적재산권 담당자와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기초농산물에 대한 재협상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협상 관례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3월 25일 UR 최종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에 민주당

은 최종이행계획서가 농민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4월 8일 중앙당사에서 ‘UR비준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며 당 체제를 ‘UR국회비준반대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비준을 저지하고 재협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2일 ‘민주당 UR비준저지를 위한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소속의원 96명 전원이 서명한 국회비준거부 서약서를 ‘우리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하고 농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3) 수질개선 종합대책 마련

1991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건⁴⁰으로 논란이 된 이후 해를 거듭하여 마산, 창원,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수돗물오염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에 민주당은 1994년 1월 12일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1월 13일 정부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긴급대책 수립과 한강, 영산강 등 전국 상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1월 15일 정부가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은 정부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 예산확보 계획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1월 17일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서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맑은 물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민주당의 종합대책은 책임자 문책으로 물 관리 행정기강 확립, 맑은 물 대책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 재조정,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수질영향평가 전반적 실시, 환경규제 완화조치 및 수질기준 삭제내용 원상회복, 토지이용계획 재조정, 시민환경운동의 활성화, 정수보다 원수, 상수보다 하수도에 우선 투자 등이 주요

40)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은 구미 공업단지 안의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다량의 폐놀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내용이었다.

이어 1월 18일에는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과 악취로 문제가 되었던 논공정수장 등을 순회하며 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낙동강 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500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문희 의원이 주제발표하였고, 이원락 낙동강 살리기협의회장, 김수생 동아대 교수, 강성용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백승홍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문희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1·15 수질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백승홍 민주당 대구시지부장은 토론을 통해 대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족을 지적하며 건설이 중단된 3개 하수처리장의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수생 교수는 민간주도의 환경보호 및 감시와 하수·분뇨처리장 등 공공 처리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감독과 운영의 분리 및 경영 합리화를 주장하였다. 이원락 협의회장은 수량 부족이 낙동강 수질 악화 원인 중 하나라며 시급히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문제의 발원지가 되었던 대구의 강성용 지방환경청장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즉각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초기 대응과 확산방지에 허점을 드러내었다.”라고 책임을 시인하였다. 더불어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상수원 수질검사에 대한 항목 및 측정 횟수 등 관계규정을 강화해 원수 수질에 따른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4)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1994년 초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내부적·비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994년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주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

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청회에는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과 민주자유당 정책조정실장인 백남치 의원,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인 조창현 교수, 김익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제도실장, 지병문 전남대 교수, 윤재풍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나온 가운데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였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격려사를 통하여 여·야가 함께 하는 첫 정책토론회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닌 국가이익, 지방문화 풍토, 재정의 유기적 관계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박상천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의 합리성, 주민의 생활편의, 공동체의식 등 역사성 존중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편대상이 정해졌을지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부 개편내용으로는 도·농통합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로 승격돼 군과 분리된 시·군을 통합한 가칭 ‘통합시’ 설치를 제안하였다. 직할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직할시를 가칭 ‘광역시’로 격하하여 도에 편입하고, 광역시는 시장 등의 직급과 기구에서 일반 시와 차등을 뒤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 백남치 의원은 주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군 통합에 중점을 둔 행정구역 개편을 강조하였다. 지역이기주의와 행정의 낭비, 무질서를 극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제화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축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대립으로 생기는 지역사회의 갈등, 1995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전까지 통합을 완료해야 하는 데서 오는 일정상의 촉박함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5) 상무대 비자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994년 2월 25일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상무대 비자금의 정치자금 제공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방부나 검찰에 맡겨서는 이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94년 3월 7일 자체적으로 '상무대 공사대금 227억 원 정치자금 유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3월 9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의 중점 사항으로 청우종합건설의 비자금 227억 원의 사용처, 대구 동화사 건립 시주금 80억원의 행방, 공사수주 과정과 선급금 658억 원의 과다 지급 의혹, 국방부의 관리감독 소홀, 국방부와 검찰 수사결과 및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국방·검찰·불교계·건설 등 분야별로 조사소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조사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14일 국방부 방문조사에서 상무대 이전공사 입찰공고 때 청우종합건설에 유리하도록 액체처리포장공법(LAC)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편법이었다는 시인을 얻어냈다. 또한 입찰 관련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국방부 시설국장이었던 이해종 예비역 소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우종합건설에 국방부가 공사선급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어 3월 19일 법무부 방문조사에서는 공사선급금 중 80억 원이 동화사 대불건립 시주금으로 대통령선거 직전 13차례에 걸쳐 동화사에 전달되었으며, 이 밖에 각 시·도법회에 45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회장의 진술내용을 밝혀내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토대로 4월 6일 상무대 비리와 관련하여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회장의 횡령액 규모와 사용내역, 동화사 시주금 80억원의 행방과 법회비 45억 원의 실제용도, 청우종합건설의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특혜와 로비자금 수수의혹, 부도난 청우건설을 우성건설이 인수하는 과정의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

한 4대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동화사 시주금 80억 원과 조계사의 폭력사태와의 연관 의혹이 제기되고 당시 공사 책임자인 승려들 간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80억원의 행방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8일 대구 동화사를 직접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계속된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한계를 보이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민주당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하여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은 6월 10일 국정조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내 상무대 진상조사 활동을 통하여 최초로 정치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6) 한약업사 청탁자금 수수의혹 진상조사위 구성

민주당은 무자격 한약업사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청탁자금 1억 2,000만 원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되고,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994년 4월 27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민주당 진상조사위는 청탁자금 1억2,000만 원의 성격과 김현철의 관련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약업사 관련자인 지용규와 이충범은 1억2,000만 원의 자금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돈의 액수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약업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김현철의 각서, 어음부표에 적힌 김현철의 이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현철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금이 김현철에게 전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7) 정부의 재벌위주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994년 5월 김영삼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자 경제구조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94년 5월 14일 ‘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거시적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 19일에는 소유집중 문제와 문어발식 확장, 금융전업 계열기업군 문제 등 미시적 측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월 14일 ‘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학교수, 연구원, 경제관련 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위주의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공기업 민영화의 재벌 참여,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노사문제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이 효율성과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정부 연구기관과 재계 관계자들은 국제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여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어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제화시대의 재벌정책’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어발식 확장’ (곽만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소유집중’ (임웅기 연세대 교수), ‘금융전업계열 기업군의 문제’ (안중기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벌정책이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임웅기 연세대 교수는 소유 집중 완화로 전환되고 있는 정부정책이 소유집중 해소보다는 경제력 집중 심화를 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대환 인하대 교수, 정운형 홍익대 교수, 이필상 고려대 교수, 김원길 민주당 의원 등은 재벌들이 지배하는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우리경제의 경쟁체제 강화는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8) 새로운 토지 공개념제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제도의 재검토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민주당은 8월 26일 ‘새로운 토지공개념제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공개념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새로운 토지공개념제 수립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개정론자인 강만수 재무부 세제실장과 폐지론자인 윤건영 연세대 교수 간의 쌍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만수 실장은 토초세가 토지가격 안정에 공헌하였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확실한 대안 없는 토초세 폐지는 부동산투기와 지가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토초세 개정 대안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수 확대, 지가산정의 전산화, 전산 전담요원 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수는 입법과정의 부실, 법리적인 결함과 합목적성의 결여, 시행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노출 등 토초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세수 규모로 볼 때 토초세는 지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만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토초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남는다고 비판하였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은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토초세 개정론과 폐지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계의 여론을 모아 토초세를 비롯한 토지공개념 관련 세제개혁 시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9)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 마련

민주당은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10월 24일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기간 산업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특위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교량, 지하철, 터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잘못된 건설관련 법령과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활동방향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대책특위는 산하에 현장점검 및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소위원회’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고, 사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특위는 첫 활동으로 10월 26일 학계, 건설업계 전문가와 함께 10여개의 한강교량을 돌아보고 그 중 성산대교, 당산철교, 한남대교, 영동대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결과 당산철교와 성산대교에서는 균열 및 파손 등 시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당산철교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현장조사에 이어 민주당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주당 이원형 의원은



▲ 민주당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1994년 10월 27일).

부실공사에 의한 대형 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도 같다고 전제한 후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덤핑입찰·불공정하도급 관행 등의 공사입찰과정의 문제, 정부 및 업계의 책임결여, 공사발주기관의 감독 결여, 감리 불철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감리제도 개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처벌 강화, 입찰제도와 불공정하도급 개선, 공사단가 현실화, 설계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12월 7일 또 다시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특위는 12월 8일 '도시가스사고대책위'를 구성하여 서울시 전역의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 활동을 벌였다. 또한 '부실신고센터'에 접수된 충북 단양 상진대교 등 16개의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민주당은 그 동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온 교량, 지하철, 터널 등의 현장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0) 12·12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활동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주동자들에 대한 기소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역사와 국민을 거역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11월 7일과 8일 연이어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다각적인 방면으로 기소관철 투쟁을 벌어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반란주동자 사법처리를 위한 비상체제를 구축하였다.

민주당은 11월 7일 12·12 군사반란자 즉각 기소를 촉구하는 이기택 대표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력을 집중하여 기소투쟁에 나섰다. 11월 9일에는 소속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무효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12·12 군사반란 관련

자를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11월 10일에는 전국 지구당별로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당직자들이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당보특보를 가두 배포하였다. 11월 11일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재야·시민단체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처리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12·12군사반란 관련자 기소촉구 공개서한을 박관용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며 면담하고 있다(1994년 11월 7일).

계속해서 11월 12일과 13일에는 소속의원들이 각 지역구로 귀향하여 12·12 군사반란자 기소관철 투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어 11월 14일에는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각계 대표와 시민들을 초청하여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2·12 군사반란 단죄의 역사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았다.



▲ 민주당 '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무효화 투쟁 결의대회' (1994년 11월 9일).

한편 이기택 대표는 11월 25일 중앙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의회 해산, 조기 국회의원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이기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각계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 12·12 군사반란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를 규탄하고, 12·12 군사반란자 심판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12월 3일 부천에서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 촉구 2차 궐기대회’를 열었고, 12월 10일에는 ‘12·12 군사반란자 기소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와 UR이행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궐기대회’를 열어 12·12 군사반란자의 기소를 촉구하였다.

다. 1995년도

1)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 배제 저지활동

1995년 6월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1995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3월 3일에는 민주자유당이 공천배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저지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월 3일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 날치기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공천배제 저지활동에 나섰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은 ‘김영삼 정권의 지방자치제선거 연기음모 즉각 중단 촉구, 김영삼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민주자유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불법적 날치기 처리 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자유당에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3월 9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왜 필요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한편, 각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정당공천 배제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국민적 여론 확산에 주력하였다. 한편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및 보좌관, 중앙 당직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자유당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변칙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민주자유당과 계속된 협상 끝에 3월 14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진상조사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1,00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사고 다음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7월 5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부실시공과 무단 설계변경 및 증축이 삼풍백화점 붕괴를 가져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현장조사단은 고질적인 부실시공 관행 등 안전대책에 대한 구조적인 불감증과 안일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상 과실과 고의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사단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는 규정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과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시행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고현장에서의 혼란과 엉성한 구조체계 등과 관련하여서도 긴급사태에 대비,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청년정치회의 출범

민주당은 1995년 8월 22일 소속 청년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개혁과 연대를 위한 청년정치회의(이하 청년정치회의)’를 출범시켰다. 청년정치회의는 이날 열린 창립대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20~30대 청년정치세대가 민주당의 개혁적 재창당과 국민정당 건설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정치회의는 8월 28일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통합과 개혁으로 거듭나는 민주당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청년정치회의는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고 개혁세력을 통합해냄과 동시에 21세기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을 재창당하기 위한 과감한 당내개혁을 이루어 줄 것을 새 지도부에 주문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 개혁방안으로 중앙당 기구축소, 인물과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실행, 주요 당직에 대한 자유경선제 도입 및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개심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시·도지부 및 지구당의 운영과 지원, 당원의 의무와 권리 이행, 그리고 민주적 의사반영구조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21세기형 열린 시민정당건설’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운 청년정치회의는 당내 활동 외에도 ‘희망의 정치를 여는 젊은 연대’나 ‘8·15광복 50주년 청년선언’ 등 개혁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년정치회의는 새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민족의 통일과 아시아·태평양시대의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청년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3. 자유민주연합

가. 1995년도

1) 김종필 총재 전국순방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전국순방을 실시하였다. 1차 순방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순방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 인천, 경남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종필 총재는 첫 번째 방문지인 대전·충남에서 야당이 분점한 지방정부에서의 여당역할론과 당선자들의 겸손을 강조하며, 모자랄 때는 보태주고 넘칠 때는 절제하는 참다운 책임정치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8월 7일부터 재개된 2차 방문에서는 김종필 총재는 현 대통령제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제도이므로 의회가 모든 정치를 수렴하는 의원내각제로의 제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각제 추진방침을 강조하였다.

2) 대북 쌀 지원 문제 재검토 촉구

자유민주연합은 대북 쌀 수송선 인공기 강제 계양사건과 억류 등 북한 측의 횡포가 발생하자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자유당의 선거운동 상품으로 급조한 것이며, 내막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애초부터 일련의 사고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8월 14일 부총재단과 당3역이 참석한 가운데 간

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하여 4가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수용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대북 쌀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것, 둘째, 관계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 셋째, 추가 쌀 지원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칠 것, 넷째, 베이징 1차 쌀 회담 합의사항 중 정부가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등이었다. 이와함께 자유민주연합은 “이런 식의 굴욕적인 쌀 회담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것이며, 국민동의 없는 쌀 지원의 즉각 중단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수해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8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하자 8월 25일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과 수도권 및 충남·북 지역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여 수해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 구호대책을 강구하였다.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인천, 경기, 충남·북 등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수재민들을 위로하였다. 수해지역 방문에서 김종필 총재는 수해 피해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당에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부영 사무총장 등 당 3역은 8월 30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수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중부지역의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나 농경지 복구비용도 농지구모에 관계없이 피해정도에 따라 신속히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농업분야의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시의 구제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이 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장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농업이 기업화되고 설비가 첨단화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제도가 기존의 생계보장에서 피해보상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정치회복과 시국수습을 위한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1995년 12월 11일 비자금사건 및 5·18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정국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회복과 시국수습을 위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이날 특별성명에서 시국수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명을 통해 제안된 4가지 시국수습 방안은 정치회복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정치지도자 회담, 5·18 문제에 대한 합헌적 처리, 비자금사건의 조속한 완결,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내각 재구성 등이었다.

김종필 총재는 특히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관련자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자는 초헌법적인 과거청산이 또 다시 청산되어야 할 불행한 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공소시효 연장 등 소급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적인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5·18 군사반란자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인 조사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위한 특별검사제 채택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선거자금 규명과 이를 통한 비자금 문제 종결을 위해서도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1996년도

1)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저지 및 자유민주연합 탄압 규탄대회 개최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4월로 예정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96년 1월 초 주병덕 충북도지사의 탈당과 김현수 청주시장에 대한 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한 1월 28일에는 김현욱 당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다. 이에 자유민주연합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관권선거와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욱 위원장의 긴급 구속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연합을 탄압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한국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당국의 표적수사를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구일 정책위의장, 한영수 원내총무, 조부영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1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정부의 선거개입 중단과 자유민주연합 탄압중지 및 김현욱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였다. 이어 2월 2일에는 중앙당사 앞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권선거 저지 및 자민련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당원들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와 야당탄압을 철저히 응징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2월 10일에도 충남 당진군민회관에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민련 탄압중지 및 김현욱 위원장 석방촉구 쉼기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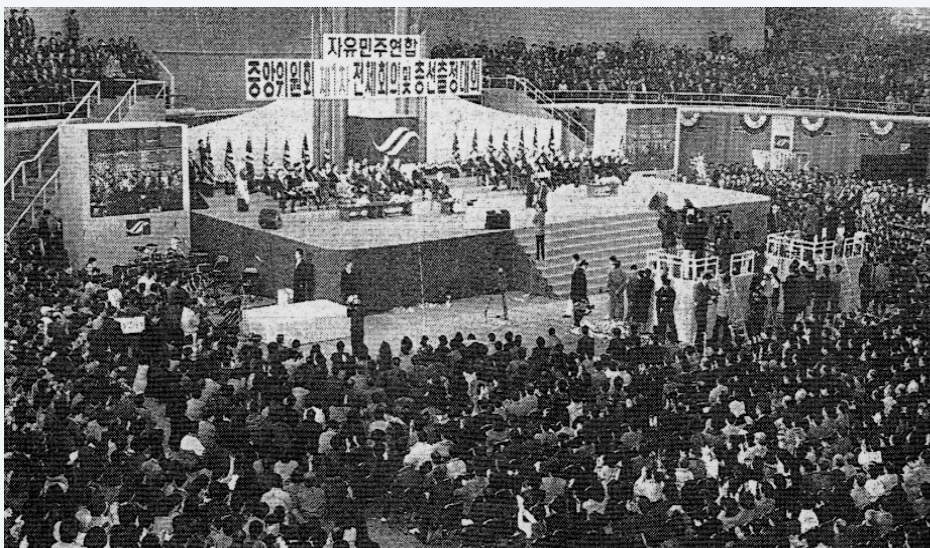


▲ 자유민주연합 관계자들이 마포당사 앞에서 검찰이 김현욱 당진위원장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1996년 2월 2일).

2) 중앙위원회의 및 국회의원선거출정대회 개최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2월 27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 및 국회의원선거출정대회를 개최하고 임인채 중앙위원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압승의 결의를 다졌다. 국회의원선거출정대회에서 김종필 총재는 치사를 통해 “정치는 독재고, 경제는 위기고, 사회는 혼란하고, 국민은 불안하다”라며 현 상황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자유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김종필 총재는 첫째,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국민안정의 정치를 할 것, 불법선거와 야당탄압을 중단할 것,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생각할 것, 안보태세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4·11 국회의원선거를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중간평가로 규정하였다.

중앙위원들도 자유민주연합만이 한국 보수주의의 중심이며 국회의원선거에서 제1당으로의 도약을 이룰 것임을 결의하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권정당으로서의 발판을 다지며, 참된 의회민주주의인 원내각제를 구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 자유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 및 총선출정대회(1996년 2월 27일).

3) 4·11 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이 선거를 금권·관권·폭력은 물론 허위비방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로 규정하였다. 또한 선거 후에도 검찰·경찰의 수사가 자유민주연합 당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자유민주연합 파괴공작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4월 17일 ‘4·11 국회의원선거 사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정부·여당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부정선거 수사에 대비하였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은 4월 25일 ‘4·11 국회의원선거 사후대책본부’를 ‘4·11 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로 확대·개편하였다.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는 4월 26일 서울 마포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편파수사 및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이날까지 수집한 불법사례와 증거물 등을 제시하며 신한국당의 부정선거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날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가 제시한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의 근거는 다음의 4가지였다.

첫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후보 조사에 있어 자유민주연합 후보를 먼저 소환하고 신한국당 후보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의 처리에 있어 자민련 후보는 구속 수사를 하면서 신한국당 후보는 불구속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형법상 수사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률이 있음에도 자유민주연합 후보의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넷째, 신한국당 후보들이 막대한 자금을 살포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나, 자유민주연합 후보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장 등을 구속하는 등 자유민주연합 당선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편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지원금 300억원을 조성하여 각 지구당에 1억 원 씩 지원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의한 평균선거비용 제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에 대하여는 거액의 선거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중앙당과 지구당별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4) 당 사무처 하계수련대회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충남 대천에서 개최된 '사무처당직 하계수련대회'를 기점으로 당 체제를 1997년 말 실시예정인 제15대 대통령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당 사무처는 수련대회에서 '오늘의 정치상황과 당의 진로'라는 주제의 분임토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각제 관철을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의 승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필 총재의 대통령선거출마 조기가시화가 필요하고, 1997년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사무처 당직자들이 차기 정권창출의 전사로 거듭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지도부는 8월 19일 대통령선거 관련 업무의 구체화작업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홍보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재 직속기구인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등 19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였다. 이어 조직발전위원회는 8월 26일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회의를 열어 지구당조직을 투표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조직모델을 확정하였다. 직능조직도 당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총재급을 위원장으로 충청향우회, 민족중흥동지회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재 직할체제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도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별 또는 구 단위 지역담당 현역 위원제를 실시하고 전국구의원을 수도권 지구당 위원장에 임명하고, 부총재별로 권역별 담당제를 실시기로 하는 등 대통령선거를 위한 조직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5) 김종필 총재 일본방문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재일거류민단 초청으로 1996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방일 기간 중 민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일본 정계지도자들과 만나 총선 후 일본의 정부구성, 일본의 내각제 운영 및 한·일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일 기간 중 김종필 총재는 10월 29일 도쿄에서 수행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각제 연구, 대국민홍보, 여야 정치권 설득작업, 내각제 개헌 이후의 정치일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귀국 후 본격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종필 총재는 정치권 내에서 합의만 된다면 내각제 개헌안의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데 몇 달이면 충분하므로 1997년 말에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 전 내각제 개헌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종필 총재는 1997년 초부터 전국 지구당 순회강연이나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각제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지구당 개편대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치권 내에서 내각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헌법 부칙에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어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내각제 개헌을 위한 타 정파와의 연대는 '순리대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를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 안정장치가 있는 독일식이 가장 좋다는 견해와 함께 독일식 내각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6) 집단탈당에 대한 대책마련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12월 19일 최각규 강원도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황학수(강원 강릉갑)·유종수(강원 춘천을) 국회의원 등이 집단 탈당하자, 12월 20일 긴급 간부회의와 심야 당무회의, 비상연석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자유민주연합은 집단탈당 사태를 김영삼 정권의 공작정치이며,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당 청년위원회 위원 500여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년위원회 창립대회를 마친 후 강원도청을 항의방문 하고 최각규 도지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2월 21일에는 서울 마포 중앙당사에서 '공작정 치규탄을 위한 비상총회' 와 '탈당5적(탈당자 4명과 공작정치)' 의 화형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자유민주연합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각규 강원도지사 등 4인을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여 제명하였다. 또한 현역의원 10여 명과 원외 지구당위원장 20여 명, 사무처 직원과 당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 앞에서 최각규 강원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자유민주연합 관계자들이 '공작정치규탄을 위한 비상총회' 후 '탈당5적의 화형식' 을 하고 있다(1996년 12월 21일).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집단탈당 관련 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동에 대해 공세를 퍼나갔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12월 23일 15번째 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사안별·정책별 공조를 뛰어넘어 '존재론적 공조, 일심동체 투쟁' 등 공조의 단계를 강화하였다.

다. 1997년도

1) 21세기 집권 청사진 '한국 2005' 발표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6월 24일 제1차 정기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여 김종필 총재를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당 총재에 선출하였다. 이날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의 으뜸은 내각제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5대 국회 임기 내에 내각제 개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각제 선호 세력과 안정희구 세력, 미래지향 세력을 결집하고 단합하는 데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김종필 총재는 민족응미를 위한 21세기 집권구상 '한국2005'를 발표하였다. 집권 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한국 2005'는 3대 목표와 5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시된 3대 목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여 G7 그룹에 합류하는 경제대국 건설,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 등 국민생활의 질에서 세계 15위권 내의 일류국으로 진입,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 등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5대 과제로는 내각책임제 실현으로 참된 의회민주주의 구현, 행정 및 재정개혁 단행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 재도약으로 제2의 한강기적 창출, 삶의 질 보장으로 복지사회 실현, 안보 강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2) '대중 속으로(To People)' 프로젝트 추진

자유민주연합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1997년 7월 28일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대통령후보 이미지 강화 대책, 선거운동 여건 및 주요 후보활동 분석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종필 후보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대중 속으로(To Peopl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김종필 총재가 전국 각 시·

도의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국민 접촉을 강화하여 서민의 벗이며 일하는 김종필 총재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 단체와의 교류 강화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건전보수정당’으로 당의 이미지를 바꾸어 젊은 층의 호감을 얻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대중 속으로(To People)’ 프로젝트에 따라 김종필 총재는 8월 1일 첫 방문지로 강원도 춘천지역을 선택하여 지역 언론 주최의 TV토론회 참석, 만화축제장 방문, 내린천 댐 건설 예정지 방문, 강변가요제 참석 등 대민활동을 시작하였다. 8월 4일 두 번째 방문지 충북에서는 청원군 테크노빌 첨단과

학단지 건설현장에서 현실지가 보상과 영세농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8월 18일에는 충남 홍성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현장과 보령의 대우공단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하였다. 이어 8월 19일에는 침구사협회 회장단과 민주택시 노조대표단 등 각계 직능대표들과 만나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8월 21일에는 제주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김종필 총재는 9월 12일 경기도 양평 양수리 한강수질검사소와 팔당상수원 일대 방문, 9월 19일 환경단체와의 자전거타기 행사 개최, 9월 20일 여성단체연합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대중 속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 자유민주연합 당보 제31호(1997년 8월 6일).

3) 집권 전략 모색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9월 8일과 9일 정국변화에 따른 집권전략을 모색하고 제185회 정기국회에 대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JP가 집권해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제3차 국회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종필 총재를 비롯하여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의원세미나에서 자유민주연합은 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대통령선거필승을 위한 다짐과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 자유민주연합 제3차 국회의원 세미나 'JP가 집권해야 나라가 산다' (1997년 9월 8일).

첫날 9월 8일 실시된 의원세미나에서는 김용환 부총재가 야권의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 진척상황을 보고한 후 3개 반으로 구성된 소속의원의 분임토론과 자유토론이 실시되었다. 분임토론에서는 당의 집권전략, 후보단일화 추진방향, 보수대연합 등 최근 정국추이에 따른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논제였던 '단일화협상 지속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에 찬반의견이 엇갈렸고,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의견대립이 지속되었다. 단일화 반대 측은 비록 패배하더라도 김종필 총재가 무조건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단일화 찬성 측은 대안부재

의 문제와 함께 협상중단의 시기적 문제를 들어 단일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한 토론은 ‘김종필 총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위론적 결론으로 끝났다. 한편 9월 9일 둘째 날 세미나에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회생대책을 논의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퇴소식에서 김종필 총재는 집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소속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인 50년 만의 역사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대통령후보는 김종필 총재로 단일화되어야 하고, 당의 결속을 바탕으로 연말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 김종필 총재에게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지원 하겠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4. 새정치국민회의

가. 1995년도

1) 야당탄압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과정 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하 아태재단) 후원금이 수사대상에 오른 데 이어 1995년 9월 1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락도 의원이 구속되자 “검찰이 특정인, 특정정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는 것은 김영삼 정부의 보복성 사정이자,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차원의 여론공작이다”라며 이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9월 1일 ‘야당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9월 2일 이홍구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중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조성 과문의 발설자인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원조 전 의원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의 정치자금 조성의혹을 조사

하여 폭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책위원회는 최락도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 피의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음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둘러 구속하였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태 의원의 경우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연일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등 형평성을 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정당과는 별개인 아태재단의 후원금에 대해 음해성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새정치국민회의에 상처를 입히려는 음모라고 주장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검찰당국에 표적수사 중단을 엄중히 촉구하고, 정기국회에서 검찰권 남용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 5·18 진상규명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촉구 비상시국강연회 개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12월 3일 보라매공원에서 ‘5·18 진상규명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촉구 비상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선거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대중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당대표 간 5인 회동을 통해 정



▲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비상시국대강연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공개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1995년 12월 3일).

국안정과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하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열어 흑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결과 관련 결의문 채택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12월 5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정략적인 짜맞추기 왜곡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12월 6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이 밝혀지지 않을 때 비자금 수사에 대한 어떠한 것도 불인정,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청문회 개최, 이원조·금진호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조성내역을 밝힐 것, 5·18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5·18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비자금과 5·18 문제를 악용한 국민회의 탄압과 김대중 죽이기 음모 즉각 중단” 등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실제 1조 원 이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했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비자금 액수를 짜 맞추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보완하는 정략수사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원조, 금진호를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로 여전히 성역으로 남겨놓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폭로를 막으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치권으로 유입된 800억~900억 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자금 3,000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탄압용으로 짜 맞추기 위해 남겨놓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자유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주장하여왔던 ‘20억 원 + & 설 역시 거짓말로 탄로났으므로 집권여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1야당과 총재를 모략음해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1996년도

1) 그린캠프21 캠페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표방하는 30~40대 수도권 지역 출마자 후보모임인 ‘그린캠프21’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린캠프21은 1996년 2월 26일 ‘정치와 삶’이라는 주제의 연수회를 개최하고 후보들의 재산공개와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를 보여주자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법정선거비용 준수,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집 및 공개, 민주적인 선거운동, 당비에 의한 지구당 운영,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 금지 등 5개항을 결의하였다. 또한 후보자들은 재산공개에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과 부동산과 동산, 기타 보석류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였다.

2)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선거자금 공개 촉구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의 인터뷰 기사가 1996년 3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에 게재되었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자금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노재현의 발언으로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무시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선거자금 지원규모와 사용내역의 즉각 공개,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통령선거자금 지원내역을 밝힐 것, 정부여당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관권 선거개입과 검찰·경찰의 야당후보에 대한 편파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정당당당한 공명선거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 4·11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제15대 국회에서 기필코 대통령선거자금 청문회를 개최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김영삼 정권이 권력을 총동원한 관권선거, 금력을 무한대로 쓴 금권선거, 언론의 편파보도, 비무장지대(DMZ)사건 등의 안보문제 악용” 등 총체적 4악 부정선거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부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야권과의 공조로 ‘부정선거백서’를 공동 발간하는 등 신한국당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4월 26일 서울 63빌딩에서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결 의 문

- 우리당의 목표인 1/3의석 확보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제1야당의 자리를 굳혀준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 이번 제15대 총선은 여당의 막대한 자금 살포와 검찰의 여당후보 비호, 그리고 언론의 편파보도와 판문점사건 등의 안보문제를 악용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우리는 국민의 선택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파헤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김영삼 정권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여당 당선자들의 천문학적인 금품살포를 외면하고 야당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신한국당은 엄청난 선거자금 규모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관훈동 당사 매각대금과 지정기탁금 등 1천2백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라.
- 이번 총선 부정을 묵과하고는 이후의 모든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각심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 부정문제가 당의 진로에 있어서 사활적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이 결코 일과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제15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밀실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우리당이 총선 당시 발표한 3백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원내투쟁의 최대목표를 부정선거 규명과 경제제일주의에 둘 것이다.
- 우리는 비록 이번 제15대 총선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총재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내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1996. 4. 26.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일동

서울·경기·충청·영남 등 지역별로 부정선거 사례를 발표하고 김영삼 정권의 관권, 금권 등 부정선거에 대한 강경대응을 결의하였다. 이어 5월 1일 긴급지도위원회 의에서는 야당 총재회담 개최, 부정선거대책 야권공조 확인, 야당과 무소속 합동의총결의대회 개최, 청문회 등 선거부정 진상규명 총력, 4개항의 해결을 전제한 개원협상 등 5개 사항을 결의하였다.

4) 효산그룹 권력형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새정치국민회의는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콘도허가 압력설과 이철수 제일은행장의 대출커미션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효산그룹 사건과 관련해 1996년 5월 6일 ‘효산그룹 권력형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5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계획을 확정된 진상조사단은 일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5월 10일 은행감독원과 효산그룹 본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은행감독원 조사에 있어서는 효산그룹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경위와 권력층의 압력여부,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내용과 그 타당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다. 효산그룹에 대해서는 부도배경과 콘도허가과정, 자산 도피여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었다. 진상조사단은 1994년 효산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내용을 조사한 결과 효산그룹이 47억원의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상 조사단은 이어 5월 20일 효산그룹에 대출을 해 준 서울은행, 제일은행 본점을 차례로 방문해 은행장, 전무, 상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서울은행 방문조사에서는 서울은행이 효산 같은 중소기업에 전례에도 없는 400억 원 이상을 무담보 대출한 점과 무담보 여신 회수노력이 미흡하였던 점, 특혜성 여신과 관련해 은행감독원의 징계가 관련 지점장 견책과 본사 심사부장 주의조치에 그친 사실, 1993년 초 효산그룹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신을 정돈하는 황색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제일은행 조사에서는 효산그룹에 대규모

대출을 해 준 사실, 효산그룹이 제공한 제1담보가 감정평가원에 의해 터무니없이 과다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효산그룹 비리에 장학로 이상의 정치권 실세가 개입된 특혜성 대출이 농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체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제15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효산그룹 권력형비리의 진상을 밝히려 노력하였으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였다.

5) 지방자치 1주년 평가 및 결의대회 개최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는 1996년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총재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 기초 및 광역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1주년 평가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대중 총재는 격려사에서 여당이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지는 것은 이들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검찰·경찰, 안기부, 감사원, 각 부처의 국가권력을 동원해 과거처럼 정권의 수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지방자치 축소와 파괴시도를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참석한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이양은 커녕 책임만 강요하고, 여야가 합의한 지방의원 의정활동과 활동보조비 현실화 조치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 징계제도,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 SOC특별법, 내무부의 지역갈등 직권중재제도, 단체장의 조직·인사권 제한, 지방의회의 무력화, 정당공천 배제음모, 도 폐지를 통한 중앙집권 강화 등 지방자치 파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전면 실시가 이루어진 지 1년이 되었지만 정부·여당은 야당 단체장을 표적수사하여 구속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시도해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온갖 횡포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확충, 인사권 확

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하였다.

6) 강삼재(신한국당 사무총장)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1995년 11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 α 정치자금 수수설’을 제기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1996년 8월 31일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강삼재 사무총장이 9월 3일 또다시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 α 수수설’에 대해 심증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새정치국민회의는 9월 5일 강삼재 사무총장을 선거법상의 ‘흑색선전’ 혐의로 재고발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교대역에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규탄하고 진상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당보를 배포하고 있다(1996년 9월 3일).

한편 새정치국민회의는 9월 4일 당무회의에서 ‘강삼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규탄과 투쟁방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강삼재 사무총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당보호회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장외투쟁도 병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 모략행위는 정치타락의 주범이다.
책임 있는 자리인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삼재 씨가 무책임한 모략행위를 일삼은 것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2. 검찰의 불공정한 법해석과 강삼재 씨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검찰의 생명은 신뢰이다. 강삼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 스스로 신뢰의 포기이자 권력의 시너임을 자인한 것이다.
3.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은폐는 이 나라 정치와 사회의 정신적 · 도덕적 타락의 원천이다.
부패정치 청산의 첫걸음은 김 대통령의 고백이다. 우리당은 노태우 씨가 주었다고 밝힌 3천억원을 포함한 대선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한다.

1. 법적 투쟁
 - 1) 즉각항고, 재항고 2) 헌법재판소의 강제기소 명령을 얻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3) 강삼재 씨의 흑색선전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소 4)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소송 제기
2. 정치적 투쟁
 - 1) 법사위원회 소집요구 2) 강삼재 씨의 모략행위 및 검찰의 편파수사 규탄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약칭: 강삼재대책위원회) 3)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투쟁 4) 국정조사권 발동 및 청문회 개최요구(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규명)
3. 국민과 더불어 홍보투쟁
 - 1) 강삼재 씨 규탄 특별당보 100만부 가두 배포 2) 현수막 게시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여론조사 4) 지구당별 설명회 개최 4) 대국민 공청회 개최
4. 대선자금 규명 투쟁
 - 1)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해명요구 2) 검찰에 대한 조사 착수 촉구 3) 노태우 씨 변호사 방문 증언 청취 4) 대선자금 실체공개

1996. 9. 4.

새정치국민회의 당무회의

7) 4개국 초당외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96년 10월 북한잠수함 침투사건과 잇단 보복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대 강국을 대상으로 한 초당외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대중 총재는 1996년 10월 7일 야마시타 일본 대사, 10월 8일 레이니 미국 대사, 10월 9일 쿠나제 러시아 대사와 연쇄회담을 갖고 한반도 위기사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이들 주요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서는 야당도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자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김대중 총재는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북아 평화 및 남북한과 한·중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중국경제의 총책임자인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탕자취안(唐家璇) 외교부부장 등과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는 중국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위하여 북한을 설득하여 주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영향을 행사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했으며,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과 문호개방에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비록 수교한 지는 4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40년이 넘는 교류를 한 것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중요하며 무장공비침투사건 등과 관련하여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평화정착에 기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김대중 총재는 10월 15일 중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대북정책으로 2대 기본정책을 설명하였다. 첫째, 국가보위와 전쟁억제 등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을 날조하고 있는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정치·군사 부문과 경제교류 부문에서 분리정책을 취하고 있음도 강조하였다.

다. 1997년도

1) 민생안정과 경제회생 방침 제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등 변칙처리와 한보부도사태 파장으로 경제·사회불안이 커져 가자 1997년 2월 4일 중앙당 기자실에서 국가위기수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 방침을 제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제시한 방침은 모두 8가지였다. 우선 한보특혜대출비리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후 TV생중계 청문회를

실시하여 한보특혜대출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보비리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철저한 시장경제원리 정착으로 경제를 희생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금융계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금융개혁,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 마련,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보철강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과 한보철강과 관계된 하청업자, 거래상인 등에 대한 우선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면 자유민주연합과 협의하여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그러나 위기상황의 원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경제문제, 남북·외교 문제,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하였다.

2) 북한동포대책위원회 구성 및 식량지원 결의문 채택

1997년 6월 22일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참상이 TV에 보도되자 새정치국민회의는 다음날인 6월 2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소집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내에 ‘북한동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북지원책을 강구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굶주린 동족이 죽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남북한 정부의 비인도적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의 결과 북한 식량난이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하였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당무회의를 열어 대북식량지원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창구를 대한적십자사 외에 이북5도민회 등으로 복수화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6월 27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을

결의문 요지(“정부차원 지원 나서야”)

우리는 인도적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민족화해의 측면에서 북한동포에게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북한은 4자회담에 즉각 응하고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여 주민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식량문제 대책수립에 적극 임해야 하겠지만 4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
2. 대북식량지원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창구의 복수화도 검토해 볼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적십자사 이외에 이북5도민회 등도 대북식량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당은 이미 거당적으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지난 5월 9일에 대한적십자사에 8천2백5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제2차 모금활동에 들어가며 다른 정당, 언론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3.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여 국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부는 UN뿐만 아니라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한다.

1997년 6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일동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북한식량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1997년 6월 27일).

촉구하는 한편, 대북지원의 4자회담과 연계, 모금활동의 활성화, 국회차원의 대책논의 등 북한식량과 관련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김대중 총재는 6월 27일 북한식량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을 비롯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비정부기구(NGO) 대표단과 면담하여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동포애와 민족화해의 씨를 뿌리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비난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3)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토론회 개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6월 16일 정부가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금융 자율화와 한국은행 독립, 작은 정부 등에 오히려 위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데 당론을 모았다. 또한 물가안정의 목표를 한국은행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한 것은 한국은행 총재를 중도에 퇴임시키려는 정치적 악용이며,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 박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금융개혁안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중앙은행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당분간 현행 정부감독체제 유지와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등 3개 감독원 기구 강화, 감독업무 상호조정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융감독기관의 자율성 보장,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배제, 중앙은행에 은행 감독기능 부여 등 금융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이상헌 한국은행 조사제1부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 등 단기적 해결과제를 제쳐두고 권한 다툼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온 중앙은행 개편과 금융감독 기능의 통합을 먼저 추진한 데서 금융개혁안의 문제점이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

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단기적인 개혁을 우선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금융 개혁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 신중하게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4) 학원폭력 근절 3대 대책 제시

새정치국민회의는 학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997년 한 해에만 20여명에 이르는 등 학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7년 7월 1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방문하여 김종기 이사장과 피해학생 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학원폭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3가지 근본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3가지 대책안은 첫째, 학원폭력을 가져오는 매체 등 유해환경 규제, 둘째, 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 셋째, 학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선도 등이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총재는 청소년 학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지대(청소년폭력안전지대) 설정’, ‘학원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보호체제 구축’, ‘청소년폭력 방지법 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중 총재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만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학생을 보호·구제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규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공간이 많은 일본도 ‘이지메’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3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많이 확충해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나쁜 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청소년 탈선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되 실력 있는 사람만 졸업하게 하자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입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일류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력위주로 출세하는 사회를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5) 자동차산업위기대책위원회 구성

1997년 7월 15일 재계순위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⁴¹⁾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우려하여, 7월 16일 ‘자동차산업위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7월 21일 기아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방문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협력사 대표단 면담, 아시아자동차 광주본사 및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방문 및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결과 연 매출액 12조 원(수출액 28억 달러), 직접 고용인원 5만 5,000명에 55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기아그룹의 부도로 총 1만 7,000여 개에 달하는 하청협력업체가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 141개국에 수출하고 11개국에서 연 30만대를 현지 생산하는 기아자동차의 좌초로 기아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의 차질은 물론 국내기업의 대외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하청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 ‘부도유예기간 중 협력업체 보유어음을 모두 할인하는 특별조치’,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지원’, ‘국회결정으로 대대적인 자금지원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음해공작대책위원회 구성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1997년 10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365개의 가·차명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처조카를 통해 관리하여 왔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재벌기업과 사채업자를 통해 62억 원을 불법 실명전

41) 부도방지협약은 부실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협약으로 1997년 4월 21일 제정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환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외에 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0월 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한국당이 지지도 3위인 이회창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과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의혹 등 ‘정치지도자 비밀자금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의 계좌 입수 경위와 배경 및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내에 ‘음해공작대책위원회’와 ‘음해대책상황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공세에 맞대응 폭로로 맞서기 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허위임을 밝혀 ‘공작정치’임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김대중 총재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저질폭로전’이 전개될 경우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신한국당은 10월 10일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총재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기업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13일에는 김대중 총재의 가족·친인척 비자금 규모와 내역을 추가 폭로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신한국당의 폭로전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김대중 총재는 10월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를 위해 맞폭로식 정쟁자제, 정책경쟁, 경제회생, 정국 및 민심안정, 여야 정치자금 국정조사 등 5대 국민약속을 선언했다.

이후 10월 16일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및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새정치국민회의는 간부회와 음해공작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맞고발로 대응할 경우 대통령선거가 흑색선전과 폭로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맞고발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자금과 1997년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 및 경선 이후 활동자금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 3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10월 20일 국회에서 ‘3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금법이란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항목으로서 정치보복과 차별대우,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치보복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 적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1997년 11월 24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하여 출범한 정당이다. 따라서 1997년 한나라당의 모든 정당 활동은 제15대 대통령선거 활동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합당합의 이후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정당등록이 완료되기 전부터 주요 정치적 현안이었던 정치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에 벌여나갔다.

1997년 11월 17일에는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치혁신과 경제살리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3김 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개혁과 위기에 직면한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회창 대통령선거 후보와 조순 총재는 기초 발언을 통해 “3김 정치로 대변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전제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이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새 시대를 열고 튼튼한 경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관련하여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각각 ‘정치혁신을 통한 나

라살리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경선불복과 정치적 원죄’를, 중앙대 김호섭 교수가 ‘내각제 개헌합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는 1997년 11월 18일에는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즉각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제안을 발표하였다. 1997년 12월 3일과 4일에는 조순 총재 주재로 ‘경제대책회의’와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IMF 구제금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1998년도에 저성장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예상됨에 따라 실업 최소화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각적인 실업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6. 기타정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타 정당들 중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신민당(1994. 7. 8 정당등록), 통합민주당, 국민신당, 등 6개 정당이었다. 그 이외 원내의석을 가지지 못한 정당은 신민주당(1995. 4. 1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대한정의당, 대한민주당, 신민당(1995. 6. 27 정당등록), 개혁신당, 무당파국민연합, 21세기한독당, 공화당, 민주국민연합, 바른나라정치연합, 건설국민승리21 등 12개 정당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소정당들은 선거활동 이외에 언론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표출된 두드러진 당내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가.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은 1992년 대통령선거 패배와 정주영 대표의 정계은퇴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1993년 들어 원내교섭단체 구성 자격을 상실하며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현대그룹 측의 당사 폐쇄조치로 1993년 천막당사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정당활동 또한 위축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4월 16일에는 전국지구당위원장 당 재건 단합대회를 개최하며 재도약을 모색하였고, 5월 27일 서울 성북동에 중앙당사를 마련하였다. 7월에는 전국지구당위원장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와 중앙당 사무처요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서울경인 지역 당원단 합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서해안에서 황리호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위문단을 파견하였고, 12월 들어서는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활동을 벌였다.



▲ 통일국민당 창당 1주년 기념식(1993년 2월 8일)

1994년 들어 통일국민당은 2월 1일 중앙당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펴고자 하였다. 3월에는 전국지구당 조직을 정비하였고, 4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규탄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94년은 정국을 주도해가던 다수 여당에 맞서기 위한 야당통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위축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던 통일국민당 또한 정당 활동의 많은 부분이 야당통합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통일국민당은 1994년 7월 8일 신정치개혁당과 신설합당하였고, 이로써 2년여의 활동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나. 신민주당

신민주당은 1993년 1월 18일 진리평화당에서 당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한 정당이다. 신민주당은 1993년과 1994년 전당대회, 당무회의, 총재단회의 등 당 운영을 위한 내부 논의가 당내활동의 주를 이루었다. 이후 1995년 4월 1일 2년여 만에 또 다시 당명을 통일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명을 변경한 이후 통일한국당 역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당무회의를 통해 대표자 교체 등 당직 인선과 지구당 등 조직정비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신민주당(통일한국당)이 1993년부터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활동 개황보고에서도 이러한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다. 친민당

친민당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당 내부적으로 추진한 주요활동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당원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활동 개황으로 보고하거나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당 활동은 거의 없었다. 친민당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 4월 13일 정당법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라. 대한정의당

대한정의당은 1993년 우리 농산물 애용, 도덕성 회복 운동,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대회 참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94년 2월 15일 자진해산하였다.

마. 새한국당

새한국당은 1993년 자연보호캠페인과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수입개방과 관련하여서는 5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1993년 12월 4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에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 촉구활동을 벌였다. 4월 9일에는 UR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8일에는 WTO공청회

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새한국당은 1995년 3월 7일 민주당에 흡수합당되면서 소멸되었다.

바. 대한민주당

대한민주당은 1993년 10월 20일 창당된 후 2년여의 기간 존속하였으나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한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주요활동 개황에 의하면 1994년 두 차례의 당무위원회 개최와 1995년 네 차례의 중앙위원회 개최가 전부였다. 이후 대한민주당은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선거 결과 정당 존속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 직후인 1996년 4월 13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사. 신민당(1994. 7. 8 정당등록)

신민당은 1994년 7월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신설합당하여 8월 대구수성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당세확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4년 9월 3일에는 경륜장 반대 시민대회에 참여하였고, 9월 7일에는 '우리사회 정당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시사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정당활동을 펴나갔다. 그러나 10월 10일 폭력이 동원된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 심각한 당내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내홍을 겪었고, 그 결과 활발한 정당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95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당내갈등을 봉합하였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연합과 신설합당하면서 1995년 5월 51일 소멸하였다.

아. 정명당

정명당은 1995년 1월 13일 공식 출범한 이후 1996년 3월 20일 당명을 기독교성민당으로 변경하며 김영삼 정부 기간 내 지속해 왔으나 두 차례의 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정당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1995년 정명당이 신고한 주요활동 또한

1995년 11월 29일 대표자를 우찬무 권한대행으로 변경 신고한 것 단 하나였다. 당명 변경 이후 기독교민당이 신고한 주요활동 또한 지구당 대표자변경과 등록 등 단 3건에 불과하였다.

자. 신민당(1995. 6. 27 정당등록)

1995년 6월 27일 창당된 신민당은 1995년 당무회의,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당보발간, 당원단합대회, 당규제정 등의 당내활동을 벌였다. 이듬해인 1996년 2월 5일에는 당명을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변경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1996년 무정파전국연합이 신고한 주요활동 또한 4차례의 당무회의를 개최한 것과 대표자를 권한대행 고병현으로 변경한 것이 전부였다.

차. 개혁신당

1995년 11월 29일 창당된 개혁신당은 정당등록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 따라서 창당 이후 통합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질적인 당내활동은 전개되지 않았다.

카. 통합민주당

1995년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신설합당하여 12월 21일 공식 출범한 통합민주당은 출범 직후 5·6공화국 부패정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깨끗한 정당, 지역감정에 맞서 온몸을 던진 용감한 정당, 젊은이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똑똑한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민주당은 1996년 1월 18일 마포 중앙당사에서 ‘희망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는 한편 ‘희망의 전화’를 설치하여 부정부패 고발에서부터 격려전화, 항의전화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3월에는 MBC 노조파업사태와 노수석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각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해 오면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전 당직자들의 명찰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당직자 얼굴 익히기 및 이름 알기' 작업을 펼쳤다. 명찰의 착용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당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직원상호 간 서로 알리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 통합민주당 '희망본부' 발대식(1996년 1월 18일).

통합민주당은 1996년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총선에서 지역구 9명과 전국구 6명 등 15명의 국회의원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 후 일부 당선자들이 탈당하여 신한국당으로 옮겨가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에 1996년 4월 이후 통합민주당의 정당 활동은 여당의 야당의원 영입



▲ 신한국당의 야당의원 영입작업 향의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1996년 5월 8일).

과 4·11 국회의원선거 부정에 대한 규탄활동에 집중되었다.

5월 4일에는 '민주당 파괴공작규탄 무기한 농성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7일에는 서울 명동입구와 서울역 광장 등에서 탈당의 부도덕성과 검찰의 편파수사 등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와 신한국당의 파렴치한 민주당 파괴공작'이라는 제목의 특별당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은 6월 13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경기도에 수해가 발생하자 7월 30일 이를 위로하기 위한 방문활동을 벌였고, 8월 2일에는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8월 21일 시·도지부 및 지구당 조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9월 5일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1996년 말에는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노동법 등 쟁점 의안들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이에 대한 규탄 활동에 당력을 집중하였고, 이는 1997년 초까지 이어졌다.

1997년 들어 민주당은 1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4월에는 4·19 국립묘지에서 4·19혁명 기념식을 자체 행사로 거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중심적인 활동은 3월과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집중되었고, 이를 통해 위축된 당세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정치상황은 급속하게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전환되었고, 민주당 또한 대통령 선거에 정당활동이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순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당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고 선거활동을 벌여 나갔으나 집권 가능성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이에 민주당은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1997년 후반 정당활동 또한 정당통합이 주를 이루었다. 결국 통합민주당은 1997년 11월 24일 신한국당과 신설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재출범하였고, 이로써 약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하였다.

타. 무당파국민연합 · 21세기한독당

무당파국민연합과 21세기한독당은 1996년 4월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직전에 두고 3월 창당되었다. 따라서 두 정당 모두 창당과정에서부터 선거활동에 전력하였다. 그러나 두 정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존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당등록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4월 13일 정당법 규정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파. 공화당 · 민주국민연합 · 바른나라정치연합

1997년 12월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9월 창당된 공화당과 민주국민연합, 11월 창당된 바른나라정치연합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당내 · 외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선출 이외에 신고한 주요활동은 없었고, 바른나라정치연합 역시 창당대회, 대통령후보자 추대식과 선거운동만을 주요활동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민주국민연합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당무회의와 한번의 전당대회만을 주요활동으로 신고하였다.

하. 국민신당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한달 여 앞둔 11월 10일 공식출범한 국민신당은 선거활동에 진력하면서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인제 후보가 주요 경쟁 후보로 부상하면서 특히 선거활동에 모든 정당활동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1997년 2개월의 당내활동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지구당을 비롯한 조직강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997년 주요활동 또한 전부가 선거관련 활동이었다.

가. 건설국민승리21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1997년 11월 24일 공식 출범한 건설국민승리21은 창당과정을 포함한 약 2개월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주요활동 개황 또한 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건설국민승리21 역시 대부분의 활동이 선거활동과 직결되어 있었다. 다만 다른 정당과 달리 각종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등 노동자와 연관된 활동들이 많았던 점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벌인 것 등이 차별적인 활동이었다.



▲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대통령직선제 수호와 DJP연합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1997년 10월 3일).



신한국

경제 민주당 제2차 정기 전당대회

신한국

활정치 실천을 위한 당원 결
민주자유당, 한심 자유당

제5장

정당의 수입과 지출

제1절 _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

제2절 _ 정당의 수입

제3절 _ 정당의 지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김영삼 대통령의 제 14대 대통령선거 비용,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20억+ α수수설 등 공개되지 않은 음성적 정치자금에 대한 공방을 벌여 왔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 억 원에 달하는 통치자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구속수감 되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여야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양성화하고 정치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경주하였다. 여야는 이러한 노력의 한 가지 방편으로 각 정당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최소화하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정치자금을 통해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고보조금의 지급액을 대폭 증액시켰다. 그러나 증액 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야는 후원회 기부한도의 확대 등 후원회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의 변경, 선거비용 보전을 통한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 기간 모두 4차례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면서 모든 후원회의 회원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후원금의 기부한도도 증액하였다. 또한 정치자금영수증 제도를 모든 후원회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특히 국고보조금 제도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중심으로 개정되면서 군소정당들과의 갈등을 불러왔

다. 원내정당들은 정치자금법 개정과정에서 국회교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본 배분비율을 50%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보조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개악이며 추악한 정치홍정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여야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지정기탁금제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폐지되었다. 지정기탁금제를 두고 야당은 폐지요구를, 여당의 불가방침을 주장하며 오랜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립해 왔으나, 1997년 제10차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에서 여당이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수용하였다. 그 이외에도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자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양성화와 더불어 지출에 있어서도 건전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여야는 증액한 국고보조금 중 20%이상을 정책연구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였다.

제1절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

1. 정당 수입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정당활동을 위해 각 정당에 유입된 공식적인 수입금액은 매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약 1조 2,22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 정당수입은 약 1조 511억 원이었다. 이는 단순 수입규모에 있어서 이전 노태우 정부 5년 동안의 정당수입 총액 5,321억 원(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 정당수입총액 5,177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 평균 정당수입 또한 약 2,444억 원(순수 정당수입 약 2,102억 원)으로 노태우 정부 기간의 1,064억 원(순수 정당수입 약 1,035억 원)보다 2배 이상에 달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와 투명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정당의 수입원에 있어서는 기타사업 수입이 가장 이례적 결과를 보였다. 이는 1993년 민주자유당이 서울의 중앙교육연수원과 마포 당사를 처분하면서 약 726억여 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기타수입을 제외한 구체적 수입 항목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가장 주요한 정당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를 보였다. 5년간 약 2,125억 원이 정당활동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었다. 노태우 정부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약 66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경상보조금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의 기준액이 증가하면서 선거가 있었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조금은 매년 400억~700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다.

한편 후원회기부금 또한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국고보조금

에 이어 약 1,499억 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되었고, 이는 노태우 정부 기간의 후원회 기부금 약 412억원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연도 별로도 1993년 110억여 원이었던 후원회기부금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에는 706억여 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되었다. 후원회기부금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정당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약 6.9% 수준에서 1997년 25.7%로 급증하여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를 위해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노태우 정부 기간 중 공식적인 정당수입 중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당비와 기탁금은 국고보조금과 후원회기부금보다 그 비중이 낮아졌다. 2,734억여 원이었던 당비는 1,369억여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여당에 집중되어 왔던 기탁금은 1,307억여 원으로 노태우 정부 5년의 1,084억여 원보다는 많았지만 그 증가세는 다른 수입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1994년에는 기탁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당비와 기탁금은 단순 규모면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여전히 주요한 정당의 수입원이었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1995~1997)에는 여전히 특별당비를 포함한 당비수입과 기탁금이 비선거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는 특징을 반복하였다.

그 이외에 차입금은 1993년도 24억원에서 1997년도 106억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규모에 있어서도 359억여 원으로 노태우 정부 기간 155억여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각 정당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당보발행에 따른 광고수입 등 기관지발행 수입은 주요 수입원은 아니지만 1993년도 2억 5,180여만 원에서 1997년도 5억 2,670여만 원으로 늘었다. 전체 규모에서도 이전 정부기간 8억 9,710만여 원보다 약 3배 가까운 23억여 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당별 수입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당과 야당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5년 동안 여당의 정당수입은 9,390억여 원이었던 반면, 야당의 경우 전체 정당의 수입액을 합해도 약 2,829억 원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이 연수원 및 당사를 매각

연도별 정당수입 총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전년도 이월 | 15,241,293,612 | 70,333,980,874 | 39,815,964,610 | 24,512,451,060 | 21,045,117,855 | 170,948,808,011 |
| 당비 | 19,224,100,239 | 14,345,408,254 | 26,081,586,319 | 37,774,010,830 | 39,501,935,672 | 136,927,041,314 |
| 기탁금 | 19,954,472,506 | 17,071,720,505 | 23,141,162,015 | 34,079,305,441 | 36,507,154,829 | 130,753,815,296 |
| 보조금 | 17,402,296,800 | 21,028,616,870 | 76,112,206,830 | 47,743,053,130 | 50,306,108,570 | 212,592,282,200 |
| 후원회기부금 | 11,015,764,616 | 13,964,637,075 | 19,893,269,484 | 34,347,621,855 | 70,687,795,755 | 149,909,088,785 |
| 차입금 | 2,466,441,882 | 2,884,181,702 | 7,223,797,669 | 12,696,994,296 | 10,674,686,415 | 35,946,101,964 |
| 기관지발행수입 | 251,821,209 | 572,441,500 | 455,575,900 | 500,342,345 | 526,750,590 | 2,306,931,544 |
| 기타사업수입 | 75,216,813,524 | 87,381,410,373 | 50,144,322,785 | 124,116,434,464 | 45,808,144,825 | 382,667,125,971 |
| 계 | 160,773,004,388 | 227,582,397,153 | 242,867,885,612 | 315,770,213,421 | 275,057,694,511 | 1,222,051,195,085 |

※ 수입총액은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구·시·군연락소 분을 모두 합한 금액임.

한 것과 매년도 이월금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일방적 우위를 보인 결과였다.⁴²⁾

정당별 수입에 있어서는 민주자유당의 경우 1993년 1,241억여 원에서 1996년 2,337억여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중앙당사 매각 등 특별한 수입원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1995년 1,829억여 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 창당 첫 해인 1995년 수입이 79억여 원이었으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도에는 516억여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결과 의석수가 증가하여 1997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더불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창당 첫 해인 1995년 211억여 원에서 1996년 29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185억여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1993년과 1994년 170억여 원 수준의 정당수입을 유지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은 1995년 303억여 원에서 1996년 185억여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이외의 정당 중에서는 1993년 원내의석을 가진 통일국민당이 175억여 원, 신정

42) 정당명의 변경, 신설합당, 대통령의 당적 변경 등에 따라 여당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 이해를 위해 1993~1995년 민주자유당, 1996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을 모두 여당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치개혁당이 10억여 원의 정당수입을 올렸고,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창당된 국민신당이 81억여 원, 건설국민승리21은 14억여 원의 수입액을 나타내었다. 이 정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연 10억여 원 이하의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정당을 운영하였다.

정당별 연간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24,105,325,092 | 204,751,112,829 | 182,958,506,224 | 233,723,568,076 | - | 745,538,512,221 |
| 한나라당 | - | - | - | - | 193,543,785,696 | 193,543,785,696 |
| 민주당 | 17,138,605,687 | 17,430,984,122 | - | - | - | 34,569,589,809 |
| 통합민주당 | - | - | 30,373,836,531 | 18,575,506,257 | - | 48,949,342,788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7,940,044,904 | 33,336,158,583 | 51,616,344,322 | 92,892,547,809 |
| 자유민주연합 | - | - | 21,184,131,246 | 29,920,467,292 | 18,561,848,836 | 69,666,447,374 |
| 통일국민당 | 17,506,672,109 | - | - | - | - | 17,506,672,109 |
| 신정치개혁당 | 1,082,460,866 | - | - | - | - | 1,082,460,866 |
| 신민당(94.7.8등록) | - | 4,927,405,872 | - | - | - | 4,927,405,872 |
| 신민당(95.6.27등록) | - | - | 363,663,098 | 161,813,857 | - | 525,476,955 |
| 신민주당 | 52,880,000 | 15,884,370 | 19,552,058 | 52,699,356 | 779,901,546 | 920,917,330 |
| 친민당 | 7,350,000 | 0 | 8,000,000 | - | - | 15,350,000 |
| 대한정의당 | 129,861,229 | - | - | - | - | 129,861,229 |
| 새한국당 | 494,249,405 | 446,159,960 | - | - | - | 940,409,365 |
| 대한민주당 | 255,600,000 | 10,850,000 | 15,651,551 | - | - | 282,101,551 |
| 정명당 | - | - | 4,500,000 | 0 | 0 | 4,500,000 |
| 국민신당 | - | - | - | - | 8,163,072,050 | 8,163,072,050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1,486,668,765 | 1,486,668,765 |
| 공화당 | - | - | - | - | 581,785,700 | 581,785,70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131,399,200 | 131,399,20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192,888,396 | 192,888,396 |
| 계 | 160,773,004,388 | 227,582,397,153 | 242,867,885,612 | 315,770,213,421 | 275,057,694,511 | 1,222,051,195,085 |

○ 민주자유당은 1996년 2월 7일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 통합민주당은 1996년 6월 13일 민주당으로 당명변경

○ 신민당(95.6.27등록)은 1996년 2월 5일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변경

○ 신민주당은 1995년 4월 1일 통일한국당으로 당명변경

○ 정명당은 1996년 3월 29일 기독교국민당으로 당명변경

※ 이하 모든 표에서 당명변경 정당은 이전 정당에 포함하였음

2. 정당 지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정당은 공식적인 활동비용으로 총 1조 522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연간 지출규모는 1993년 904억여 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2,943억여 원, 1997년 2,617억여 원으로 약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 기간의 전체 지출규모는 이전 노태우 정부 기간 5,026억여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당지출 내용에 있어서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는 선거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에는 운영경비가 4,699억여 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변화를 보였다. 연도 별로도 1994년 956억여 원, 1995년 895억여 원, 1996년 1,393억여 원, 1997년 982억여 원 등 1,0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어 중앙당 및 지구당 조직이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3년과 1994년 전체 지출액 중 50%이상이었던 운영경비는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37.6%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본 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조직활동비와 선거비가 약 1,300억 원 지출되어 주요한 지출 분야였다. 반면 정책개발비로는 308억여 원이 지출되어 각 정당들이 조직활동비와 선거비용에 비해 정책개발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체적으로 명목화되지 않은 기타경비는 무려 1,822억여 원이 지출되어 여전히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이 높지 못하였다. 이는 노태우 정부 기간에 기타경비로 140억여 원이 지출된 것에 비해 1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전체 수입규모가 2배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기타비용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연도별 정당지출 총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운영경비 (1994년 이후 기본경비) | 47,188,589,039 | 95,607,417,888 | 89,507,411,676 | 139,355,139,852 | 98,279,374,666 | 469,937,933,121 |
| 정책개발비 | - | 1,425,037,635 | 9,258,773,505 | 7,680,395,355 | 12,501,391,516 | 30,865,598,011 |
| 당원교육훈련비 | - | 4,521,409,273 | 7,554,025,941 | 7,138,899,111 | 6,185,036,199 | 25,399,370,524 |

| | | | | | | |
|-------------|----------------|-----------------|-----------------|-----------------|-----------------|-------------------|
| 조직활동비 | 17,341,875,915 | 13,395,491,383 | 43,096,344,013 | 28,356,688,057 | 27,879,605,588 | 130,070,004,956 |
| 선거비 | 1,512,737,168 | 135,584,131 | 40,614,974,529 | 43,160,549,035 | 44,930,052,255 | 130,353,897,118 |
| 선전비 | 13,865,760,827 | 4,164,371,591 | 10,557,712,633 | 11,061,036,002 | 8,827,994,649 | 48,476,875,702 |
| 의정활동비 | - | 5,943,179,713 | 6,772,072,869 | 8,887,431,540 | 5,763,474,628 | 27,366,158,750 |
| 정책추진경비(사업비) | 7,606,393,569 | - | - | - | - | 7,606,393,569 |
| 기타경비 | 2,916,581,640 | 62,287,540,456 | 10,919,837,878 | 48,736,060,214 | 57,359,811,267 | 182,219,831,455 |
| 계 | 90,431,938,158 | 187,480,032,070 | 218,281,153,044 | 294,376,199,166 | 261,726,740,768 | 1,052,296,063,206 |

※ 지출총액은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구·시·군 연락소 분을 통합한 금액임.

정당별로는 수입규모와 비례하여 여당의 지출규모가 훨씬 컸다. 민주자유당의 경우에는 1994년과 1995년 1,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하였고, 1996년에는 무려 2,155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한나라당의 1997년 지출 규모 또한 1,833억여 원으로 두 정당을 합하면 무려 7,837억여 원을 5년 동안 사용하였다.

반면 1993년과 1994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출규모는 각 150억여 원 수준이었고, 1995년 통합민주당 또한 지출액이 295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1996년과 1997년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각각 320억여 원과 499억여 원을 지출하였고, 제2야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의 지출규모 또한 1996년과 1997년 282억여 원과 172억여 원이었다. 한편 1997년 대통령선거를 몇 달 앞두고 창당된 국민신당은 79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정당별 연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56,986,453,569 | 166,146,428,533 | 161,719,732,964 | 215,566,216,076 | - | 600,418,831,142 |
| 한나라당 | - | - | - | - | 183,366,156,654 | 183,366,156,654 |
| 민주당 | 15,499,101,838 | 15,960,601,940 | - | - | - | 31,459,703,778 |
| 통합민주당 | - | - | 29,504,003,655 | 18,291,148,564 | - | 47,795,152,219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6,820,631,027 | 32,047,649,888 | 49,962,936,650 | 88,831,217,565 |
| 자유민주연합 | - | - | 19,834,189,332 | 28,256,692,071 | 17,279,988,040 | 65,370,869,443 |
| 통일국민당 | 15,944,811,106 | - | - | - | - | 15,944,811,106 |
| 신정치개혁당 | 1,079,096,220 | - | - | - | - | 1,079,096,220 |

| | | | | | | |
|----------------|----------------|-----------------|-----------------|-----------------|-----------------|-------------------|
| 신민당(94.7.8등록) | - | 4,906,517,626 | - | - | - | 4,906,517,626 |
| 신민당(95.6.27등록) | - | - | 360,067,075 | 161,813,857 | - | 521,880,932 |
| 신민주당 | 52,627,240 | 15,884,370 | 19,408,802 | 52,678,710 | 779,858,906 | 920,458,028 |
| 친민당 | 7,350,000 | 0 | 3,000,000 | - | - | 10,350,000 |
| 대한정의당 | 128,939,770 | - | - | - | - | 128,939,770 |
| 새한국당 | 478,008,415 | 439,811,152 | - | - | - | 917,819,567 |
| 대한민주당 | 255,550,000 | 10,788,449 | 15,620,189 | - | - | 281,958,638 |
| 정명당 | - | - | 4,500,000 | 0 | 0 | 4,500,000 |
| 국민신당 | - | - | - | - | 7,985,868,995 | 7,985,868,995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1,446,090,040 | 1,446,090,040 |
| 공화당 | - | - | - | - | 581,779,240 | 581,779,24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131,399,200 | 131,399,20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192,663,043 | 192,663,043 |
| 계 | 90,431,938,158 | 187,480,032,070 | 218,281,153,044 | 294,376,199,166 | 261,726,740,768 | 1,052,296,063,206 |

제2절 정당의 수입

1. 당비

당비는 정당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원이며 각 정당들은 당헌과 당규를 통하여 당원의 당비 납부의무와 당비 납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수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적었고, 실제 당비납입은 당 총재나 간부들의 특별당비나 각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당비 형식으로 납부하는 헌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입규모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당수입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였다.

주요 정당의 당비관련 규정

| 구분 | 한나라당 |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
| 당비의 종류 |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 | 기본당비,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 | 일반당비, 직책당비 |
| 당비의 관리 | 사무총장 | 사무총장, 시·도지부장, 지구당위원장 | 사무총장, 시·도지부장, 지구당위원장 |
| 당비납부처 | 지구당 납부원칙 당직자는 소속 당부에 납부 국회의원은 중앙당 납부 | 지구당 납부원칙 당직자와 선거직에 있는 자는 해당 당부에 납부 국회의원 및 특별당비는 중앙당 납부 | 지구당원은 지구당에 납부 당직자는 소속 당부에 납부 지구당위원장은 중앙당 납부 |
| 납부시기 | 월납 또는 분기납 | 좌동 | 좌동 |
| 당비 미납 시 권리행사제한 | 없음 | 있음 | 없음 |
| 당비납부액(월) | 1,000원 이상 - 1,000만원(총재) | 좌동 | 좌동 |

이러한 당비납부의 편중성으로 인하여 각 정당의 당비수입은 선거가 있는 해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복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3년과 1994년 86억여 원 수준

의 당비가 모금되었으나 선거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 각각 169억여 원과 141억여 원이 모금되었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 한나라당은 219억여 원을 모금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1996년 128억여 원의 당비를 모금하였다.

정당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당에 비해 야당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1993년 7.0%, 1994년 4.2%, 1995년 9.3%, 1996년 6%였으며 한나라당은 1997년 11.3%였다. 민주당의 당비 비중은 1993년 45%, 1994년 30%였으나 이후 신설합당된 통합민주당은 1995년 7.8%, 1996년 17.4%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창당 첫해인 1995년 당비 비중이 65%였으나 1996년 38.6%, 1997년 16.0%로 점차 감소하였다. 예외적으로 자유민주연합은 창당 첫해인 1995년 7.3%였으나 이후 1996년 25.1%, 1997년 30.6%로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기간 중 당비 비중은 평균 7.5% 정도로 선거가 있었던 해를 예외로 하면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 주요한 수입원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국고보조금의 대폭 증액 등으로 인해 정당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당의 전체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정당별 당비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8,679,656,922 | 8,663,466,905 | 16,960,808,995 | 14,118,906,397 | - | 48,422,839,219 |
| 한나라당 | - | - | - | - | 21,932,959,030 | 21,932,959,030 |
| 민주당 | 7,779,676,775 | 5,222,236,826 | - | - | - | 13,001,913,601 |
| 통합민주당 | - | - | 2,380,278,712 | 3,224,091,082 | - | 5,604,369,794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5,144,174,025 | 12,876,108,861 | 8,275,150,054 | 26,295,432,940 |
| 자유민주연합 | - | - | 1,547,834,587 | 7,502,348,390 | 5,687,219,876 | 14,737,402,853 |
| 통일국민당 | 1,759,756,477 | - | - | - | - | 1,759,756,477 |
| 신정치개혁당 | 649,139,520 | - | - | - | - | 649,139,520 |
| 신민당(94.7.8등록) | - | 367,253,453 | - | - | - | 367,253,453 |
| 신민당(95.6.27등록) | - | - | 25,400,000 | - | - | 25,400,000 |
| 신민주당 | 1,800,000 | 400,000 | 0 | 52,556,100 | 779,880,900 | 834,637,000 |

| | | | | | | |
|----------|----------------|----------------|----------------|----------------|----------------|-----------------|
| 친민당 | 7,350,000 | 0 | 3,000,000 | - | - | 10,350,000 |
| 대한정의당 | 99,000,000 | - | - | - | - | 99,000,000 |
| 새한국당 | 247,220,545 | 81,251,070 | | - | - | 328,471,615 |
| 대한민주당 | 500,000 | 10,800,000 | 15,590,000 | - | - | 26,890,000 |
| 정명당 | - | - | 4,500,000 | 0 | 0 | 4,500,000 |
| 국민신당 | - | - | - | - | 1,554,018,619 | 1,554,018,619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659,403,703 | 659,403,703 |
| 공화당 | - | - | - | - | 581,085,700 | 581,085,70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0 | 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32,217,790 | 32,217,790 |
| 계 | 19,224,100,239 | 14,345,408,254 | 26,081,586,319 | 37,774,010,830 | 39,501,935,672 | 136,927,041,314 |

2. 기탁금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연간 기탁금 수입액의 단순 규모는 약 200억 원, 171억 원, 231억 원, 341억 원, 36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정당수입에서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2.4%에서 1994년 7.5%, 1995년 9.5%, 1996년 10.7%, 1997년 13.3%였다. 대부분의 기탁금이 집중된 집권여당의 경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민주자유당 수입 중 기탁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6.1%, 8.3%, 12.6%, 14.6%였고, 1997년 한나라당이 18.9%였다.

기탁금은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 정부 기간에도 여당에 집중되는 현상을 그대로 이어갔다. 여당의 독식문제로 인하여 공방이 되어 오던 지정기탁금제도가 결국 1997년 11월 14일 폐지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기간 기탁금 수입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5년 동안 총 기탁금 수입 1,307억여 원 중 8만 4,700원을 제외한 모든 기탁금이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에 기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액의 지정기탁금 또한 1993년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등 3개 정당에 기탁된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도와 관련하여 여·야 간 형평

성 문제, 정당과 기업간의 유착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결국 지정기탁금제도는 1997년 정치자금법 제10차 개정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정당별 기탁금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9,954,387,806 | 17,071,720,505 | 23,141,162,015 | 34,079,305,441 | - | 94,246,575,767 |
| 한나라당 | - | - | - | - | 36,507,154,829 | 36,507,154,829 |
| 민주당 | 61,795 | 0 | - | - | - | 61,795 |
| 통일국민당 | 11,899 | - | - | - | - | 11,899 |
| 신정치개혁당 | 11,006 | - | - | - | - | 11,006 |
| 계 | 19,954,472,506 | 17,071,720,505 | 23,141,162,015 | 34,079,305,441 | 36,507,154,829 | 130,753,815,296 |

※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비지정 기탁금은 없었으며, 1997년 11월 지정기탁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전 구분되었던 실질적인 비지정 기탁금은 기탁되지 않았다.

3. 국고보조금

1989년 정치자금법 제4차 개정에서 국고보조금의 계상 기준액을 선거권자 1인당 400원으로 법제화한 이후 1994년 제7차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고보조금 계상 기준액은 선거권자 1인당 800원으로 점차 증액되어 왔다. 또한 제7차 개정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각 선거마다 추가 계상하도록 한 선거보조금 기준액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경우 60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정당의 공천이 허용된 3개선거에 대해서 각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600원씩의 보조금을 계상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자금법 개정에서 국고보조금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당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93년 국고에서 정당에 보조한 금액은 174억여 원이었으나 1994년 제7차 개정 결과 210억여 원으로 늘었다. 또한 선거가 있었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761억여 원, 477억여 원, 503억여 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1993년

의 경우 전체 정당수입액 중 10.8%였으며, 1994년 9.2%, 1995년 31.3%, 1996년 15.1%, 1997년 18.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당별로 보면 제1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1993년 약 85억 원, 1994년 약 106억 원, 1995년 약 332억 원, 1996년 약 188억 원을 보조받았으며, 1997년 한나라당은 약 250억 원을 보조받았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의 경우 막대한 선거보조금의 지급으로 무려 332억여 원을 보조받아 전체 수입액 중 18.1%를 보조금으로 조달하였다. 그 이외 제1당의 정당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8%, 1994년 5.2%, 1996년 8%, 1997년 13% 수준이었다.

제1야당의 경우에는 1993년과 1994년 민주당이 67억여 원과 83억여 원을, 1995년 통합민주당이 245억여 원을, 1996년과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약 100억원과 174억원을 보조받았다. 제1야당의 경우에는 정당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3년과 1994년 민주당은 수입액 중 약 39.2%와 48.1%가 국고보조금이었고, 1995년 통합민주당은 수입액 중 무려 80.8%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였다. 1996년과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에도 수입액 중 각각 30.1%와 33.7%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창당 첫 해인 1995년 약 165억 원을, 1996년에는 약 10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경우 새정치국민회의와의 후보단일화로 인하여 직접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선거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은 약 61억 원으로 다소 적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정당수입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9%, 34.0%, 33.0%로 정당수입 중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8,483,395,890 | 10,633,433,260 | 33,242,223,290 | 18,822,320,660 | - | 71,181,373,100 |
| 한나라당 | - | - | - | - | 24,965,063,480 | 24,965,063,480 |
| 민주당 | 6,723,620,290 | 8,387,549,070 | - | - | - | 15,111,169,360 |

| | | | | | | |
|----------------|----------------|----------------|----------------|----------------|----------------|-----------------|
| 통합민주당 | - | - | 24,544,857,430 | 8,695,876,260 | - | 33,240,733,690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1,806,264,900 | 10,034,202,920 | 17,428,550,400 | 29,269,018,220 |
| 자유민주연합 | - | - | 16,506,670,420 | 10,184,325,180 | 6,117,290,320 | 32,808,285,920 |
| 통일국민당 | 2,045,220,530 | - | - | - | - | 2,045,220,530 |
| 신정치개혁당 | 115,900,830 | - | - | - | - | 115,900,830 |
| 신민당(94.7.8등록) | - | 1,976,843,000 | - | - | - | 1,976,843,000 |
| 신민당(95.6.27등록) | - | - | 12,190,790 | 6,328,110 | - | 18,518,900 |
| 새한국당 | 34,159,260 | 30,791,540 | - | - | - | 64,950,800 |
| 국민신당 | - | - | - | - | 1,795,204,370 | 1,795,204,370 |
| 계 | 17,402,296,800 | 21,028,616,870 | 76,112,206,830 | 47,743,053,130 | 50,306,108,570 | 212,592,282,200 |

4. 후원회 기부금

김영삼 정부 들어 가장 활성화된 정당수입 분야는 후원회 기부금이었다. 1980년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후 점차 그 설치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정당의 후원금 모금은 1990년까지 집권 여당에서만 이루어졌다. 시·도지부 및 지구당후원회의 경우에도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992년부터 그 후원회의 결성·운영이 본격화되었다.

1995년 12월 30일에 있었던 제8차 정치자금법 개정을 기점으로 정치자금제도는 국고보조금의 증액 위주에서 후원회제도 개선을 통한 정당수입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후원회의 회원수 제한규정이 점차 완화되어 1997년 1월 제9차 개정에서는 모든 후원회 회원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다. 후원금 모금방법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후원회의 기부한도도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정액영수증을 통한 후원금 모금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후원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김영삼 정부 기간 중 정당수입에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커졌으며, 노태우 정부에서 지적되던 후원금의 여당 집중현상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김영삼 정부 기간 중 전체 후원회기부금은 1,499억여 원이었으며, 연도별로도 1993년 110억여 원에서 1994년 139억여 원, 1995년 198억여 원, 1996년 343억여 원, 그리고 1997년 706억여 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액 중 후원회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3년 약 6.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7년 약 25.7%로 대폭 높아졌다.

정당별로는 민주자유당이 1993년도 약 109억 원에서 1994년 약 134억 원, 1995년도 약 192억 원, 1996년도 약 25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1997년 한나라당의 후원회기부금은 약 473억 원이었다. 당의 수입액 대비 후원회기부금의 비중 또한 1993년 8.8%에서 1994년 6.6%, 1995년 10.5%, 1996년 11.1%, 1997년 24.5%로 점차 증가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 창당 첫해인 1995년 약 9,800만 원에서 1996년 약 59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던 1997년의 경우에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으로 인해 후원회기부금이 약 19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후원회기부금이 정당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5년도 약 1.2%에서 1996년 17.8%, 1997년 38.1%로 커졌다. 1997년의 경우 전체 후원회기부금의 67%가 여전히 여당인 한나라당에 집중되기는 하였으나,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후원회기부금이 27.8%로 대폭 증가하여 여당 편중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후원회기부금이 1995년 약 6,900만 원, 1996년 약 15억 원, 1997년 약 1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정당수입 중 후원회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0.3%, 1996년도 4.9%, 1997년도 7.3%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후원회기부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당별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0,918,131,946 | 13,415,261,278 | 19,243,252,964 | 25,888,202,735 | - | 69,464,848,923 |
| 한나라당 | - | - | - | - | 47,385,079,261 | 47,385,079,261 |

| | | | | | | |
|---------------|----------------|----------------|----------------|----------------|----------------|-----------------|
| 민주당 | 97,222,670 | 363,458,339 | - | - | - | 460,681,009 |
| 통합민주당 | - | - | 482,031,350 | 1,061,560,031 | - | 1,543,591,381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98,291,410 | 5,920,494,403 | 19,661,083,573 | 25,679,869,386 |
| 자유민주연합 | - | - | 69,693,760 | 1,477,364,686 | 1,353,322,115 | 2,900,380,561 |
| 신정치개혁당 | 410,000 | - | - | - | - | 410,000 |
| 신민당(94.7.8등록) | - | 7,517,458 | - | - | - | 7,517,458 |
| 새한국당 | 0 | 178,400,000 | - | - | - | 178,400,000 |
| 국민신당 | - | - | - | - | 1,433,690,000 | 1,433,690,000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694,306,200 | 694,306,200 |
| 공화당 | - | - | - | - | 700,000 | 700,00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159,614,606 | 159,614,606 |
| 계 | 11,015,764,616 | 13,964,637,075 | 19,893,269,484 | 34,347,621,855 | 70,687,795,755 | 149,909,088,785 |

5. 차입금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들이 차입한 금액은 모두 359억여 원이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72억 원씩을 차입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없었던 1993년과 1994년 각 24억여 원과 28억여 원을 차입한 반면, 선거가 있었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72억여 원, 126억여 원, 106억여 원을 차입하여 선거가 있는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다.

정당별로는 자유민주연합이 가장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다. 1995년 창당 후 3년 동안 자유민주연합은 96억여 원을 차입하였고, 특히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1996년에는 전체 차입금 중 절반이 넘는 50억여 원을 차입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3년간 차입금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제1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차입한 금액 91억여 원보다 더 많았다. 민주자유당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20억 원 남짓의 자금을 차입하여 왔으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1996년에는 45억여 원을 차입하였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창당 이후 3년 동안 50억 원 남짓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 2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이외에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창당된 국민신당이 20억여 원을 차입하였다. 기타 군소정당은 차입금이 대부분 2억~3억 원을 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정당수입액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당별 차입금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213,440,070 | 1,409,022,226 | 2,975,322,100 | 4,504,898,675 | - | 9,102,683,071 |
| 한나라당 | - | - | - | - | 2,876,799,859 | 2,876,799,859 |
| 민주당 | 1,338,919,268 | 962,168,331 | - | - | - | 2,301,087,599 |
| 통합민주당 | - | - | 1,327,224,378 | 1,395,553,538 | - | 2,722,777,916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778,928,264 | 1,554,220,126 | 2,700,006,976 | 5,033,155,366 |
| 자유민주연합 | - | - | 1,795,598,839 | 5,075,460,456 | 2,752,862,244 | 9,623,921,539 |
| 통일국민당 | 498,468,664 | - | - | - | - | 498,468,664 |
| 신정치개혁당 | 55,413,880 | - | - | - | - | 55,413,880 |
| 신민당(94.7.8등록) | - | 429,082,785 | - | - | - | 429,082,785 |
| 신민당(95.6.27등록) | - | - | 322,172,030 | 166,861,501 | - | 489,033,531 |
| 신민주당 | 47,800,000 | 15,200,000 | 19,552,058 | 0 | 0 | 82,552,058 |
| 친민당 | 0 | 0 | 5,000,000 | - | - | 5,000,000 |
| 대한정의당 | 0 | - | - | - | - | 0 |
| 새한국당 | 57,300,000 | 68,708,360 | - | - | - | 126,008,360 |
| 대한민주당 | 255,100,000 | 0 | 0 | - | - | 255,100,000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2,082,818,136 | 2,082,818,136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130,600,000 | 130,600,000 |
| 공회당 | -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131,399,200 | 131,399,20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200,000 | 200,000 |
| 계 | 2,466,441,882 | 2,884,181,702 | 7,223,797,669 | 12,696,994,296 | 10,674,686,415 | 35,946,101,964 |

6.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들은 기관지를 발간하여 전체 수입액 중 약 0.2%에 달하는 22억여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중 20억여 원이 제1당이었던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이 얻은 수익이었으며, 기타 정당들이 얻은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은 모두 합해 약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정당별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89,575,000 | 480,180,000 | 423,375,900 | 462,892,345 | - | 1,556,023,245 |
| 한나라당 | - | - | - | - | 484,515,400 | 484,515,400 |
| 민주당 | 19,106,209 | 47,261,500 | - | - | - | 66,367,709 |
| 통합민주당 | - | - | 11,700,000 | 0 | - | 11,700,000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0 | 14,450,000 | 27,445,300 | 41,895,300 |
| 자유민주연합 | - | - | 20,500,000 | 23,000,000 | 14,789,890 | 58,289,890 |
| 통일국민당 | 6,000,000 | - | - | - | - | 6,000,000 |
| 신정치개혁당 | 35,910,000 | - | - | - | - | 35,910,000 |
| 신민당(94.7.8등록) | - | 5,000,000 | - | - | - | 5,000,000 |
| 신민당(95.6.27등록) | - | - | 0 | 0 | - | 0 |
| 신민주당 | 0 | 0 | 0 | 0 | 0 | 0 |
| 친민당 | 0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0 | - | - | - | - | 0 |
| 새한국당 | 1,230,000 | 4,000,000 | - | - | - | 5,230,000 |
| 대한민주당 | 0 | 0 | 0 | - | - | 0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0 | 0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0 | 0 |
| 공화당 | -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0 | 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0 | 0 |
| 계 | 251,821,209 | 536,441,500 | 455,575,900 | 500,342,345 | 526,750,590 | 2,270,931,544 |

야당 가운데서는 민주당, 통합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이 기관지 발간을 통해 연간 약 1,000만~5,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기타 군소정당들 중에는 1993년 신정치개혁당이 거둔 약 3,500만 원이 제일 많은 수입이었으며, 그 이외 군소정당들은 500만원 이하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7. 기타수입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들의 기타수입, 즉 회계보고에서 명목화되어 구분되지 않은 수입은 무려 3,826억여 원에 달하였다. 이는 이전 노태우 정부 5년 동안의 기타수입 115억여 원에 비하면 무려 3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1당이었던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의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5년 간 이 두 정당의 기타수입은 전체 기타수입 중 약 95.1%에 달하는 3,637억여 원이었다. 민주자유당의 기타수입이 특이하게 많아진 것은 1993년 중앙교육연수원과 마포당사 매각을 통해 약 727억 원 이상의 기타자금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비해 1993년과 1994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년간 기타수입이 13억여 원에 불과하였고, 통합민주당도 1996년 33억여 원의 기타수입을 올렸으나 2년 간 총 36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의 기타수입은 41억여 원, 자유민주연합의 기타수입은 65억여 원이었다.

그 외 통일국민당이 1993년 10억여 원, 국민신당이 1997년 12억여 원의 기타수입을 얻었으나 기타 군소정당들의 기타수입은 연 3,000만 원 내외의 적은 금액이었다. 1995년 6월 27일 등록된 신민당은 1996년 기타수입이 오히려 약 1,400만 원 적자였다고 신고하였다.

정당별 기타수입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73,372,547,149 | 85,959,150,356 | 48,547,897,777 | 114,622,726,266 | - | 322,502,321,548 |
| 한나라당 | - | - | - | - | 41,242,455,250 | 41,242,455,250 |
| 민주당 | 569,909,026 | 813,041,970 | - | - | - | 1,382,950,996 |
| 통합민주당 | - | - | 256,734,006 | 3,349,047,101 | - | 3,605,781,107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112,386,305 | 1,822,575,714 | 2,238,535,363 | 4,173,497,382 |
| 자유민주연합 | - | - | 1,223,404,419 | 4,336,767,650 | 1,026,598,425 | 6,586,770,494 |
| 통일국민당 | 1,096,196,629 | - | - | - | - | 1,096,196,629 |
| 신정치개혁당 | 12,546,570 | - | - | - | - | 12,546,570 |
| 신민당(94.7.8등록) | - | 578,408,437 | - | - | - | 578,408,437 |
| 신민당(95.6.27등록) | - | - | 3,900,278 | -14,682,267 | - | -10,781,989 |
| 신민주당 | 1,000,000 | 31,610 | 0 | 0 | 0 | 1,031,610 |
| 친민당 | 0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30,000,000 | - | - | - | - | 30,000,000 |
| 새한국당 | 134,614,150 | 30,778,000 | | | | 165,392,150 |
| 대한민주당 | 0 | 0 | 0 | - | - | 0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1,297,340,925 | 1,297,340,925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2,358,862 | 2,358,862 |
| 공화당 | -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0 | 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856,000 | 856,000 |
| 계 | 75,216,813,524 | 87,381,410,373 | 50,144,322,785 | 124,116,434,464 | 45,808,144,825 | 382,667,125,971 |

제3절 정당의 지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 운영경비

1990년대 이후 정당의 외연이 커지면서 정당의 지출에서 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하여 커져갔고,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운영경비의 규모가 컸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각 정당들은 전체 지출액 중 44.7%에 달하는 4,699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3년 471억여 원이었던 운영경비는 1994년 956억여 원으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무려 1,393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지출액 중 운영경비 지출비중도 1993년 52.2%였으나 1994년 51.0%, 1995년 41.0%, 1996년 47.3%, 1997년 37.6% 등으로 매우 높았다.

정당별로는 집권여당이 전체 운영경비 중 약 63%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경우 1993년부터 4년간 총 2,960억여 원을, 한나라당도 1997년 724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1996년 민주자유당(신한국당)은 무려 1,108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도별 지출액 중 운영경비의 비중이 56.6%, 49.6%, 43.6%, 51.5%, 39.5%였다. 1년 지출액 중 절반에 가까운 자금을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지출한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 등 야당도 운영경비의 단순 규모는 여당에 비해 적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정치국민회의 경우 1995년 약 42억원, 1996년 약 129억원, 1997년 약 150억원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여 운영경비 지출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지출액 중 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2.3%, 1996년 40.3%, 1997년 30.3%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이는 창당이후 계속하여 이어진 선거로 인하여 정당의

총 지출액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1995년 약 67억원, 1996년 약 93억원, 1997년 약 87억원으로 운영경비의 증가 폭이 타 정당에 비해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창당이후 지출액 중 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3.7%, 1996년 32.8%, 1997년 50.1%로 계속하여 급증하였다.

정당별 운영경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32,228,088,463 | 82,457,586,782 | 70,463,830,375 | 110,898,620,354 | - | 296,048,125,974 |
| 한나라당 | - | - | - | - | 72,402,175,399 | 72,402,175,399 |
| 민주당 | 9,786,695,792 | 10,055,352,618 | - | - | - | 19,842,048,410 |
| 통합민주당 | - | - | 7,839,949,631 | 6,183,653,154 | - | 14,023,602,785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4,247,003,440 | 12,908,005,372 | 14,989,131,729 | 32,144,140,541 |
| 자유민주연합 | - | - | 6,687,338,641 | 9,271,003,405 | 8,664,059,058 | 24,622,401,104 |
| 통일국민당 | 3,733,855,872 | - | - | - | - | 3,733,855,872 |
| 신정치개혁당 | 822,501,080 | - | - | - | - | 822,501,080 |
| 신민당(94.7.8등록) | - | 2,783,562,696 | - | - | - | 2,783,562,696 |
| 신민당(95.6.27등록) | - | - | 238,383,228 | 41,178,857 | - | 279,562,085 |
| 신민주당 | 34,037,440 | 15,684,370 | 19,408,802 | 52,678,710 | 89,303,389 | 211,112,711 |
| 친민당 | 150,000 | 0 | 3,000,000 | - | - | 3,150,000 |
| 대한정의당 | 61,993,020 | - | - | - | - | 61,993,020 |
| 새한국당 | 374,527,372 | 286,659,700 | - | - | - | 661,187,072 |
| 대한민주당 | 146,800,000 | 8,571,722 | 8,497,559 | - | - | 163,869,281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2,042,759,828 | 2,042,759,828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82,710,143 | 82,710,143 |
| 공화당 | - | - | - | - | 2,548,300 | 2,548,30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4,235,080 | 4,235,08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2,451,740 | 2,451,740 |
| 계 | 47,188,649,039 | 95,607,417,888 | 89,507,411,676 | 139,355,139,852 | 98,279,374,666 | 469,937,993,121 |

2. 정책개발비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은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 총 384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중 1994년 이후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비 항목으로 별도 구분되어 집행된 금액은 308억여 원이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4년간 전체 지출 중 약 3.1%의 적은 돈이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자유당이 1994년 약 7억 원, 1995년 약 86억 원, 1996년 약 66억 원을 정책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997년 한나라당이 약 118억 원을 사용하였다. 민주자유당이 전체 지출액 중 정책개발비로 사용한 비율은 1994년 0.4%, 1995년 5.3%, 1996년 3.1%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집행한 정책개발비 또한 전체 지출액의 6.5%에 불과하였다.

정당별 정책개발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7,181,458,299 | 737,320,835 | 8,569,127,090 | 6,574,312,850 | - | 23,062,219,074 |
| 한나라당 | - | - | - | - | 11,834,961,251 | 11,834,961,251 |
| 민주당 | 340,127,250 | 593,462,750 | - | - | - | 933,590,000 |
| 통합민주당 | - | - | 333,591,490 | 74,673,558 | - | 408,265,048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70,987,600 | 620,919,961 | 399,746,761 | 1,091,654,322 |
| 자유민주연합 | - | - | 277,661,925 | 410,488,986 | 198,961,799 | 887,112,710 |
| 통일국민당 | 45,978,340 | - | - | - | - | 45,978,340 |
| 신정치개혁당 | 27,219,800 | - | - | - | - | 27,219,800 |
| 신민당(94.7.8등록) | - | 84,951,000 | - | - | - | 84,951,000 |
| 신민당(95.6.27등록) | - | - | 7,405,400 | 0 | - | 7,405,400 |
| 새한국당 | 11,459,880 | 9,303,050 | - | - | - | 20,762,930 |
| 대한민주당 | 150,000 | 0 | 0 | - | - | 150,000 |
| 국민신당 | - | - | - | - | 66,943,705 | 66,943,705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778,000 | 778,000 |
| 계 | 7,606,393,569 | 1,425,037,635 | 9,258,773,505 | 7,680,395,355 | 12,501,391,516 | 38,471,991,580 |

※ 1993년은 회계보고 항목에 정책개발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1993년 지출액은 정책추진경비(사업비)임

정책개발비 지출에 인색한 구태는 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제1야당의 경우 1993년과 1994년 민주당이 약 3억 4,000만 원과 5억 9,000만 원만을 정책개발비로 지출하였고, 1995년 통합민주당 또한 정책개발비 지출액이 약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1996년과 1997년 약 6억2,000만 원과 약 4억 원을 정책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전체 지출액 중 1.9%와 0.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도 1995년 약 2억 7,000만 원, 1996년 약 4억 1,000만 원, 1997년 약 2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정당들이 정책개발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조직활동비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이 조직 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300억여 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12.4%였다. 조직 활동비 지출은 선거가 있었던 해에 비해 비선거년도에 더 많았다. 1993년과 1994년 173억여 원과 133억여 원의 조직활동비가 지출된데 비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조직활동비는 430억여 원, 283억여 원, 278억여 원이 지출되었다. 선거년도 중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1995년도가 지출액 대비 19.7%로 지출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선거년이었던 1993년 조직활동비는 지출규모는 적었으나 전체 지출액 중 조직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비교적 높았다. 그 이외 1996년과 1997년은 지출액 중 10% 내외를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다.

정당별로는 민주자유당이 4년 동안 768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조직활동비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민주자유당 전체 지출액 중 약 12.8%였다. 연도별로는 1993년 132억여 원, 1994년 100억여 원, 1995년 357억여 원, 1996년 177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1993년은 비교적 지출금액이 적었지만 전체 지출액중 조직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가장 높았고, 반면 1995년은 1993년에 비해 약 2.7배의 많은 금액을 조

직활동비로 지출하였으나 지출비중은 22.1%였다. 한편 1997년 한나라당은 지출액 중 10.9%에 달하는 약 201억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경우 1995년 약 13억원, 1996년 약 43억원, 1997년 약 49억 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총 지출액 중 각각 19.8%, 13.5%, 9.9%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지출비중은 제1당이었던 민주자유당과 한나라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지만 실제 총 지출액은 제1당의 지출액이 새정치국민회의보다 7배 정도 많았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도 1995년 약 24억 원, 1996년 약 21억 원, 1997년 약 20억 원으로 지출규모는 적었지만 지출비중은 11.9%, 1996년 7.5%, 1997년 11.5%였다.

정당별 조직활동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3,246,791,505 | 10,071,472,958 | 35,758,951,357 | 17,784,180,934 | - | 76,861,396,754 |
| 한나라당 | - | - | - | - | 20,064,018,674 | 20,064,018,674 |
| 민주당 | 2,096,801,607 | 2,404,695,373 | - | - | - | 4,501,496,980 |
| 통합민주당 | - | - | 3,582,893,196 | 4,001,415,632 | - | 7,584,308,828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1,349,534,052 | 4,339,317,920 | 4,931,037,090 | 10,619,889,062 |
| 자유민주연합 | - | - | 2,362,748,971 | 2,122,128,571 | 1,979,997,391 | 6,464,874,933 |
| 통일국민당 | 1,726,454,435 | - | - | - | - | 1,726,454,435 |
| 신정치개혁당 | 106,899,000 | - | - | - | - | 106,899,000 |
| 신민당(94.7.8등록) | - | 887,343,743 | - | - | - | 887,343,743 |
| 신민당(95.6.27등록) | - | - | 38,658,137 | 109,645,000 | - | 148,303,137 |
| 신민주당 | 7,000,190 | 200,000 | 0 | 0 | 67,915,517 | 75,115,707 |
| 친민당 | 0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10,500,000 | - | - | - | - | 10,500,000 |
| 새한국당 | 46,729,178 | 30,686,782 | - | - | - | 77,415,960 |
| 대한민주당 | 100,700,000 | 1,092,527 | 3,558,300 | - | - | 105,350,827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775,229,436 | 775,229,436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9,213,390 | 9,213,390 |
| 공화당 | -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32,648,670 | 32,648,67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19,545,420 | 19,545,420 |
| 계 | 17,341,875,915 | 13,395,491,383 | 43,096,344,013 | 28,356,688,057 | 27,879,605,588 | 130,070,004,956 |

4. 선거비

김영삼 정부 기간 중 전국단위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3차례 있었다. 각 정당들은 공식적인 선거비로 총 1,303억여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총 지출액 중 약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거비는 이전 노태우 정부 기간 총 지출액 중 37.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항목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선거비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지출된 운영경비에 비해 무려 3,396억여 원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선거비용 논란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회계보고 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 사이의 현실적 괴리는 여전히 논쟁이 되었다.

선거별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1995년 406억여 원,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1996년 431억여 원,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 449억여 원이 선거비로 지출되었다. 전국단위의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평균적으로 400억 원 대의 자금이 소요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간의 선거비 지출액은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였다. 1995년 민주자유당은 237억원을 선거비로 지출한 데 비해 통합민주당은 107억여 원, 자유민주연합은 61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1996년 민주자유당은 204억여 원을 지출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46억여 원, 새정치국민회의는 88억여 원, 자유민주연합은 91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 선거비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73억여 원을 선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보고 한 반면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207억여 원을 선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 지출액 중 선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9.5%였던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41.5%로 월등히 높았다. 한편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후보단일화 후 공조체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던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선거비용으로 총 지출액의 0.3%에 해당하는 약 4,800만 원만 선거비로 지출하였다고 회계보고 하였다.

정당별 선거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854,972,058 | 48,368,216 | 23,758,603,217 | 20,494,330,519 | - | 45,156,274,010 |
| 한나라당 | - | - | - | - | 17,382,006,608 | 17,382,006,608 |
| 민주당 | 528,182,650 | 56,043,945 | - | - | - | 584,226,595 |
| 통합민주당 | - | - | 10,724,878,202 | 4,649,490,065 | - | 15,374,368,267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0 | 8,818,305,704 | 20,712,133,536 | 29,530,439,240 |
| 자유민주연합 | - | - | 6,131,493,110 | 9,198,422,747 | 48,260,000 | 15,378,175,857 |
| 통일국민당 | 26,900,370 | - | - | - | - | 26,900,370 |
| 신정치개혁당 | 71,404,020 | - | - | - | - | 71,404,020 |
| 신민당(94.7.8등록) | - | 31,171,970 | - | - | - | 31,171,970 |
| 신민당(95.6.27등록) | - | - | 0 | 0 | - | 0 |
| 신민주당 | 0 | 0 | 0 | 0 | 617,840,000 | 617,840,000 |
| 친민당 | 0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31,278,070 | - | - | - | - | 31,278,070 |
| 새한국당 | 0 | 0 | - | - | - | 0 |
| 대한민주당 | 0 | 0 | 0 | - | - | 0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 | 4,126,383,391 | 4,126,383,391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1,350,169,697 | 1,350,169,697 |
| 공화당 | - | - | - | - | 579,230,940 | 579,230,94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0 | 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114,028,083 | 114,028,083 |
| 계 | 1,512,737,168 | 135,584,131 | 40,614,974,529 | 43,160,549,035 | 44,930,052,255 | 130,353,897,118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5. 선전비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각 정당은 자당의 정강 및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비로 484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전 노태우 정부 기간에 총 429억여 원이 선전비로 지출된 것과 비교하면 다른 항목의 지출규모와 달리 크게 지출액이 증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 지출액에서 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김영삼 정부 기간이 4.6%로 노태우 정부 기간 8.5%보다 낮아졌다. 연도별 선전비 지출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높았던 1995년이 4.8%에 불과하였다.

정당별 선전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811,418,635 | 2,649,712,663 | 6,662,863,206 | 4,269,440,653 | - | 15,393,435,157 |
| 한나라당 | - | - | - | - | 4,232,974,929 | 4,232,974,929 |
| 민주당 | 1,948,413,204 | 1,131,715,228 | - | - | - | 3,080,128,432 |
| 통합민주당 | - | - | 2,165,646,019 | 1,927,501,302 | - | 4,093,147,321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660,739,502 | 3,620,575,512 | 2,469,961,455 | 6,751,276,469 |
| 자유민주연합 | - | - | 1,057,921,596 | 1,243,518,535 | 1,077,916,931 | 3,379,357,062 |
| 통일국민당 | 10,027,180,203 | - | - | - | - | 10,027,180,203 |
| 신정치개혁당 | 34,030,200 | - | - | - | - | 34,030,200 |
| 신민당(94.7.8등록) | - | 362,709,960 | - | - | - | 362,709,960 |
| 신민당(95.6.27등록) | - | - | 5,164,210 | - | - | 5,164,210 |
| 신민주당 | 3,511,800 | 0 | 0 | - | 4,800,000 | 8,311,800 |
| 친민당 | 0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15,228,680 | - | - | - | - | 15,228,680 |
| 새한국당 | 25,978,105 | 19,932,740 | - | - | - | 45,910,845 |
| 대한민주당 | 0 | 301,000 | 878,100 | - | - | 1,179,100 |
| 정명당 | - | - | 4,500,000 | 0 | 0 | 4,500,000 |
| 국민신당 | - | - | - | - | 889,792,964 | 889,792,964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2,120,100 | 2,120,100 |
| 공화당 | -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94,405,450 | 94,405,45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56,022,820 | 56,022,820 |
| 계 | 13,865,760,827 | 4,164,371,591 | 10,557,712,633 | 11,061,036,002 | 8,827,994,649 | 48,476,875,702 |

정당별로 보면 총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선전비 지출액도 여당이 더 많았다. 그러나 총 지출액 중 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야당이 높았다. 민주자유당의 경

우 1993년 약 18억 원, 1994년 약 26억 원, 1995년 약 67억 원, 1996년 약 43억 원을 선전비로 지출하였고, 1997년 한나라당이 약 42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전체 지출액 중 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약 7억 원, 1996년 약 36억 원, 1997년 약 25억 원으로 다소 적은 금액을 선전비로 사용하였으나, 지출비중은 평균 7% 수준으로 더 높았다. 자유민주연합도 선전비 지출액이 1995년 약 11억 원, 1996년 약 12억 원, 1997년 약 11억 원이었으나 지출비중은 평균 5.2% 수준으로 여당에 비해 높았다. 기타 정당 중에는 1993년도 통일국민당이 약 100억 원, 1994년 7월 등록된 신민당이 1994년 3억여 원, 1997년 국민신당이 8억여 원을 선전비로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적은 비용을 선전비로 지출하였다

6. 당원교육훈련비

각 정당들이 소속 당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원교육훈련비는 1989년까지 회계보고 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보고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회계보고부터 당원교육훈련비가 하위항목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1994년 다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회계보고 되었다. 1994년 회계보고 된 이후부터 4년 동안 각 정당이 당원교육훈련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253억여 원으로 연평균 63억여 원이었다. 노태우 정부 기간 중인 1988년과 1989년 2년간 보고된 당원교육훈련비가 약 2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지출규모가 6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총 지출액 중 당원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두 기간 모두 3%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차이가 없었다.

정당별 당원교육훈련비는 여야가 그 규모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출규모가 적었고, 총 지출액 대비 당원교육훈련비의 지출비중도 낮았다. 민주자유당은 1994년 약 40억 원, 1995년 약 73억 원, 1996년 약 63억 원을 당원교육훈련

비로 지출하였고, 한나라당도 1997년 약 51억 원을 지출하였다. 총 지출액 대비 당원 교육훈련비의 지출비중에서 보면 1995년 4.5%를 제외하고는 모두 2% 수준에 머물렀다. 새정치국민회의 당원교육비 지출액은 1995년 약 6,000만 원, 1996년 약 4억 원, 1997년 약 8억 원 등으로 지출비중이 모두 2%를 넘지 않았다. 또한 자유민주연합도 1995년 약 5,000만 원, 1996년 약 3억 원, 1997년 약 3억 원 등 지출비중이 0.3~1.6%로 매우 낮았다.

정당별 당원교육훈련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3,976,925,166 | 7,309,303,109 | 6,319,427,156 | - | 17,605,655,431 |
| 한나라당 | - | - | - | 5,137,447,533 | 5,137,447,533 |
| 민주당 | 457,746,727 | - | - | - | 457,746,727 |
| 통합민주당 | - | 136,844,132 | 126,618,150 | - | 263,462,282 |
| 새정치국민회의 | - | 56,580,896 | 415,256,565 | 775,826,555 | 1,247,664,016 |
| 자유민주연합 | - | 49,657,804 | 277,597,240 | 268,423,061 | 595,678,105 |
| 통일국민당 | - | - | - | - | 0 |
| 신정치개혁당 | - | - | - | - | 0 |
| 신민당(94.7.8등록) | 77,507,180 | - | - | - | 77,507,180 |
| 신민당(95.6.27등록) | - | 1,640,000 | 0 | - | 1,640,000 |
| 신민주당 | 0 | 0 | 0 | - | 0 |
| 친민당 | 0 | 0 | - | - | 0 |
| 대한정의당 | 0 | - | - | - | 0 |
| 새한국당 | 9,230,200 | - | - | - | 9,230,200 |
| 대한민주당 | 0 | 0 | - | - | 0 |
| 정명당 | - | 0 | 0 | 0 | 0 |
| 국민신당 | - | - | - | 2,741,730 | 2,741,730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597,320 | 597,320 |
| 공화당 | - | - | -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0 | 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0 | 0 |
| 계 | 4,521,409,273 | 7,554,025,941 | 7,138,899,111 | 6,185,036,199 | 25,399,370,524 |

군소정당들의 경우에는 신민당, 새한국당, 국민신당, 건설국민승리21 등 4개 정당만이 적은 금액의 당원교육훈련비 지출을 회계보고 하였을 뿐 그 이외의 정당들은 당원훈련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거나 직접 정당이 지출한 비용으로, 1994년도 정당 회계보고 시부터 새롭게 세목에 포함된 지출항목이다. 각 정당들은 1993년부터 4년 동안 총 지출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273억여 원을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하였다. 1994년 59억여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는 1995년 67억여 원, 1996년 88억여 원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7년에는 5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정당별 의정활동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5,560,953,343 | 6,240,727,979 | 7,685,912,936 | - | 19,487,594,258 |
| 한나라당 | - | - | - | 5,119,043,407 | 5,119,043,407 |
| 민주당 | 325,299,920 | - | - | - | 325,299,920 |
| 통합민주당 | - | 118,220,400 | 150,124,670 | - | 268,345,070 |
| 새정치국민회의 | - | 78,736,710 | 860,548,456 | 336,126,441 | 1,275,411,607 |
| 자유민주연합 | - | 334,387,780 | 190,845,478 | 297,874,080 | 823,107,338 |
| 신민당(94.7.8등록) | 12,679,950 | - | - | - | 12,679,950 |
| 새한국당 | 44,246,500 | - | - | - | 44,246,500 |
| 국민신당 | - | - | - | 10,430,700 | 10,430,700 |
| 계 | 5,943,179,713 | 6,772,072,869 | 8,887,431,540 | 5,763,474,628 | 27,366,158,750 |

정당별로는 여야 간 편차가 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4년 약 56억 원, 1995년 약 62억 원, 1996년 약 77억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출하였고, 한나라당도 1997년 약 51억

원을 지출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1994년 3억여 원, 통합민주당은 1995년과 1996년 각각 약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또한 의정활동비 지출액이 1995년 약 8,000만 원, 1996년 약 9억 원, 1997년 약 3억 원에 불과하였고, 자유민주연합도 1995년 약 3억 원, 1996년 약 2억 원, 1997년 약 3억 원을 지출하였다. 그 이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1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총 지출액 중 의정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주자유당이 평균 3.3% 수준을 보여왔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는 1% 내외로 매우 낮았다.

8. 기타경비

김영삼 정부 기간 중 정당의 지출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특정 세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기타경비가 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5년간 사용된 기타경비는 무려 1,822억여 원이었고, 이는 전체 지출비용 중 17.3%에 달하였다. 1993년 29억여 원이었던 기타경비는 1994년 622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1995년 109억여 원이었던 기타경비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96년과 1997년 다시 487억여 원과 573억여 원으로 급증하였다. 노태우 정부 기간 중 기타경비 지출액은 140억여 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약 2.8%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이는 정당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자유당이 1993년 약 17억 원, 1994년 약 606억 원, 1995년 약 30억 원, 1996년 약 415억 원을, 그리고 한나라당이 1997년 약 471억 원을 기타경비로 지출하였다. 1994년 민주자유당의 총 지출액 중 기타경비 지출비중은 무려 36.5%였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에도 1995년 약 29억 원, 1996년 약 55억 원, 1997년 약 47억 원을 기타경비로 지출하였고, 연도별 지출액 중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4.8%,

19.6%, 27.5%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에는 1995년 약 4억 원, 1996년 약 5억 원, 1997년 약 53억 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기타경비를 지출하였고, 지출비중 또한 1997년 10.7%를 제외하면 1996년과 1997년 각각 5.2%, 1.5%, 로 낮았다.

기타경비는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를 일반당원이나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출통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기타경비 항목의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정당별 기타경비 지출액

(단위: 원)

| 구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민주자유당 | 1,663,724,609 | 60,644,088,570 | 2,956,326,631 | 41,539,990,674 | | 106,804,130,484 |
| 한나라당 | - | - | - | - | 47,193,528,853 | 47,193,528,853 |
| 민주당 | 798,881,335 | 936,285,379 | - | - | - | 1,735,166,714 |
| 통합민주당 | - | - | 4,601,980,585 | 1,177,672,033 | - | 5,779,652,618 |
| 새정치국민회의 | - | - | 357,048,827 | 464,720,398 | 5,348,973,083 | 6,170,742,308 |
| 자유민주연합 | - | - | 2,932,979,505 | 5,542,687,109 | 4,744,495,720 | 13,220,162,334 |
| 통일국민당 | 384,441,886 | - | - | - | - | 384,441,886 |
| 신정치개혁당 | 17,042,120 | - | - | - | - | 17,042,120 |
| 신민당(94.7.8등록) | - | 666,591,127 | - | - | - | 666,591,127 |
| 신민당(95.6.27등록) | - | - | 68,816,100 | 10,990,000 | - | 79,806,100 |
| 신민주당 | 8,077,810 | 0 | 0 | 0 | 0 | 8,077,810 |
| 친민당 | 7,200,000 | 0 | 0 | - | - | 7,200,000 |
| 대한정의당 | 10,000,000 | - | - | - | - | 10,000,000 |
| 정명당 | - | - | 0 | 0 | 0 | 0 |
| 새한국당 | 19,313,880 | 39,752,180 | - | - | - | 59,066,060 |
| 대한민주당 | 7,900,000 | 823,200 | 2,686,230 | - | - | 11,409,430 |
| 국민신당 | - | - | - | - | 71,587,241 | 71,587,241 |
| 건설국민승리21 | - | - | - | - | 501,390 | 501,390 |
| 공화당 | - | - | - | 0 | 0 | 0 |
| 민주국민연합 | - | - | - | - | 110,000 | 110,000 |
| 바른나라정치연합 | - | - | - | - | 614,980 | 614,980 |
| 계 | 2,916,581,640 | 62,287,540,456 | 10,919,837,878 | 48,736,060,214 | 57,359,811,267 | 182,219,831,455 |



부록

1. 정당의 변천과정표
2. 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3.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4. 정당의 당원수
5. 정당의 활동연지
6. 창당발기 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7. 정당의 강령·기본정책

1. 정당의 변천과정표

➡ 대표자 변경 등 ➡ 흡수 합당 ➡ 신설 합당 ■■■▶ 재창당 등

| 등록당시 | |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당명 | 등록년월일 대표자 | 63년 | 64년 | 65년 | 66년 | 67년 | 68년 | 69년 | 70년 | 71년 | 72년 | 73년 | 74년 | 75년 | 76년 | 77년 | 78년 | 79년 | 80년 | | | | | | | | | | | | | |
| 민주공화당 | 63.5.10 정구영 | 63.9.5 대표자변경 박정희 | | | | | | | | | | | | | | | | | | 79.11.16 대표자변경 김종필 |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 | | | | | | | | | | |
| 민정당 | 63.6.28 김병노 | 63.9.15 대표자변경 윤보선 | 64.11.27 자유민주당을 흡수 합당 | 64.5.11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주당 | 63.8.17 박순천 | 64.10.5 국민의당을 흡수 합당 | | 65.5.11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민주당 | 63.9.9 김준연 | 63.11.8 대표자변경 김도연 | 64.11.27 민정당으로 흡수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 63.9.13 김병노 | 64.10.5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당 | 63.10.9 장택상 | 64.5.8 대표자변경 남승학 | | 66.12.18 대표자변경 이재학 | | | | | | 70.1.26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독립당 | 63.10.30 김홍일 | 64.6.24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조각산 | | 67.3.25 대표자변경 신공제 | | 68.3.28 대표자변경 이태구 | | | | | | 70.2.3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민중당 | 65.5.11 윤보선·박순천 | 66.5.11 신설합당 민중당 | | 67.2.11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한당 | 66.5.30 윤보선 | 66.5.30 등록 신한당 | | 67.2.11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민당 | 67.2.11 유진오 | 67.2.11 신설합당 신민당 | | 69.9.8 해산 (정당법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민당 | 69.9.22 유진오 | 69.9.22 등록 신민당 | | 자유당(70.1.26)과 한국독립당(70.2.3)을 흡수 합당 | | 70.2.17 대표자변경 유진산 | 71.5.12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홍일 | 71.10.16 대표자변경 김홍일 | 72.9.28 대표자변경 유진산 | | 74.5.8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의택 | | 74.8.27 대표자변경 김영삼 | 76.9.21 대표자변경 이철승 | | 79.6.7 대표자변경 김영삼 | |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 | | | | | | | | | | | | | |
| 민주통일당 | 73.1.30 양일동 | 73.1.30 등록 민주통일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일사회당 | 64.4.7 이봉학 | 67.4.7 등록 통일사회당 | | 70.4.29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철 | | 71.1.19 대표자변경 김철 | |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일사회당 | 74.1.21 안필수 | 74.1.21 등록 통일사회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풍회 (통한당) | 63.8.3 오재영 | 67.3.28 당명변경 통한당 | | 71.5.3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민회 (정의당) | 63.9.9 변영태 | 63.12.10 대표자변경 송중근 | 67.3.30 당명-대표자변경 정의당 이세진 | | 69.1.21 대표자변경 진복기 | | 71.5.4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흥당 | 63.9.13 장이석 | 63.10.31 대표자변경 표문화 | 66.2.1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민회 (민중당) | 63.9.26 성보경 | 67.3.24 당명-대표자변경 민중당 김준연 | | 67.5.6 대표자변경 성보경 | |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당 | 63.10.28 김명윤 | 66.2.18 해산 (정당법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당 | 67.3.22 서민호 | 67.3.22 등록 대중당 | | 71.5.1 대표자변경 이몽 | | 72.1.28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이동화 | | 73.6.21 해산 (정당법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민당 | 67.4.27 이종윤 | 67.4.27 등록 자민당 | | 71.5.3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주당 | 67.5.6 조재천 | 70.12.15 해산 (정당법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당 | 71.1.23 윤보선 | 71.1.23 등록 국민당 | | 71.8.2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조중서 | |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당시 | | 변천과정 | | | | | | | | | | |
|-------------------|-------------------------|-------------------------------|----------------------------|------------------------------|-----------------------------|-------------------------------|-----------------------------|----------------------------|------------------------------|-------------------------------|-------------------------------|-------------------------------|
| 정당명 | 등록년월일 대표자 | 81년 | 82년 | 83년 | 84년 | 85년 | 86년 | 87년 | 88년 | 89년 | 90년 | 91년 |
|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 90.2.15 노태우·김영삼·김종필 | | | | | | | | | | 90.2.15신설합당 민주자유당 | 90.5.25대표자변경 노태우 |
| 공명민주당 | 90.8.3 고태만 | | | | | | | | | | 90.8.3등록 공명민주당 | |
| 민중당 | 90.11.19 이우재·김상기·김낙중 | | | | | | | | | | 90.11.19등록 민중당 | |
| 민주당 | 91.9.16 김대중 | | | | | | | | | | | 91.9.16신설합당 민주당 |
| 민주당 | 90.6.18 이기택 | | | | | | | | | | 90.6.18등록 민주당 | 91.9.16민주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 87.11.13 김대중 | | | | | | | 87.11.13등록 평화민주당 | 88.3.31대표자변경 직무대행 박영숙 | 88.6.20대표자변경 김대중 | | 91.4.15 당명변경 신민주연합당 |
| 민주정의당 | 81.1.17 전두환 | | | | | | | 87.7.11대표자변경 권한대행 노태우 | 87.8.13대표자변경 노태우 | | 90.2.15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 통일민주당 | 87.5.6 김영삼 | | | | | | | 87.5.6등록 통일민주당 | 88.3.14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영삼 | 88.6.2대표자변경 김영삼 | | 90.2.15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신민주공화당 | 87.11.11 김종필 | | | | | | | 87.11.11등록 신민주공화당 | | | | 90.2.15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민주한국당 | 81.1.21 유치승 | | | | | 85.4.3 대표자변경 조윤환 | 85.5.2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문섭 | 85.8.19 대표자변경 유치승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민주사회당 | 81.1.23 고정훈 | | 82.3.29신정사회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 | | | | | | |
| 한국국민당 | 81.1.24 김종철 | | | | | 85.3.29대표자변경 이만섭 | |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민권당 | 81.1.24 김의택 | | | 83.2.14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성우 | 83.3.22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조경 | 83.6.3 대표자변경 임재홍 | 84.7.11대표자변경 대표최고위원 최인수 | 85.1.7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조경 | 85.1.22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성우 | 85.2.15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원일민립당 | 81.1.26 박재원 | 81.3.2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 | |
| 신정당 | 81.1.31 김갑수 | | 82.3.29신정사회당으로 신설합당(소멸) | | | | | | | | | |
| 안민당 (자유민족당) | 81.1.31 용태영 | | 82.1.12당명변경 자유민족당 | | | 85.2.15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사회당 | 81.2.5 김철 | 81.3.2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 | |
| 한국기민당 | 81.3.5 이민국 | 81.3.2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 | |
| 통일민족당 | 81.3.6 양덕인 | 81.3.2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 | |
| 민주농민당 (근로농민당) | 81.3.7 신중목 | 81.12.28당명·대표자변경 근로농민당 이규정 | | | | 85.2.15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 | |
| 불민당 (신민주당) | 81.8.14 염중훈 | | | | | 85.1.7당명변경 신민주당 | | | | 88.4.1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2) | | |
| 신정사회당 | 82.3.29 고정훈 | | 82.3.29신설합당 신정사회당 | | | 85.5.3 대표자변경 이원철 | 85.11.5대표자변경 대표최고위원 권국 | 86.5.28사회민주당으로 흡수합당(소멸) | | | | |
| 신한민주당 | 85.1.22 이민우 | | | | | 85.1.22등록 신한민주당 | | 87.12.3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이택희 | 88.1.20 대표자변경 신도원 | 88.4.6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서순용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사회민주당 | 85.7.15 김철 | | | | | 85.7.15등록 사회민주당 | 86.5.28신정사회당을 흡수합당 | 86.11.18 대표자변경 권두영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기독교민당 | 85.11.13 진복기 | | | | | 85.7.15등록 기독교민당 | |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민중민주당 | 86.9.5 유한열 | | | | | | 86.9.5등록 민중민주당 | | 87.5.2자진해산 (정당법 제38조) | | | |
| 제3세대당 | 87.3.13 한영수 | | | | | | | 87.3.13등록 제3세대당 | 88.4.23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공경덕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일체민주당 | 87.6.19 김선적 | | | | | | | 87.6.19등록 일체민주당 | | 88.4.1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2) | | |
| 한주의 통일한국당 | 87.11.5 신정일 | | | | | | | 87.11.5등록 한주의통일한국당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 한국민주당 | 88.2.10 정대영 | | | | | | | | 88.2.10등록 한국민주당 | 88.2.26 대표자변경 정영관 | 85.4.18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2) | |
| 정의평화당 (우리정의당) | 88.3.11 김상철 | | | | | | | | 88.3.11등록 정의평화당 | 88.3.31 당명변경 우리정의당 | 85.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민중의당 | 88.3.11 정태윤 | | | | | | | | 88.3.11등록 민중의당 | | 88.4.29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3) | |
| 한겨레민주당 | 88.4.6 예춘호 | | | | | | | | | 88.4.6등록 한겨레민주당 | | 91.3.13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1) |

| 등록당시 | | 변천과정 | | | | | |
|------------------|---------------------------|---|------------------------|---|--|--|---|
| 정당명 | 등록년월일 대표자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 90. 2. 15 노태우·김영삼·김종필 | 92. 8. 28 대표자변경 김영삼 | | | | 96. 2. 7 당명변경 신한국당 | 97. 10. 2 대표자변경 이회창 97. 11. 24 한나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공명민주당 | 90. 8. 3 고태만 | 92. 3. 30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 | |
| 민중당 | 90. 11. 19 이우재·김삼기·김낙중 | 92. 3. 30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 | |
| 민주당 | 90. 6. 18 김대중 | 92. 6. 24 대표자변경 김대중·이기택 | 93. 4. 8 대표자변경 이기택 | | 95. 3. 7 새한국당을 흡수합당 95. 9. 1 대표자변경 홍영기·박일 95. 12. 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통일국민당 | 92. 2. 10 정주영 | | 93. 3. 19 대표자변경 김동길 | 94. 7. 8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신정치개혁당 | 92. 3. 4 박찬중 | | | 94. 7. 8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 진리평화당 (통일한국당) | 92. 11. 6 허경영 | 92. 12. 9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박중채 92. 12. 29 대표자변경 염중훈 | 93. 1. 18 당명변경 신민주당 | 94. 4. 13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노해택 94. 5. 6 대표자변경 정대영 94. 5. 27 대표자변경 노해택 | 95. 4. 1 당명변경 통일한국당 | 96. 1. 31 대표자변경 신정일 96. 2. 22 대표자변경 노해택 96. 3. 5 대표자변경 신정일 | |
| 대한정의당 | 92. 11. 19 이병호 | | | 94. 2. 15 자진해산 (정당법 제39조) | | | |
| 새한국당 | 92. 11. 19 이종찬 | | | | 95. 3. 7 민주당에 흡수 합당(소멸) | | |
| 친민당 | 92. 11. 19 권정수 | | | | | 96. 4. 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대한민주당 | 93. 10. 20 유준하 | | 93. 10. 20 등록 대한민주당 | | | 96. 4. 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신민당 | 94. 7. 8 김동길·박찬중 | | | 94. 7. 8 신설합당 신민당 | 95. 4. 1 대표자변경 김복동 95. 5. 31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정명당 (기독교성민당) | 95. 1. 13 권천문 | | | | 95. 1. 13 등록 정명당 95. 12. 12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우천우 | 96. 2. 22 대표자변경 진복기 96. 3. 29 당명변경 기독교성민당 | |
|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 95. 4. 3 김종필 | | | | 95. 4. 3 등록 자유민주연합 95. 5. 31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 95. 5. 31 김종필 | | | | 95. 5. 31 신설합당 자유민주연합 | | 97. 11. 26 대표자변경 박태준 |
| 신민당 (무정파전국연합) | 95. 6. 27 임춘원 | | | | 95. 6. 27 등록 신민당 | 96. 2. 5 당명변경 무정파전국연합 96. 3. 26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고병현 | 97. 5. 6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새정치국민회의 | 95. 9. 11 김대중 | | | | 95. 9. 11 등록 새정치국민회의 | | |
| 개혁신당 | 95. 11. 29 장을병·홍성우 | | | | 95. 11. 29 등록 개혁신당 96. 12. 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
| 통합민주당 (민주당) | 95. 12. 21 이기택·김원기·장을병 | | | | 95. 12. 21 신설합당 통합민주당 | 96. 6. 13 당명·대표자 변경 민주당 이기택 | 97. 9. 18 대표자변경 조순 97. 11. 24 한나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
| 무당파국민연합 | 96. 3. 18 한병채 | | | | | 96. 3. 18 등록 96. 4. 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21세기한독당 | 96. 3. 25 이시찬 | | | | | 96. 3. 25 등록 96. 4. 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① 3) | |
| 민주국민연합 | 97. 9. 4 이인수 | | | | | | 97. 9. 4 등록 민주국민연합 |
| 공화당 | 97. 9. 4 허경영 | | | | | | 97. 9. 4 등록 공화당 |
| 국민신당 | 97. 11. 10 이만섭 | | | | | | 97. 11. 10 등록 국민신당 |
| 바른나라정치연합 | 97. 11. 19 김한식 | | | | | | 97. 11. 19 등록 바른나라정치연합 |
| 한나라당 | 97. 11. 24 조순 | | | | | | 97. 11. 24 등록 한나라당 |
| 건설국민승리21 | 97. 11. 24 권영길 | | | | | | 97. 11. 24 등록 건설국민승리21 |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1993년도)

| 창당준비 위원회명 | 대표자 | 신고일 | 활동기간 만료일 | 소멸 | |
|--------------|-----|--------------|--------------|--------------|--------|
| | | | | 일자 | 사유 |
| 대정치진보당 | 정희원 | 1993. 01. 19 | 1993. 07. 19 | 1993. 07. 20 | 활동기간만료 |
| 대한민주당 | 유준하 | 1993. 04. 19 | 1993. 10. 19 | 1993. 10. 20 | 정당등록 |
| 대정치진보당 | 정희원 | 1993. 11. 06 | 1993. 05. 06 | 1994. 05. 07 | 활동기간만료 |

(1994년도)

| 창당준비 위원회명 | 대표자 | 신고일 | 활동기간 만료일 | 소멸 | |
|--------------|-----|--------------|--------------|--------------|--------|
| | | | | 일자 | 사유 |
| 녹색당 | 윤규춘 | 1994. 04. 29 | 1994. 10. 29 | 1994. 10. 31 | 활동기간만료 |
| 통일민족당 | 정판기 | 1994. 06. 25 | 1994. 12. 25 | 1994. 12. 27 | 활동기간만료 |
| 정명당 | 박광환 | 1994. 09. 24 | 1995. 03. 24 | 1995. 01. 13 | 정당등록 |

(1995년도)

| 창당준비 위원회명 | 대표자 | 신고일 | 활동기간 만료일 | 소멸 | |
|--------------|------------|--------------|--------------|--------------|--------|
| | | | | 일자 | 사유 |
| 통일민족당 | 정판기 | 1995. 01. 03 | 1995. 07. 03 | 1995. 07. 04 | 활동기간만료 |
| 자유민주연합 | 박준규 | 1995. 02. 21 | 1995. 08. 21 | 1995. 04. 03 | 정당등록 |
| 민족정기선양당 | 이두표 | 1995. 03. 02 | 1995. 09. 02 | 1995. 09. 04 | 활동기간만료 |
| 신민당 | 임춘원 | 1995. 06. 08 | 1995. 12. 08 | 1995. 06. 27 | 정당등록 |
| 구국청명당 | 박도태 | 1995. 08. 07 | 1996. 02. 07 | 1996. 02. 08 | 활동기간만료 |
| 새정치국민회의 | 김대중 | 1995. 08. 14 | 1996. 02. 14 | 1995. 09. 11 | 정당등록 |
| 민족화합당 | 최면창 | 1995. 08. 18 | 1996. 02. 18 | 1996. 02. 22 | 활동기간만료 |
| 개혁신당 | 장을병 홍성우 | 1995. 11. 04 | 1996. 05. 04 | 1995. 11. 29 | 정당등록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996년도)

| 창당준비 위원회명 | 대표자 | 신고일 | 활동기간 만료일 | 소멸 | |
|-----------------|-----|--------------|--------------|--------------|--------|
| | | | | 일자 | 사유 |
| 통일한국건설 한민족회의 | 이훈오 | 1996. 01. 06 | 1996. 07. 06 | 1996. 07. 08 | 활동기간만료 |
| 한국독립당 | 이기영 | 1996. 01. 11 | 1996. 07. 11 | 1996. 07. 12 | 활동기간만료 |
| 21세기한독당 | 이시찬 | 1996. 01. 31 | 1996. 07. 31 | 1996. 03. 25 | 정당등록 |
| 무당파국민연합 | 한병채 | 1996. 02. 02 | 1996. 08. 02 | 1996. 03. 18 | 정당등록 |
| 배달의당 | 정종국 | 1996. 02. 23 | 1996. 08. 23 | 1996. 08. 24 | 활동기간만료 |
| 개혁신당 | 박영록 | 1996. 02. 29 | 1996. 08. 29 | 1996. 09. 01 | 활동기간만료 |
| 선진통일 한국준비모임 | 김도현 | 1996. 03. 15 | 1996. 09. 15 | 1996. 09. 17 | 활동기간만료 |
| 한국독립당 | 이기영 | 1996. 07. 13 | 1997. 01. 13 | 1997. 01. 14 | 활동기간만료 |
| 한세계민족당 | 이홍래 | 1996. 09. 19 | 1997. 03. 19 | 1997. 03. 20 | 활동기간만료 |

(1997년도)

| 창당준비 위원회명 | 대표자 | 신고일 | 활동기간 만료일 | 소멸 | |
|--------------|-----|--------------|--------------|--------------|--------|
| | | | | 일자 | 사유 |
| 한국독립당 | 이기영 | 1997. 01. 29 | 1997. 07. 29 | 1997. 07. 30 | 활동기간만료 |
| 공화당 | 허경영 | 1997. 05. 19 | 1997. 11. 19 | 1997. 09. 04 | 정당등록 |
| 한민족연합 | 안상준 | 1997. 05. 02 | 1997. 11. 02 | 1997. 11. 24 | 활동기간만료 |
| 우주생명천심당 | 박홍래 | 1997. 06/18 | 1997. 12. 18 | 1997. 12. 19 | 활동기간만료 |
| 민주국민연합 | 공석영 | 1997. 07. 09 | 1998. 01. 09 | 1997. 09. 04 | 정당등록 |
| 한국독립당 | 이기영 | 1997. 08. 11 | 1998. 02. 11 | 1998. 02. 12 | 활동기간만료 |
| 애국번영당 | 손정수 | 1997. 08. 12 | 1998. 02. 12 | 1998. 02. 13 | 활동기간만료 |
| 21세기한민족공동체 | 김한식 | 1997. 08. 27 | 1998. 02. 27 | 1997. 11. 19 | 정당등록 |
| 국민신당 | 장을병 | 1997. 10. 14 | 1998. 04. 14 | 1997. 11. 10 | 정당등록 |
| 천부재건당 | 김동주 | 1997. 10. 24 | 1998. 04. 24 | 1998. 04. 25 | 활동기간만료 |
| 건설국민승리21 | 최철호 | 1997. 11. 08 | 1998. 05. 08 | 1997. 11. 24 | 정당등록 |

3. 중앙당 등록 · 말소 현황

| 정당명 | 대표자 (등록시) | 등록연월일 | 소멸 | | 비고 |
|----------------------|-------------------|--------------|------|--------------|---|
| | | | 사유 | 일자 | |
| 대한민주당 | 유준하 | 1993. 10. 20 | 등록취소 | 1996. 04. 13 |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3 |
| 신민당 | 김동길 박찬중 | 1994. 07. 08 | 신설합당 | 1995. 05. 31 | ·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이 합당하여 신설 · 말소사유 : 자유민주연합과 합당하여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 |
| 정명당 | 권천문 | 1995. 01. 13 | 등록취소 | 2001. 03. 19 | · 명칭변경 : 정명당 ⇒ 기독교민당(96. 3. 29)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1 |
| 자유민주연합 | 김종필 | 1995. 04. 03 | 신설합당 | 1995. 05. 31 | · 말소사유 : 신민당과 합당하여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 |
|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 김종필 | 1995. 05. 31 | 자진해산 | 2006. 03. 10 | ·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신설합당으로 성립 · 말소사유 : 정당법 § 45 |
| 신민당 | 임춘원 | 1995. 06. 27 | 등록취소 | 1997. 05. 06 | · 명칭변경 : 신민당 ⇒ 무정파전국연합(96. 2. 5) · 말소사유 : 정당법 제38조①1 |
|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 | 김대중 | 1995. 09. 11 | 흡수합당 | 2000. 01. 24 | · 말소사유 : 새천년민주당에 흡수 |
| 개혁신당 | 장을병 홍성우 | 1995. 11. 29 | 신설합당 | 1995. 12. 21 | · 말소사유 :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신설 |
| 통합민주당 | 이기택 김원기 장을병 | 1995. 12. 21 | 신설합당 | 1997. 11. 24 | ·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합당으로 신설 · 명칭변경 : 통합민주당 ⇒ 민주당(96. 6. 13) · 말소사유 :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신설 |
| 무당파국민연합 (무당파연합) | 한병채 | 1996. 03. 18 | 등록취소 | 1996. 04. 13 |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3 |
| 21세기한독당 (한독당) | 이시찬 | 1996. 03. 25 | 등록취소 | 1996. 04. 13 |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3 |
| 공화당 | 허경영 | 1997. 09. 04 | 등록취소 | 2000. 04. 14 |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3 |
| 민주국민연합 | 이인수 | 1997. 09. 04 | 등록취소 | 1998. 05. 21 | · 말소사유 : 정당법 § 38①1 |
| 국민신당 | 이만섭 | 1997. 11. 10 | 자진해산 | 1998. 09. 24 | · 말소사유 : 정당법 § 39 |
| 바른나라 정치연합 | 김한식 | 1997. 11. 19 | 자진해산 | 1999. 02. 12 | · 말소사유 : 정당법 § 39 |
| 한나라당 | 조순 | 1997. 11. 24 | | | ·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신설 |
| 건설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 권영길 | 1997. 11. 24 | 자진해산 | 1999. 11. 15 | · 말소사유 : 정당법 § 39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록

4. 정당의 당원수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민주자유당 | | | 민주당 | | 통일국민당 |
|-------------------|--------------------|--------------------|--------------------|------------------|------------------|--------------------|
| | 1993 | 1994 | 1995 | 1993 | 1994 | 1993 |
| 계 | 4,387,132 (237) | 4,143,515 (237) | 3,518,323 (249) | 955,525 (237) | 949,299 (237) | 3,855,855 (209) |
| 서울 | 1,215,722 (44) | 1,092,055 (44) | 948,790 (45) | 315,364 (44) | 318,501 (44) | 1,070,656 (41) |
| 부산 | 319,975 (16) | 318,283 (16) | 314,015 (21) | 26,617 (16) | 26,902 (16) | 322,631 (16) |
| 대구 | 291,635 (11) | 277,853 (11) | 203,534 (12) | 24,962 (11) | 22,833 (11) | 202,921 (8) |
| 인천 | 268,468 (7) | 254,490 (7) | 210,652 (10) | 31,911 (7) | 32,558 (7) | 257,152 (7) |
| 광주 | 44,221 (6) | 43,869 (6) | 49,855 (6) | 73,407 (6) | 63,236 (6) | 92,150 (6) |
| 대전 | 135,710 (5) | 135,596 (5) | 96,968 (7) | 22,720 (5) | 22,653 (5) | 91,029 (5) |
| 경기 | 633,456 (31) | 612,257 (31) | 464,917 (33) | 120,997 (31) | 116,144 (31) | 508,831 (27) |
| 강원 | 209,490 (14) | 190,167 (14) | 147,621 (14) | 14,370 (14) | 14,513 (14) | 84,400 (8) |
| 충북 | 131,916 (9) | 138,063 (9) | 106,467 (8) | 28,469 (9) | 28,854 (9) | 116,134 (8) |
| 충남 | 176,095 (14) | 160,551 (14) | 136,432 (14) | 40,849 (14) | 41,328 (14) | 101,552 (11) |
| 전북 | 87,465 (14) | 86,848 (14) | 87,883 (14) | 95,047 (14) | 93,319 (14) | 194,954 (14) |
| 전남 | 90,885 (19) | 86,589 (19) | 98,086 (19) | 92,695 (19) | 100,104 (19) | 165,551 (19) |
| 경북 | 296,227 (21) | 280,092 (21) | 252,015 (20) | 17,399 (21) | 21,330 (21) | 225,029 (19) |
| 경남 | 459,705 (23) | 448,269 (23) | 384,497 (23) | 46,710 (23) | 43,004 (23) | 422,865 (20) |
| 제주 | 26,162 (3) | 18,533 (3) | 16,591 (3) | 4,008 (3) | 4,020 (3) | - |

※ ()의 내서는 지구당수임(이하 같음).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신정치개혁당 | 신민주당 | | 친민당 | | |
|-------------------|----------------|---------------|---------------|---------------|---------------|---------------|
| | 1993 | 1993 | 1994 | 1993 | 1994 | 1995 |
| 계 | 18,761 (63) | 2,167 (49) | 2,155 (49) | 1,720 (51) | 1,644 (48) | 1,662 (48) |
| 서울 | 2,740 (12) | 424 (10) | 424 (10) | 30 (1) | 30 (1) | 31 (1) |
| 부산 | 2,722 (4) | 461 (8) | 461 (8) | 105 (3) | 105 (3) | 93 (3) |
| 대구 | 1,135 (3) | - | - | 347 (11) | 347 (11) | 347 (11) |
| 인천 | 1,478 (3) | - | - | 154 (5) | 154 (5) | 157 (5) |
| 광주 | - | - | - | 30 (1) | 30 (1) | 30 (1) |
| 대전 | 352 (3) | 157 (5) | 157 (5) | 145 (4) | 146 (4) | 177 (4) |
| 경기 | 2,147 (8) | 166 (4) | 166 (4) | 157 (5) | 64 (2) | 64 (2) |
| 강원 | 738 (1) | 369 (8) | 357 (8) | 30 (1) | 30 (1) | 30 (1) |
| 충북 | 417 (6) | 76 (2) | 76 (2) | - | - | - |
| 충남 | 610 (5) | - | - | 102 (3) | 101 (3) | 102 (3) |
| 전북 | 280 (2) | 184 (5) | 184 (5) | 63 (2) | 64 (2) | 65 (2) |
| 전남 | 1,747 (4) | 46 (1) | 46 (1) | 289 (9) | 289 (9) | 290 (9) |
| 경북 | 621 (3) | 106 (2) | 106 (2) | 188 (4) | 204 (4) | 196 (4) |
| 경남 | 3,774 (9) | 178 (4) | 178 (4) | 80 (2) | 80 (2) | 80 (2) |
| 제주 | - | - | - | - | - | - |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대한정의당 | 새한국당 | | 대한민주당 | | |
|-------------------|---------------|----------------|----------------|---------------|---------------|---------------|
| | 1993 | 1993 | 1994 | 1993 | 1994 | 1995 |
| 계 | 2,062 (50) | 37,744 (72) | 34,454 (65) | 1,797 (49) | 1,797 (49) | 1,797 (49) |
| 서울 | 358 (10) | 8,035 (17) | 7,466 (14) | 431 (12) | 431 (12) | 431 (12) |
| 부산 | 106 (3) | 1,847 (7) | 1,847 (7) | 36 (1) | 36 (1) | 36 (1) |
| 대구 | - | 329 (2) | 358 (2) | 87 (2) | 87 (2) | 87 (2) |
| 인천 | 129 (4) | 4,102 (4) | 4,102 (4) | - | - | - |
| 광주 | - | 8,620 (5) | 8,560 (5) | - | - | - |
| 대전 | - | 3,699 (3) | 4,240 (3) | - | - | - |
| 경기 | 323 (10) | 3,246 (8) | 2,827 (6) | 216 (6) | 216 (6) | 216 (6) |
| 강원 | 31 (1) | 602 (3) | 602 (3) | 306 (8) | 306 (8) | 306 (8) |
| 충북 | 656 (9) | 2,613 (5) | 728 (4) | - | - | - |
| 충남 | 62 (2) | 432 (2) | 432 (2) | - | - | - |
| 전북 | 32 (1) | 1,732 (6) | 1,244 (5) | 36 (1) | 36 (1) | 36 (1) |
| 전남 | 60 (1) | 815 (4) | 815 (4) | 39 (1) | 39 (1) | 39 (1) |
| 경북 | 68 (2) | 207 (2) | 207 (2) | 357 (10) | 357 (10) | 357 (10) |
| 경남 | 237 (7) | 1,465 (4) | 1,026 (4) | 289 (8) | 289 (8) | 289 (8) |
| 제주 | - | - | - | - | - | - |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신민당(94. 7 등록) | 신민당(95. 6 등록) | 새정치국민회의 | | |
|-------------------|--------------------|---------------|-----------------|------------------|------------------|
| | 1994 | 1995 | 1995 | 1996 | 1997 |
| 계 | 2,896,268 (189) | 3,738 (28) | 202,982 (89) | 541,531 (231) | 845,276 (245) |
| 서울 | 896,989 (39) | 885 (6) | 55,926 (29) | 170,744 (47) | 202,923 (47) |
| 부산 | 296,890 (16) | 230 (3) | - | 5,873 (17) | 33,460 (19) |
| 대구 | 163,802 (8) | 40 (1) | - | 1,838 (9) | 22,297 (12) |
| 인천 | 164,258 (7) | 42 (1) | 29,162 (6) | 84,846 (11) | 62,805 (11) |
| 광주 | 92,150 (6) | - | 23,675 (6) | 27,279 (6) | 33,665 (6) |
| 대전 | 56,207 (4) | 277 (2) | 357 (1) | 8,646 (7) | 21,314 (7) |
| 울산* | | | | | 23,664 (5) |
| 경기 | 250,594 (19) | 162 (3) | 26,582 (13) | 99,141 (38) | 161,338 (38) |
| 강원 | 74,513 (8) | - | 738 (2) | 6,089 (13) | 20,928 (13) |
| 충북 | 26,083 (7) | 50 (1) | - | 5,288 (7) | 17,270 (8) |
| 충남 | 47,578 (9) | 278 (2) | - | 6,280 (10) | 20,672 (13) |
| 전북 | 202,766 (14) | 291 (4) | 16,537 (12) | 49,048 (14) | 87,878 (14) |
| 전남 | 141,749 (18) | 105 (1) | 47,318 (18) | 62,662 (17) | 75,753 (17) |
| 경북 | 168,129 (16) | 170 (2) | - | 3,783 (14) | 28,037 (17) |
| 경남 | 314,560 (18) | 1,208 (2) | 2,687 (2) | 6,407 (18) | 27,345 (15) |
| 제주 | - | - | - | 3,577 (3) | 5,927 (3) |

* 울산광역시 승격(1997. 7. 15) 이하 같음.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통합민주당 | | 자유민주연합 | | | 정명당 |
|-------------------|------------------|------------------|--------------------|--------------------|--------------------|-------------|
| | 1995 | 1996 | 1995 | 1996 | 1997 | 1995 |
| 계 | 415,594 (170) | 409,132 (232) | 2,187,807 (209) | 1,874,448 (242) | 1,602,727 (242) | 834 (25) |
| 서울 | 115,755 (20) | 104,774 (45) | 593,246 (41) | 444,423 (47) | 365,780 (47) | 199 (6) |
| 부산 | 23,214 (16) | 31,810 (20) | 249,783 (16) | 146,870 (18) | 152,926 (20) | 200 (6) |
| 대구 | 18,543 (11) | 17,025 (12) | 111,878 (12) | 126,024 (13) | 127,333 (13) | 64 (2) |
| 인천 | 31,811 (9) | 14,601 (11) | 101,393 (7) | 63,464 (11) | 48,271 (10) | - |
| 광주 | - | 2,066 (5) | 69,948 (6) | 65,549 (6) | 11,630 (6) | - |
| 대전 | 25,370 (5) | 25,866 (7) | 27,821 (4) | 48,852 (7) | 45,478 (7) | - |
| 울산* | | | | | 5,084 (3) | |
| 경기 | 61,821 (25) | 72,046 (36) | 167,111 (27) | 205,783 (38) | 248,766 (38) | 152 (5) |
| 강원 | 11,392 (11) | 9,232 (12) | 49,258 (8) | 65,889 (13) | 38,844 (13) | - |
| 충북 | 24,110 (8) | 22,539 (8) | 52,047 (7) | 102,192 (8) | 102,311 (8) | - |
| 충남 | 20,350 (13) | 32,194 (13) | 73,226 (14) | 98,481 (13) | 91,603 (13) | 54 (1) |
| 전북 | 15,912 (7) | 9,162 (13) | 170,181 (14) | 137,134 (12) | 108,844 (12) | 8 (1) |
| 전남 | 9,269 (3) | 7,251 (7) | 125,731 (17) | 71,902 (16) | 58,826 (15) | - |
| 경북 | 19,536 (19) | 18,640 (19) | 112,802 (19) | 67,840 (19) | 81,260 (19) | 43 (1) |
| 경남 | 34,794 (21) | 38,225 (22) | 283,382 (17) | 229,770 (20) | 114,616 (17) | 114 (3) |
| 제주 | 3,717 (2) | 3,701 (2) | - | 275 (1) | 155 (1) | - |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통일한국당 | | | 신한국당 | 기독교성민당 | | 무 정 파 전국연합 |
|-------------------|---------------|---------------|----------------|--------------------|-------------|-------------|---------------|
| | 1995 | 1996 | 1997 | 1996 | 1996 | 1997 | 1996 |
| 계 | 2,329 (50) | 2,205 (49) | 8,830 (179) | 3,760,948 (253) | 898 (26) | 937 (27) | 2,595 (26) |
| 서울 | 611 (13) | 600 (12) | 1,772 (35) | 872,213 (47) | 202 (6) | 202 (6) | 850 (6) |
| 부산 | 439 (8) | 371 (8) | 973 (20) | 406,922 (21) | 169 (5) | 169 (5) | 181 (3) |
| 대구 | - | - | 688 (13) | 228,158 (13) | 62 (2) | 62 (2) | - |
| 인천 | - | - | 370 (7) | 242,446 (11) | 36 (1) | 36 (1) | 42 (1) |
| 광주 | - | - | 158 (3) | 41,861 (6) | 39 (1) | 39 (1) | - |
| 대전 | 183 (5) | 184 (5) | 158 (5) | 135,335 (7) | - | - | 39 (1) |
| 울산* | | | 258 (5) | | | - | |
| 경기 | 259 (5) | 256 (5) | 1,305 (26) | 504,077 (38) | 203 (6) | 239 (7) | 204 (4) |
| 강원 | 320 (7) | 325 (7) | 373 (8) | 151,125 (13) | - | - | - |
| 충북 | 76 (2) | 74 (2) | 175 (4) | 134,937 (8) | - | - | - |
| 충남 | - | - | 100 (2) | 154,536 (13) | - | - | 278 (2) |
| 전북 | 156 (4) | 156 (4) | 252 (6) | 95,760 (14) | - | - | 319 (5) |
| 전남 | 46 (1) | 46 (1) | 399 (8) | 91,980 (17) | - | - | 105 (1) |
| 경북 | 106 (2) | 60 (2) | 920 (19) | 279,047 (19) | 76 (2) | 76 (2) | 100 (1) |
| 경남 | 133 (3) | 133 (3) | 750 (15) | 403,887 (23) | 111 (3) | 114 (3) | 477 (2) |
| 제주 | - | - | 179 (3) | 18,664 (3) | - | - | - |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 한나라당 | 국민신당 | 건설국민 승리 21 | 공화당 | 민 주 국민연합 | 바른나라 정치연합 |
|-------------------|--------------------|-----------------|---------------|---------------|---------------|---------------|
| | 1997 | 1997 | 1997 | 1997 | 1997 | 1997 |
| 계 | 4,175,361 (253) | 108,573 (98) | 2,748 (33) | 1,496 (30) | 2,326 (48) | 1,211 (31) |
| 서울 | 968,773 (47) | 15,710 (12) | 257 (7) | 681 (6) | 568 (16) | 240 (6) |
| 부산 | 402,824 (21) | 17,254 (8) | 90 (2) | 124 (4) | 105 (3) | 151 (3) |
| 대구 | 270,455 (13) | 3,494 (7) | 32 (1) | - | 632 (12) | 151 (4) |
| 인천 | 260,813 (11) | 3,482 (1) | - | 180 (4) | - | 67 (2) |
| 광주 | 23,782 (6) | 1,162 (3) | - | - | - | - |
| 대전 | 139,057 (7) | 8,518 (6) | 144 (4) | 182 (6) | 35 (1) | - |
| 울산* | 112,892 (5) | 3,000 (1) | 531 (1) | - | - | - |
| 경기 | 634,937 (38) | 16,885 (15) | 668 (7) | 30 (1) | 141 (4) | 178 (5) |
| 강원 | 148,664 (13) | 4,326 (5) | 35 (1) | 103 (3) | - | 35 (1) |
| 충북 | 151,782 (8) | 6,282 (5) | 95 (3) | - | 520 (4) | - |
| 충남 | 194,698 (13) | 5,043 (7) | 138 (3) | 60 (2) | 110 (3) | 70 (2) |
| 전북 | 107,128 (14) | 4,003 (5) | - | - | 108 (3) | 75 (2) |
| 전남 | 93,633 (17) | 2,254 (6) | - | 73 (2) | - | - |
| 경북 | 300,908 (19) | 12,604 (8) | 130 (1) | - | 107 (2) | - |
| 경남 | 344,944 (18) | 4,226 (8) | 633 (2) | - | - | 207 (5) |
| 제주 | 20,071 (3) | 330 (1) | 31 (1) | 63 (2) | - | 37 (1) |

5. 정당의 활동연지

가. 1993년도

1) 민주자유당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3. 1. 7 | ❖ 체육계 인사와의 간담회 |
| 1993. 1. 9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 |
| 1993. 1. 11 | ❖ 문화예술계 대표와의 간담회 |
| 1993. 1. 13 | ❖ 제87차 당무회의 |
| 1993. 1. 19 |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회의 |
| 1993. 1. 20 | ❖ 제88차 당무회의 |
| 1993. 1. 29 | ❖ 실·국장, 시·도사무처장 연석회의 정책공약 보고, 당무개선협의회 |
| 1993. 2. 2 | ❖ 상임고문·당직자 연석회의 |
| 1993. 2. 3 | ❖ 제89차 당무회의 |
| 1993. 2. 4 | ❖ 시·도 여성부장회의 |
| 1993. 2. 8 | ❖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
| 1993. 2. 9 | ❖ 창당 3주년 기념식 |
| 1993. 2. 10 | ❖ 총무단·간사단 회의, 민주자유보(제47호) 발간 |
| 1993. 2. 12 | ❖ 제90차 당무회의 |
| 1993. 2. 22 | ❖ 농어촌 의정회와의 간담회, 의원총회 |
| 1993. 2. 24 | ❖ 제91차 당무회의 |
| 1993. 2. 25 | ❖ 대통령취임식 |
| 1993. 3. 2 | ❖ 당고문·당3역 정례회의 |
| 1993. 3. 3 | ❖ 의원총회 |
| 1993. 3. 4 | ❖ 신·구당직자 이취임식 |
| 1993. 3. 10 | ❖ 제92차 당무회의, 경실련 대표와의 간담회 |
| 1993. 3. 15 | ❖ 민원실(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 현판식, 경제대책특위회의 |
| 1993. 3. 16 | ❖ 시·도사무처장 회의 |
| 1993. 3. 17 | ❖ 제93차 당무회의 |
| 1993. 3. 18 | ❖ 시·도지부 위원장회의, 중소기업 중앙회와의 간담회 |
| 1993. 3. 23 | ❖ 실·국장 및 시·도사무처장 임명장 수여식 |
| 1993. 3. 25 | ❖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
| 1993. 3. 26 | ❖ 제94차 당무회의 |
| 1993. 3. 27 | ❖ 상공자원부·보사부·당정협의회 |
| 1993. 3. 31 | ❖ 제95차 당무회의 |

1993. 4. 1

1993. 4. 2

1993. 4. 6

1993. 4. 7

1993. 4. 8

1993. 4. 9

1993. 4. 10

1993. 4. 14

1993. 4. 16

1993. 4. 19

1993. 4. 20

1993. 4. 21

1993. 4. 23

1993. 4. 24

1993. 4. 26

1993. 4. 27

1993. 5. 3

1993. 5. 4

1993. 5. 6

1993. 5. 7

1993. 5. 10

1993. 5. 11

1993. 5. 13

1993. 5. 14

1993. 5. 15

1993. 5. 17

1993. 5. 21

1993. 5. 22

1993. 5. 24

1993. 5. 25

1993. 5. 26

1993. 5. 27

1993. 5. 29

1993. 5. 31

1993. 6. 1

1993. 6. 3

❖ 제13차 당기위원회, 대한교육협의회와의 간담회

❖ 의원총회, 당무회의, 제48차 식목의 날 행사

❖ 제96차 당무회의, 광명, 동래갑지구당 임시대회

❖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과의 실무당정회의
총무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연석회의

❖ 의원세미나

❖ 제3차 상무위원회의

❖ 사하구지구당 임시대회, 민주자유보(제48호) 발간

❖ 제97차 당무회의

❖ 정치특위 공청회, 정세분석위원 위촉장 수여식
과학기술 총연합회와의 간담회

❖ 실·국장 회의

❖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제98차 당무회의

❖ 농·수·축협과의 간담회, 동래갑, 사하, 광명 보궐선거

❖ 산불예방 캠페인(관악산)

❖ 제161회 임시국회

❖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관련 고위당정 회의

❖ 제99차 당무회의

❖ 지구당위원장 직무대리 임명자 수여식

❖ 신한국민과의 간담회

❖ 의원총회, 호부여성당원 표창식, 홍보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민주자유보(제49호) 발간, 전국사무처 당직자 연수

❖ 중앙상무위의장단 회의, 정책연구위원 회의

❖ 모범교사와의 간담회

❖ 제100차 당무회의

❖ 거창, 서갑(대구), 천안, 부천남지구당 임시대회

❖ 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

❖ 울산중, 철원·화천지구당 임시대회

대통령취임 100일기념 여성정책추진관련 여론조사

❖ 전주 완산, 군산, 예천지구당 임시대회

❖ 당조직강화특위회의

❖ 제101차 당무회의, 중앙상무위의장단 회의, 정치관계법 특위전체회의

❖ 정책토론회, 명주·양양지구당 임시대회

❖ 중소기업육성 특위

❖ 중앙상무위 전임분과위원장 간담회

❖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경제특위회의

❖ 중소상무위의장단 회의

❖ 당기위원회의

| | |
|-------------|--|
| 1993. 6. 4 | ❖ 여성담당 언론인과의 간담회 |
| 1993. 6. 5 | ❖ 제102차 당무회의 |
| 1993. 6. 8 | ❖ 원진레이온 관련회의 |
| 1993. 6. 10 | ❖ 민주자유보(제50호) 발간 |
| 1993. 6. 11 | ❖ 명주·양양, 철원·화천, 예천 보궐선거 |
| 1993. 6. 12 | ❖ 중앙상무위 청년분과전체회의 |
| 1993. 6. 15 | ❖ 농수산물 애호캠페인 |
| 1993. 6. 16 | ❖ 제103차 당무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사회개혁 특위 |
| 1993. 6. 18 | ❖ 민원관련회의 |
| 1993. 6. 19 | ❖ 해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
| 1993. 6. 21 | ❖ 시·도여성부장 회의 |
| 1993. 6. 24 | ❖ 무소속의원 입단환영식, 재해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
| 1993. 6. 25 | ❖ 환경보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
| 1993. 6. 26 | ❖ 김포·강화, 부여지구당 임시대회 |
| 1993. 6. 28 | ❖ 제104차 당무회의, 교육정책토론회, 한국보훈선교회와의 간담회 |
| 1993. 6. 29 | ❖ 과천·의왕, 당진지구당 임시대회,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공청회 |
| 1993. 6. 30 | ❖ 원주, 동해, 논산, 제천, 단양지구당 임시대회 |
| 1993. 7. 1 | ❖ 수원 장안지구당 임시대회, 한국예총 및 10개 회원단체와의 간담회 |
| 1993. 7. 6 | ❖ 제105차 당무회의 |
| 1993. 7. 8 | ❖ 공천자 임명장 수여식, 지구당위원장 직무대리 임명장 수여식 |
| 1993. 7. 9 | ❖ 자가용함께타기 모범실천자 포상 |
| 1993. 7. 10 | ❖ 민주자유보(제51호) 발간 |
| 1993. 7. 13 | ❖ 의원총회, 중앙상무위의장단 회의, 당기위원회 |
| 1993. 7. 14 | ❖ 여성문제연구위원회 제1차 세미나 |
| 1993. 7. 15 | ❖ 춘천지구당 임시대회, 대통령선거공약관련 실무당정회의 |
| 1993. 7. 16 | ❖ 대구동을지구당 임시대회 |
| 1993. 7. 19 | ❖ 당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세미나 |
| 1993. 7. 20 | ❖ 익산지구당 임시대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의 간담회 |
| 1993. 7. 22 | ❖ 승주지구당 임시대회 |
| 1993. 7. 23 | ❖ 강남갑지구당 임시대회, 제2차 교육정책토론회 |
| 1993. 7. 24 | ❖ 울진지구당 임시대회 |
| 1993. 7. 28 | ❖ 서울시의회의원 공천장 수여식 |
| 1993. 8. 3 | ❖ 당원의식개혁실천운동 지도위원 위촉장 수여식 |
| 1993. 8. 6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5위 봉안참배 |
| 1993. 8. 9 | ❖ 대전동을 정당연설회 |
| 1993. 8. 10 | ❖ 춘천 정당연설회 |
| 1993. 8. 12 | ❖ 대구동을, 춘천시 보궐선거 |
| 1993. 8. 16 | ❖ 의원총회 |
| 1993. 8. 19 | ❖ 당기위원회 |

1993. 8. 20
1993. 8. 25
1993. 8. 26
1993. 8. 27
1993. 8. 28
1993. 8. 30
1993. 9. 1
1993. 9. 3
1993. 9. 4
1993. 9. 6
1993. 9. 7
1993. 9. 10
1993. 9. 15
1993. 9. 16
1993. 9. 17
1993. 9. 20
1993. 9. 21
1993. 9. 22
1993. 9. 23
1993. 9. 27
1993. 10. 4
1993. 10. 5
1993. 10. 7
1993. 10. 9
1993. 10. 10
1993. 10. 16
1993. 10. 20
1993. 10. 21
1993. 10. 25
1993. 10. 26
1993. 10. 29
1993. 11. 2
1993. 11. 3
1993. 11. 5
1993. 11. 9
1993. 11. 10
1993. 11. 11
1993. 11. 12
1993. 11. 13

- ❖ 제106차 당무회의
- ❖ 제107차 당무회의
- ❖ 정신보건법에 관한 공청회, 민주자유보(제52호) 발간
- ❖ 대구남지구당 임시대회, 농어촌정비법 토론회
- ❖ 경제기획원 예산조정안에 대한 부처별 당정회의
- ❖ 부산시의회 보선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 ❖ 제108차 당무회의
- ❖ 시·도여성당직자 간담회
- ❖ 해남·진도지구당 임시대회
- ❖ 경북도의원 보궐선거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 ❖ 의원세미나
- ❖ 제109차 당무회의, 민주자유보(제54호) 발간
- ❖ 제110차 당무회의
- ❖ 정책토론회
- ❖ 세계대청소의 날 행사
- ❖ 의원총회
- ❖ 대통령시정연설
- ❖ 제111차 당무회의
- ❖ 시·도의원협의회장단 회의
- ❖ 영등포환경미화원 중추절 위문
- ❖ 광양, 신안도의원 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
- ❖ 시·도의회의원협의회 회장단 임명장 수여식
- ❖ 국정감사 대책회의
- ❖ 의원총회
- ❖ 민주자유보(제54호) 발간
- ❖ 농기계보내기 기금미련 걷기대회
- ❖ 제112차 당무회의
- ❖ 지구당위원장 직무대리 임명장 수여식
- ❖ 강원도의회 보궐선거 추천장 수여식, 의원총회
- ❖ 농기계전달식
- ❖ 신한국창조 나부터 실천하기 결의대회
- ❖ 동광양시·광양군지구당 임시대회
- ❖ 제113차 당무회의, 「부부재산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 ❖ 의원총회
- ❖ 안양을지구당 임시대회
- ❖ 민주자유보(제55호) 발간
- ❖ 제114차 당무회의,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부인 세미나
- ❖ 도의원보궐선거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 ❖ 대구동구갑지구당 임시대회, 기초의회여성의원 간담회

- 1993. 11. 16
- 1993. 11. 17
- 1993. 11. 22
- 1993. 11. 24
- 1993. 11. 29
- 1993. 12. 2
- 1993. 12. 8
- 1993. 12. 13
- 1993. 12. 15
- 1993. 12. 16
- 1993. 12. 17
- 1993. 12. 20
- 1993. 12. 27

- ❖ 일본 자민당 여성당원과의 간담회
- ❖ 제115차 당무회의
- ❖ 기독교신임교단장 및 임원초청 간담회
- ❖ 중소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
- ❖ 노총과의 간담회
- ❖ 의원총회
- ❖ 제116차 당무회의
- ❖ 중앙상무위 여성분과전체회의
- ❖ 민주자유보(제56호) 발간
- ❖ UR 이후 농수산대책에 관한 토론회
- ❖ 제117차 당무회의
- ❖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 ❖ 제118차 당무회의, 의원총회

2) 민주당

연 월 일

- 1993. 1. 6
- 1993. 1. 8
- 1993. 1. 16
- 1993. 1. 20
- 1993. 1. 27
- 1993. 1. 28
- 1993. 3. 11
- 1993. 3. 29
- 1993. 4. 19
- 1993. 4. 30
- 1993. 5. 10
- 1993. 5. 12
- 1993. 5. 24
- 1993. 6. 14
- 1993. 6. 16
- 1993. 6. 18

주 요 활 동

- ❖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
- ❖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현장 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 ❖ 중소기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현장방문
- ❖ 중소기업인 초청간담회
- ❖ 이기택 대표 신년기자회견
- ❖ 당진로에 대한 심포지엄
- ❖ 제2차 정기전당대회
- ❖ 부산철도참사 진상조사단 구성, 장준하선생 사인규명 조사위 구성
당개혁 발전위 구성
- ❖ 당지도부 수유리 4·19 묘소 참배, 5·18 광주특위 구성
- ❖ 이기택 대표최고위원 국회본회의 대표연설
- ❖ '깨끗한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 ❖ '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 12·12 군사쿠테타 진상조사위 구성
- ❖ 평택지구당 모내기행사 지원
- ❖ 이기택 대표최고위원 유럽 4개국 방문
- ❖ 평화의 댐 건설현장조사단 구성

1993. 6. 25
 1993. 7. 6
 1993. 7. 7
 1993. 7. 8
 1993. 7. 12
 1993. 7. 14
 1993. 7. 16
 1993. 7. 23
 1993. 9. 9
 1993. 9. 22
 1993. 9. 24
 1993. 9. 27
 1993. 10. 8
 1993. 10. 11
 1993. 10. 29
 1993. 11. 3
 1993. 11. 5
 1993. 11. 12
 1993. 11. 19
 1993. 11. 24
 1993. 11. 27
 1993. 11. 30
 1993. 12. 4
 1993. 12. 7
 1993. 12. 17
 1993. 12. 20
 1993. 12. 21
 1993. 12. 23

- ❖ '세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 현대노사문제 진상대책위 구성
- ❖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
- ❖ 현대 노사문제 진상조사단 파견
- ❖ '신농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 김대중선생 납치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 ❖ 개혁정국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회
- ❖ 중앙당 중하위 당직개편
- ❖ 국정조사에 관한 이기택대표 기자회견
- ❖ 중앙당에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 설치 현판식, 당지도부 남대문시장 방문
- ❖ '9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 ❖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 ❖ 중앙당 당직자 임명장수여식
- ❖ 불안서해 웨리호 참사사건조사단 구성
- ❖ 중앙당 당직자 대전 EXPO시찰, 강원지역 냉해피해 조사단 구성
- ❖ 고속철도 T.G.V 선정의혹 진상조사위 구성
- ❖ 통합의료보험법 재정에 관한 공청회
- ❖ '소각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 국가경쟁력과 주력업증제도 정책토론회
- ❖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토론회
- ❖ 쌀 수입개방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 쌀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이기택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 ❖ 민주당 쌀 수입개방 저지 비상대책위 발족식 및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 쌀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대회
- ❖ 쌀 시장개방 밀약설 진상보고대회
- ❖ 당지도부 서울구치소 재소자 방문
- ❖ 당지도부 전방군부대 위문
- ❖ 당지도부 사회복지시설 위문

3) 통일한국당

연 월 일

1993. 2. 8
 1993. 3. 15

주 요 활 동

- ❖ 창당 제1주년 기념식
- ❖ 김동길 대표최고위원 취임

- 1993. 3. 17
- 1993. 4. 7
- 1993. 4. 16
- 1993. 5. 17
- 1993. 5. 27
- 1993. 7. 13
- 1993. 7. 31
- 1993. 8. 7
- 1993. 8. 24
- 1993. 10. 16
- 1993. 10. 21
- 1993. 11. 18
- 1993. 12. 7
- 1993. 12. 13
- 1993. 12. 28

- ❖ 천막당사 설치
- ❖ 중앙당사 방배동 임시당사로 이전
- ❖ 전국지구당위원장 당재건 단합대회
- ❖ 5·18 광주민중항쟁 제19주기 추모제에 참배단 파견
- ❖ 성북동 중앙당사 현판 및 입주식
- ❖ 전국지구당위원장 하계수련회
- ❖ 중앙당 사무처요원연수
- ❖ 서울·경인지역 당원단합대회
- ❖ 중앙당 당직자 임명 및 일반·특별위원회 구성
- ❖ 전북 부안 서해 웨리호 침몰사건 위문단 파견
- ❖ 전국 지구당 실태파악 및 당무감사 실시
- ❖ 제19회 정책토론회 개최
- ❖ 쌀·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회 참가
- ❖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개최 조직정비 추진
- ❖ 연말 대민 위로활동

4) 신정치개혁당 (94. 7. 8 신민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 1993. 1. 18
- 1993. 2. 5
- 1993. 3. 21
- 1993. 3. 29
- 1993. 3. 30
- 1993. 3. 31
- 1993. 4. 22
- 1993. 5. 4
- 1993. 5. 21
- 1993. 5. 24
- 1993. 5. 29
- 1993. 7. 9
- 1993. 8. 30
- 1993. 12. 21

주 요 활 동

- ❖ 제1차 정무위원회
- ❖ 제2차 정무위원회
- ❖ 제3차 정무위원회
- ❖ 제4차 정무위원회
- ❖ 당대표 기자회견
- ❖ 제5차 정무위원회
- ❖ 제6차 정무위원회
- ❖ 박찬중후원회 수련대회
- ❖ 당대표 및 당직자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전달
- ❖ 철원·화천지구당 창당대회
- ❖ 제7차 정무위원회
- ❖ 당대표 춘천기자회견
- ❖ 제8차 정무위원회
- ❖ 당대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학회 초청 홍콩방문

5) 신민주당 (93. 1. 18 진리평화당에서 신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3. 1. 4 | ❖ 제6차 임시전당대회 |
| 1993. 1. 20 | ❖ 제1차 당무위원회 |
| 1993. 2. 3 | ❖ 제2차 당무위원회 |
| 1993. 2. 26 | ❖ 총재단회의 및 제3·4차 당무위원회 |
| 1993. 3. 20 | ❖ 제5차 당무위원회 |
| 1993. 4. 10 | ❖ 제6차 당무위원회 |
| 1993. 9. 14 | ❖ 제7차 당무위원회, 제8차 당무위원회 |
| 1993. 9. 28 | ❖ 제7차 임시전당대회 |
| 1993. 12. 7 | ❖ 제9차 당무위원회 |

6) 친민당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3. 2. 21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3. 23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4. 22 | ❖ 중앙위원회 회의 |
| 1993. 5. 31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6. 20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7. 18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8. 22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9. 19 | ❖ 지구당점검 및 사무지원실시 대비 지시 |
| 1993. 10. 17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11. 21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3. 11. 24 | ❖ 중앙위원회 회의 |
| 1993. 12. 28 | ❖ 정기 및 회계보고 작성요령에 대한 지시 |

7) 대한정의당

| 연 월 일 |
|-------------|
| 1993. 4. 1 |
| 1993. 4. 6 |
| 1993. 6. 30 |
| 1993. 7. 30 |
| 1993. 8. 28 |
| 1993. 9. 2 |
| 1993. 12. 5 |
| 1993. 12. 7 |

| 주 요 활 동 |
|------------------------------|
| ❖ 제1차 당무위원회 |
| ❖ 광명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여 |
| ❖ 제2차 당무위원회 |
| ❖ “우리농산물 애용합시다” 홍보전단 배포 |
| ❖ 제3차 당무위원회 |
| ❖ “도덕성회복 운동” 홍보물배포 등 계몽활동 |
| ❖ 제4차 당무위원회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회” 참여 |

8) 새한국당

| 연 월 일 |
|--------------|
| 1993. 3. 20 |
| 1993. 4. 20 |
| 1993. 5. 21 |
| 1993. 5. 25 |
| 1993. 7. 25 |
| 1993. 8. 18 |
| 1993. 10. 18 |
| 1993. 11. 28 |
| 1993. 12. 4 |

| 주 요 활 동 |
|--------------------------|
| ❖ 당원단합대회겸 자연보호캠페인 |
| ❖ 전국지구당 지도·점검 및 지원실시 |
| ❖ 전국지구당위원장 자연보호운동 등산대회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당원집회 |

9) 대한민주당

| 연 월 일 |
|--------------|
| 1993. 10. 7 |
| 1993. 10. 20 |

| 주 요 활 동 |
|----------------|
| ❖ 대한민주당 창당대회 |
| ❖ 대한민주당 중앙당 등록 |

나. 1994년도

1) 민주자유당

연 월 일

1994. 1. 10
1994. 1. 11
1994. 1. 12
1994. 1. 14
1994. 1. 19
1994. 1. 22
1994. 1. 24
1994. 1. 27
1994. 1. 28
1994. 2. 1
1994. 2. 3

1994. 2. 8
1994. 2. 14
1994. 2. 15
1994. 2. 16
1994. 2. 22
1994. 2. 23
1994. 3. 7
1994. 3. 8
1994. 3. 9
1994. 3. 16
1994. 3. 17
1994. 3. 29
1994. 4. 7
1994. 4. 8
1994. 4. 20
1994. 4. 21
1994. 4. 25
1994. 4. 28
1994. 4. 29
1994. 5. 1
1994. 5. 4
1994. 5. 6

주요 활동

- ❖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 ❖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의 당정회의
- ❖ 제119차 당무회의
- ❖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 ❖ 제120차 당무회의
- ❖ 고 정일권 상임고문 영결식
- ❖ 사무처당직자 삼성연수
- ❖ 농림수산주요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
- ❖ 수질정책 대토론회
- ❖ 환경보호녹색운동추진본부 발대식
- ❖ 제121차 당무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전체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위원회간담회
- ❖ 환경보호녹색운동 캠페인
- ❖ 제26차 의원총회
- ❖ 창당 4주년 기념식
- ❖ 제122차 당무회의
- ❖ 'GR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 제123차 당무회의, 대통령 취임1주년 정책대토론회, 여성계대표단과의 간담회
- ❖ 서울시 교통종합대책회의
- ❖ 제124차 당무회의
- ❖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수,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 ❖ 제125차 당무회의
- ❖ 교통문제 정책세미나
- ❖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회의
- ❖ 대통령 일본·중국 순방 성과 및 후속대책보고회
- ❖ 제126차 당무회의, 교통정책토론회
- ❖ 제127차 당무회의
- ❖ 영산강오염관련 당정회의
- ❖ 제27차 의원총회
- ❖ 제28차 의원총회
- ❖ 음용수관리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 ❖ 노총의장단 및 산별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
- ❖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 ❖ 대도시교통정책 세미나

| | |
|--------------|--|
| 1994. 5. 10 | ❖ 한국노총 산별여성노조임원과의 간담회 |
| 1994. 5. 11 | ❖ 제128차 당무회의 |
| 1993. 5. 19 | ❖ 고 서수중 의원 영결식 |
| 1994. 5. 20 | ❖ 규제완화관련 정책토론회 |
| 1994. 5. 21 | ❖ 규제완화관련 정책토론회 |
| 1994. 5. 25 | ❖ 고 심명보 의원 국회장 |
| 1994. 5. 27 | ❖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 1994. 5. 28 | ❖ 민청서울시단 결의대회 |
| 1994. 5. 30 | ❖ 민간단체 활성화방안 토론회 |
| 1994. 5. 31 | ❖ 고 정일권 의장 모비제막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 1994. 6. 10 | ❖ 제129차 당무회의 |
| 1994. 6. 13 | ❖ 시·도의원 연수 |
| 1994. 6. 17 | ❖ 정책위원회 워크숍 |
| 1994. 6. 20 | ❖ 국가경쟁력과 대기업정책 세미나 |
| 1994. 6. 21 | ❖ 추경예산안 당정회의 |
| 1994. 6. 23 | ❖ 제130차 당무회의 |
| 1994. 6. 24 | ❖ '95정부예산심의 당정회의 |
| 1994. 6. 28 | ❖ 제29차 의원총회 |
| 1994. 7. 4 | ❖ 부처별 예산요구 설명 및 심의 |
| 1994. 7. 7 | ❖ 제131차 당무회의 |
| 1994. 7. 9 | ❖ 제30차 의원총회 |
| 1994. 7. 11 | ❖ 제132차 당무회의, 보궐선거공천자 임명장 수여식, 예결위 추경 당정회의 |
| 1994. 7. 15 | ❖ 예산 당정회의 |
| 1994. 8. 8 | ❖ 당예결위 현지확인 출장 |
| 1994. 8. 9 | ❖ 당예결위 전체회의 |
| 1994. 8. 10 | ❖ 제133차 당무회의 |
| 1994. 8. 18 | ❖ 제134차 당무회의, 대도시 교통종합대책 중간보고 |
| 1994. 8. 22 | ❖ 예결위원회 세미나 |
| 1994. 8. 24 | ❖ 제135차 당무회의 |
| 1994. 8. 27 | ❖ 예산조정안 전체심의 |
| 1994. 8. 31 | ❖ 제136차 당무회의 |
| 1994. 9. 7 | ❖ 제137차 당무회의 |
| 1994. 9. 12 | ❖ 95예산안 당정회의 |
| 1994. 9. 15 | ❖ 제138차 당무회의 |
| 1994. 9. 23 | ❖ 중앙당사무처 당직자 연수, 제139차 당무회의 |
| 1994. 9. 27 | ❖ 제140차 당무회의 |
| 1994. 9. 28 | ❖ 기초회의의원 연수 |
| 1994. 10. 5 | ❖ 민지당후원회 제3차 정기총회, '94지방당 정기당무감사 |
| 1994. 10. 24 | ❖ 제31차 의원총회 |

1994. 10. 28
 1994. 11. 2
 1993. 11. 8
 1994. 11. 9
 1994. 11. 16
 1994. 11. 17
 1994. 11. 21
 1994. 11. 23
 1994. 11. 30
 1994. 12. 2
 1994. 12. 3
 1994. 12. 7
 1994. 12. 14
 1994. 12. 19
 1994. 12. 21
 1994. 12. 26
 1994. 12. 27
 1994. 12. 31

- ❖ 제32차 의원총회
- ❖ 제141차 당무회의
- ❖ 제33차 의원총회
- ❖ 제142차 당무회의, 수도권 교통대책 토론회
- ❖ 제143차 당무회의, 수도권 종합교통대책 최종보고서 협의회
- ❖ 제34차 의원총회, 전국 민청지단장 연수
- ❖ 여성특위 세미나 - 지방자치와 여성의 참여
- ❖ 제144차 당무회의
- ❖ 제145차 당무회의
- ❖ 제35차 의원총회
- ❖ 제146차 당무회의
- ❖ 제147차 당무회의, 수도권 교통대책 보고회
- ❖ 제148차 당무회의
- ❖ 제36차 의원총회
- ❖ 제149차 당무회의
- ❖ 전당대회준비위 전체회의
- ❖ 제150차 당무회의
- ❖ 전당대회준비위 전체회의

2) 민주당 (95. 12. 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1994. 1. 5
 1994. 1. 7
 1994. 1. 10
 1994. 2. 12
 1994. 3. 7
 1994. 3. 10
 1994. 3. 14
 1994. 3. 18
 1994. 3. 21
 1994. 3. 28

주요 활동

- ❖ 제80차 당무위원회의
- ❖ 물가대책 대토론회
- ❖ 제183차 최고회의 - UR특별위 구성
- ❖ GR대책위 설치 및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조사단 구성
- ❖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 상무대 교외이전 의혹 진상조사위 구성
- ❖ 제192차 최고위원회의 - 조강특위 구성
- ❖ 제193차 최고위원회의 - 이북5도민특위, 중소기업특위 설치
- ❖ 중앙당 당직자 연수
- ❖ 제194차 최고위원회의 - 당무기획회의 구성
- ❖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 행정구역개편대책위 구성 및 불법행정 사전선거운동조사위 구성

1994. 4. 4
1994. 4. 5
1994. 4. 8
1994. 4. 11
1994. 4. 12
1994. 4. 18

1994. 4. 27
1994. 5. 9

1995. 5. 11
1994. 5. 17

1994. 5. 27
1994. 6. 2
1994. 6. 10
1994. 6. 16
1994. 6. 26

1994. 6. 28
1994. 7. 5

1994. 7. 11
1994. 7. 18
1994. 8. 29
1994. 9. 1

1994. 9. 10
1994. 9. 27
1994. 9. 29~30
1994. 10. 24
1994. 10. 27
1994. 11. 1
1994. 11. 7
1994. 11. 9
1994. 11. 11
1994. 11. 24
1994. 11. 26

- 김대중 이사장 자택감시 및 정치사찰진상조사위 구성
- ❖ UR국회비준 저지 대책기구 설치
- ❖ 식목일 행사
- ❖ UR비준 저지투쟁위 발대식 및 현판식
- ❖ 불법행정 사전선거운동 현판식 및 과천시 전철사고 조사위 구성
- ❖ UR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
-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 영산강 수질오염 조사단 구성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
- ❖ 제204차 최고위원회 - 한약업사정탁자금 수수의혹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 ❖ 제208차 최고위원회의
- 속초 하수종말처리장, 군포 쓰레기매립장 조사단 구성
- ❖ 제89차 당무위원회의 - 농어민위산하 “유통구조개선소위” 발족
- ❖ 제210차 최고위원회의,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식
- 검찰 및 사법제도개선 특위 구성
- ❖ 원내총무 경선
- ❖ 제214차 최고위원회의 - 총무단 선임
- ❖ 6·10 항쟁 기념식
- ❖ 제218차 최고위원회의 - 범민주세력통합추진위 구성
- ❖ 제220차 최고위원회의 - 남총련사건조사단 구성
- 철도 및 지하철사태 대책위 구성
- ❖ 상임위원장 및 당직 발표
- ❖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 강원도 영월·평창(신민선), 경주시(이상두) 보선
후보자 공천 및 지자체기획단 구성
- ❖ 제226차 최고위원회의 - 대구수성갑(권오선) 보선후보자 공천
- ❖ 제227차 최고위원회의 - 남부지역 가뭄대책 및 위로 방문단 구성
- ❖ 전국지구당 청년부장 수련대회
- ❖ 제231차 최고위원회의 - 당직인선(당12역중 당기위원장, 통일국제위원장,
홍보위원장 및 지자체특위 위원장)
- ❖ 지방자치기획단 발족
- ❖ 지자체선거에 대비한 홍보전략 설명회
- ❖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 조직부장 연수
- ❖ 제239차 최고위원회의 - 주요시설물 안전대책위 설치
- ❖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 부실공사신고센터 현판식
- ❖ 성수대교, 충주호 참사 유공자 시상식
- ❖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 및 12·12 반란자 기소유예판결에 대한 규탄대회
- ❖ 12·12 반란자 기소를 위한 특별당보 배포
- ❖ 12·12 투쟁기획단 회의
- ❖ 12·12 반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대전 집회

1994. 11. 28
 1994. 11. 30
 1994. 12. 3
 1994. 12. 7

 1994. 12. 8

 1994. 12. 10
 1994. 12. 12
 1994. 12. 14
 1994. 12. 16
 1994. 12. 17
 1994. 12. 26

 1994. 12. 27

 1994. 12. 28

- ❖ 제248차 최고위원회의 - 부천 세도조사위 구성
- ❖ 제103차 당무위원회의 - 세도조사 비상대책특위 구성
- ❖ 12·12 반란자 기소촉구 및 부천세도비리 규탄집회
- ❖ 제104차 당무위원회의
 - 서울집회 방해와 관련한 교통부장관 항의방문단 구성
- ❖ 제252차 최고위원회의 -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책위 구성
 - 정부조직개편특위 설치
- ❖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및 UR이행법 제정을 위한 국민결기대회
- ❖ 세무비리조사 비상대책위 현판식, 전국지구당 여성부장 연수
- ❖ 제105차 당무위원회의 - 무안 마늘피해 조사단 구성
- ❖ 전국지구당 총무부장 연수
- ❖ 제254차 최고위원회의 - 낙동강 중금속오염 실태조사단 구성
- ❖ 제256차 최고위원회의
 - 당무위원보임(허경만, 조순형, 김정길, 김태식, 오탄), 홍영기 상임고문 면직, 허경만 상임고문 추대
- ❖ 제106차 당무위원회의
 - 조강특위의 부실지구당 판정 결과점수(25개 지구당)
- ❖ 군부대 위문방문(당지도부)

3) 신민주당 (95. 4. 1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연 월 일

1994. 2. 28
 1994. 3. 28
 1994. 4. 6
 1994. 4. 28
 1994. 5. 5
 1994. 5. 23
 1994. 6. 29
 1994. 9. 12
 1994. 9. 20

주 요 활 동

- ❖ 제8차 정기전당대회
- ❖ 총재단회의
- ❖ 제10차 당무회의
- ❖ 제9차 임시전당대회
- ❖ 제11차 당무회의
- ❖ 제12차 당무회의
- ❖ 제13차 당무회의
- ❖ 제14차 당무회의
- ❖ 제15차 당무회의

4) 친민당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4. 2. 20 | ❖ 당무위원회 개최 |
| 1994. 3. 20 | ❖ 당무위원회 개최 |
| 1994. 4. 17 | ❖ 중앙위원회 개최 |
| 1994. 5. 21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4. 6. 19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4. 7. 17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4. 8. 21 | ❖ 당무위원회 개최 |
| 1994. 9. 18 | ❖ 지구당점검 및 사무지원실시 대비 지시 등 |
| 1994. 10. 16 | ❖ 도덕성회복 추진에 대한 당원교육 |
| 1994. 11. 13 | ❖ 당무위원회 개최 |
| 1994. 12. 18 | ❖ 정기 및 회계보고 작성요령에 대한 지시 등 |

5) 새한국당 (95. 3. 7 민주당에 흡수합당)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4. 1. 5 | ❖ UR재협상 촉구를 위한 범야권 공조모임 |
| 1994. 3. 15 | ❖ 생활실천 결의대회 |
| 1994. 3. 19 | ❖ 자연보호 캠페인 |
| 1994. 4. 9 | ❖ UR반대 결의대회 |
| 1994. 6. 4 | ❖ 제1차 당무회의 |
| 1994. 7. 3 | ❖ 자연보호 캠페인 |
| 1994. 12. 5 | ❖ URI행법안 반대 공조모임 |
| 1994. 12. 8 | ❖ WTO공청회 |
| 1994. 12. 19 | ❖ 지구당위원장 전체회의 |

6) 대한민주당

연 월 일

1994. 2. 14
1994. 10. 1

주 요 활 동

- ❖ 제1차 당무위원회
- ❖ 제2차 당무위원회

7) 신민당 (95. 5. 31 자유민주연합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1994. 1. 19
1994. 2. 1
1994. 2. 19
1994. 3. 7
1994. 4. 2
1994. 4. 9
1994. 4. 15
1994. 6. 26
1994. 6. 27
1994. 7. 1
1994. 7. 6
1994. 8. 3
1994. 9. 3
1994. 9. 7
1994. 9. 9
1994. 9. 14
1994. 10. 10
1994. 11. 9
1994. 11. 28
1994. 12. 16

주 요 활 동

- ❖ 연두기자회견, 전국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 ❖ 중앙당사 여의도로 이전
- ❖ 창당2주년 및 당사이전 현판식
- ❖ 전국지구당 조직정비
- ❖ 중앙당 사무처요원 자연보호캠페인 실시
- ❖ 갑오농민 백주년기념, UR협상규탄 범국민대회 참가
- ❖ 중앙정치연수원 개원,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수
- ❖ 중앙상무위원회 개최
- ❖ 정기전당대회 개최
- ❖ 합당수임기구협상대표자회의 개최
- ❖ 합당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 ❖ 대구수성갑 현경자 당선축하
- ❖ 경륜장 반대 시민참여대회 동참
- ❖ 시사토론회 주최(우리사회 정당의 역할)
- ❖ 합당후 새로운 당무위원 선임
- ❖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 ❖ 불법전당대회
- ❖ 해당행위자 징계
- ❖ 김동길 단독대표 등록신청서 철회
- ❖ 김동길, 박찬중 양대표 사퇴

다. 1995년도

1) 민주자유당 (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5. 1. 4 | ❖ 전당대회준비위 전체회의 |
| 1995. 1. 10 | ❖ 전문교수들을 초청, 당헌관련 토론회 개최 |
| 1995. 1. 11 | ❖ 여의도연구소 설립추진위 회의 IDU 및 EDU 집행위원회 당대표 참가 |
| 1995. 1. 24~25 |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워크숍』 개최(남한강 수련원) |
| 1995. 1. 27 | ❖ 제151차 당무회의 국회의원 ·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및 청와대 만찬 |
| 1995. 2. 3 | ❖ 제152차 당무회의 |
| 1995. 2. 6 | ❖ 여의도연구소 헌판식 |
| 1995. 2. 7 | ❖ 제3차 정기전당대회 |
| 1995. 2. 8 | ❖ 주요 당직개편(사무총장 김덕룡 의원, 정책위의장 이승윤 의원, 원내총무 현경대 의원 외) |
| 1995. 2. 9 | ❖ 창당5주년 기념식(지하대강당), 의원총회, 원내총무에 현경대 의원 선출 |
| 1995. 2. 10 | ❖ 주요당직자 이 · 취임식(지하대강당), 공석중인 국회부의장에 이한동 의원을 내정 |
| 1995. 2. 13 | ❖ 가뭄대책마련 당 · 정회의, 당무위원 최형우 · 이민섭 외 8명, 기초위원장 최재욱 외 중 · 하위당직자 26명 임명 |
| 1995. 2. 15 | ❖ 제154차 당무회의 |
| 1995. 2. 20 | ❖ 의원총회 |
| 1995. 2. 22 | ❖ 김영삼 총재 중앙당사 방문(당무회의 주제), 이춘구 대표, 국회연설, 여 · 야 정책위 의장단 회담 |
| 1995. 2. 28 | ❖ 제155차 당무회의 |
| 1995. 3. 3 | ❖ 제156차 당무회의, 월례조회 |
| 1995. 3. 6 | ❖ 『김영삼정부 2년, 그 평가와 향후 과제』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의원총회 |
| 1995. 3. 7 | ❖ 의원총회 |
| 1995. 3. 8 | ❖ 제157차 당무회의 |
| 1995. 3. 10 | ❖ 민주자유청년봉사단,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위한 한국청년의 역할과 그 과제」주제의 세미나 개최(국회의원 소회의실) |
| 1995. 3. 14 | ❖ 의원총회, 초선의원 간담회 |
| 1995. 3. 15 | ❖ 재해대책위원회 회의 |
| 1995. 3. 17 | ❖ 제158차 당무회의, Konadze 주한러시아 대사 대표예방 |
| 1995. 3. 19~23 | ❖ IWDU(국제여성민주연합) 미국회의 참가 |
| 1995. 3. 21 | ❖ 당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995. 3. 22

- ❖ 제159차 당무회의
후보경선 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독일 시민당 부총재 당사방문

1995. 3. 23

- ❖ 지방선거기획위원회 선출
민주자유청년봉사단,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청년의 활동과 과제」
주제의 세미나 개최

1995. 3. 25

- ❖ 시·도지사 후보공모 광고

1995. 3. 28

- ❖ 제160차 당무회의

1995. 4. 4

- ❖ 제161차 당무회의

1995. 4. 8

- ❖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5. 4. 11

- ❖ 제2기 중앙상무위원 선임장 수임식

1995. 4. 13

- ❖ 한국노총 주요인사 간담회

1995. 4. 15

- ❖ 중앙상무위 시·도지부 연합회 구성

1995. 4. 18~5. 9

- ❖ 민주자유청년봉사단의 지방순회 세미나

1995. 4. 19

- ❖ 4·19 혁명 기념행사(수유리 4·19 묘역)

1995. 4. 20

- ❖ 제162차 당무회의
세계화추진위원회 당·정회의

1995. 4. 24

- ❖ 제163차 당무회의

1995. 4. 26

- ❖ 생활개혁실천 우수여성위원회 시상식

1995. 5. 1

- ❖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대회(서울올림픽 펜싱경기장),
지방선거 지역공약 마련을 위한 시·도지부 위원장회의, 의원총회

1995. 5. 3

- ❖ 제164차 당무회의

1995. 5. 4

- ❖ 제주도지사후보 경선대회(국회의원회관)

1995. 5. 8

- ❖ 광주시장후보 선출대회(구동체육관)
경남도지사후보 선출대회(마산 실내체육관)
정책위 가스안전대책특위 제1차회의

1995. 5. 9

- ❖ 인천시장후보 추천대회(인천 실내체육관)
전남도지사후보 추천대회(순천 팔마체육관)
경북도지사후보 선출대회(포항 실내체육관)

1995. 5. 10

- ❖ 제165차 당무회의, 강원도지사후보 선출대회(춘천 예술회관)
충남도지사후보 선출대회(대전체육관)

1995. 5. 11

- ❖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리틀엔젤스회관)

1995. 5. 12

- ❖ 서울시장후보 경선대회(올림픽 체조경기장)
환경보전 특위개최

1995. 5. 15

- ❖ 부산시장후보 추천대회(구덕체육관)
전북도지사후보 선출대회(덕진종합회관)

1995. 5. 16

- ❖ 대구시장후보 추천대회(대구 실내체육관)
대전시장후보 추천대회(대전시민회관)
충북도지사후보 추천대회(충북실내회관)

| | |
|------------------------|---|
| 1995. 5. 17 | ❖ 제166차 당무회의 |
| 1995. 5. 18 | ❖ 지방선거 중앙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현판식 전국 사무처당직자 필승결의대회(리틀엔젤스회관) |
| 1995. 5. 19 | ❖ 전국의 효부당원에 대한 시상식(112명) |
| 1995. 5. 31 | ❖ 제167차 당무회의 |
| 1995. 6. 5 | ❖ 제168차 당무회의,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시·도광역단체장 후보와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
| 1995. 6. 14 | ❖ 천주교·불교 선거대책 부분부장 회의 |
| 1995. 6. 19 | ❖ 기독교 조찬 기도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 간담회 |
| 1995. 7. 4 | ❖ 제169차 당무회의, 당직개편 - 사무총장(김윤환) |
| 1995. 7. 5 | ❖ 의원총회, 사무총장 이·취임식 |
| 1995. 7. 15 | ❖ 의원총회 |
| 1995. 7. 20 | ❖ 제170차 당무회의 |
| 1995. 7. 21 | ❖ 기초단체장 당선자 전체회의 |
| 1995. 7. 24 | ❖ 확대당직자 회의 삼풍백화점 붕괴 재해대책활동 |
| 1995. 7. 25 | ❖ 당소속 시·도의원 당선자 전체회의 |
| 1995. 8. 9 | ❖ 제171차 당무회의 |
| 1995. 8. 14 | ❖ 전국위원회 준비위 회의 |
| 1995. 8. 18 | ❖ 제172차 당무회의 당기위원회 회의 |
| 1995. 8. 21 | ❖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
| 1995. 8. 22 | ❖ 의원총회 당직개편(사무총장 강삼재, 정책위의장 김중호, 원내총무 서정화, 총재비서 실장 박범진, 대변인 손학규, 대표위원 비서실장 윤원중) |
| 1995. 8. 28~9. 2 | ❖ 제6차 IDU 서울 당수회의 |
| 1995. 8. 30 | ❖ 제173차 당무회의 |
| 1995. 9. 4 | ❖ 의원세미나 개최 |
| 1995. 9. 7 | ❖ 수해대책특위 개최 |
| 1995. 9. 11 | ❖ 의원총회, 확대당직자 회의 |
| 1995. 9. 14 | ❖ 제174차 당무회의 |
| 1995. 9. 18 | ❖ 의원총회 |
| 1995. 9. 20 | ❖ 제175차 당무회의, 시·도지부 위원장 회의 |
| 1995. 9. 21 | ❖ 한국노총간담회 |
| 1995. 9. 22 | ❖ 지방자치특위 전체회의 |
| 1995. 9. 22 ~10. 12 | ❖ 정기 당무감사 실시 |

1995. 9. 29
 1995. 10. 5
 1995. 10. 6
 1995. 10. 7
 1995. 10. 11
 1995. 10. 15~16
 1995. 10. 16
 1995. 10. 17
 1995. 10. 18
 1995. 10. 19
 1995. 10. 20
 1995. 10. 21
 1995. 10. 24
 1995. 10. 26

 1995. 10. 27

 1995. 10. 30

 1995. 11. 1

 1995. 11. 7
 1995. 11. 8
 1995. 11. 10
 1995. 11. 15
 1995. 11. 17
 1995. 11. 20
 1995. 11. 21
 1995. 11. 24
 1995. 11. 30
 1995. 12. 4
 1995. 12. 6
 1995. 12. 8
 1995. 12. 11
 1995. 12. 13
 1995. 12. 18
 1995. 12. 22
 1995. 12. 26
 1995. 12. 27

- ❖ 여성단체장 간담회
- ❖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대사 대표예방
- ❖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 ❖ 제176차 당무회의
- ❖ 대한의사회 간담회, 농민단체 간담회
- ❖ 의원세미나 개최
- ❖ 불교청년회와의 간담회
- ❖ 모하메드 예리트리아 여당 당수 방문
- ❖ 송파갑지구당 대회, 경찰의 날 위문
- ❖ 조계종 간담회
- ❖ 여경과의 간담회
- ❖ 산상토론회 및 자연보호운동
- ❖ 부산 재해대책 기금마련 음악회(부산시민회관)
- ❖ 제177차 당무회의, 제1회 여의도청년포럼
송파을지구당 대회
- ❖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간담회」개최
술카기 주한이집트대사 예방
- ❖ 확대당직자 회의
5·18 관련 중앙당사 피습
- ❖ 제178차 당무회의
몽골 국민혁명당 총서기 예방
- ❖ 의원총회
- ❖ 제179차 당무회의, 소방의 날 기념 「119구조대」 간담회
- ❖ 낙농진흥법 관계자 간담회
- ❖ 제180차 당무회의
- ❖ 강원도지부 재해대책 기금마련 음악회(춘천문화회관)
- ❖ 이북5도민 간담회
- ❖ 재해대책기금 마련 「열린정당 대음악회」개최(세종문화회관)
- ❖ 제181차 당무회의, 캐나다대사 접견
- ❖ 의원총회
- ❖ 확대당직자 회의
- ❖ 제182차 당무회의
- ❖ 정치관계법 개정소위 회의
- ❖ 신한국당(가칭) 현판식
- ❖ 세계화추진위 당·정회의
- ❖ 의원총회
- ❖ 통일원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 ❖ 광주 망월동묘지 참배
- ❖ 제183차 당무회의

2) 새정치국민회의

연 월 일

1995. 9. 5
 1995. 9. 7
 1995. 9. 13
 1995. 9. 15
 1995. 9. 16
 1995. 9. 18
 1995. 9. 19

 1995. 9. 21

 1995. 9. 22

 1995. 9. 23

 1995. 9. 28

 1995. 10. 1
 1995. 10. 3
 1995. 10. 5
 1995. 10. 6
 1995. 10. 7

 1995. 10. 10

 1995. 10. 12

 1995. 10. 16
 1995. 10. 17
 1995. 10. 18
 1995. 10. 19
 1995. 10. 20
 1995. 10. 21
 1995. 10. 24
 1995. 10. 26

주 요 활 동

- ❖ 창당대회
- ❖ 이원종 정무수석의 당사방문(김영삼 대통령의 창당 축하인사)
-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가족 15명과 총재면담
- ❖ 인도 국회의원 총재면담, 정의구현평화사제단 당사방문
- ❖ 국회 상임분과위(행정위, 내무위) 합동간담회
경기도의회 정형만 부의장 및 도의원 간부들과 총재면담
- ❖ 국회 상임분과위(재정·경제, 통상산업) 합동간담회
브라질 Amado대사 당사방문
- ❖ 국회 상임분과위(법사, 외통, 국방) 합동간담회, 5.18관련 3개법안 발표
중앙일보 창간30주년 리셉션 총재참석
- ❖ 국회 상임분과위(교육, 문공, 보건복지, 노동환경, 통신과기) 합동간담회
국회 상임분과위(농수산, 건교위) 합동간담회
- ❖ 김기수 검찰총장 총재방문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농민연대 대표단 당사방문
- ❖ 국군의 날 공식행사 총재 참석
- ❖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독일 통일 제5주년 기념리셉션 총재 참석
- ❖ 창당1개월, 기자간담회
-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금요조찬 토론회 총재 참석
- ❖ 여성의 전화 주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기금모금바자회” 유가족 15명과
총재 참석
- ❖ 5·18 관련 서명교수단 회장단, 자문위원단 당사방문
외신기자 간담회(일본지역 제외)
- ❖ 외신기자 간담회(일본지역), 걸스카웃 제50주년기념 후원회의 밤
근로자파견법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단 당사방문
환경보존의 날 행사 총재 참석
- ❖ 의원총회, 제1차 중앙위원회
- ❖ 인천시의원 간담회
- ❖ 이스라엘 Arie Arazi신임대사 총재 예방
- ❖ 근로자파견법 당론결정 소위원회
- ❖ 당지도부 경찰청 분청 및 시·도 경찰청 격려 방문(21일 경찰의 날)
- ❖ 국민회의 참여 광주, 전남·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
- ❖ 김대중 총재 중국 방문
- ❖ 방송법 공청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995. 10. 27
 1995. 10. 29
 1995. 10. 30
 1995. 10. 31
 1995. 11. 1
 1995. 11. 2
 1995. 11. 3
 1995. 11. 4
 1995. 11. 6
 1995. 11. 7
 1995. 11. 8
 1995. 11. 9

 1995. 11. 10
 1995. 11. 11
 1995. 11. 13
 1995. 11. 14

 1995. 11. 15
 1995. 11. 16

 1995. 11. 17
 1995. 11. 18
 1995. 11. 20
 1995. 11. 21

 1995. 11. 22
 1995. 11. 23

 1995. 11. 24

 1995. 11. 27
 1995. 11. 28

 1995. 11. 29
 1995. 11. 30

- ❖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 특별대책위원회
- ❖ 김대중 총재 귀국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지도위원회, 노소영씨 외환반출사건 조사 미국파견(조세형, 류재건 부총재)
- ❖ 특별위원장 회의,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이스라엘 라빈총리 서거 조문
- ❖ 특위위원장 회의,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수수에 관한 공청회
- ❖ 지도위원회, 지구당조직책 임명장 수여식
- ❖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대표들과 총재면담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예산위원회
- ❖ 총재 특별보좌역회의
- ❖ 간부회의,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특위위원장 회의,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인권특별위원회 합동회의
6공비리특위 제2차 공청회, 연청 전국대표자회의 총재강연
- ❖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 지구당 여성부장 간담회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인권특별위원장 및 당소속 변호사 39명 성명서 발표
- ❖ 수도권 지방의원 세미나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정상용 의원 지역구 변경관련 기자회견
- ❖ 특위위원장 회의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 ❖ 서울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 총재 참석
- ❖ 6공비리 및 김영삼 대통령 자금수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미사
- ❖ 제2차 중앙위원회
5·18 관련 공대위 상임위원장 및 지도위원 간담회
- ❖ 간부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합동회의, 총재 파주 농촌방문
- ❖ 특위위원장 회의, 비대위 기획 소위원회, 비대위 5·18 관련 소위원회
제1차 새정치 여성대회
- ❖ 지도위원회, 비상시국대책위원회
- ❖ 영입인사 연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인권특별위원회 합동회의

- 1995. 12. 1
- 1995. 12. 2
- 1995. 12. 3
- 1995. 12. 5
- 1995. 12. 7
- 1995. 12. 8
- 1995. 12. 9
- 1995. 12. 11
- 1995. 12. 12

- 1995. 12. 14
- 1995. 12. 15
- 1995. 12. 16

- 1995. 12. 19
- 1995. 12. 21
- 1995. 12. 22
- 1995. 12. 23

- 1995. 12. 26

- 1995. 12. 27

- ❖ 국민일보 창간 7주년 기념식 총재 참석
- ❖ 의원총회
- ❖ 5·18 진상규명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촉구 비상시국 대강연회
- ❖ 특위위원장 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 ❖ 비대위 5.18관련 소위원회
- ❖ 비상시국대책위원회
- ❖ 민생관련 동대문시장 순방, 총재특별보좌역 회의, 인권침해 신고센터 현판식
- ❖ 전방부대 25사단 위문방문
- ❖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준공식행사 참석
비상시국대책위원회, 특위위원장 회의
- ❖ 대북대만 수도시장 총재예방
- ❖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 당산철교 진상조사대책 특별위원회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당산철교 진상조사 대책 특별위원회
- ❖ 이수성 신임총리 총재예방, 한국정치발전과 보좌진의 역할 총재 강연
- ❖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공정언론대책위원회
- ❖ 특위위원장 회의, 권오기 신임 통일부총리 총재예방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나용배 신임 경제부총리 총재예방
- ❖ 김우석 신임 내무장관 총재예방(주풍전산업 당 지도부 방문
췌유성기업 당 지도부 방문
당산철교진상조사 대책위원회
- ❖ 중소기업 전시관 지도부 관람
주돈식 신임 정무장관 총재예방
정종택 신임 환경부장관 총재예방

3) 통합민주당 (96. 6. 13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1995. 1. 9
 - 1995. 1. 14
 - 1995. 1. 16

- 주 요 활 동**
- ❖ 지자제기획단 회의
 - ❖ '쓰레기증량제' 실시에 관한 정책포럼
 - ❖ 임시최고위원 간담회

1995. 1. 18
 1995. 1. 20
 1995. 1. 23
 1995. 2. 2
 1995. 2. 3
 1995. 2. 6
 1995. 2. 7
 1995. 2. 10
 1995. 2. 14
 1995. 2. 17
 1995. 3. 2
 1995. 3. 6
 1995. 3. 7
 1995. 3. 12
 1995. 3. 17
 1995. 3. 18
 1995. 3. 31
 1995. 4. 10
 1995. 4. 14
 1995. 4. 19
 1995. 4. 27
 1995. 5. 3
 1995. 5. 11
 1995. 5. 17
 1995. 5. 23
 1995. 6. 7
 1995. 6. 9
 1995. 6. 26
 1995. 6. 27
 1995. 6. 30
 1995. 7. 4
 1995. 9. 18
 1995. 10. 19
 1995. 10. 25
 1995. 11. 2
 1995. 11. 13
 1995. 11. 16
 1995. 11. 20
 1995. 11. 24

- ❖ 당헌개정을 위한 협의기구 회의
- ❖ 당헌개정을 위한 4인 소위
- ❖ '민주당 일본 관서지방 지진피해 위문단' 구성
-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영호남 가뭄실태조 사위원회 구성
-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 ❖ 아권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 전당대회준비위 제1차 전체회의
- ❖ 통추위 회의
- ❖ 세금비리조사위원회 결과보고
- ❖ '김영삼정부 2년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
- ❖ 제111차 당무회의
- ❖ 총재단 회의, 의원총회
- ❖ 긴급 총재단 회의
- ❖ 긴급 총재단 회의
- ❖ 지자제기획단 회의
- ❖ 민주당 공정보도대책위 제1차회의
- ❖ "교육개혁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토론회
- ❖ 지자제선거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위한 안 확정
- ❖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 선전부장 연수회
- ❖ 통추위 전체회의
- ❖ 지자제선거대책위원회 하부기구 구성과 인선
-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
- ❖ 30개 지구당 조직책과 17개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임명식 수여식
- ❖ 민주당 5·18 광주민주항쟁 제15주년 기념식
- ❖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현판식
- ❖ 부정선거신고센터 현판식
- ❖ 광역단체장후보 공천장 수여식
- ❖ 선거대책위 전체회의
- ❖ 지자제 선거
-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서울시장 방문
-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처리특별법안 당무회의의 인준·통과
- ❖ 긴급 의원총회(노태우 4천억 비자금문제 논의)
- ❖ "4천억 비자금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 민주당 노태우 권력형 부정축재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 노태우씨 부정축재 정국에 대한 성명서 채택
- ❖ 의원간담회
- ❖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 ❖ 중하위 당직자 인선

- 1995. 12. 1
- 1995. 12. 4
- 1995. 12. 9
- 1995. 12. 12
- 1995. 12. 14
- 1995. 12. 21
- 1995. 12. 27
- 1995. 12. 30

- ❖ 의원총회
- ❖ 제1차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
- ❖ 당헌·당규개정과 소위원회의 6명 구성
- ❖ 제2차 통합수임기구 합동회의
- ❖ 의원총회
- ❖ 고위당직자 임명
- ❖ 긴급 최고위원회의
- ❖ 당 8역과 특위위원장, 인사위원회 임명

4) 자유민주연합 (95. 5. 31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신설합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 ◀ 구 자유민주연합 ▶
 - 1995. 2. 21
 - 1995. 2. 22
 - 1995. 3. 9
 - 1995. 3. 30
 - 1995. 3. 31
 - 1995. 5. 16
 - 1995. 5. 17
- ◀ 구 신민당 ▶
 - 1995. 1. 23
 - 1995. 2. 10
 - 1995. 3. 27
 - 1995. 3. 31
 - 1995. 5. 16
 - 1995. 5. 17
- ◀ 신설합당 이후 ▶
 - 1995. 5. 25
 - 1995. 5. 31

- ❖ 창당발기인대회
- ❖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 ❖ 지구당창당대회 개최
- ❖ 창당대회
- ❖ 중앙선관위 등록신청
- ❖ 합당선언
- ❖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
- ❖ 한영수, 박한상 양 공동대표 권한대행체제 결의
- ❖ 상기체제 선관위 접수 수리됨
- ❖ 중앙상무위원회
- ❖ 전당대회, 중앙당 변경등록
- ❖ 야권통합 추진위 개시
- ❖ 합당선언,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
- ❖ 원내교섭단체 등록
- ❖ 신설합당 등록수리

1995. 6. 8
 1995. 6. 13~26
 1995. 6. 29
 1995. 7. 7
 1995. 8. 21
 1995. 8. 28
 1995. 9. 1
 1995. 9. 6
 1995. 10. 18
 1995. 10. 22
 1995. 11. 7
 1995. 12. 1
 1995. 12. 8~9
 1995. 12. 12
 1995. 12. 20
 1995. 12. 27

- ❖ 지방선거공직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 ❖ 총재지원유세
- ❖ 당선자대회
- ❖ 김총재 국회대표연설(내각제, 대북쌀지원 문제)
- ❖ 제1차 정책세미나(지방정부 위상)
- ❖ 총재 수해지역 방문(총청권)
- ❖ 녹색운동본부(환경보호운동) 발대식
- ❖ 제2차 정책세미나(농정비리)
- ❖ 총재 국회대표연설
- ❖ 자원봉사 대축제(환경보호운동)
- ❖ 제1회 교양강좌(한승조 교수)
- ❖ 제2회 교양강좌(김동길 고문)
- ❖ 청년단 연수
- ❖ 제3회 정책세미나(의원내각제)
- ❖ 중앙당후원회
- ❖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

5) 대한민국민주당

연 월 일

1995. 5. 10
 1995. 8. 15
 1995. 10. 30
 1995. 11. 15
 1995. 12. 27

주 요 활 동

- ❖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
- ❖ 광복절 기념행사
- ❖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
- ❖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
- ❖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

6) 신민당 (96. 2. 5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 변경)

연 월 일

1995. 6. 23
 1995. 7. 12
 1995. 8. 22

주 요 활 동

- ❖ 중앙당 창당대회
- ❖ 제1차 당무회의
- ❖ 제2차 당무회의

- 1995. 8. 30
- 1995. 9. 5
- 1995. 9. 28
- 1995. 10. 24
- 1995. 10. 27
- 1995. 12. 18

- ❖ 제1차 당규제정 소위원회의
- ❖ 제1차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개최, 신민당보 발간·배포
- ❖ 정당활동보고 및 당원단합대회 참석 - 관악구(을)지구당
- ❖ 제2차 당규제정 소위원회의
- ❖ 제3차 당무회의
- ❖ 제4차 당무회의

7) 정명당 (96. 3. 29 기독교성민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1995. 1. 13
 - 1995. 11. 29

- 주 요 활 동**
- ❖ 정당등록
 - ❖ 대표자 변경(권한대행 우찬무)

8) 친민당

- 연 월 일**
- 1995. 1. 3
 - 1995. 2. 20
 - 1995. 3. 1
 - 1995. 3. 20
 - 1995. 4. 1
 - 1995. 5. 1
 - 1995. 6. 1
 - 1995. 7. 1
 - 1995. 8. 1
 - 1995. 9. 5
 - 1995. 10. 1
 - 1995. 11. 13
 - 1995. 12. 1
 - 1995. 12. 3

- 주 요 활 동**
- ❖ 제1차 당무위원회 개최
 - ❖ 제2차 당무위원회 개최
 - ❖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 제3차 당무위원회 개최
 - ❖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 ❖ 도덕성 회복과 어머니 역할 교육(당원대상)
 - ❖ 제4차 당무위원회
 - ❖ 제5차 당무위원회
 - ❖ 제6차 당무위원회
 - ❖ 제7차 당무위원회
 - ❖ 도덕성 회복에 대한 교육(당원의 추진역할)
 - ❖ 제8차 당무위원회
 - ❖ 제9차 당무위원회
 - ❖ 제10차 당무위원회

9) 통일한국당 (신민주당 95. 4. 1 신민주당에서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5. 1. 6 | ❖ 제1차 당무회의 - 당운영에 대한 방안 - 중앙당 당사 이전문제 토의 |
| 1995. 2. 5 | ❖ 제2차 당무회의 - 당비납입에 대한 방안 - 중앙당 당사 이전문제 토의 |
| 1995. 3. 8 | ❖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종로3가 고영빌딩, 대의원 103명 참석) |
| 1995. 3. 10 | ❖ 제3차 당무회의, 중앙당사 이전(종로3가 고영빌딩 - 종로 송인동) |
| 1995. 4. 1 | ❖ 당명 변경(신민주당 - 통일한국당) |
| 1995. 4. 6 | ❖ 제4차 당무회의 - 6·27 종합선거에 대한 후보자추천에 대한 문제 |
| 1995. 5. 11 | ❖ 제5차 당무회의 - 서울시장후보 서류심사 |
| 1995. 6. 15 | ❖ 제6차 당무회의 - 시장후보자 결정 공천장 수여 |
| 1995. 6. 29 | ❖ 제7차 당무회의 - 정대영 소송문제 토의 |
| 1995. 7. 3 | ❖ 제8차 당무회의 - 선거결과 총평가에 대한 토의 |
| 1995. 8. 17 | ❖ 제9차 당무회의 - 고문추대(고태만), 부총재(정판기) 선임문제 |
| 1995. 9. 17 | ❖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 의하여 지구당 인영신고(25개 지구당) |
| 1995. 10. 9 | ❖ 제10차 당무회의 - 당무위원 노경선 제명에 대한 의결 |
| 1995. 12. 30 | ❖ 제11차 당무회의 - '95년도 마감업무에 관한 사항 |

라. 1996년도

1) 신한국당 (97. 11. 24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6. 1. 3 | ❖ 선거법개정 여야실무회담, 당 선거구획정위 제2차 회의 |
| 1996. 1. 10 | ❖ 정강·정책 소위원회 회의, 겨울철 가뭄대책 관련 당·정회의, 중소기업 청 설립문제 관련 당·정회의 - 정책위의장, 통신산업부장관, 총무처장관, 재경원차관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1. 9 | ❖ 선거법 개정실무자회의 선관위 간부 대표위원 예방(상임위원, 사무총장, 정당국장) 중앙당 회계담당자 교육 |
| 1996. 1. 10 | ❖ 당무회의 -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및 조직책 인선 의결 |

| | |
|-------------|---|
| 1996. 1. 15 | ❖ 확대 당직자회의 |
| 1996. 1. 16 | ❖ 당소속 기초여성의원 협의회 창립, 정강·정책 실무회의 |
| 1996. 1. 17 | ❖ 서울시지부, “국회의원선거필승결의대회”, 정강·정책 소위원회 |
| 1996. 1. 18 | ❖ 외신기자 간담회 |
| 1996. 1. 19 | ❖ 당소속 광역 여성의원협의회 창립 |
| 1996. 1. 24 | ❖ 21세기를 여는 신한국당 여성행진(서초구민회관) |
| 1996. 1. 25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7대 권역별 예상이슈 문답집 발간 |
| 1996. 1. 26 | ❖ 국책연구 '96봄호 편집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당발전 세미나 참석(정책평가위원회) |
| 1996. 2. 2 | ❖ 당무회의 |
| 1996. 2. 6 | ❖ 신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공천자 필승·전진대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공약개발특위 종합조정회의 |
| 1996. 2. 8 | ❖ 공천자회의 및 공천장 수여식 중앙당 후원회운영위원회 회의 당 직능조직 한열회 창립총회(대강당) 여의도 청년포럼(중소기업회관 10층) |
| 1996. 2. 9 | ❖ 당무회의 신한국당보 창간호 발행 |
| 1996. 2. 12 | ❖ 대표위원, 일본연립 여당 정조회장 일행단과 간담회 공약관련 연구위원회 회의 |
| 1996. 3. 4 | ❖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당 공약방향 설명) |
| 1996. 3. 5 | ❖ “푸른 정치 젊은 연대” 창립 제15대 국회의원선거대비 직능조직 위원장단 회의 중앙선대위 제1차회의 :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및 현판식 대표위원, 관훈토론회 참석(프레스 센터 20층) 사무총장, 공명선거를 위한 열린음악회 참석(KBS 공개홀) |
| 1996. 3. 6 | ❖ 중앙 및 수도권 선대위 현판식 중앙선대위 1차회의 |
| 1996. 3. 7 | ❖ 국회의원선거 100대 공약 발표 |
| 1996. 3. 8 | ❖ 여의도연구소 포럼(63빌딩 국제회의장) |
| 1996. 3. 15 | ❖ 서울시지부 후원의 밤 |
| 1996. 3. 18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본부회의 대표위원 교총주관 교육정책토론회 참석(한국교총 대강당) 중앙 및 수도권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
| 1996. 3. 20 | ❖ 중앙선대위 제2차회의 |
| 1996. 3. 26 | ❖ 전국구후보자 발표 공명선거실천다짐 서명식 |
| 1996. 3. 27 | ❖ 전국구후보자 임명장 수여식 정책공약위원회 대책회의 |

1996. 3. 28

❖ PC통신내 『신한국당』방 개설 · 운영
경실련주최 4당 공약평가토론회

1996. 3. 30

❖ 환경 NGO총회(연구위원 참석, NGO본부)

1996. 4. 7

❖ 중앙선대위 제3차회의

1996. 4. 23

❖ 재정경제 당 · 정회의

1996. 5. 3

❖ 당무회의

1996. 5. 6

❖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1996. 5. 7

❖ 신한국당 제1차 전국위원회(이홍구 신임대표위원 선출)

1996. 5. 9

❖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회의

1996. 5. 10

❖ 주요당직자 취임식, 전문위원, 심의위원 전체회의

1996. 5. 15

❖ 중앙상무위 주요임원 연석회의

1996. 5. 17

❖ '신한국당 당헌 · 당규' 배포

1996. 5. 20

❖ 확대당직자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초선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

1996. 5. 27

❖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확대당직자회의

1996. 5. 28

❖ 의원세미나

1996. 5. 29

❖ 대표위원 월드컵 유치 활동차 출국(스위스 취리히)

1996. 5. 31

❖ 민생생활정치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1996. 6. 1

❖ 의원세미나

1996. 6. 3

❖ 확대당직자회의

일본 신진당 대표단 대표위원 예방

1996. 6. 4

❖ 녹색환경의 나라건설 위한 정책간담회

대표위원, 영 엘리자베스2세 생일기념 행사 참가(영국대사관)

1996. 6. 5

❖ 의원총회

1996. 6. 7

❖ 의원총회

1996. 6. 10

❖ 의원총회, 영세 · 소규모기업 지원 정책개발회의

확대당직자회의

1996. 6. 12

❖ 의원총회

1996. 6. 13

❖ 국방 당 · 정회의

1996. 6. 14

❖ 사무처 당직자(6명) 미 존스 홉킨스대 SAIS 하계연수

1996. 6. 17

❖ 확대당직자회의

1996. 6. 18

❖ 의원총회

1996. 6. 20

❖ '97예산안 심의 당 · 정회의

1996. 6. 24

❖ 확대당직자회의, 의원총회

'97예산안 심의 당 · 정회의

1996. 6. 25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당 · 정회의

1996. 6. 26

❖ 지방자치 1년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방문

| | |
|-------------------|---|
| 1996. 6. 27 | ❖ 교육 당 · 정회의 |
| 1996. 6. 28 | ❖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
| 1996. 7. 1 | ❖ 의원총회,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7. 2 | ❖ 기획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환경 당 · 정회의 |
| 1996. 7. 4 | ❖ 의원총회 |
| 1996. 7. 8 | ❖ 의원총회 |
| 1996. 7. 9 | ❖ 신임 상임고문(13명) 및 지명직 당무위원(24명) 임명장 수여식 |
| 1996. 7. 11 | ❖ 보훈 당 · 정회의 |
| 1996. 7. 12 | ❖ 민생치안 및 학원폭력대책 소위원회 |
| 1996. 7. 13 | ❖ 시 · 도운영위원회 개최, 시 · 도위원장 선출 |
| 1996. 7. 15 | ❖ 의원총회, 제180회 임시국회 의정활동 결과 중간보고 일본 시민당 대표단 대표위원 예방 |
| 1996. 7. 16 | ❖ 제1차 신한국당 여성광장 개최 |
| 1996. 7. 19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 초청 간담회 |
| 1996. 7. 22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7. 24 | ❖ 당무회의, “신한국당 청년연합” 발족 |
| 1996. 7. 26 | ❖ 대중교통육성 지원방안 공청회 |
| 1996. 7. 29 | ❖ 확대당직자회의 당 제도개선특위 제1차 워크숍 개최 |
| 1996. 8. 10~17 | ❖ 미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참관단) |
| 1996. 8. 14 | ❖ 당무회의 |
| 1996. 8. 23~31 | ❖ 미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 (당대표) |
| 1996. 8. 27 | ❖ 중국 전인대 대표단 대표위원 예방 지방의회 여성의원 세미나 |
| 1996. 8. 29 | ❖ 당무회의 |
| 1996. 9. 2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9. 7 | ❖ 의원세미나 개최 |
| 1996. 9. 10 | ❖ 당무회의 |
| 1996. 9. 16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9. 18 | ❖ 당무회의 |
| 1996. 9. 23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10. 10 | ❖ 『'96재해대책기금 마련 한마음 대음악회 서울공연』 |
| 1996. 10. 16~20 | ❖ 일본 국회의원선거 참관 |
| 1996. 10. 21 | ❖ 의원총회 |
| 1996. 10. 23 | ❖ 당무회의 |
| 1996. 10. 27~11.8 | ❖ 미 대통령선거 참관 |
| 1996. 10. 28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6. 10. 29 | ❖ 가정폭력방지법 관련 공청회 |
| 1996. 10. 31 | ❖ 당무회의, 소규모기업 지원 관련 고위당정회의 |

1996. 11. 4
 1996. 11. 5
 1996. 11. 6
 1996. 11. 13
 1996. 11. 18
 1996. 11. 20

 1996. 11. 25
 1996. 11. 26
 1996. 11. 28
 1996. 12. 2
 1996. 12. 4
 1996. 12. 9
 1996. 12. 11
 1996. 12. 16
 1996. 12. 18
 1996. 12. 19

 1996. 12. 20
 1996. 12. 23
 1996. 12. 24
 1996. 12. 30
 1996. 12. 31

- ❖ 확대당직자회의
- ❖ 국회 제도개선특위, 선거법 관련 공청회
- ❖ 당무회의
- ❖ 미 대통령선거 참관보고회 개최
- ❖ 당 소개 영문책자 발간
- ❖ 총재 베트남·말레이시아 국민방문 및 필리핀 APEC 정상회의 참석(~ 28)
 의원총회
- ❖ 확대당직자회의
- ❖ 의원총회
- ❖ 당무회의
- ❖ 의원총회
- ❖ 당무회의
- ❖ 내무 당·정회의, 확대당직자회의
- ❖ 의원총회, 당무회의
- ❖ 확대당직자회의
- ❖ 의원총회
- ❖ 당무회의, 노동관계법 개정 설명회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 개최
- ❖ 중앙당 후원회 행사
- ❖ 확대당직자회의
- ❖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회
- ❖ 확대당직자회의
- ❖ 의원총회

2) 새정치국민회의

연 월 일

1996. 1. 4
 1996. 1. 5

 1996. 1. 8
 1996. 1. 9
 1996. 1. 10
 1996. 1. 16

주요 활동

- ❖ 지도위원회의, 공정보도 대책위원회의
- ❖ 당무위원회의, 당무위원, 인천지역 지구당위원장 지방위원 간담회
 5·18 축소수사 관련 국무총리 항의 방문
- ❖ 확대간부회의, 경기도의회의원 신년간담회
- ❖ 특위위원장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 ❖ 지도위원회의,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서거 조문
- ❖ 특위위원장회의, 헝가리대사 예방, 선거기획단 개소식

| | |
|-------------|--|
| 1996. 1. 17 | ❖ 지도위원회의 |
| 1996. 1. 19 | ❖ 당무위원회의 |
| 1996. 1. 20 | ❖ 부산지역 지구당 당직자 간담회(총재, 지도부) |
| 1996. 1. 22 | ❖ 간부회의, 서울시지부 개소식, 김대중 총재 초청 EU대사 오찬간담회 |
| 1996. 1. 23 | ❖ 특위위원장회의 |
| 1996. 1. 24 | ❖ 지도위원회의, 외신기자 간담회 |
| 1996. 1. 25 | ❖ 일본지역기자 간담회 |
| 1996. 1. 26 | ❖ 지방의원 전진대회 |
| 1996. 1. 27 | ❖ 간부회의 |
| 1996. 1. 30 | ❖ 특위위원장회의 |
| 1996. 1. 31 | ❖ 지도위원회의 |
| 1996. 2. 1 | ❖ 지구당위원장 세미나 |
| 1996. 2. 2 | ❖ TV공정보도를 위한 국민공청회 |
| 1996. 2. 3 | ❖ 간부회의 |
| 1996. 2. 7 | ❖ 지도위원 · 간부 합동회의 |
| 1996. 2. 9 | ❖ 김대중 총재 서울대 정치학과 초청토론회 참석 |
| 1996. 2. 10 | ❖ 김대중 총재 삼주회 세미나 강연 |
| 1996. 2. 12 | ❖ 지도위원 · 간부 합동회의, 김대중 총재 연두기자회견 김대중 총재 독일대사 예방 |
| 1996. 2. 13 | ❖ 특위위원장 · 특보회의 연석회의 |
| 1996. 2. 14 | ❖ 지도위원회의, 그린캠프21 「살립시다」 캠페인 |
| 1996. 2. 15 | ❖ 직업군인의 전역후 생활안정대책 대토론회 참석 |
| 1996. 2. 16 | ❖ 부정선거고발센터(종합민원실) 현판식, 아당탄압 및 부정선거고발대책회의 |
| 1996. 2. 21 | ❖ 지도위원 · 간부 합동회의 |
| 1996. 2. 22 | ❖ 당무위원회의, 대구 5개지역 합동창당대회 지구당 당직자 간담회 |
| 1996. 2. 23 | ❖ 지도위원회의 |
| 1996. 2. 24 | ❖ 시 · 도지부 및 지구당 조직부장 연수 강연 |
| 1996. 2. 26 | ❖ 지도위원회의 |
| 1996. 2. 27 | ❖ 13개 농어민단체 대표 면담 |
| 1996. 2. 28 | ❖ 경기도지부 결성대회 및 국회의원선거 필승전진대회 김대중 총재 YTN 개국 제1주년 기념식 참석 |
| 1996. 2. 29 | ❖ 지도위원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00대 공약발표(1. 경제) |
| 1996. 3. 1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00대 공약발표(2. 정치분야) |
| 1996. 3. 2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00대 공약발표(3. 사회 · 문화, 교육, 여성, 청년분야) 포럼 2030 발대식 |
| 1996. 3. 5 | ❖ 그린캠프21 캠페인 “환경을 살립시다” |
| 1996. 3. 6 | ❖ 중앙당 후원회, 4당 대표초청 관훈클럽 토론회 김대중 총재 참석 |
| 1996. 3. 7 | ❖ 선거대책회의, 국회의원선거 필승전진대회 |
| 1996. 3. 8 |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

1996. 3. 9

1996. 3. 11

1996. 3. 12

1996. 3. 13

1996. 3. 14

1996. 3. 15

1996. 3. 16

1996. 3. 18

1996. 3. 19

1996. 3. 20

1996. 3. 21

1996. 3. 22

1996. 3. 23

1996. 3. 24

1996. 3. 25

1996. 3. 31

1996. 4. 12

1996. 4. 16

1996. 4. 18

1996. 4. 19

1996. 4. 20

1996. 4. 21

1996. 4. 22

1996. 4. 25

1996. 4. 26

1996. 5. 1

1996. 5. 4

❖ 선대위 운영위 소위원회의, 시·도지부 지구당 청년특위·청년부장 연수

❖ 선거대책위원회의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 선거대책위원회의, 선대위 현판식, 교육정책토론회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시·도지부 여성부장 및 전국 지구당 연수부장 연수(특강)

비상중앙위원회의

❖ 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및 4.11 필승전진대회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인천지역 시국강연회(서구, 남구갑·을, 계양·강화, 부평구을)

새정치여성대회 “96 이번에 여성이 바뀐다”

수도권지역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선거대책회의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 선거대책위원회의, 통일논문 공개모집 시상식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정희경 선대위위원장 그린캠프21, 신세대문화와의 만남

❖ 선대위 운영위원회의, 그린캠프21 - 근소세인하 서명운동 발대식

❖ 그린캠프21 -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를 살립니다' 캠페인

❖ 선거대책위원회의, 4·11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자회견,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 개소식, 유세방송버스 시승식 및 현수막 부착행사

❖ 선거대책위원회의, 정희경 의장 기자회견, 헌정회 초청 토론회(정대철)

전북도지부 결성대회

❖ 선거대책위원회의

❖ 지도위원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대회(제1차 당선자 총회)

❖ 청와대 영수회담(단독회담), 기자회견(영수회담 결과)

❖ SBS·국민일보 공동주최 월드컵 유치기원 콘서트 리셉션 참석

❖ 대전·충남북위원장 및 단체장, 광역·기초회의의원들과 간담회, 광주·

전남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회의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 전북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회의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 지도위원회의

❖ 당선자 총회, 원내총무 자유경선

❖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인천 11개지역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각계 대표들과 간담회

❖ 지도위원회의, 김대중 총재 한국노총 주최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김대중 총재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행사 참석

❖ 총재 특별보좌역회의,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회담

| | |
|-------------|--|
| 1996. 5. 6 | ❖ 간부회의 |
| 1996. 5. 7 | ❖ 장애인특수학교 헤림원 방문(총재, 당지도부), 당무위원회의 |
| 1996. 5. 8 | ❖ 지도위원회의 |
| 1996. 5. 10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5. 11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1996. 5. 13 | ❖ 간부회의 |
| 1996. 5. 15 | ❖ 지도위원회의, 당선자회의 |
| 1996. 5. 16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1996. 5. 17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5. 20 | ❖ 간부회의 부정선거규탄 및 정국진단을 위한 서울시 지구당 주요당직자 간담회 |
| 1996. 5. 21 | ❖ 당무위원회의 |
| 1996. 5. 22 | ❖ 지도위원회의, 서울시 지구당위원장들과 간담회, 김대중 총재 국립 경상대 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초청강연 「21세기와 한국의 선택」 |
| 1996. 5. 23 | ❖ 「DMZ 국민대토론회」 |
| 1996. 5. 25 | ❖ 서울 15개지역 야3당 공동특별당보 가두배포 |
| 1996. 5. 26 | ❖ 자민련 공동 부정선거규탄 장외집회 |
| 1996. 5. 27 | ❖ 확대간부회의 |
| 1996. 5. 29 | ❖ 지도위원회의 |
| 1996. 5. 30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충북도지부 결성대회 |
| 1996. 5. 31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6. 3 | ❖ 지도위원회의, 의원총회 |
| 1996. 6. 4 | ❖ 일본 신진당 의원 10인 김대중 총재 예방 |
| 1996. 6. 5 | ❖ 당무위원회의, 의원총회 |
| 1996. 6. 7 | ❖ 의원총회 |
| 1996. 6. 10 | ❖ 간부회의, 의원총회, 일본 공보문화담당 신임공사 김대중 총재 예방 주한 파키스탄 신임대사 김대중 총재 예방 |
| 1996. 6. 11 | ❖ 의원총회 |
| 1996. 6. 12 | ❖ 지도위원회의, 의원총회 |
| 1996. 6. 13 | ❖ 특위위원장회의, 의원총회,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김대중 총재 숭실대학 교 통일정책대학원 초청강연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
| 1996. 6. 14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6. 15 | ❖ FDL-AP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 세미나 참석 (총재, 지도부) |
| 1996. 6. 17 | ❖ 간부회의 |
| 1996. 6. 18 | ❖ 의원총회, 야3당 4·11 부정선거 규탄 및 백서발간 보고대회, 김대중 총재 경기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 「21세기와 한국정치의 미래」 |
| 1996. 6. 19 | ❖ 당무위원회의 |
| 1996. 6. 20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1996. 6. 21

1996. 6. 24

1996. 6. 25

1996. 6. 26

1996. 6. 27

1996. 6. 28

1996. 6. 29

1996. 6. 30

1996. 7. 1

1996. 7. 2

1996. 7. 3

1996. 7. 4

1996. 7. 5

1996. 7. 8

1996. 7. 9

1996. 7. 10

1996. 7. 11

1996. 7. 12

1996. 7. 13

1996. 7. 15

1996. 7. 16

1996. 7. 18

1996. 7. 19

1996. 7. 20

1996. 7. 22

1996. 7. 23

1996. 7. 24

1996. 7. 25

1996. 7. 26

1996. 7. 27

1996. 7. 29

1996. 7. 30

1996. 7. 31~8. 1

1996. 8. 1

1996. 8. 2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국민회의, 자민련, 당 3역 초청만찬

❖ 간부회의, 의원총회

❖ 의원총회

❖ 지도위원회의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총재, 간부)

❖ 지방자치 1주년 평가 및 결의대회

❖ 간부회의, 의원총회

❖ 의원총회, 전주시장 후보 양상렬 변호사 공천장 수여

❖ 당무위원회의, 의원총회, 합동의원총회

❖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 연석회의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간부회의, 의원총회

❖ 중소기업가와의 정책간담회(총재, 지도부)

디지털 조선일보 「코리아넷 '96」 전시회 개막식 참석(총재, 지도부)

노동특별위원회 특위위원 전체회의 및 세미나

❖ 지도위원회의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조순 서울시장, 김대중 총재 예방

가정폭력방지법(안) 공청회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자민련 김종필 총재 초청만찬 양당 지도부·간부 간담회

❖ 간부회의, 일본 사민당 의원 방한단 김대중 총재 예방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주최 당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참석
(총재, 지도부), 당무위원회의, 「무각출 노령연금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서울 원외지구당위원장과 간담회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김대중 총재 야당 원로의원과 오찬

❖ 전국 원외지구당위원장 하계연수 참석

❖ 간부회의

❖ 총재 초청간담회(당 3역, 대정부질문자, 수석부총무)

❖ 지도위원회의, 종교인협의회 대표 면담 및 간담회(총재, 간부)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쌀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간담회

❖ 의원총회, 충북도지부 간부와 간담회

❖ 간부회의, 수해지역 위문 방문

❖ 당무위원회의

❖ 총재 특보단 대화여행 합류

❖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피해지역 방문

❖ 당소속 국회예결위원과 간담회

| | |
|------------------|---|
| 1996. 8. 5 | ❖ 간부회의 |
| 1996. 8. 6 | ❖ 장애인 올림픽선수단 방문(총재, 지도부) |
| 1996. 8. 7 | ❖ 김대중 총재 「세계 우리겨레 공동체 창립식」참석 |
| 1996. 8. 14 | ❖ 동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격려 방문(총재, 지도부) |
| 1996. 8. 16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8. 19 | ❖ 전국지구당 청년부장 수련회 |
| 1996. 8. 21 | ❖ 당무위원회의, 김대중 총재 호주대사(마크 윌리엄스) 면담 |
| 1996. 8. 22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1996. 8. 23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8. 25 | ❖ 부산, 경남지역 당직자 간담회(총재, 지도부) |
| 1996. 8. 26 | ❖ 간부회의 |
| 1996. 8. 28 | ❖ 지도위원회의, 국가안전기획부 방문(총재, 지도부) |
| 1996. 8. 29 | ❖ 간부회의,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출판기념회 |
| 1996. 8. 30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한총련 시위현장 방문(총재, 국회의원) |
| 1996. 8. 31~9. 5 | ❖ 김대중 총재 호주방문 |
| 1996. 9. 2 | ❖ 간부회의 |
| 1996. 9. 4 | ❖ 당무위원회의 |
| 1996. 9. 6 | ❖ 창당 제1주년 기념식,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9. 7 | ❖ 「살레시안 아시아 총회」김대중 총재 강연 자민련 노원구청장 후보(김용재) 지원 유세(총재, 지도부) |
| 1996. 9. 10 | ❖ 간부회의, 의원총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단 회의, 제2회 국민회의 · 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 「OECD 가입유보 왜 필요한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한 · 중 · 일 불교 교류협회 서울대회」환영만찬 참석(총재, 간부) |
| 1996. 9. 11 | ❖ 지도위원회의, 강원도지역 당직자 및 지역인사 초청간담회 |
| 1996. 9. 12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1996. 9. 13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1996. 9. 14 | ❖ 인천시지부 결성대회 |
| 1996. 9. 16 | ❖ 간부회의, 경제위기 대책마련 특별기자회견 |
| 1996. 9. 17 | ❖ 간부회의 |
| 1996. 9. 18 | ❖ 당무위원회의, 이원종 정무수석 김대중 총재 예방 |
| 1996. 9. 19 | ❖ 간부회의,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여 · 야 영수회담(대통령, 3당대표, 국회의장) |
| 1996. 9. 20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이태평화재단 학술회의 「북 · 미관계와 한국의 대북정책」기조연설 경기지역 지구당위원장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총재, 지도부) 노인복지시설 방문(총재, 지도부) |
| 1996. 9. 21 | ❖ 제주도지부 결성대회 참석(총재, 간부) |
| 1996. 9. 23 | ❖ 간부회의, 한국노총 위원장단 및 산별위원장과 간담회(총재, 간부) |
| 1996. 9. 24 | ❖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김대중 총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

- 1996. 9. 25
 - 1996. 9. 30
 - 1996. 10. 1
 - 1996. 10. 4
 - 1996. 10. 5
 - 1996. 10. 6
 - 1996. 10. 7
 - 1996. 10. 9
 - 1996. 10. 10
 - 1996. 10. 11
 - 1996. 10. 12
 - 1996. 10. 13
 - 1996. 10. 14
 - 1996. 10. 16
 - 1996. 10. 17
 - 1996. 10. 21
 - 1996. 10. 23
 - 1996. 10. 25
 - 1996. 10. 26
 - 1996. 10. 28
 - 1996. 10. 31
 - 1996. 11. 1
 - 1996. 11. 2
 - 1996. 11. 4
 - 1996. 11. 6
 - 1996. 11. 7
 - 1996. 11. 8
 - 1996. 11. 9
 - 1996. 11. 11
 - 1996. 11. 12
- ❖ 간부회의
 - ❖ 중국 제47주년 국경일 기념리셉션 참석(총재, 간부)
 - ❖ 중앙당 당직자 전체회의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간부회의
독일 통일의 날 기념리셉션 참석(총재, 지도부)
 - ❖ 아태평화아카데미 제2차 합동세미나
 - ❖ 고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빈소 방문(총재, 간부), 의원총회
 - ❖ 간부회의, 여·야 영수회담(대통령, 3당대표)
경향신문 창간50주년 기념식 참석(총재, 지도부)
일본대사 초청만찬 참석
 - ❖ 간부회의, 러시아대사(쿠나제)와 조찬,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지 인터뷰
 - ❖ 김대중 총재 꽃동네 설립 제20주년 「사랑의 연수원 준공식」 축사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안기부장 대북관련 브리핑(총재, 지도부)
노르웨이 의회 방한 대표단 김대중 총재 예방
 - ❖ 재일대한부인회 중앙본부 임원 김대중 총재 예방
 - ❖ 김대중 총재 인민외교학회 초청 중국방문(18일까지)
 - ❖ 간부회의
 - ❖ 간부회의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간부회의, 김대중 총재 대구지역 교수초청 강연회 「21세기와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스페인 카를로스국왕 부처방한 축하 만찬참석(총재, 지도부), 경찰병원 위로방문
 - ❖ 지도위원회의, 경남도지부 결성대회 참석(총재, 지도부)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대한적십자사 창립91주년 기념식 참석(총재, 간부)
외신기자클럽 오찬간담회(총재, 간부)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간부회의
 - ❖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 정책토론회
 -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 ❖ 김대중 총재,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주최 마닐라 국제회의 참석
 - ❖ 간부회의
 - ❖ 당무위원회의, 김대중 총재 초청 EU대사와 간담회
 - ❖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단체장과 간담회(총재, 간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윌리엄 타일러)과 면담
 - ❖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총재, 지도부)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간부회의, 노동법 개정관련 간담회
 - ❖ 의원총회,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개최 제3회 정책토론회 「국민연금운영 개선 왜 필요한가」, 중국 사회과학원장 여신 등 김대중 총재 면담

| | |
|--------------|--|
| 1996. 11.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위원 · 제21차 국회의원 연석회의 국방 안보관련 공청회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과 대책」참석 서울 원외지구당위원장과 간담회(총재, 지도부) |
| 1996. 11.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총재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 |
| 1996. 11.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창준 미 연방하원의원 김대중 총재 면담, 총재 초청 국회의원 · 자민련 제도개선 특위위원과 간담회(양당총재, 지도부) |
| 1996. 11.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모니터요원과 대화 |
| 1996. 11.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전국 지구당위원장 및 지방의회의원 정책협의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김대중 총재 러시아대사(게오르기 F. 쿠나제)와 간담회 |
| 1996. 11.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총재 일본 미쓰이연구회 초청간담회 |
| 1996. 11.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1996. 11.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 자민련 제4회 공동 정책토론회 「1996년 추곡수매가 · 추곡수매량 무엇이 문제인가?」 멕시코대사(가르자) 김대중 총재 예방 |
| 1996. 11.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위원회의 |
| 1996. 11.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김대중 총재 제7회 간호정책세미나 강연 「큰 정치인의 정치철학」 |
| 1996. 11.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총회, 김대중 총재 제12회 아태평화재단 국제학술회의 강연 「한반도 주변4강의 대북한 정책」 |
| 1996. 11.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위원회의, 직장인모니터 1차모임 |
| 1996. 11.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대통령(세디요) 국회방문 및 여 · 야 지도자 면담(총재참석) |
| 1996. 11.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간담회(총재, 간부) |
| 1996. 1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의원총회 |
| 1996. 12.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위원회의, 노동법 관련 긴급대책회의 |
| 1996. 12.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 자민련 공동 정책토론회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
| 1996. 12.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위원회, 총재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식 |
| 1996. 12.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위원회의, 전농련(전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 간부와 간담회(총재, 간부) |
| 1996. 12.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대구시지부 결성대회 참석(총재, 간부) |
| 1996. 12.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총재, 지도부) |
| 1996. 12.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한 · 일 의원연맹 회장단 김대중 총재 면담 |
| 1996. 12.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의원총회, 경기도지부 개편대회 참석(총재, 지도부) |
| 1996. 12.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위원회의, 의원총회 |
| 1996. 12.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특별보좌역회의,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초청강연 |
| 1996. 12.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인 문화의 밤〉 문화예술정책토론 참석(총재, 간부) |
| 1996. 12.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대책회의 |
| 1996. 12.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의원총회(자민련 합동) |
| 1996. 12.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총회(자민련 합동), 노동법 관련 대책위 회의 |
| 1996. 12.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의원총회(자민련 합동) |

1996. 12. 27

1996. 12. 31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의원총회(자민련 합동)
지자체 파괴, 야당파괴, 국회파괴 분쇄 국민회의 · 자민련 결의대회
- ❖ 「김영삼 쿠데타 분쇄하자」국민회의 · 자민련 공동 특별당보 가두배포

3) 자유민주연합

연 월 일

1996. 1. 8

1996. 1. 10

1996. 1. 12

1996. 1. 17

1996. 1. 24

1996. 1. 29

1996. 1. 31

1996. 2. 2

1996. 2. 7

1996. 2. 8

1996. 2. 12

1996. 2. 14

1996. 2. 15

1996. 2. 21

1996. 2. 23

1996. 2. 26

1996. 2. 27

1996. 3. 2

1996. 3. 4

1996. 3. 12

1996. 3. 13

1996. 3. 14

1996. 4. 15

1996. 4. 17

1996. 4. 25

1996. 4. 26

주요 활동

- ❖ 4·11 국회의원선거 기획단 발족
- ❖ 당무회의
- ❖ 임시당무회의
- ❖ 당무회의
- ❖ 당무회의
- ❖ 자민련 청년단 전국지단장 회의, 녹색운동본부 환경보호 활동
- ❖ 당무회의, 특별 긴급세미나(5·18특별법은 왜 위헌인가?)
- ❖ 당무회의, 김현욱 의원 구속 및 야당탄압 규탄대회
- ❖ 의원내각제 관련 세미나 개최(대구 어린이회관)
정책세미나(대통령중심제 이대로 둘 것인가?)
- ❖ 당무회의
- ❖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 발간
- ❖ 시·도지부 사무처장 회의개최
- ❖ 당무회의
- ❖ 교양강좌(독일 내각책임제와 정당정치)
- ❖ 당무회의
- ❖ 당무회의
- ❖ 중앙위 제1차 회의 및 국회의원선거 출정대회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 당무회의 개최
- ❖ 중앙당 후원회 밤
- ❖ 당무회의, 시·도지부 사무처장, 지구당 사무국장 및 간부 연수
-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필승결의대회
- ❖ 4·11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대회(당선자: 박준규 외 49명)
- ❖ 당무회의, 4·11 부정선거 진상조사특별위 구성
- ❖ 당무회의
- ❖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야3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 |
|-------------------|--|
| 1996. 5. 1 | ❖ 김화남 당선자 구속 진상조사단 구성, 당무회의 |
| 1996. 5. 4 | ❖ 자민련 · 국민회의 양당총재 회담 |
| 1996. 5. 8 | ❖ 당무회의 |
| 1996. 5. 15 | ❖ 당무회의, 당기위원회 구성 |
| 1996. 5. 17 | ❖ 국회의원선거 민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1차회의 |
| 1996. 5. 21 | ❖ 국회의원선거 민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2차 회의 |
| 1996. 5. 22 | ❖ 당무회의 |
| 1996. 5. 25 | ❖ 4·11 국회의원선거 민의수호를 위한 야3당 특별당보 가두배포 |
| 1996. 5. 26 | ❖ 4·11 국회의원선거 민의수호를 위한 야3당 결의대회 |
| 1996. 5. 29 | ❖ 당무회의 |
| 1996. 5. 31 | ❖ 창당 제1주년 기념행사 |
| 1996. 6. 12 | ❖ 당무회의 |
| 1996. 6. 18 | ❖ 4·11 부정선거 규탄대회 및 야3당 백서발간 보고회 |
| 1996. 6. 19 | ❖ 당무회의 |
| 1996. 6. 26 | ❖ 당무회의 |
| 1996. 6. 27 | ❖ 6·27 제1주년 기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간담회 |
| 1996. 7. 3 | ❖ 당무회의, 당보발간 |
| 1996. 7. 8 | ❖ 총재 애틀랜타올림픽 선수단 격려방문 |
| 1996. 7. 10 | ❖ 당무회의, 정책자문위, 농어촌대책위, 중소기업특별대책위 구성 |
| 1996. 7. 11 | ❖ 시·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
| 1996. 7. 20 | ❖ 국제제도개선특위 및 4·11 국회의원선거 공정성특위 지원을 위한 당특위 구성 |
| 1996. 7. 24 | ❖ 당무회의 |
| 1996. 7. 28 | ❖ 수해지역 시찰 및 대책수립 |
| 1996. 7. 31 | ❖ 당무회의 |
| 1996. 8. 21 | ❖ 당무회의, 노원구청장 재선거 후보자추천 |
| 1996. 8. 26~9. 10 | ❖ 제1차 지구당 실태조사 |
| 1996. 8. 28 | ❖ 당무회의 |
| 1996. 9. 4 | ❖ 당무회의 |
| 1996. 9. 11~9. 24 | ❖ 제2차 지구당 실태조사 |
| 1996. 9. 13 | ❖ 당무회의 |
| 1996. 9. 14 | ❖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
| 1996. 9. 18 | ❖ 당무회의, 정치관계법안, 선거관련법안, 방송관계법안 심의 |
| 1996. 9. 19 | ❖ 총재, 여·야 영수회담 참석 |
| 1996. 9. 23 | ❖ 당무회의 |
| 1996. 10. 24 | ❖ 총재 국회대표 연설 |
| 1996. 11. 1 | ❖ 조직강화특위 구성 |
| 1996. 11. 6 | ❖ 당무회의, 자연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외 3건 의결 |
| 1996. 11. 13 | ❖ 가정폭력방지법안 공청회, 당무회의 |
| 1996. 11. 27 | ❖ 당무회의, 통합선거법 개정안 심의 |

1996. 12. 4
 1996. 12. 11
 1996. 12. 18
 1996. 12. 20
 1996. 12. 21
 1996. 12. 23

- ❖ 총재 방송클럽 기자토론회 참석
- ❖ 당무회의, 사무처 규정 개정
- ❖ 당무회의
- ❖ 청년위원회 창립대회, 임시당무회의
- ❖ 고문·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 총재, 전방부대 위문 및 불우시설 위문

4) 통합민주당 (97. 11. 24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1996. 1. 3
 1996. 1. 4
 1996. 1. 9
 1996. 1. 10
 1996. 1. 12
 1996. 1. 13
 1996. 1. 17
 1996. 1. 18
 1996. 1. 20
 1996. 1. 24
 1996. 1. 26
 1996. 2. 1
 1996. 2. 4
 1996. 2. 7
 1996. 2. 10
 1996. 2. 12
 1996. 2. 14
 1996. 2. 15
 1996. 2. 16
 1996. 2. 17
 1996. 2. 23
 1996. 2. 24
 1996. 2. 28
 1996. 3. 1

주 요 활 동

- ❖ 조직강화특위 구성
- ❖ 광명시장 화재현장 방문
- ❖ 조강특위 회의
- ❖ 의원총회, 당무위원 합동회의, 당무회의
- ❖ 간부회의(민주당 국회의원선거 기본전략 및 전술, 정책에 관한 보고서)
- ❖ 시민사회 지도자 초청 시국간담회
- ❖ 당무회의
- ❖ 희망본부 민주당 발대식
- ❖ 대전, 충남, 충북 국회의원선거대책 설명회
- ❖ 당무회의
- ❖ 당8역 및 국회의원선거기획단 회의, 대표 연두기자회견
- ❖ 긴급 최고위원회의
- ❖ 당직자 연수(등반대회)
- ❖ 당무회의, 광주 국회의원선거대책 설명회
- ❖ 명동, 종로 물결 시국강연회
- ❖ 당8역 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 ❖ 당무회의
- ❖ 지도부와 경기도의회의원 간담회
- ❖ 중·하위 당직자 인선
- ❖ 희망물결본부 발대식
- ❖ 당무회의
- ❖ 희망물결 시국강연회
- ❖ 당무회의
- ❖ 부정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 |
|--------------|----------------------------------|
| 1996. 3. 2 | ❖ 긴급 선대위 회의 |
| 1996. 3. 8 | ❖ 전국구 승계의원 환영회 및 의원총회 |
| 1996. 3. 11 | ❖ 선대위 회의 |
| 1996. 3. 15 | ❖ 선대위 회의 |
| 1996. 3. 21 | ❖ MBC 노조파업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MBC 방문 |
| 1996. 3. 28 | ❖ 선대위 회의 |
| 1996. 3. 30 | ❖ 고 노수석군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 1996. 4. 1 | ❖ 선대위 회의 |
| 1996. 4. 8 | ❖ 젊은세대 투표참여 캠페인 |
| 1996. 4. 15 | ❖ 4·11 국회의원선거 폭력, 금권선거 진상조사위 구성 |
| 1996. 4. 17 | ❖ 국회의원선거당선자 대회 |
| 1996. 4. 19 | ❖ 당무회의 |
| 1996. 5. 4 | ❖ 민주당 파괴공작 규탄 농성 |
| 1996. 5. 6 | ❖ 야3당 『4·11 부정선거 진상조사위』회의 |
| 1996. 5. 8 | ❖ 민주당 파괴공작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 1996. 5. 21 |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
| 1996. 6. 4 | ❖ 제6차 임시전당대회 |
| 1996. 6. 14 | ❖ 부총재 및 당8역 선임 |
| 1996. 6. 18 | ❖ 야3당 4·11 부정선거규탄 및 부정선거백서 발간보고회 |
| 1996. 6. 19 | ❖ 당무회의 |
| 1996. 6. 26 | ❖ 당무회의, 중앙당 당직자 인선 |
| 1996. 7. 3 | ❖ 당무회의 |
| 1996. 7. 10 | ❖ 당무회의 |
| 1996. 7. 18 | ❖ 당무회의 |
| 1996. 7. 24 | ❖ 당무회의 |
| 1996. 7. 26 | ❖ 총재 기자회견 |
| 1996. 7. 30 | ❖ 경기도 수해지역 위로 방문 |
| 1996. 8. 2 | ❖ 일본총리 망언규탄 항의 |
| 1996. 8. 14 | ❖ 당무회의 |
| 1996. 8. 19 | ❖ 긴급 총재단회의 및 소속의원 연석회의 |
| 1996. 8. 21 | ❖ 시·도지부 및 지구당 조직 감사 |
| 1996. 9. 5 | ❖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수 |
| 1996. 9. 11 | ❖ 당무회의 |
| 1996. 9. 12 | ❖ 총재 『21세기 한국 정치지도자 포럼』참석 |
| 1996. 9. 18 | ❖ 당무회의 |
| 1996. 9. 27 | ❖ 총재 대만에서 열린 아주자유민주 연맹총회 참석 |
| 1996. 10. 9 | ❖ 당무회의 |
| 1996. 10. 16 | ❖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 |
| 1996. 10. 23 | ❖ 당무회의 |

1996. 10. 31
 1996. 11. 7
 1996. 11. 11

 1996. 11. 15
 1996. 11. 27
 1996. 12. 4
 1996. 12. 6

 1996. 12. 9
 1996. 12. 18
 1996. 12. 26
 1996. 12. 28

- ❖ 특별위원장단 및 시·도의원 연석회의
- ❖ 당무회의
- ❖ 총재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출국
- ❖ 확대 간부당직자 회의
- ❖ 당무회의
- ❖ 당무회의
-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 자유민주연맹 집행위원회에 민주당 대표단 참석
- ❖ 국회제도개선평의 허와 실 대토론회, 민주당 송년회
- ❖ 당무회의
- ❖ 긴급 총재단 회의
- ❖ 4대악법(안기부법, 노동법,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날치기 개악 규탄대회

5) 기독교성민당 (96. 3. 29 정명당에서 기독교성민당으로 당명 변경)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96. 2. 14
 1996. 3. 20

- ❖ 대표자 변경(권한대행 우찬무 → 진복기)
- ❖ 당명변경(정명당 → 기독교성민당), 당헌 변경

6) 무정파전국연합 (96. 2. 5 신민당(95. 6 등록)에서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 변경)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96. 1. 31
 1996. 2. 2
 1996. 2. 6
 1996. 3. 12
 1996. 3. 25

- ❖ 제6차 당무회의 -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 변경 결의
- ❖ 제7차 당무회의 - "무정파전국연합"으로 당명 개정 결의
- ❖ 제8차 당무회의 - 무정파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으로 당명 변경 추진
- ❖ 제9차 당무회의 -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공천 않기로 결정
- ❖ 대표자 변경(임춘원 → 권한대행 고병현)

7) 통일한국당 (96. 3. 29 기독교민당에서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 연 월 일 | 주 요 활 동 |
|--------------|--|
| 1996. 1.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당무회의 - 대표자 변경(노해택 → 신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이전 : 종로구 송인동에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으로 이전 |
| 1996. 2.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당무회의 - 총재사임에 대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신정일 → 노해택) - 부총재 사임(정판기 부총재) |
| 1996. 3.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 재선출 - 대표자 변경(노해택 → 신정일) |
| 1996. 3.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당무회의 - 후보자 추천규정 제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
| 1996. 3.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당무회의 - 후보자 공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주당과 연합공천 문제 |
| 1996. 4.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당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 출마자 선거결과 마무리에 대한 대책 - 기타 당의 진로문제 등 |
| 1996. 5.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당무회의 - 통일안보에 대한 세미나개최에 따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 30년 기적편 사진전에 따른 논의 |
| 1996. 6.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당무회의 -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 1996. 7.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당무회의 - 지구당 정비문제(개편대회) |
| 1996. 8.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당무회의 - 김정구를 창당대회에 따른 준비 |
| 1996. 8.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창당대회 - 부산광역시 김정구를지구당 창당(위원장: 박호열 선임) |
| 1996. 9.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당무회의 - 지구당 정비의견 |
| 1996. 10.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당무회의 - 개천절 행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 정비문제 |
| 1996. 11.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당무회의 - 전국지구당 사무지도 검열에 대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개편(대전서구갑) 문제 |
| 1996. 1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당무회의 - 지구당 정비에 따른 업무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지구당 현황 공개 - '96년도 회계, 정기보고에 대한 사전교육 |
| 1996. 12.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창당대회 - 서울 노원구갑지구당 창당(위원장: 정재복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사하구를지구당 창당(위원장: 정태관 선임) |
| 1996.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창당대회 - 평택시갑지구당 창당(위원장: 최남순 선임) 제14차 당무회의 - 당무회의 겸 중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을 돌아보며(총재의 지시사항 및 회고에 대한 인사말)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마. 1997년도

1) 한나라당 (97. 11. 24 신한국당 · 민주당이 신설합당)

연 월 일

◀구 신한국당▶

1997. 1. 3

1997. 1. 6

1997. 1. 8

1997. 1. 9

1997. 1. 10

1997. 1. 13

1997. 1. 14

1997. 1. 15

1997. 1. 16

1997. 1. 17

1997. 1. 20

1997. 1. 21

1997. 1. 22

1997. 1. 23

1997. 1. 24

1997. 1. 27

1997. 1. 29

1997. 1. 31

1997. 2. 3

1997. 2. 5

1997. 2. 13

1997. 2. 14

주요 활동

- ❖ 사무식
- ❖ 정책위 전체회의
- ❖ 제19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외신기자 초청회견(프레스센터 18층)
- ❖ 제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상임고문회의, 근로자고용 및 생활안정대책 특위회의
- ❖ 확대당직자회의, 국회의원 ·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대표위원, 장 크레티앙 캐나다총리 접견, 시 · 도 사무처장 회의
- ❖ 대표위원, 아일랜드 하원의장(선 트레이시) 접견, 대표위원, 일본 민주당 의원단 접견, 중앙사무위 주요임원회의, 직능조직 임원회의
- ❖ 제20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직능조직위원 초청 노동법 관련 설명회
- ❖ 주요당직자 연두기자회견, 직능단체 임원진 노동법 설명회
대변인, 독일 데어 벨프 인터뷰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확대당직자회의, 정책위 의장, 주한 싱가포르대사 접견
- ❖ 상임고문단 조찬
대표위원 프랑스로대사와의 면담, 청년조직 노동관계법 설명회
- ❖ 대표위원, 신문포럼 조찬 연설, 제21차 당무회의, 원내상임고문회의
의원총회, 국제통일분과 노동법 설명회
- ❖ 대표위원, 지방기자 간담회, 대표위원, 대전 · 충남 상공인과의 간담회
- ❖ 대표위원, 대전 · 충남 지구당위원장과 조찬, 실무당직자 회의
여성분과 노동법 설명회, 보건복지분과 노동법 설명회
- ❖ 확대당직자회의, 대표위원, 주한 뉴질랜드대사 접견
중앙사무위의장 APPU회의 참석차 일본방문
- ❖ 제22차 당무회의, '97 경제현안 타개를 위한 간담회
- ❖ 실무당직자회의
- ❖ 2월 월례조회, 확대당직자회의, 한보사태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 ❖ 제3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한보사태 조사위」제1소위원회 회의, 「한보사태 조사위」제2차 전체회의
- ❖ 주요당직자, 한국노총위원장 및 산별위원장 면담
한보사태 조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관련 당 · 정회의
- ❖ 실무당직자 회의, 재경위 당 · 정회의, 환경정책세미나

| | |
|-------------|---|
| 1997. 2. 15 | ❖ 통일외무 관련 의원간담회 |
| 1997. 2. 17 | ❖ 의원총회, 대표위원, 국무총리 면담 |
| 1997. 2. 19 | ❖ 대표위원, 국회 대표연설 |
| 1997. 2. 21 | ❖ 여성계 및 환경·복지단체 대표와의 신년회 겸 정책간담회 대표위원, 등소평 방문(중국대사관), 재정경제 당·정회의 당 정보화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
| 1997. 2. 24 | ❖ 여의도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리셉션 |
| 1997. 2. 25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1997. 2. 26 | ❖ 지방당 홍보위원회 제2차 중앙연수 입소식 |
| 1997. 2. 28 | ❖ 대표위원, 주한 몽골대사 면담 |
| 1997. 3. 5 | ❖ 제25차 당무회의, 환경 당·정회의 |
| 1997. 3. 6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정책위의장,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
| 1997. 3. 7 | ❖ 전국위원회 제1차 준비회의 |
| 1997. 3. 8 | ❖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제2차 준비회의 |
| 1997. 3. 11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대표위원, 기자간담회 |
| 1997. 3. 17 | ❖ 제25차 의원총회 |
| 1997. 3. 18 | ❖ 총무회담 |
| 1997. 3. 19 | ❖ 대표위원, 카네기클럽 초청강연회 |
| 1997. 3. 21 | ❖ 대표위원, 일본 여3당 정책책임자 접견, 제1차 고위 당·정책 조정회의 |
| 1997. 3. 24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7. 3. 26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1997. 3. 27 | ❖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 입소 |
| 1997. 3. 28 | ❖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 퇴소 |
| 1997. 3. 31 | ❖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당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
| 1997. 4. 1 | ❖ 4월 월례조회, 대표위원, 이디오피아 집권당 대표단 접견 주요당직자, 한국노총 방문, 여성위원회회의, 신한청 중앙운영회의 |
| 1997. 4. 2 | ❖ 제28차 당무회의, 경제 당·정회의, 국책자문위 농림분과회의 |
| 1997. 4. 3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중간당직자회의 |
| 1997. 4. 5 | ❖ 제52회 식목일행사(김포 월곶면 용강리) |
| 1997. 4. 7 | ❖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당직자, 전경련 방문 |
| 1997. 4. 8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1997. 4. 9 | ❖ 제29차 당무회의 |
| 1997. 4. 10 | ❖ 주요당직자, 제97차 IPU총회 개회식 참석, 경제대책회의 |
| 1997. 4. 14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7. 4. 15 | ❖ 대전·충남 시·도지부 당직자 간담회, 대전·충남 지구당위원장 간담회 서울시 지구당위원장 회의 |
| 1997. 4. 16 | ❖ 제30차 당무회의, 정책위의장 금융개혁위원과의 간담회 |
| 1997. 4. 17 | ❖ 국회의원 간담회, 주요언론사 경제부장 오찬간담회 |
| 1997. 4. 18 | ❖ 상임고문회의, 경부고속철도 관련 건·교 당·정회의 |

1997. 4. 19
 1997. 4. 21
 1997. 4. 22
 1997. 4. 23

 1997. 4. 24
 1997. 4. 25
 1997. 4. 28

 1997. 4. 29

 1997. 4. 30
 1997. 5. 1

 1997. 5. 2

 1997. 5. 6
 1997. 5. 7
 1997. 5. 8

 1997. 5. 9

 1997. 5. 12

 1997. 5. 13

 1997. 5. 15

 1997. 5. 16
 1997. 5. 19
 1997. 5. 20

 1997. 5. 21
 1997. 5. 23
 1997. 5. 24
 1997. 5. 26
 1997. 5. 27

- ❖ 4·19 국립묘지 참배
- ❖ 확대당직자회의, 대표위원, 당소속 초·재선 국회의원과 간담회
- ❖ 대표위원, 사무처 당직자와 대화
- ❖ 제31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사무처 당직자와 대화
 정책위의장, 러시아 벨라루스 공화국 루카셴카 대통령 접견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중간당직자 회의
- ❖ 시·도 여성부장회의, 정책위의장, 버스·택시업계와의 간담회
- ❖ 「경제대책회의」 제3차 회의, 중앙상무위(통상산업) 분과총회
 중앙상무위(교육, 정보과학) 분과총회,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 제1차 회의
- ❖ 중앙상무위 여성분과 총회, 금융실명제 보완 공청회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 기획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 ❖ 제32차 당무회의, 수입개방 대응 한우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 5월 월례조회,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제3차 신한국당「여성광장」(지하대강당), 정책위 워크숍
 주요당직자 중앙일보·MBC 공동주관 「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 참석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제대책회의」 제4차 회의
 중앙상무위(문화체육) 분과총회
- ❖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 제33차 당무회의,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재경 당·정회의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중간 당직자회의, 농수산물 유통개혁 정책토론회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 정책위의장, 정보통신분야
 단체와의 간담회,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3차 회의
- ❖ 확대당직자회의, 대표위원 주한 네덜란드대사 접견, 경제대책회의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4차 회의
- ❖ '97 제2차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국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 분과회의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5차 회의, 기획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 ❖ 대표위원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접견, 중간당직자회의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6차 회의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7차 회의
- ❖ 확대당직자회의, 대표위원 주한 남아공대사 접견, 경선후보 관계자회의
- ❖ 「당헌·당규 개정위원회」 제8차 회의, 「21세기 국토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 회의
- ❖ 제34차 당무회의, 제6차 경제대책회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위 제8차 회의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대표위원,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과 조찬
- ❖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위 제9차 회의
- ❖ 국책자문위원회 농림분과회의

| | |
|-------------|---|
| 1997. 5. 28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1997. 5. 29 | ❖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중앙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당소속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회의, 시·도 사무처장 회의 |
| 1997. 5. 30 | ❖ 제35차 당무회의 |
| 1997. 5. 31 | ❖ 경선 예비후보자 만찬 |
| 1997. 6. 2 | ❖ 6월 월례조회,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위 회의, 내무 당·정회의 |
| 1997. 6. 3 | ❖ 대표위원, 주한 영국대사 접견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제7차 경제대책회의 |
| 1997. 6. 4 | ❖ 제36차 당무회의, 환경 당·정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 1997. 6. 5 | ❖ 정책위의장,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간담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
| 1997. 6. 7 | ❖ 대표위원, 한국일보·SBS 공동주최 대통령선거주자 시민포럼 참석 |
| 1997. 6. 9 | ❖ 확대당직자회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
| 1997. 6. 10 |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
| 1997. 6. 11 | ❖ 제37차 당무회의,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농협중앙회강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
| 1997. 6. 12 | ❖ 제2차 안보정책 당·정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 중앙위원회 부의장·자문위원 제1차 회의 |
| 1997. 6. 13 | ❖ 경제종합대책위원회 회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
| 1997. 6. 16 | ❖ 확대당직자회의, 정책·정책소위 제1차 회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위 제10차 회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
| 1997. 6. 17 | ❖ 외무부·해양수산부 당·정간담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 제9차 경제대책회의 |
| 1997. 6. 18 | ❖ 제38차 당무회의, 전국 시·군·구의원 세미나(올림픽 역도경기장) 방위산업 정책간담회 |
| 1997. 6. 19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남녀공용평등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
| 1997. 6. 20 | ❖ 대표위원 기자간담회, 정치개혁특위 제2차 회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 |
| 1997. 6. 21 | ❖ 시·도 사무처장 및 중앙당 국·실장 연석회의 |
| 1997. 6. 22 | ❖ 사무총장·기조위원장, 시·도 사무처장 및 중앙당 국·실장 연석회의 |
| 1997. 6. 23 | ❖ 농어촌발전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개혁특위 제3차 회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 |
| 1997. 6. 24 |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
| 1997. 6. 25 | ❖ 제39차 당무회의, '98예산안 심의 당·정 회의 경선 후보측 대리인 및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실무위원 연석회의 |
| 1997. 6. 26 |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

1997. 6. 27
 1997. 6. 28
 1997. 6. 29
 1997. 7. 1

 1997. 7. 2

 1997. 7. 3
 1997. 7. 5

 1997. 7. 7
 1997. 7. 9
 1997. 7. 10
 1997. 7. 11
 1997. 7. 12

 1997. 7. 14
 1997. 7. 15
 1997. 7. 16
 1997. 7. 18

 1997. 7. 19

 1997. 7. 21

 1997. 7. 22
 1997. 7. 23
 1997. 7. 25
 1997. 7. 28
 1997. 7. 31
 1997. 8. 1

 1997. 8. 4
 1997. 8. 5
 1997. 8. 7
 1997. 8. 11
 1997. 8. 13
 1997. 8. 14

- ❖ 대통령선거실무기획단 회의
- ❖ 여·야 3당 총무회담,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예비후보 대리인 회의
- ❖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 ❖ 제26차 의원총회,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폭력근절 및 밀입국자 대책 당·정회의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전당대회 준비 실무회의
 경선 후보측 대리인 회의
- ❖ 7월 월례조회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경기도 합동연설회
 (수원소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 ❖ 확대당직자회의, 학원폭력 대책회의
- ❖ 정책위의장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접견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부산 합동연설회(부산 롯데호텔 회의장)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간담회(한국무역센터 무역클럽 51층)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제주 합동연설회(오리엔탈호텔 회의장)
 한일 현안문제 관련 당·정 간담회, 당 선관위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 확대당직자회의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인천시 합동연설회(서구 문예회관)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평송 청소년수련원)
- ❖ 경제대책회의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울산·경남 합동연설회(진주 문예회관)
- ❖ 제15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서울시 합동연설회(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
- ❖ 신한국당 제2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선출 축하연
- ❖ 의원총회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제4차 경제종합대책위원회 회의
- ❖ 제40차 당무회의,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당·정회의
- ❖ 당소속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 제11차 경제대책회의
- ❖ 21세기 농어촌사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대표위원, 상마(SANGMA) 인도 하원의장 접견
- ❖ 확대당직자회의
- ❖ 사교육비 대책특위 제7차 회의
- ❖ 제41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의원총회
- ❖ 전당대회회장, APPU(아시아·태평양의회연맹) 총회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 ❖ 대표위원,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
|-------------|--|
| 1997. 8. 18 | ❖ 대표위원, 극동방송 대통령선거후보 토크쇼 출연(극동방송 스튜디오) |
| 1997. 8. 19 | ❖ 대표위원, 한국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 대회 참석(남해 송정해수욕장) |
| 1997. 8. 20 | ❖ 한국농어업경영인 중앙협의회 간담회 정책위 · 예결위 합동현지 조사활동 결과보고 |
| 1997. 8. 21 | ❖ 대표위원,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 접견,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
| 1997. 8. 22 | ❖ 대표위원, 외신기자회견 |
| 1997. 8. 23 | ❖ 실무당직자회의 |
| 1997. 8. 25 | ❖ 재경 당 · 정회의, 여성위원회 회의 정책위 의장, 선관위 정당발전 토론회 참석(선관위 선거연수원 대강당 5층) |
| 1997. 8. 28 | ❖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당소속 시 · 도의원 중앙연수(천안 중앙연수원) 지방의회 현안간담회(천안 중앙연수원 대강당) |
| 1997. 8. 29 | ❖ 시 · 도의회의원 중앙연수 |
| 1997. 8. 30 | ❖ 신한청 명예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환경보호대회(여의도 고수부지 야외무대) 21세기 과제 관련 당 · 정회의 |
| 1997. 9. 1 | ❖ 확대당직자회의 |
| 1997. 9. 2 | ❖ 대표위원 「SBS 특별생방송 대통령후보와 함께」출연 (SBS 일산 탄현제작센터) |
| 1997. 9. 3 | ❖ 대표위원, LA타임즈 칼럼리스트(토마스 플레이트) 접견 |
| 1997. 9. 4 | ❖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회의 |
| 1997. 9. 5 | ❖ 중앙당 확대여성당직자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관광산업전략화 추진위원회 회의 |
| 1997. 9. 6 | ❖ 의원총회,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
| 1997. 9. 9 | ❖ 대통령선거일자 카운트다운 일자판 제막식 대통령선거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본부장단 회의 |
| 1997. 9. 10 | ❖ 신한청 임원간담회, 의원총회 |
| 1997. 9. 11 | ❖ 제42차 당무회의, 대표위원 청와대 주례보고 제3차 고위 당 · 정회의(정부1청사 국무총리공관) |
| 1997. 9. 12 | ❖ 농어촌 정책실천약속 제1차 발표, 대통령선거기획단 본부장단 회의 |
| 1997. 9. 19 | ❖ 월례조회, 국 · 실장 및 시 · 도 사무처장 연석회의 공약개발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환경노동 당 · 정회의 |
| 1997. 9. 20 | ❖ 경제정책자문위원회 |
| 1997. 9. 22 |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 |
| 1997. 9. 23 | ❖ 중진협의회 회의, 제1기 여성위원회(천안 중앙연수원) 제2기 여성위원회(천안 중앙연수원) |
| 1997. 9. 24 | ❖ 사무총장,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장단 면담 |
| 1997. 9. 25 | ❖ 대표위원, MBC TV주최 대통령선거후보 토론회 참석(MBC 스튜디오) |
| 1997. 9. 26 | ❖ 제43차 당무회의, 중앙당기위원회 회의 중소기업부문 1차공약 발표(중소기업회관) |
| 1997. 9. 30 | ❖ 제3차 전당대회(대구 실내체육관) |

1997. 10. 2
 1997. 10. 4
 1997. 10. 6
 1997. 10. 7
 1997. 10. 8
 1997. 10. 9
 1997. 10. 10
 1997. 10. 11
 1997. 10. 13
 1997. 10. 14
 1997. 10. 15
 1997. 10. 16
 1997. 10. 20
 1997. 10. 21
 1997. 10. 22
 1997. 10. 23
 1997. 10. 24
 1997. 10. 27
 1997. 10. 28
 1997. 10. 29
 1997. 10. 30
 1997. 10. 31
 1997. 11. 2
 1997. 11. 3
 1997. 11. 5
 1997. 11. 6
 1997. 11. 7
 1997. 11. 8
 1997. 11. 11
 1997. 11. 12

- ❖ 월례조회, 총재 대통령선거후보 안보 강연회(향군회관 2층 대강당)
- ❖ 총재, 부산 TV토론회 참석(부산 MBC)
- ❖ 중앙위 분과위원장 · 간사 연석회의
- ❖ 총재, 조계종 총무원 예방, 총재 타임지 인터뷰
- ❖ 제44차 당무회의
- ❖ 중앙위원회 주요임원 연수(천안 중앙연수원), 교육정책 토론회
- ❖ 대한민국건국회 등 주요단체 대표자 간담회
중앙위원회 주요임원 연수(천안 중앙연수원)
- ❖ 경제정책자문회의, 의원총회
중앙절 망향제 및 통일안보 결의대회(장충체육관)
- ❖ 확대당직자회의, 직능본부 대책위원장 · 단장 연석회의
- ❖ 총재, 한국노총 대표자와 간담회(한국노총 회의실)
- ❖ 제45차 당무회의, 과학기술 정책간담회
- ❖ 대표최고위원, 몽골공화국 집권당 에네비쉬 총비서장 접견
-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시연회, 정보화분야 실천약속 발표
의원총회, 시 · 도 사무처장 회의, 직능본부대책위원장 회의
- ❖ 법사 당 · 정회의
- ❖ 제46차 당무회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현판식
- ❖ 당 직능단체 핵심당원 연수(천안 중앙연수원)
- ❖ 총재, 정치혁신 선언 지지대회
- ❖ 노인복지정책 실천약속 발표회
국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통령선거 필승 결의대회
- ❖ 경기 대통령선거 필승결의대회(수원 실내체육관)
- ❖ 교통분야 실천약속 발표회, 인천 필승결의대회(인천 실내체육관)
농림해양수산 당 · 정회의
- ❖ 총재, 문화일보 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연설회 참석(문화일보사 2층 홀)
- ❖ 전국 시 · 도지부 사무처장 · 지구당 사무국장 연석회의
- ❖ 11월 월례조회, 총재 대전 지방방송 TV토론회 참석(대전방송 공개홀)
- ❖ 대구지역 필승결의대회(대구 실내체육관)
- ❖ 총재, 대구 TV토론회 참석(대동은행 본점 2층)
- ❖ 경북 필승결의대회(포항 실내체육관)
이회창 총재 정치혁신 실천을 위한 전당원 특별당비 납부운동 출범식
- ❖ 총재, 여성신문사 주최 여성 정책토론회 참석(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선거법 강좌(대강당)
- ❖ 총재, 동아일보 주최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PC통신 토론회(동아일보사 18층 강당)
- ❖ 관광산업분야 공약발표, 제47차 당무회의
- ❖ 광주 · 전남 필승결의대회(순천 팔마체육관)
전북 필승결의대회(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체육관)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의도연구소 주최 '선거여론조사'의

1997. 11. 13
1997. 11. 14
1997. 11. 17
1997. 11. 18
1997. 11. 19
1997. 11. 20

◀ 구 민주당 ▶
1997. 1. 3
1997. 1. 31

1997. 2. 16
1997. 3. 5
1997. 3. 10
1997. 3. 20
1997. 4. 19
1997. 4. 26
1997. 4. 29

1997. 4. 30
1997. 5. 1
1997. 5. 7
1997. 5. 13
1997. 6. 4
1997. 6. 5
1997. 7. 4
1997. 7. 8
1997. 7. 24
1997. 8. 4

-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총재, 한국기독교 목회자 포럼 주최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민족화합 기도회」
(힐튼호텔 1층 국제회의장), 대표최고위원, 주한 러시아대사 접견
 - ❖ 총재, 매일경제 주최 대통령선거후보 경제정책 강연회 참석
(제일은행본점 4층 대강당)
 - 총재, 방송 3사 합동토론회 참석(KBS 본관 스튜디오)
 - ❖ 총재, 조선일보 주최 토론회 참석(조선일보 정동별관 대강당)
고위대책회의
 - ❖ 경남 필승결의대회(창원 실내체육관)
서울시지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서울시지부 5층 강당)
 - ❖ 총재, 과학기술 정책 강연회, 충북 필승결의대회(청주 실내체육관)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국책자문위 분과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
 - ❖ 여성정책 실천약속 발표회(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2층)
총재, 부산일보 초청 대통령선거후보 시국강연회 참석(부산 상공회의소)
- ❖ 시무식
 - ❖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주최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 ❖ 국회의원, 전국지구당위원장, 당무위원 연석회의(수원 동수원 관광호텔)
 - ❖ 수원 장안구 보궐선거에 전국지구당위원장 지원 활동
 - ❖ 시·도지부 당사 임차계약자 명변경 요청공문
 - ❖ 총재 경희대 행정대학원 초청특강
 - ❖ 4·19 국립묘지에서 제37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민주당 자체행사로 거행
 - ❖ 4·19 혁명 제2시국선언대회에 총재 참석
 - ❖ 포항보선 및 현 시국에 대한 이기택 총재 특별기자회견, 숙명여대 주최 제
1회 「21세기 최고 정치지도자의 통일비전」 강연회에 총재 강연, 총재단회
의(386차)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
 - ❖ 전국지구당위원회 회의 소집(보선관련)
 - ❖ 총재 부산지역 기자간담회
 - ❖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5층 회의실), 전당대회 준비위원 4명 추가선임
 - ❖ 총재, 중앙대 행정대학원 초청특강
 - ❖ 개편대회 미개최 지구당 마무리 통보
 - ❖ 전 지구당에 포항복구 보궐선거 협조 공문
 - ❖ 국회의원, 당무위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소집
 - ❖ 국회의원, 당무위원,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포항)
 - ❖ 포항복구 보궐선거에 전국지구당위원장 지원 활동
 - ❖ 이기택 총재 총재직 사퇴 - 강창성 부총재를 총재권한 대행으로 지명
- 전당대회준비위원 2명 추가선임

1997. 8. 12
 1997. 8. 20
 1997. 8. 21
 1997. 8. 25

 1997. 8. 27
 1997. 8. 28
 1997. 8. 30
 1997. 9. 3
 1997. 9. 5
 1997. 9. 11
 1997. 9. 19
 1997. 9. 22
 1997. 10. 4
 1997. 10. 7
 1997. 10. 13
 1997. 10. 15
 1997. 10. 29
 1997. 10. 30
 1997. 11. 4
 1997. 11. 7

◀신설합당 이후▶

1997. 11. 21

 1997. 11. 22

 1997. 11. 23
 1997. 11. 24

 1997. 11. 25

 1997. 11. 26

 1997. 11. 27

 1997. 11. 28

- ❖ 조순 서울시장과 협의를 위해 대표단 서울시청 방문
- ❖ 조순 서울시장 민주당 입당 및 기자회견(프레스센터)
- ❖ 조순 서울시장 민주당 총재후보 등록
- ❖ 정치개혁특위 배제에 따른 긴급 의원총회
제4차 정기전당대회(8. 28) 소집통보
- ❖ 제4차 정기전당대회(8. 28) 대의원증 교부
- ❖ 전당대회(63빌딩)
- ❖ 부총재단 임명
- ❖ 제7차 임시전당대회(9. 11) 개최 소집통보
- ❖ 제7차 임시전당대회(9. 11) 대회장 입장요령 및 좌석배치
- ❖ 대통령후보 선출(장충체육관)
- ❖ 당무위원 임명
- ❖ 지구당 조직책 공모(중앙, 동아일보)
- ❖ 중 · 하위 당직발령
- ❖ 지구당위원장, 당직자 전진대회(하림각)
- ❖ 조직책 임명장 수여식
- ❖ 지구당위원장, 조직책 연수
- ❖ 특위위원장 발표
- ❖ 지구당위원장, 당직자, 국회의원, 시 · 도의원 연수(청평 한록리조트)
- ❖ 특보발표
- ❖ 지구당위원장 대책회의(중앙당 지구당위원장실)

- ❖ 신한국당 제4차 전당대회 및 신한국당 · 민주당 합당전당대회(대전 충무 체육관)
- ❖ 이회창 후보 · 조순 신임총재 합동 기자회견(충무 체육관내 기자회견장)
- ❖ 부산 필승결의대회(부산 사직실내체육관), 한국 발전 연구원 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 볼룸)
- ❖ 대통령후보, 세계일보 초청 농어촌정책 강연회 참석(세계일보 국제연수원)
- ❖ 대통령후보, 서울신문 · 대학총장협회 공동주최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강연회 참석(프레스센터 20층), 대통령후보, 인터뷰 녹화
- ❖ 소비 · 외화절약 캠페인(당사 앞)
중앙당 후원행사 및 대통령선거출정식(올림픽 역도경기장)
- ❖ 대통령후보 등록(중앙선거위), 대통령후보, 동아일보 주최 「3당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참석(동아일보 18층 강당),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 ❖ 인천지역 정당연설회(인천 실내체육관)
「이회창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민주 동지」(600명) 입당 환영식
- ❖ 중앙위 서울시연합회 창립대회 및 대통령선거 출정식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
중앙선거위 주관 선거사무장 회의(중앙선거위) 참석

| | |
|--------------|--|
| 1997. 11. 29 | ❖ 대통령후보 인천방송 TV토론회(인천 스튜디오) 한나라회 연예인 자원봉사단 출범 |
| 1997. 11. 30 | ❖ 시·도 사무처장 회의 |
| 1997. 12. 1 | ❖ 대통령후보 제1차 합동토론회(KBS 본관 스튜디오) 고문단회의, 당면경제현안 긴급토의 |
| 1997. 12. 2 | ❖ 주문진·강릉 거리유세(주문진시장 입구, 석남동 선프라자 광장) 대통령후보 이북5도민회 안보강연회 정책기획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서울결유세단 거리유세(천호로타리 현대백화점 앞, 홍대전철역)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
| 1997. 12. 3 | ❖ 대구·경북지역 거리유세, 경제비상대책회의 대통령선거공약발표회, 장애인 공약발표회(부산시지부) |
| 1997. 12. 4 | ❖ 경제위기극복 범시민결의대회, 경남지역 거리유세 정책위의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 |
| 1997. 12. 5 | ❖ TV CM「희망의 목소리」편 제작(삼성동 대유미디어) 경기 지구당위원장의 선거대책회의 대전·충남·충북 지구당 위원장과 선거대책회의 경북지역 거리유세 중앙선대본부 실무자회의(마포당사) |
| 1997. 12. 6 | ❖ 대통령후보「한겨레」신문주최 합동토론회 참석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김윤환 선대위의장, 일본 NHK 인터뷰 구 민주당 총재단 간담회, 경남 지구당위원장 선거대책회의 |
| 1997. 12. 7 | ❖ 대통령 후보 제2차 TV 합동토론회 참석(MBC 1층 D스튜디오) |
| 1997. 12. 8 | ❖ 부산지역 거리유세, “120/80” 유세단 발대식 |
| 1997. 12. 9 | ❖ 부산·경남지역 거리유세, 특별대책본부 6개단 합동 발대식 |
| 1997. 12. 10 | ❖ 경남·대구·경북지역 거리유세 정치개혁 국민대통합위원회 충남지부 발대식 당원배가운동 우수당원 및 당기구 시상식 국책지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간사단회의 |
| 1997. 12. 11 | ❖ 경북·충북지역 거리유세, 선대위원장단 회의 당소속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선대본부 통합회의 |
| 1997. 12. 12 | ❖ 경제실천계획발표 기자회견(유성 리베라호텔), 충남지역 거리유세 |
| 1997. 12. 13 | ❖ 선대본부 통합회의 |
| 1997. 12. 14 | ❖ 제3차 TV 합동토론(SBS 일산 탄현스튜디오) |
| 1997. 12. 15 | ❖ 스티글리츠 IBRS(세계은행) 부총재와 조찬(신라호텔 23층 프라도룸) 경기도 공약발표회(경기도지부 강당), 경기지역 거리유세 선대본부 통합회의 |
| 1997. 12. 16 | ❖ 서울지역 거리유세 |
| 1997. 12. 17 | ❖ 서울·부산지역 거리유세 |

1997. 12. 18
 1997. 12. 19~28
 1997. 12. 29
 1997. 12. 31

- ❖ 제15대 대통령선거
- ❖ 고위당직자회의
- ❖ 당무운영위원회
- ❖ 종무식

2) 새정치국민회의

연 월 일

1997. 1. 1
 1997. 1. 6
 1997. 1. 8
 1997. 1. 9

 1997. 1. 10
 1997. 1. 11
 1997. 1. 13

 1997. 1. 14

 1997. 1. 15
 1997. 1. 16
 1997. 1. 17

 1997. 1. 18

 1997. 1. 20
 1997. 1. 21
 1997. 1. 22
 1997. 1. 23
 1997. 1. 27

주 요 활 동

- ❖ 단배식
- ❖ 제61차 간부회의
- ❖ 제29차 당무위원회의
-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단 면담
- ❖ 특보회의
- ❖ 제62차 긴급간부회의
- ❖ 제30차 당무위원, 제31차 의총 연석회의
ICFTU 한국방문 대표단 총재 면담
- ❖ 제32차 국민회의·자민련 합동 의원총회
일본 민주당 중의원 방한단 총재 면담
- ❖ 제51차 지도위원회의
- ❖ 제63차 간부회의
- ❖ 아일랜드 의회 방한단 예방,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주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규탄 비상시국 국민대토론회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주최)
- ❖ 제7차 '토요 정책포럼' 초청 김대중 총재 강연
노동약법·안기부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 ❖ 제64차 간부회의
- ❖ 제31차 당무위원, 제33차 의총 연석회의
- ❖ 제65차 간부회의, ICFTU(국제자유노련) 2차 대표단 총재 면담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서울지역 핵심당직자 연수
- ❖ 제66차 간부회의
국민회의·자민련 양당총재 공동초청 사회 각계인사와의 간담회
전국지구당위원장 결의대회

1997. 1. 28
1997. 1. 29
1997. 1. 30

1997. 1. 31
1997. 2. 3

1997. 2. 4
1997. 2. 5
1997. 2. 6
1997. 2. 10
1997. 2. 11
1997. 2. 12
1997. 2. 14
1997. 2. 17
1997. 2. 18
1997. 2. 19
1997. 2. 20
1997. 2. 24
1997. 2. 25
1997. 2. 26
1997. 3. 3
1997. 3. 4
1997. 3. 6
1997. 3. 7
1997. 3. 10
1997. 3. 11
1997. 3. 12
1997. 3. 13
1997. 3. 15
1997. 3. 17
1997. 3. 18
1997. 3. 19
1997. 3. 21
1997. 3. 22
1997. 3. 24
1997. 3. 26
1997. 3. 28
1997. 3. 29

- ❖ 제34차 국민회의 · 자민련 합동 의원총회
- ❖ 제32차 당무위원회
- ❖ 제67차 간부회의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총재 면담
- ❖ 노동관계법 대책위의원 간담회
- ❖ 제68차 간부회의, 한보사태 비리 신고센터 현판식
노인복지제도 입법방향에 관한 공청회
- ❖ 노동관계법 대책위원회의
- ❖ 제52차 지도위원회의
- ❖ 제69차 간부회의, 마이클 테오 엔 쟈 싱가포르대사 총재 면담
- ❖ 제70차 간부회의
- ❖ 제35차 의원총회
- ❖ 제71차 간부회의
- ❖ 제72차 간부회의
- ❖ 제73차 간부회의
- ❖ 독도보전 · 독도사랑 시민 서명모임 총재, 지도부 참석
- ❖ 제33차 당무위원, 제36차 의총 연석회의, 대정부질문의원 회의
- ❖ 국민회의 소속 서울시 구의원 협의회 구성 총회
- ❖ 제34차 당무위원, 제37차 의총 연석회의
- ❖ 제74차 긴급간부회의, 제38차 의원총회
- ❖ 제75차 간부회의, 제39차 의원총회
- ❖ 제76차 간부회의
- ❖ 대정부질문의원 간담회
- ❖ 제35차 당무위원, 제40차 의총 연석회의
- ❖ 특보회의, 용공음해 진상조사위원회 간담회
- ❖ 제77차 간부회의, 제41차 의원총회, 국민회의 · 자민련 합동 의원총회
- ❖ 몽고대사(갈바드라) 총재 예방
- ❖ 제36차 당무위원회
- ❖ 특위위원장회의
- ❖ 서울시지부 구의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 ❖ 제78차 간부회의
- ❖ 제79차 간부회의
- ❖ 제53차 지도위원회
- ❖ 직능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 국정조사 특위위원 간담회
- ❖ 제80차 간부회의
- ❖ 제37차 당무위원, 제42차 의총 연석회의
- ❖ 경제 기자회견 “우리경제, 위기에서 희망으로”
- ❖ 김대중 총재 충북지역 기자 간담회

1997. 3. 31

1997. 4. 1

1997. 4. 2

1997. 4. 3

1997. 4. 5~13

1997. 4. 7

1997. 4. 9

1997. 4. 14

1997. 4. 15

1997. 4. 16

1997. 4. 17

1997. 4. 18

1997. 4. 21

1997. 4. 22

1997. 4. 23

1997. 4. 24

1997. 4. 25

1997. 4. 28

1997. 4. 29

1997. 4. 30

1997. 5. 1

1997. 5. 2

1997. 5. 6

1997. 5. 7

1997. 5. 12

1997. 5. 16

1997. 5. 19

1997. 5. 21

1997. 5. 23

1997. 5. 26

1997. 5. 27

1997. 5. 28

- ❖ 벤처기업 <동아텔레콤> 총재, 지도부 방문
동국대학교 승가총동문회 초청 김대중 총재 강연 「21세기의 정치와 종교」
- ❖ 제81차 간부회의
- ❖ 제38차 당무위원회, FDL-AP, 나우만재단 공동주최 한·독 합동강연회
총재 강연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변화의 중요성」
- ❖ 대전, 충남·북, 전북지역 지구당 기간 당직자 연수
- ❖ 김대중 총재 방미
- ❖ 제82차 간부회의
- ❖ 제39차 당무위원회
- ❖ 제83차 간부회의
- ❖ 김대중 총재 창원대 특강 「21세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 제40차 당무위원회
- ❖ 김대중 총재 전국 대학신문기자들과 간담회
- ❖ 대구, 광주, 경북지역 기간 당직자 연수
- ❖ 제84차 간부회의, 서울시지부 대의원대회
- ❖ 벤처기업가와 간담회
- ❖ 제41차 당무위원, 제43차 의총 연석회의, 광역의원 연수
- ❖ 특위위원장회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 여성특위 「여성건강 아동건강 실태 및 의료보장 방안」 공개 대토론회
초선의원들과 간담회
- ❖ 제85차 간부회의
- ❖ 매한 문화제 참석(축사)
- ❖ 제42차 당무위원, 제44차 의총 연석회의
부산, 경남, 전남, 제주지역 기간 당직자 연수
- ❖ 재선의원 간담회
- ❖ 장애어린이와 만남
- ❖ 제86차 간부회의
충남포럼 초청 김대중 총재 강연 「한국정치의 현안과 미래의 지도자상」
- ❖ 기초의원 연수
- ❖ 제87차 간부회의
- ❖ 제43차 당무위원회
- ❖ 총재 및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 ❖ 제88차 간부회의
연세대 총학생회 초청 김대중 총재 강연 「21세기 한국의 진로」
- ❖ 제89차 간부회의
- ❖ 제54차 지도위원회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선거전략」
- ❖ 한양대 종합교육강좌 김대중 총재 강연
- ❖ 제44차 당무위원회, 제45차 의원총회

| | |
|-------------|--|
| 1997. 5. 29 | ❖ 김대중 총재, 지도부 공군 작전사령부 시설 및 장비 시찰 |
| 1997. 5. 30 | ❖ 제55차 지도위원회, 김대중 총재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
| 1997. 5. 31 | ❖ 제90차 간부회의 |
| 1997. 6. 2 | ❖ 새정치국민회의 환경 선포식 |
| 1997. 6. 3 | ❖ 제91차 간부회의, 중국 인민외교학회 방한단 총재 면담 |
| 1997. 6. 4 | ❖ 제45차 당무위원회 |
| 1997. 6. 5 | ❖ 총재, 지도부 보훈병원 방문 |
| 1997. 6. 9 | ❖ 제92차 간부회의 |
| 1997. 6. 10 | ❖ 제1차 야권 대통령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의 |
| 1997. 6. 11 | ❖ 제56차 지도위원회 |
| 1997. 6. 16 | ❖ 제93차 간부회의, 국민회의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
| 1997. 6. 18 | ❖ 야권 대통령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현판식, 제46차 당무위원회 |
| 1997. 6. 21 | ❖ 김대중 총재, 지도부 용인시민과 대화 김대중 총재, 지도부 평택시민과 토론회 |
| 1997. 6. 23 | ❖ 제94차 간부회의 |
| 1997. 6. 24 | ❖ 김대중 총재 안보 관련 기자간담회 |
| 1997. 6. 25 | ❖ 제47차 당무위원회 |
| 1997. 6. 26 | ❖ 제57차 지도위원회 |
| 1997. 6. 27 | ❖ 제46차 의원총회, WFP(세계식량계획) 대표단 총재 면담 |
| 1997. 6. 28 | ❖ 귀순용사와 간담회 |
| 1997. 6. 30 | ❖ 제95차 간부회의 |
| 1997. 7. 1 | ❖ 제47차 의원총회, 경제관련 기자간담회 제8차 국민회의 · 자민련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
| 1997. 7. 2 | ❖ 제48차 당무위원회 |
| 1997. 7. 5 | ❖ 제49차 당무위원회 |
| 1997. 7. 7 | ❖ 제96차 간부회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들과의 간담회 |
| 1997. 7. 8 | ❖ 가정과 여성 관련 기자간담회 |
| 1997. 7. 9 | ❖ 제50차 당무위원회 |
| 1997. 7. 10 | ❖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방문, 특위위원장회의 |
| 1997. 7. 12 | ❖ 한국교총 회장단과 간담회 |
| 1997. 7. 14 | ❖ 제97차 간부회의, 대정부질문의원, 예결위원 연석회의 |
| 1997. 7. 15 | ❖ 전체당직자회의 |
| 1997. 7. 16 | ❖ 제51차 당무위원회 |
| 1997. 7. 19 | ❖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 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단 총재 면담 |
| 1997. 7. 21 | ❖ 제98차 간부회의 |
| 1997. 7. 23 | ❖ 제58차 지도위원회 |
| 1997. 7. 24 | ❖ 경기지역 지구당위원장 회의, 원외지구당부인 연수 |
| 1997. 7. 25 | ❖ 특별회의 |

1997. 7. 28
 1997. 7. 29
 1997. 7. 30
 1997. 7. 31
 1997. 8. 4
 1997. 8. 5
 1997. 8. 6
 1997. 8. 7
 1997. 8. 11
 1997. 8. 12
 1997. 8. 13
 1997. 8. 14
 1997. 8. 18
 1997. 8. 20
 1997. 8. 25
 1997. 8. 26
 1997. 8. 27
 1997. 8. 28
 1997. 8. 29
 1997. 9. 2
 1997. 9. 3
 1997. 9. 4
 1997. 9. 5
 1997. 9. 6
 1997. 9. 8
 1997. 9. 9
 1997. 9. 10
 1997. 9. 13
 1997. 9. 18
 1997. 9. 19
 1997. 9. 20
 1997. 9. 22
 1997. 9. 23
 1997. 9. 24
 1997. 9. 25
 1997. 9. 26
 1997. 9. 27
 1997. 9. 29
 1997. 9. 30

- ❖ 제99차 간부회의
- ❖ 제48차 의원총회
- ❖ 제52차 당무위원, 제49차 의총 연석회의
- ❖ 야권 대통령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 ❖ 물류관련 전문지기와 간담회
- ❖ 제7회 경기농업경영인대회 김대중 총재 축하
- ❖ 제100차 긴급간부회의
- ❖ 제5회 충북농업경영인대회 김대중 총재 축하
- ❖ 제101차 간부회의
- ❖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 ❖ 제53차 당무위원회
- ❖ 제102차 간부회의
- ❖ 제103차 간부회의
- ❖ 제59차 지도위원회
- ❖ 제104차 긴급간부회의, 경제현안과 공명선거 관련 기자회견
- ❖ 제105차 간부회의
- ❖ 제54차 당무위원회
- ❖ KBS · 동아일보 초청 TV토론회
- ❖ 농민단체 대표와 간담회
- ❖ 제106차 간부회의, 시 · 도지부장 회의, 시 · 도지부장, 현역의원 워크숍
- ❖ 한국통신 노조간부 면담, 아파나지에프 신임 러시아대사 면담
- ❖ 아태재단 국제학술회의 참석(축사)
- ❖ 창당 제2주년 기념행사 및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 ❖ 폐광지역 시민과의 간담회
- ❖ 제107차 간부회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와 간담회
- ❖ 4대 정책 발표 및 국회의원 민생현장 방문 결과보고대회
- ❖ 제55차 당무위원회, 제50차 의원총회
- ❖ 인천지역 중소기업 및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
- ❖ 제108차 간부회의,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단과 간담회
- ❖ 원내대책회의, 정책공약발표회 1. <정보화정책>
- ❖ 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 ❖ 제109차 간부회의,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및 산별노조위원장과 간담회
- ❖ 정책공약발표회 2. <벤처기업 육성과 세계 5강>
- ❖ 제56차 당무위원회, MBC 초청 대통령후보 TV토론회
- ❖ '97전국 농업경영인 농정대개혁 촉구대회 김대중 총재 참석
- ❖ 「5강 경제 어떻게 갈 것인가?」경제 대토론회
- ❖ 지역공약발표회 1. <대구, 경북>
- ❖ 제110차 간부회의
- ❖ 지역공약발표회 2. <경남, 울산>

| | |
|--------------|--|
| 1997. 10. 1 | ❖ 제60차 지도위원회 |
| 1997. 10. 2 | ❖ 제111차 간부회의 |
| 1997. 10. 4 | ❖ 부산 종교지도자와의 대화, 지역정책발표회 3. <부산> |
| 1997. 10. 5 | ❖ 동화사 방문(무공스님), 한국노총 대구시본부 간부와 간담회 |
| 1997. 10. 6 | ❖ 제112차 간부회의, 대구시청 방문 |
| 1997. 10. 7 | ❖ 제15대 대통령선거 여성 조직위원 워크숍 |
| 1997. 10. 8 | ❖ 제113차 간부회의 |
| 1997. 10. 9 | ❖ 제57차 당무위원, 제51차 의총 연석회의 신한국당의 음해공작 대책위 위원과 간담회 |
| 1997. 10. 10 | ❖ 통도사 방문(월하종정), 2002아시아안개미 조직위원회 방문 |
| 1997. 10. 11 | ❖ 정책공약발표회 3. <영상산업 진흥정책>, 영화인과의 간담회 |
| 1997. 10. 13 | ❖ 제114차 간부회의, 한국 태고종 총무원 방문 |
| 1997. 10. 15 | ❖ 정책공약발표회 4. <농업정책> 제61차 지도위원, 제58차 당무위원 연석회의 부산·경남지역 목회자과 간담회 |
| 1997. 10. 18 | ❖ 경제비상대책 확대회의 |
| 1997. 10. 20 | ❖ 제115차 간부회의, 긴급 경제 기자회견 <증시 부양정책> 국민대화합을 위한 3급법 제정 공청회 |
| 1997. 10. 22 | ❖ 제59차 당무위원회, 제52차 의원총회 |
| 1997. 10. 23 | ❖ '97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김대중 총재 강연 |
| 1997. 10. 24 | ❖ 21세기 교육대국 실현촉구 전국 교육자대회 김대중 총재 강연 |
| 1997. 10. 25 | ❖ 경제기자회견 <금융 및 외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 |
| 1997. 10. 27 | ❖ 제116차 간부회의, 대학생 모니터 발대식 |
| 1997. 10. 28 | ❖ 제117차 간부회의, 대전·충남지역 목회자들과 간담회 전국 국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
| 1997. 10. 29 | ❖ 제62차 지도위원회·제60차 당무위원회·제53차 의총 연석회의 대덕클럽 과학자들과 간담회 |
| 1997. 10. 30 | ❖ 국제자유주의연맹 프리스트 볼크스테인 회장과 면담 당무·기획본부 대통령선거 종합점검 워크숍 참석 |
| 1997. 11. 3 | ❖ 제61차 당무위원회, 제54차 의총 연석회의 국민회의·자민련 대통령 후보단일화 선언식 및 서명식 |
| 1997. 11. 5 | ❖ 제63차 지도위원회, 경기지역 정책발표회, 경기 개신교 목회자 간담회 |
| 1997. 11. 6 | ❖ 김종필 총재, 박태준 의원과 회동 대구·경북 라이프산악회 회장단 및 이사진과 간담회 |
| 1997. 11. 8 | ❖ 새시대포럼 초청 대구·경북지역 교수와의 간담회 |
| 1997. 11. 10 | ❖ 중앙당후원회 주최 미술 소장품 전시회 |
| 1997. 11. 11 | ❖ 전국 개신교 총회장과 간담회 |
| 1997. 11. 12 | ❖ 제64차 지도위원·제62차 당무위원 연석회의 1997 새정치국민회의 후원회 |

1997. 11. 14
 1997. 11. 15
 1997. 11. 16
 1997. 11. 17
 1997. 11. 18
 1997. 11. 19
 1997. 11. 20
 1997. 11. 21
 1997. 11. 22
 1997. 11. 23
 1997. 11. 24
 1997. 11. 25
 1997. 11. 26
 1997. 11. 27
 1997. 11. 28
 1997. 11. 29
 1997. 12. 1
 1997. 12. 2
 1997. 12. 3
 1997. 12. 5
 1997. 12. 6
 1997. 12. 7
 1997. 12. 8
 1997. 12. 9
 1997. 12. 10
 1997. 12. 11

- ❖ 제1차 김대중 대통령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상무위원회
- ❖ 부산지역 필승전진대회 및 당원 연수
 '포럼 21을 준비하는 부산·경남지역 교수모임' 초청 간담회
- ❖ 연청 서울시지부 개편대회
- ❖ 제118차 간부회의, 경기지역 당원연수 및 필승전진대회 참석
- ❖ 제65차 지도위원회
- ❖ 서울 구의원과 간담회, 제55차 의원총회, 제1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총재초청 국민회의·자민련 의원 합동회의
- ❖ 제2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상인들과 대화
- ❖ 김대중후보, 김정길·노무현 부산·경남·울산지역 선거대책회의
 공동의장 합동기자회견, 제3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인천지역 필승전진대회
- ❖ 제4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산업현장 새내기들과 경제살리기 대화
 대전·충남지역 필승전진대회, 대전·충남지역 대학교수와 간담회
- ❖ 제5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김대중 총재 김수환 추기경과 간담회
- ❖ 국가경영전략회의 영입인사 연수
- ❖ 제63차 당무위원회, 전직 총학생회장단 및 청년대표와 간담회
- ❖ 제6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경제 재건 구국선언 및 출마 기자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중 대통령후보 등록
- ❖ LG 종합상사(수출부) 방문, 서울·수도권 특별대책회의
- ❖ 김대중 총재 외신기자회견, 남대문시장 방문 및 첫 거리유세
 긴급 경제기자회견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구
- ❖ 대통령후보 공약검토회
- ❖ 제7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경제 기자간담회 - 집권 후 거국비상경제내각 구성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차 대통령후보 합동토론회 참석
- ❖ 대통령선거 공약발표회
- ❖ 제8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경제를 살립시다' 동부제강 서울공장 방문
 전국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대화
- ❖ 제9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제10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새마을 중앙운동본부 방문, 대구 거리유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 ❖ 한겨레신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금융기관 방문
-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차 대통령후보 합동토론회
- ❖ 제11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금융기관 방문, 경기지역 거리유세
- ❖ 경남·부산·울산지역 거리유세, 기아중공업 방문, 근로자와 대화
-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재활병원, 재활학교 방문
- ❖ 제12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조계종 총무원 방문
 전국 3개도시(서울, 대구, 대전) 동시 연결 벤처기업인 화상 심포지엄

1997. 12. 12
1997. 12. 13
1997. 12. 14
1997. 12. 15
1997. 12. 17
1997. 12. 19
1997. 12. 20
1997. 12. 22
1997. 12. 24
1997. 12. 25
1997. 12. 26
1997. 12. 27
1997. 12. 29
1997. 12. 31

- ❖ 제2차 김대중 대통령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회의 상무위원회, 화상회의 (국제투자가 조지 소로스, 미키 캔터 전 미국 상무장관, 마이클 잭슨 등과 서울, 워싱턴, 뉴욕 동시연결), 제13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중소기업살리기 대토론회
- ❖ 영수회담 결과설명회
-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3차 대통령후보 합동토론회
- ❖ 제14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원불교 지도자들과 간담회 서울·경기지역 거리유세
- ❖ 인터넷 및 PC통신 생방송 회견 기자회견(선거일 전, IMF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울지역 거리유세
- ❖ 제15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제15대 대통령당선 기자회견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지도부 국립묘지 참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4·19묘지 참배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대사 당선자 면담
- ❖ 청와대 회동(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 ❖ 제16차 선거대책위 간부회의 제64차 당무위원·제66차 지도위원·제57차 의총 연석회의 IMF 관련 회의(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 스티븐 보스워스 미대사 등)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초청 국민회의·자민련 국회의원 간담회 국민회의·자민련 의원 연석회의
- ❖ 경제 5단체장 및 농협중앙회 회장과 간담회
-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지도부 정신지체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시설 방문
- ❖ 한국노총(박인상 위원장 등)과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 ❖ 민주노총(배범석 위원장 직무대행 등)과 간담회, 제58차 의원총회
- ❖ 육군 제28사단 방문, 미 제2사단 방문
-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자민련 김중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와 간담회

3) 자유민주연합

연 월 일
1997. 1. 3
1997. 1. 7
1997. 1. 8

- 주요 활동
- ❖ 시무식,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3차 회의
 - ❖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4차 회의
 - ❖ 제73차 당무회의

1997. 1. 9
 1997. 1. 13
 1997. 1. 15
 1997. 1. 17

 1997. 1. 18
 1997. 1. 20
 1997. 1. 21
 1997. 1. 22
 1997. 1. 24
 1997. 1. 27

 1997. 1. 29
 1997. 2. 1
 1997. 2. 3
 1997. 2. 4
 1997. 2. 5
 1997. 2. 10
 1997. 2. 11
 1997. 2. 12

 1997. 2. 13
 1997. 2. 17
 1997. 2. 19
 1997. 2. 21
 1997. 3. 3
 1997. 3. 5
 1997. 3. 6
 1997. 3. 10
 1997. 3. 12
 1997. 3. 17
 1997. 3. 19
 1997. 3. 24
 1997. 3. 26
 1997. 4. 1
 1997. 4. 2
 1997. 4. 4
 1997. 4. 7

- ❖ 총재 연두기자회견
- ❖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5차 회의
- ❖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6차 회의
- ❖ 자민련 · 국민회의 주최 「비상사국 국민대토론회」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7차 회의
- ❖ 「노동법 · 안기부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발대식
- ❖ 간부회의, 시 · 도지부 위원장 및 사무처장 연석회의
- ❖ 간부회의,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8차 회의
- ❖ 제74차 당무회의
- ❖ 전국지구당 사무국장 임명장 수여식
- ❖ 간부회의, 조직강화특위 전체회의,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10차 회의
자민련 · 국민회의 양당총재 시국 관련 공동성명 발표
자민련 · 국민회의 합동 연석회의
- ❖ 제75차 당무회의, 당보 제23호 발간
- ❖ 월례조회, 반독재 공동투쟁위원회 제11차 회의
- ❖ 간부회의, 한보사태 합동조사단 회의
- ❖ 조직강화특위 전체회의
- ❖ 제76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자민련 · 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제77차 당무회의, 고문단회의, 한보비리 합동조사위 제일은행 방문조사
한보비리 합동조사위 산업은행 방문조사
- ❖ 홍보위원회 전체회의
- ❖ 간부회의
- ❖ 제78차 당무회의
- ❖ 시 · 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 ❖ 월례조회
- ❖ 제79차 당무회의
- ❖ 당보 제24호 발간
- ❖ 간부회의, 자민련 · 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제80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홍보위원회 전체회의, 조직강화특위 전체회의
- ❖ 제81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제82차 당무회의, 시 · 도지부 위원장 회의
- ❖ 월례조회, 간부회의
- ❖ 제83차 당무회의, 시 · 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 ❖ 간부회의, 식목일 행사
- ❖ 고문단 회의

- 1997. 4. 8
 - 1997. 4. 9
 - 1997. 4. 14
 - 1997. 4. 15
 - 1997. 4. 15
 - 1997. 4. 19
 - 1997. 4. 21
 - 1997. 4. 23

 - 1997. 4. 24
 - 1997. 4. 28
 - 1997. 4. 30
 - 1997. 5. 1
 - 1997. 5. 3
 - 1997. 5. 6
 - 1997. 5. 7
 - 1997. 5. 8
 - 1997. 5. 10
 - 1997. 5. 12
 - 1997. 5. 13
 - 1997. 5. 15
 - 1997. 5. 20
 - 1997. 5. 22
 - 1997. 5. 23
 - 1997. 5. 26
 - 1997. 5. 28
 - 1997. 5. 29
 - 1997. 5. 31
 - 1997. 6. 2
 - 1997. 6. 4
 - 1997. 6. 5
 - 1997. 6. 9
 - 1997. 6. 11

 - 1997. 6. 16
 - 1997. 6. 18
 - 1997. 6. 19
 - 1997. 6. 23
 - 1997. 6. 24
- ❖ 당보 제26호 발간 , 후원회 회의
 - ❖ 제84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고문단 회의, 후원회 회의
 - ❖ 제85차 당무회의
 - ❖ 4·19 묘역 참배
 - ❖ 간부회의
 - ❖ 제86차 당무회의, 내각제 홍보스티커 부착 행사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발대식
 - ❖ 후원회 회의
 - ❖ 간부회의
 - ❖ 제87차 당무회의
 - ❖ 월례조회, 후원회 회의
 - ❖ 당보 제27호 발간
 - ❖ 고문단 회의
 - ❖ 제88차 당무회의
 - ❖ 후원회 회의
 - ❖ 임시간부회의
 - ❖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중앙위 전체분과 운영위원회 임원단 회의
 - ❖ 내각제 홍보물 가두배포
 - ❖ 후원회 회의
 - ❖ 간부회의
 - ❖ 제89차 당무회의, 후원회 회의
 - ❖ 제2기 운정봉사단 발대식
 - ❖ 확대간부회의
 - ❖ 제90차 당무회의, 자민련·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중앙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후원회 회의
 - ❖ 확대간부회의, 창당2주년 기념행사
 - ❖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당보 제28호 발간
 - ❖ 제91차 당무회의
 - ❖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 후원회 회의
 - ❖ 간부회의
 - ❖ 제92차 당무회의, 시·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당보 및 긴급제안 리플릿 가두배포
 - ❖ 간부회의
 - ❖ 제93차 당무회의
 - ❖ 후원회 회의
 - ❖ 간부회의
 - ❖ 제1차 정기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

1997. 6. 27
 1997. 6. 30
 1997. 7. 1
 1997. 7. 2
 1997. 7. 3
 1997. 7. 5
 1997. 7. 8
 1997. 7. 9
 1997. 7. 14
 1997. 7. 25
 1997. 7. 28
 1997. 8. 4
 1997. 8. 6
 1997. 8. 9
 1997. 8. 11
 1997. 8. 13
 1997. 8. 18
 1997. 8. 20
 1997. 8. 25
 1997. 8. 26
 1997. 8. 27
 1997. 9. 1
 1997. 9. 5
 1997. 9. 8
 1997. 9. 9
 1997. 9. 10
 1997. 9. 19
 1997. 9. 22
 1997. 9. 23
 1997. 9. 24
 1997. 9. 25
 1997. 9. 27
 1997. 9. 29
 1997. 9. 30
 1997. 10. 4
 1997. 10. 6
 1997. 10. 7
 1997. 10. 11
 1997. 10. 13

- ❖ 제94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월례조회, 자민련 · 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제95차 당무회의
- ❖ 중앙당 후원의 밤, 사무총장 이 · 취임식
- ❖ 당보 제29호 발간
- ❖ 간부회의
- ❖ 제96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임시당무회의
- ❖ 제97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 ❖ 제98차 당무회의, 당보 제31호 발간
- ❖ 임시당무회의(제99차)
- ❖ 간부회의
- ❖ 제100차 당무회의, 대통령선거기획위 전체회의
- ❖ 간부회의
- ❖ 제101차 당무회의, 특별당보 발간
- ❖ 간부회의
- ❖ 대통령선거기획위 본부장단 회의
- ❖ 제102차 당무회의, 시 · 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 ❖ 간부회의
- ❖ 제103차 당무회의
- ❖ 임시 월례조회, 간부회의, 의원세미나 입소식
- ❖ 의원세미나 퇴소식, 당보 제33호 발간
- ❖ 제104차 당무회의
- ❖ 임시당무회의
- ❖ 간부회의, 조직강화특위 회의
- ❖ 대통령선거기획위 본부장단 회의
- ❖ 제105차 당무회의
- ❖ 인터넷 자민련 홈페이지 개통
- ❖ 사무처 계룡산 등반대회
- ❖ 간부회의
- ❖ 대통령선거기획위 본부장 · 단장 · 국장 연석회의
- ❖ 월례조회
- ❖ 간부회의
- ❖ 시 · 도지부 위원장 및 사무처장 연석회의
- ❖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 ❖ 간부회의

1997. 10. 15
1997. 10. 20
1997. 10. 22
1997. 10. 23
1997. 10. 24
1997. 10. 27
1997. 10. 28
1997. 10. 29
1997. 11. 1
1997. 11. 3
1997. 11. 4
1997. 11. 5
1997. 11. 10
1997. 11. 11
1997. 11. 12
1997. 11. 14
1997. 11. 15

1997. 11. 17
1997. 11. 18

1997. 11. 19
1997. 11. 21
1997. 11. 22
1997. 11. 24
1997. 11. 25
1997. 11. 27
1997. 12. 3
1997. 12. 22
1997. 12. 23
1997. 12. 24
1997. 12. 26
1997. 12. 27
1997. 12. 29

1997. 12. 3

- ❖ 제106차 당무회의
- ❖ 간부회의, 조직강화특위 회의
- ❖ 제107차 당무회의, 시·도지부 여성부장 회의
- ❖ 후원회 회의
- ❖ 전국 청년 핵심간부 대통령선거 필승결의대회
- ❖ 윤정봉사단 1기 자연보호 캠페인 및 대통령선거 필승결의대회, 간부회의
- ❖ 대통령선거기획위 본부장단 회의
- ❖ 제108차 당무회의, 중앙위 분과위원회 회의, 고문단 회의
- ❖ 월례조회
- ❖ 임시당무회의(109차), 제15대 야권 대통령 후보단일화 선언 및 서명식
- ❖ 박태준 의원 입당식
- ❖ 제110차 당무회의, 당보 제34호 발간
- ❖ 간부회의
- ❖ 자민련·국민회의 양당 정책협의회의, 조직강화 특위 회의
- ❖ 정책자문위 회의, 제111차 당무회의, 시·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 ❖ 양당 사무총장 공동선대위 발표식, 임시당무회의(제112차), 의원총회
- ❖ 자민련·국민회의 공동선거대책회의 전체회의
중앙선거대책회의 상무위원회 회의
- ❖ 간부회의, 중앙위 임원단 회의
- ❖ 중앙위 분과위 운영위원회 회의
자민련·국민회의 시·도지부 당직자 공동 워크숍
- ❖ 중앙위 분과위 운영위원회 회의, 자민련·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제2차 중앙위원회 임시대회
- ❖ 임시간부회의, 자민련·국민회의 중앙당직자 합동조회
- ❖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
- ❖ 제113차 당무회의, 정책자문위회의
- ❖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 ❖ 제114차 당무회의, 중앙당 후원의 밤
- ❖ 간부회의, 자민련·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 ❖ 공동선대위 해단식
- ❖ 제115차 당무회의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
- ❖ 자민련 소속 인수위원 회의
- ❖ 간부회의, 시·도지부 사무처장 회의, 자민련·국민회의 합동 의원총회
당 여성조직 연석회의
- ❖ 종무식

4) 국민신당

연 월 일

1997. 10. 7
 1997. 10. 14
 1997. 10. 15
 1997. 10. 16
 1997. 10. 20
 1997. 11. 4

 1997. 11. 7
 1997. 11. 10

 1997. 11. 11
 1997. 11. 12

 1997. 11. 14

 1997. 11. 15
 1997. 11. 17
 1997. 11. 19
 1997. 11. 20
 1997. 11. 21
 1997. 11. 22

 1997. 11. 23
 1997. 11. 25

 1997. 11. 26
 1997. 11. 27
 1997. 11. 28

 1997. 11. 29

주요 활동

- ❖ 가칭 국민신당 창당발기인대회
- ❖ 선관위 창당준비위 결성신고
- ❖ 가칭 국민신당 창당준비대회 -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
- ❖ 제1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32명 임명 및 지구당위원장 정기대회
- ❖ 제2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 ❖ 국민신당 창당대회 및 제1차 전당대회 - 전당대회 의장단 선출
 - 총재 선출
 - 강령, 정강정책, 당헌 채택
 - 제15대 대통령후보 선출
- ❖ 주요 당직자 인선 - 사무총장 박범진 외 8명
- ❖ 제2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9명 및 당직자 2명 임명
 - 제2차 지구당위원장 회의
- ❖ 제3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22명 임명
- ❖ 주요 당직자 추가 인선 - 고문 황명수 외 7명
 - 제4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9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25명 임명
- ❖ 주요 당직자회의
 - 제5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7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16명 임명
- ❖ 신당사 현판식
- ❖ 시·도지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선거대책위원장 16명 임명
- ❖ 제6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4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5명 임명
- ❖ 제7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3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5명 임명
- ❖ 제8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4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15명 임명
- ❖ 중앙선거대책기구 구성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이만섭 총재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장을병, 서석재, 홍재형, 김윤덕 최고위원
 - 본부장 박범진 사무총장
 - 부분부장 원유철, 이수영 부총장
- ❖ 제9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8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52명 임명
- ❖ 모래시계세대 청년포럼 발기, 제10차 및 제11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 조직책 8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11명 임명
- ❖ 제15대 대통령후보 등록,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대식
- ❖ 제12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10명 임명
- ❖ 제13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3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9명 임명
 - 제21C 청년연합 발대식
- ❖ 제14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7명 임명

1997. 11. 30
1997. 12. 1
1997. 12. 4
1997. 12. 6
1997. 12. 8
1997. 12. 11

1997. 12. 14

1997. 12. 16
1997. 12. 18
1997. 12. 20
1997. 12. 20
1997. 12. 24
1997. 12. 29
1997. 12. 31

- ❖ 중앙일보 언론조직 규탄대회 - 전국지구당조직책, 전 당직자 및 당원
- ❖ 제15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8명 임명
- ❖ 제16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3명 임명
- ❖ 제17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3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4명 임명
- ❖ 한나라당 박찬중 고문 국민신당 입당, 철원농민모임 성미 전달식
- ❖ 제18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1명 임명
- ❖ 제19차 조직강화특위, 지구당조직책 1명 및 선거대책위원장 4명 임명
- ❖ 제20차 조직강화특위, 선거대책위원장 3명 임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 ❖ 조선일보 왜곡 편파 보도 항의시위
- ❖ 전 당원 제15대 대통령선거 참여
- ❖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 ❖ 고위당직자 일괄사표 제출
- ❖ 신임 당직 개편 단행
- ❖ 당무위원 41명 선임 발표
- ❖ 사무처 종무식

5) 건설국민승리21

연 월 일

1997. 11. 7

1997. 11. 8

1997. 11. 9
1997. 11. 10
1997. 11. 11

1997. 11. 12

1997. 11. 13

- 주요 활동
- ❖ SBS 녹화 리허설, 양심수 석방 시민토론회, 아사히신문, 방송인터뷰
국민승리21 제주본부 출범식
 - ❖ SBS 시사매거진 녹화, 북한동포돕기 문화제
SBS 시사매거진 생방송 인터뷰, 노동자대회 전야제
 - ❖ 전국노동자대회
 - ❖ 10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초청강연회
 - ❖ 안동권씨 화수회 전국시제, KBS·MBC 방문, 안동시청 방문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지부, 경안여객, 안동버스, 지역언론 간담회
국민승리21 예천지부 출범식, 지역인사 간담회
 - ❖ 안동권씨 산청시제, 지역언론 간담회, (KBS·신경남일보)
국민승리21 천안지부 출범식
 - ❖ 대우중공업상위집행위, 대의원 간담회, 영창약기 강연회, 민주당식 간담회
인하대 초청강연회, 전현직 노조 간부 간담회

- 1997. 11. 14
 - ❖ MBC 안병찬의 일요광장 녹화, 국민승리21 서울본부 출범식
영국 BBC 방송
- 1997. 11. 15
 - ❖ 대우중공업 조합원 등반대회, 청주지역 순회, 충북도지사 방문
국민승리21 충북본부 출범식, CBS 노조 수련회
- 1997. 11. 16
- 1997. 11. 17
 - ❖ 한국은행 독립축구 금융인 총궐기대회, 르몽드 인터뷰, 한양대병원 노조
 - ❖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기자회견
민주단체 대표자 간담회, 현대석유화학
충남 서부지역(협) 대표자 간담회, 충남 서산지부 출범식
충남 홍성지부 출범식
- 1997. 11. 18
 - ❖ 후보 공동대표 조찬간담회, 부실공사 추방 시민캠페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전국농민대회
국민승리 경기북부 출범식
- 1997. 11. 19
 - ❖ 전국농민회 총연맹 오찬 회동, 경원세기·대흥기계 간담회
지역언론 간담회, 국민승리 부천시지부 출범식
국민승리 기금마련 일일호프
- 1997. 11. 20
- 1997. 11. 21
 - ❖ 금강개발 대의원 수련회, 울산지역 기자간담회, 국민승리 울산본부 출범식
 - ❖ 창원두산기계, 한양공영, 창원병원, 마창지역 기자간담회
효성중공업, 코리아타코마 노조확대 간담회, 경남대학생회 초청강연회
- 1997. 11. 22
- 1997. 11. 23
 - ❖ 내각제 개헌저지 부산시민대회, 경남고 재부 15기 동기회
 - ❖ 비디오 촬영, 서울신문 인터뷰
전국연합대의원대회
- 1997. 11. 24
 - ❖ 정보통신분야 브리핑, 환경기자클럽 기자간담회
국민승리 전북본부 출범식
- 1997. 11. 25
 - ❖ 제7차 상임집행위, 공익노련정치실현단 결의대회
언론노련 창립기념식 및 민주언론상 시상식
권영길후보 온라인 토론회
- 1997. 11. 26
 - ❖ 4·19 묘지 참배, 대통령선거출정 기자회견
여의도 거리유세, 구로공단 거리유세
한국중공업, 경남 공약발표 기자회견, 정당연설회
영남지역 노조단체 대표자 간담회
- 1997. 11. 27
 - ❖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 이·취임식, 전국택시노동자 선연대회
아사히신문,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 인터뷰, 강남지역 거리연설
- 1997. 11. 28
 - ❖ 울산현대자동차 정문 거리유세, 현자 노조 선전담당자 간담회
시장·시의회 의장 방문, LG·태광·양정동신전시장
현대자동차 구정문·현대중공업
- 1997. 11. 29
 - ❖ 구미한국합섬 정문, 공단본부, 구미협의회 간담회
코오롱·오리온전기·코람플러스텍, 대구백화점
부산진시장·부산대학교 앞·현대백화점 앞·PIFF
- 1997. 12. 1
 - ❖ ARS 안내스티커 처방부착식, 인천방송 유세 녹화, 국민일보 인터뷰

| | |
|--------------|---|
| 1997. 12. 2 | ❖ 경제종합대책 특별기자회견, 중앙일보 인터뷰 이태리 코리아레 델라쎬라 인터뷰, 인천방송 유세 녹화 |
| 1997. 12. 3 | ❖ 안양역 앞 · 농수산물시장 · 평촌뉴코아 · 광명클레프 부천역 · 원중사거리 · 오정종합시장, 부평역 인천지역 언론사 간담회, 정당연설회 |
| 1997. 12. 4 | ❖ 수원역, 송탄송북시장, 서울대 농대 강연회, 쌍용자동차조합원 교육 만도기계 · 현대자동차, 시외버스터미널, 정당연설회 연기선거연락소 간담회 |
| 1997. 12. 5 | ❖ 워싱턴 포스터 인터뷰 공설시장 · 삼화정밀 · 중앙로 · 시사저널 · 한겨레신문, 안산역 · 상록수역 정당연설회 |
| 1997. 12. 6 | ❖ 신탄진역 · 대한이연 2공연 · 대우자동차정비 대륙화학 · 공주의료원 · 구 터미널 · 원자력 전자통신 · 한빛프라자 · 한신코아 경제실정규탄 및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 |
| 1997. 12. 7 | ❖ 관악산 입구 · 롯데백화점 · 까치산역, 정당연설회 공동대표단 회의, 상임집행위 |
| 1997. 12. 8 | ❖ TV유세 녹화준비, 서울지하철 순회, 생방송 대담, 정당연설회 |
| 1997. 12. 9 | ❖ 성남시청 앞 · 종합시장 · 모란역 · 모란시장 · 전철역 · 인하병원 노조 망월동 참배 기자간담회, 아시아자동차, 전주 기자간담회, 정당연설회 |
| 1997. 12. 10 | ❖ TV유세 녹화준비, 정경련 항의집회, 한국노총 방문, 지하철 유세 TV유세 및 토론회 준비 |
| 1997. 12. 11 | ❖ 주엽역, 화정역, 서울지하철 순회, 비상기자회견, 삼산종합금융 기자간담회, 정당연설회, 중앙로 주택은행 앞 |
| 1997. 12. 12 | ❖ 고려증권, 칠성시장, 경산시장, 영남대학교 아래시장 · 만도기계 · 아플로산업 · 중앙우체국, 죽도시장, 포항5거리 |
| 1997. 12. 13 | ❖ TV 합동토론회 준비, 한겨레신문 인터뷰, 출판기념 사인회 인간신서 출판기념회 격려사 서울역 앞, 인천 동암역 · 동인천역 · 답동성당 |
| 1997. 12. 14 | ❖ TV 합동토론회 준비, TV토론회, 민주노총 집회 지하철 유세, 정당연설회 |
| 1997. 12. 15 | ❖ 대우조선 · 대우병원 · 장승포 연안부두 · 대우조선 상집 간담회 한진중공업 · 침례병원 · 대우자동차 시외버스터미널 · 부산대 · 주리원백화점, TV유세 준비 |
| 1997. 12. 16 | ❖ TV유세 녹화 산청유세, 진주중앙시장, 마산창동4거리, 마창정당연설회 |
| 1997. 12. 17 | ❖ 울산출근 유세, 부산기자회견, 서울기자회견, 서울역 앞 신촌 · 건대역 · 대학로, 경제파탄책임자 처벌 다짐대회 |

6) 공화당

연 월 일

1997. 5. 15

1997. 8. 29

주 요 활 동

-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 ❖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선출

7) 기독교민당

연 월 일

1997. 1. 3

1997. 3. 6

1997. 7. 18

주 요 활 동

- ❖ 동래구갑지구당 대표자 변경(노양석 → 김문자)
- ❖ 강북구을지구당 대표자 변경(김현세 → 황영호)
- ❖ 부천시 소사구지구당 등록 (대표자: 이양복)

8) 민주국민연합

연 월 일

1997. 8. 18

1997. 9. 17

1997. 11. 30

1997. 12. 27

주 요 활 동

- ❖ 창당대회
- ❖ 당무회의
- ❖ 당무회의
- ❖ 전당대회

9) 바른나라정치연합

| 연 월 일 |
|-------------------------|
| 1997. 9. 1 |
| 1997. 10. 14 |
| 1997. 11. 27 ~12. 18 |

| 주 요 활 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 창당대회 및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대식 ❖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대통령선거운동 |

10) 통일한국당

| 연 월 일 |
|----------------------|
| 1997. 1. 3 ~10. 5 |
| 1997. 10. 10 |
| 1997. 10. 31 |
| 1997. 11. 3 |
| 1997. 11. 17 |
| 1997. 12. 2 |

| 주 요 활 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조직확장에 대한 방법과 실시요령 간담회 ❖ 전당대회 및 제15대 대통령 지명대회 주요당직자 개편 ❖ 대구광역시 시지부 결성대회 및 시지부결성위원단 선출 (위원대표 - 금동필 선출) ❖ 제11차 당무회의 ❖ 부산광역시지부 결성대회 및 시지부 결성위원단 선출 (위원단대표 부산 진구을위원장 - 공정수 선출) ❖ 제12차 당무회의 |

6.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가. 대한민국민주당

“가칭” 대한민국민주당 발기취지문

현정사를 돌이켜 보건데,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생활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불신풍조의 만연을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진정한 민주정당을 결성코자 온 국민이 함께 일어서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정치·경제·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

- 자유·평등·평화·민주의 바탕위에서 칠천만 동포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고,
- 여남노소 구분없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 건전한 민주정치를 전개한다
- 농업과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공병진책을 추진하며,
- 기계기술영농을 실현하여 농업의 증산, 농민소득의 증대를 기하고, 현재의 농산물 자급율 50%에서 장차 자급자족은 물론 농산물 수출국으로 발돋움케한다.
- 토지 정책의 부재로 빛은 득실로 국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치산치수를 실행하고 대대적인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확장하여,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균분책으로서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무주택을 일소하여 항구적인 생활의 안정을 이룩한다.
-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밝은 햇빛을 한없이 공급하여 공해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도덕성의 상실로 무지와 폭력이 난무하고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는 문교정책을 수립한다.
- 최신 첨단기계기술공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전국민의 1인 1기 교육 풍토를 정착시킨다.
- 국가발전이나 국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정 민주적인 민주정당이 대개혁당으로 '가칭' 대한민국민주당으로 이름하여 힘차게 발기하는 바이다.

1993년 4월 15일

“가칭” 대한민국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선언문

1945년 8·15해방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로를 말미암아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속에서 부패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60년대의 4·19학생세력과 6·3 사태를 거쳐 6월 항쟁에 이르기 까지 꽃다운 청춘을 민주제단에 바치면서 까지 그토록 민주화를 외쳐 왔기에 문민시대를 맞게 된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서구로부터 이식한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것으로 토착화 시켜야할 명제가 분명할 진대 우리 토양에 맞추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칠천만 동포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의 적응력을 육성했어야 했는데 뿌리도 시원치 않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기르고 있었으니 민주주의 나무가 제대로 커나가게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의 소치인 것입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장차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이땅에 민주주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각 지역이 서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와 지방사회의 격차를 없애고 함께 어우러져 잘 살게 함으로써 풍요한 국가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한미당 국회의원선거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원동력을 불러일으켜 동서의 깊고 높은 지역감정의 두터운 벽을 허물어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남북을 통일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5대 국회의원선거 및 단체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지역갈등을 정치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새시대 새인물 새정치를 겨냥한 대민당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제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사람', '권력과 유착하여 부당하게 치부하는 사람', '지역·학연 기타 계층간 편을 가르는 사람', '사업상 이권쟁취를 위해 출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당연히 지지해야 할 바람직한 후보자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당면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 '지역 자치행정에 밝아 이행가능한 실질적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주민을 위해 대변할 자질을 갖춘 사람', '선거법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악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여야할 것입니다.

지난 제14대 국회는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치부를 드러내 놓고 뇌물받은 공직자는 '나만 그랬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가 하면 가장 엄격하고 공정해야할 교수가 돈받고 사도를 팔아 황금만능을 구가하고 향락과 투기와 한탕주의가 난무하고 있으며 국민을 이끌어 나갈 정치는 간곳없이 사라지는 이면에는 온갖 흉악범죄와 사회악이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회의 한 단면이라고 GNP 5천불 시대를 자랑하고 세계 10위권내의 무역국이라고 큰소리만 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한심

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혼동의 가치관과 식상하는 정치 형태의 돌개바람 속에서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이기주의적인 타살을 배격하고 더불어 살리고 살아가는 공생, 공영, 공의 주위에 입각한 새시대 새인물 새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새정치 문화를 창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여명앞에 우뚝서서 영구히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숭고한 정치문화로 승화시켜 7000만 동포의 염원인 평화적 조국 통일을 쟁취하려는 대망의 큰 뜻을 지닌 대민당을 창건함으로써 새시대, 새정치 발전의 주역을 담당하는 자긍심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온갖 정성을 기울일 것을 역사앞에 다짐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대한민국의 깃발을 저 푸른 창공에 굳건히 올리려는 것입니다.

대한민당은 자유시장경제를 나라의 기틀로 삼고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난 숭고한 가치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진보적인 신기원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통한 선진국인 정치문화 창달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소명감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민족자각 시대에서 민족통일시대를 개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각 썩은 정당, 썩은 정치세력을 과감하게 몰아내고 이땅에 양심세력으로 형성하는 참다운 정치세력으로 새시대에 새이념으로 새인물들에 의한 새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심장의 고동은 힘차게 때리고 있으며 끓는 피는 역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까마득한 옛날에 저 만주벌판에 송화강과 중원평야 그리고 장백산맥을 누비며 한반도를 지켜온 고구려와 발해의 용지를 오늘의 우리시대에 통일조국으로 재현시킬 이땅의 주인공들을 육성하고 때를 지 않은 참신한 인재들을 모아 구심점을 이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설계는 너무도 시의에 맞는 신당창당의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공명정대하게 새역사의 전개를 말하고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햇불을 들고 선두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정당 저 정당 다 못 믿겠다, 이놈도 저놈도 다 도둑놈들이다, 그놈이 그놈인데 투표는 해서 무얼하느냐라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새로운 생기와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새롭게 참신한 새 모습으로 태어나는 신당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며 필연성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러한 현실을 좌시할 수만 없어 대개혁 신당으로 대민당을 힘차게 창당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절불굴의 역사적 사명감에서 새 정당창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새 시대에 새이념으로 새정치를 위하여!

심장의 고동은 귀전을 때리고 있으며 끓는 피는 역제할 길이 없습니다.

가자, 함성을 지르면서 민족통일과 새역사 창조의 민주최전선으로!

우리가 불타서 나라가 선다면

우리가 불타서 민족이 산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불타서 재가 되리라
거기서 태어나서 불사조의 생명력으로 부활하리라. 억압의 세월이 가도 끊어지지 않을 우리 민족의 핏줄로 영원히 반창하리라

충전하는 사기와 이글이글 끓는 열정으로 계층간 지역간 편중없는 국민이 만드는 국민을 위한 범민주세력이 총집결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정치를 위한 국민정당 출범의 진군나팔을 불었으니 각계각층의 애국애족하는 뜻있는 인사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동참을 촉구하며 큰 마음 큰 뜻으로 대민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1993. 10. 7

(가칭)대한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

대의원 유 정 길

나. 정명당

창당발기취지문

지금은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전환기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도도한 산업화의 물결에 힘입어 얻은 것이 많은 반면 잃은 것도 분명 있었다.

산업화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신 어두운 그림자도 곁들이게 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민주사회는 시민의식의 고양, 물질생활의 풍요로 더욱 자유로워 지고 더욱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산업화가 가져다준 밝은 면이며 자유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성과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생활사를 지닌 민족으로서의 긍지가 지금처럼 손상당한적은 없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수준의 도덕율과 생활풍습을 소중히 가꾸어 온 문화민족으로서의 보람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산업화가 가져다 준 어두운 면이자 우리가 시급히 바로잡아 나가야 할 과제다.

예로부터 동방사회에서는 예절과 도의를 숭상해온 모범민족이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과 같은 도덕부재의 상황을 방임해 두기엔 우리모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쯤 우리의 정신적 위상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일찍이 도덕사회를 이룩했던 문화민족이 설자리를 잃고 물질숭배주의와 개인적 이익추구에만 연연하는 풍조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다.

개인적 욕구만이 사회 공동선에 앞서 난무하는 세태는 다름아닌 산업화 사회가 드리운 그늘이자 내성이 강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수 없다. 오늘의 산업 사회는 우리의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지녔던 가치관의 틀을 깨

면서 그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깨트려버린 결과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 혈액과 같은 예의, 도덕을 숭상하는 생래의 인자를 말한다.

그것은 순결하고 아름답게 우리 내면세계에 배어있는 우리고유의 생활규범이자 생활철학이 아니던가.

물질제일주의가 어느 기성 가치관보다 선행지배하는 사회풍토에서는 인간 본래의 모습인 향기로운 도덕 문화마저 훼손당하여 악이 선을 누르고 부덕이 도덕을 이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도의 정신의 실종사태가 확산되어 사회병리현상은 극에 이르고 있다. 사회 구성원끼리 지녀야 할 인간다운 말과 행위, 인간다운 맛과 멋은 어느덧 비인간화의 모습으로 화석화되고 도덕주의는 설득력을 잃고 건전한 양식은 오히려 물상식으로 지탄받아 그 본래의 가치는 전락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인간 황폐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참담한 상념을 지울 길이 없다. 삶의 순수한 가치나 인간의 존재마저도 물질적 부의 척도에 의해 재단되고 저울질되는 도덕부재의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이자 그 죄값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값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경중은 있게 마련이다.

그 사회의 각계 지도층, 지식인, 교양인들이 더 많은 책임량과 죄값을 떠안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같이 사회규범이 파괴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간관계가 허물어 지고말면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자산인 자연환경까지 지킬수 없게 된다.

개인주의 물질신앙 풍조는 자연자산조차 그들 물질화의 거센 손아귀에 유린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 파괴현상은 곧 생명경시사상이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죄악임을 자각해야 한다.

예부터 착하고 어진 삶에 길들여져 온 우리사회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이그러진 자화상들을 부끄럽게 들어내 놓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도덕사회를 바로세워 놓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멀리 찾아나설 것도 없이 먼저 나 자신의 작은 정신개혁으로부터 가치를 올려야 한다.

사랑이 있는 기정을 만들고 정이 오가는 이웃을 만들고 나아가 인간이 참으로 존중받는 도덕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제각기 한가정내에서 부터 효의 정신과 우애의 정신을 되찾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는 도의 도덕을 신장시켜야하고 선악과 미추가 분명히 가려지는 새로운 풍토조성을 위해서 일대 정신문화운동을 강력한 정당 활동을 통해서 벌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명당(正明黨)(가칭)을 창당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온 국민이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 곧 도덕사회를 이룩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도록 정진 하고자 한다.

우리 정명당(가칭)은 다음 네가지 실천강령을 통해 도덕 사회건설의 한지표로 삼고자 한다.

첫째, 우리 각자는 도의정신과 사랑이 살아 있는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둘째, 어떠한 명분으로도 나 하나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 우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사회의 도덕정신의 타락상은 정치를 비롯한 모든분야에 나타나 있는 중증 현상이다.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이같은 풍토를 화합과 신뢰의 풍토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정화운동을 내 주 위에서부터 벌인다.

넷째, 도덕율과 사회규범에 대한 관념이 오늘날 같이 무감각해진 시대는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었다. 날날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도의 사회를 다시 만들려면 나 자신부터 검양과 자제, 희생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공존의 윤리부터 먼저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다. 자유민주연합 (1995. 4. 3 정당등록)

창당발기선언문

모이자! 뜨거운 가슴으로 自由民主聯合의 횃불아래!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연합의 창당발기를 선언한다.

자유민주연합은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고 신봉하는 정치세력의 연합체로서 노선과 색깔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념 창당임을 자부하며 한국정치의 새 기원을 이룩하고자 한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선 지금 세계는 역대 대전환의 큰 굽이를 돌며 격동하고 있다.

우리 또한 신세기 번영된 한국과 통일된 조국을 예비하며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앞에서 있다.

여기, 우리는 시대와 역사의 격변을 직시하며 민족사의 새 장을 열어갈 새로운 주도세력으로서 나라와 겨레에 헌신·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자유민주연합의 창당은 한국정치의 필연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원칙과 철학이 없는 국정의 혼돈,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국가사회의 불안과 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절대권력의 독선과 독단, 오만과 전횡 앞에 민주대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문민성의 강변은 이미 대중조작, 선동정치의 꾸밈말로 전락했고 세계화 또한 실정과 비정을 호도하는 자

기합리화,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변화와 개혁은 총동적 감각정치의 수단으로 왜곡, 변질된 채 터무니없는 기대감이나 예측할수 없는 불확실성만을 조장했다.

그들의 약속 또한 화려한 걸치레와는 달리 실체도 없이 공허한 표어나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더더욱 없다.

역사는 찢겨지고 전통은 끊겼으며 도덕과 신의는 망가졌다.

현재는 어둡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으며 인성은 사나워지고 화합은 깨졌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스럽다.

더는 이렇게 갈 수 없으며 고쳐야 되고 바꿔야 한다.

권력의 전유와 전단, 그 패권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주권재민의 의회민주주의를 체질화하고 토양화하여 국민속에 살아 숨쉬는 책임정치, 따뜻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

자유민주연합은 바로 이와같은 시대정신의 구현자로서 역사와 민족앞에 당당하게 나서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수호자로서 이를 구현하는 보루가 될 것이다.

특히 자유에 대한 신념, 민주에 대한 용기, 평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지키고 키울 것이다.

둘째,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며 항구적인 정치체제로서 권력의 분산과 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인 절대권력의 군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권력구조의 근본적 시정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국민주권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국가의사 결정의 본산으로서 국회의 권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가 최선의 길임을 거듭 확인한다.

셋째,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창조적 통합자로서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면서 참된 개혁, 변화와 진보를 즐기치게 추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기초적 바탕을 중산층에 두고 그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 신장할 것이며 농어민과 저소득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위하여 지원과 복지를 확충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타율과 강제를 배격하면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자율과 책임을 최선의 가치로 할 것이며 그 위에서 모든 사람이 개성과 창의에 바탕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의 자치시대를 열고 지방의 특색과 토양에 맞는 질 높은 삶을 이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민족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을 차분하게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지상의 체제부상이나 성급하고 환상적인 통일론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담당할 새롭고 능력있는 신진기예의 구심이 되어 그들의 이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연합은 진지한 모습으로 국민과 시대앞에 다가섰고 자유·민주의 횃불은 훨훨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도산업사회에 알맞은 구체적 대안과 살아있는 정책을 갖는 정당으로서 국민생활과 일체가 되어, 지지할 정당을 갖지 못한 유권자의 답답하고 텅 빈 가슴을 채워나갈 것이다.

분명, 자유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영속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정당으로서 한국정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소명을 수행할 가장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그리고 새시대를 담당할 가장 확실한 수권정당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거듭 다짐하고 확인한다.

우리는 급기야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는 창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민주연합의 발기를 만천하에 선언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의 지지와 성원과 동참을 뜨거운 마음으로 희원하는 바이다.

1995년 2월 21일

자유민주연합(가칭) 창당발기인 일동

라. 자유민주연합 (1995. 5. 31 정당등록)

합당선언문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합당하였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의 양당 합당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한다는 시대적 당위에 부응한 것으로서 또하나의 위대한 선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의 통합으로 이나라 자유민주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것으로 자부하며 우리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역사와 시대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게 국민행복과 나라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자유민주연합의 탄생으로 이나라 자유민주세력의 결집이 보다 가까이 다가섰음을 직시하면서 자유민주를 신봉하고 권력정치집단, 절대권력구조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 개인 모두의 연합과 단결을 위해 혼신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절박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절대권력의 독단과 전횡이 문제이고 정권의 무능과 정책적 오류가 또한 문제이다.
세계는 동하고 있는데 시대의 안목과 용기, 그리고 진실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나라가 부실하고 정치안정이 깨지고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중첩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고,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않고, 도의도 신의도 없는 정권에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은 정치체제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

우리의 현실, 이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정치체제는 바로 의원내각제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를 국민합의의 바탕 위에서 진지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역사장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이 더 큰 생명으로 국민과 시대앞에 다가섰고, 자유민주의 횃불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작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용기와 신념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사태를 결단하며 우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자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의 편달과 성원을 바라면서 배전의 질책과 사랑이 있어주기를 호소한다.

1995년 5월 17일

마. 신민당 (1995. 6. 27 정당등록)

신민당(가칭) 창당발기 취지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이하면서, 온갖 감회를 억누르고 참담한 심정으로 새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6.27 지자체 선거이후, 필연적으로 닥칠 정치적 지각변동과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비하여 야권의 어느쪽에도 흡수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의 여망과 정서에 순응하기 위해 신민당 창당을 발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폐한 야권을 새롭게 개편하고 무너진 아터를 다시 쌓아올려 부분적 견제 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적 야당이 될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역사관과 투철한 정치관에 따라 선택한 이 의롭고 외로운 길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야당창출에 밀알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애정 어린 지원을 보내주시길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정치사를 돌아켜 보고자 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민족혼이 파멸하고, 자유당 독재정권으로 정의가 사라졌으며, 군사 쿠데타 유신정권으로 참용기가 무엇인지 망각되었으며, 80년대 새로운 군사정권 아래서 애국·애족 사랑을 송두리째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군정종식」과 함께 종식되어야 할 「3김 시대」는 망국적 패권주의와 함께 반쪽 국토마저 영·호남·충청권으로 분할, 할거하며, 민족 숙원 대업인 조국통일 또한 멀게하는 독버섯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결탁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미래뿐입니다. 이 시간 현재의 집권여당은 어떻습니까? 찬란한 무지개 새정치를 꿈꾸게 했던 문민정부는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교육·교통 등등 모든 부문에서 가공할 각종사고의 뇌성벽력과 함께 좌절과 분노, 개탄과 실망의 늪으로 국민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당은 어떻습니까? 단체장 공천 대회장이 폭력·매수·비방·중상·음해·모략·야합으로 무법천지 그 자체를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자민련이라는 아당은 어떻습니까? 「7이 8보다 많다」는 해괴한 논리를 퍼면서, 전국구 보장과 돈뭉치를 앞에 놓고 인격과 지성,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간성 마저 원천적 매장을 시키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벌이고도 정직, 성실 정당이라면서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와 공작 정보정치를 통해 지자체 선거에서 몇석을 더 얻는다고 해서 웅비 2천년대 선진 한국건설 대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날 한국정치의 상향 발전을 위해서는 진실한 도덕성과 풍부한 인간성, 그리고 냉철한 지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허탈과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통일된 조국, 하나의 민족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감과 시대적 소망감을 거듭 자각해야 합니다. 민족구성원이 단순한 통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번영과 행복을 구가하는 「참 조국의 상」을 다듬어 낼 미래 지향적 정치풍토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곧 7.17제헌절이 다가옵니다.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이 나라 헌법이 누더기가 된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은 바뀌었고, 비록 헌법은 바뀌어도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해 왔고, 온존해 그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정치인들은 오늘도 교묘하게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질서와 정계개편이 되면 청산되어야 할 정치인은 반드시 청산시킬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이 국민에게 갚아야 할 최우선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수많은 정치인이 이합과 집산을 하는 동안, 솔하게 명멸되어간 정당들의 야합과 배신의 점철로 국민들은 이제 「선택할 정당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환골탈태의 기폭제로 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한줄기 찬란한 빛과 샘물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구국적 야권회복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신성하고, 국민은 숭고하며, 역사는 엄숙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민당 발기인들은 웃음을 머미며 국가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새출발을 선언합니다

동참바랍니다.

1995년 6월 5일

신민당(가칭)창당 발기인 일동

바. 새정치국민회의

새시대 새정치 새로운 내일! 창당발기선언문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에 서 있다. 갑작스런 냉전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급속한 변화는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지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 등 지식혁명은 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무역마찰과 시장개방압력은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며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흥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는 이러한 새시대 새정치를 위한 감각과 철학과 계획을 가진 정당이 없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미 사라진 냉전체제의 산물인 분단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는 동족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세계사적 대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민족의 에너지만을 분산시키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권이 역대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통일을 국내정치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 정권은 내일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임박한 남북통일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겨레의 지상명령일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을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현재의 김영삼정권은 국정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힘을 결집하여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통치방식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

다. 또한 현 정권의 오만과 편협에 가득 찬 국정수행방식은 온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6·27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김영삼정권의 독선과 무능, 인사 난맥, 표적사정 등의 실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새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의 출현을 바라는 전국민적 의사표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야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야당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당보다 사익을 앞세운 지도부의 극심한 타락과 지도력 부재로 국정에 대한 비판적 견제기능을 상실하였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눠먹기식 파벌정치로 당 관리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채 당권유지에만 급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격정과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야당파행에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끝까지 당내에 남아 개혁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야당의 틀로는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의 기능은 물론 수권태세도 불가능하여 도저히 새정치를 담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신당결성을 결심하게 되었다.

새시대는 새정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말로만 새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상한 다짐과 각오로 새시대 새정치의 역사적 국민적 부름을 받들어 새정치국민회의(가칭)를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혁신과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국내정치를 과감히 개방하고 개혁함으로써 민족사와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려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 민주적 개혁과 민족통일 그리고 21세기 대비는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안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존재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민정당으로써 다음과 같은 새 일을 하려한다.

첫째, 열린 정치를 지향한다. 세계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는 새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삶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종래의 지역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득권의 기반 위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바른 정치를 지향한다. 우리는 세계사적 변화추세에 발맞춰 소품종 대량생산의 거대기업주의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중심의 체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경제가 내일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따뜻한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새시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떠나갈 것이며 노·장·청의 결합에 의한 참여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중산층이 안정과 기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민층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시켜 갈 것이다.

넷째, 높은 문화와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는 문화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맞아 세계 각국 문화의 창조적 수용과 문화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준높은 민족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문화대국을 이룩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보산업, 첨단산업 등 지식혁명시대의 보루로서 대학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새시대를 위한 전문교육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위한 사회교육을 하는 등 교육입국의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섯째, 푸른 환경을 지향한다. 우리는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상의 모든 존재를 형제자매로 생각하

는 인간중심, 생명중시의 지구적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공해와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쾌적한 인간조건과 자연조건을 창출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이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맞이하는 통일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가 20여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온 3단계 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하에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일곱째, 희망찬 미래를 지향한다.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격변기의 21세기에 대비하고 WTO 체제하 경제무국적 시대의 도래에 적극 대처해감으로써 경제 5대국으로 진입케 하고 이를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되돌릴 수 있는 도덕적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새정치국민회의가 현재의 정치적 조건하에서 수평적 정권교체와 평화적 민족통일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유일한 선택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앞장서서 일관성있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선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일찍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민정치와 국민정당을 지향해왔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진정한 국민적 화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통일을 실현할 때 우리는 머잖아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우리는 새 구상과 새 리더십과 새 실천으로 새출발할 때 여러분의 새정치 국민회의는 이 새시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새정치국민회의를 발기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1995년 8월 11일

새정치국민회의(가칭) 준비위원회

사. 개혁신당

창당발기선언문

우리는 오늘 반민주적이며 부패한 낡은 정치구도를 혁파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정치, 깨끗하며 양심적인 도덕정치, 합리적이며 철저한 개혁정치를 실현하고 21세기의 자랑스런 조국과 선진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이를 앞장서 이끌어 갈 국민정당인 개혁신당(가칭)을 창당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민족해방과 분단의 역사 50년, 군사독재와 정경유착, 파벌싸움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구도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급변하는 세계의 개방과 경쟁체제에 더 이상 적응치 못하며, 과감한 정치개혁과 나라의 재정비가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민족통일도 세계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

열화같은 국민적 저항과 헌신적 민주화운동의 대가로 탄생하게 된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은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관된 방향이 없이 실종될 위기에 놓였으며, 지역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과 분당을 거듭하는 기성 정당들의 파행적 구조와 작태는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깎그리 앗아가 버렸다.

6·27 지방자치선거에 나타난,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체념, 삼풍백화점 붕괴로 상징되는 물량주의적 고속성장에 대한 절망과 허무감은, 이제 국민의 의사와 시대정신을 바르게 표출시키며, 인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관을 구현해내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없이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이며, 창당의 동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사 최초의 현대적 국민정당을 창건하려 한다. 개혁적 국민정당인 '개혁신당'은 30여년 민주화운동의 피나는 전통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합리적 정신위에 발전해 온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시민정당이 될 것이며 여러 형태의 시민운동과 단체, 각계의 전문역량, 그리고 양심적 인사들과 연대하면서 국민의사를 결집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의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낡은 정치세력간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망국적 지역할거 정치를 극복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국민통합정당, 전근대적 맹주정치와 봉당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정책정당을 건설할 것이며, 국민적 의지를 수렴하는 지속적인 개혁으로 군사문화의 잔재를 일소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민주적 개혁정당, 국민이 주체가 되고 당원의 총의에 의해 운영되는 참여 민주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낡은 정치 대신에 성실하고 정직한 시민들이 보람을 체험할 수 있는 바른 정치를 추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권모술수나 부패한 집단과의 야합이나 결탁이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도덕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참다운 개혁 세력에 의한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다.

우리는 개혁신당(가칭)은 모든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의사결정과 수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사회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생산적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결적 자세나 정략적 접근을 배격하고 남북한 화해와 신뢰 구축,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확고한 평화체제의 수립을 바탕으로 국내외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공영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와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활기차게 번영하는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성실한 시민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 속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추구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명존중의 녹색사회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성에게는 보다 많은 권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당찬 꿈을 펴고 활기차게 커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참여시대의 민주정치는 더 이상 정치꾼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족과 사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국민 모두의 집단적 예술이다. 우리는 기성 정치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우롱당해서도 안된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우리들 국민 모두의 손에 놓여져 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이루듯, 우리들 모두의 작은 의지를 모두어 거대한 희망의 탑을 쌓아 나가자. 일터와 가정, 사무실과 시장, 도시와 농촌에서 시민들의 소박한 지혜와 정성, 작은 힘들이 개혁신당의 깃발을 향해 달려나갈 때 넓은 정치의 두꺼운 벽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밝은 정치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정치, 도덕정치, 새 정치의 새 날을 열어갈 개혁신당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국의 미래를 국민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역사적 대장정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뜨거운 성원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1995. 11. 1

개혁신당(가칭) 창당발기인 일동

아. 21세기한독당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참으로 온 국민을 감동케하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는 한국현대사의 신선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이 영도했던 빛나는 항일독립투쟁의 민족정통정당인 한독당 동지 등 일제치하 독립운동애국지사들과 박정권 이후 처절한 민족민주화투쟁을 일관되게 해온 30~40대 민족민주화 운동세대, 그리고 현대산업사회의 국가발전의 동량인 사회 각계의 전문가, 참신한 신진인사가 하나가 되어 답답한 오늘의

한국정치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의 참된 민족민주정당을 결성할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피로써 지켜온 선열들의 민족자주정신이 '세계화' '국제화'의 구호 흡수 속에 매몰되고 민주정치의 최소한의 기본원리인 국정운영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깜찍발상'과 '깜찍구호'에 의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깜찍정치'로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반독재 민족민주화투쟁의 상징,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적 지도자로 군림해온 김대중씨의 학살원흉으로부터의 20억 정치보험료 수수! 군사쿠데타의 원조인 김종필씨의 교활한 정치생존! 30~40년의 피어린 민주항쟁의 총결산으로써 가져온 오늘의 망국적 지역할거주의 정치 등 역사의 시계를 30년 40년 거꾸로 돌려놓은 신물나는 3김정치를 투쟁으로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유일의 부끄러운 분단국가, 못한 우리민족의 자화상을 겹겹히 반성하고 결연히 뭉쳐 군사독재정권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을 걸고 광명의 횃불을 치켜든 초발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과업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상해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이 영도한 한독당은 1930. 1. 25. 이시영, 김구식, 조소앙, 이청천, 여준, 이탁, 현익철 등 우리 민족운동사에 우뚝 선 항일독립애국지사들이 피로써 결성하여 일제와 항거하여 빛나는 업적을 쌓았고 8.15해방후엔 민족분할반대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한 우리 민족정통의 정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범 선생과 풍찬노숙을 같이하며 민족자주를 지켜온 애국독립지사들과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이 땅의 민주화의 횃불을 밝혀온 젊은 민주세력,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양심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지러운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민족의 새 희망을 꽃피우고자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엄숙히 밝히는 바입니다.

1996. 1. 27

21세기한독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21세기한독당 창당선언문(안)

21세기한독당 창당선언문(안)

오늘 우리는 21세기한독당 창당을 선언한다.

민족수난의 상징, 민족자주의 영원한 사표인 백범 김구선생이 영도했던 한독당 재건에 성공하여 마침내 온 겨레와 함께 가슴 벅찬 민족적 자긍심과 환희의 기쁨을 터트리며 21세기 미래를 향한 힘찬 진군을 선포한다.

21세기한독당은 우리나라 건국정신의 법통으로서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선생의 한독당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정통의 민주정당"임을 온 겨레와 세계만방에 알린다.

21세기한독당은 백범 김구선생과 풍찬노숙을 같이하며 민족자주를 온 몸으로 지켜온 애국독립운동지사

들과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이 땅에 민주화의 횃불을 밝혀 온 민족민주운동세력, 현대산업사회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각계 전문가 그리고 범민족양심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일어섰다.

21세기한독당은 어지러운 오늘의 한국정치의 어둠을 걷어내고 21세기 우리민족의 위대한 새 시대를 활짝 열고자 하는 진정한 국민정당이며 21세기 민족자주의 민족통일의 꽃을 피워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시대를 청산함으로써 세계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굳건한 민족의지의 결정체이다.

이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분쇄될 것이며 민족대단결의 올바른 기치아래 모두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피를 마시며 애국의 꽃을 피워 온 참으로 쓰라린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일제치하 36년간 우리 애국민중은 이름도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던가?

8·15해방이후 남북이 갈라지면서서 외세와 결탁한 반통일적 친미·친소정권은 또 우리의 민족주의를 얼마나 유린했던가?

민족주의를 정치세력화하려 했던 수많은 민족인사들은 역사의 뒀안길에 또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가?

백범 김구선생은 왜 백주에 유혈이 낭자한 채 쓰러졌는가?

외래의 냉전세력과 아합한 민족배반자 집단만이 우리 근대역사의 무대중앙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온갖 매판·사대의 굶판을 벌여왔던 오욕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바로 잡겠는가?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이승만정권! 일제의 황군장교였던 박정희 군사정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애국민중들의 민족노래까지 금지시킨 전두환 군부독재! 이러한 반민족 세력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김영삼정권! 김대중씨의 망국적 궤변론 "지역균등주의"의 공로로 기사화생하여 4당구조에서 온갖 반동을 일삼는 6·3한일굴욕외교의 주역인 김종필씨의 정치생존! 오로지 선거에서 표 얻기에 좋으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원칙도 철학도 땀내음도 내다 버리고 상류 기득권 인텔리 정치를 상품화시키는 통합민주당! 전두환 노태우씨의 검은 돈을 받아쓰고도 양심선언과 함께 정계은퇴선언을 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오늘의 정상배들! 오늘의 한국정치질서를 뒤죽박죽 어지럽게 파탄시켜 놓고도 온갖 허장성세하는 우리의 정당지도자들! 정치와 정당의 본질과 근본은 완전히 실종되고 정상배와 정객들만이 먹이를 좇아 불나비처럼 표류이합집산하는 오늘의 우리 정치자화상! 국적없는 세계화 구호홍수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노랑머리 일본식 머리가 TV를 통해 온 국민의 안방까지 뿌리 채 흔들고,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대가로 요구한 국민고통분담정책은 대기업, 소수 특권층의 권익만 증폭시켜 주었을 뿐 중소기업, 농어민, 노동자, 봉급생활자 등 서민대중의 고통을 버랑 끝까지 가중시켜버린 파행적 개혁정치……

온 국민은 분노하고 시위하기에도 지쳐 버렸다.

기존 정당은 민족내부의 갈등, 증오, 대립의 인자를 조정 제거할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역감정, 도농격차, 세대간의 갈등 등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정당은 전무하다. 오히려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욕 충족을 위하여 지역갈등, 세대갈등, 민족내부 갈등 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악덕 정객들의 추악한 정치행태이다.

이제 21세기한독당은 오늘의 기성 한국정당정치의 총체적 파산을 선언한다.

정당부재, 정치부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원칙도 이념도 없이 오로지 권력지향의 세불리기의 이 전투구판으로 전략한 정치공황의 시대임을 선언한다.

반외세 민족자주의 동학농민혁명, 의병항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의 광복투쟁, 6·3한일굴욕외교 반 대투쟁의 대하의 역사와 4·19학생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도도히 흐르는 민족민주혼을 되살리는 21세기한독당은 바로 이러한 혼돈의 시대, 세기말적인 전환기 시대에 방향유리하는 우리 애타는 민중들의 한복판에서 작은 불씨를 지피 마침내 노도와 같은 위력적인 희망의 새로운 정치대안세력으로 등장하였다. 21세기한독당의 창당은 역사의 필연이며 민족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21세기한독당 깃발은 온 거래의 염원을 받들어 반만년 유구한 우리역사 위에 드높이 그리고 선명하게 펴리고 있다. 민족의 전통과 얼을 잇는 뿌리있는 진정한 국민정당, 21세기 민족자주의 민족통일정당으로서 위대한 국민정치시대, 위대한 민족의 새 시대를 활짝 꽃 피울 것이다.

온 거래의 가슴가슴마다에 백범 김구선생의 숭고한 민족정신, 삼균이념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자!

1996. 3.

자. 무당파국민연합

“무당파 국민연합”(가칭) 발기취지문

- 엄청난 변화와 변혁의 시대로 예견되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정치는 과거의 잘못된 폐습과 관행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스스로 탈피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오늘의 정치작태는 자율화, 지방화,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국익과 민생을 보장하지 못한 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시대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정인을 중심으로 사당화된 박제정당들의 명당정치는 청산되어야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보스의 사병, 권력의 시녀로 전략한 정치인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제하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부패하는 것은 국가가 무능하고 무력화 되었을 때 오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정치단체, 정치인은 당리당락과 개인의 정치 야욕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위한 올바른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당리당락의 결투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당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지금의 정치판은 국민심판에 의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 절대권력은 성역을 만들어 독선과 부패를 잉태하고 국가적 비리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정한 한사람이 초헌법적인 절대권력을 가지고 국민앞에 군림하는 정치형태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은 우리의 짧은 헌정사를 통해서도 보아온 진리입니다. 초헌법적 절대권력을 가지고 왕조시대를 방불케 하는 특정한 한사람의 독단정치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만을 줄 뿐입니다. 절대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을 견제, 감시하고 탄핵할 수 있는 민주정당의 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정치는 도덕을 중시하고 국민신뢰와 정치신의를 생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해야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온갖 정치적 부정과 연루된 자들이 자신의 과거와 부정은 은폐한채 상대방만을 비방 모략하는 부도덕한 정치작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을 정치인의 생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 민주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고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개혁이나 정치적 명분으로도 시민(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력을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적인 것입니다. 시민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대화합으로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한탕주의식 즉흥 통일외교는 무분별한 이념논쟁과 국민혼란 만을 초래합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민여론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반복, 사정과 보복이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종식시키고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며 국민대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숭고한 민족정신과 빛나는 전통문화의 선양으로 자주적 주체성을 가지고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새시대에 새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애국적 민주세력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기존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한 이시점에서 4.11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정치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여 오늘의 정치판도에 부동하지 않는 양심적 민주인사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국리민복을 위한 사명감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전국 무소속 동지들을 연대하여 오늘의 망국적 정치구도와 정치병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 피우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무당파 국민 연합”(가칭)을 발기하는 바입니다.

1996년 1월 23일

“무당파국민연합”(가칭) 발기인

차. 공화당

발기취지문

21세기를 향한 큰 응지의 나래를 펴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온 국민이 염원하고 민주화에 대한 이념에 부응하고 새 정치를 창조하고 도덕에 의한 평화의 정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공동체 화합의 당을 출현시키고자 발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존 정당인들의 권위주의와 파벌, 금권에 좌지우지되는 정치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를 과감히 청산하고 온 국민이 풍요로움 속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폭넓은 관심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21세기에는 범세계적인 국가로 발전을 해갈 것입니다. 국민의 정당으로써 국민대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단일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소외된 자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이룩함과 동시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함과 함께 세계평화가 성취되는 날 오늘의 이 출발이 보람찬 열매를 기억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에 공동체화합의 당을 발기하는 바입니다.

1997년 5월 15일

공화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선언문

세계는 21세를 맞이하여 대변혁과 대혁명이 일어나고 각국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여 우리나라도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포위망 속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형편은 어떠한가.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인 대통령은 어진 마음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나라와 국민은 사랑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고 나라는 도덕의 타락과 더불어 부패와 혼란은 극에 달하여 위기에 처하여 목표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의 선진화가 곧 국가발전을 가능하는 기본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오늘의 한국적 정치상황은 혼란과 갈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구정치인과 구정당은 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 발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권모술수나 쓰고 당리당락에 눈이 어두웠고 부패한 정치에 오염되어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하여 부패한 구정치인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 시대다운 정치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오직 개혁으로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도 개혁 하나 한 것이 없고 정의가 살아 숨쉬고 올바른 법의 운영이 있어야 하는데 정의는 없고 도덕과 법은 죽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못 믿고 법도 못 믿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나라 발전을 위하여 누구하나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힘과 정신과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제하고 국민을 도탄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결연히 궤기하여 새 정치를 하고자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국민연합(가칭)의 정당을 만들어서

1.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정치를 실행하고
2.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실천하고
3. 풍요로운 경제정책을 실천하고자 신당을 창립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종래의 정치인들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다운 정책이 없었음을 개탄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계를 내다보고 미래를 통찰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사람끼리 모여서 새 나라를 재건하여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신당을 발족하는 바이다.

1997년 8월 18일

민주국민연합

타. 국민신당

발기취지문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21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보혁명과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민족의 좌표를 밝히고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역동적으로 결집해야 하는 엄숙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질서와 병든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치, 지역패권주의 정치, 비생산적인 정치, 이 모든 낡은 것들을 우리는 결코 그냥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젊고 강하며 희망이 있는 정치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교체를 통하여 정치의 명예혁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치, 깨끗하고 신뢰받는 생산적인 정치의 틀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 뜻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정당을 만들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정당은 한국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우리당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인 인간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사회는 사람이 제일 큰 자원입니다. 인재야말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한 제도개혁과 실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창의의 활기찬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과 창의를 계발시켜 모든 일터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셋째, 풍요롭고 희망찬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문화를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감동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믿음과 감동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겨레가 함께 살며 더불어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주도적인 외교를 통해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이 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유일한 선택임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대적 정신과 미래를 향한 소명은 용기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격변의 대지 위에 결연히 서서 보람찬 미래를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의 바다에 몸과 혼을 맡겨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며 동참을 기대합니다.

1997년 10월 14일

창당발기인 일동

창당선언문

대망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에게는 부강한 세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21세기 젊고 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신당 창당의 가치를

드높이 올린다.

지금 이 나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 위기와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치열한 세계경쟁시대의 거센 파도를 넘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절망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이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제 우리 국민신당은 이 나라의 혼란과 침체의 병을 치료하고 흔들림없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우뚝 설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은 변화와 창조 시대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는 장이고, 미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나라의 올바른 진로가 열린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세대교체에 의거, 사회적 분위기를 혁신하지 않
으면 안된다.

원로세대의 지혜와 경륜으로 방향을 잡고,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동력으로 삼아 민족발전의 새
로운 틀을 짜야 한다.

지나간 시대를 지배했던 낡은 가치, 지역갈등, 이것을 극복하여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신당은 온 민족의 창의와 힘을 하나로 모아 21세기 강한 한국을 향한 국민행진의 선봉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 국민신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당이 되고자 한다.

우리 국민신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실현하며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고도지식 정보화사회를
건설한다.

우리 국민신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자연을 보존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
며 삶의 질이 높은 문화사회 공동체를 실현한다.

우리 국민신당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이제 우리 국민신당은 온 국민의 활기차고 신명나는 삶의 터전을 가꾸는 역군이 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정치가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시대에 뒤쳐져 있다.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는커녕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낡은 정치를 혁파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만이 희망찬 새 시대를 보장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신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정치시대를 열어갈 정치 명예혁명의 기수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신당은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 국민의 다정한 친구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세계중심국가, 젊고 강한 한국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1997년 11월 4일

국민신당

파. 건설국민승리21

건설국민승리21(가칭)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부패정치와 봉당정치의 사슬을 끊고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고자「건설국민승리21」(가칭)이 하 약칭 국민승리21)의 깃발을 세운다. 참여와 민주를 요구하는 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고 부패와 야합만이 판을 치는 정치현실을 혁파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는 진보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 도

시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들이 앞장설 때만 우리의 21세기는 희망일 수 있는 것이다. 치졸한 보수경쟁을 일삼는 기성정치세력을 물리치고 참된 개혁과 진보의 정치를 펼 때 우리는 정권교체와 세대교체를 뛰어넘는 진정한 '세력교체' 를 이룰 수 있다.

바로 국민승리21(가칭)이 이 일을 해내고자 한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니설 수 있도록 국민승리21의 대통령후보가 앞장서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자 하는 것이다.

진보는 우리의 희망이자 현실이다. 부패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개혁과 진보의 새싹은 피어나는 것이다. 수구의 망령을 눌러 버리고 정권교체의 허울 뒤에 가려져 있는 보수회귀의 칼날을 꺾어 버리고, 세대교체의 기만 속에 숨겨진 문민독재의 유산을 엮어버리고 진정 무엇이 6월항쟁 정신의 계승이고 무엇이 21세기의 희망인지 우리는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한다.

국민승리21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 대중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또한 땀흘려 일하는 보통 봉급생활 자들과 평범한 납세자들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함을 밝힌다. 국민승리21은 21세기 한국의 미래가 수구나 보수가 아니라 민주와 진보에 달려있음을 선언한다. 분단과 예측과 억압의 악순환을 끊고 통일과 자주 · 민주를 위해 앞장서 온 사람들이 진보정치의 주역이 되어야함을 천명한다.

국민승리21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진보적 대중정 당으로 발전해 갈 것을 역사 앞에 당당히 선언한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은 모두 오라! 세상을 바꾸려는 포부를 가진 이들도 모두 달려오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승리21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오늘의 힘찬 출발에 함께 우리는「건설국민승리21」(가칭) 의 창당 발기를 선언한다.

1997년 11월 7일

건설국민승리21 (가칭) 발기인 일동

‘21세기한민족공동체(가칭)’ 창당 발기취지문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 민족호는 큰 풍랑을 만났다.

우리 민족호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경제의 풍랑, 정치의 풍랑, 안보의 풍랑, 도덕과 윤리의 풍랑, 영적인 풍랑….

이 풍랑 속에서 위태롭게 항해하던 민족호는 구멍이 나서

여기저기 물이 팔팔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칸에는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타고 있는 칸에도 물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바로 지금이 나라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이 위기가 온 것은 우리 민족의 존재 가치를 밝혀주고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온 국민을 힘있게 이끄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국민정신이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묵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 29:18)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국민정신은 사랑이다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흘러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사랑이 흘러

“민족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온이즘이 있고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듯이

역사속의 부강한 나라마다 국민을 이끄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려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민정신은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노사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기업이 살아나고

여야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정치가 살아날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와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민족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학원폭력도 사랑의 결핍에서 왔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친구를 해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사회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민정신은 자기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민족을 살립니다.

또한 이 사랑은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지구촌의 가족으로 인류역사에 기여케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민을 존경하고 21세기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자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

어떤 분들은 힘없는 것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사랑하면 자기희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짊어집니다.

사랑은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사랑은 무한히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주인은 그 가정의 문제를 남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있고 이제는 너와 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나 때문'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

또한 사랑은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행하는 것이 곧 의(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할 때 우리는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을 때 그를 돌이키게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그 결과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정이 사라지며 범치는 더욱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라면 이해해주고 도와주어서 바르게 세게 하고 의도적인 악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가능성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

사랑은 모든 가능성을 결집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치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한몸으로 일하는 것 같이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싶어하며 섬기는 힘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모아서 함께 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은 우리나라가 지닌 교육적 잠재력과 각 분야의 인적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일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은 범국민적 차원의 각성운동이 일어나야만 한다

대통령선거보다 먼저 국민적 차원의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외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각성하여

사치 및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절약하며 검소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일제의 위협 속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듯이

외채를 갚기 위한 국민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랑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각성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의 북한의 모습은 내일의 우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사전경고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역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총체적 국가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민족의 위기상황에 근본적인 해답을 갖고 있는 정당,
온 국민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정당,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

온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당,

이러한 정당을 이끌 수 있는 새 생명의 무리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은 참된 의미에서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과거의 것을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현재의 잘못된 점을 고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참된 세대교체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창당함

오늘의 문제를 치유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21세기의 통일한국을 이룰

우리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97년 12월 18일의 대통령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는 숙연한 심정으로 지연, 학연, 혈연, 이권, 금력, 권력의 압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나
민족호를 구해내는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거짓과 부정부패와 권모술수의 탁류로 가득 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깨끗한 정치,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고

21세기의 세계사를 이끌어갈 새 나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의 사랑이나 애국이 아닌 참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가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결성된 “21세기 한민족공동체(가칭)”를 창당하고자 발기하는 바입니다.

7. 정당의 강령 · 기본정책

가. 대한민주당

정강정책

정치이념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정치이념은 홍익인간 정신을 중심 삼은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나라의 기틀로 삼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한다.

이 시대의 당면 과제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화합과 국토통일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선진산업 사회로의 성장에 있다.

한편 고도 산업화의 부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소외와 비인간화를 극복하여 인간성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난 한 핏줄이라는 공존, 공영, 공의, 공생주의에 입각한 동일한 이념으로 정의한다.

분단된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에 이르기까지 7천만 우리동포는 혈연공동체이자 자연공동체이고 또한 문화공동체로서의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평화통일 개념에 입각한 안보, 외교,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등을 종합 꽃피우는 숭고한 정치문화 창달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체성과 독창성이 있는 개방적인 대중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것이며 세계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모든 영역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육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 ◎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고도산업사회 성장
- ◎ 통일된 민족국가를 위한 숭고한 정치문화 창달
- ◎ 국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선진교육문화 계발

강 령

1. 우리는 문민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참되게 실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참된 정치를 구현한다.
2.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균형있는 분배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

- 지국가를 건설한다.
3. 우리는 정의가 모든 사회활동을 지배하고 봉사과 사랑이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는 공존공생, 공영의 공동사회를 건설한다.
 4.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자율을 누리고 법의 질서 속에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교육받는 사회건설에 총력을 경주한다.
 6. 우리는 토지주택 및 물가정책을 혁신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안정을 이룩한다.
 7. 우리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주적인 외교 노력과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승화시킨 숭고한 정치문화 창달로 평화통일을 앞당긴다.
 8. 금융실명제나 토지정책 등 현 경제정책은 가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편중된 경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서민대중 편에 서서 중산층의 벽을 두텁게 하는 참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9. 민족적 망국병인 호남 대 영남 등 지역분열의 담을 헐어버리고 혁신적 정책정당으로 동서를 통일하고 남북을 통일하는 정통정당정치를 계승해 나간다.
 10. 연령에 관계없이 민주화에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참신한 세력의 집합체로서의 세대교체와 정치의식구조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자각의 시대에서 통일시대를 개막할 참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기본정책

1. 건전한 정치문화를 창조한다.

- 가.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한다.
- 나. 각종 선거는 국민의 의사 표시가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 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월권과 부정과 부패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라.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 즉 언론, 집회 결사 연구 및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마.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완전독립을 실현한다.

2. 경제발전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을 이룩한다.

- 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균등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여 경제 행위의 자유를 극대화 한다.
- 나. 도덕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경 유착을 방지한다.
- 다.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발전 분야에 적극 지원한다.
- 라.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한다.

3. 농업을 과학화하고 수산업을 진흥한다.

- 가. 농업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토확대 정책과 영농지원을 극대화 한다.

나. 어민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을 최신 장비로 지원한다.

다. 농어민의 자녀교육의 환경을 개선한다.

라. 농어민의 생산보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바. 영농기술의 기계화와 수산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수립한다.

4. 복지 사회를 이룩한다.

가. 범죄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나.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실, 지역감정, 학연 등의 얽힌 부조리를 일소한다.

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한다.

라. 실업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확대한다.

마. 사회 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현실화 한다.

바. 노인과 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사. 남녀차별을 일소한다.

5. 교육제도를 개선한다.

가. 국민 평생교육제도를 실시한다.

나.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재수생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증설한다.

다. 근로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시설을 확충한다.

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시설을 확충한다.

마.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6. 토지이용과 주택건설을 효율적인 국토개발로 국민복지 향상과 연계한다.

가. 서·남해안의 대대적인 간척사업 시행으로 국토를 확장하여 농경지, 주택용지, 공업용지 등을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다. 대도시 근교의 산림개발로 택지를 공급한다.

라. 국토개발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활용한다.

마. 토지의 개발 사용 수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와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인의 기업활동과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바. 토지의 소유는 특정인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영화 한다.

7. 공해방지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한다.

8.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달성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가. 전문문화를 보전하고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존, 공생, 공의주의로 평화통일을 앞당긴다.

나. 정치, 경제, 교육문화, 체육, 군사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 확대한다.

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9.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순환 고속도로를 조속히 건설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및 준고속 횡단도로 건설에 역점을 둔다.

10. 산업화에 따른 공해물질과 화학 폐기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화체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오염의 광역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나. 신민당 (1994. 7. 8 정당등록)

강령 및 기본정책

전문

우리 신민당은 안으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 밖으로 인류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갈 합리적 역량을 갖춘 민족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이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적 시민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시장경제, 정의로운 시민복지 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성, 계층성, 세대성의 근원인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여, 모든 한민족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국민시대를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정강

1.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민족적 시민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민적 정치세력의 결합체이다. 당은 퇴행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를 배격하여 일체의 반국민적, 반민족적 태도로부터 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이 자유롭게 발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2. 깨끗한 정치, 생산정치, 책임정치, 국민정치로 국정을 개혁한다.

3.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단결을 위해 상호보완적 남북경제교류에 의한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을 주도한다.

- 통일, 안보, 경제 등 각 부문간 주체적, 유기적, 입체적 외교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증대한다.
- UN헌장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개척하여 세계평화에 적극 이바지 한다.
4. 합리적 시장경제의 발전과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향상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
5.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도농간 등의 갈등을 해소하여 근면과 정직을 존중하는 사회, 민생이 안정된 복지시민사회를 이룩한다.
6.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으로 시민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7. 창작표현의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시대와 통일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문화, 창조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한다.
8. 지속적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을 실현한다.
9. 평등한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의 환경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10. 국민모두가 삶의 표준 질을 높여 합리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한다.

다. 정명당

정 강

우리 정명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양심이 살아 있는 도덕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도의를 진작하고 의식을 개혁하여 국민의 가슴마다에 내재하는 높은 도덕율에 바탕한 도덕사회를 건설하는 일과 아울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

주적 민족역량을 총집결하는 데 매진한다. 이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광범한 개혁을 추진할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정치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한다.
2. 민족적 자주외교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여 국제화 시대의 일익을 담당한다.
3.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 경제를 구현한다.
4. 정도와 도의를 숭상하여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함양하고 윤리도덕과 양심이 지배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사회를 이룩한다.
5. 교육의 근본을 인격도야에 두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도덕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밝은 사회가 실현되도록 한다.
6. 민족 고유문화를 진작하고 민족정신을 발휘하여 국민의 정신적 긍지를 고취한다.
7. 효도정신과 경노사상을 함양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선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8. 산업화와 향락산업으로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철저히 보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9.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외교활동으로 평화적 남북 통일에 앞장선다.

정 책

◎ 정치 : 부도덕한 정치에서 도덕정치로

1. 정치의 부도덕성과 권위주의, 독선과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정당의 합리화를 기한다.
2. 당리 당략의 폐단을 배격하고 생산적 정책개발로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3.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습을 일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된 공직자 사회를 확립한다.
4.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개선하고 자치제의 내실을 기한다.
5. 부도덕한 정치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하여 정계로부터 은퇴시키는 제도를 추진한다.
6. 민족적 자존과 자주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능동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한다.
7. 한반도 주변국의 변화에 따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화적 통일의 주역이 된다.

◎ 경제 : 균형적 경제

1.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부의 편중을 배제한다.

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경제적·기술적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편의를 도모한다.
3. 농촌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외 소득증가를 위해 영농기술의 제공과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4. 어촌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5. 서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한다.
6. 국토개발의 효율화로 지역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 사회 : 도덕 사회건설로 부조리 척결

1. 공중도덕 계몽운동으로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한다.
2. 의식 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명랑한 사회를 이룬다.
3. 총체적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 도덕성 회복을 위해 도덕사회추진 기본법을 제정한다.
5. 도덕 사회건설을 위해 도덕사회건설 추진위원회법을 제정한다.
6. 건전한 가정이 도덕사회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의 행복과 가정교육의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 교육 : 지적 교육과 도덕교육의 병행

1.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한다.
2.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어떠한 부류의 학교를 나왔어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3. 교육의 본질을 인격도야에 두고 사회 각 분야의 참된 일꾼이 되도록 한다.

◎ 문화 : 민족 전통문화의 고양

1. 외래 퇴폐문화를 배격하고 민족 고유문화를 전승시켜 민족의 얼을 심게 한다.
2. 민족문화와 외래문화의 조화로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인다.
3. 민족 전통문화를 진작하고 충효사상을 함양한다.

◎ 복지 :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복지에 이바지 한다.

1. 불우한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선한다.
2. 극빈자와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개선한다.
3. 지체부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법을 개선한다.

◎ 환경 : 자연보존과 환경정화

1. 자연보존을 위해 골프장 건설을 적극 억제하고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한다.
2.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한다.
3.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 통일 : 상호신뢰 구축으로 통일을 앞당긴다.

1. 남북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 비방행위를 지양한다.
2. 상호협력적 경제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
3.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민족상호간의 왕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긴다.

라. 자유민주연합 (1995. 5. 31 정당등록)

정 강

[1995. 5. 19 제정]

우리는 근대화로 이룩된 광복 50년의 국가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민주정치를 확립하고 민족 재도약의 웅대한 역정을 펼쳐야 할 신세기 앞에 다가서 있다.

여기,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이 시대의 소명을 수행할 가장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토대로 모두가 훈훈하고 보람있게 사는 선진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민족대통합의 위업을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하여 권력의 독선과 전횡을 막고 의회의 권능을 확립하여 주권재민의 참된 책임정치를 실현한다.
2. 우리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고 지방의 특색과 토양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천한다.
3. 우리는 질 높고 안정된 성장속에서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고 농어민, 노동자 및 저소득층 모두의 중산층화를 위하여 지원과 복지를 확충한다.
4.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 고도지식산업사회에 부응키 위하여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킨다.

5. 우리는 도덕과 신의가 지켜지며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를 건설하여 모두가 서로 믿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우리는 교육의 기본을 인성의 함양에 두고 교육의 자율화로 개성과 창의를 제고하며 문화예술의 창달에 진력한다.
7. 우리는 민족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견지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체제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을 차분하게 추구한다.
8. 우리는 안보를 굳건히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능동적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성원이 된다.

기본정책 [1995. 5. 19 제정]

1. 책임정치의 실현

(1) 의회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국민주권의 원천으로서, 국가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2) 효율행정을 이룩한다.

집권확고되고 비대화된 중앙정부의 행·재정 기능을 효율화·간소화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한다.

(3) 선거문화를 선진화한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공명정대하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4)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한다.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모든 공직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한다.

(5) 법질서를 정착시킨다.

법과 정의와 도덕이 생동하는 선진시민사회를 이룩하여 안정속에 국민의 생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총체적 치안능력을 제고한다.

(6) 지방분권화를 실현한다.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행·재정적 자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여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한다.

2. 경제정의의 실현

(1)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사회적 능률을 제고하고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계층간·산업간·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한다.

(2)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룩한다.

안정 우선의 경제운행을 지향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세부담을 경감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룩한다.

(3) 중산층의 폭을 넓혀 나간다.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며 영세 소상공인과 도시 자영업자 등 서민계층을 중산시민으로 끌어올려 중산층의 폭을 넓혀나간다.

(4) 산업평화를 이룩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공존공영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

(5)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6)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7) 국민의 주민권을 보장한다.

세제·금융 등 제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주거환경을 꾸준히 향상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3. 중소기업의 육성

(1)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제활력의 원천으로서 중견기업군을 집중 육성하여 국제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2) 중기업을 전문화한다.

중기업이 부품사업군으로 전문화, 집산화되도록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협업관계를 정착시킨다.

(3)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4)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룩한다.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

4. 국제화·개방화를 대비한 농림수산업의 진흥

(1) 농림수산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농림수산을 전업농으로 지원·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2) 농지이용을 효율화한다.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를 보전하며,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유와 이용을 효율화한다.

(3) 농어민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농어촌의 문화·생활편익지역을 확보하고, 농어민 자녀의 고등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하여 농어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킨다.

(4) 농어민의 재해예방제도를 확립한다.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등을 개선한다.

(5)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지역별 농수산물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며 산지유통을 촉진한다.

5. 교육 개혁과 문화의 창달

(1)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상실된 인간성과 무너진 가치관이 복원되고 자율과 창의와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

(2)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고도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생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제도를 확립한다.

(3) 사학을 보호·육성한다.

사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한다,

(4)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을 제고한다.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과 패기를 진작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젊은 세대들을 신세기 선진한국을 이끌어 갈 주도세력으로 육성한다.

(5) 선진문화국가를 건설한다.

전통, 고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앞서가는 세계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선진문화국가를 건설한다.

6. 창조적인 연구와 과학기술진흥의 지원

(1)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한다.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진흥을 위하여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세제지원과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2)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보통신망의 투자확대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보의 생활화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3) 미래형 전문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정보, 통신, 항공분야 등 21세기를 주도할 미래형 전문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한다

(4) 국제적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의 연구소, 대학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7. 국토개발의 질적전환과 균형있는 지방사회 발전

(1) 사회간접자본건설을 확충한다.

공동자본의 투자확대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항만, 도로, 철도,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건설을 확충한다.

(2)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통일한국을 내다보면서 국민생활기반과 산업생산기반을 함께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국토개발을 기한다.

(3) 질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구조전환 및 진흥계획을 추진한다.

(4) 지역간 정보격차를 축소한다.

지역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정보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이용을 활성화한다.

(5) 지역특성을 가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의 입지는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되, 지역의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한다.

(6)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수도권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물류유통을 원활히 한다.

8. 안정된 복지사회 구현

(1)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사회복지, 공적 부조사업, 사회보험체제를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2)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지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한다.

(3)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항상을 도모하여 그 능력이 사회에서 힘껏 발휘되게 한다.

(4) 고령자의 복지를 강화한다.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기반을 이룩한다.

(5) 소외 불우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심신장애자, 결혼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교육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지원과 생활보호급여를 현실화하여 자립 비탕을 마련한다.

9. 환경보전과 환경창조의 사회 실현

(1)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접근권을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정착시키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환경운동을 선도한다.

(2) 자원절약형 사회를 추진한다.

국민 각계·각층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추진하며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자원순환 및 자원절약형 사회를 추진한다.

(3) 맑은 물 관리정책을 강화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의 수질보호 강화와 4대강 정화를 위한 맑은 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환경, 생태계의 보전과 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연구를 지원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10. 외교주권의 확보와 민주평화통일

(1) 자유,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성 축적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2) 외교주권을 확립한다.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주권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의 적극 참여와 기여로 명예로운 한국의 위상을 세운다.

(3) 자주안보체제를 구축한다.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하여 국가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고 국제적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신세기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4) 해외동포의 현지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동포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하고 그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갖고 뿌리를 내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마. 신민당 (1995. 6. 27 정당등록)

강 령

우리 신민당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류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또한 이 땅에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키데 앞장선다.

이에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중도개혁 국민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아 진취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혁신한다.
2. 7천만 겨레의 재결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주력한다.
3.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건실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다.
5. 평등한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적극 공헌하게 한다.

6.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인다.

7. UN헌장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바. 새정치국민회의

강령

전문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하나의 정통 민족·민주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우리당은 21세기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정치를 추구한다. 새정치는 참여의 정치, 통일주도의 정치, 21세기의 격변에 대비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새정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정 속에 개혁을 실현한다. 우리 당은 국민의 참여 속에 언제나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21세기를 앞두고 새정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1997년 5월 1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강령을 채택한다.

- [1] 정치 : 참여의 정치
- [2] 경제 : 중소기업 중심의 정치
- [3] 사회 :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 [4] 문화 : 문화선진국의 지향
- [5] 교육 :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 [6] 환경 : 자연과 공생공존

- 【7】 과학기술 :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 【8】 여성 : 평등과 참여의 보장
- 【9】 청년 : 사회의 공동참여자
- 【10】 외교 · 안보 : 자주협력의 외교 · 안보체제
- 【11】 통일 :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
- 【12】 21세기 : 도덕적 선진국가

[개정 1997. 5. 19]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조국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이나라의 정통 민족 · 민주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우리당은 21세기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정치를 추구한다. 새정치는 참여의 정치, 통일주도의 정치, 21세기의 격변에 대비한 정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새정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안정 속에 개혁을 실현한다.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젊은이에게 꿈을 주는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21세기를 앞두고 새정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1997년 5월 1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강령을 채택한다.

- 【1】 정치 : 참여의 정치
- 【2】 경제 : 개방시대의 균형경제
- 【3】 사회 :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 【4】 문화 : 세계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문화선진국의 지향
- 【5】 교육 :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 【6】 복지 : 21세기 대비 건강하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의 실현
- 【7】 환경 : 자연과 공생공존
- 【8】 과학기술 :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 【9】 여성 : 평등과 참여의 보장
- 【10】 청년 :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의 구현
- 【11】 외교 · 안보 : 외교강국 · 강병안보를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

【12】민족통일 :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 · 통합

【13】21세기 : 외교 · 경제 · 문화진출을 통한 세계선진국가 건설

【1】정치 : 참여의 정치

세기의 전환과 격변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의 도덕성회복과 자기혁신을 통한 참여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억압과 조작의 대상이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21세기 새 정치의 주체로서堂堂하게 참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참여의 정치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모든 정치과정에 자발적 ·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 실현된다.

정당의 민주화와 효율화는 참여정치의 선결조건이다. 정당의 구조를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지역적 분권화를 추진하며, 지방조직의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철저히 해야 한다. 21세기 새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운영은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날로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산출에는 전문성 제고와 당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구현한다.

참여의 정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의회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의 중심무대이다. 의회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영구히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의회가 국민참여의 중심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의원의 대표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선거구제에 의해서만 진정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 중 · 대선구제는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내 파벌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제도이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지지한다.

참여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성숙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 · 환경 · 교육 · 주거 · 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할 것이며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주민과 함께 뛰고 호흡하며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 참여 민주주의의 기틀이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한다.

참여의 정치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의 소산인 지역간 · 계층간 · 도

농간·세대간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러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선제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취할 것이며 참여정치의 결실을 한다.

[2] 경제 : 개방시대의 균형경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독일과 일본에서와 같이 제한적 혼합경제를 원칙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에 의한 규제 외에는 행정규제를 지양하여 대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계는 지금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할할 정도로 중소기업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20세기의 소품종 대량생산의 대기업체제에서 21세기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협력체제를 실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동안 개발시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대기업은 중화학공업에 특화시키고, 중소기업은 경공업에 특화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체제를 확립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열위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 기술, 창업업무를 일괄서비스체제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전담행정부서로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지원단을 설치하며, 금융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의 3대 과업을 추진한다.

세계경제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한다. 즉,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각 산업별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의 확대와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체제의 확립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WTO체제를 맞아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여 농정체제를 개편하고 농산물 추가협상에 대비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을 개발하고 지역농업육성을 위해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각종 행정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우리는 농·수·축협을 개혁하여 농어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생산자 중심의 계통출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개방시대의 균형경제를 확립하여 물가안정, 국민부담의 공정화, 경제성장과 발전을 약속한다.

[3] 사회 : 안정과 꿈과 희망의 건강사회

우리는 중산층에게 안정을, 서민에게 희망을, 여성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신명나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생존권과 안정이 보장된 쾌적한 삶, 인간적인 삶,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를 추구한다. 따라서 복지를 사회적 통합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산적 복지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예방적 차원의 선행투자, 문화를 소비가 아닌 창조로 발전시킨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성폭력 및 범죄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의 신념을 마음껏 표현해도 탄압받지 않고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학력이나 출신지역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활동하는 사회를 만든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전문가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지원을 확대한다.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추진하고, 기술·기능향상훈련정책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적응하는 다기능 인력양성체계를 갖추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노사관계에서는 진정한 동반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의 공존공영정책을 실현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고, 각자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고 익힌 지식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이상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위대한 조국을 꿈꾸는 희망찬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공직자 윤리, 기업인 윤리, 근로자 윤리, 소비자 윤리를 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부모·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사회를 만들어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우리는 질병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터를 제공하고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 약한 자들도 잘 사는 밝은 사회를 실현한다.

[4] 문화 : 세계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문화선진국의 지향

21세기는 경제와 더불어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우리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문화를 창출한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문화선진국을 지향한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일은 문화종속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만년의 찬란한 전통에 걸맞게 예술중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우리 고유의 민족예술강좌를 개설한다. 또한 우리는 문화개방을 하되 외래문화를 선별하여 주체적으로 소화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정보와 지식, 이것들의 총체로서 문화 자체가 상품화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문화를 미래형 전략상품으로 인식하고, 문화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산업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활동과 우수한 문화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우리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또한 우리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고 신명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을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문화예술부분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간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창조를 통해 권위주의적 관제문화를 일소하고, 지역·세대·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우리는 민족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남북한 문화교류, 예술교류, 학술교류, 체육교류 등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우리는 남북간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국어연구소를 공동 설립하며, 국내외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조사·발굴을 추진한다.

[5] 교육 : 지식혁명의 주도와 전인교육

교육은 지식혁명시대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의 지적활동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개방하여, 정보와 지식이 경제활동의 중심요소를 이루는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새로운 문명창조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한다. 교육은 전인교육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학교육의 일류화를 추구한다.

지식혁명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길은 대학교육, 특히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산업, 첨단산업(생명공학, 해양공학, 우주공학 등), 신소재 산업 등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을 적극 육성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실현한다. 이러한 열린교육체제로 누구나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입시지옥에서 비롯된 과외를 근절시킨다. 다만 실력없는 사람은 졸업할 수 없는 졸업자격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한 사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사학의 건학이념을 보장한다.

우리는 교육을 학교교육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교육, 특히 성인교육을 중요시하는 국민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불안과 각종 불건전현상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속에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정보화·개방화·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강화 및 조기교육·영재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등 21세기 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는 중·고교는 물론 취학전 교육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과외공부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가계의 지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근절시킨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방식을 바람직하게 정착시켜 감으로써 과외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킴과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케 한다.

우리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족교육을 바로 세운다. 정보화·개방화·국제화시대의 민족교육은 편향된 국수주의를 배제하며, 세계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민족혼을 바로 세우고 민족자존의 길을 제시하며 전통문화의 참된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동질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사회규범을 바로 세워 사회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민주시민 윤리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정보윤리와 환경윤리, 그리고 평화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을 강화하여 도덕적 선진국가의 기반을 다진다.

우리는 GNP5% 이상 교육재정투자를 조기 실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6] 복지 : 21세기 대비 건강하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의 실현

21세기는 국민의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복지국가 시대이다. 과거 국제경쟁력을 저임금과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저개발시대에는 소비재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고 생산성 향상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 요소가 되는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시대에 이르면 사회보장의 결핍은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21세기 한국의 위상을 복지선진국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화한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단순한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국제 수준에 상응하도록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우리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고용보장, 자활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에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처지선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본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하고 복지재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충한다.

우리는 고도경쟁사회에서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를 공고히 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현행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제도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적용대상의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등으로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실현한다.

우리는 적자조합문제와 의료서비스의 낙후 등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행 조합분립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완전통합하여 예방기능과 기초적 건강보장기능을 보강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한다. 또한 연금적립금의 경제개발재원화로 인한 재정고갈의 위험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명실공히 전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혁한다.

우리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21세기 인구사회경제적 대변화에 대비,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한다. 노령화사회의 도래에 앞서 각종 노인관련 기본법을 정비하고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를 완비하여 노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한다. 또한 여성의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보육의 공공육화와 21세기형 직업훈련과 고용의 확대를 도모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소득과 고용문제를 보장하여 통합사회로 발전시킨다.

나아가 각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복지사업참여를 진작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건설한다.

【7】 환경 : 자연과 공생공존

우리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는 경고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국토공간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고에너지정책, 중화학공업의 유치와 자연을 도외시한 환경파괴형 건설행정, 그리고 이를 조절해 주는 환경행정이 단편적이고 느슨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관한 교육과 홍보부족에 따른 국민의 환경불감증도 환경파괴에서 한몫을 하고 있다.

오염이 사회적 총비용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간의 삶이 과거의 물량적 조건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환경보전이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인식' 할 단계가 되었다. 따라서 환경마인드가 모든 정책입안에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공간의 오염을 저감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핵폐기물 반입 등 한반도내에서의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가 개발이익보다 크다는 환경경제적 측면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통하여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하고 환경적 도시관리의 구축,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지의 정착 그리고 환경보전적 개발과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도록 환경예산 연동제를 실시한다.

우리는 하·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의 설계와 시공·준공을 동시에 연결하는 3동시제도를 실시하고, 철저한 상수원의 보호와 함께 4대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살리기에 총량규제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질소산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공단과 자동차, 에너지사용 등 대기오염배출원의 저감대책에 지원을 확대한다.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재활용대책을 강화한다.

우리는 환경법과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배출원의 공정별 철저한 관리와 세제 및 제도를 개선한다. 토양과 지하수오염, 해양오염방지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우리는 OECD나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간의 협력체제를 갖춘다.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의 감시

및 쾌적한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활동지원과 환경정책입안에 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는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연계의 동식물과 만물을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는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인간만을 위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공영을 실현한다.

[8] 과학기술 : 과학기술전쟁에서의 승리

21세기 첨단기술과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중심의 산업이 경제의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압도하는 격변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두뇌전쟁,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경제가 일어설 수 있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음을 자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초과학의 진흥,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의 발전, 영재과학자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 기술이 우대받는 사회구조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기술발전의 균형있는 지방화에 진력하며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인다.

기초과학이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 과학분야의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과학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의 도입과 후진국으로 기술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제기술시장'을 개설하여 기술시장국가, 아태지역의 기술주도국가로 발전한다. 또한 꿈의 통신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며, 특히 '한국형전략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영재과학자는 국가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영재과학자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영재교육의 틀을 만들고, 노벨상 수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영재과학자를 집중 육성한다.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과학기술의 요체는 바로 전문인력이며, 과학기술인의층이 두터워야 차세대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전문가를 유관기관에 특채하며 기업의 기능·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승진 등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21세기는 탈도시화가 가속되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화가 정착될 것이다. 기술발전의 균형있는 지방화를 위해서 지방특성에 맞는 권역별 '테크노폴리스'를 설치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삼위일체 공

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의 운영으로 전문인력의 연고지 회귀와 기업의 지방 정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9] 여성 : 평등과 참여의 보장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육체적 힘 대신에 섬세한 감각과 치밀한 연구와 작업태도를 필요로 하는 정보·문화산업은 여성에게 더욱 알맞은 분야이다. 남녀평등은 여성의 경제력 확보와 사회활동, 교육향상 등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적극 진출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

여성의 참여와 경제적 독립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실질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는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는 여성의 참여는 그만큼 국가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 진출에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우리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여성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획·조정·관리되도록 하며, 여성의 사회기여를 확대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여성을 위한 법제, 예산, 교육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정신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서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에 탁아소를 확충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직장·지역·직업교육시설 등 시설·관과 개인도 쉽게 탁아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는 여성이 성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성폭력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증설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부여, 동일노동가치 동일노동임금 지급, 교육·배치·승진에서 평등대우, 혼인·임신·출산은 물론 신체적 조건과 미혼조건 등 여성임을 이유로 정년·퇴

직·해고의 차별금지, 생리휴가·육아휴직·수유시간 등 모성보호, 금품의 지급과 자금용자에서 차별 금지 등 성차별 금지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여 남녀 고용평등의 실질적 정착을 도모한다.

【10】 청년 :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의 구현

청년은 민족의 꽃이며 국력의 원천이다. 청년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개혁적이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주의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청년은 차세대 주역으로서 사회적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청년은 현실에 타협하기보다 불합리한 현실구조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미래의 대안을 준비한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동 주인이다. 이미 TV, 패션 등 문화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던 청년세대들의 역할과 책임이 이제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도 막중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청년은 21세기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부정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된 기존질서를 부정하면서 사회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존중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21세기 대비의 새정치를 추구하면서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는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열린 토론과 참여의 광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권 기준 연령을 만18세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참여 폭을 확대한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순수한 양심과 도덕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풍토를 극복하여 학력차별을 없애으로써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위주의 실력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일터와 사회 속에 문화공간,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청년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사회를 구현한다.

우리는 정부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청년을 참여시켜 통일논의를 보장하고, 남북합의서에 입각한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남북 청년간의 교류를 지원하며, 남북청년단체연합포럼 등 각종 교류를 적극 권장한다.

[11] 외교·안보 : 외교강국·강병안보를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으나 지정학적 중요성을 매우 크다. 대륙과 해양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능력에 따라서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고 세계대국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설』 우리는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형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실리외교를 전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다. 국가이익과 인류공영을 위해 주변국과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요세력간의 갈등을 주정하는 한편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족통합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신설』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그들의 현지적응을 돕고 한글을 보급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보유키 한다. 이같은 새로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과제를 담당할 양질의 외교인력을 양성한다.

우리는 민족생존의 터전인 한반도에서 핵무장과 핵오염의 위협을 제거하여 항구적 평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미·일·중·러의 4대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를 중심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한다.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은 필요하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병력집약형의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해·공군력을 강화하여 3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과학적인 예산제도와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총체적 국방인력관리체계를 수립한다.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여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처우의 개선, 전역군인의 직업훈련과 직업보도를 통해 군의 사기를 앙양하여 군의 전력을 극대화한다.

[12] 민족통일 :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통합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창의적 주도력을 발휘한다. 한반도의 당면한 목표는 평화와 안정이며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교류하여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민족통합을 이룩해 나간다.

우리는 흡수통일·적화통일과 같은 일방적 통일이 아닌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경제적·심리적 적응에 유의한다.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준비한다. 현실적으로 인권 침해와 남북교류의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개폐를 촉구한다.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절감하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기 위해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3대 강령으로 삼아 제1단계 남북연합, 제2단계 남북연방, 제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이룩해 나간다.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분단상황하의 평화 유지와 민족통합과정을 관리한다. 남북연합은 남북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용이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평화공존과 공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남북의 정부는 외교·국방·내정에 걸쳐 독립적 권한을 갖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연합을 2000년까지 실현하여 통일의 과정을 시작한다.

남북연합단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신뢰가 구축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제2단계인 연방단계로 진입한다.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장악하여 국제사회에서 단일한 주권을 행사하고 중요한 내정에도 관여한다. 연방제 단계에서 남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실질적인 통일을 이룩한다.

연방단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남북간의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조건이 해소되면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제3단계인 완전통일단계로 전환한다. 우리는 통일의 여러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확대하고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생명존중의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평화의 확보위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되는 대결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이 결합하여 21세기의 초반기에 미·일·중·독과 더불어 세계 5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13] 21세기 : 외교·경제·문화진출을 통한 세계선진국가 건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시대는 탈냉전, 탈근대의 문명사적 대전화기이자 대변혁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여 대처함으로써 이땅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하며 강력하고 도덕적인 선진국가를 건설한다.

우리는 단군신화에 담겨진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하고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참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참다운 민주정의를 구현한다. 시련의 역사 속에서 평화애호의 애국정신을 꽃피웠은 민족의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기여한다.

우리는 대화합의 정신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강열한 성취동기를 가진 근면한 민족적 자질을 바탕으로 조화와 관용의 미덕위에 성숙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자율과 참여의 정신으로 공공선을 실현한다.

우리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건설하는 한편 생태환경을 배려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조화시켜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획기적인 보건·복지의 개선과 양질의 교육·문화체계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제반 부문의 창의성을 제고한다.

우리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선도하고 다양한 기능공동체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노력하고 저개발 약소국에 대한 인도적 구호와 원조를 확대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구환경문제와 같은 범지구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통일한국은 찬란한 역사적 전통과 민족적 자질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신문명 창조를 선도한다. 자연과의 조화, 생명에의 외경, 양심적 명령의 준수를 통해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세계정의와 평화의 실현에 공헌한다.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5강의 대열에 합류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의 협력을 매개하고 주요 세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존경받는 문화국가가 된다.

강령 및 기본정책(안)

전문

우리 개혁신당은 오랜 독재정치와 부패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올바른 민주정치와 참여적인 민주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발전과 복지 공동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정치 세력으로 나섰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과 정책기조, 당면한 정책과제를 밝힌다.

강 령

1.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 사회적 평등과 연대, 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고 믿으며,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국민이며, 정치와 경제의 주체도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독재와 독점을 반대하고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여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우리는 정치의 궁극목표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믿기에 건강, 교육, 주택, 교통, 환경, 복지와 같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정치에 최대한 정성을 기울인다.
5. 우리는 해방 후 민족사의 최대 과제가 적대적 분단의 극복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있다고 보아,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민족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공생적이며 창조적인 통일의 실현에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선다.
6. 우리는 차별과 억압, 갈등과 소외가 없는 통합적 사회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본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지역적 차별이나 성적차별을 철폐하고 계급이나 신분, 직업, 출신 학교나 종교에 따른 모든 종류의 소외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쓴다.
7. 우리는 독재정치와 부패정치, 봉당정치와 맹주정치의 낡은 틀을 분쇄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도덕정치,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개혁정치, 국민주체와 시민참여의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른 정치개혁의 우선적 과제라고 확신하여 도덕적이며 개혁적이고 참여적인 국민정당을 만드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친다.

기본정책

10대 정책기조

1. 정치개혁을 선도하여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의 사결정과 수혜과정에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부문간,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국민경제의 내실을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양적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누구나 인간의 기본생활수준을 향유 할 수 있게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4. 학교교육의 과감한 개혁과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확충으로 국민의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민족 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역량의 국민적 저변확대를 통해 문화부국을 실현한다.
5.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체계를 개선하여 고용안정과 열린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사회적 통합력을 제고한다.
6. 각종 성차별을 철폐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향상시켜 남녀 평등의 사회를 실현한다.
7.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 친 화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모범적인 녹색사회를 실현한다.
8. 기술경쟁시대, 지식자원화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개발체계를 혁신하고,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자립화 를 추진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육성·활용하여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9. 새로운 국제질서에 조응하는 든든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문화환경 등 전방위적인 전문외교를 추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구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
10.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구축,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평화체제의 실현을 통해 공 생공영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한다.

50대 정책과제

1. 깨끗하고 생산적인 참여민주정치

1) 정경유착, 부패정치의 척결

음성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 향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한다. 일체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반면, 정치자

금의 모금 총액과 후원회원수에 대한 제한 등은 완화하며, 지정기탁제도를 개선하여 기탁금이 정당간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또한 후보자 재산공개내역의 적극적인 공개, 후보자 학·경력 증빙서류 제출의 의무화,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보장 등 선거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

2)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기능의 강화

국회의 정책생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계층, 세대, 성, 이익집단 간의 이해조정과 통합력을 높이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

국회를 연중개최하고 기명투표를 확대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 국회활동을 전면 공개한다.

국회동의를 필요한 주요공직자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며, 국정조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한다. 한편 사회의 다원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 변화된 사회여건에 부응하여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전체의석의 1/30이상으로 늘이는 등 의회구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한다.

3) 대통령의 권력집중 제한과 봉사행정의 구현

검찰, 경찰, 언론, 사법부 등 주요기관의 독립을 통해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화,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사업을 지방과 민간에 과감히 이양하고 현재의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 및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와 행정절차를 간소화, 전산화,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실현하며, 행정절차법 제정, 정보공개 등을 통해 행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행정, 입법, 재정권을 확대하고 기본사무를 이양하며,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감사 및 조사 청구, 시민발의, 시민소환제도 등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한편 지방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경제권, 생활권에 맞게 지방행정단위를 개편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사회가 건전하고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확립

인권의 보호를 위해 UN협약 등 인권관련 국제준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하며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부활한다.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를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고, 임기후 일정기간동안 일체의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며 권력형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개혁하여 자질과 양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한편, 법조인수를 대폭 늘려 국민들이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수요의 증대에 맞게 법률서비스를 전문화한다.

2.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질서

1) 경제제도의 과감한 개혁

경제제도를 과감한 개혁으로 왜곡된 관치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통화가치 안정, 독과점 규제 등 경제질서를 위한 개입은 강화한다. 토지과표 현실화,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의 제고, 부동산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강화,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한다.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한다.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며, 금융을 자율화하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세율 인하, 비과세 감면조항의 철폐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소득을 우대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2)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사회 고용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경쟁의 제한, 창의적 중소기업의 발전저해 및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소유를 분산시키는 한편, 경영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며, 재벌의 금융과 언론지배를 방지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차단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독과점을 금지하며 정부의 양적규제의 도구로만 인식되어온 공정거래법을 재벌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틀' 로서 승화시킨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벌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조직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특히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중심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

4) 국토와 지역, 부문간 균형개발

수도권 및 거대도시 중심의 개발속도를 늦추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역점을 둔 국토개발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한다. 전면적 개방화 및 통일에 대비해 적정규모의 국내농업기반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UR협상 타결에 따라 삭감대상이 되는 정책을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업관련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며 자본 기술집약적인 영농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

5) 첨단기술 산업의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현재의 산업구조를 부품, 기계, 항공, 정보 등 중·고급형 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초고속 정보망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며 우수한 지식노동자들을 양성한다.

3. '삶의 질' 을 높이는 복지사회

1)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생활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부문별로 확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보수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주거,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최저생활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킨다.

2)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서민위주의 주택정책 실시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민간자원에 맡기되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3)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사회복지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임용,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 장애아동 의무교육제도 실시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아동과 청소년 및 부녀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노령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넓히며 노인 무료 건강진단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한편 현실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한다.

4)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강화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을 공공자금 예탁의무에서 제외시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역, 직장, 공무원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여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누진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납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진료일수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보험용 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인하한다.

5) 인간중심의 안전관리와 교통체계 구축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회안전체계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이룩한다.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우위의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교통행정의 일원화와 전문화, 신호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기존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광역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확장한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4. 교육제도의 혁신과 문화부국의 실현

1)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과 입시지옥의 해소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직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고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원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억압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해환경을 일소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보급하여 학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2) 교육의 자율성 보장, 교육자치제의 확대 실시

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교육 내용과 제도에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자치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GNP 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투자한다.

3) 대학교육의 개선과 평생교육의 실현

획일적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효율적 대학운영을 저해하는 정부통제 등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을 다양화·특성화한다. 특수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과 통신을 통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4) 정부와 재벌의 언론지배 금지

정부와 재벌이 언론을 소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보처의 기능을 재검토하며 방송위원회의 독립 등 방송민주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언론의 오보, 선정성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5)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과 문화산업 육성

재심제도의 도입 등 각종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중문화를 육성하며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

5. 자율적, 생산적 노사관계

1)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의 개입 금지, 복수노조금지 등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법은 ILO 수준으로 개정한다. 산재와 직업병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여 산재와 직업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가 법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2) 노사관계의 자율화

정부는 노사관계에 업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등 개입을 최소화하고 임금인상을 위시한 노사관계 현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3) 고용안정 실현, 효율적 인력개발

산업간,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 등을 해소하고 고용안정과 인력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산업구조조정이나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을 방지하고 유희인력을 최대한 산업현장으로 유인한다. 또 우리사회에서 고학력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교육 구조를 개혁한다. 고용보험법 등 고용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루고 직업능력을 개발한다.

4) 여성, 장애인, 노령 근로자의 고용평등

여성과 장애인이 취업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 및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강화한다. 또 직장내 성희롱 등의 설치를 대폭 지원하여 여성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이유로는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장애인 및 노령 근로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실화하며, 이들이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국책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의 노사관계에도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성을 보장한다.

6.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확대

1) 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의 철폐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존중하며 여성에 대한 채용, 배치, 승진, 해고,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분야에서의 각종 차별을 철폐한다. 이를 위해 벌칙조항 강화 등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배우자 상속시 공제액을 대폭 상승시키고 현재의 유산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로 전환시키는 등 상속세제를 평등화한다.

2) 사회적 공동육아제도의 수립

직장과 지역 등에서의 사회적 공동육아시설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충당한다. 의무교육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제화한다.

3) 성폭력의 근원적 척결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 및 긴급구조기구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각종 향락퇴폐업소의 영업행위와 음란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4) 여성정책의 효율화와 여성부의 신설

행정부 내에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관련 정책을 조정, 통합하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한다.

5) 여성할당제의 확대추진

여성이 처한 불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여성에 대한 우선적 처우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정당,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여성할당제를 확대한다.

7.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녹색발전 전략의 수립

1)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다. 양적팽창 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조정한다.

2) 맑은 물의 공급과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관리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며 하수처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수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이 되도록 한다. 한편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물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수도정책 등 수요관리 측면에서 물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3)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통한 깨끗한 공기의 확보

자가용 위주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통해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한다. 발전소,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에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기술, 환경기술의 지원을 통해 오염을 최소화한다.

4)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정책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감량화와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매립, 소각 중심의 폐기물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와 재질을 개선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고 실효성있는 예치금제도를 수립한다.

5) 생태계와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적극적 노력

원시림, 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립공원은 개발, 이용이 아닌 철저한 보전의 관점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수자원 보호, 산소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삼림의 체계적 보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그린벨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8.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

1) 과학기술 개발에 자율과 경쟁질서 도입

지금까지의 통제중심의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 및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 과학기술 개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 중 필요한 분야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양되도록 하되,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기반 기술은 별도로 선정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시킨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기반기술과 복합기술, 국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련 연구 및 규정의 제정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

2) 과학기술 행정의 쇄신

과학기술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중앙부처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 담당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현재의 종합과학기술 심의회를 강화하여 각 부처계획을 실질적으로 점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정책과 계획의 연계성을 높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과기처와 통상부, 정보통신부 등의 과학기술관련 부서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수석을 둔다.

3)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

응용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의 연구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투자액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고 우수한 기초과학연구 인력을 육성한다.

4)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과학기술력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인력의 질과 양에 달려있다. 미래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분야별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조기에 발굴, 교육하며 초·중·고·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5)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1993년 현재 GNP의 2.33%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과학기술에 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금융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적극 유도하며 신규 재원을 개발, 확보한다.

9. 자주적 국방과 실리적 다변화 외교

1)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의 추진

냉전체제의 해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상 등 다변화·다극화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여, 신장된 국력과 지정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다변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주도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2) 전방위적인 전문외교의 추진

외교 현안의 다양화,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민간전문가와 비정부기구의 외교역량화, 전문외교역량의 체계적 육성 등 외교역량을 다변화·전문화하고 안보, 통상, 과학기술,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필요한 모든 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전방위적인 전문외교를 실현한다.

3) 평등하고 우호적인 한-미, 한-일 관계의 정립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전시지원협정’ 등 한미간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한다. 일본으로 하여금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하며 정신대 문제 등을 해결한다. 이러한 분명한 과거청산을 전제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한다.

4) 해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유대의 강화

세계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해외동포의 역할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교민청을 신설한다.

5) 자주적·현대적 국방력의 확보

대북방위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민족의 생존과 지위를 위해 자주적이고 현대적인 국방력을 확보, 유지한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며, 현재의 전근대적인 병력집약형, 육군 중심의 군구조를 첨단 장비 중심, 육·해·공 3군의 균형구조로 바꾸는 등 군을 현대화하여 전쟁역지에 필요한 질적 전력을 확보한다. 한편 군의 과학화·정예화를 맞추어 군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군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10. 남북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의 실현

1)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및 시행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는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첫 출발이다.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북한에게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토대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북한의 노동당규약 등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령을 정비하며,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승인받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세부협정을 체결해 나간다.

2)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구축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재의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지으며, 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남북간 합의의 담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한다.

3)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추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하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나아가 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4)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의 활성화

상호 이익을 증대하고 남북경제를 상호보완하는 방향에서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며,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학술·문화 교류 확대, 환경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다.

5)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 도출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북한 관련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통일 논의를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며,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아. 통합민주당

강 령

우리는 독재정치와 부패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하고 21세기의 통일 조국과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개혁신당을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우리는 파행과 부정으로 얼룩진 전근대적 정치사에 종지부를 찍고, 봉당 정치와 맹주 정치를 대체하는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개혁 정치 세력으로 나섰으며,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 질서, 삶의 질이 향상된 민주 복지 공동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화의 과제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수권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 사회적 평등과 연대, 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보편적 가치라고 믿어,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독재와 독점을 배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3.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4. 우리는 지역간 · 계층간 · 남녀간 · 도농간의 부당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인간다운 삶과 보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건강, 교육, 주택, 환경과 같은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공동체를 건설한다.
5. 우리는 자율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는 인간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교 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직업교육, 기술교육, 평생교육의 체계를 확충하여 모든 국민의 인적 역량을 최대한 계발한다.
6.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국민민복의 근간임을 자각하여,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지식정보체계를 확충하여, 교육, 문화, 산업,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기한다.
7. 우리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며, 깨끗하고 맑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녹색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민족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협력체제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자주적이며 전방위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9.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민족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적이며 공생적인 통일을 창조적으로 실현한다.

기본정책

1. 깨끗하고 생산적인 참여민주정치 구현

1.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 수립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동안 반민족세력과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부패정치, 야합정치, 지역할거정치로 인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또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부당한 공권력행사나 역사적 사건으로 희생된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법적지위 회복 및 시면·복권을 추진한다. 더불어 민주적 기본질서가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붕괴될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저항권은 당연히 보장된다.

2. 대통령제의 유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다. 엄정한 3권 분립과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과 역할 강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한다.

3. 부패정치 척결

음성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한다. 일체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반면, 정치자금의 모금 총액과 후원회원 수에 대한 제한 등은 완화하며, 지정기탁제도를 개선하여 기탁금이 정당간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보장한다.

4.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 확립

사회의 다원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 변화된 사회여건에 부응하여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1/3이상으로 늘이는 등, 의회 구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연령을 낮추며, 대표선출제도로써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하고 자유공명성 및 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보장, 참정권의 확대, 기부행위제한 강화, 학경력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 그 제도를 개선하며 법집행을 엄정하게 한다.

5. 정당의 민주화와 현대화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 주요 당직자 선출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비밀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당원이 주요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여론이 당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중심의 의회정치를 확립하고 선거대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당구조를 분권화한다.

6.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 구현

국회의 정책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계층, 세대, 성, 이익집단 간의 이해조정과 통합력을 높이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표결에서 기명투표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활동의 기록을 남기는 등 국회활동을 전면 공개한다. 국회 동의를 필요한 주요 공직자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신설하며, 국정조사가 효율화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하고 예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한다.

7.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관련사무를 이양하며, 감사 및 조사 청구, 시민발의, 시민소환제도 등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행정예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지방재정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육자치를 내실화하며 지방경찰제도를 실시하며, 실제적인 경제권, 생활권에 맞게 지방행정단위를 개편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사회가 건전하고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무부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치처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조장 및 촉진, 지방자치제도 발전 기획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8.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경찰제도의 실시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에는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에는 지방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자치제를 확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를 반영한다.

9. 투명하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의 구현

행정기관의 절차를 무시한 편의주의와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입법화하며,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예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다. 정책 및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와 행정절차를 간소화, 전산화,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실현한다.

10. 국가보안법 개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 남북교류 추세에 역행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과 정보조정 감독권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과 보안업무만을 전담토록 한다.

II. 정의롭고 내실있는 국민경제의 건설

1.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경제체도의 과감한 개혁으로 왜곡된 관치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통화가치 안정, 독과점 규제 등 경제안정과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개입은 강화한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한다.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사회 기층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경쟁의 제한, 창의적 중소기업의 발전저해 및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며, 재벌의 금융과 언론지배를 방지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세습을 차단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독과점을 금지하며 정부의 양적 규제의 도구로만 인식되어 온 공정거래법을 재벌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승화시킨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벌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은행의 독립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통화관리제도를 통하여 통화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며, 독과점 가격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룩한다.

4.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금융거래의 투명성

을 높이며 지하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음성소득을 제거한다.

5.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개선·강화하며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현실화하고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등 토지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부 계층이 편중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금융의 자율성 제고

금리 자율화, 정부의 인사전섭배제 등 인사 자율성 및 대출심사권의 철저한 보장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7. 세제, 세정개혁의 단행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직접세 중심의 조세 제도를 정착시키고 거래정상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를 구현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종합토지세 강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조항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세무행정의 간소화, 효율화, 과학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무비리를 척결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8.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발전을 촉진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중심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

지방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 부응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저변을 강화하고 소기업자의 기업욕을 촉진하며 기업 경영의 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기업 공제제도를 마련한다.

9. 첨단 기술산업의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현재의 저부가가치형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부품, 기계, 항공, 정보 등 중,고급형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한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초고속 정보망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며 우수한 지식 노동자들을 양성한다.

10. 국토의 균형 개발 및 효율적 이용

국토종합개발계획 입안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최대 반영한다. 수도권 및 거대도시 중심의 개발속도를 늦추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체의 지방유치와 금융·세제상의 특혜부여, 교육문화시설 지방분산의 적극 권장 등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역점을 둔 국토개발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한다. 또한, 토지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11.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자율적인 민간 소비단체의 활동을 적극지원한다. 소비자 운동을 시·군까지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민간 소비자단체에게도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며, 관리운영비의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소비자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한다.

12. 국제화시대에 맞는 농어촌 구조개선

경영규모 확대와 기술집약·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내 자급형 농어업과 수출형 농어업을 균형있게 육성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도록 한다. 한편, UR협상타결에 따라 식감대상이 되는 정책을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한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축산·수산 등 농어업 전분야의 총체적인 자급율 목표를 확립하여 이에 따른 품목별 적정 생산규모 및 지역별 배분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식량안보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농어업의 국제화·전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어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농어민단체가 조직·운영되도록 지원·육성한다.

III.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실현

1.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의 보장과 사회복지권의 확립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생활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부문별로 확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보상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주거,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최저생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킨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수급권과 청구권, 정보요구권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은 국가·사용자·수혜자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국방비와 사회통제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에 노력해야한다.

2.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지역, 직장,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누진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관리운영비 예산을 절감한다. 의료보험용과목을 확대하고 진료일수 제한제도를 폐지하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인하한다.

3. 전국민 연금제도의 확립

농어민과 도시지역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 예탁의무에서 제외시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4.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의 확대

정년퇴직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취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하며, 노부모 부양 영세민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생업자금 융자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노인병 전문요양 기관의 설립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요양촌을 확충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증설하고 그 시설수준을 높이며,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아동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계획을 반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세감면 제도를 확충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수당을 현실화하며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5.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고 농어촌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한다. 「국민건강검진제도」를 확립하여 전국민이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의약품과대광고를 억제하여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부담을 줄인다.

노인,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가정간호사제도」와 「가족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노인성 치매, 약물, 알콜 중독환자를 위한 전문요양기관을 증설한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기능을 강화한다.

6.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체제를 전문행정조직과 민간감시체제의 견제와 협력으로 한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행정체계로서 연구기능과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식·의약품안전청」을 설치하고 식품 및 의약품 명에 감시원제도를 확대하며 동시에 수입식품·의약품의 검역에 대해서는 「선검사 후통관 방식」을 적용한다.

7. 사회복지행정의 통합성·전문성 강화

사회복지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임용,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에 국가보훈처를 흡수·통합하고 산하에 사회복지청을 둔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조직을 「국민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한다.

8. 종합적인 시설물 안전 대책 수립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제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확립한다.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회안전체제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이룩한다. 건물, 교량 등 대형시설물의 시공에 있어 건설부조리척결, 시공감리 및 사후안전관리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성실시공을 정착시킨다. 응급구조체계를 현대화하고 통합체제로 정비한다.

9. 서민위주의 주택공급 정책

1가구1주택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건설비용을 대폭 늘리며,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기되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안정화를 도모한다.

택지개발시 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서민용 주택건설용지를 최우선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적 택지개발계획을 입안·실시하여 필요한 택지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관인계약서제도 도입, 전세자금 융자제도 개선, 영구·공공임대 및 소형분양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도시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으로 확립하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한다.

10. 대중교통시설 중심체계의 확립

대도시지하철을 조속히 완공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제를 정비한다.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전용차선제를 강화하며, 노선을 조정하고 지하철환승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통범칙금과 교통관련세금을 우선적으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에 투자하고, 지하철 건설 등 투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와 국공채 발행으로 교통재원을 확대한다.

11. 교통체제의 합리적 개선

도시의 도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차로 입체화, 도시고속화도로 확충, 교통유발시설억제, 자동차의 운행비례 부담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교통량의 억제정책을 시행한다. 주차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공공, 민영주차시설의 건설을 촉진한다.

IV.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인간교육의 실현

1. 교육의 자주성 확립, 교육 자치제의 확대실시

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교육주체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수립한다.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살린다. 교육내용과 제도에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제 실시범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2. 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체계 확립

중학의무교육의 전면실시를 추진하고 기술교육과 특수교육·사회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업체의 생산기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민주시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연령에 구별없이 평생교육·인간화 교육을 실시한다.

3. 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 수요원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과목에 편중된 성

적평가제도를 지양하고 학생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실용교육,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을 안착시킨다. 한편, 한민족 통일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민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4.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

교원이 부당하거나 불법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배격하여 교원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자율적인 교직원단체의 건전육성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하며, 이를 단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탄압을 철저히 배격한다.

5. 대학교육의 개선

획일적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효율적 대학운영을 저해하는 정부통제 등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을 다양화, 특성화한다. 대학정원을 자율화함으로써 학생선택권을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농어민 자녀,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가 약한 자에 대한 일정수의 입학을 장려한다.

6. 사학의 지원·육성

사학재단의 자율성 보장과 아울러 교육주체 특히 교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고 신분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재단의 사유재산화를 방지한다.

7.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과 능력우주의 사회 풍토 조성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직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벌우주의 풍토를 배격하고 실력과 자격증에 의한 능력위주사회를 조성한다. 모든 채용시험에서 학력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실력우주의 인재등용정책을 실현한다.

8.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재벌기업의 언론지배를 배제하여 언론이 사회의 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제도화하는 방송민주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언론의 오보, 선정성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9. 문화예술활동의 자유 보장

보다 많은 지원, 보다 적은 간섭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각종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해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한다. 민족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건전한 대중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한다.

10.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

지방자치시대에 조응하여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고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 또한, 청소년의 밝고 진취적인 기상의 신장을 위해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운동장·음악감상실 등 여가선용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한다.

11.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에 조응하여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고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

12. 국민체력의 향상도모

체육활동의 정치도구화를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체육증진을 도모한다.

V. 획기적인 환경 개선과 생태계의 보존

1.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수립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다. 양적 팽창 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조정한다.

2. 맑은 물 공급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하천·호수의 자정능력을 회복을 위해 댐과 수중보유영을 재검토한다.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하며 하수 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수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량과 수질, 상수도와 하수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관리하여 맑은 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수도 정책 등 수요관리 측면에서 물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4대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보호한다.

3. 깨끗한 공기 회복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와 공단지역에 「대기오염 예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을 촉진하고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원인자 부담제도를 강화한다.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통해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발전소, 제조업체등 대기오염물질 대형배출업소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기술, 환경기술의 지원을 통해 오염을 최소화 한다. 탈황·탈질소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철도·항만 등의 수송배분비율을 재조정하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한다.

4.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매립, 소각 중심의 폐기물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배로 늘리는 「감량화·재활용」우선정책을 추진한다.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쓰레기 회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며 재활용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한다.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와 재질을 개선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며, 폐기물 예치금액을 현실화하고 공병보증금 제도를 모든 재활용폐기물과 유해폐기물까지 확대한다.

5. 자연생태계 보존

원시림, 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립공원 개발정책을 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며 골프장 건설을 억제한다. 그린벨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간석지의 매립을 억제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을 확대한다. 자연사박물관과 생태계연구소를 설치한다.

6. 사전예방정책의 강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분쟁조정신청제도와 시민단체의 제3자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공장이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공장폐수 또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처리장도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준공하는 3동시(三同時)제도를 실시한다.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공단지역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

규제를 실시하여 공해방지 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인구·주택·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한다.

7. 환경행정의 책임과 권한 강화

환경행정의 조정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예산에 대한 환경교부금을 설치하여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의 연동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원인자 부담제도와 환경마크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새로 개발된 기술과 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신기술과 신물질은 적절한 오염방지기술이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8.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지원

환경정보자료의 자유열람제도를 실시한다.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오염물질 시료의 측정수수료를 면제하여 공해업체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공해배출 부과금의 일부를 녹색기금으로 출연하여 환경단체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환경단체활동을 장려하여 민간환경운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9.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정서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주력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핵발전소의 증설을 억제하고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후보지는 주민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10. 도덕성의 회복과 생활양식의 전환

핵폐기물 등 유해산업 폐기물을 공해상에 버리거나 제3세계로 수출하는 행위, 원조를 구실로 저개발국의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선진국가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화학비료와 농약·화석연료·열대목재 등에 과잉 의존하는 생산과 소비의 생활양식을 유기농법과 무공해 에너지의 개발, 폐기물의 재생이용, 근검절약의 생활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VI. 성차별의 철폐와 여성의 권익 신장

1. 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의 철폐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존중하며 여성에 대한 채용, 배치, 승진, 해고,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분야에서의 각종차별을 철폐한다. 이를 위해 벌칙조항 강화 등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배우자 상속시 공제액을 대폭 상승시키고 현재의 유산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로 전환시키는 등 상속세제를 평등화한다.

2.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국가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한다.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하여 고용평등감독제도와 고용평등심판제도를 실시하며,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당한 기회부여를 보장하는 고용제도를 확립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한다.

3. 사회적 공동육아제도의 확립

출산과 육아는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이다. 공동책임 실현을 위하여 직장과 지역 등에서의 사회적 공동육아시설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충당한다. 의무교육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제화한다.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확대실시와 자녀병가제도를 신설하여, 부부 직장인의 경우 양육의 공동책임자로서 부부중 한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육아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며 지역·직장·직업교육시설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보육비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여성 할당제의 확대 추진

여성이 처한 불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여성에 대한 우선적 처우를 실현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위해 정부내 모든 부서 및 의회, 정당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며, 공공기관, 기업 등에 여성할당제를 확대, 추진한다.

5. 가사노동의 가치 보장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가정주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6. 가정폭력, 성폭력의 근원적 척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배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은 일반폭력으로 간주하고, 현행 성폭력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돕는 전문 상담기관 및 긴급구조기구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한다.

7. 성의 상품화 배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

여성을 반인륜적으로 상품화 하는 일체의 상업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종 매체가 조장하는 성의 반인륜적 상품화를 감시·규제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각종 향락 퇴폐업소의 영업행위와 음란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성교육을 강화시킨다.

8. 여성부 신설

여성 관련 정책의 조정, 통합,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부(국무위원급)로 승격한다.

VII. 자율적,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1. 노사관계의 자율화

정부는 노사관계에 엄중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등 개입을 최소화하며,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관계 현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2. 노동자의 동반자적 지위 보장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는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 쌍방이 상호협력하여 산업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산업발전을 기한다.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3.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조의 설립자유 제한, 직권중재, 노조임원의 신분 위협, 노조 업무조사, 비현실적인 공익사업 유지 등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생활급

임금을 보장하며 국적·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으로 개정한다.

4. 민주적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인 생존·생활상의 요구와 노동기본권 요구를 옹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블랙리스트와 사업장내 폭력 등 반민주적인 탄압을 배격하여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보호함으로써 노사 공존·공영원칙을 철저히 실현한다.

5.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산재보상의 현실화와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의 한방진료 적용을 확대하며 노동자가 재해예방과 직업병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며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6. 고용 안정 실현과 효율적 인력배치

산업구조조정과 첨단산업 및 기술혁신에 수반된 기술·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직종간·학력간 취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제도 개선 및 기술·기능인 우대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실업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기회의 창출·직업훈련·취업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를 개선하고 노동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갖춘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관리 및 구인·구직체계를 효율화한다.

7. 여성, 장애인, 노령 근로자의 고용평등

여성과 장애인이 취업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 및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강화한다. 또 직장 탈아소 등의 설치를 대폭 지원하여 여성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이유론든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장애인 및 노령 근로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실화하며, 이들이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8. 노동복지의 확대

고용·임금·승진등에서 산업간·업종간·기업간·학력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며, 임금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생활급 임금을 보장하고, 생산성에 따른 이익분배제도를 정착시킨다. 또한 근로복지

주택공급을 확대, 장학금지급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9.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국책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의 노사관계에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성을 보장한다.

Ⅷ.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

1. 과학기술 개발에 자율과 경쟁질서 도입

지금까지의 통제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 및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 과학기술 개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능 중 필요한 분야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양되도록 하되,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기반기술은 별도로 선정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시킨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기반기술과 복합기술, 국민의 복지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연구 및 규정의 제정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

2. 과학기술 행정의 쇄신

과학 기술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중앙 부처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담당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현재의 종합과학기술 심의회를 강화하여 각부처 계획을 실질적으로 점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정책과 계획의 연계성을 높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과기처와 통상부, 정보통신부 등의 과학기술 관련부서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수석을 둔다.

3.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

응용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의 연구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투자액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고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인력을 육성한다.

4.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력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인력의 질과 양에 달려있다. 미래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분야별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조기에 발굴, 교육하며 초, 중, 고 대학의 과학기술 교육을 내실화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5.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1993년 현재 GNP의 2.33%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금융 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적극 유도하며, 신규재원을 개발, 확보한다. 국가연구개발(R&D)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며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6.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무역의 확대

우리 실정에 맞는 고유기술개발을 확대하며, 국가수요형 첨단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술무역을 증진시켜 나간다. 한편, 해외의 정부, 연구소, 교육기관과의 과학기술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선진기술 획득을 원활하게 한다.

7. 과학기술 대중화 도모

이공계대학의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일반생활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대중화를 도모한다.

8.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경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 유선망 확충과 인공위성의 발사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고하고 음성, 데이터, 화상 등을 통합·전송할 수 있는 고도 기술을 개발하며 통신서비스의 선진사회를 구현한다. 또한 한정된 주파수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유휴주파수를 상업화하고 주파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9. 대중정보사회 실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정책대안을 강구한다. 우편·전화·정보통신 등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국 단일통화권 추진, 요금인하,

지역정보통신센터 설치를 통하여 국민대중의 정보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대중정보사회를 실현한다.

IX. 다변적 전문외교와 자주국방의 실현

1. 국제사회의 주역이 되는 능동적인 외교 추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일본의 정치·군사적 부상, 중국과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미국과 러시아의 대동북아정책 조정 등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질서형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외교정책을 수동적 외교에서 능동적 외교로 전환하여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참가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주도한다.

2. 전방위적인 전문 외교의 실현

탈냉전시대에 부응하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정신에 입각하여 이념과 체제를 떠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안보중심의 군사외교를 경제중심의 실리외교로 전환하여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외교 현안의 다양화, 민간 교류의 활성화 등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민간 전문가와 비정부기구의 외교역량화, 전문외교역량의 체계적 육성 등 외교역량을 다변화, 전문화하고, 안보, 통상, 과학기술,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전문 외교를 실현한다.

3. 평화, 통일외교의 추진

평화를 민족생존과 번영발전의 지상목표 삼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기여한다. 또한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민족의 평화적 통일로 설정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4. 평등하고 우호적인 한·미, 한·일 관계 정립

[한·미 상호방위조약]·[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전시지원협정(WHNS)] 등 한·미 안보협력 관련 조약과 협정 등을 전면 개정하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한다. 특히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문제 개선과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본으로 하여금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하며, 한·일 양국간에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정선대문제 등 과거 양국간의 문제와 심각한 무역불균형 문제를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여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5. 교민청의 설치와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민정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교민청을 설치하여 해외 이주민의 지위향상에 힘쓴다. 해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거주 동포의 모국방문과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확보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6. 자주국방 확립

대북방위 및 신국제 질서와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상응하는 국가방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적정수준의 자주국방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점진적으로 회수한다.

7. 과학화·전문화를 통한 군의 정예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감군 등을 통해 현재의 병력중심 군구조를 개편하고, 병기의 첨단화와 기술집약화, 육·해·공 3군의 균형화 등을 통해 정예화한 군을 통일한국군상으로 정립한다.

8. 군복무기간 단축 및 예비군제도 개선

군의 과학화, 정예화에 맞추어 군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며, 동원훈련 중심의 예비군훈련제도의 개선, 예비군 복무연한 단축 등 예비군 전력을 정예화한다.

9. 국방예산의 3군별 균형과 효율성 제고

현 3군간 예산불균형을 시정하고, 전력단위 부대(사단)별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그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국방예산의 적정규모를 정한다.

10. 군의 명예회복과 기강 확립, 사기 진작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인사관리·인성중시 병력관리 등을 통해 군 기율을 확립하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X.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민족통일

1. 남북한 공존과 상호수렴의 통일추진

독일통일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흡수통합을 반대하고,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각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상호수렴하는 통일을 추진한다.

2.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정착

[남북기본합의서]정신에 입각,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행 휴전협정체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남북간 합의의 담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한다.

3. '남북한 기본 합의서'의 국회 비준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북한에게도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토대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북한의 노동당 규약 등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령을 정비 하며,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승인받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세부 협정을 체결해 나간다. 또한, 민족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한간의 중요한 합의나 결정은 종류와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동의 및 심의를 거쳐 발효되고 집행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4. 한반도의 비핵화 및 비핵지대화 추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핵능력으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5.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

상호 이익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를 상호 보완하는 방향에서 경제협력력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 교류, 학술-

문화 교류, 자원 및 에너지 교류,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당회담과 직능단체별 회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경제 격차를 줄이는 등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6. 이산가족 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

분단이래로 생사를 모르고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7.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남북분단의 상징이자 남북한 대결장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를 녹지공간과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연구하며, 이를 교류·협력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8. 통일관련 업무의 통일원 일원화

통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통일관련 업무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며, 남북회담 기능을 통일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통일관련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9.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 도출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북한 관련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통일 논의를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며,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정강 · 기본정책

전문

우리는 기존의 독재정당과 사당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고, 이 땅에 올바른 정치문화와 진정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며,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21세기 선진민주 한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이익의 확산을 통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정강

1. 우리는 초헌법적 절대권력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여 진정한 민주정치를 이 땅에 정착시킨다.
2. 우리는 독단과 전횡으로 이루어지는 독재사당을 거부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한 시민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모아지는 상향식 선진민주형의 국민정당을 구현한다.
3. 우리는 사유재산의 규제와 경제활동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건강한 국민경제를 이룩한다.
4. 우리는 권력남용과 불공평한 법 집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5. 우리는 대북정책의 밀실결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족공동체이익을 확산시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

기본정책

1.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

1.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한다.

개인의 독단과 전횡으로 이루어지는 초헌법적 절대권력의 시대를 청산하고,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한다.

2. 선진 민주형의 국민정당을 만든다.

당수와 중앙당 중심의 1인 독재 사당을 거부하고, 당수와 중앙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한 시민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중앙에 모아지는 상향식 구조의 선진민주형의 국민정당을 만든다.

3. 국민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간섭이 없는 작은정부를 추구한다.

정부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부문간, 계층간, 지역간 상호이해의 충돌이나 불공정한 경쟁을 조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4. 의회는 민생을 위한 토론의 광장으로 만든다.

의회를 당수 중심의 사당이 지역적, 파당적 패권다툼을 하는 장소가 아닌 민생을 위한 토론의 광장으로 만든다.

II. 자유경제체의 확립

5. 국민의 사유재산은 철저히 보호한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보호한다.

6.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경고리를 끊고,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만든다.

7. 경제주체의 의식전환을 위한 경제풍토를 조성한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생활수단' 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국가 경제의 일원으로 가지는 책임과 의무' 를 자각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토록 경제풍토를 조성한다.

8.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이 국민 친화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9.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민주화 한다.

거시경제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닫혀진 경제제도를 허물고, 열린 시대에 걸맞게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관련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주화 한다.

10. 세계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체제를 만든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있도록 경제 전반을 효율적으로 조화시켜 유연한 경제체제를 만든다.

11.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 확충한다.

단순한 인적·물적자원의 투입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왔으므로, 미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과학기술개발, 사회간접시설 및 부문별 전문인력양성 등 성장잠재력에 국가적 투자를 확충한다.

12. 국민경제의 바탕을 안정시킨다.

중소기업, 농어촌 및 자영업자는 국민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국민경제의 바탕을 안정시킨다.

13.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직접적인 품목별 가격관리체계를 탈피하고,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시장거래자 간의 불공정한 행위나 부당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며, 불가피한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 하에 즉시 물가에 반영함으로써 정부발표물가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없애 물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III. 살기 좋은 복지국가의 건설

14. 국민공동체의 평등문화를 구현한다.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지역간 개발격차를 시정하여 남녀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공동체의 평등문화를 구현한다.

15.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우리 경제의 양적인 규모에 걸맞는 국민생활을 보장한다.

16.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보호한다.

산업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를 방지하여 국민이 마음놓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보호한다.

IV. 자주외교 평화통일의 실현

17. 국민적 합의에 의한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시행착오만을 겪어온 밀실외교를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

18. 민족공동체의를 확산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남북의 장기간 분단상태에서 유래한 문화적 이질요소와 상호불신 및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공동체의를 확산하여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차. 21세기한독당

21세기한독당 정강정책

전문

우리 21세기한독당은 지난 한 세기 이래 외세의 침탈과 권위주의정권, 부정부패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의 광복투쟁, 6·3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의 역사와 4·19학생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민주정부, 민족자주의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고 21세기 세계인류평화 실현에 기여한다.

이에 우리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국정전반에 걸쳐 낡은 법과 제도, 관행을 혁파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명시된 바 삼균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복지사회국가의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강령

1. 민족공동체정신의 확립

우리는 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우리민족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서의 민족통일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유구한 민족공동체정신을 확립해야만 한다는 대원칙하에, 바른 역사정립과 정의로운 민족정기확립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존의 삼자원칙

우리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민족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한편,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기본정신이었던 삼균주의에서 천명한 민족과 국가간 상호평등 및 상호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평화적 세계일가의 달성에 앞장서서 공헌한다.

3. 공정한 정치, 균배의 경제, 전인적 교육 및 여성권리의 확립

우리는 우리민족의 국가적 정통성의 상징인 상해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제시되었던 바 있는 삼균주의 원칙을 준수하되,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현상들을 감안하여 이 적자생존의 지구촌에서 민족역량을 총 집결하여 최첨단의 문화적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발전을 영구적으로 추진한다.

4. 금수강산과 미풍양속의 회복

우리는 8·15이후 정책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으나, 오직 경제력 확충만을 위한 공업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각종 공해에 의하여 황폐해지고 오랜 민족공동체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많은 미풍양속들이 안타깝게도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며,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미풍양속들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5. 자주, 평화적 민족통일의 달성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한 민족통일의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백범 김구선생께서 갈파하신 바 모든 분파적 주의주장과 사상의 차이를 떠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으로서의 민족통일을 기필코 달성한다.

1. 민족공동체정신의 확립

1) 민족공동체역사의 확립

한독당의 설립목적상 우리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의식 확립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역사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토대로 민족역사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발전적인 정사(正史)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대사관에 의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왔던 부분들부터 단계적으로 시정해간다. 또한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에도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사대사관(또는 식민사관)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민족적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세

계의 어디서든지 뒤흔친 역사민족의 후예다운 당당한 기풍으로 능동적으로 민족사의 진운을 개척해가는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2) 민족공동체문화의 확립

지난 백여년간의 외세침탈을 통하여 흉수처럼 밀려들어온 외래문화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공동체문화는 가히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왔으나, 우리의 전통문화는 오히려 저명한 외국인들에 의하여 찬양될 정도로 우수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조속히 전통적 미풍양속을 회복하는데 게을리 할 이유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민족문화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힘써 계도한다.

3) 민족정기의 확립

민족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 장점들은 취하고 단점은 고쳐감으로써 민족발전을 도모하며, 오랜 역사 속에 수많았던 외침을 깨끗하게 물리치고 발전해 온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민족정기를 함양한다. 특히 세계사상 빛나는 선열들의 국권회복 독립투쟁의 정신을 옹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왜곡된 민족현대사를 벗어난 백범 김구선생 암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반민특위 외해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한다.

4) 통일문화연구사업의 활성화

민족분단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유구한 민족역사에 심어져 온 민족공동체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극단적인 외래문화물들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온 현상들을 타파하고 민족고유의 역사사상에 바탕을 둔 고유문화를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홍보한다.

2.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존 확립

1) 정치적 자주 확립

통한의 경술국치이후 외세로부터 많은 부당한 간섭을 받아온 우리민족의 치욕스러운 현대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진정고 자주적인 정치를 이룩한다. 민족분단의 근본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외세의 전횡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평화적 민족통일의 염원을 자주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

2) 경제적 자립 확립

대외무역의존의 기본구도하에 추진되어 온 경제정책의 실책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은 더욱 증가하는 파행적 현상이 발생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을 위한 공업화를 최우선적으로 이룩하려는 과욕으로 말미암아 자립경제의 기본인 식량자급율이 겨우 40%를 밑돌고 있는 현실은 식량

안보에 적신호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과 농어촌의 동반몰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경쟁의 세계화시대에 대기업들조차 세계적 대자본의 공세에 견디어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경제의 노예적 국제하청업화를 막기 위해서도 민족자주경제정책으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반드시 이룩한다. 아울러 민족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지적소유권등 불평등한 국제경제조약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모든 기업인들이 창의적인 첨단과학소재 개발에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3) 문화적 자존 확립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금세기까지의 일반적 산업현상이었던 일률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공업사회를 넘어서 보다 섬세한 지식과 정보를 통한 소량다종 생산 및 소비사회로 급진전해 갈 전망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폭넓은 문화적 소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우월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국가나 민족만이 선진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뿌리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우리민족의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재해석과 시대감각에 맞는 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인다.

3. 공정한 정치, 균배의 경제, 전인적 교육 및 여성권리의 확립

1) 공정한 정치

(1) 민선민주정부 전통의 확립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문민정부를 수립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서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생활안정에 정치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민주사회주의이념으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2) 공명정대한 공직자상의 확립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청백리적 선비정신을 받들어 어떠한 부정부패도 절대로 범하지 않는 청렴한 공직자문화를 뿌리내림으로써 도덕정치를 확립한다.

(3) 지방자치체의 확립

일찍이 상해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이미 공표된 바 있는 지방자치제를 확립, 발전케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으로 국기를 공고히 하고, 다음 세기를 향한 세계일류의 국가로 지향케 한다. 그를 위하여,

1.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2. 지방경제의 자립을 위하여 지방의 모든 산업을 조속히 육성 발전시킨다.

3. 지방과 지방사이의 지역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토록 한다.
4. 지방중심의 모든 교육제도를 확립시킨다.
5. 지방과 지방간의 교통행정을 긴급히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6. 지방의 특수산업시설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한다.
7. 각 지방의 농업, 어업, 지하자원개발업, 산림보호육성업 등을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치적 균등을 도모하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과 괴등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의견을 조절한다. 또한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언론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

(4) 민본적 민주제도의 발전

권력자에 의하여 농단당하기 쉽게 되어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대상 규정을 명확히 이적행위자(대형 부정부패연루자등도 포함)에 한정하되,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민족적 열망을 참작하여 뚜렷한 국가체제 전복 또는 부정의 혐의가 없는 한 자의적인 법적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정보공작정치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오직 남북의 한민족사회가 함께 자주적이고 민본적인 민주사회로 속히 발전하는 것만이 민생안정과 민족통일의 지름길을 인식하고 제도적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5) 언론, 정당 및 노조활동의 자유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취재원의 면책특권을 위한 정보의 자유도 보장한다. 정당정치와 내각책임제를 확립하여 정권의 독재화를 방지한다. 또한 청렴한 정치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하여 정당경상비용의 일정액(최소한도의 유지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며, 모든 정당의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의사가 최대 한도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법질서 내에서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서민대중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제고한다.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명선거의 보장

장차 관급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안정된 근무환경 및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전적으로 위민행정을 통한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공무원 임용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도록 각 부처 및 지방자치제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명선거의 보장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엄정히 확립하고 전국적 선거감시기구를 읍, 면, 동 단위까지 구성하여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 용의자들을 즉각 접거하여 선거기강을 확립한다.

국무위원의 임기는 건강의 악화나 부정부패 연루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는 수차례 재임명도 가능하게 하여 국무위원의 신분안정을 통한 바람

직한 국정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7) 입법부 기능의 발전적 강화

입법부의 주요한 고유기능인 예산편성권과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분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입법부의 전문성 및 효율을 극대화한다.

(8) 사법부 및 검찰, 경찰기능의 완전독립 보장

사법부의 고유기능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법관들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소신있는 사법권행사에 있어서 신분과 인사행정상의 불이익을 철저히 배제한다.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검사제를 운용하여 권력형 부조리 등의 정당한 사법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찰의 신분과 생활을 보장하여 오로지 민생치안과 대민봉사에 전념하는 긍지높은 경찰상을 확립한다.

(9) 감사원의 완전 독립성 보장

감사원의 재정 및 고유적 감사기능의 완전한 독립을 통하여 국정 전반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은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최고통치권자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공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군기강의 확립

군은 오직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함은 물론, 사회봉사정신에 투철한 양심적인 민주시민양성의 도량으로서의 책임감을 확고히 하여, 국가와 민족의 간성으로서의 막강한 민주군대의 전통을 확립한다. 우리 군은 또한 세계평화의 초석으로써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남북당국자들의 합의하에 점차적으로 상호 감축해가되, 장교와 하사관 등 간부급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전군의 정예간부화를 달성한다. 세계평화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존재목적을 표방하는 우리 군에게는 현하 세계적인 골칫덩이로 되어 버린 핵무장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민족통일의 초석이자, 세계평화의 초석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지닌 명예로운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전통을 영원토록 견지한다.

(11) 외교활동의 강화

전 세계인류 및 국가와의 교류는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1. 호혜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상대와는 외교를 보류한다.
2. 현재까지 교류가 없는 국가나 민족과는 조속히 외교의 문호를 개방한다.
3. 북한과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철저히 호혜평등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남북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조로 남북통일을 이룩한다.

4.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는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 추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망언이나 영토(독도 등)에 대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5. 중국(중공 및 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선린우호적인 경제, 문화, 체육 등의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일본의 국수주의에 공동대응한다.
6. 미국과는 전통적인 경제적 교류와 상호방위적 우호관계를 호혜적이고 자주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킨다.

2) 균배의 법칙

* 경제정책의 원칙

계획적인 자유경제제도를 시행하여,

1. 기술의 향상
2. 산업의 증강
3. 국제수지의 원활
4. 국민생활의 윤택
5. 기업과 기업간의 균형성장
6.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목표로 과감히 실천한다.

(1) 자립경제의 확립

우리의 경제정책은 식량자급을 근간으로 하는 자립경제를 이루고, 그 기초 위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적극적으로 교역하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은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만성적인 수입초과의 불합리한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상호호혜적인 공평한 국제무역을 지향한다. 또한 국내저축을 장려함과 함께 무분별하게 도입되었던 차관을 축소조정하여 대외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실질적인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립한다.

현재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있는 대표적인 국제적 불평등경제협약인 지적소유권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계적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낸 기업과 연구진 및 개인에 대해서 총연구비용의 50%를 보상해주고 각 기업, 연구진, 개인에 대해서는 올림픽 금메달선수에 준하는 국가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의욕을 북돋운다.

(2) 민족경제의 질적향상 지향 - 도덕적 경제관 확립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경제적 문제는 항상 정치권력과의 밀접한 관계하에서만 존립이 가능했던 국가통제적 또는 권력기생적 양상을 띄고 있었으므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갈 때 경제 또한 부의 집중이 아닌 전 민족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하에 모든 경제분야에 있어서 공존공영하는 상부상조의 도덕성을 제고시킨다.

(3) 국산품애용정신 함양

국산품애용의 기본취지는 우리민족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소지가 있는 사치, 낭비, 허영 등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온 그릇된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자는 것이다. 특히 민족사회의 정립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사회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각종 그릇된 외래문화, 외래생활양식, 퇴폐적인 외래풍조따위부터 우리 민족사회에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산품 애용을 통한 사회생활 개혁의 기본요건이 될 것이다.

불요불급한 외래사치품(고가의 외래침대, 양복, 넥타이, 일용잡화, 전자제품) 내지는 외래기호품(담배, 커피, 양주 등)을 우리사회에서 몰아내고 순수하고도 양심적인 민족자본으로 생산해 낸 국산품들을 그 질과 가격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애용하도록 장려한다. 가격과 품질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립경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외제보다는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을 기본신조로 삼아야한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기업인들이나 식량생산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면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한 양심적인 물건가격이라면, 외국의 값싼 물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애용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양심적인 민족기업과 민족정기가 확립된 경영인들이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4) 중소기업 육성으로 서민생활안정 도모

독재정치하에서 초래된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금융 등 재벌위주정책에 의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청산하고, 중소기업의 일정한 생산 및 판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확고히 수립한다. 대기업은 국민경제 주도자임과 동시에 복지사회건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한다.

(5)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의 영구적 확립

왜곡된 경제행태 하에서 벌어졌던 재벌과 졸부들의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토지소유의 극단적인 편중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왜곡을 원천봉쇄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및 점차적인 토지공유화를 추진하여 실제 경작자나 실수요자(공장 또는 공공사업)에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정부패의 방지와 불로소득의 타파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영구히 확립한다. 그와 함께 금융 운용에 있어서 권력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6) 세계개혁으로 서민가계부담 경감

현재 과중한 간접세부담을 기반으로 제정되어 있는 세제를 전면 개혁하여 소득비례의 누진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직접세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서민가계를 안정시킨다.

(7) 근로환경의 대폭적 개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과 노동자 복지향상의 원칙하에 화기애애한 민주적 노동풍토를 정착시킨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세우되,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규가 장기화될 때는 노동부 당국자가 공정하게 중재한다. 근로기준법을 엄수하여 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여건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노사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임의로 운용되는 근로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의욕을 북돋기 위하여 산재보험, 실업보험, 퇴직후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를 확충하며 노동환경의 안정성을 확립한다. 공무원 및 노동자의 민주적 노동운동의 원활성을 기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범위도 제도적으로 확충한다.

(8) 소비자권익 보호

소비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품의 생산 및 유통경로상 발생가능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 규제함과 함께 낭비가 아닌 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시킨다. 따라서 민간인들의 자생적, 자율적인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측면지원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합리성을 기한다.

(9) 건설 및 토목사업의 조절

국고가 박약하고 자립경제가 요원한 실정에서는 오직 국가적 차원에서의 근검절약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필요이상으로 국책사업의 이름 하에 벌이고 있는 모든 건설, 토목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건설사업의 방향을 제3세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활로를 개척토록 한다. 특히 무분별한 간척지사업 등으로 간척지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천혜의 만 등 어장들을 소멸시키고 생태계파괴를 가져옴으로써 어민들에게 심각한 생계위협을 초래해 온 시책이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 및 생태 및 관광자원 파괴를 일삼아 온 고급사치성 오락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레저타운 등에 대하여 최고도로 엄격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더 이상의 신설이나 증축 등은 전면 금지한다.

(10) 식량생산산업(농·림·축·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우리는 특별히 한민족의 자주적 생존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식량자급문제를 중점적으로 달성해야만 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체결 및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의하여 파탄경계에 이르고 있는 한국의 농업을 회생, 발전시키려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하는 식량생산관계 책임자들이 만일 자신들의 임기중에 제시한 바 있는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라도 자신들의 전 재산을 잘못된 시책으로 인하여 생존의 기로에서 헤매이는 농어민들에게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관계되는 법제도를 확립한다.

민족생존의 터전인 농어촌을 지키기 위하여 기초식량생산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생존보장을 해주어야만 한다. 즉 농업생산 전문관료들과 관련학자들이 한 해의 각 작물별 생산량을 결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기초생산량을 할당하여 작물수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하는 한편, 일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생산된 식량자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전량수매 또는 적절한 판로를 보장한다.

독재정권하에서의 왜곡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억울하게 떠맡게 된 농가부채를 순수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면 탕감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위한 식량생산 사회간접투자시설인 저수지나 기타 제반시설들을 완전 무료로 적절히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피폐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사업에 따르는 가축오물 등을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지역별 비료공장의 운영을 국가에서 대폭 지원하여 오염을 막고 유기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이룬다.

농어촌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질적향상으로 농어촌에서도 얼마든지 농어업관계의 전문적 교육은 물론 재능여부에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전문식지도 대도시에 못지않게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식량 생산자들의 교육은 고등학교과정까지는 완전무료로 국비로 충당한다. 그리하여 의식주와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이 없도록 하고, 무공해 작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윤을 더 보장하여 생산의욕을 높임으로써 국토의 청결화를 앞당기고 지력을 향상시켜 감으로써 더욱 높은 농가소득을 보장해준다.

농어민의 생활여건과 주곡생산의 자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곡의 전량수매를 실시하되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의하여 얻는 공산품 등의 추가적 수출이익의 부분을 전액 '민족공생적 차원'에서 국고로 환수하여 집중적으로 추곡수매에 투입함으로써 충당한다. 또한 목적세인 '식량자급안정세'를 수입농산물에 대폭 부과하고 소비적인 유흥업소나 커피 등 외래기호품에도 간접세 형태로 대폭 부과하여, 그 모든 재원을 순전히 추곡수매에 충당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국가예산집행의 제일 우선순위를 추곡수매에 두고 국가예산에서 나머지 전액을 자동 지급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기초식량 생산분야가 더 이상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닌 환경오염, 도시화의 문제점, 지구적 식량부족 등을 다각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최첨단의 '생명산업'으로서의 확고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식량에 대한 정의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가능케 해주는 식품에 한한다. 따라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바로 독약 그 자체인 것이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도입되고 있는 외국산 식량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독극물 처리기술자들이 특수취급해야만 할 위험물질로 분류한다. 수출상품을 만들겠다고 공해다발적인 공장들을 마구 만들어내어 금수강산을 쓰레기 천지로 뒤덮어놓고, 그 상품들을 기껏 외국에 팔아서 벌었다는 소중한 외화로는 먹지도 못할 외국산 식량을 사다가 근로자들과 국민대중에게 먹게 했던 어리석은 개발독재자들의 행태는 민족의 존립을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산 식량도입은 그것이 완전히 무공해적인 것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품질좋은 무공해식량 및 무공해약초 등의 개발과 증산에 둔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집중적인 대규모농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집

악적인 소규모단위의 '전문화된' '건강한 농업'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생산된 식량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존의 협동조합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 - 소비자 직거래조직을 장려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냉동차고 저장방식 대신 폐광이나 지하갱도형 창고 등을 각 지역별로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잉여생산물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가 폐기처분이나 헐값판매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축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도 가공 및 저장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기반인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인다.

3) 전인적 교육의 확립

* 교육의 원칙

교육의 목표는 헌법에 명기된 바 홍익인간의 정신에 투철한 건전한 인격을 갖춘 민족구성원들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교육현장에서 확고한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데 지상의 목표를 둔다.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국비로 함을 원칙으로 의무화, 전문화한다. 교육내용은,

1. 과학교육 2. 자연교육 3. 우주교육 4. 해양교육 5. 항공교육 6. 자원개발교육 7. 전력개발교육 등으로 인류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국민교육의 확대개선

국민교육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맡고 있는 중차대한 국민교육의 위상을 고려하여 교육제도를 함부로 바꾸지 말 것이며, 한번 정한 제도는 적어도 10년이상 준수하도록 한다.

(2) 대학교육의 개선

대학입시제도는 독일 등의 선진적인 현대식 교육제도를 참조하여 단계별로 축소 및 폐기하며, 대학에서는 오로지 전문분야의 학문에 전념하지 않는 한 졸업하기 힘든 졸업정원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육자들의 양식에 바탕을 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발달을 증진시켜온 입시지옥을 영구히 없앤다.

(3) 중고등교육의 개선

중·고등학교까지에서는 갖가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폭넓은 소양교육과 시민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되 그 외에도 특정분야에 풍부한 소질이 확인된 청소년들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생명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히 민족통일을 이룩할 주체로서의 민족공동체의식 확립을 도모하여 세계화시대에 민족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4)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시민강좌의 운용

지속적인 국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관계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하여 교육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확충한다. 사학의 운영은 완전히 자율에 맡기되 다만 재단을 사유재산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한다. 그 밖에 각 단체 등에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시민강좌 등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없는 이상 완전자율에 맡긴다.

(5) 학원자율화 및 교직원단체의 자율성 보장

교육관계법을 새시대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하고, 교수재임명제도를 폐지하고 교수협의회를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교육담당자들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민족통일시대에 맞는 소신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문화와 종교의 발양 보장

모든 문화의 발전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에 맞도록 현대화하며 모든 국민이 종교와 신앙을 자유로 선택하고 선전하고 신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여성권리의 확립**(1) 모성보호**

여성의 순결을 귀중히 여기고 모친을 특별히 소중히 모시던 민족전통이 그릇된 외래문물의 무차별 도입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결과, 여성을 상품화하여 저차원의 쾌락이나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온 사회적 폐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덕성 제고와 청소년 남녀에 대한 순결교육 등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미혼모의 예방, 미망인 등의 생활보호 등 여성의 위상확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에 대한 성충동을 야기할 수 있는 천박한 대중매체들의 선정적 내용등을 전적으로 규제하고 미인대회 따위를 방자하여 여성의 육체적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치중했던 평가기준을 보다 고차원적인 지적·모성애적 관점으로 유도하는 사회교육을 전 보도매체들을 총동원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춘여성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여 실효성있는 전문적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재취업시키며 궁극적으로 여성상품화의 대명사인 매춘행위가 사라진 밝은 도덕사회를 건설한다.

(2)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

활동력이 왕성하거나 고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가사활동의 여가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는 물론,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분야나 환경분야나 외교분야나 문화체육분야 등 여성의 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와 나아가서는 최고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실력만 있으면 균권의 원칙에 의하여 남성과 완전히 동등

한 기회를 보장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 향상

여성근로자들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임금조건과 승진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차원에서 임신 및 출산시에 직장 과 국가에서 기본급여를 함께 책임지고 제공하며, 육아에 있어서도 남성의 역할분담을 일정기간 할 수 있도록 상대방 남성의 육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여성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4. 금수강산과 미풍양속의 회복

1) 금수강산의 회복

(1) 환경정책의 강화

환경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하나뿐인 민족터전을 무공해하게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를 황폐케 하거나 불모지화하여 민족생존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반민족행위에 준하여 엄벌 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파괴는 최대한내에 원상복구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파괴적 행위는 물론 그러한 발상까지도 민족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한다.

(2)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 및 경제생활구조의 재편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환경파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소규모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량생산체제의 공업화보다는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는 토대위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차세대의 생존양식으로 선을 보이고 있는 다중소량 생산방식과 함께 절도있는 소비생활을 이루도록 사회의식개혁차원에서 계도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한 과학진흥

무공해 또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처리가 가능한 최저공해적인 생산 및 소비방안을 안출해 내는데 과학진흥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둔다. 즉, 무공해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개발, 무공해하면서도 저렴한 연료의 개발, 무공해한 운송수단의 개발, 또는 보다 우수한 무공해약품의 개발같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학진흥책을 실시하여 필연적으로 공해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대량소비적 상품들은 최소한의 적정수준에서만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공해유발제품들도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생산토록 하여 지구자원을 아끼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울러 무공해한 세계초정밀, 최첨단 과학분야도 집중적으로 진흥시켜서 그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환경보존대책의 전면적 수립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화석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공해물질의 배출과 방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며, 우리 강토의 오염 및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국책사업도 전면 재검토함은 물론 골프장 등의 시설 및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완전 무공해하고 환경보존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모든 사업들을 시행토록 엄격히 관리한다.

(5) 환경공해 피해의 구제

모든 환경피해의 경우에 있어서 오염원 및 오염행위자와 피해상황 사이에 뚜렷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오염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토록 하며,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못하는 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환경오염의 방지비용은 오염자 자신이 부담토록 한다.

(6) 교통공해의 해결

모든 교통공해의 원점은 도로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통행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차량(특히 자가용)의 통행량을 대폭 줄이지 않고서는 교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현재 10부제 운행제도를 3부제로 바꾸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일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에서의 승용차 사용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안될 때는 도시의 생존환경보호를 위하여 연료배급제도 등도 도입하는 한편,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4차선 이상의 전 도로구간에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모든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를 위하여 자전거 환승장이나 각 관공서에서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원비하도록 한다.

(7) 무공해 내지는 저공해사회로의 전환

완전한 자체 처리능력이 실험적,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해다발적인 산업(특히 공업)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기왕에 가동되어 온 설비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만을 인정하고, 공해방지가 불가능한 설비 등은 가능한 빨리 해체 또는 교체시키며, 새로 만드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공해처리시설을 확인한 후에 인가를 내준다. 또한 그동안 쌓인 공해찌꺼기들을 무공해하게 처리하는 신세대 첨단환경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공해다발적이었던 산업에 대해서는 점차로 이를 적정선(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량)으로 축소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처분한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무공해에너지에 대하여 우리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 소장 레스터 브라운이 밝혔듯이 “원자력발전은 풍력발전보다도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관점에서 원전의 추가건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대신 무공해에너지로서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집중한다. 아직까지는 대량설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대량설비보다도 소규모 에너지사용 공동체(즉, 단위 부락 또는 단위 아파트 등)를 통한 자체적 소규모 태양열발전설비 운

용쪽으로 유도해가면서 적절한 국가적 보조를 실시한다. 그밖에도 에너지 생산양식에 있어서 산간지방에서는 자연수력을 이용한 물레방아의 폭넓은 활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바람이 거센 해안지방이나 고산지대 등에는 중형 및 대형의 풍력발전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고, 도시와 대규모 취락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나 기타 가연성 폐품들을 소각시켜서 지역별로 자체 소모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이 철저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2) 미풍양속의 회복

(1) 민족전통문화 보급의 활성화

비람직한 미풍양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문화를 국가사업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민족사회의 정점을 살리고, 외래문화의 단점과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꼭 취해야 할 장점이 있으면 세계문화 포용차원에서 과감하게 수용한다. 국조단군이래의 흥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에서 발전한 우리의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을 세계화의 시대를 선도해가는 인류사회의 모범적 문화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보급하는 차세대 문화정책에 총력을 집중한다.

(2) 미풍양속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

①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예의를 잘 지키는 민족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효사상에 입각한 노인공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독재정권들에 의하여 오도된 경제개발논리에 의하여 효사상이 없어짐과 함께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는 노인들이 생겨나는 패륜적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미풍양속의 근원이기도 한 효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모든 복지제도에 앞서서 노인복지제도를 시급히 확립한다.

정년퇴직한 노인들에게 노인우선의 사회봉사차원에서의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동단위의 취로사업을 노인층 중심으로 편성하고, 60세이상 무직노인 및 65세이상의 퇴직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경로수당을 제공한다. 그 외 노인들의 인생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노인편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이용 등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완비한다.

② 아동 및 청소년복지제도의 확립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고히 하고 연소군roj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직장탁아소제도의 확립, 기타 자라나는 민족의 새 싹들을 보호하고 민족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복지제도들을 현실성있게 완비한다.

③ 장애인 복지제도의 확립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기능에 따른 취업기회를 확대보장해주고,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세민에 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존여건만은 보장되도록 한다. 장애인 교육용 특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특수직업교육과정을 확충하며, 각종 장애인들의 단체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영세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 시행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공공사업에의 취업기회를 가능한 한 늘려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한다.

⑤ 의료제도의 지속적 개선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단체 대표와 농어민대표 등도 의료보험 운영전반에 걸쳐서 동참토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는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한다. 또한 전국적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함과 함께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순수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전액 국고보조로 시행토록 한다. (단, 겸업으로 하는 직장생활이나 농공단지 취업이나 상업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료보험료를 적용한다.)

현재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및 한방, 약국의료보험도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특히 국민들의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 있어서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국민건강의 적극적 달성을 위해서 예방의료의 제도적 확충에 만전을 기하며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진료받는 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여타 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완전한 독립 - 자주 평화적 민족통일의 달성!

우리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조속히 평화적, 정치적 민주통일을 완성한다.

1) 민간 민족통일추진기구의 설립 활성화

통일한민족국가 존립의 세계사적 정통성에 근거를 둔 '한민족주체적' 통일역량들의 결집체를 민족대화합의 차원에서 구성한다. 그 기본방향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민족통일 원칙을 준수한다.

구성원으로서는,

- ① 광복운동가 1세대를 특별자문으로 하여 완전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다.
- ② 민족정기가 확고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공동대표 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기구의 임원선정과 실무를 책임진다.
- ③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각 사회단체의 대표 및 지도급 인사들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의견교환 및 실무를 담당한다.

추진기구는 남북 공히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든 먼저 설립해도 좋고 추진기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통일관계부처와의 공동협의를 다시 거쳐서 정책을 확정한다.

이러한 민간통일추진기구나 당국자간의 남북실무협상은 민족공동체적 구심점의 확립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통일염원민족기념관'을 공동건립한 후, 모든 회담을 그 장소에서 진행한다. 기념관에는 통일관계 각종 회의실과 자료실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사의 정통성의 상징인 국조단군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에 이르는 민족의 사표들과 관련된 영정 및 자료들도 함께 보관하고 전시하여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나 내외국인들의 관광여행을 위한 산 역사교육장이자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족통일의 순서설정

- 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질화가 심해진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치중하며 점차적으로 정치적 통합이외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실시한다. 즉, 제1차적 단계는 다소 더디기는 해도 '국가연합'의 과정을 밟는다.
- ② 수년간 국가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적 동질성이 확보되고 상호신뢰가 쌓이면 일단 남북이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자회의인 '민족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이 단계에서 양측의 추진기구가 과도기적인 축소정부로서의 역할을 하여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공동체 안건' 등을 심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외교문제 등 민족공동안건에 대한 의기투합을 바탕으로 민족역량을 모아서 주로 대외적인 실무를 진행한다.
- ③ '민족원탁회의'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동일한 인원수로 '민족중앙정부'를 구성하여 최종목표인 정치적 통합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 방안을 강구한다. 이는 실질적인 '연방국가'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명칭으로는 '한연방' 또는 '배달연방' 등 현재까지 사용된 바 없는 민족고유의 명칭이 적절할 것이다.
- ④ 마지막으로 남북국회의원선거에 의한 완전한 통일한민족국가를 건설한다. 이때도 국호명칭에 있어서는 제3항에 준한다. 각 단계는 5년~10년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은 물론임.

그외 통일한민족국가의 국가나 국기 등도 분단대립 이전의 민족고유사상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및 학자, 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결정함.

3) 민족통일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배가

이상과 같은 민족통일의 대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당국자 간의 연례 정상통일회담 및 분기별 남북실무회담,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고, 민족생존과 민족경제를 위협해 온 과도한

군비부담을 줄여서 민족복지에 돌리기 위하여 연례군축회담을 열어 매년 최소한 10%씩 군비를 절약하고 외부로부터의 고가무기 도입 대신 무기개발 담당자들로 구성된 ‘가칭민족보위회담’을 활성화하여 외족에 대항할 최신무기를 공동연구하고 공동소유하는 자급자족 절약형 군비체제를 공동으로 갖춘다. 적어도 연방국가의 단계전까지는 양측 군사를 각각 20만명선으로 감축하고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우리민족의 젊은 일꾼들이 농업, 공업 등 산업생산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족자주원칙에 입각한 군비의 감축과 민간경제의 활성화만이 세계화의 생존경쟁시대에 우리민족이 살아남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하에 민족통일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간다.

〈그 외에 해결해 나아가야 할 현안문제들〉

* 교통문제 해결의 원칙 확립

인적, 물적 모든 교통이 자유롭고 신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전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고, 최첨단기술로 육해공 모든 교통로를 개발하여 정기수송료를 설정한다.

단, 도시에서의 각종 교통혼잡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차량통행의 획기적인 감소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가용의 운행에 일정한 규제(티켓제도 등)를 실시하고 가능한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칸을 만들고 자전거 주차시설에 만전을 가하는 등 각종 방안을 즉시 시행에 옮긴다. 이에는 대국민교육이 필수적으로 계속되어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재견제를 위한 정언제도의 확립

대통령책임제이건 내각책임제이건 간에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정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즉,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단하고 있는 권력에 제동을 걸고 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언의 기능은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감사원장, 대법원장, 국회의장의 삼인이 정기 및 임시 정언회의를 구성하여 삼인일치의 공동성명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대통령 혹은 총리)를 상대로 제출하며, 최고책임자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직접 소집하여 여론을 재수렴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언론에 공지시킴과 함께 정책에 반영한다.

기본정책

1. 세계평화

이제 아메리카연방과 유럽연방, 아시아연방 나아가 세계연방국가라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는 인류공존과 인도주의적 사명감으로 진리도덕에 기초한 정치 경제 사회의 혁명으로 세계경제와 정치, 환경을 구하고자 한다.

2. 민족통일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교류의 폭을 정치·경제·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넓히고 조선왕의 부활과 함께 도덕성 회복으로 상호간의 이질감의 극소와 함께 한민족의 의식과 지리의 통일을 추구한다.

3. 정치

가. 권력을 통한 물리적 제재를 지양하고 국민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덕정치풍토를 구성,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직능의원제도를 신설한다.

나.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하여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정치인상을 정립한다.

4. 외교·국방

가. 자주국방 체제의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모색한다.

나. 자유국가는 물론 동구권 국가 및 비동맹국가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5. 경제

이웃을 생각하는 도덕경제정책으로 투기와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가. 국제수지악화·대외의존도 증대 등의 경제발전 저해요인 제거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나. 독과적 품목의 횡포를 적발하여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다. 기업인들에 대한 기업정신의 재정립으로 공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에 힘써 전체국민소득 증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6. 사회·문화

가. 국민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정직, 성실, 신의가 충만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담배의 생산판매 흡연을 금지한다.

나. 효율적인 질서외식의 재인식으로 아름답고 자유로운 사회분위기를 구성한다.

- 다. 우리 고유의 독특하고 훌륭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발전을 이룩, 올림픽을 치르는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운다.
- 라. 문화혜택의 전국확산으로 문화활동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억제하여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7. 교육 · 언론

- 가. 교육제도의 과감한 혁신으로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여 3부제 수업으로 전원입학을 허용하고 전원 졸업을 인정하되 성적으로 사회가 평가하도록 하며 전국대학 명칭을 없애고 가나다순에 의한 1대학 2대학 등으로 바꾸어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킨다.
- 나. 청소년의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밝고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윤리관을 어려서부터 확립시킨다.
- 다. 언론 · 출판의 자율성 보장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 라. 보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지방주재 기자제를 부활한다.

8. 노동 · 복지 · 기타

- 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 나. 노동개선 및 복지시설확충은 물론 근로자들의 호청문제부터 혁신하여 문화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
- 다. 빈민구호대상자 구호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 라.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수용으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적극 배제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여성의 실질적 지위향상에 주력한다.
- 마. 각종 보험제도를 재고하여 전국 국민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타. 민주국민연합

정강정책

- **주요목표** : 도덕정치, 법치주의, 선진경제
- **기본정강**
민주국민연합은 퇴폐한 정치 개혁과 경제의 재도약을 실천하며 국민 총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법치와 정의로 선진도덕 국가를 건설한다.

○ 정책

1. 통일

통일 성취의 국력을 배양하고 남북간의 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으로 평화 통일을 촉진한다.

2. 외교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에 역점을 두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3. 국방

군사 과학 기술의 현대화와 고도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국군의 군인정신을 배로 강화하여 안보에 만전을 기한다.

4. 정치

- 1) 구악을 일소하고 도덕정치, 책임정치를 실시하여 도덕국가를 건설한다.
- 2) 철저한 법치주의를 실천하여 민권을 신장하고 민의에 따른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 3) 나라의 지도자와 관리는 국민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살신성인의 도덕을 구현한다.
- 4) 행정 -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하여 관료주의·편의주의를 척결한다.
- 5) 치안 -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위험수당 인상을 월등히 높여서 사기를 앙양시킨다.

6) 경제

- 재벌을 분산하여 전문화하고 독점을 금지하여 건전한 경제구조를 견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책으로 전환한다.
-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혁파하고 공익과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한다.
- 부의 편중을 시정하고 공정한 분배로 대중경제를 발전시킨다.
-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긴축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근절하여 건전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킨다.
- 전문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높임
- 경제의 거품을 걷어 내고 전문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공정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경제 안정을 기한다.

5. 세제

세제를 개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하고 재벌의 상속세를 높이며 소득분배를 공정히 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6. 금융정책

정책 금융의 폐단을 없애고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금융정책의 경질화를 방지한다.

7. 농어민 정책

농촌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농어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출신이 농촌으로 돌아가게 하여 농어민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농수산업을 근대산업으로 발전시킨다.

8. 사회

- 1) 정직과 성실과 신의가 충만한 사회윤리 도덕을 확립한다.
- 2)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영세소득자를 우선 대우하는 복지행정을 실시한다.
- 3)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향상하고 형평있는 소득 분배로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청소년 -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의 기관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놀이터로서 각 구마다 청소년 공연장을 설치하여 건전한 오락 장소를 제공한다.
 노 인 - 노인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전철·버스·목욕탕·유원지 등을 무료로 사용케 하며 노인에게 월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

9. 교육

- 1) 학교교육을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도덕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 2) 도덕청을 설치하여 국민의 도덕의식에 대한 대변화·대혁명이 있게 한다.
- 3) 대학은 무시험으로 입학하게 하여 사교육비를 없애고 학생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킨다.
- 4) 고도산업시대에 적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을 대폭 증설한다.
- 5)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6) 초·중 교과과정에 도덕 과목을 20%이상 할당하여 도덕적 인간을 배출시킨다.

10. 문화

- 1) 미풍양속과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 2) 무한한 창의력을 개발하여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11. 여성의 지위

- 1)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경제 기타 모든 면에서 30%를 여성이 점유케 한다.

12. 법조계

- 1) 재벌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법을 국민을 위한 법으로 전환·운영케 한다.

2) 아시아에서 우리 사법부가 청렴도에서 가장 후퇴하였으므로 법조계를 혁신하여 공정 무사한 재판을 하게 한다.

3) 국민에 대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판검사 증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택하여 로스쿨 졸업자의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한다.

13. 관광대국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전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이다. 우리는 놀라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발하여 세계 유수의 관광대국을 만든다.

14.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의 제품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적 선진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다.

파. 국민신당

정 강

-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창조 -

오늘 우리는 정치의 명예혁명을 실현하여 21세기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신당을 창당한다.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국제질서와 문명사적 변화인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각오를 다짐한다.

행복한 국민생활

우리 국민신당은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국민 생활을 보장한다. 건전한 가정을 통하여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여와 기회의 민주주의

우리 국민신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모

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정치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능력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당내 민주화를 이루고, 깨끗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

자율과 창의의 시장경제

우리 국민신당은 민간이 주역이 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실현하며, 성실하고 건전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자율과 창의가 넘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고도의 지식정보화 경제를 건설한다.

열린 한민족 문화공동체

우리 국민신당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 남녀평등을 실현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든다.

평화통일과 인류공영

우리 국민신당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강력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다. 세계평화의 정착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다.

정책

- 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 -

1. 행복한 국민생활 보장
2.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감동정치 실현
3.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
4.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 틀 창조
5. 정보화혁명으로 스피드 경제 구축
6. 평화통일 달성과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
7. 더불어 잘사는 문화사회 구현

행복한 국민생활 보장

우리 국민신당은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범죄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하며,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모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

민생치안 확립

학교폭력과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의 강력한 범죄예방 및 처벌강화조치로 모든 국민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안전한 식품공급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여 공기오염을 막고 수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수를 풍족하게 공급한다. 마약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 확보

공공시설을 포함한 제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원활한 주택공급과 물가안정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킨다.

민생관련 부조리 척결

각종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민생관련 부조리를 척결한다. 중소기업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 및 준조세를 제거한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국민강동정치 실현

우리 국민신당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조성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와 행정의 상을 정립한다. 지역할거주의, 봉당정치, 상의하달식 권위주의, 금권·관권 선거풍토, 정경유착 등

구시대의 정치유산을 과감히 청산한다. 새로운 국민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책임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며, 지방분권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감동정치를 실현한다.

참여와 기회의 국민정당 지향

다양한 국민제안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국민의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룬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후보 등 모든 공직후보들의 공천에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정당구조의 개혁을 통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권력분산과 책임정부의 실현

대통령직과 당대표직을 분리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신장함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분산을 도모한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실질적인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정부를 실현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정책정당 실현

대안의 제시 없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는 퇴행적 정당정치를 추방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하여 정치의 효율을 높인다.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의 창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며, 정치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풍토를 조성한다. 선거공영제의 도입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정치문화를 창달하여 국민이 부담없이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책임행정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근절

공무원의 업무평가제도 및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실현한다.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경유착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밝고 명량한 사회를 건설한다.

행정서비스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근절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구현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국가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쟁과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책임능력을 제고시키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지방화의 지속적 추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과 집행의 폭을 대폭 넓혀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다.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

우리 국민신당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1세기에는 창조적인 인적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면적인 교육혁신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은 물론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다가오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21세기 창조형 인재양성

급변하는 세기적 변화에 대처하여 다양한 지식을 흡수, 소화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기술과 지식, 그리고 문화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능력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개성존중의 창조적 교육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성존중 교육을 함으로써 창의성을 계발한다. 전인적 인간형성을 위한 열린 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며, 학급규모를 축소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공교육강화와 입시제도 개선 등의 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비의 부담을 대폭 해소시켜 모든 국민에게 평등

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교육 등 특수교육을 전문화·다양화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계화교육의 추진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교육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세계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한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교육의 내용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제도적으로 촉진시켜 나간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교육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교육자치제의 정착

지방대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킨다.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 틀 창조

우리경제가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진작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건설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효율적인 정부에 의한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시행, 정경유착의 척결, 불필요한 규제철폐, 금융자율화에 의한 저금리정책 및 신용대출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재훈련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경제질서의 선진화

국제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창의성을 최대한 진작시키기 위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금융자율화와 조세구조의 혁신

금융제도를 개혁하여 경제안정을 정착시키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저축을 증대시키고,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납세불공평을 해소하고, 세제를 간결화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중소기업 육성

기존산업의 첨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업종전환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에 권역별 신산업결집지역을 조성하여 기술과 지식집약적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추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농·수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농·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첨단유전·생명공학기술과 정보화, 기계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비자 중심의 신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어민과 도시인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제통상의 주도권 확보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형성의 주역으로 발전하도록 통상외교역량을 강화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한다. 한반도를 동북아, 환태평양, 세계경제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

물류 및 도시교통체계의 혁신

고비용 물류체계를 혁신하고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류 및 교통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며,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중심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균형 있는 국토이용과 개발

균형 있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사회간접자본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투자선을 다각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적극 활용한다. 산간의 구릉지를 효율적인 토지자원으로 이용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한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제도와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정보화혁명으로 스피드 경제 구축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일류의 정보화국가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며, 생산, 판매, 유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스피드경제를 구축한다. 국민 1인당 PC 1대와 인터넷 주소 하나씩을 보급하며 컴퓨터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이룬다. 핵심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지식창조형 연구로 과학기술 선진화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개발도상국의 지식흡수형에서 선진국의 지식창조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의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촉진으로 2002년까지 기초과학 수준을 세계 10위권, 산업응용기술 수준을 세계 5위권에 진입시킨다.

과학기술 투자확대로 기술주권 확립

세계 기술선도국이 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2000년대초까지 GNP의 5%로 확대한다. 기초과학과 첨단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첨단 핵심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아태 초고속통신망과 범세계초고속통신망에 연계한다. 광대역 디지털 통신위성을 확보하고 위성을 이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개인휴대통신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이루고, 동북아권은 물론 전세계지역을 통화서비스권으로 확대한다.

세계일류의 정보화 국가건설

국민 1인당 PC 1대와 인터넷 주소 하나씩을 보급하고 컴퓨터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이룬다. 국민 모두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유도시국가」를 건설하여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생산·판매·유통의 스피드경제를 구축한다.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며 국가경쟁력의 근본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사고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정부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가 되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1세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보통신산업의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여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의 경쟁을 촉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및 신제품 개발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을 우대하며, 정부의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세계 일류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산업결집지역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벤처기업의 첨단기술 개발과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적극 장려한다.

정보화시대의 법규와 제도의 혁신

냉경 및 산업화시대에 제정되고 시행되어 온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종합정보화법을 제정한다.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에 맞도록 노동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보보호와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각종 행정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스피드화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달성과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

냉전종식 이후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어 개방된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있으나,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날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완벽한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조국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한다. 또한 국제평화의 유지와 인류공영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도약한다.

번영된 통일조국의 건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독심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통일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물질 교류뿐만이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외교를 전개한다.

다각적 국익확대 외교 전개

냉전후의 국제질서 변화와 지역 블록화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을 다변화

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한다. 미·일 일변도의 대외협력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유럽 및 중남미 등을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실리위주의 경제외교 강화

국제경쟁의 격화와 세계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대한다. 입체적 경제외교를 구사하고 통상전문가를 적극 육성하여 한국경제의 세계진출을 촉진한다.

군장비의 첨단화 및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장비 첨단화를 포함한 국방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여 완벽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효율적 국방예산운용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의 과감한 해소, 대민지원 확대와 인력운영의 합리화로 믿음직한 정예 국군상을 수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국방자원 관리의 합리화로 절약된 예산을 방위력 개선, 군의 사기 양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여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국제적 위상과 민족적 자긍심 제고

국제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빈곤환경 미약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 전통문화를 적극 홍보하여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국민 개개인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한민족의 역량 결집

해외동포의 민족의식 고취와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자긍심 및 일체감을 조성하여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민족 재도약의 기반을 다진다.

더불어 잘사는 문화사회 구현

우리 국민신당은 산업화과정에서 붕괴된 사회윤리와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정립한다. 모든 국민이 맑고 푸르른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사회를 구현한다.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사회의 건설을 약속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건설한다.

사회윤리와 도덕성 회복

급속한 산업화과정의 부산물인 물질만능주의 팽배로 인하여 붕괴된 사회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게 한다.

선진복지 사회의 구현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사·정이 협력한다. 국가의 초석인 아동을 위한 복지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한다.

여성의 권익증진

성차별적인 인식을 타파하는 교육을 장려하고,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관련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의 확대실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직업능력의 제고 등 제반정책을 실시한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여 진정한 남녀평등시대를 열어간다.

환경보전과 녹색사회 건설

엄정한 환경평가에 따른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녹색사회를 건설한다.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환경오염의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자율적인 시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한다.

노사자치주의의 실현과 참여·협력 확대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한다.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사협력체제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보호와 인력정책 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재편한다.

문화를 고루 향유하는 시대의 개막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창작·공연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한다. 대중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서울과 지방이 구분없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지방자치시대를 연다. 문화단체와 각급학교에서 다양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문화교육을 장려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국가를 지향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 실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550만 해외교포를 포함하는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한민족의 문화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동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기한다. 각 예술분야에서 21세기 지구촌 문화를 주도할 예술 인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민족의 긍지를 드높인다.

강 령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전의 모든 낡고 비효율적인 관행과 제도를 일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혁명과 정부의 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역사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창의와 잠재력을 얽어 매었던 모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었던 예산집행을 혁신하여 국가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 과학기술 부분에 집중 투자 함으로써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과 무한 경쟁시대를 앞서가는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국력으로 우리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여 선진 문화복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나아가 제3세계를 비롯한 전세계에 진출하여 저개발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선·후진국 간에 조정중계 역할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고 민족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이룩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책임있게 달성하는 수권정당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한생명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국민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번영을 이루어가는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혁신한다.
3. 우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활성화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과 인간 개발을 도모한다.
4. 지역간, 도·농간의 불균형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7대광역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5. 21세기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6. 미래의 식량무기화 시대에 대비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연안국가를 위시하여 제3세계에 적극 진출하여 식량생산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며 1차 산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켜 태평양 주변국과의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7.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여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장기적 통일 전략하에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달성한다.

7대기본정책

1.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

1.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

우리는 정치개혁과 교육혁신, 경제의 자율성과 경쟁력 회복,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선진문화대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역량을 총합하여 국민정신을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창달로 세계사의 중심국가가 되어,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계자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도덕 선진국가를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비전제시와 구심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국민들과 대담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케 한다.

2. 21세기 선진해양대국 건설 지향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자원을 고도로 개발하고 태평양 지역 곳곳에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장래의 식량문제에 대한 대비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잉여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교포의 보호지원대책으로 활용하며 주변 태평양 연안국과의 조화로운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선진해양대국을 건설한다.

3. 저비용 선거혁명과 정치자금 투명화

각종 음성적 불법적 자금을 의한 수천억 내지 수조원이 드는 고비용 선거와 이로 인한 정경유착,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소액기명헌금자에 의한 저비용 선거혁명이 필수적이며, 각종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을 실명화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해 지정기탁금제도를 개선하고(외국의 PAC제도와 같은) 다양한 합법적 정치자금 모음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음성적인 불법자금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철폐하고 선거보조금으로 일원화한다.

4. 행정기구개편과 예산운용체계의 개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 기업이 정신에 입각한 행정개혁으로 21세기형 정부실현
-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우수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기구의 혁신적 개편과 예산운용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1) 정부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정책기능은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은 민간에 과감히 위탁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구를 과감히 축소하고 방만한 예산운용체계는 개선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철폐, 사무자동화,

사무직 공무원의 감축과 대민상담 일선 공무원의 증원과 처우개선, 각종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다.

(2) 방만한 예산운용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결정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복잡한 재정지출체계를 개선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정기재정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기구를 미국의 의회예산처(CBO) 수준으로 보강하여 국회가 스스로 예산관련자료와 정보를 스스로 수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철저한 결산심을 하여 이를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 뿐 아니라 효율성에 대하여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 개혁의 성패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 자유주의 경제학자 민턴 프리드먼은 「현상의 폭군」이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정권이 눈부신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과 6-9개월 간의 여유밖에 없다. 그 기간 안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5.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균형적 대통령중심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 검찰 등의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에 의한 후보추천과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한다.

6. 국민편의위주의 사법제도 지향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하여 보수를 현실화하고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의 공평한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소비자 분쟁, 공해분쟁 등의 현대형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책을 지원한다.

7.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업무의 합리적 조정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독립적, 중립적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찰이 본연의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타업무를 타 기관과 분담하거나 민간영역에 의한 대체가 가능한 것은 민간영역에 의해 처리한다.

8. 봉사하는 책임행정의 구현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입법화를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정보의 자유유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행정예의 참여를 보장하며 모든 행정영역에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9. 정당내부의 민주화와 정책능력 강화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 주요 당직자 선출과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을 당원의 자유비밀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기구 등을 확충하며 의원의 연구 조사를 장려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후보 등은 지역 대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결산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선정한다.

10. 국회의 비판·견제·감시기능 강화와 책임정치구현

상시국회제도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가 효율적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며, 표결에서의 기명투표를 확대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기록에 남기며 국회활동을 전면공개한다.

11.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및 창의성 계발

1. 인성교육 강화로 학교교육 정상화

특정과목에 편중된 성적평가 방법을 지양하며 학생개인의 잠재된 고유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2.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확립

한국이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풍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합리적인 투자와 탁월한 교육방법을 통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정부 기타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교육주체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교육자치를 확대해 간다.

3. 대학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대학의 정원자율화와 학생선발의 대학일임으로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고루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특정과목 위주의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과목수를 축소하며 농어민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일정 수의 입학을 장려한다. 효율적인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행정적 규제나 간섭을 폐지하고 교수제임용제를 개선하여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신분을 보장하며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산학 연계를 확대하고 우수 인력 등 교수 요원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4. 교원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여건개선

교원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대기업 사원 수준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고사평가제를 실시한다. 학급의 정원은 30인 이하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며 그것을 위해 교사를 증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 하며 평균사 우대정책으로 교육 정상화를 이루도록 한다.

5. 직업기술교육 강화 및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조성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직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벌위주의 풍토를 배격하고 실력과 자격증에 의한 능력위주사회를 조성한다.

6. 유치원 공교육화 및 영재조기교육제도 활성화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한다.

7. 학원폭력 근절

인성교육의 강화, 건전한 문화교육의 실시, 상담교사제의 확대,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합동에 의한 단속 감시 체제 확립으로 학원 폭력을 근절한다. 건전한 교육방안의 하나로 사랑의 불꽃 운동을 적용시켜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있는 국가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한다.

8.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미래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측정하여 분야별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조기에 발굴, 교육하며 초·중·고·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성과 현장성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9.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을 우선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금융 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투자촉진을 적극 유도하며, 신규재원을 개발, 확보한다. 국가연구개발(R&D)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며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기반기술과 복합기술, 국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련 연구 및 규정의 제정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고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인력을 육성한다.

III. 건전한 선진경제 체질 확립**1.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기존의 국가 주도에 의한 경제질서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행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선진경제를 이룩한다.

2. 물가, 임금대책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인 고물가, 고임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전 국민이 임금 비용 10% 절감운동을 추진하여 물가 10% 인하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한다.

3. 금융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통화가치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중립을 위해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리자유화 보장, 인사관여금지, 대출심사권 보장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정보화 사회의 기반시설 구축, 전자민주주의 사회 기반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경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 유선망 확충과 인공위성의 발달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성, 데이터, 화상 등을 통합·전송할 수 있는 고도 기술을 개발하며 통신서비스의 선진사회를 구현한다. 또한 한정된 주파수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유휴주파수를 상업화하고 주파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5. 첨단과학기술산업 집중투자

전자, 유전공학, 항공우주산업, 정보, 통신 등에 집중투자하여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며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초고속정보 통신망의 조기구축,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시행한다.

6. 물류비용감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7. 세제, 세정 개혁

현행의 간접세 위주의 조세제도를 직접세 위주로 개선하여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거래 정상화를 촉진하는 세제를 구현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의 세율은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는 차등화하고 토지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8. 환경정책과 조화되는 국토개발계획 수립

수도권, 거래도시 중심의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고용효과가 큰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며 교육, 문화시설의 지방분산을 추진하며 중소도시 농어촌의 개방에 역점을 둔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추진하고 각 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여 전국토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재벌의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변칙적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방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화를 통해 주력업종은 대기업이 기타업종은 연관 중소기업이 하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집약형 유망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 공장설립 대행기관 증설, 신기술창업 지원단 확대, 소기업공제제도 등을 실시한다.

10. 농어촌 구조개선과 식량안보체계 확립

경영규모확대와 기술,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농어업을 개발육성하고, 각 지역별 특산품을 개발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은 확보하게 한다.

식량, 출산물, 수산물 등 농어업 전 분야에 필수적인 자급을 목표로 확정하고 품목별, 적정 생산규모 및 지역별 배분체계를 수립하고 유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유통단계축소 산지직거래 농어민 직영 공판장 확보 등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미래의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 식량기지를 건설하여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한다.

11. 부동산정책 및 주택공급정책

1가구 1주택의 실현을 목표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건설비율을 늘리며,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기되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택지개발시 공영개발 장기적 택지개발계획을 입안, 실시하여 필요한 택지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립한다.

12. 건전한 근로의식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 비리와 부동산 투기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경매제도가 건전한 오락 휴식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고 각종 복권이나 카지노, 투전기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3. 노사관계 : 사랑과 공동체 이념에 의한 기업경영 및 노동운동 확립

기업은 가족관계와 같아야 한다. 가족이 서로 대치관계가 된다면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도 노·사가 대치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섬겨주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경영 및 노동운동을 제도화한다.

① 노사간에 동반자적 관계형성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는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 쌍방이 상호협력하는 산업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산업발전을 기한다.

② 노동법 합리적 개정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LO) 수준으로 개정한다.

③ 근로조건을 위한 투자 확대

산재보상의 현실화와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의 한방진료 적용을 확대하며 노동자가 재해예방과 직업병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에 위하여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며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④ 고용 안정 실현과 효율적 인력배치

산업구조조정과 첨단산업 및 기술혁신에 수반된 기술·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직종간·학력간 취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제도 개선 및 기술·기능인 우대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실업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기회의 창출·직업훈련·취업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를 개선하고 노동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갖춘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관리 및 구인·구직체제를 효율화한다.

⑤ 근로자의 고용 평등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 및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강화한다. 또한 직장 타스 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장애자 및 노령근로자의 의무고용비율을 현실화하며, 이들이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IV. 국방력 강화 및 적극적인 외교 활동

■ 국방력 강화 ■

1. 평등한 병역의무 부담 및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 고취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면제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강화하고, 군복무 내용을 다양화하며,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실제적인 역사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 임명이나 사회지도자 선출 등에 병역의무 이행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2. 군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감군 등을 통해 현재의 병력중심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기의 첨단화와 기술집약화, 다양한 전략전술개발, 육·해·공 3군의 균형화 등을 통해 정예화한 군을 통일한국군상을 정립한다.

3. 의무복무기간 동안 전투력극대화 및 전문직업교육체계 수립

안전위주의 소극적 병력관리를 지양하고 정예군 육성 위한 전술훈련과 실전대비 훈련을 강화한다. 군 복무기간동안의 훈련과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전역 후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한 가지 이상 습득하도록 컴퓨터, 전자장비, 사무기기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내용을 보강한다.

4. 직업군인 처우개선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인의 의식주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적 합리적 훈련체계를 수립하며, 직업군인의 처우를 대폭개선하고 인사제도를 합리화 한다.

5. 예비군 제도 개선 및 훈련의 내실화

예비군의 구성과 훈련체계를 정비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실제훈련과 새로운 전술전략의 교육과 신형 장비 소개 등을 조화시키며 세계화 시대의 선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육을 보강한다.

6. 이념과 사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념과 사상에 확고히 설 때 우리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애국·애족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며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념과 사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외교 ■

1. 능동적 외교정책 추진
2. 평등하고 우호적인 한미/한일 관계 정립
3. 교민청의 설치와 해외동포의 권익 신장

■ 통일 ■

1. 통일 7단계 정책 : 외교 국방력 강화로 민족화합을 이루는 통일 달성
 - (1) 국제적인 통일 여건 마련을 위한 외교력 강화
 - (2) 안정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 (3) 올바른 통일교육으로 국민적 합의 형성 - 북한의 실상과 실체를 바로 알도록 하는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개방한다.
 - (4) 민족애에 입각한 지속적 원조 -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통일 정책에 의해서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남북 지역간 상호자매결연을 맺어 필요한 식량, 기타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원조한다.
 - (5)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지속적 확대로 북한의 경제를 개방시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 지원과 투자 확대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 (6) 민족의 동질성 회복 - 이산가족상봉, 서신교환과 자유왕래, 공동학술 연구, 문화행사 등을 지원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 (7) 통일을 위한 법적, 재정적 준비 - 남북한 상호간의 법령과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공동화 작업을 추진하고 엄청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회계로써 재정을 적립한다.

V. 삶의 질 개선 [복지 · 환경 · 여성 · 교통]

■ 복지 ■

1. 의료보험제도 개선

현행 의료보험의 조합방식 관리운영체계를 통합방식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차이, 지역조합의 만성적 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급진적 전환보다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개편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현행의 저부담-저보험료의 구조를 적정급여를 통한 적정보험료 구조로 전환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의료보호의 경우, 의료보호의 수가를 의료보험의 수가로 상향조정 및 정부의 진료비체불 방지제도 마련 등을 통해 병의원의 진료기피, 의료보호환자 차별대우를 해결한다.

2. 국민연금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확대

국민 전체의 최저생활보장과 절대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와 생활보호제도를 확대, 개선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대상을 농어민, 축산업, 임업 종사자들을 포함하며 도시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정착시킨다.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급여수준의 확대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킨다.

3. 식품 및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보충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행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보완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차원의 감시 활동을 유도한다.

4.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성숙한 선진시민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은 각계 각층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임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계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을 홍보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원봉사가 체질화되도록 학교교육 과정에서 이를 다양한 과정으로 실습케 하며, 학교의 학생선발, 공무원 임명이나 기업체 취업 등에서 이를 반영케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자율적인 민간 소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소비자 운동을 시, 군까지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민간소비자단체에게도 조사항과 고발권을 부여하며, 관리운영비의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소비자 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6. 노인복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민간복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실버타운을 시, 도별로 건설한다. 또한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여 노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성취의 기회와 노인들의 경륜이 활용될 기회를 사회에 제공한다.

7. 장애인 복지

100만 장애인 보호 대책을 위해 국민의식을 계몽한다. 지체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재활 중심의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대폭 늘리며 일정 이상의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또한 후천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임을 감안하여 후천적 장애 발생요인인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제도를 강화한다.

8. 보육시설 확충

초등학교 보육시설을 의무화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결혼 후 출산, 육아 등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한다.

9.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의 핵심인 보건소와 보건지료소를 지원, 확대하여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을 포함한 국민의 날로 높아지는 보건욕구를 해소하며 전국민 의료보장의 의미를 실현한다.

10. 보훈정책의 개선

독립운동가, 선국선열의 유가족과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보호를 확대하여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과 형평성이 맞도록 조정한다. 각종 사회행사에서 국가 유공자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그 희생의 뜻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이 그 후손들을 우대하고 돌보는 국민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 환경 ■

1. 보존우선의 환경정책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자본이 소모되므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및 국토개발계획 입안시 양적 팽창 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정한다.

2. 맑은물 공급대책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민·관 합동에 의한 감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호수의 자정능력의 회복을 위해 댐과 수중보 운영을 재검토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규제와 함께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하며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수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량과 수질, 상수도과 하수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관리하여 맑은 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수도 정책 등 수요관리 측면에서 물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3. 대기오염 개선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와 공단지역에 (대기오염 예보제)를 실시하고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통해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발전소,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대형배출업소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기술, 환경기술의 지원을 통해 오염을 최소화 한다.

4. 쓰레기 정책

매립, 소각중심의 폐기물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배로 늘리는 (감량화, 재활용) 우선정책을 추진한다.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쓰레기 회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며 재활용 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한다.

5. 환경행정의 책임과 권한강화

환경행정의 조정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예산에 대한 환경교부금을 설치하여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의 연동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원인자 부담제도와 환경마크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새로 개발된 기술과 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신기술과 신물질은 적절한 오염방지기술이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 단속공무원을 증원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구비하며 단속에 관한 사법권을 확대 강화하여 단속행정에 실효성을 높인다.

■ 여성 ■

1. 여성인력 활용방안 마련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분야에 UN 권고사항인 30% 이상의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고위 공무원 여성 채용 목표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차질없이 실행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여성 교직원을 확대하고 여성 교육 관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행정 및 관리분야에서 여성의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취업여성 지원방안

육아휴직 가사휴직제를 공무원 뿐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시키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또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잠정적 우대조치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또 가사노동이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전업주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여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을 명료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및 개선

고급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여성정치교육이나 공무원 관리자 교육기회를 확대 실시 하여 질 높은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국제 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담당하는 특수한 역할을 보장하고 시설, 재정,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적 연대활동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 여성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책 마련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여성 희생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한 보호시설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교육 및 피해자들의 후속 관리를 위한 보호소, 상담소를 양성화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재교육 프로그램(한사랑불꽃운동)을 실시하고 지원한다.

■ 교통 ■

1. 교통난 완화 대책

- ① 대중교통시설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지하철 건설, 시내버스 전용차선제 확대, 지하철 환승체계 구축
- ② 교통체제의 합리적 개선

교차로 입체화, 자동차세의 차별화 - 국민차 지정, 우대, 자가용 10부제 운행, 주차시설 건설촉진(세제 지원 등), 신호체계의 개선(신호관리의 전산 체계화)

2.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 ① 교통문화의 선진화 위해 음주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엄격한 감시화 처벌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
- ② 단속, 제재 제도 합리적 개선 - 단속장비, 인원확충
- ③ 뺑소니 사고 근절위해 과학적 수사장비 확충, 전담 수사반 편성에 의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와 엄격한 처벌 시민감시 고발체계를 확립한다.

VI. 문화, 예술의 활성화

1. 문화예술의 활성화

인간은 물질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욕구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지, 정, 의에 대한 추구가 있다. 올바른 정신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인하여 잘못된 퇴폐문화가 국민을 멍들게 하며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건전하며 올바른 예술, 문화활동은 국민의 정신문화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2. 국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건전한 문화의 창달지원

우리는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민족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우리 민족에게 잠재된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보다 많은 지원, 보다 적은 간섭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각종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해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문화 예술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한다.

3. 불건전 문화 정화 및 유흥업소 대대적 척결

각종 음란문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사회단체, 학부모 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음란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장비를 확보한다. 학교 주변정화, 청소년 선도, 음란업소 단속을 위해 단속인력을 확보하고 각 학교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에게 조사와 고발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단속이 되게 한다.

4. 지방문화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

Ⅶ. 8대 광역권 개발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부산, 대구 · 포항, 광주 · 목포, 대전, 강릉, 속초, 아산만, 군산 · 장항, 광양만)

1. 필요성

광역개발 구상은 세계적 추세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

광역권 개발은 국가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 및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 (1) 수도권에 집중된 단일 핵구조 경제를 지양하고 국토를 균형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 (2) WTO출범, OECD가입과 더불어 세계화 추세 가속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양한 3면의 해양을 따라 U자형으로 개발을 전개하여 해양 지향적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 (3)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역간 이해조절과 균형적 발전으로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2. 지역 경제개발 전략의 수립

- (1) 지역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 중앙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 목표와 주요 투자계획의 골격만 제시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단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 (2) 민간부분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의 지방입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금융의 지원과 토지 이용규제 등을 완화한다.
- (3) 토지개발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3.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산업의 성장주기를 고려하여 미래의 성장산업과 현재의 성장산업을 안배하여 집중육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규제완화, 지역산업 기술 정보활용 확대, 금융지원 확대

4. 지역 금융시장의 활성화

실물경제 부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고수입 투자사업의 유치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고로 지역 설정에 맞는 금융정책 추진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전문화로 지역기관 금융기관의 영입기반 확충

5. 지방재정 자립기반의 확충(자립도 : 서울 98%, 전남 17.5%)

- (1)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징세 노력강화
- (2) 지방세제의 개편 - 재산과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종합토지세를 개편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한다.
- (3)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노력

(4) 지방정부의 경영개발 사업에 역점

(5)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 - 조세체계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점차로 증대

6. 지방경제의 세계화

(1) 세계화의 기반조성 - 지방 공무원의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내 대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지역 주민의 세계화 의식 고취를 위해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과정에 관련 강좌를 보강하고 시민단체의 자체활동을 지원한다.

(2)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혁신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혁신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경쟁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한다.

(3) 국내산업의 부족한 자본 및 기술을 보완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위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국제교류시설을 확충하며 지방정부안에 국제협력부서를 설치하여 각종 행정규제, 법제운용의 불투명 지원체계의 미흡부분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종합전산망을 외국 주요 전산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계획과 투자 유치조건을 홍보하고 정보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한다.

가. 한나라당

강령 및 기본정책(안)

전문

[1997년 11월 21일 제정]

국가발전과 국정운영을 주도해온 신한국당과 정통아당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이 통합한 『한나라당』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분열과 부패의 구정치구도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으로 국민대통합의 선진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안정속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기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한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강 령

[1997년 11월 21일 제정]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생활자치를 구현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켜 전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자율과 협동, 창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활력있는 선진경제를 이룩한다.
3.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발전과 선진대국 진입의 근간임을 자각하여,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정보화 시대의 세계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
4. 우리는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선진산업사회를 이룩한다.
5. 우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6.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자원절약형사회를 지향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사회를 구현한다.
7.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다.
8.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한다.
9.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영·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며 능동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적 협력과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기본정책

[1997년 11월 21일 제정]

1. 깨끗하고 생산적인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구현

1.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건국세대와 산업화·민주화·신진 정보화 세대의 경륜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간·계층간·집단간 모든 갈등과 이해를 조화, 극복함으로써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2.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공동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압축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부정적 퇴영적 의식과 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아 사회의 정당성을 회복한다.

3. 깨끗하고 합리적인 선진정치문화를 창출한다.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정경유착·부정부패 등 구시대적 정치폐습을 타파하고 정치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실현한다.

4. 대통령제로 나라의 안정을 기한다.

입법·행정·사법 삼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의 기본정치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간다.

5. 정당의 운영을 민주화·현대화 한다.

정당운영을 민주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중심의 의회정치를 확립하여 지방화시대에 맞게 정당구조를 개편한다.

6. 국가경영체제의 혁신을 통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앙과 지방행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효율 높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며, 과감한 민영화 및 책임경영제 도입과 함께 규제의 혁파로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가발전역량을 강화한다.

7.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

민생치안 및 안전관리체제를 철저히 확립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한다.

8. 국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각종 법제도·의식·관행을 선진화하여 무한경쟁의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9. 지방자치를 내실화한다.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내실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화를 선도하여 자치단체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11. 활력있고 공정한 선진경제의 건설

1.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한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율과 창의와 경쟁을 존중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2. 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이룩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한편 적정한 수입과 해외지출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한다.

3.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기술혁신과 초고속 정보화의 촉진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금융개혁을 통한 금리의 인하 및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4.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세계경제의 개방화·통합화에 부응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참여·주도한다.

5.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공정한 경제를 구현한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통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하며, 재정·세제·금융 등의 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6.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개방에 따른 자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산업구조를 선진화한다.

7.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한다.

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기술집약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중소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경영 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민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8.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제화시대에 맞게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안보체제를 구축하며 농축수산물의 생산·소비 및 시장에 관한 신속한 정보화와 유통혁신 및 농외소득원의 적극 개발로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9.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알맞게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10.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간다.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과 피해를 보호·규제하며 자율적인 민간소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간다.

11. 1가구 1주택 시대의 실현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농어업인·노동자 및 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복지차원의 주택 신개축을 적극 지원하며, 1가구1주택의 실현을 목표로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립한다.

12.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발전을 기한다.

통일에 대비한 합리적인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보전과 조화되게 국토를 활용하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체의 지방분산과 금융세계상의 지원, 교육문화시설 지방분산의 적극 권장 등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역점을 둔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을 살려 산업간·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13. 유통비용의 절감과 교통난을 대폭 완화한다.

도로망의 확충, 고속철도 및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의 건설, 유통시설의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며 불요불급한 교통수요자제를 유도하고 기존시설이용 효율성을 높여 교통난을 대폭 완화한다.

14. 우주와 해양을 개척한다.

고도의 우주과학기술과 해양기술을 진흥시켜 미래의 우주시대와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주 및 해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III.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

1.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한다.

과학기술분야의 기초·기반연구에 대한 투자를 높여 창조적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원천·첨단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개발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 과학기술 개발의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

민간 및 대학연구소, 정부출자 연구소 등 과학기술 개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3. 과학기술행정을 쇄신한다.

과학기술정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4. 창조성과 현장성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미래의 분야별 인력수요를 책정하여 분야별 과학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조기에 발

굴·교육하며 초·중·고·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성과 현장성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5. 정보화사회를 촉진한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첨단 정보사회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국민의 정보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

IV.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복지사회의 실현

1.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사회보험화를 추진한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전국민의 사회보험화를 실현하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2. 노인·장애인·아동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킨다.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노인에게는 안락한 노후생활, 장애인에게는 건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평등을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과 시설수준을 높이며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한다.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고용기회의 확대와 자활능력의 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소득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온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한다.

4.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노사간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

5.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과 제도적 조치의 실시로 노동자의 재해예방과 직업병 관리를 강화한다.

6.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기함으로써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7.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한다.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예방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식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며 문화시설과 레저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한다.

V.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인간교육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달

1.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실천한다.

안간중심의 교육개혁으로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적성과 소질을 존중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2.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한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실용교육,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을 정착시키며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민족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한민족 통일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민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4.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5. 민족문화의 창달로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인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자주적 민족문화를 창달하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한다.

6.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현행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킨다.

7.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약·학교폭력 등 각종 위험을 제거하고 청소년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8. 사회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킨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단체들의 사회활동과 자발적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간다.

VI.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1.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회복한다.

대기오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연료의 공급과 무공해지역 난방을 확대 실시하며 자동차의 저공해화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회복한다.

2. 맑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3. 폐기물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생산·유통·소비단계별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통합재활용체제의 구축 등 폐기물자원화를 촉진하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4.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추구한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을 대폭 증대시킨다.

5.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

원시림, 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한다.

6. 선진환경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실용성 있는 첨단환경기술 및 기초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한반도 주변환경보호를 위하여 인접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환경협력기반을 조성한다.

VII. 여성참여 기회의 확대와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

1. 여성의 가사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정착시킨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일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전환하여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제도화로 주부들의 가정관리 분야를 사회참여의 영역으로 정착시킨다.

2.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참여를 확대한다.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혜와 의견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선출직과 정부의 임명직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진출을 보장한다.

3.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타파하여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평등을 보장한다.

채용, 임금, 승진, 직업훈련, 성희롱 등 입직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철폐하여 여성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한편 여성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4. 양성평등의 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킨다.

남여평등의식과 올바른 성윤리 함양을 위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과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평등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한편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와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킨다.

VIII. 확고한 국가안보역량의 강화

1.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한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한다.

군구조를 기술집약적이고 첨단과학화로 발전시키고 고급 전투인력과 전쟁역제 필수전력을 확충하여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육해공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정예강군의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한다.

2.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튼튼한 국가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한다.

우방국과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에 공동대처하고, 지역안보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주변국과의 다자간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튼튼한 국가안전보장체제 구축과 함께 세계평화 유지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3. 군의 합리적 제도발전으로 국방력의 기초를 강화한다.

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비복지에 대한 투자확대로 군의 처우개선을 증진시키며, 군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발전을 통하여 국방력의 기초를 강화한다.

IX. 통일실현과 세계평화에 기여

1.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한다.

영토와 민족의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간의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공고히 한다.

2.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자주·평화·민주를 원칙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며 통일대비역량을 축적하고 통일지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된 선진민주국을 건설한다.

3.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강화한다.

외교역량의 결집과 세계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증진에 힘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인류의 공동선인 세계평화와 공영, 그리고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안보협력관계를 튼튼히 하여 평화통일을 촉진할 국가적 기반을 조성한다.

4. 남북간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한다.

상호이익을 증대하고 남북경제를 상호 보완하는 방향에서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학술·문화·자원 및 에너지 교류,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

5.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분단이래로 생사를 모르고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6.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증진한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민주적 유대감을 고양하고 한민족의 역량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건설국민승리21 기본정책

1. 사회복지대혁명 5개년 계획! 국민생활 기본선 보장!
 - 1) 사회복지 예산을 20%로 증액하여, 교육·의료·주거·노동 등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 2) 전 국민의 사회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고, 복지급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3)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일원화하고, 기금 운용을 민주화한다.
2. 평생교육 체계 구축! 퇴직금 완전보장!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 1) 고용 및 임금안정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2) 퇴직연금제도·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여 퇴직금의 완전보장을 실현한다.
 - 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폐지하고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
3. '부패방지특별법' 제정!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 1) 정치체도의 총체적 개혁을 목표로 강력한 '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부패정치·정경유착의 고리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2)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먼저 정치자금 실명제·떡값 처벌 등을 실시하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확고히 보장한다.
 - 3)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수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도록 한다.
4. 재벌체제 해체와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 1)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전문 대기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과 물가안정, 경제민주화를 도모한다.
 - 2)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연구·세제·금융 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물품대금 결제제도 개혁,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채금리의 적극적인 인하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 3) 농업 기술과 경영을 혁신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협업농 등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직거래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를 보장한다.
 - 4) 현행 '간접세·근로소득세 중심의 조세체제'를 '직접세·재산소득세 중심의 조세체제'로 한다. 그럼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5.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국가의 기반구축!

- 1)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있는 북녘동포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이산가족 만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높인다.
- 2)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민간차원의 평화적인 통일논의와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 3)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통일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
- 4)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실현, 외국군 주둔분담금을 폐지·기지사용료 징수를 통해 민족의 자주·평화 열망을 완수한다.

6. 사회적 공동육아제 및 30%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 1) 각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까지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공동육아제를 실시한다.
- 2) 최소 30%의 여성고용할당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고용할당제는 우선 공기업과 공무원 채용부터 실시하고 점차 사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강화한다.
- 3)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법' 과 '가정폭력 특별법' 등을 제정한다.

7. 7% 교육재정 확보로 중등교육까지 무상 의무교육 실현!

- 1)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GNP 7%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2) 학교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한다. '무상 의무 교육 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현행 학제를 변경한다.
- 3) 망국적인 일류병을 조장하고 입시위주 교육의 핵심부에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4) 전교조를 즉시 합법화하고, 교사 및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의 의결기구화 등 학교행정의 실질적 민주화를 추진한다.

8. 깨끗한 환경을 누릴 국민 권리의 전면 보장!

- 1) 환경부총리제를 신설하여 환경 관련 업무의 일원화, 각 부처 업무의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 낸다.
- 2) 핵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추가 건설 중단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바꾼다.
- 3) 환경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환경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제도화한다.

9. 획기적 군축과 21세기형 과학 강군 육성!

- 1) 비대하고 방만한 방위예산을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 2)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육해공군을 과학 장비 중심으로 균등 발전시킨다.
- 3) 현행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제도를 실시한다.

10. 민족사 정립을 위한 진실규명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 설치!

- 1)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지배세력에 의해 은폐 · 왜곡돼 온 역사적 진실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밝혀낸다.
- 2) 국민위원회는 여기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청산작업을 추진한다.
- 3) 이완용 등 친일파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고, 유신잔당이나 반민족 · 반민주세력의 부정축재한 재산 역시 전액 국고로 귀속시킨다.
- 4) 국가유공자를 공정하게 재선정하고, 민주화운동 헌신자들의 명예회복과 포상을 실현한다.

편찬위원회

| | | |
|--------|-----|-----------------------|
| 위원장 | 김호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 위 원 | 유영렬 |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 | 김용호 | 인하대학교 교수 |
| | 조중빈 | 국민대학교 교수 |
| | 심지연 | 경남대학교 교수 |
| | 박찬욱 | 서울대학교 교수 |
| | 이완범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 | 정병준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 안병도 |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 | 김현태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 간사장 | 문상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 간사장(전) | 이종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 간사장(전) | 조해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 간 사 | 이계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
| 간 사(전) | 서재영 | 선거연수원 교수 |
| 서 기 | 장성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

편찬실무단

- 집필진**
- 장성훈(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 이영춘(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 김성일(서울시 송파구선관위 지도담당관)
 - 김재훈(중앙선관위 기획재정관 사무관)
 - 심현화(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주무관)
 - 정옥경(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주무관)
 - 전성기(경기도 김포시선관위 주임)
 - 안평국(전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 한승석(전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 박영길(전 서울시선관위 관리과장)
 - 홍주형(전 인천시 서구선관위 주임)
- 교열**
- 임좌순(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박원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선관위 사무국장)
 - 탁덕균(서울시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
 - 김형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선관위 사무국장)
 - 김창희(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大韓民國政黨史 第5輯

인 쇄 2009년 12월 10일
발 행 2009년 12월 17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길 30 (중앙동 2-3)
전화 02-503-0863
팩스 02-503-0864
<http://www.nec.go.kr>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2264-5298
